

統分 93-12-80

'93 北韓·統一研究 論文集(Ⅲ)

北韓體制 及 政策變化 展望 分野



統 一 院

당원에서는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심있는 전문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책의 일환으로 연구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3개의 연구과제를 위촉하였는 바 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① 統一政策 ② 南北交流協力 ③ 北韓體制 및 政策變化展望 ④ 北韓의 軍事 ⑤ 韓半島 周邊情勢 ⑥ 北韓의 行政 및 法制 ⑦ 北韓의 經濟·社會·文化등 7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 가운데는 관련분야에 대한 참신한 문제 의식과 예리한 논증 등으로 높이 평가할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당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통일 및 북한문제를 연구하거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993년 12월

통일원 정보분석실

〈收 錄 論 文〉

- ◇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및 권력구조 변동 예측 7
- 이 인 호(연세대학교)
- ◇ 북한체제의 변화와 남북한관계 전망 73
- 러시아의 한국학 전문가들의 견해(텔파이조사)를 중심으로 -
- 김 명 호(건국대학교)
- ◇ 북한의 권력승계정치와 체제 및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149
- 양 승 함(연세대학교)
- ◇ 북한체제 변동 전망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모델 227
- 인민에 초점을 둔 사회화 이론과 합리선택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
- 조 기 숙(이화여자대학교)
- ◇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요인에 관한 연구 323
- 권 오 윤(동국대학교)
- ◇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 전망과 대처방안의 모색 429
- 대남전략의 지속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
- 김 연 각(서울대학교)
- ◇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과 그 변화 전망 513
- 주 봉 호(동의대학교)

北韓 政治體制的變化 및 權力構造變動 豫測

研究責任者：李 仁 鎬(延世大學校)

목 차

(요약문)

I. 序 論	15
1. 研究의 目的	15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16
II. 北韓 政治體制의 特性	18
1. 金日成 1人 獨裁體制	18
2. 主體思想體制	20
3. 黨·國家體制	22
4. 權力世襲體制	23
III. 北韓 政治體制의 變化	27
1. 北韓 政治體制 變化에 대한 理解	27
2. 政治體制 變化의 環境的 要因	29
가. 對內的 環境要因	30
나. 對外的 環境要因	31
3. 政治體制 變化의 實相	32
IV. 北韓의 權力構造의 變動	36
1. 朝鮮勞動黨의 中央組織	36
가. 黨大會	37
나. 黨中央委員會	38
2. 國家機關	40
가. 主 席	41

나. 最高人民會議	41
다. 國防委員會	42
라. 中央人民委員會와 政務院	43
3. 權力構造 變動의 特徵	45
V. 北韓 權力엘리트 構造變動	47
1. 朝鮮勞動黨의 權力엘리트 構造變動	47
가. 黨中央委員會	47
나. 政治局 常務委員會 및 政治局	49
다. 秘書局	52
라. 中央軍事委員會 및 專門部署	53
2. 國家機關의 權力엘리트 構造變動	56
가. 主席 및 副主席	56
나. 最高人民會議	57
다. 中央人民委員會	60
라. 政務院	60
마. 國防委員會	62
3. 權力엘리트 構造變動의 特徵	63
VI. 結論 및 展望	66
〈 參考文獻 〉	68

北韓 政治體制의 變化 및 權力構造 變動 豫測

李仁鎬 (延世大)

要約文

한 국가의 政治體制의 變化는 權力構造 變動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국가의 政治體制의 變化에 의하여 권력구조가 바뀌기도 하지만 반면 政治體制의 變化에 대처하기 위하여 權力構造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 스스로 權力構造를 변경하기도 한다. 북한과 같이 폐쇄된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對內外 環境의 變化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치체제가 변화를 시도하며,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엘리트집단 내부의 권력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내외의 政治的 環境의 變化에 따라 북한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정치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權力構造는 어떻게 변동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앞으로 政治體制와 權力構造의 變動과 政策展望을 예측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연구방법은 북한체제가 全體主義 體制라는 점을 감안하여 全體主義 모델을 주로 적용할 것이다. 전체주의 모델은 그 특징적 속성에 있어 北韓 政治體制를 분석하는데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주의 모델은 사회주의 체제의 초기의 체제통합기나 동원단계기에는 다른 어떤 접근 방법보다도 유용하지만 靜態的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說明力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全體主義 모델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變化部分에 대해서는 엘리트 모델을 절충해서 사용할 것이다. 엘리트 모델은 거시적 차원에서 한 정치체제내의 權力構造의 전반적 분포양태를 취급한다. 따라서 북한사회에 엘리트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북한 정치체제의 權力構造의 變動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北韓 정치체제의 기본 特性은 金日成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全體主義的 1人 獨裁體制, 고도의 배타성을 갖는 主體思想에 의한 통제, 黨

이 지배하는 黨·國家體制, 金日成-金正日 父子의 權力世襲體制 등이다.

1985년 고르바초프 정권의 改革·開放政策의 영향으로 소련은 물론 동구 社會主義 국가들도 사회 전반에 걸친 革命的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 체제에도 비슷한 變化가 일어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社會主義 체제는 소련 및 동구의 그것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北韓은 처음에는 소련의 衛星國으로 출발하였지만 1960년대부터는 그러한 위치에서 탈피하여 主體思想에 의한 통치를 해오고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동구제국과는 다르다. 북한은 儒敎的 전통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들을 통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반체제적 大衆運動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산주의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對內的 環境要因과 對外的 環境要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北韓 政治體制의 변화라는 것은 硬直性을 띠고 있는 북한 정치체제에 있어서는 體制管理面에서의 變化 그 이상을 의미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김일성·김정일체제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制限된 變化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하면 체제붕괴적인 변화가 아니라 體制維持 한도내에서의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 政治體制는 共產主義圈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현재 어떤 變化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소련에서 改革政策이 추진될 초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개혁이 本格化되는 과정에서 다당제 수용, 共產黨의 정권상실, 그리고 헝가리 및 폴란드의 韓國과의 修交,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일련의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자 외부로부터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소련 및 동구와의 差別性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우리식대로 살자"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로 대응해 나가게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의 基本原則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對內外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部分的이고 제한적인 變化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朝鮮勞動黨의 1당지배를 견지하면서도 社會民主黨과 天道敎靑友黨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外見上 다당제를 수용했다. 또한 黨·政分離

차원에서 國家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고있으며, 소련 및 동구제국에 유학을 한 專門技術官僚들이 金正日의 부상과 함께 대거 등장하고 있고, 經濟的 차원에서도 對內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모색해 오고있다.

북한의 이와같은 제한적인 변화는 本質的인 體制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보다 대외개방의 파급효과를 극소화시켜 體制維持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한 經濟難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변화나 개혁적 조치일지라도 그것은 金日成 유일체제를 온존시키며, 金正日에로의 권력이양을 安定的이고 순조롭게 완수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러한 체제하에 북한의 권력구조도 큰 틀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北韓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대신 主體思想을 국가지도 이념으로 대체하고 제한적 經濟開放에 대비하며 權力世襲의 法的根據를 마련하기 위하여 종전의 헌법을 개정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지방경제위원회에 관한 절을 추가하여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등에 대한 憲法的 基礎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國防委員會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國家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가 가지고 있던 군사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군사정책의 일원화와 金正日의 군부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축소한 반면에 最高人民會議의 권한을 다소 강화했다.

8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權力엘리트 構造에도 많은 변동이 일어났다. 권력엘리트 구조변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김일성과 같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革命1世代가 고령화나 사망으로 인해 점점 권력의 주변에서 사라진 반면 革命2世代들이라고 할 수 있는 專門技術官僚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의 권력엘리트 구조에 전문기술관료의 등장과 더불어 권력의 핵심에 김일성의 親·姻戚들이 대거 登用되어 김부자의 세습체제를 다른 엘리트들보다도 忠誠스럽게 지탱해주고 있다. 셋째, 빨치산 출신들이 아직도 권력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김일성정권 樹立을 위해 결정적인 役割을 했고 그 이후에도 黨·政 要職에 계속 등용되었으며, 김일성부자 세습체제의 구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넷째, 舊蘇聯이나 中國과는 달리 상위서열 엘리트들이 黨·

政·軍 등의 요직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黨·政·軍 간의 융합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北韓 政治體制와 權力構造의 變化樣相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현재 북한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主體思想과 金日成體制의 틀 안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體制改革的인 것이 아니라 體制維持를 목적으로한 政策的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權力構造 변화와 政策變化의 추이를 토대로 북한 社會主義를 전망해보면, 短期的으로 북한은 社會主義圈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최소화하면서 위로부터 部分的, 漸進的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變化모델은 적어도 급진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中國의 천안문사태나, 東歐式의 혼란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봉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體制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經濟的으로는 제한적인 개혁의 형태를 취할 것이고 政治的으로는 점진적으로 다당제를 수용하거나, 정치개혁을 할 가능성이 크다.

長期的으로는 조만간 진행될 김정일이 後繼體制 樹立 이후의 安定的인 권력승계를 위해서도 적어도 개혁과 개방의 외압에 견딜 수 있는 국내외적 與件을 미리 만들어나가는 북한식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 死後 집권층 내부의 분열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조직적인 體制抵抗勢力이 있을 수 없으나 金日成이 노쇠함에 따라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세력분열로 金正日體制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1985년 고르바초프 정권의 改革, 開放政策의 영향으로 美·蘇간의 군사적 경쟁을 지양하는 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989부터는 폴란드를 비롯한 東歐 社會主義 국가들도 사회 전반에 걸친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스탈린식 全體主義的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多元主義와 市場經濟制度를 수용했다. 中國도 이미 1978년 덩소평 집권이래 개혁개방노선을 표방하였으며 1992년에는 사회주의 市場經濟路線을 黨路線으로 확정했다. 이 와중에 북한만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변화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北韓體制에도 비슷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사실 북한은 최근 對日修交 및 對美接觸을 가속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분단 영구화를 기도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으나 1991년 결국 남북한 UN 동시가입으로 선회하였고, 南北對話도 1972년 이래로 본래의 의도는 서로 다르더라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화가 재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1984년 合營法을 제정하여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거부해오던 NPT에 가입하여 IAEA로부터 核査察을 두번 받았으며 최근에는 IAEA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NPT 탈퇴를 선언하였다가 다시 탈퇴를 유보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계개선, 경제 및 기술 원조를 바라고 있다.

이와같은 對外政策의 변화는 북한의 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戰術로 보이지만 그동안 북한이 해오던 대외 및 대남관계의 경색된 태도에서 상당히 누그러진 變化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체제 변화의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소련 및 동구의 그것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主體思想에 기초한다는 사회주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정식

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가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의 主體와 方向, 範圍 등에는 동구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비록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普遍性을 공유하고 있을지라도 북한만의 特殊性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政治體制의 변화는 權力構造 변동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국가의 政治體制의 變化에 의하여 권력구조가 바뀌기도 하지만 반면 政治體制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權力構造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 집단이 스스로 권력구조를 변경하기도 한다. 북한과 같이 폐쇄된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對內外 環境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치체제가 변화를 시도하며,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엘리트집단 내부의 권력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내외의 政治的 環境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러한 정치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權力構造는 어떻게 변동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앞으로 政治體制와 權力構造의 變動과 政策展望을 예측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북한체제가 全體主義 體制라는 점을 감안하여 全體主義모델¹⁾을 주로 적용할 것이다. 전체주의 모델은 그 특징적 속성에 있어 北韓政治體制를 분석하는데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 정치체제의 特徵이나 權力構造의 상호관계는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의 典型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주의 모델은 사회주의 체제의 초기의 체제 통합기나 동원단계기에는 다른 어떤 접근방법보다도 유용하지만 靜態的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說明力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전체주의 모델이란 소련의 정치체제에 대한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F. Brzezinski)의 분석으로부터 나왔다. 전체주의 체제의 특징으로는 1) 공식적 이데올로기, 2) 一人 獨裁者에 의해서 지도되는 단일대중정당, 3) 폭력적 경찰통제 체제, 4) 대중매체의 독점, 5) 군부의 지배권 독점, 6) 중앙통제경제 등이다.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F.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p. 9.

따라서 全體主義 모델로서 설명하지 못하는 變化部分에 있어서는 엘리트 모델을 절충해서 사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엘리트론자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權力엘리트가 존재하고 있고 소수엘리트에 의해서 支配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社會主義 體制의 정치과정과 권력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엘리트 모델은 거시적 차원에서 한 정치체제내의 權力構造의 전반적 분포양태를 취급한다.²⁾ 따라서 북한체제에 엘리트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북한 정치체제의 權力構造의 變動을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서술방법은 文獻研究方法에 입각하여 북한에서 발행되는 「로동신문」, 「근로자」 등과 같은 1차자료를 土臺로 하여, 국내외의 정보기관, 통일원, 전문학술지, 일간지 등을 통하여 發刊된 2차자료를 活用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北韓研究는 자료적 한계와 자료 해석상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으로 인해 客觀的 분석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북한 연구의 當爲性을 유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客觀的 연구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본 研究의 시기적 範圍는 朝鮮勞動黨 제6차 黨大會가 열렸던 198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전까지 遡及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 論文은 총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研究의 目的과 方法 및 範圍에 관하여 논하였고, 제2장에서는 全體主義 體制로서의 北韓 政治體制의 기본 特性에 관해서 논하였다. 제3장에서는 北韓 政治體制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변화에 미치는 對內外 環境的 要因을 분석하고 북한체제 변화의 實相에 대해서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헌법개정에 의한 북한의 權力構造의 變動을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1980년 이후 權力엘리트 構造變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상의 論議를 토대로하여 향후 북한체제 변화에 대한 展望을 하였다.

2) 韓培浩, 「比較政治論」(서울: 法文社, 1977), pp. 67-87 참조.

II.北韓 政治體制의 特性

북한 정치체제는 首領의 절대적 우위성과 指導原則이 지배하는 이른바 김일성 1인의 唯一領導體制, 통치이데올로기인 主體思想에 의한 統制, 朝鮮勞動黨의 일당독재체제인 黨·國家的 特性, 그리고 김일성-김정일 父子의 權力世襲體制 등을 그 특성으로 한다.

1. 金日成 1人 獨裁體制

北韓 政治體制는 김일성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全體主義的 1人 獨裁體制이다. 김일성은 1930년대부터 만주에서 항일 빨치산운동을 하였고 1940년부터 해방때까지는 소련령내 하바로프스크 근처의 브야츠크에 소재한 蘇聯極東司令部 산하의 88독립여단에서 소련으로 탈출한 빨치산 동료들과 함께 소련식 軍事訓練을 받고 해방후 1945년 9월 귀국하여 소련의 後援으로 권력을 掌握했다.³⁾ 그는 이후 共產黨을 중심으로 民族統一前線戰術을 구사하여 玄俊赫 등 토착공산주의 세력과 曹晩植 등 민족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1948년 북한정권이 수립될 때 초대 首相이되었다.

1948년 北韓政權樹立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支配階層 내에서 권력투쟁을 통해서 권력기반을 강화했다. 처음 북한정권이 수립될 시점에 김일성의 국내 권력기반은 확고한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노동당 내에서의 權力鬭爭過程을 통해 반대파를 숙청 제거함으로써 안정된 권력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김일성은 북한정권수립 以前인 1948년 3월에 열린 노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 吳琪燮, 鄭達憲 등을 종파주의자로 몰아 숙청 했으며, 1951년에는 소련파 지도자 허가이를 당에서 축출하였고,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직후 李承燁을 포함한 12명을 미제 스파이활동, 남한에 있는 민주세력 파괴, 북한정권 전복음모라는 죄목으로 숙청했으며, 1955년에는 朴憲永을 같은 죄목으로 기소하여 肅清시켰다. 1958년

3) 김일성의 권력장악 배경에 대해서는, 서대숙, 「북한의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金贊汀, 「빨치산輓歌, 金日成과 88독립여단,」 「新東亞」, 1992년 7월, pp. 360-87; In Ho Lee, "Soviet Policy toward North Korea, 1943-1948" (Ph. 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91), pp. 93-106 참조.

에는 연안파의 총수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金斗奉 등을 숙청하였고, 1967년에서 1969년까지 박금철, 이효순, 허봉학, 최광 등 당 엘리트와 빨치산 출신 장군들을 숙청하였다.⁴⁾ 金日成의 1인 獨裁體制는 이러한 黨과 政府機關內의 대대적인 숙청으로 형성이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一派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唯一的 指導體制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1972년 개정된 社會主義憲法에 주석제가 신설되면서 김일성은 首相에서 主席으로 승격되어 主體社會主義 건설을 위한 1인 독재체제를 완성하였다.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주석의 지위가 다소 약화 되었지만, 主席의 지위는 國家의 首班으로 國家主權을 代表하며,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 등으로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을 지배하는 권력자이다.⁵⁾ 재판기관 또한 最高裁判所에서 中央裁判所로 바뀌면서 中央人民委員會의 지휘, 감독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3권분립이 사실상 무시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석이 가지는 권한은 絶對君主의 권한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령으로서 김일성의 권한은 절대적이어서 그의 말과 행동은 敎示라는 형태로 모든 정책결정의 준거들이 되었고 主體思想으로 체계화되어 북한이 신봉하는 유일한 사상이 되었다.⁶⁾ 이론상 수령은 권력, 권위, 이데올로기를 독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제도적으로는 總秘書와 國家主席을 겸한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는 등 內外情勢가 크게 변화하자 1992년 4월 9일 제9기 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종전의 헌법을 대폭 개정한 전문 7장 171의 새로운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憲法에서는 주석의 권한중 군사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國防委員會로 이관함으로써 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인 金正日의 군부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⁷⁾ 따라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미래의 首領

4)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pp. 95-181; 李容弼, 「北韓政治: 이데올로기와 變化」(서울: 大旺社, 1982), pp. 45-47 참조.

5) 북한의 주석제에 관해서는 1992년 사회주의헌법 제6장 제2절 참조.

6)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p. 121-22.

7) 개정헌법의 전문은, 「세계일보」, 1992년 11월 25일, pp. 12-13; 통일원,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2) 자료참조.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은 아직까지 국가의 주요한 政策決定을 독점하고 있는 執權勞動黨의 수령으로서 위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당의 정책을 執行하는 국가기관의 主席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하는 최고의 指導者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2. 主體思想體制

北韓 政治體制는 고도의 배타성을 갖는 主體思想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北韓에서 주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5년 12월 28일 당 宣傳煽動大會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한데 대하여” 였으며, 1956년에는 ‘經濟에서의 自立’을 첨가시켰고, 1957년에는 ‘政治에서의 自主’를, 1962년에는 ‘軍事에서의 自衛’를, 1966년에는 ‘外交에서의 自主’를, 1967년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종합 체계화 작업을 거쳐 1970년에는 조선로동당의 指導理念으로 채택되었다.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는 主體思想을 公式統治 이데올로기로 규정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金正日이 주체사상의 확고한 理論家로서 부상하면서 後繼體制를 다져왔다. 92년 개정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지침으로 삼을 것을 규정하여 獨創的 革命理念性을 강조하고 있다.⁸⁾

主體思想은 여러 측면에서 變化와 發展을 거치면서 구성요소가 늘어나고 윤곽이 뚜렷해지면서 朝鮮勞動黨의 유일사상이며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굳어져 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주체사상에 대해 首領의 地位와 역할을 절대화, 구체화 한 革命的 首領觀과 수령론의 핵심이 된 ‘社會政治的 生命體’이론을 추가하였다. 이때부터 主體思想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 내지는 상위의 이데올로기로 공식화되고 있다.

8) 李容弼, 「北韓政治: 이데올로기와 變化」, pp. 74-77; 통일원, [북한개요], p. 38.

〈표 1〉 主體思想 體系의 形成過程

내 용	제 기 시 기	배 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 선전선동대회 (1955.12.28)	· 스탈린의 사망 · 당내 국내파 숙청
경제에서의 자립	당 중앙위원회 3기 12월 전원회의(1956.12.11)	· 대외원조 감소(5개년 경제 계획 수립 차질) · 당내 반김일성운동 고조
정치에서의 자주	당 중앙위원회 3기 12월 전원회의(1957.12.5)	· 공산권내 개인숭배 반대운동 · 당내 중공파, 소련파 타도
군사에서의 자위	당 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1962.12.10)	· 중·소분쟁의 심화와 미·소공존 모색 · 한국의 군사혁명
외교에서의 자주	제2차 당 대표자회의 (1966.10.5)	· 중·소분쟁의 확대 · 비동맹운동의 발전
종합체계화	당 중앙위원회 4기 16차 전원회의(1967.6.28) 및 제5차 당대회 (1970.11.12)	·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 · 김일성 개인숭배운동 전개
김일성주의화	제6차 당대회 (1980.10.10)	· 부자 세습체제 공고화 · 동구의 변화와 우리식 사회 주의 고수

出處: 통일원,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2), p. 38.

金正日은 1982년 김일성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主體思想을 체계화하는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首領論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自主性, 創造性 및 意識性을 가지고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아가는 社會的 존재이지만 사회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歷史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首領의 올바른 領導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⁹⁾ 그 후 1986년 당중앙위원회 간부들 앞에서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는데 수령론에서 더 나아가 ‘社會政治的 生命體’란 概念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혁명의 주체는 首領, 黨, 大衆의 통일체”이며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수령은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運命을 개척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實踐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정립되기 시작하여 純粹이데올로기 차원으로 격상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 主體思想이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재구축되어 김일성의 유일적 지배체제를 확보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根據를 마련하고 있다.

3. 黨 · 國家體制

北韓 政治體制는 舊蘇聯 등 공산제국과 같이 黨 · 國家體制(party-state system)를 그 特徵으로 한다. 黨 · 國家體制는 오직 하나의 당을 根幹으로 한 黨支配 國家體制를 의미한다.¹¹⁾ 단지 북한은 정치체제 발전 과정에서 ‘당의 절대적 지도원칙’보다는 이른바 金日成이 당과 국가 위에 군림하는 ‘김일성 수령의 절대적 지도원칙’이 우선시 되는 黨 · 國家體制로 발전되어 왔다.

北韓 政治體制에서는 당 · 국가체제의 일반적인 특징인 당과 국가의 高位職責을 同一人이 겸직하고, 黨機構 編制와 國家機構를 병행시키고, 고위 관료직에 黨員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이와같은 원칙은 북한이 소비에트화 과정에서 移植, 發展된 것이다.¹²⁾ 1992년 개정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국가에 대한 당의 領導條項을 신설하였다. 또한 조

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참고.

10)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동아일보사, 「原資料로 본 北韓: 1945-1988」(서울: 동아일보사, 1989), pp. 391-95.

11) 李常民, “北韓의 黨 · 國家官僚制의 諸 特性과 變化,” 「統一問題研究」, 제2권, 제2호(1990 여름), p. 236.

12) Ibid., pp. 236-37.

선로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政府機關들은 오직 黨과 김일성의 主體思想에 의하여 지도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동안 북한은 꾸준히 '당의 영도'를 강조해 왔다. 김일성은 1986년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강의를 통해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적 당"이라고 규정하고 黨의 영도적 기능과 役割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金正日은 1992년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라는 談話를 통하여 "당을 강화하고 당의 영도를 보장하며 사회주의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사회주의의 근본 원칙"이라며 당의 영도를 한층더 강조했다.¹³⁾ 따라서 黨·國家體制로 출범한 북한체제에서 조선로동당은 핵심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며, 조직 원칙에서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의하고, 권력구조면에서도 모든 정권기관과 인민대중을 지도 감독하는 頂點에 있는 國家權力의 最高形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당의 절대성보다도 김일성 개인의 절대성이 우선된다. 수령, 당, 대중의 三位一體라는 論理가 북한 권력에서의 당의 위치와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首領의 영도는 노동계급의 黨을 통하여 실현되며 노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 大衆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前衛隊이며 인민대중의 自主性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혁명의 參謀部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체제의 성격은 당·국가체제를 기본으로 한 수령중심체제적 특성으로 二重性을 띠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4. 權力世襲體制

北韓 政治體制의 또 하나의 특징은 金日成-金正日 父子의 權力世襲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내에서의 권력승계는 선거제도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되는 自由民主主義 體制와는 달리 權力上層部의 제한된 범위내에서 閉鎖的인 형태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간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권력승계에는 위기가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共產體制에서의 일반적인 추세와는 달리 父子間의 권력세습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낳고 있다.

13) 「중앙일보」, 1993. 5. 23, p. 11.

한때 金日成의 實弟인 金英柱가 후계자로 부상했다는 說이 있었으나 金日成은 金正日을 후계자로 지목하였다. 김정일의 權力世襲 준비는 지난 70년대부터 착수되어 20년 이상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어떤 학자들은 金正日의 權力부상을 1967년으로 거슬러 잡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1973년 9월 당 중앙위 제5기 7차 全員會議에서 중앙당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로 선출됨으로써 후계자로 부상하게 되었다.¹⁴⁾ 특히 1973년 2월에 발족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金正日이 주도하도록 만들어 후계자로서의 정치능력을 培養하도록 만들었다.

1974년에 김정일은 당 제5기 8차 全員會議에서 당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고,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을 통해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추대를 받는다.¹⁵⁾ 이와같이 1970년대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를 발판으로 정치무대에 데뷔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한다. 이때 김정일은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군사위원에 선출되고 金日成, 金一, 吳振宇 다음으로 권력서열 4위로 부상했다. 김일성을 제외하고는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의 모든 지위에 임명된 유일한 케이스였다.¹⁶⁾ 김정일은 1981년 10월 제7차 '사로청대회'에서 김일성과 나란히 앉아 권력서열 2위로 부상했고,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國防委員會 제1부 위원장, 1991년 12월 당 제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¹⁷⁾ 1992년 3월 黨·政·軍의 수위 칭호¹⁸⁾, 1992년 4월 원수승진,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

14) 梁性喆,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44-45; 「중앙일보」, 1993. 2. 19, p. 11; 柳錫烈, 「남북한 관계론」(서울: 정음사, 1985), p. 31.

15) 최근 북한 언론은 당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후계자로 추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1. 12. 24, 「중앙일보」, 1993. 3. 18, p. 11 참조.

16) 「중앙일보」, 1993. 4. 22, p. 11.

17) 「중앙일보」, 1993. 1. 1, p. 11.

18) 「月間 北韓動向」, 1992. 8, p. 10-11.

장으로 추대¹⁹⁾되면서 名實相符하게 黨·政·軍의 實權을 장악하게 되었다.

북한은 김정일이 실력자로 등장함과 동시에 김정일에 대한 각종 象徵操作을 실시했다. 먼저 김정일에 대한 호칭을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1973년 '黨中央'으로 부르기 시작하여 김정일의 50회 생일인 1992년 2월에 '친애하는 아버지'로 부르기 까지 권력기반 구축과정에서 30여가지 呼稱을 사용하고 있다<표 2>. 그의 출생지를 소련의 브야츠크가 아닌 白頭山 밀영지라고 선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산봉우리 정상 가까운 절벽에 '正日峰'이라는 문자를 새겼으며, 1987년 부터는 김정일에 대한 구호나무가 발견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이 일대를 革命史蹟地로 조성하여 주민 집단 참관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일의 46회 생일때인 1988년 2월에는 '불멸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金正日花를 소개했으며, 또한 금강산 등 명산에 김정일의 語錄 및 이름을 새겨 우상화에 활용하고 있으며, 김정일에 관한 操作된 傳說 및 逸話 등을 출판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²⁰⁾ 이와같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김정일의 카리스마를 人爲的으로 만들고 있다.

북한의 權力承繼는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世襲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권력세습이란 封建的 殘滓로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데, 金日成은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自家撞着을 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 그는 소련의 스탈린 사후와 중국의 모택동 사후 後繼者들에 의한 前任者들의 격하와 비판을 목격하고 그와 같은 일의 再發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死後 야기될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하였을 것이다. 둘째, 金日成이 死後 그가 이룩한 업적과 자신의 지위 등을 永續的 保證 내지는 繼承하여 혁명가 집안의 전통을 아들이 이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는 死後에도 계속해서 위대한 革命家이며 指導者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名譽慾이 있기때문

19) 「세계일보」, 1993. 4. 10; 「조선일보」, 1993. 4. 10.

20) Ibid.; 鐸木昌之, "金正日の 指導力과 政策展望: 首領의 後繼者 金正日の 領導,"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김정일의 정책전망」(서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93), pp. 32-38;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p. 126; 김정일의 우상화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통일원, 「김정일우상화 사례집」(서울: 통일원, 1992) 참조.

이다.

〈표 2〉 金正日의 呼稱 變化

연	대	호	칭
70년대	73. 9	당중앙	
	74. 1	존경하는 지도자동지, 김정일 비서동지	
	75. 6	유일한 지도자(생일을 휴무일로 공식지정)	
	77년 이후	영명하신 지도자, 존경하는 지도자,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공산주의 미래의 대양, 인류가 낳은 걸출한 영웅	
80년대	81.6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83. 2	영도자(41회 생일 계기)	
	83. 5	최고사령관(김정일 내군부 영향력 강화 목적)	
	85. 2	수령(주체사상을 완벽하게 체득하였다는 "수령론"에 근거)	
	86. 2	인민의 아버지	
	87. 2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구호나부 발굴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90년대	90. 12	이민의 운명을 책임진 혁명의 지도자	
	91. 7	위대한 수령	
	92. 2	친애하는(경애하는) 아버지	

出處: 통일원, 「김정일우상화 사례집」(서울: 통일원, 1992), pp. 16-18; 「중앙일보」, 1993. 1. 1, p. 11; NK會 편, 「북한의 100문 100답」(서울: 다나, 1992), p. 80 등을 참고하여 작성.

III. 北韓 政治體制의 變化

1. 北韓 政治體制 變化에 대한 理解

공산정치체제의 變化라고 하는 것은 체제의 근본적인 수정 내지는 개혁으로 보아 多黨制와 自由選舉의 도입, 共產黨의 1당독재 체제의 폐지, 완전한 市場經濟體制의 수용 등을 의미한다. 체제의 변화는 개혁의 주체를 중심으로 대체로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 그리고 외압에 의한 '옆으로부터'의 변화를 들 수 있으며, 변화의 속도를 중심으로 '급진적 개혁'과 '점진적 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를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蘇聯型으로, 소련은 1985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된 이래 '위로부터' 점진적으로 정치적 다원화를 추구하여 마침내 蘇聯邦이 완전히 解體되고 공산당이 와해되는 등 혁명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둘째는, 中國型으로, 모택동 사망후 등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 건설로 나타났다. 그 특징은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위로부터 부분적, 점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東歐型이다. 동구의 경우 개혁의 양상과 시기는 나라마다 어느정도 차별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문화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동구의 경우는 中·蘇와는 달리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기존 공산주의를 몰락시키고,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추구하는 急進的인 형태이다.²¹⁾

東歐諸國들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구 개혁운동을 주도해 온 폴란드는 소련의 개혁정책의 영향과 自由勞組 등의 '아래로부터'의 변혁요구를 수용하여 1989년 사회주의적 의회민주주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총선거에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초로 非共產系가 승리를 했으며, 自由勞組의 합법화, 議會 및 選舉制度의 개선, 大統領制의 신설, 시장경제원리의 확대 등의 급격한 개혁을 추구해 왔다. 헝가리의 경

21) 柳錫烈, 「北韓의 變化類型과 南北韓關係의 展望」(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1), pp. 17-18; 강혜련,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한," 한국문화연구원, 「북한사회의 변화와 그 전망」(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92), pp. 8-17; 金甲喆, "북한체제변화와 그 전망," 金甲喆 외, 「北韓學 概論: 北韓社會主義 現在와 未來」(서울: 文佑社, 1990), pp. 453-55 참조.

우에도 1956년 자유화 운동 이래 1968년부터는 시장경제원리를 대폭 수용하는 등 경제개혁을 활발히 추진해 왔으며, 1985년에는 복수후보제에 의한 선거를 실시 했으며, 1989년에는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등 소련의 영향과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 급속히 改革이 이루어졌다. 체코는 1969년 연방정부 수립이래 '위와 아래로 부터' 동시에 政治的 變化를 漸進的으로 추진해 왔다. 루마니아는 소련 및 이웃 공산국가들에 의한 외부적 영향과 그에 따른 '아래로부터' 개혁요구로 1989년 지도자 차우세스크가 처형되어 1당독제와 개인숭배 체제는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되고 民主化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소련 및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國家主導의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1990년에는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알바니아는 국가주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지 못하다.²²⁾

소련 및 중국은 共産黨 주도하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한데 반하여,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의 특색은 대체로 밑으로부터 조직적이고 강력한 개혁의 요구가 經濟構造의 개혁뿐만 아니라 政治的 개혁과 교조적인 이념을 포기하는 전면적인 體制變化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었다는 점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가 가능하게 된 이유는 첫째,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改革·開放政策으로 동구 국가들의 자주노선을 허용하였고, 둘째, 美·蘇間의 관계개선으로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외교적 지원을 받게되어 이념보다는 국익중심의 實用的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고, 셋째, 동구 국가들 내에서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가는 民間團體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²³⁾

北韓體制的 변화도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체제와 같이 體制內的 變化와 體制全體의 변화를 상징해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북한의 정치체제도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 같이 急進的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豫見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의 1인 독재체제하의 조선로동당의 中央集權的 통제와 主體思想의 이데올로기를 信奉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권력세습을 특징으로하는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러시아 및

22) 네트워킹 편집부 편, 「학술·정보·시사 네트워크, 1993」(서울: 일감호, 1992) 참조.

23)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pp. 161-62.

중국이 오히려 개방과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체제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몇가지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동구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北韓은 처음에는 소련의 衛星國家로 출발하였지만 1960년대부터는 그러한 위치에서 탈피하여 주체사상에 의한 통치를 해오고 있으며, 극도로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동구와는 달리 人民들이 극소수의 海外駐在員이나 留學生을 제외하고는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狀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 바람이 북한의 人民들에게는 直接的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北韓은 歷史, 文化的으로도 동구와는 다르다. 북한은 儒敎的 전통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들을 통치대상으로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반체제적 大衆運動을 지도할 수 있는 조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²⁴⁾ 즉, 金日成이 48년이상 북한을 통치하면서 체제에 도전하는 반체제적 인물들을 숙청하는데 성공하여, 북한에는 당과 국가 이외에 정책을 주장할 수 있는 政治組織, 學生集團, 反體制組織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공산주의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이 주창한 主體思想이라는 강압적 이데올로기에 통치되는 동원체제적 속성 때문에,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북한 수뇌부는 소련이나 東歐諸國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체제개혁을 시도해야 할 분기점에 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다당제나,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등의 體制變革的 조치는 상정하기 어렵고 體制維持를 목표로한 정책대응이라는 면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 政治體制 變化의 環境的 要因

북한의 변화를 유발시킬수 있는 요인은 對內的 環境要因과 對外的 環境要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北韓 政治體制의 변화라는 것은 硬直性을 띠고 있는 북한정치체제에 있어서는 體制管理面에서의 變化 그 이상을 의미하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24) 崔完圭, "體制變化의 要因과 樣相," 高性俊 외, 「轉換期の 北韓 社會主義」(서울: 大旺社, 1992), pp. 343-45.

가. 對內的 環境要因

북한체제 變化의 대내적 환경요인으로는 우선 날로 심각해져가는 당면한 經濟難 解決을 위한 興件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1990년 -3.7%, 1991년 -5.2%, 1992년 -7.6%의 성장을 기록하여 해마다 經濟成長率이 급격히 下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舊蘇聯 및 東歐 諸國으로부터 원유 공급의 감소와 원자재 조달의 차질로 중공업 稼動率이 40~50%에 머물고 있으며,²⁵⁾ 對外貿易도 1988년부터는 매년 감소하여 1991년에는 전년대비 43%감소하여 27.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²⁶⁾ 따라서 3차 7개년 계획이 올해 끝날 예정이지만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1984년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합영법」을 발표한 이래, 1991년 7월 두만강 개발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허용했으며, 북한의 선봉, 나진, 청진 등에 대한 '自由貿易地帶'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북한은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을 발표하여 기존의 합영법을 보완함으로써 제한적인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제한적 경제개방 정책은 對外經濟協力體制로의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北韓 住民들의 의식구조의 변화이다. 북한은 식료품과 의료 및 기타 가장 기본적인 物資의 결핍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北韓 社會도 국제화의 조류속에서 완전한 외부 세계와의 차단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과 동구 및 소련을 留學한 學生들은 세계의 조류를 알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폐쇄된 사회에서 굶주리고 있고 主體思想보다는 빵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북한 주민들은 食糧難으로 하루 두끼로 끼니를 때우고 있으며, 따라서 식량폭동과 騷擾事態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²⁷⁾

25) *Far Eastern Economic Review*, September 9, 1993, pp. 16-20; 「조선일보」, 1993. 3. 31, p. 21.

26) 통일원, 「북한개요」, p. 225.

27) *Korea Herald*, August 20, 1993, p. 1; August 21, 1993, p. 1; 「세계일보」, 1993. 8. 20, p. 1; 1993. 8. 21, pp. 1 and 4 참조.

북한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고, 改革과 開放을 통해 북한을 더욱 산업화된 사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權力엘리트 構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革命世代들이 권력의 상층부에 있지만 고령화 및 사망으로 점점 권력의 周邊에서 사라지고, 해외유학 경험자들인 專門技術官僚 출신의 혁명2세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現實的이고 融通性 있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漸進的인 체제변화가 예상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권력집단 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나. 對外的 環境要因

北韓體制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對外的 環境요인으로는 첫째, 社會主義圈의 변화이다. 1989년도를 전후하여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共產主義 이념이 붕괴되었으며, 이들 국가들과 韓國과의 잇달은 수교로 폐쇄체제인 북한은 고립을 면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이들 나라들은 북한과의 이념적 유대에서 벗어나 國際社會에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개혁·개방을 종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종래의 주장을 꺾고 현실 적응적 변화의 일환으로 유엔가입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冷戰體制를 지속시킬 경우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둘째는 核問題이다. 북한은 지난 3월 12일 NPT탈퇴로 세계를 한번 놀라게 했다가 국제적인 압력에 못이겨 6월 11일 탈퇴유보를 하였으나 아직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사정거리 1천Km 이상인 미사일 노동1호의 개발에 成功했으며, 사정거리가 최대 2천Km인 노동2호를 개발하고 있다.²⁸⁾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國際的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북한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제적 고립 탈피와 經濟的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問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核武器 開發보다 對美·日 關係 改善으로 무역, 투자 및 원조 등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증대

28) 「조선일보」, 1993. 9. 16, p. 1 and 3 참조.

되고 있다. 미·일은 접근과정에서 북한의 核疑惑解消, 改革, 開放, 人權問題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變化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셋째, 南北韓 관계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을 反統一勢力으로 규정하여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주변 세계정세의 변화 등에 자극을 받아 1991년 12월 남북간에 역사적인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南北基本合意書」에 서명함으로써 남북한 국민에게 꿈과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의 핵문제와 남한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 등이 맞물려서 南北간의 會談이 중단되는 등 冷却局面에 빠져있다. 또한 북한은 그 동안 주장해 오던 민족해방 논리와 聯邦制 統一方案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북한이 고정된 내남인식과 민족해방론을 포기하고, 남한은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여 남북이 相互協力으로 민족의 공동번영과 진정한 통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북한체제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북한 정치체제 변화의 환경적 영향력을 요인별로 살펴 보았다. 북한의 經濟的 현실과 周邊國際情勢의 측면으로 볼 때 체제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소련 및 동구제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변화를 시도해 왔지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고 政治的으로 심각한 혼란에 빠져있다는 점, 北韓體制 變化에 대한 군부 등 북한 지도층의 위기의식, 그리고 金日成 1인 독재체제의 사상적 근간인 주체사상의 강조 등은 北韓體制 變化의 억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政治體制 變化의 實相

北韓 政治體制는 共產主義圈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현재 어떤 變化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북한은 소련에서 改革政策이 추진될 초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개혁이 本格化 되는 과정에서 다당제 수용, 共產黨의 정권상실, 그리고 헝가리 및 폴란드의 한국과의 修交, 배를린 장벽의 붕괴 등 일련의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자 외부로부터 정보유입을 차단하고, 소련 및 동구와의 差別性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우리식대로 살자'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로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 유일의 지도이념인 主體思想에 기초하여 여타 社會主義와는 달리 북한 현실에 적합한 독특한 사회주의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 이론지 「근로자」 1989년 10월호에서는 “복잡하게 조성되는 혁명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처하여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힘차게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갈데 대한 당의 혁명적 방침을 빛나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²⁹⁾고 강조하고 있다. 金正日이 1991년 5월 5일에 발표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사회주의”라고 개념화 했다.³⁰⁾

이와같이 북한은 東歐 社會主義 體制의 붕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체제유지를 위한 예방조치로서 수령을 중심으로 一致團結할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의 基本原則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對內外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部分的이고 제한적인 變化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의 1당지배를 견지하면서도 社會民主黨과 天道教靑友黨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外見上 다당제를 수용했다. 종래에는 이들 정당 출신이 최고인민회의의 代議員에 극소수 선출되었지만, 1990년 4월에 있었던 제9기 최고인민회의의 代議員 선거에서 사회민주당 출신이 7.4%, 천도교 청우당 출신이 3.2%, 무소속이 1.9%를 점하게 되었다.³¹⁾ 이는 소련과 동구의 民主化 추세를 의식한 비록 政策的 배려이기는 하지만 1당독재를 벗어나 다당제로 나가는 徵兆를 나타내 준다.

북한은 黨·政分離 차원에서 國家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 최고주권기관이지만 실제로는 朝鮮勞動黨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92년 개정헌법에서

29) 고헌철,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1989. 10, p. 19.

30)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991. 6, pp. 3-25 참조.

31) 金南植, “北韓의 權力構造 變化 展望,” 「統一問題研究」, 제3권, 제1호(1991 봄), p. 35.

는 國家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권한 일부를 축소하고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개정헌법은 종래의 주석이 자동 겸직하던 國防委員會 위원장직을 최고인민회의가 선출 또는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른 나라와 맺은 條約의 批准, 廢棄의 권한과 주석의 選舉 및 召喚하는 권한 등을 최고인민회의에 부여함으로써 형식상으로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92년 헌법 제91조). 이로서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실질적인 最高主權機關으로 부상하여 기능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官僚階層이 꾸준히 증가하여 김일성 대학과 소련 및 동구제국에 유학을 한 專門技術官僚들이 金正日의 부상과 함께 대거 등장하고 있다. 1990년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에서 보더라도 대학출신 전문관료들이 지난 8기의 56.7%에서 68.2%로 증가되었다.³²⁾ 이들 전문관료들의 등장은 社會, 經濟的 근대화 추진과 대외정책의 실용주의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經濟的 차원에서도 對內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모색해 왔다. 1984년에 제정된 「합영법」 외에도 1985년에는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합영회사소득세법」 등을 제정하여 對外開放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6년에는 「조선국영합영총회사」를 설립하여 외자유치에 노력했으며, 1991년에는 나진, 선봉지역을 自由貿易地帶로 지정하였고, 1992년에는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외국인의 合法的인 권리와 이익보장 관련 조항과 외국과의 합영 및 합작장려 조항 등을 신설하여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對外經濟開放政策의 法的 土臺를 마련하였으며(92년 헌법 제37조), 같은 해 10월 5일에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했다.³³⁾ 이와같은 일련의 態度變化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존의 自力更生路線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종래의 폐쇄적 입장을 다소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정책변화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의 이와같은 제한적인 변화는 本質的인 體制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기 보다 대외개방의 파급효과를 극소화시켜 體制維持에 손상을 주지않

32) 梁性喆, 「北韓政治研究」(서울: 박영사, 1993), p. 128.

33) 통일원, 「統一速報」, 제92-11호, 1992. 11. 28 참조.

는 범위내에서 또한 經濟難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변화나 개혁적 조치일지라도 그것은 金日成 유일 체제를 온존시키며, 金正日로의 권력이양을 安定的이고 순조롭게 완수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적 성격으로보아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적 사항은 일차적으로 政治體制의 유지라고 볼 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도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권력이양을 순조롭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適用 될 것이다.

IV. 北韓의 權力構造의 變動

북한의 權力構造는 朝鮮勞動黨과 國家機關으로 나누어지며 김일성 수령의 영도하에 黨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조직이 운영되는 국가에 대한 당 우위 체제이다. 북한에서는 1945년 10월 10일을 공식적인 당 창건일로 정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1945년 10월 평양서 열린 “朝鮮共產黨 西北5道 黨責任者 및 熱性者 大會”에서 창설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모체로 하고 있다. 이어 1946년 4월 그 명칭을 「北朝鮮 共產黨」으로 바꾸었으며, 1946년 8월 朝鮮新民黨과의 합당으로 北朝鮮勞動黨으로 발족했다. 북조선로동당은 정권수립 이후인 1949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1국1당 원칙에 따라 현재의 朝鮮勞動黨으로 통합되었다. 조선로동당은 설립당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이념으로 하였으나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이념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명문화하고 최종목표를 전한반도의 共產主義 社會 건설과 온사회 主體思想化에 두고 있다.³⁴⁾ 國家機構는 1948년 헌법제정 이래 5차례의 부분 개정과 1972년과 1992년의 2회에 걸쳐 全面改正을 통해 초기헌법 당시의 역할과 구조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 졌다.

1. 朝鮮勞動黨의 中央組織

1992년 북한 개정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노동당의 領導條項을 신설하여 당의 指導的 地位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를 명문화 하였다. 朝鮮勞動黨은 1980년 제6차 黨大會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으로서 실제로 各 國家機關이나 政治組織들을 이끌고 지휘하며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4) 조선로동당의 형성 과정과 이념의 변천에 대해서는,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서울: 을유문화사, 1989), pp. 202-13; 통일원,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2), pp. 53-57 참조.

朝鮮勞動黨은 고도의 中央集權化된 관료조직으로, 그 피라미트의 정점에는 형식적인 대표기관인 黨大會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최고의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는 黨中央委員會의 정상급 엘리트로 구성된 政治局과 秘書局을 들 수 있다.

가. 黨大會

당대회는 形式上으로 조선로동당의 最高指導機關이다. 당규약에는 당대회를 5년에 한번씩 黨中央委員會가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당규약 21조),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대회는 지금까지 6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당규약에 규정된 기간에 열린 일은 한번도 없었으며, 2년, 5년, 8년, 9년 등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지난 1980년 10월에 제6차 黨大會가 개최된 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7차 黨大會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금년 말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黨大會 開催現況

대회 및 일자	당원수(명)	인구대비	대의원수	비 고
1차 당대회 1946. 8. 28	366,000	4%	881	◦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 합당문제 ◦ 북조선로동당강령 및 규약
2차 당대회 1948. 3. 27	758,000	8%	999	◦ 북조선로동당규약 개정
3차 당대회 1956. 4. 23	1,164,945	10%	916	◦ 평화통일선언 채택
4차 당대회 1961. 9. 11	1,311,563	17.5%	1,657	◦ 경제발전 7개년계획 채택 ◦ 평화통일 선언 채택
5차 당대회 1970. 11. 2	1,600,000	11.4%	1,734	◦ 경제발전 6개년계획 채택
6차 당대회 1980. 10. 10	3,000,000	12.2%	3,220	◦ 김정일의 공식 등장 ◦ 사회주의 건설 10대진망 목표제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제안

出處: 통일원, 「북한개요」, p. 66.

당대회의 機能은 1)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 2) 당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 보충, 3)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당규약 22조), 實質的인 권한은 지니지 못하고 당중앙위원회나 정치국의 決定事項을 가결하는 儀禮的이고 制限的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나. 黨中央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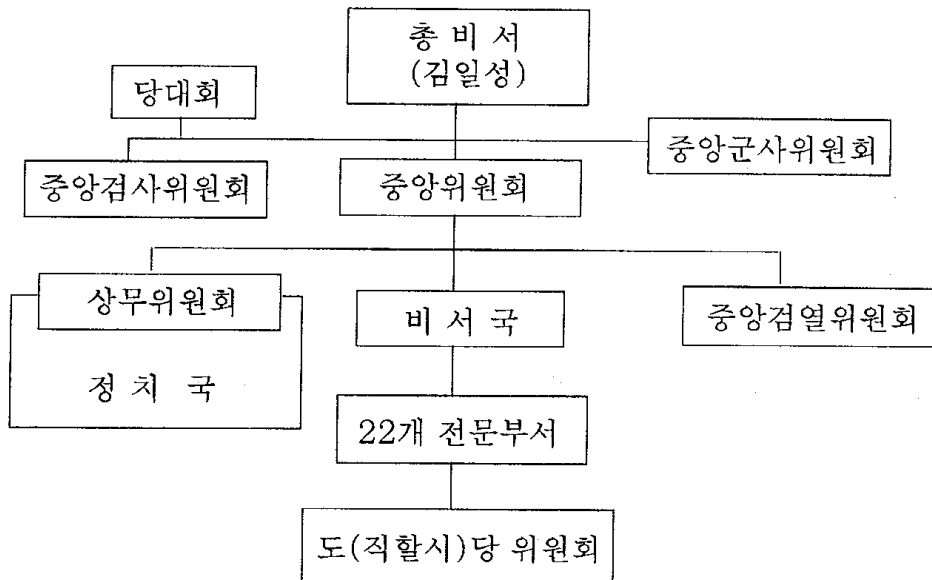
黨中央委員會는 黨大會와 黨大會 사이의 모든 黨事業을 조직 지도하는 등 당의 모든 주요사업을 관장하는 事實上 黨의 最高指導機關이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조직되는 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 명의로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 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당의 權力의 源泉이 되고 있다.

黨中央委員會 전원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있으며, 주요 임무로는 1)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며, 2)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3) 당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며, 4) 당중앙위원회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5)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이다(당규약 23-24조). 朝鮮勞動黨의 조직은 <표 3>과 같다.

政治局은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의 黨中央委員會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이다(당규약 25조). 당의 모든 정책이 정치국에서 수립되고 있으므로 정치국은 실질적으로 북한권력의 核心機構이자 絶對的인 권력기관이다. 정치국은 1946년 8월 제1차 당대회에 이어 열렸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政治委員會로 처음 조직되었으며 1956년 4월 3차 당대회에서 常務委員會로 일시 개칭되었다가 1961년 4차 당대회에서 다시 政治委員會로 환원되었으며, 1966년 10월에 당 대표자회의에서 정치위원회內에 상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이를 폐지하였는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개칭하고, 政治局내에 상무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였다.³⁵⁾

35) 통일원, 「북한개요」, p. 68;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서울: 北韓研究所, 1983), p. 203.

〈표 3〉 朝鮮勞動黨 組織表



出處: 통일원, 「북한개요」, p. 64 참조.

秘書局은 1966년 10월 黨中央委員會 제4기 14차 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인데 총비서 1명과 비서 10명 내외로 구성된다.³⁶⁾ 비서국은 幹部問題, 黨內問題 및 기타 당면문제들을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 黨 執行部署의 最高機關이다. 또한 秘書局은 중앙위원회의 각 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당의 중추 기관이다.³⁷⁾

그 밖의 中央軍事委員會는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全員會議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군사노선 등 國防力 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 후 당중앙위원회의 下部組織으로 신설되었다. 中央軍事委員會는 당의 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군수산업 및 인민군대를 비롯한 모든 군사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당규약 제27조). 中央檢閱委員會는 당원의 당규 위반이나 반당행위를 할 때 당원의 책임추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당규약 제28조). 당초 창당대회 규약에는 검열위원

36) Ibid, p.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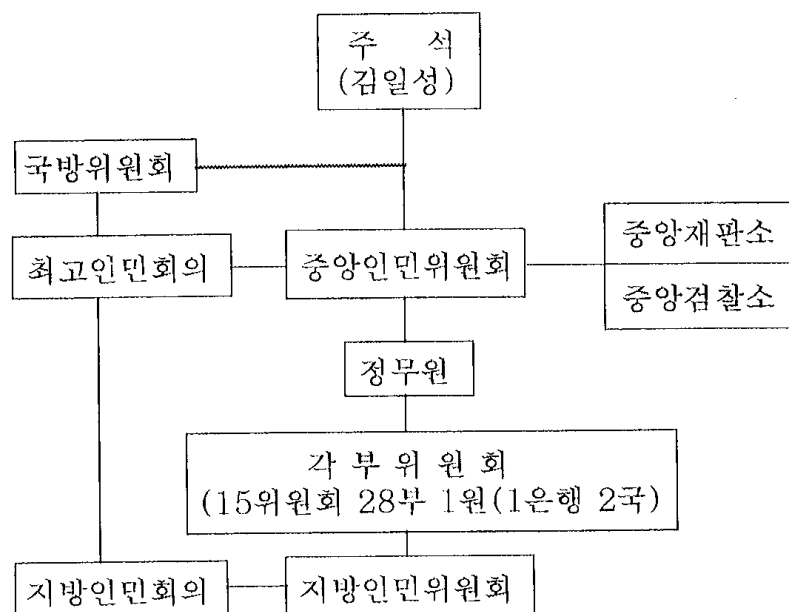
37) 조선로동당 규약 26조; 통일원, 「북한개요」, p. 68 참조.

회의 구성원을 黨大會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제2차 당대회부터는 중앙위원회의 지도밑에서 사업하고 그 構成員도 중앙위원회에서 選出하도록 했는데 이는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中央檢査委員會는 당의 財政 經理事業을 검사하는 機能을 맡고 있다(당규약 제29조).

2. 國家機關

북한의 國家機關은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형식상 三權分立의 원칙에 따라 立法機能을 담당하는 最高人民會議과 行政機能을 담당하는 中央人民委員會와 政務院, 그리고 司法機能을 담당하는 中央裁判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통치권력은 黨에 집중되어 있으며 黨의 路線과 政策에 입각하여 그 실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黨의 階層制와 行政構造의 階層制가 종적으로 횡적으로 긴밀히 상호 연결되어 있고 人的構成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당과 정부의 중책을 겸직하는 二重兼職裝置가 되어있어 당으로부터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다.

<표 4> 國家機關 組織表



出處: 통일원, 「북한개요」, p. 79 참조.

가. 主席

북한은 1992년 개정헌법 105조에서 最高人民會議에서 선출되는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고 하여 1972년 헌법 89조상의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한다"는 부분을 修正하였다. 주석은 대체로보면 1948년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된다. 개정헌법은 주석의 헌법상 權限을 일부 축소하였는데 헌법상 주석의 권한을 1) 중앙인민회의에 대한 지도, 2) 정무회의의 소집, 지도, 3)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및 상설회의 결정,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중요 정령과 결정에 대한 공포, 4) 특사권 행사, 5) 조약의 비준 및 폐기, 6)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 7) 외국사신의 신임장 및 소환장 접수, 8) 명령발포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7-108조).

改正憲法에서는 주석의 권한 가운데 일체의 武力에 대한 指揮, 統率한다는 규정(구헌법 제93조)을 삭제하고,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권을 國防委員長에게 부여하였다(제113조). 이는 주석의 권한 일부 分散하여 국방위원장인 金正日의 군부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또한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는 규정(구헌법 제91조)를 삭제하고, 최고인민회의가 주석의 제의없이 중앙인민위원회 書記長, 委員들을 選舉 또는 召喚하도록 하였다(제91조 9호). 또한 주석의 임기는 5년이며 최고인민회의가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중임제한규정이 없어 無制限으로 유임될 수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에 의해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義務規定은 없다.

나. 最高人民會議

最高人民會議는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最高主權機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제87조) 실제로는 名目상의 권한을 갖는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代議員으로 구성되며(제90조) 1년에 1-2회 定期會議를 소집하고,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상설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臨時會議를 소집한다(제92조). 회기는 통상 2-3일이며 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제93조).

改正憲法에서는 最高人民會議의 권한을 형식적이나마 일부 강화하기 위하여 몇가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72년 헌법에서 주석의 권한이던 國防委員會 委員長職이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選出하도록 하였으며, 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구헌법에서 주석의 권한인 條約의 批准 및 廢棄權이 최고인민회의로 넘어왔다(제91조).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常設會議의 권한을 다소 강화하였다. 헌법 제88조에서는 "립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고 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실질적 입법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였다. 常設會議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는 意思定足數를 구헌법이 대의원 전원의 過半數 以上으로 한 것(구헌법 제78조)을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強化하였다. 이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의 強化에 따른 牽制裝置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政策과 法案의 作成, 審議 및 執行 對策 樹立을 위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 등을 둔다고하여 구헌법에서의 예산심의위원회, 법안심의위원회(구헌법 제83조)보다 확대하였다. 또한 대의원에 대하여 休會中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承認없이 체포당하지 않는 特權(구헌법 제84조) 외에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주요 정책결정권이 이미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로 이양되었고, 김일성 1인체제가 확고히 構築되었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는 독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政治機關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단지 당이나 주석, 또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承認해 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다. 國防委員會

개정헌법에서는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의 傘下機關의 하나였던 國防委員會를 分離, 獨立시켜 주석 다음의 기관, 즉 "國家主權의 最高軍事指導機關"으로 격상시켜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일체의 군사에 관한 권한을 移讓했다(제11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 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의 지도,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 및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 수여,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제114조). 특히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一切 武力을 指揮 統率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113조) 국방정책에 관한 最高政策決定權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위상 提高는 이미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갖고있는 金正日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김정일은 이제 名實相符한 최고 국방정책 결정권자가 되었다.

라. 中央人民委員會와 政務院

中央人民委員會와 政務院에 관해서는 1992년 개정헌법에서 크게 변경된 것은 없으며, 國家機構改編에 따른 字句修正과 몇 개의 조항을 新設하였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수위인 주석의 統制下에 있으며 주석, 부주석,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되며 任期는 5년이다(제117-119조). 그 人的構成에 있어서 위원들 대부분이 당의 政治局위원, 秘書와 같은 당의 核心幹部나 黨·政機構의 최고간부들이 겸하고 있어 黨·政協議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³⁸⁾

중앙인민위원회는 국정 전반에 걸친 강력한 권한행사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國家權力의 核心體로서 존재하게 되며, 당,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主席을 補佐함으로써 주석과 더불어 強力한 國家權力을 갖게 된다. 그러나 중앙인민위원회의 수장이 주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석의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補助機構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2년 개정헌법은 국방위원회를 주석 다음의 기관으로 격상시켜 그동안 중앙인민위원회가 갖고 있던 武力使用에 관한 전반적 指揮權과 軍幹部 人事權을 갖도록 했다. 이는 중앙인민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政務院은 최고주권기관의 行政的 執行機關으로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指導와 監督을 받는다(제124조). 정무원은 1948년 헌법상의 內閣이 바뀐 것으로서 그 당시의 지위는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었으나 1972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그 지위는 최고주권기관의 行政的 執行機關으로 격

38) Ibid., p. 85.

하되었다. 정무원은 總理, 副總理, 部長들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며, 총리는 主席의 제의에 의하여 最高人民會議에서 피선되거나 소환되며, 그 밖의 성원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인민위원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政務院의 조직은 북한 정권수립 이후 현재까지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8년에 9월에 출범하여 약 10년간 지속된 1차內閣은 首相 1명, 副首相 3명, 委員會 1개와 17개의 部署로 조직되었다가 이후 4차내각까지 副首相과 專門部署, 그리고 委員會의 숫자가 증가되었다. 이후 정무원으로 이름이 바뀐 1972년 5차內閣에 이르러 총리 1명, 부총리 6명, 15개의 부서, 7개의 위원회로 縮小 調整되었다. 1990년 5월에는 총리 1명, 부총리 10명, 14위원회, 25부, 1원, 2국, 1은행으로 조직되었다가, 최근에는 15위원회, 28부, 1원, 2국, 1은행으로 확대되었다.³⁹⁾

〈표 5〉 歷代 內閣 및 政務院의 構成變化

기별	총리 (수상)	부총리 (부수상)	부장(상) 및 원장	위원장	사무장
1기(1948. 9)	1	3	17	1	
2기(1957. 9)	1	6	24	2	
3기(1962. 10)	1	8	22	5	
4기(1967. 12)	1	8	30	6	
5기(1972. 12)	1	6	15	7	
6기(1977. 12)	1	6	21	7	1
7기(1982. 4)	1	13	17	14	
8기(1986. 12)	1	10	11	15	
9기(1990. 5)	1	10	26*	15	1

* 25부 1원

出處: 통일원, 「북한개요」, p. 87.

39) Ibid., p. 88.

3. 權力構造 變動의 特徵

북한의 權力構造에서는 그동안 朝鮮勞動黨의 구조에는 變動이 없으나 國家機關에는 1992년 헌법개정의 계기로 다소 變動이 생겼다. 北韓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대신 主體思想을 국가지도이념으로 대체하고 제한적 經濟開放에 대비하며 權力世襲의 法的根據를 마련하기 위하여 종전의 헌법을 개정했다. 北韓憲法은 1948년 人民共和國憲法을 채택한 이후 다섯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수정해 오다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社會主義憲法'을 채택하여 시행해온지 20년만에 개정되었다. 전문 7장 171 조로 된 이번 헌법은 1972년의 헌법보다 22개 조항이 늘어났다. 경제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지방경제위원회'에 관한 절을 추가하여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등에 대한 憲法的 基礎를 마련하였다. 또한 國防委員會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國家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가 가지고 있던 군사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군사정책의 일원화와 金正日의 군부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축소한 반면에 最高人民會議의 권한을 다소 강화했다. 주요 기관의 임기도 5년으로 단일화 연장하였는데 종전에 4년이던 主席, 最高人民會議, 中央人民委員會의 임기를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최고인민회 상설회의, 국방위원회, 정무원, 중앙재판소장, 중앙검찰소장 등은 5년 任期條項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도 2년에서 도(직할시) 인민회의와 같이 4년으로 연장하였다.

개정헌법은 북한의 權力構造 變動과 관련하여 몇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⁴⁰⁾ 우선 理念과 指導路線면에서 구헌법의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규정(구헌법 제4조)를 개정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主體思想을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明示함으로써(제3조)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浮刻하는 한편, 社會主義 革命的 政權의 기본노선을 견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40) 「月刊 北韓動向」, 1992. 11, pp. 71-76; 통일원, "북한헌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統一速報」, 제92-10호, 1992. 11. 27 참조.

둘째, 國家에 대한 黨의 영도조향을 신설하여 勞動黨의 지도적 지위에 대한 헌법상 根據를 마련하였다. 북한에서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선로동당은 勞動階級과 全體 勤勞大衆의 先鋒的, 組織的 部隊이며 전체 근로대중조직체 중에서 최고형태의 革命組織으로서 실제로 각종 국가기관이나 政治組織들을 이끌고 지휘하며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헌법에서는 조선로동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存在 내지 活動의 근거가 됨을 명백히 했다.

셋째, 개정헌법은 國防委員會를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시키는 등 軍의 위상을 제고하고 軍·政 二元體制를 제도화함으로써 金日成父子 체제의 유지와 金正日의 權力承繼 基盤을 제도적으로 공고화했으며, 사회주의 건설축진을 위한 대중운동의 상징인 千里馬운동을 김정일이 주창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으로 변경하여 김정일의 指導路線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넷째,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이 군최고사령관직을 당연히 兼職하던 종래의 규정을 削除함으로써 이미 1991년 12월 당6기 19차 중앙위원회에서 최고사령관직에 추대된 金正日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保障하고 있다. 이로써 김정일은 공식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 당비서, 당군사위원, 국방위원장, 군최고사령관의 직책을 가져 군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군의 권력 승계는 끝났으며 이제 主席職과 總秘書職을 형식상 承繼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었다. 제1차 당대회시에는 中央委員의 수가 43명에 불과했는데 당대회가 거듭될수록 차츰 수가 증가되어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委員이 145명, 候補委員 103명으로 모두 248명으로 늘어났으며, 1992년 12월 현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委員 191명, 候補委員 1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대회 때마다 중앙위원회의 상당수 위원들의 交替가 이루어졌다. <표 6>에서 보듯이 1차 당대회부터 6차 당대회까지 연임한 사람은 오직 金日成 한 사람뿐이다. 제2차 당대회에서는 제1차 당대회 때의 위원 43명 중 30명이 留任되었지만, 제3차 당대회 때는 제2차 당대회 때의 67명 중 29명만 留任되었고, 제3차에서 제4차로는 71명 중 28명, 제4차에서 제5차로는 85명 중 31명만, 5차에서 6차로는 117명 중 67명만 留任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이 북한권력의 最高頂點의 자리에 앉아 絶對的인 권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권력엘리트의 많은 인물 교체는 혁명1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新進 權力엘리트, 즉 혁명2세대에 의한 권력엘리트의 交替現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朝鮮勞動黨 中央委員 再選現況

당대회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제1차	43	30	12(2) ^a	5(1) ^a	2	2(1) ^b
제2차		67	29	11(1) ^c	3(1) ^d	2
제3차			71	28	10	6(1) ^e
제4차				85	31	13(3) ^f
제5차					117	67
제6차						145

- a. 김창만, 윤공흠은 2차에서는 빠졌다가 3차에서 선출됨. 4차에서는 김창만이 다시 선출됨.
 b. 허정숙은 1, 2, 3, 6차에 선출되고, 4, 5차에는 선출되지 않음.
 c. 이북명은 2, 4차에 선출, 3차에는 탈락.
 d. 방학세는 2, 3, 5, 6차에 선출, 4차에는 탈락.
 e. 이종욱은 3, 4, 6차에 선출, 5차에는 탈락.
 f. 최광, 이재윤, 이계철은 4, 6차에 선출, 5차에는 탈락.

出處: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1), p. 347.

나. 政治局 常務委員會 및 政治局

政治局 常務委員會는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기관으로서 당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최고지도기구이다. 1980년 10월 설치당시 상무위원회는 金日成, 金一, 吳振宇, 金正日, 李鍾玉 등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黨(김일), 軍(오진우), 政(이종옥)을 대표하는 최고 실력자와 김일성父子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集團指導體制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제도적으로 金正日의 권력승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

〈표 7〉 政治局 常務委員 變動狀況

1980. 10 (6차 당대회)	1981. 10 (사로청 7차대회)	1983. 9 (9. 9절 행사)	1984.3 (김일사망 이후)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김 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오진우	김 일	김 일	오진우
김정일	오진우	오진우	
이종옥	이종옥		
5명	5명	4명	3명

出處: 金南植, "北韓의 權力構造 變化 展望," 「統一問題研究」, 제3권, 제1호 (1991 봄), p. 25.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常務委員會는 신설당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3명으로 尊屬하고 있다. 김정일의 서열은 혁명세대들인 吳振宇 다음인 4위였다. 그 후 1981년 10월 사회주의 노동청년 제7차 대회에서부터 김정일이 김일성 다음 순위인 2위로 격상되었다. 李鍾玉은 1983년 9월 상무위원에서 탈락하여 副主席으로 임명되었고, 김일이 1984년 3월 사망하여 상무위원회의 성원은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3인으로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일 상무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따른다면, 그 결원을 보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인으로 運營하는

것을 보면 이 기구는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정당화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데 불과했음이 분명하다.

政治局은 1980년 10월 위원 19명, 후보위원 15명이었는데, 이들 위원 중에 黨僚 6명, 軍部 7명, 技術官僚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권력의 핵심이므로 정치국원의 구성체가 權力構造의 단면이라고 하겠다. 그 후 정치국의 변동이 많았다. 1990년 2월에는 위원 14명 후보위원 11명, 그리고 1992년 12월에 이르면 위원 12명 후보위원 1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徐哲이 1992년 9월 20일 사망하였고, 延亨默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북한의 제한적 개방을 요구했다가 미움을 사서 정치국 위원의 자리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이다.⁴²⁾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政治局은 혁명1세대들이 상당수 사망함으로써 혁명1세대의 비율은 1980년의 58%에서 33%로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현, 임춘추, 오백룡, 전문섭, 허담, 서철 등이 死亡하고 현재는 김일성, 오진우, 박성철, 최광 등 4명만이 남아있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1992년 12월 현재까지 委員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박성철, 강성산, 김영남, 계응태 등 7명이다. 革命世代의 減少와 함께 黨僚와 軍部の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당료의 구성비는 32%에서 25%로 감소하고 있고, 軍部도 1980년의 위원 19명 중 軍부가 7명으로 기술관료 6명보다 수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었으나, 현재 12명의 위원 가운데 오진우, 최광 두명만 남았다. 반면에 기술관료, 즉 테크노크라트는 32%에서 50%로 顯著的한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候補委員으로 充원된 인물들은 거의 經濟專門家 등 기술관료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관료들은 특히 1980년대 이후 대거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金正日이 1980년부터 처음으로 정치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과 맞물려 있다. 김일성은 기존방식대로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하여 政治體系의 틀을 유지하는 동안 그의 후계자인 아들 金正日을 내세워 기술관료의 입장을 지지하고 이들을 성장하게 함으로써 김정일 後繼體制 구축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2) *Korea Herald*, August 3, 1993, p. 2.

〈표 8〉 政治局 委員 變動狀況

연도	80년10월	90년5월	92년2월	92년 12월
1	☆김일성(黨)	☆김일성(黨)	☆김일성(黨)	☆김일성(黨)
2	☆김 일(黨)	김정일(黨)	김정일(黨)	김정일(黨)
3	☆오진우(軍)	☆오진우(軍)	☆오진우(軍)	☆오진우(軍)
4	김정일(黨)	연형묵(經)	이종옥(經)	이종옥(經)
5	이종옥(經)	이종옥(經)	☆박성철(行)	☆박성철(行)
6	☆박성철(行)	☆박성철(行)	연형묵(經)	강성산(經)
7	☆최 현(軍)	한성룡(經)	김영남(黨)	김영남(黨)
8	☆임춘추(黨)	김영남(黨)	☆최 광(軍)	☆최 광(軍)
9	☆서 철(軍)	계응태(經)	계응태(經)	계응태(經)
10	☆오백룡(軍)	허 답(行)	전병호(經)	전병호(經)
11	☆김중린(黨)	☆최 광(軍)	한성룡(經)	한성룡(經)
12	김영남(黨)	전병호(經)	강성산(經)	서윤석(經)
13	☆전문섭(軍)	강성산(經)	서윤석(經)	
14	김 환(經)	서윤석(經)	☆서 철(軍)	
15	연형묵(經)			
16	오극렬(軍)			
17	계응태(經)			
18	강성산(經)			
19	☆백학림(軍)			
	계 19명	계 14명	계 14명	계 12명
엘리트	혁명세대 11(58)	4(28)	5(35)	4(33)
	당료 6(32)	3(21)	3(21)	3(25)
구성비	군부 7(36)	2(14)	3(21)	2(16)
	기술 6(32)	9(64)	8(57)	6(50)

☆—革命1세대, 經—經濟專門家, 黨—黨僚, 行—行政官僚, 軍—軍部.

出處: 梁性喆,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이후 政策方向 전망」(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 64; 통일원, 「북한개요」, p. 64; 「조선일보」, 1992. 10. 22, p. 9를 참고하여 재구성함.

다. 秘書局

秘書局은 필요시 당내 인사 및 당면문제를 토의 결정하여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 지도하는만큼 당의 태도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서이다. 따라서 권력엘리트의 變動比率 또한 높다. 이는 1966년까지는 委員長制였던 것을 秘書制로 바꾼 것이다.

〈표 9〉 秘書局 人的 變動狀況

1970. 11 (5차대회)	1980. 10 (6차대회)	1990. 12	1992. 12	비 고
최용건(혁)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사업전반)	정치국상무위원
김 일(혁)	김중린	계응태	황장엽(사상)	조평통부위원장
김영주(혁)	김영남	한성룡	계응태(공안)	정치국위원
오진우(혁)	김 환	전병호	서관희(농업)	당중앙위원
김동규(혁)	연형복	최태복	전병호(경제)	정치국위원
김중린	윤기복	박남기	최태복(교육)	정치국후보위원
한익수	홍시학	서관희	김중린(사회단체)	최고인민회의
현무광	황장엽	황장엽	박남기(경제)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박수동	김중린	한성룡(경제)	정치국위원
		허정숙	윤기복(대남)	조평통위원장
		윤기복	김용순(국제)	최고인민회의
		김용순	김국태	당부장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계9명	계9명	계12명	계13명	

出處: 梁性喆,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p. 64; 金南植, "北韓의 權力構造 變化 展望," p. 29; 통일원, 「북한개요」, p. 64; 「조선일보」, 1992. 10. 22, p. 9.

비서국의 규모는 1970년 제5차 당대회시 총비서 김일성을 제외한 비서 9인으로 구성되었고, 그 후 계속 인원이 증원되어 1990년 5월에는 11명이었다가 1992년 12월 당 중앙위 제6기 제20차 全員會議에서 金國

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대간의 교체가 점차적으로 진전될 것이다.²⁰²⁾ 여섯째, 지방의 분권화, 즉 중앙 정치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 인민정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²⁰³⁾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유형에서 어느 모델에 가까운지 분석,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도층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치와 경제부문을 비롯한 전면적 체제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²⁰⁴⁾

그리하여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개혁노선은 결국 中國式 改革에의 길²⁰⁵⁾과

철, 김종린, 오진우 등 조선노동당이나 주요한 국가기구내의 혁명 1세대가 김일성과 함께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중요한 정치적 위기나 후계자로의 안전적 계승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202) 이러한 지도부 교체는 자본주의 진영이나 여타 개혁형 사회주의 국가처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식대로 당과 주요 국가기구 내에서 수직적·수평적 이동이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안정적 권력기반 구축'이라는 정치적 이유에서나 '보다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수행을 위한 실무 능력자의 교체'라는 경제적 이유에서든 과거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기술인과 지식인의 역할이 확연히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203) 예를 들면, 최고인민회의의 대표자격에 지방인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가시적인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연방제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사회주의권의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관료통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성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 204) 소련식 체제개혁은 활력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결국 지난 91년 8월 정변의 실패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을 가져오고 말았다. 김일성이 지금까지 행사해 온 유일적 지배권의 상실이 초래될지도 모를 소련식 개혁모델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이 누리는 독점적, 배타적 권력의 상실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길을 스스로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 205) 북한이 중국식의 변화모델을 변용하여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공산주의혁명과 건설에 대한 사상·이론적 측면에서의 양국간의 역사적 경험과 그 영향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1945년 이래 당노선상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중시할 것이라는 것은 공산권의 붕괴사태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유일하게 사회주의 고수원칙을 상호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 '대내활성·대외개방'의 현대화 정책이 어느 수준 성과를 보이면서 중국의 사회주의발전전략으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심정적으로 중국의 경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과 북한의 지나간 역사적 경험의 '동류성'은 향후 북

〈표 10〉 中央軍事委員會 委員 變動狀況

직책	1980. 10	1990. 12	1992. 12	비 고
위원장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위원	오진우 김정일 최 현 오백룡 전문섭 오극렬 백학립 김철만 김강환 태병렬 이을설 주도일 이두익 조명록 김일철 이두익 최상욱 이봉원 김일철 최상욱 이봉원 오용방	김정일 오진우 오극렬 전문섭 백학립 김두남 김강환 이을설 주도일 이두익 조명록 김일철 최상욱 이봉원 오용방	김정일 오진우 최 광 이하일 백학립 김두남 김익현 이을설 주도일 이두익 조명록 김일철 최상욱 이봉원 오용방	국방위원장(93. 4) 국방위제1부위원장 인민군참모총장 국방위원, 군사부장 사회안전부장 인민군대장 당민방위부장 호위총국장 평양방위사령관 차수 공군사령관 해군사령관 포병사령관 군조직담당부국장
계	19 명	16 명	16 명	

出處: 梁性喆,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p. 63-70; [조선일보], 1992. 7. 9, p. 28; [중앙일보], 1993. 6. 17, p. 11.

1980년 당시 위원 가운데 최현, 오백룡, 전문섭 등 항일 빨치산 출신들은 사망했다. 1992년 12월 현재까지 남아있는 인물은 백학립, 이을설, 주도일, 이두익, 조명록, 김일철, 최상욱, 오용방 등 8명이고, 오극렬, 김철만, 김강환, 태병렬 등 4명은 탈락했으며, 최광, 이하일, 김익현 등 3명이 새로 충원되었다.⁴⁴⁾ 軍事委員會의 충원과정에서의 특징은 빨치산 출신들

44) 梁性喆,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pp. 37-38.

이 여전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연사망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김일성, 오진우, 백학림, 최광 등 4명 뿐이고, 萬頃臺革命學院 출신, 金日成大學 출신, 蘇聯留學派 등 新進官僚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후계자인 김정일이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後繼體制 구축을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⁴⁵⁾

朝鮮勞動黨의 專門部署는 1990년 5월을 기준으로해서 총 26개 부서였는데 1992년 12월 현재 총 22개 부서로 그 수가 줄어들었다. 전문부서의 충원양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金父子의 側近勢力들과 전문기술관료의 특세가 두드러진다.

측근세력으로 중용된 대표적인 예는 김정일의 여동생 부부 金敬姬-張成澤이다. 金敬姬는 당경공업부장으로 있으며 그의 남편 張成澤은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으로 있다. 김일성의 從弟인 金鳳柱는 근로단체부장으로 있다. 통일선전부장 강주일은 김일성의 외척이며, 군사부장인 李夏一은 김정일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⁴⁶⁾ 또한 국제부장 金容淳은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의 남동생으로 김일성대학과 모스크바대학에 유학을 한 전문기술관료이다.

또한 조선로동당의 전문부서에 기용된 인물은 대부분 전문기술관료이다. 선전선동부장 金基南은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대학에 유학을 했고 「근로자」와 「로동신문」 주필을 지냈으며, 간부부장 金國泰 역시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대학에 유학을 했으며 에티오피아 대사를 지냈다. 이들 두사람은 당선전선동공작에 종사해온 김정일의 핵심측근이다. 민방위부장인 김익현은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지냈으며, 중공업부장인 朴南基는 김책공대와 레닌그라드공대에 유학한 統計經濟專門家이며, 대외정보조사부장 權熙京은 주소대사를 지낸바 있는 고참외교관이며, 행정부장 金時學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모스크바에 유학한 적이 있으며, 작전부장 林鎬群도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으로 金日成大學을 졸업한 전문관료이다.⁴⁷⁾ 당전문부서는 만경대혁명학원-김일성대-모스크바대학 유학경

45) Ibid.; 梁性喆,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pp. 44-45;

46) Ibid., pp. 41-42; 「중앙일보」, 1993. 6. 24, p. 11; 1993. 7. 22, p. 11.

47) 「중앙일보」, 1993. 7. 1; 1993. 7. 8; 1993. 7. 15; 1993. 7. 22; 全賢俊 외, 「北韓의 權力엘리트 연구」(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82-

력을 가진 전문기술관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요컨대 조선로동당의 充員은 중앙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술관료로 대폭적인 世代交替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경우 혁명1세대와 군부세력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으나 그것은 名目的인 경우가 많다. 대신 정치국과 비서국, 군사위원회 및 전문부서와 같이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이거나 중요한 정책부서의 경우에는 북한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親金正日系의 신진기술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國家機關의 權力엘리트 構造變動

가. 主席 및 副主席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主席制를 신설한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金日成이 주석의 지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석의 사임을 돕는 副主席의 지위를 차지한 사람은 7명이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주석은 1972년 5차내각에서 崔庸健과 康良煜 두명만 임명되었다가 나중에 金東奎와 金一이 추가되어 4명이 되었다가 1977년 6차 내각에서 최용건이 사망하고 김동규가 탈락하는 대신에 朴成哲이 기용되어 3명이 되었다. 김동규는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쫓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2년 7차내각에서는 김일, 강양욱, 박성철이 유임되었다가 강양욱 사망으로 임춘추가 기용되었고, 그후 김일이 사망하자 李鍾玉이 정무원 총리에서 부주석으로 추대되었다. 1986년 8차내각에서는 박성철, 林春秋, 이종욱이 그대로 유임되었다가 1988년 임춘추 사망으로 박성철, 이종욱 두명이 남았었는데 1990년 9차내각에서 이들 두명이 유임되어 현재까지 부주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금까지 부주석에 기용된 인물의 대부분은 혁명1세대들이었다. 단지 이종욱만이 전문관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종욱은 만주 하얼빈공대를 졸업했으며, 1948년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으로 선출된뒤, 내각 산업부장, 경공업부장 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관료이며, 김일성의 사돈이라는 說도 있다. 박성철은 김일성의 외척인 康良煜의 사위이며, 1940년대초

김일성과 함께 소련으로 도피, 88旅團생활을 같이 한 혁명1세대이다.⁴⁸⁾

〈표 11〉 主席 및 副主席 變動狀況

내각	5차 72.12-77.12	6차 77.12-84.4	7차 82.4-86.12	8차 86.12-90.5	9차 90.5-
주석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부주석	최용건 72.12-76.9	강양욱 77.12-82.4	김 일 82.4-83.3	이종욱 86.12-90.5	이종욱 90.5-
	강양욱 72.12-77.12	박성철 77.12-84.4	강양욱 82.4-83.1	박성철 86.12-90.5	박성철 90.5-
	김동규 74.11-77.12	김 일 77.12-82.4	박성철 82.4-86.12	임춘추 86.12-88.4	
	김 일 76.4-77.12		이종욱 84.1-86.12		
		임춘추 83.4-84.4			

出處: 梁性喆, 「北韓政治研究」(서울: 博英社, 1993), p. 158.

나. 最高人民會議

最高人民會議는 지금까지 9기에 걸쳐 대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혁명1세대의 퇴조가 두드러진다는 것이 最高人民會議의 充員上의 특징이다. 최고인민회의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제7, 8, 9기의 3차에 걸쳐 새로 구성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장, 부의장, 사무장 등 간부들 중에는 혁명1세대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黃長燁은 김일성의 조카사위로 김일성대학과 모스크바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김일성대학 총장을 지낸 학자출신 당료이며, 楊亨燮은 김일성의 고종사촌으로 모스크바대학에 유학을 했으며 사회과학원 원장을 지낸 전문관료이다.⁴⁹⁾ 이와같이 최고인민회의의 간부진 중에 혁명1세대가 없다는 사실은 최고인민위원회가 북한 권력구조의 核心的 機構가 아니라

48) 吳太鎭, "북한권력층 16인의 신상명세서," 「月刊朝鮮」, 1990. 10, pp. 223-24.

49) 全賢俊 외,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pp. 88-89.

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2〉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議長 및 副議長 變動狀況

구분	7기1차(82. 4)	8기1차(86. 12)	9기1차(90. 5)
의장	황장엽	양형섭	양형섭
부의장	허정숙 홍기분	손성필 여연구	여연구 백인중
사무장	김인훈	김봉주	김경봉

出處: 金南植, "北韓의 權力構造 變化 展望," p34.

〈표 13〉 最高人民會議 代議員 所屬別 現況

구분	1기	2기	3기	4기	5기	7기	8기	합 계
노동당	85(82)	83(80)	147(87)	149(84)	172(83)	202(88)	199(98)	1,037
군출신	11(10)	17(16)	32(19)	42(24)	39(19)	40(17)	40(20)	221
정무원	55(53)	59(57)	84(49)	96(54)	95(46)	107(47)	99(49)	595
군정당	5 (5)	11(11)	17(10)	20(11)	13 (6)	11 (5)	9 (4)	86
군 당	1 (1)	4 (4)	15 (9)	16 (9)	23(11)	28(12)	25(12)	112
군 정	2 (2)	1 (1)		1	2 (1)			6
당 정	33(31)	33(32)	43(25)	54(31)	64(31)	70(30)	76(37)	373
당	45(43)	39(38)	72(42)	60(34)	70(34)	91(40)	89(44)	504
정	14(13)	14(13)	24(14)	21(12)	31(15)	23(10)	14 (7)	141
군	3 (3)	1 (1)		5 (3)	3 (1)	3 (1)	6 (3)	21
자료有	104(18)	103(48)	171(45)	176(39)	206(38)	228(37)	204(31)	1,192
총 합	572	215	383	457	541	615	655	3,438

出處: 梁性喆, 「北韓政治研究」, p. 120.

그 밖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특기할 사항은 兼職議員이 많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조선로동당 中央委員이거나, 政務院 및 군출신이며 軍·黨·政 3부 겸직자도 있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기의 경우 소속이

밝혀진 인원 가운데 98%가 노동당원이며, 49%가 정무원 출신이고, 20%가 군출신이며 軍·黨·政 3부를 겸직하고 있는 인물도 9%에 이른다. 이와같이 북한의 상위 권력엘리트 층이 당, 정, 군의 요직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어서 당, 정, 군의 융합이 잘되고 정책의 效率性도 높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이 職位의 重疊性을 통해 요직을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대중들의 욕구를 民主的으로 수렴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中央人民委員會 人的變動 狀況

년도	1982. 4	1986. 12	1990. 5	1992. 12
수위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김일성★
위원	김 일★ 강양욱 박성철★ 최 현★ 이종옥★ 오진우★ 임춘추★ 서 철★ 김 환★ 오백봉★ 현무광☆ 윤기복☆ 이근모☆ 강희원☆	오진우★ 박성철★ 임춘추★ 이종옥★ 이근모★ 홍성남★ 서윤석★ 현무광☆ 강희원☆ 조세웅☆ 윤기복 지창익☆ 김병을 백범수	이종옥★ 박성철★ 한성룡★ 강성산★ 서윤석★ 조세웅☆ 홍시학☆ 최문선 김학봉 강현수 박승일 임형규 염기순 김기순 지창익	이종옥★ 박성철★ 한성룡★ 강성산★ 서윤석★ 김학봉 현철규 강현수 백범수 최문선 박승일 이봉길 임형규 이길송 임수만 지창익
계	15명	15명	16명	17명

★: 조선로동당 정치국 위원

☆: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出處: 金南植, "北韓의 權力構造 變化 展望," p. 32; 통일원, 「북한개요」, p. 79.

다. 中央人民委員會

中央人民委員會 위원은 1972년 창설당시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상 조선로동당 政治局 위원 및 후보위원, 당비서, 政務院 총리 및 부총리 등을 겸직하고 있었다. 그후 1977년 12월 제5차 최고인민회의 때는 15명으로 축소되었다가 현재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때까지도 康良煜을 제외한 구성원 전원이 정치국 위원 아니면 후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때부터 정치국 인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가 열린 1990년 5월부터는 二重兼職率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체제가 당-정 분리를 시작하였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며, 專門性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앙인민위원의 구성을 보면 김일성과 박성철을 제외한 나머지 15명 전원이 專門技術官僚로 분류될 수 있다.

라. 政務院

政務院 人的構成에서 가장 큰 특징은 내각이 政務院으로 바뀌기 이전, 즉 1972년 주석제가 신설되기 이전 1차내각에서 4차내각까지 首相職을 김일성이 獨占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1972년 주석제가 신설되고 政務院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자 김일성은 主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1972년 이후 主席 및 行政補佐役으로서의 政務院 總理은 이제까지 6명이다. 5차내각에서는 金一이 역임하였고, 6, 7차내각에서는 李鍾玉이 기용되었다가, 이후 이종옥은 1984년 副主席으로 격상되고 대신 姜成山이 7차내각의 잔여임기를 채웠다. 8차내각에서는 李根摸가 발탁되었고, 1988년 부터는 延亨默이 기용되었다가 김부자에게 북한의 제한적인 개방을 요구하다가 총리에서 탈락되고 1992년 10월부터는 함경도당 비서 겸 인민위원장으로 있던 姜成山이 총리로 재기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표 15>.

강성산은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한 김일성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는 1984년 總理로 기용되어 합영법을 추진하는 등

1986년 12월 총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對外經濟協力の 기초를 마련했다. 작년 12월 강성산의 총리 재기용은 전반적인 경제사정과 외환사정이

〈표 15〉 政務院 總理 및 副總理 變動狀況

구분	1977. 12 (6차내각)	1982. 4 (7차내각)	1986. 12 (8차내각)	1990. 5 (9차내각)
총리	이종욱 (77.12-82.4)	이종욱 (82.4-84.1) 강성산 (84.1-86.12)	이근모 (86.12-88.12) 연형묵 (88.12-90.5)	연형묵 (90.5-92.10) 강성산 (92.12-)
부총리	계응태 허 담 강성산 정준기 공진태 김두영 강희원 최재우 노태석 최 광 홍시학 서관희 김희일 홍성룡 김경련	강성산 계응태 허 담 홍성남 홍시학 최재우 공진태 최 광 김창주 김희일 김두영 김복신 정준기	홍성남 김영남 김복신 최 광 정준기 김창주 김윤혁	김영남 최영림 홍성남 김복신 강희원 김윤혁 김달현 김 환 김창주 장 철
부총리	15명	13명	7명	10명

出處: 한겨레사회연구소, 「연표·인물·지표로 본 남북한 45년사」(서울: 월간 다리, 1990), p. 73; 梁性喆,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p. 69.

어려운 북한으로서 대외개방의 포석으로 보여진다.⁵⁰⁾ 정무원 총리의 充員

50) 「중앙일보」, 1993. 8. 19, p. 11; 통일원, 「統一速報」, 제92-12호, 1992.

樣態를 볼 때 6차내각부터는 전문기술관료출신으로 임명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經濟專門家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문제가 정책상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정무원 副總理의 대부분은 예외없이 공업, 농업분야의 경제전문가들이 충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무원의 核心人物들은 대부분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소련유학의 前歷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 支持勢力들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 國防委員會

國防委員會는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 산하에 있다가 1992년 4월 헌법 개정으로 독립했다.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4월 현재 國防委員會 委員은 10명으로 그 가운데 군출신이 아닌 金正日과 全炳浩만이 유일하게 민간인이다. 전병호는 현재 정치국위원, 당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전병호는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며 김일성종합대학과 모스크바대학에서 금속기계공학을 전공하고 1956년부터 당조직지도부에서 근무한 이래 당기관에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專門黨僚이다. 전병호는 현재 秘書局에서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1990년 5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당과 국방위원회의 교량역할을 맡기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보여진다.

金正日是 1990년 제1부위원장에 추대된 뒤 1991년 12월 당6기 19차 중앙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이미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으며, 1992년 4월 원수로 추대되었고,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추대되었다. 따라서 공석이 된 제1부위원장은 오진우가 승격되었다.⁵¹⁾

결국 김정일은 명분과 실질적으로 군을 장악한 것으로 군사부분의 권력 승계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여진다.

12. 12: Dae-Sook Suh, "The Prospects for Change in Nor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7, no. 1 (Spring 1993), p. 16.

51) 「조선일보」, 1993. 4. 10, p. 1; 「세계일보」, 1993. 4. 10, p. 1.

〈표 16〉 國防委員會 人的 變動狀況

구분	1990. 5	1993. 4	비고
위원장	김일성	김정일	원수, 군사위원
부위원장	김정일(제1) 오진우 최 광	오진우(제1) 최 광	원수, 군사위원, 인민무력부장 차수, 군사위원, 군참모총장
위원	전병호 이을설 주도일 김광진 김봉률 김철만 이하일	전병호 이을설 주도일 김광진 김봉률 김철만 이하일	당비서, 정치국위원 차수, 군사위원, 호위총국장 차수, 평양지역사령관 차수, 인민무력부부장 차수, 인민무력부부장 대장, 정치국후보위원 대장, 군사위원, 당군사부장

出處: 梁性喆,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p. 69; 「조선일보」, 1993. 4. 10, p. 1; 「세계일보」, 1993. 4. 10, p. 1.

3. 權力엘리트 構造變動의 特徵

北韓 權力엘리트의 變動狀況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徵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북한 권력엘리트의 構造變動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김일성과 같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革命1世代가 고령화나 사망으로 인해 점점 권력의 주변에서 사라진 반면 革命2世代들이라고 할 수 있는 專門技術官僚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기술관료들은 대부분 만경대혁명학원을 거쳐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蘇聯 및 東歐留學을 한 엘리트들이다.⁵²⁾ 이들은 비교적 合理的이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忠誠心이 높고 김부자의 權力世襲體制를 강화시켜온 2중관료적 성격

52) 전문관료 중 소련유학 출신이 많다는 사실은 비록 소련이 붕괴되었더라도 여러면에서 구소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Pan S. Kim, "The Role of Elites in Leadership Succession and Challenges in North Korea," *East Asian Review*, vol. 5, no. 1 (Spring 1993), p.99.

이 강한 인물들이다.

전문기술관료가 권력 핵심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專門官僚의 등장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1992년 12월 현재 政治局 委員 12명 중 50%인 6명이 전문관료 출신이며, 특히 候補委員인 경우에는 10명 전원이 전문관료 출신이다.

國家機關의 경우에는 전문관료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1993년 10월 현재 부주석은 혁명1세대인 박성철과 전문관료 출신인 이종욱의 1대1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정무원 총리는 1977년 6차대각 이후 지금까지 經濟專門家들이 자리를 맡아오고 있다. 中央人民委員會도 김일성과 박성철만이 혁명1세대이고 나머지는 전문관료 출신이다. 政務院은 총리이하 10명 전원이 전문경제관료들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경우에도 大卒 以上이 1982년 7기에서는 50.4%인 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990년 9기에 들어와서는 68.2%로 증가되었으며, 박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 전문관료로 분류될 수 있는 대의원이 만수 이상인 64.5%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권력엘리트 구조에 전문기술관료의 등장과 더불어 권력의 핵심에 김일성의 親·姻戚들이 대거 登用되어 김부자의 세습체제를 다른 엘리트들보다도 忠誠스럽게 지탱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친인척들은 부주석 박성철(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사위)을 비롯하여, 정무원 총리 강성산(김일성의 이종동생), 당 국제부장 김용순(김정숙의 남동생), 祖平統 부위원장 黃長燁(김일성의 조카사위), 최고인민회의 의장 楊亨燮(김일성의 조카사위), 정무원 부총리 김창주(김일성의 4촌동생), 정무원 부총리 김달현(김일성 5촌조카사위), 당 청년 및 3대혁명소조부장인 장성택(김일성의 사위) 등이 있다.⁵³⁾

셋째, 북한의 권력엘리트 중 빨치산 출신들이 아직도 권력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김일성정권 樹立을 위해 결정적인 役割을 했고 그 이후에도 黨·政 要職에 계속 등용되었으며, 김일성부자 세습체제의 구축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53) 김일성의 친·인척구조에 관해서는, 全賢俊 외,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pp. 71-75; Pan Suk Kim, "Prospects for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 *Korea Observer*, vol. 24, no. 3 (Autumn 1993), p. 303 참조.

이들중 대표적인 인물은 政治局 상무위원이며 권력서열 3위인 吳振宇, 인민군 參謀總長 崔光, 당중앙군사위원인 이을설, 주도일, 이두익 등이 있다.

넷째, 북한 권력엘리트 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구소련이나 중국과는 달리 상위서열 엘리트들이 黨·政·軍 등의 요직을 중첩적으로 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黨·政·軍 간의 융합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의 최고 수위인 金日成이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총비서로서 국가주석을 겸임하고 있으며, 후계자 金正日은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인민군 총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吳振宇는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지도체제 확립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全炳浩는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전병호는 김정일을 제외한 유일한 민간인으로 국방위원회 의원직을 맡고 있다.

요컨대 북한 권력엘리트 구조변동에서 나타난 특징은 김일성 獨裁體制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을 動員하기 위하여 革命世代를 권력 상층부에 계속 기용하면서 産業化와 經濟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진전문관료를 중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진전문관료의 대부분은 만경대혁명학원, 김일성대학, 소련유학을 거친 인물들이다. 또한 군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김정일로 하여금 군엘리트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黨·政·軍의 要職을 소수 엘리트가 兼任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을 유지하고 있는 군이나 관료들의 김일성-김정일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높으나 김일성 사후에도 계속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김정일체제를 지지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VI. 結 論 및 展 望

이상에서 北韓 政治體制와 權力構造의 變化樣相을 살펴 보았다. 북한은 현재 主體思想에 입각한 북한식 社會主義 體制의 변화를 요구하는 내외의 압력을 받고있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主體思想과 金日成體制의 틀안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體制改革的인 것이 아니라 體制維持를 목적으로한 政策的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북한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첫째, 金日成의 唯一領導體制는 변함없이 강조될 것이다. 이는 후계자 金正日의 권력승계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북한의 首領論에서 수령은 당과 국가를 창조하고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사상을 창조하고 인민대중의 腦髓역할을 하고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령은 黨의 우위에 있으며, 金正日이 黨總書記職를 맡는다고 해도 수령의 상징적 위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多黨制 受容 여부는 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 등 조선로동당의 友黨을 활성화시켜 形式的으로 다당제를 고수할 것이나 漸進的으로 건전한 야당을 육성하여 다당제를 정착시켜 체제의 安定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북한의 유일지도사상인 主體思想은 북한주민을 思想的으로 결속시키고 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대한 防禦用으로 계속 신봉되어질 것이다. 소련 및 동구에 있어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修正 또는 拋棄하는 변화와는 달리 북한의 主體思想은 유일적 사상체계이며, 북한사회를 통제하는 中心思想體系이다. 북한은 소련 및 동구의 변화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外部로부터 정보유입을 차단하고, 사상적 土臺를 강화하기 위하여 思想敎養事業에 주력하고 있다. 김일성은 1993년 신년사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主體思想의 原則과 路線을 견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째, 김정일에 대한 權力承繼는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北韓은 1992년 헌법개정, 김정일의 원수 취임, 총리교체 등 權力構造개편을 하

였으며, 1993년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 등을 통해 金正日의 지위를 강화하였는 바, 이러한 김정일의 승계기반 강화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금년 12월에 열릴 예정인 제7차 朝鮮勞動黨大會에서 김일성은 당총서기직을 김정일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김정일은 현재 國防委員長職을 맡고 있기 때문에 黨과 軍의 권력을 완전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주석직은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당분간 김일성이 보유하고 있다가 제10기 最高人民會議 개최기인 내년경에 물려줄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權力엘리트 構造面에서는 북한의 經濟優先政策으로 신진경제전문관료들의 대거등장을 요구하게 되고 이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의 폭이 커질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經濟難 타개를 위하여 合營法 등 對外經濟促進政策을 발표했다. 따라서 이들 경제전문가들이 대거 등장하여 부분적인 독립채산제, 자유시장허용 등 부분적으로 改革, 開放政策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權力構造 변화와 政策變化의 추이를 토대로 북한 社會主義를 전망해보면, 短期的으로 북한은 社會主義圈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최소화하면서 위로부터 部分的, 漸進的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變化모델은 적어도 급진적인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中國의 천안문사태나, 東歐식의 혼란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봉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體制에 손상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經濟的으로는 제한적인 개혁의 형태를 취할 것이고 政治的으로는 점진적으로 다당제를 수용하거나, 정치개혁을 할 가능성이 크다.

長期的으로는 조만간 진행될 김정일이 後繼體制樹立 이후의 安定的인 권력승계를 위해서도 적어도 개혁과 개방의 외압에 견딜 수 있는 국내의 적 條件을 미리 만들어나가는 북한식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 死後 집권층 내부의 분열 가능성이 높다. 현재에는 조직적인 體制抵抗 勢力이 있을 수 없으나 金日成이 노쇠함에 따라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세력 분열로 金正日體制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參 考 文 獻

1. 國文

강혜련.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북한." 진덕규 외. 「북한사회의 변화와 그 전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92.

高性俊 외. 「轉換期の 北韓 社會主義」. 서울: 大旺社, 1992.

고학철.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1989. 10, pp. 15-20.

金甲喆 외. 「北韓學概論: 北韓社會主義 現在와 未來」. 서울: 文佑社, 1990.

金南植. "北韓의 權力構造 變化 展望." 「統一問題研究」, 제3권, 제1호 (1991 봄), pp. 9-3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東亞日報社. 「原資料로 본 北韓: 1945-1988」. 서울: 동아일보사, 1989.

_____.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1991. 6, pp. 3-25.

金贊汀. "빨치산輓歌, 金日成과 88독립여단." 「新東亞」, 1992. 7, pp. 360-87.

네트워크 편집부 편. 「학술·정보·시사 네트워크, 1993」. 서울: 일감호, 1992.

東亞日報社. 「原資料로 본 北韓: 1945-1988」. 서울: 동아일보사, 1989.

리제일.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 「근로자」, 1990. 12, pp. 23-28.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의 實相과 變化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83.

- 서대숙. 「북한의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梁性喆. “北韓의 權力構造와 김정일 주변 엘리트.” 民族統一研究.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pp. 5-80.
- _____. 「北韓政治研究」. 서울: 박영사, 1993.
- NK會 편. 「북한의 100문 100답」. 서울: 다나, 1992.
- 吳太鎭. “북한권력층 16인의 신상명세서.” 「月刊朝鮮」, 1990. 10, pp. 214-27.
- 柳錫烈. 「남북한 관계론」. 서울: 정음사, 1985.
- _____. 「北韓의 變化類型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서울: 外交安保研究院, 1991.
- 李常民. “北韓의 黨·國家官僚制의 諸 特性和 變化.” 「統一問題研究」, 제2권, 제2호(1990 여름), pp. 234-72.
- 李容弼. 「北韓政治: 이데올로기와 變化」. 서울: 大旺社, 1982.
-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89.
- 全賢俊·安仁海·李宇榮.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鐸木昌之. “金正日の 指導力과 政策展望: 首領의 後繼者 金正日の 領導.” 안보연구소.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김정일의 정책전망」. 서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93.
- 통일원. 「김정일우상화 사례집」. 서울: 통일원, 1992.
- _____.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 한겨레사회연구소. 「연표·인물·지표로 본 남북한 45년사」. 서울: 월간 다리, 1990.
- 韓培浩. 「比較政治論」. 서울: 法文社, 1977.

2. 英文

Friedrich, Carl J. and Zbigniew F. Bre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Kim, Pan S. "The Role of Elites in Leadership Succession and Challenges in North Korea." *East Asian Review*, vol. 5, no. 1 (Spring 1993), p.91-114.

———. "Prospects for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 *Korea Observer*, vo. 24, no. 3 (Autumn 1993), pp. 299-334.

Lee, In Ho. "Soviet Policy toward North Korea, 1943-1948." Ph. D.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91.

Suh, Dae-Sook. *Korean Communism, 1945-198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1.

———. "The Prospects for Change in Nor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7, no. 3 (Spring 1993), pp. 5-20.

3. 其他

[근로자].

[内外通信].

[로동신문].

[世界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

[月間 北韓動向](통일원).

[統一速報](통일원).

Korea Heral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北韓體制的變化와 南北韓關係 展望

—러시아의 한국학 전문가들의 견해
(델파이조사)를 중심으로—

研究責任者：金 明 浩 (建國大學校)

목 차

(요약문)

I. 서론	83
1. 연구목적	83
2. 연구방법	84
II. 체제변화이론과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86
1. 체제변화에의 접근틀	86
2. 사회주의 체제변화 이론	89
3. 북한체제의 특징과 환경 및 변화가능성	95
III. 북한체제의 변화양상 예측	99
1. 권력승계 및 후계체제의 안정도	99
2. 정치이념 :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	101
3. 엘리트갈등과 사상투쟁	102
4. 경제개혁과 시장 사회주의	103
5. 사회통제와 민주화	106
6. 대외관계	107
7. 군사 및 핵정책	112
IV. 남북한관계의 변화양상 예측	113
1. 남북대화 전망	113
2. 교류협력	114
3. 평화정착	116
4. 통일환경 변화	118
V. 결론	119
1. 종합평가	119
2. 대북정책 수립 원칙과 우리의 자세	123
참고문헌	126
부록 : 델파이조사 결과분석표	130

북한체제의 변화와 남북한관계 전망

--러시아의 한국학 전문가들의 견해(델파이조사)를 중심으로--

金 明 浩 (건국대)

요 약 문

I. 서 론

본 연구는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전후하여 향후 2005년까지 북한체제의 변화양상과 남북한관계 변화양상을 예측함으로써,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추진에 있어 그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보다 적실성있는 대북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서구적 모델에 입각한 기존의 북한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진영의 북한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고자 러시아의 한국학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Delphi method)를 통해 얻어진 자료로 작성되었다.

II. 체제변화이론과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변화요인, 방향 및 그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체계론적 접근법(systems approach)과 구조-기능론(파슨즈의 행위이론),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이론(레빈의 개인 및 집단의 행태동기 분석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북한체제는 환경변화에 '적응'(adaptation)하여 체제를 유지(생존)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정치체계가 체제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기능'(function)을 수행하지 못하면 붕괴되거나 새로운 체계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적응 내지 기능은 체계내의

‘엘리트들의 성향’(personality)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최근 사회주의체제의 변화패턴과 이를 설명하는 몇가지 이론, 즉 체제적응이론과 체제붕괴이론, 수렴이론 등을 소개함으로써 북한체제의 변화가 능성과 방향을 검토하고자 했다.

끝으로 북한체제는 현재 직면한 대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체제의 개편을 감수하지 않을수 없다는 변화의 불가피성을 지적하였다. 즉, 권력세습의 성공적 이행이라는 과제와,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는 경제난, 세계질서의 변화로 인한 개방압력,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할 외래사조의 유입, 체제의 존립근거로서의 ‘남조선 해방’을 위한 전략수행 등 내외에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한결같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곧 북한체제에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임을 설명하고자 했다.

Ⅲ. 북한체제의 변화양상 예측

북한체제의 변화양상은 크게 일곱가지 분야로 나누어 예측하고자 했다.

1) 1996년경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에 김정일은 총비서를 거쳐, 주석에 취임(사망직전)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 부분적으로 권력투쟁양상이 표출될 것이나, 의외로 김정일의 전권장악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2)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은 김정일체제에서도 계속하여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강조될 것이나, 1998년을 전후하여 급변한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체제개혁의 차원에서 원칙은 고수하되, 그 해석에 있어서 부분적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

3) 이러한 정치이념의 위상변화는 김정일의 통치기반확립과 개혁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대외개방(1996-1998년기), 그리고 새로운 엘리트(실용주의세력)의 진출에 관련이 있으며, 물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

4) 산업구조의 불균형극복과 주민의 생활수준 제고는 체제의 안정과 김정일 통치의 정당성차원이므로 권력이양과 함께 경제개혁(구조개편)이 서둘러 진행

될 것이라는 점. 특히 김일성 사후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1996-1998년기에 김정일은 중국식 개혁방식을 모방하여 시장 사회주의에 지향하게 될 것이며, 2000년을 전후해서는 소유제문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

5) 이 과정에서 통치 엘리트내에 합리주의적 무드가 확산되어 사회적 다원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복잡성과 모순성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의 노출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1996-1998년기를 거치면서 조선로동당은 그 위상과 대내외정책면에서의 일정한 변화를 노정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

6) 1993-1995년기에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외적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고, 대중관계의 강화와 대러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대미일 외교관계수립을 위해 한층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 여기에서 '핵'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술로 목표달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

7) 대남 경제적 열세에 대한 컴플렉스 극복의 차원에서도 기존 대남전략과 군 현대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나, 1996-1998년기에 접어들면 가중되는 경제난으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주민의 욕구폭발로 인해 체제유지수단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고, 군사력증강 보다는 사회복지와 사상투쟁 강화로써 시간벌기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으로 예측하였다.

IV. 남북한관계의 변화양상 예측

남북한관계의 변화양상으로는 크게 다음 네가지로 예측하고자 했다.

1) 당분간 남북대화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며, 향후의 남북대화는 기존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달려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정상회담도 무의미하다는 점. 1993-1995년기에 핵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현안문제의 일괄타결을 도모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더 큰 양보를 감내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

2) 남북대화와는 별도로 교류·협력은 지속될 것이나, 본격적인 교류·협력은 핵문제 해결후에야 전개될 것이며, 이때 남북간 교통로회복과 비무장지대의 공동경제구역 설립 등 획기적 변화도 기대된다는 점. 1996-1998년기에는 인적·문화·과학기술교류뿐 아니라 본격적 경제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북한은 이를 통해 실질적 효과(기술·자본도입)와 간접적 효과(이데올로기)추구라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라는 점.

3) 1996-1998년기에 북한의 경제개혁시도와 더불어 남북간의 교류·협력 증대를 통해 군사부문에서의 어느 정도 신뢰구축단계에로 접근하게 되면, 동기간에 불가침협정과 평화협정체결도 가능할 것이며, 1999-2001년기에는 긴장상태가 결정적으로 완화되어 평화공존단계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4) 이상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1996-1998년기에 본격적으로 통일형태에 대한 고위급회담이 전개될수 있을 것이고, 1999-2001년기에는 통일헌법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일게 될 것이라는 점. 이것은 남북 상호간의 통일방안에 대한 대폭적 양보와 수정('남북연합'과 '연방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2002-2004년기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통일을 거쳐, 2005년경에 완전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이질성에 대한 극복문제는 통일 이후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V. 결 론

북한체제가 노정하고 있는 현재적 특징과 당면한 대내외 환경은 북한체제로 하여금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정책적(전술적) 차원에서의 변화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전략적) 차원에서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 정책수립시에 견지해야 할 원칙과 자세를 재고해야 한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통일원칙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구별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의 대북정책 수립에 전제되는 대 원칙으로는,

첫째, 점진주의적 접근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통일을 통치명분으로 설정하여 서두르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둘째, 모험주의를 버려야 한다. 무분별한 일방적 제안이나 양보, 그리고 교류·협력의 확대가 곧바로 통일을 촉진하는 데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냉철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대적 우위 확보 노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자유·민주뿐 아니라, 복지·문화, 그리고 도덕성과 민족주체성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우위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안정된 민주정치(stable democracy)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새삼 강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전략의 기조는 남한 내부정세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설정되어 왔는데, 소위 '남조선 해방' 논리는 바로 한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을 전제로 존립하고 있으며, 그것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지연시키는 데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정책 수립의 원칙을 견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서 통일을 위한 몇가지 자세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첫째, 통일지상주의와 습관적 패배주의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통일만 되면 곧장 민족의 번영으로 직행하는 것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논리를 비약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일의 어려움과 심각한 준비부족, 그리고 여타 산적한 내부문제들을 상기케 하고, 반면 여지껏 일제의 식민사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위 한국인의 '분열성'과 '끈기부족' 등 일종의 습관적 패배주의에 젖어 통일의 요원성을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통일한국시대가 목전에 닥쳤음을 깨우쳐야 한다.

둘째, 흡수통일을 원치않는다는 원칙은 확인하되, 만일의 경우 흡수시를 철저히 대비하는 보다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의 형식이야 어떻든간에 내용면에서는 어차피 '풍부한 쪽'이 '부족한 쪽'을 포용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흡수형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한국의 지역안보상황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탈 이데올로기 시

대에도 수교외교 그 자체가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판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 소극적 안보논리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체적인 분쟁억지능력을 과시할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재검토 해야 할 때이라고 사료된다.

I. 서론

1. 연구목적

구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화는 이데올로기적 대립구조의 냉전 체제를 종식시킴으로써, 세계는 바야흐로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전후 45년간 첨예한 냉전지역이었던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 구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

또한 비록 한반도내의 기본적인 대립구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지언정 최근 몇년간 한반도 주변정세도 파격적으로 변화하였다. 한·소수교와 한·중수교를 통해 ‘미·일 = 우방’, ‘중·소 = 적’이라는 종래의 관념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적환경의 변화를 전후하여 남북한관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 9월 이래 8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러나 1993년에 들어 이른바 ‘북핵’이라는 돌발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반세기에 가까운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실 이러한 당위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최근의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활발한 연구열기로 표출되고 있음은 꾀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북한체제의 변화방향과 남북한관계의 변화전망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특히 그러한 변화가 전개될 시기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없이는 통일한국의 미래의 모습뿐 아니라 그 실현방법에 대해서조차도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최근 몇년간의 세계정세의 변화는 과거 수십년과도 맞먹는 엄청난 변화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21세기의 민족공동체의 운명과 장래를 예견하는 일은 이러한 변화시대의 주변정세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성찰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세계질서의 대변혁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남북한관계는 엄밀히 냉전의 연속인가? 과연 남북한관계에 획기적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그 핵심 변수는 무엇일까? 아울러 향후 남북한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이

며,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남북한관계 변화의 일차적 변수가 '북한의 권력승계'(김일성 사망)에 있다고 보고, 향후 2005년까지 10여년간 북한체제의 변화패턴을 예측하여, 이러한 변화가 장차 남북한관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나아가 이들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과 배경을 체계이론(system theory)에 입각하여 분석·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북한 및 통일정책 관련 연구가 주로 국내 및 서방의 모델을 원용하는 패턴으로 전개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음을 인식하고, 구 사회주의권 학자들의 견해를 과감히 수렴함으로써 양측간에 노정되는 갭을 최소화 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간의 서방식 접근방식에는 사회주의진영의 접근논리가 은연중에 배제됨으로써, 통일논의는 늘 상호부정적인 관계로 곁들었던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그간 사회주의체제의 종주국으로서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남북한관계의 전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해 왔던 구 소련측의 견해를 총체적으로 수렴하고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소와 여타 관련기관의 한국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Delphi method)를 통해 주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이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기초한 새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방안의 적실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추진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장차 보다 적실성있는 대북정책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2. 연구방법

정치학에 있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한 작업이다.¹⁾ 미래에 대한 예측은 늘 어렵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시간(time)은 종종 국제정치학자들을 망신시켜 왔다"는 지적처럼 적중확률 또한 그다지 높지 않았다.

1) Kyung Ae Park, "Social Reform in North Korea: Prospects for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omest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for the 1990s" (Virginia : Arlington, July 12-14, 1991), p.1.

그러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무가치한 것인가?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적절한 예측과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시나리오작성의 차원이 아닌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정치학도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대개 정량적 예측과 정성적 예측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 예측방법중 델파이기법을 적용하였다. 델파이기법이라 함은 미리 선정된 전문가들을 상호 대면시키지 않은채 4-5차례의 질문과정을 통해 미래의 예상사태와 그 발생시기, 그리고 발생요인 및 찬반의사 등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와 판단내용을 추출하여 집약·종합하는 미래예측방법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러시아의 한국학 관련 전문가 및 학자들로서, 편이상 모스크바 소재 연구기관에 소속된 이들로 국한하였다. 응답자들의 주요 소속기관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동양학연구소와 극동연구소,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전쟁사연구소, 러·한문제조사연구소, 모스크바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외무성 한국과, 프라우다사, 라디오 러시아사 등이다. 질문 대상자선정은 동양학연구소의 유리 바닌 박사가 선정한 후보자 40명중 필자가 임의로 30명을 엄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응답내용에 객관성을 높여 가치중립(Wertfreiheit)을 견지하기 위하여 재러 한인(일명 고려인)학자들은 의식적으로 배제하였다.²⁾

그러나 소요경비와 시간적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질문횟수는 두차례로 축약하여 실시하였다. 다만, 회수율과 답변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자가 일일이 면접조사를 벌였다.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중, 1차질문에서는 응답자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예상사태와 그 발생시기를 15개씩 예측·기재케 하였다. 1차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정리한 결과 얻어진 예상사건은 총 134개였다. 2차질문에서는 전문가들의 상이한 판단을 수렴·접근시키기 위하여 1차조사에서 얻어진 134개의 예상사

2) 재러 한인학자들중에는 올림픽과 한·소수교를 기점으로 과거 친북성향에서 친한국성향으로 변신한 경우가 있어 이들에게 유기명 응답을 요구할 경우 자칫 존재구속성(Seinsgebundenheit)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자료로서의 가치를 저하시킬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태를 분야별로 재정리하고 매 예상사태가 발생하는 시기에 대한 지지수효를 기재한 일람표를 제공하여 각 사태에 대한 찬반의견을 다시 묻고, 그에 따른 이유와 근거·요인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북한체제변화와 남북한관계 변화전망에 관한 이상의 두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실시결과로 집계된 미래의 예상사태는 다음의 각 분야별로 집계하였다.

첫째, 북한체제변화에서는 권력승계 및 후계체제의 안정도, 정치이념, 엘리트갈등과 사상투쟁, 경제개혁(구조개편)과 시장 사회주의, 사회통제와 민주화, 대외관계, 군사 및 핵정책 등으로 분류하였고,

둘째, 남북한관계의 변화패턴에서는 남북대화 전망, 교류협력, 평화정착, 통일환경 변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2,005년까지의 북한체제의 변화 및 남북한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대북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단지 이들의 견해만을 토대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다면, 단지 이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오류를 범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완화하고 설명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에서 발행된 1차자료(primary data sources)와 기타 국내 및 서방의 2차자료(secondary data sources) 등으로 보완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로 도출된 러시아측 학자들의 견해 자체가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급적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들의 응답지에 대한 집계표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Ⅱ. 체제변화이론과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1. 체제변화이론의 접근틀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에 대한 극복노력은 인간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되어 온 과제이다. 특히 구체적 실체로서의 정치체제의 경우 이러한 괴리현상에 대한 반응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고안된 정치체

태를 분야별로 재정리하고 매 예상사태가 발생하는 시기에 대한 지지수효를 기재한 일람표를 제공하여 각 사태에 대한 찬반의견을 다시 묻고, 그에 따른 이유와 근거·요인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

북한체제변화와 남북한관계 변화전망에 관한 이상의 두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 실시결과로 집계된 미래의 예상사태는 다음의 각 분야별로 집계하였다.

첫째, 북한체제변화에서는 권력승계 및 후계체제의 안정도, 정치이념, 엘리트갈등과 사상투쟁, 경제개혁(구조개편)과 시장 사회주의, 사회통제와 민주화, 대외관계, 군사 및 핵정책 등으로 분류하였고,

둘째, 남북한관계의 변화패턴에서는 남북대화 전망, 교류협력, 평화정착, 통일환경 변화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2,005년까지의 북한체제의 변화 및 남북한관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대북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단지 이들의 견해만을 토대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시도한다면, 단지 이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오류를 범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완화하고 설명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에서 발행된 1차자료(primary data sources)와 기타 국내 및 서방의 2차자료(secondary data sources) 등으로 보완하였다. 그리고 조사결과로 도출된 러시아측 학자들의 견해 자체가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급적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들의 응답지에 대한 집계표를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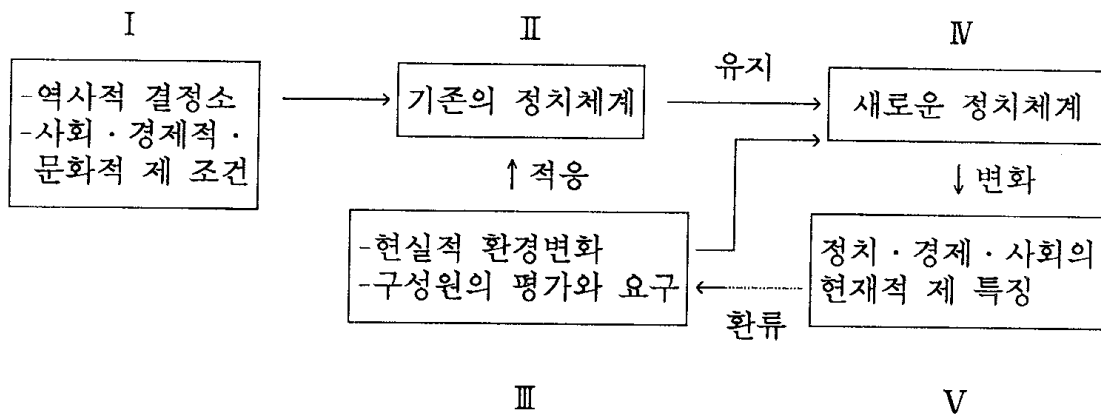
Ⅱ. 체제변화이론과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1. 체제변화이론의 접근틀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에 대한 극복노력은 인간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추구되어 온 과제이다. 특히 구체적 실체로서의 정치체계의 경우 이러한 괴리현상에 대한 반응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고안된 정치체

계일지라도 그것이 변화된 환경에 순기능하지 못할 때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공산주의체제들이 기존체제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 현실적 역기능에 대한 극복을 시도해 왔다는 것은 그간의 공산주의 운동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정치체계간의 관련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체계적으로 도식화될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환경변화와 정치체계의 변화관계



이러한 분석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체제의 변화를 '체계론적 접근법'(systems approach)으로 분석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정치체계가 변화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때 발생하는 위기(긴장)를 극복하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적응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³⁾ 즉, 왜 북한체제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환경변화(독립변수)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와 기능(종속변수)의 연관관계 속에서 규명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체계이론은 체계의 보존 및 지속적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균형모델)으로서는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나, 체제의 변화나 붕괴를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는 비판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파슨즈(Talcot Parsons)가 '구조-기능론' 특히 '행위(동)이론'에서 지적한, '한 체계가 유지되는 데에

3) 정치체계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과 유지에 대한 설명은,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pp.17-18 참조.

필요한 기능'(기능적 요건 : AGIL)⁴⁾이라는 개념에서 체제의 붕괴 및 그 전환을 설명할수 있는 이론적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⁵⁾ 바꾸어 말하면, 한 체계가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면 그 체계는 붕괴되거나 새로운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어떠한 정치체계도 기존의 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수 있도록 그 체계가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만일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체계는 변화되거나 대체될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계론적 접근방법은 정치적 행위자의 인적 구성과 그 성향에 관한 논의가 결핍되는 취약점이 있다.⁶⁾ 즉, 정치체계의 권력엘리트들의 인적구성(persons)과 그들의 성향(personality)에 대한 분석을 간과한채 단지 환경과 체계간의 상호관계만을 분석한다면 특정 정치체계의 변화패턴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엘리트들의 변화행태(behavior)를 레빈(K. Lewin)의 '개인 또는 집단의 행태동기 분석개념'인 『 $B = f(P \cdot E)$ 』정식을 원용하여, 그들의 성향(P)과 북한체제의 환경(environment)이라는 변수를 함수(function)관계로써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⁷⁾

-
- 4) 파슨즈가 말하는 체계의 '기능적 요건'이란, ①환경에 대한 체계의 적응기능(adaptation: A), ②목표달성기능(goal attainment: G), ③체계의 내적 통합기능(integration: I), ④문화패턴유지(긴장해소)기능(latent pattern maintenance--tension management: L)등이다.; Talcott Parsons and Neil Smels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 The Free Press, 1956), pp.33-37.; Ruth A. Wallace and Alison Wolf,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 Continuing The Classical Tradition*, 2nd edi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6), pp.28-36.; Jonathan H. Turner,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74).; 김진균 외(역), 『사회학이론의 구조』(서울 : 한길사, 1982), pp. 61-95.
- 5) 같은 기능론자인 머튼(R. K. Merton)은, 파슨즈의 거대이론(Grand theory)은 주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경험적 사실에 입각한 검증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안으로써 중범위이론(middle range theory)을 제시한바 있다. Robert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pp.73-138 참조.
- 6) Ivan Vallier, "Frameworks for Comparative Research : Structural Anthropology and the Theory of Action," in *Comparative Methods in Sociolog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한인숙(역),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틀 :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과 파슨스의 행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회학회(편),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서울 : 열음사, 1990), p.171에서 재인용.

사실 그간의 북한체제에서도 부분적(전술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변화는 권력엘리트의 구성분포가 혁명 1세대에서 차세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정되었다. 현재 북한 권력핵심부의 엘리트들은 종래의 엘리트들과는 일정한 차이점이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들은 혁명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고, 혁명1세대들과는 달리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까닭에, 합리적 사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구사회의 실생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한국의 실상에 대한 지식도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태도나 접근방식에서도 합리적 원칙이 노정되고 있다.

2. 사회주의 체제변화 이론

북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간의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패턴과 이를 설명하는 보다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체제는 왜 변화하며,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변화이론은 흐루시초프의 개혁노선과 함께 전개된 소련 및 동유럽 공산주의체제의 변화에 대한 서방학자들의 관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1980년대말 공산주의 체제변화무드가 갑자기 증폭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체제변화의 원인과 변화의 방향, 그리고 변화의 수준에 대한 제 이론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할수 있다.

1) 체제적응이론

이것은 종래의 공산주의 체제변화는 공산집권엘리트의 정치적 목표와 그 목표실현을 위한 행동강령(action programs)간의 괴리를 좁히려는 노력의 결과로 생긴 전체주의(totalitarianism)⁸⁾적 모델의 불균형성을 시정하려는 체제의

7)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Kurt Lewin, *Principles of Topologic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Inc., 1936), pp.11-12.; William F. Stone, *The Psychology of Politics* (New York : The Free Press, 1974), pp.95-178 참조.

8) C. J. Friedrich and Z.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p.9-10.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전체주의체제의 증후군을 다음의 여섯가지로 설명하였다. 즉, ①교의체제로 구성된 관정 이데올로기, ②독재자 및

노력에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⁹⁾ 이러한 논리는 “후기 동원단계에 도달한 공산주의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adoptation)하기 위하여 비록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주의체제에서 정치적 다원주의(political pluralism)로, 명령경제(command economy)에서 시장경제(market economy)로, 그리고 폐쇄사회에서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전화되고 발전하리라”¹⁰⁾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로 스탈린식 명령적 계획경제체제는 국가의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내 사회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였다. 또한 계속적인 생산성하락과 품질저하, 그리고 기술혁신의 둔화현상으로 말미암아 그간의 외형적 성장마저도 더 이상 지속할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할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체제유지 노력이 대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체제적응이론은 체제변화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일정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체제적응이론은 유사 공산주의체제간의 상이한 변화패턴을 설명할수 있는 유용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슨(Chalmers Johnson)은 각 공산주의체제의 변화패턴을 다음 몇가지로 예측한바 있다.¹¹⁾

- ① 정치체제의 구조상의 변화로서 일반적으로 1인 독재자의 1당 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당 주도적 전 국가전선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
- ② 정치테러에의 의존도의 변화에 있어서는 그 수준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
- ③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중앙집권화된 명령경제에서 반중앙집권적 관리체제, 나아가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로 변화한다는 것.

소수의 이데올로기 광신자들로 구성되어 엄격히 계서적으로 조직화되고 정 부조직과 완전히 융합된 단일 대중정당, ③당의 지도를 강력히 지도하기 위한 폭력적 경찰의 통제체제, ④메스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당의 완전 독점적 통제, ⑤군대에 대한 독점적 통제, ⑥전체경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와 경제계획 등이다.

9)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2-3.

10) *Ibid.*, p.3.

11) *Loc. cit.*

④외부로부터 강요된 공산정권인 경우엔 소련의 위성국적 지위에서 어느정도 민족독자적 공산국가에로의 독립적 지위로 변화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그리고 각 공산주의 체제가 변화의 속도와 정도가 각기 다르게 변화되는 주요 요인으로서, ①경제발전의 수준과 ②정치문화의 형태, ③정치권력 장악 형태 등의 상이성을 매개변수로 제시하였다.¹²⁾ 같은 맥락에서 브레진스키도 공산주의 정치체계의 변화를 예측하는 주요 척도로 ①최고 권력자의 성격, ②지도자들의 권력장악 형태, ③사회에 대한 당의 역할과 그 양자간의 관계 등을 제시한바 있다.¹³⁾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결과는 당에 의한 중앙통제의 완화와 제도적 다원화 (institutional pluralism)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고, 그러한 변화의 전제는 어느정도 선진공업경제를 달성한 공산주의적 동원체제라는 점이다.¹⁴⁾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의 변화패턴에 대한 존슨의 지적 이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양상은 이미 그가 제시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따라서 이제 공산주의 체제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그 체제가 추구하는 목표문화(goal culture)와 전이문화(transfer culture)¹⁵⁾,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정향 뿐만 아니라, 그 체제의 역사적·정치적·문화적 전통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에 비추어 볼때, 전체주의가 노정한 불균형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늘날 공산주의 체제의 '위로부터의 개혁'(reform from above)이라고 한다면, 공산주의 체제들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현상유지적 성격이 짙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12) *Ibid.*, pp.26-32.

13) Zbignew Brzezinski, "The Soviet Political System : Transformation or Degeneration," in Richard Cornell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70), pp.368-382 참조.

14) 김갑철, 『북한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문우사, 1983), p.329.

15) 왈라스(Anthony Wallace)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요 구성요소를 ①이데올로기적 '목표문화'와 '전이문화'라고 지적한바 있다. 여기에서 목표문화는 이상화된 이데올로기에 이용되고 전이문화는 정책결정을 기도하는 규범으로 구체화되는 까닭에, 양 문화는 상호 유기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한다고 했다. : Anthony Wallace,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 Random House, 1961), p.148. ; 김갑철, 위의 책, p.325참조.

2) 체제붕괴이론

이 견해는 체제적응이론이 주장하는 환경적응에 의한 체제의 유지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체제는 더 이상 존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컨대 브레진스키는, 민족주의의 부활이 공산주의체제에 심각한 위협이었다고 전제하고,¹⁶⁾ 소련체제의 정치적·사회경제적 실패가 공산주의의 호소력과 이념적·정치적 영향력을 상실시킴으로써 공산주의의 역사적 비극으로 연결되었다고 보았다.¹⁷⁾ 또한 그는 “공산주의 현상이 성급한 이상주의에서 배태되어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했으나, 대중의 억압을 창출하였고, 완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반영되어 ... 조직적 활동을 통해 정치적 합리성과 사회적 도덕성을 융화하고자 했으나, 실제로는 ... 본연의 도덕적 충동과는 모순된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변화시켰다”¹⁸⁾고 분석했다.

한편 같은 맥락에서 질라스(M. Djilas)도 “고르바초프에 의해 스탈린주의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으며, 레닌주의도 동구변혁의 진전으로 역사무대에서 퇴장될 운명을 맞았으며, ...마르크스는 위대한 정치사상가의 한사람으로 남겠지만 단지 학문적 탐구대상으로 존속될 것”¹⁹⁾이라고 예견했었다.

또한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몰락을 주장하면서, 이념의 종언이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수렴이 아닌 경제적·정치적 자유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예견했고, 그것은 단순한 냉전의 종식이나 전후의 어떤 특정시대의 끝이 아닌 역사의 종언현상이라고 보았으며, 인류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진화의 마지막 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인간사회의 최종적 형태는 서방세계의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현상이 될 것이라 단언했다.²⁰⁾

16)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89), p. ix.

17) *Ibid.*, p.1. 브레진스키는 동 저서에서 중국의 개혁정책을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하였다. 즉, 중국은 자생적 공산주의로써, 개혁지도자들이 기존 공산주의 교의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서,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낙관적으로 지적하였다.

18) *Ibid.*, p. 231.

19) 『조선일보』(1990. 2. 15).

2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in *The National Interest*, No.16 (Summer 1989).; 함종빈 역, 『역사의 종언』(서울: 헌정회, 1989), pp.123-124.; 후쿠야마의 주장은 ‘논리를 비약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덕 외, “사회주의는 과연 붕괴하는가,” 『월간조선』(1990. 2), p. 332.

그리고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은 중심-반주변-주변으로 구조화된 세계에서 사회주의는 그들 스스로가 이론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일부로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고,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전혀 놀랍지 않은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그것은 70년대 이후 계속된 세계 경제의 하강국면에서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한 정치체제의 변화라고 파악했다.²¹⁾

이상의 주장을 종합하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체계의 노력이 일정한 수준의 민주화와 국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수반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정보와 구성원들의 욕구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대 이상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3) 수렴이론

이것은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변혁운동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상호 수렴과정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즉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주의적 요소를 대거 수용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적 통제와 경제적 계획화를 증대함으로써 양 체제가 나란히 민주사회주의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였다.²²⁾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동·서 양체제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전반적인 정부권력의 증대로 인하여, 정치적 갈등양상은 점차 감소되고 정치·사회적 통합이 증대되어, 공산주의체제는 자유화되고 서방은 사회주의화하여 동·서 양진영이 민주사회주의의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견해이다.²³⁾

21) 『한국일보』 (1993. 9. 25).

22) Alfred G.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in Chalmers Johnson ed., *op. cit.*, pp. 336-337. 이 글에서 마이어는 수렴이론을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①민주사회주의로의 접근과 ②관료제화된 체제로의 접근, 그리고 ③새로운 전체주의로의 접근 등이다. 이에 대한 국내 학자의 정리된 글로는 김강녕, "수렴이론의 문제점과 적용문제," 민병천 (편), 『전환기의 통일문제』 (서울: 대왕사, 1990), pp. 34-65.; 같은 필자,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 『산업사회와 한국정치외교의 과제』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0), pp. 235-236 참조.

23) Alfred G. Meyer, *op. cit.*, p. 322. 그런데 헌팅톤과 브레진스키는 수렴이론가들의 논리에 대해, '미·소의 어느 한 사회가 다른 사회에 닮아간다'고 주장함으로써, 실제로는 어느 한 사회체제의 붕괴를 희망한 것에 불과하다. Samuel P. Huntington and Zbigniew Brzezinski, *Political Power*

실제로 소련의 변화가 어디까지나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제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시장경제의 점진적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었을뿐, “사회주의로부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었다.²⁴⁾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소련의 개혁정책이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제원칙의 수용과 시장경제체제에로의 점진적 이행을 통해, 서구식 민주주의와 서구식 자본주의원리에 접목되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어쨌든 이러한 수렴론자들은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양체제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신장과,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통한 복지국가의 구현에 성공할수 있을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였다.²⁵⁾

그런가 하면 수렴이론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간과할수 없다. 예컨대 까갈리쯔끼(B. Kagarlitsky)는 ‘사회주의체제의 단점과 자본주의체제의 단점이 교묘히 결합되는 최악의 상태’, 즉 소위 ‘부정적 수렴’(negative convergency)²⁶⁾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가지 이론은 그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오늘날 공산주의체제의 변화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최근 몇년간 전개된 공산주의체제의 변화는 처음에는 체제적응이론의 양상을 띠었으나, 마지막에는 체

: USA/USSR (New York : Praeger, 1962).

24) 장원석, “페레스트로이카의 현황과 전망,” 『신 국제질서의 전개와 한반도 통일』 (제주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1), p.15-16.

25) 수렴이론은 현실로 증명된바 없는 많은 비판점을 지닌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화이트(Stephen White)와 넬슨(Daniel Nelson)의 지적처럼 “거부할수 없는 진리의 일면이 있는” 이론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Stephen White and Daniel Nelson, *Communist Politics*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도성달·이명남(역), 『비교공산주의정치론: 그 변화와 전망』 (서울 : 인간사랑, 1990), p.34. 수렴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 논거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국내문헌으로는, 김강녕, “수렴이론의 문제점과 적용 문제,” 앞의 글, pp.54-65 참조.

26) Boris Kagarlitsky, “Importance of Being Marxist,” in *New Left Review*, No.178 (1989), p.33. 까갈리쯔끼는 소련의 신좌파 인텔리겐치야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958년 모스크바 태생으로서, 체코의 인간적 사회주의와 소련의 반체제운동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상의 일단은 다음의 저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Boris Kagarlitsky, *The Thinking Reed : Intellectuals and the Soviet State from 1917 to the Present*, Translated by Brian Pearce (New York : Verso, 1988).

제붕괴론과 수렴이론의 모습을 동시에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북한체제의 특징과 환경 및 변화가능성

그렇다면 이상에서 설명한 사회주의 체제변화에 대한 제 이론을 북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할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체제가 노정하는 현재적 특징과 환경, 그리고 변화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공산주의 체제변화에 대한 개념적 구도(conceptual scheme)는 경제발전의 수준이나 정치문화적 유형에서 북한체제의 현실과는 상이한 선진 공산주의 체제를 대상으로 정립된 이론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체제는 이데올로기적 전이문화를 향한 정치의지적 정향과 대내외적 환경여건 또는 시간적·공간적 요소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자극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²⁷⁾

그러면 오늘날 북한체제가 노정하고 있는 특징과 구체적 환경은 어떠한가?

한 마디로 세기적 변혁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북한체제는 여전히 특유의 체제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김갑철교수는 북한체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바 있다. 즉 ①이데올로기적 전이문화의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정치사상적 자극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②극단적이고 배타적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써 강조하고 있으며, ③고도의 불균형적인 동원체제이고, ④철저히 중앙집권적인 명령경제(command economy)체제이며, ⑤외부로부터의 문화침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폐쇄사회라는 점과, ⑥정치적 테러에 의한 사회통제를 도모하고 있는점, 그리고 ⑦유사 사회주의체제들이 권력승계와 체제개혁을 통해 노정했던 부작용을 감안, 일찌감치 세습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방어적 이데올로기로 대중을 독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중의 정치문화적 수준에서도 그러한 통치패턴이 현실적으로 호소력을 발휘할수 있는 훌륭한 토양이 되고 있음도 사실이다.²⁸⁾

27) 이하의 설명은 다음 문헌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김갑철, 위의책.;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서울: 문우사, 1988).

28) 고영환씨는 김일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심은 우리의 상식을

이상의 북한체제의 특징은 이미 지난 1980년대초에 분석했던 내용이나, 지금까지도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정책적(전술적·기능적) 변화는 있었어도 본질적(전략적 내지 구조적)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일반론으로 전개되고 있으며,²⁹⁾ 또 그것은 최근에 방북한바 있는 러시아의 전문가들이나 망명한 전직 북한외교관의 증언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³⁰⁾

간추려 말하면, 북한체제는 여전히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를 탈피하지 못한 '위로부터의 혁명'의 동원단계에 처해 있으며, 모택동주의적 사상자극방식에 의존하는 등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후진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 입증'이라는 남북한 체제경쟁 차원에서 비롯되는 압박감은 변화된 환경과 이데올로기 지향적 엘리트문화간의 긴장을 증대시켜 폐쇄사회 내부에 좌절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가 직면한 구조적 갈등, 즉 화석화(pertrification)된 정치체계, 경제적 침체, 사회적 폐쇄, 사상적 일색화 등은 바로 불균형적 동원체제의 속성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현 발전단계는 여전히 정치사상적 자극을 동원하여 노동참여율증대를 도모하고, 주체사상에 바탕한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이라는 강압적 이데올로기운동으로 대중을 자기희생과 자기부정이라는 정신적 유인요소(psychic incentive)로써 혁명기지건설을 추진하는 일종의 운동체제(movement regime)³¹⁾의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북한체제가 당면한 현실적 환경은 어떠한가?

우선 내부적으로는 권력세습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 볼때 세습체제는 '혈통주의'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권력세습작업은 지난 1991년

초월하는 수준으로서 이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북한권부의 실세 : 망명 북한외교관 고영환의 증언』, 북한 바로 알기 시리즈 11 (서울 : 공보처, 1992), 34pp.

29) 김갑철·전인영·조영환,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명'의 딜레마(좌담)," 『자유공론』 (1992. 12), pp. 34-52.

30) 러시아 외무성 남북한과의 외교관 및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연구위원들과의 인터뷰. : 『북한권부의 실세 : 망명 북한외교관 고영환의 증언』, 앞의 책.

31) Alexander Eckste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in *World Politics*, Vol. XXII, No. 4 (July 1970), p. 481.

12월 김정일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1992년 4월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 1993년 4월 '국방위원장' 취임으로 군권장악을 매듭지음으로써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리고 1992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권력세습을 앞둔 마지막 제도 정비절차를 끝냈다. 즉, 국방위원회를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³²⁾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김정일에로의 권력이양과정에 있을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비요인을 해소하였으며, 아울러 통치이념의 차원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여 주체사상으로 완전히 대체³³⁾함으로써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의 이념적 위상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체제는 혁명과 건설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혁명과 건설은 바로 북한체제의 존재이유이자 통치명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전이문화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취해진 불균형적 동원체제는 북한체제 내부에 관료주의적 병폐³⁴⁾를 배태시켰다. 그리고 공업화정책의 추진은 결국 기술전문가집단의 기용이 선행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연히 사회의 기능적 분화현상을 노정하기 마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빠져 있다. 전체주의식 명령적 통제경제의 한계성은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율을 저하(평균 3% 이하 기록)시켰다. 무모한 중공업 우선정책은 산업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특히 소비재와 식량공급의 부족은 주민생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물질적 유인요소의 결핍은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외화부족과 공장설비의 낙후, 수출상품의 조악, 수송체계의 불합리 등은 북한경제의 전도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그간에 러시아·중국에 의존해 왔던 원유도입이 1991년 1월 이후 국제가격의 경화결재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무역량까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경제난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3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111조.

33) 동 헌법, 제3조.

34) 공산주의체제에 있어서 관료주의적 병폐는 L. Cohen and T. Shapiro ed.,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New York: Anchor Books, 1974).; 관료주의 병폐의 내용은, ①goal displacement ②impersonality ③새로운 쇄신에 대한 저항 ④overconformity 등을 들수 있고, 북한의 경우는 김일성도 ①형식주의 ②요령주의 ③권위주의 ④파벌주의 등이 당과 인민을 이탈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1976. 1. 26. 조선 중앙방송).; 김갑철, 위의책, p.332 참조.

북한체제가 직면한 이러한 경제적 딜레마의 해결책은 선진기술의 도입과 자체내의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상품의 질적향상과 무역확대를 도모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중공업 우선정책에서 벗어나 산업불균형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제·기술전문가의 중용과, 정치적 통제의 완화, 개혁·개방을 통한 서방과의 교류확대, 그리고 대내외적 긴장완화정책 등 구조개편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GNP의 24%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비부담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해소를 유보한채 무작정 이데올로기호소에 의한 사회적 동원의 강행은 아무리 폐쇄된 사회에서일지라도 사회적 동요의 근거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대혁명(사상·기술·문화)소조운동의 강조는 바로 북한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한 수단이었으나, 그것만으로 본질적인 처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북한체제는 과연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미리 지적한바 체계이론과 구조-기능론은 이러한 '변화의 불가피성'을 적절히 설명해 준바 있다. 기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또 변화해야만 한다. 변화된 환경에서 항구적으로 독자적 원형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존재'란 늘 가변적인 환경에의 끝없는 적응과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체제 역시 이러한 범주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일차적 관심이 비록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여부에 있다 할지라도, 보다 궁극적인 관심은 '변화의 범위와 시기 및 속도' 등이 몰고올 파장, 즉 민족공동체의 장래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하는 영향도에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점진성과 정·경분리원칙으로 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는 '중국식 개혁'과, 체제의 붕괴를 초래한 소련식 개혁, 정변과 처형으로 끝난 루마니아사태, 동서간의 불균형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의 흡수통일 등의 사례는 바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지켜보는 우리에게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변화패턴도 거시적으로 볼때엔 유사 사회주의체제의 변화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역시 외부적 환경변화(도전)라는 독립변수와 체제유지(생존)를 위한 적응(응전)이라는 종속변수관계이기 때문이

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와 내용에 있어서는 역시 적지않은 차이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권력세습이라는 전대미문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유사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결과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본격적인 변화는 결국 권력승계 이후의 체제에서나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변화의 성격은 바로 후계체제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체제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언제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향후 남북한관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이고, 통일한국에 대한 접근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Ⅲ. 북한체제의 변화양상 예측

1. 권력승계 및 후계체제의 안정도

북한체제변화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김일성의 퇴진이 북한체제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과거 소련의 경우 스탈린의 사망과 더불어 흐루시초프의 스탈린격하운동이 전개되었고, 毛澤東의 사망과 鄧小平의 복권으로 중국체제가 크게 변화했던 선례에서 본다면, 이러한 변화가 비단 북한만이 갖는 특수성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북한체제 역시 사회주의 이론 보다는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수령중심의 '단일영도체계'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흐루시초프의 개혁정책과 함께 동유럽에서 일어난 '인간적 사회주의'(Human Socialism)와 서유럽에서 전개된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 등의 '수정주의'(revisionism)³⁵⁾사조는 스탈린적 사회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북한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1973년부터 추진된 북한의 부자세습체제는 이상의 개혁공산주의적 조류에 대항하여 '김일성 없는 김일성주의'의 공고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안으로 모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

35) 이 용어는 소비에트 모델에 비판적이었던 유사 사회주의이론에 대해 스탈린주의자들이 명명했던 '수정주의'를 의미한다.

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와 내용에 있어서는 역시 적지않은 차이를 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권력세습이라는 전대미문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유사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결과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본격적인 변화는 결국 권력승계 이후의 체제에서나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변화의 성격은 바로 후계체제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체제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언제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은 향후 남북한관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이고, 통일한국에 대한 접근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

Ⅲ. 북한체제의 변화양상 예측

1. 권력승계 및 후계체제의 안정도

북한체제변화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김일성의 퇴진이 북한체제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과거 소련의 경우 스탈린의 사망과 더불어 흐루시초프의 스탈린격하운동이 전개되었고, 毛澤東의 사망과 鄧小平의 복권으로 중국체제가 크게 변화했던 선례에서 본다면, 이러한 변화가 비단 북한만이 갖는 특수성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북한체제 역시 사회주의 이론 보다는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수령중심의 '단일영도체계'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흐루시초프의 개혁정책과 함께 동유럽에서 일어난 '인간적 사회주의'(Human Socialism)와 서유럽에서 전개된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 등의 '수정주의'(revisionism)³⁵⁾사조는 스탈린적 사회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북한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1973년부터 추진된 북한의 부자세습체제는 이상의 개혁공산주의적 조류에 대항하여 '김일성 없는 김일성주의'의 공고화를 도모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안으로 모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

35) 이 용어는 소비에트 모델에 비판적이었던 유사 사회주의이론에 대해 스탈린주의자들이 명명했던 '수정주의'를 의미한다.

터의 변화파장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후계체제를 위협하여 왔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6년간 구 소련권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대 변혁, 동독의 서독에의 흡수, 그리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체제의 종식은 김일성-김정일 후계체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언제까지 북한을 통치할 것이며,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북한체제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할 것인가?

적지않은 회의론과는 달리 김정일에로의 권력승계는 이미 확실한 기반을 다졌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사망후 권력승계를 놓고 김정일과 여타 세력들(예컨대 군부, 반체제세력 등)간에 권력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김일성은 외국의 사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의 생존시에 중요직책과 조직을 아들에게 이양하여 왔다.

권력이양에 대한 후속조치의 강화는 1995년까지 계속될 것이며, 1996년경에 김일성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권력승계과정에서 체제내에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예측이다. 물론 그와 동시에 체제내에 여러가지 모순적 경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으나, 김일성 사망 이전에 김정일을 총비서로 선출하게 될 것이고, 사망직전에 주석직까지 이양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1995년까지 사실상 전권을 장악하게 되고 김일성 사망 이전에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이미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소수의견도 무시할수 없다. 즉, 권력장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김일성 사망이라는 북한체제 최대의 변혁기(1996년-1998년)를 맞아 반대파들의 권력투쟁이 격화되어 김정일이 실각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라든가, 실각은 없되 상징적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 그리고 심지어는 권력투쟁과정에서 김정일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³⁶⁾

김일성 사망을 전후하여 실용주의세력이 대거 권력핵심부에 등장하게 되어 권력승계과정에서 강경파와 실용주의세력간에 권력투쟁이 심화될 경우 반대파에 대한 철저한 숙청으로 권력의 과두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이고 보면 집단지도체제의 등장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이런 견해를 피력한 전문가들은, “김일성사망은 북한정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김정일의 사망이야말로 심각한 위기의 계기가 될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권력투쟁과정이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수강경파(혁명1세대 포함)가 정계로부터 축출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강경군부세력과 개혁세력간에 투쟁이 격화되더라도 군부세력은 여전히 현존 권력에 충성하게 됨으로써, 김정일에 대한 군부쿠데타의 발생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치이념 :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

주지의 사실이나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이다. 1970년대초 김정일을 후계자로 부상시키기 시작하면서 주체사상은 그 위치가 더욱 확고해졌고, 1982년 김일성의 70회생일을 기념하여 발표하였다는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³⁷⁾를 통해 김일성주의(Kimism)로까지 격상시켰다.³⁸⁾ 그리고 1992년 개정헌법을 통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완전히 삭제하고 주체사상을 전면에 부각함으로써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은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이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은 김일성 우상화(cult of personality; 신격화)와 수정주의사조의 유입을 방지하고 사상적 자극을 통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 권력세습(혈통주의), 대남적화혁명(남조선해방) 등 북한체제의 목표 내지 이익을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위상변화추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권력의 완전한 승계(세습)를 목전에 두고 주체사상을 더욱 강조하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이후(1996-1998년) 주체사상의 위상은 김정일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적어도 김정일이 권력을 완전승계할 경우엔 그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대변화를 외면할수 없는 까닭에 실용주의적으로 갱신되어 약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존재하는 한 주체사상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바로 권력의 정통성과 통치명분의 결여로 직결되

37)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조선중앙년감』(평양 : 1983).

38)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1988).

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있는 것은 주체사상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것과는 달리 김일성주의는 오히려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의견이다. 그런가 하면 비록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남북통일이 된 이후에까지도 북한지역 주민들중 하층민들은 더 오랫동안 김일성주의를 회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것은 오늘날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상황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예이다. 즉, 보수파들의 구체제로의 복귀의지는 스탈린적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스탈린통치시기에 대한 거의 맹목적인 동경이라는 두가지 비동시적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쨌던 김일성 주체사상이 김정일의 통치기에까지 연장되어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하게 해주는 데에로 직결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즉, 이것은 혈통주의에 대한 호소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런 연유에서 '김일성주의'가 '김정일주의'로까지 전환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최근 사회주의권의 대몰락으로 급변한 정세와 지속적인 주민생활수준의 저하, 새로 충원되는 정치엘리트들의 성향, 그리고 경제건설을 위한 새로운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체제내부로부터 강하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엘리트갈등과 사상투쟁

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엘리트들에게 '혁명성'(紅: red)과 '전문성'(專: expert)을 동시에 강조하여 왔다. 소위 '붉은 전문가'에 대한 육성과제는 바로 '혁명'과 '건설'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전략수행을 위해 요청된 것인바, 이는 구 소련과 동유럽 및 중국의 개혁정책과정에 노정된 부작용에 대한 경험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볼때엔, 이러한 양면전략은 비단 북한체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등소평의 실용주의노선도 '천안문사태' 이후엔 어느정도 '홍'에 대한 강조경향이 노정되었고,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의 개혁 역시 빼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정책(재편, 공개, 신 사고)에도 불구하고 레닌주의에 대해서만은 확고한 위상을 부여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었다.

어쨌던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의 심화는 곧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선전하는 데에 심각한 딜레마로 작용하여 왔고, 주민들의 생활향상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삶의 조건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처하게 됨으로써 후계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협하여 왔기 때문에, 엘리트들에 대한 이러한 까다로운 주문은 일정한 변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 사망과 권력세습을 전후하여 엘리트들은 대거 교체될 것이다. 권력세습으로 인해 혁명 1세대는 완전히 퇴진하게 될 것이고, 김정일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새로운 젊은 엘리트들로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엘리트 교체는 수권자인 김정일에게 있어서 '권위의 부각'과 '혁명성의 부족'이라는 모순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젊은 엘리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기에는 그들의 혁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합리성과 실용성, 그리고 현실적응성 등의 성격을 지닌 신진 엘리트들의 성향에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없는 김일성주의'의 강조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개혁(건설)문제에 관한 지도부내의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이데올로기 지향의 보수파 엘리트들이나 군부세력들로 하여금 거부감 내지 불안감을 조성하여 권력투쟁의 차원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으며, 비록 대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이러한 갈등양상이 자칫 악화일로로 치달아 결국 새로운 개혁파 지도자의 권력장악이라는 사태를 발생시킬 소지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사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직전(1993-1995년)까지 사상선전을 강화하고, 이후에도 대외개방(1996-1998년)정책과 더불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사상·문화적 영향을 막는 데에 총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혁명성 강조에 대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내에 긴장이 확대될 것이나, 결국 김일성 사후에는 실용주의파 세력의 목소리가 증대되고 서구문화의 영향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전개가 예측된다.

4. 경제개혁과 시장 사회주의

현재의 북한경제는 다면의 질곡에 처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경제구조와

발전전략에서 기인된 성장둔화와 산업구조의 불균형이고, 둘째는 수출부진과 해외시장의 편중을 들수 있고, 셋째로 대외적인 협력의 부진과 기술개발의 낙후로 인해 종전의 중공업 우선정책마저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는 점, 넷째로, 경제의 주체인 주민들의 생산의욕의 저하로 인한 생산성하락 등이다.

이와 같이 경제계획의 실패와 성장둔화로 북한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1960년대 이후 줄곧 지속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산업구조는 극도의 불균형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경공업부문의 낙후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노선이었던 중공업 우선정책은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진 공업화 전략이었다. 이는 경공업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원자재를 자체생산을 통해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축적이 안된 상태하에서 장기간에 걸친 중공업 우선정책은 공업부문의 구조적 불균형은 물론 여타 산업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북한 경제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대두시켰다. 이른바 경공업부문의 낙후성이 초래한 소비제품목의 부족은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는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받아온 주민들에게 체제의 설득력을 의심받게 되는 통치명분의 침식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부분적인 물질자극방법을 통해 노동의욕향상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하지만 1991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NP는 1,038달러로 종래의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상황이다.³⁹⁾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국제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여전히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지 못한채 종래의 비경제적인 처방인 이데올로기적 자극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1984년 9월에 합영법 제정·실시 이래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

39) 1985년의 한 조사연구는 국내 북한문제전문가 50명의 의견을 수렴해, 1980년대 후반기에 북한의 1인당 GNP가 1,500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상정하고, 1990년대 후반에 3,000달러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던바 있다. 김갑철, 『남북한 정치상황변화양상의 장기예측』(서울 : 통일원, 1985), p.249-17과 240-104(-5) 참조.

하고, 나진·선봉·청진을 자유무역항으로 설정하였으며, 1992년 10월 5일 외국인기업법을 제정·공포하고, 1993년 1월 31일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함으로써, 외자유치와 기술유치에 한층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경제체제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 개방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경제침체의 근본적 해결이라기보다는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처방안 수준에 그치고 있다.⁴⁰⁾

따라서 북한은 향후 2-3년간 경제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외채상환문제로 인해 대외경제관계에서도 적지않은 고초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경제파탄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어도 1995년까지는 긴축경제정책을 실시할 것이고, 경제특구창설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해외에 건설인력을 파견하고⁴¹⁾ 과학기술전문가양성과 서방의 첨단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⁴²⁾

이러한 노력은 1996-1998년기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어 경제구조 개편(개혁)노력과 유엔에 경제원조를 요청하는 등 대외개방적 시장 사회주의 정책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1999-2001년경에 자연히 소유제의 변화(예컨대 부분적 사유제 채택)와 중소기업의 민영화 등 오늘날 변화된 구 사회주의체제의 전례에 경사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 북한 경제상황은 부분적으로 호전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다소 향상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김일성 사후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여 경제개혁정책에 있어서도 중국식 개혁방법이 채택된다는 전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1999-2001년기에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개혁문제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야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0) 유임수, "남북한 경제통합을 향한 경제협력 방안," 『남북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제과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서울 : 건국대학교 부설 현대이념비교연구회, 1993. 6), pp. 17-18.

41) 물론 이에 대해서는 '사상통제의 어려움'으로 그 시기가 더욱 늦추어질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있다.

42) 한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 정보수집활동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 『내외통신』, 주간판 제862호(1993. 8. 26), C1-C4.

5. 사회통제와 민주화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그 양상이 어떠하든지간에 사회내에 많은 변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김정일은 일종의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사회통제형식의 변화(사상적 자극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적 자극형태로의 대폭 변화)와 부분적이거나 개혁·개방정책에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 권력승계에 진통을 겪게 되면 김정일 자신은 사회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나, 이미 그 과정에 외부로부터의 유입된 사조와 주민들의 의식내부의 변화는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는 경제난과 권력의 불가항력적 위상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정치적 무관심 분위기가 노정되었으나, 권력승계와 더불어(승계과정이 어떠하든지간에)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욕구가 발생할 것이며, 자연히 사회의 분위기는 다원화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지게 될 것이다. 다수의 견해는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후인 1996-1998년경에 반체제세력이 성장하여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동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견에는 반대의견이 많으나 어쨌든 그러한 반체제 소요사태의 결과로 1999-2001년경에는 정치적 탄압을 피해 서방 내지 한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엘리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경제체제의 개혁과 정치적 민주화로 집중되어 권력핵심부에 진입한 실용주의세력들의 합리적 사고체계에 호소하게 될 것이다. 다소 성급한 느낌을 주는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1996-2001년기간에 다당제에 기초한 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통치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정과 더불어 헌법을 다시 대폭 개정하여야 하므로 순조롭게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996-1998년경에 이르러 조선로동당은 국내외 정세급변에 대한 대책 수립과 체제적응방안으로서 새로운 대내외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수의견이고 보면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히 조선로동당의 지도적 역할의 억제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그것은 로동당의 독점적 지위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권력승계를 전후하여 새로 유입될 자유화·민주화추세가 가속화되고, 동시에 대거 기용된 신진 테크노크라트들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작용하여 조선로동당 내부로부터의 변화 내지 와해무드가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심지어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1998년을 전후하여 조선로동당이 아예 정계로부터 완전히 축출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구 소련의 붕괴와 공산당의 권력상실 등 러시아의 현실에서 유추된 듯 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이들은 권력승계 이후의 북한이 중국식 경제개혁전략은 도입하면서도 권력체계만큼은 중국식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권력승계와 더불어 김정일은 북한 특유의 정치체계개혁을 도모하고 반대파에 대한 탄압에 성공하여, 일부 급진개혁파들이 한국정부와의 접촉을 모색하는 가운데 2000년까지 북한 정세에 심각한 변화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그간의 정치사회화가 주효하여 군부가 현존 권력에 지속적으로 충성할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6. 대외관계

최근 한 재미학자는 남북한 공히 통일정책을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써 추구하고 있음을 비판한 적이 있다.⁴³⁾ 사실 그동안의 북한 외교정책은 소극적으로는 체제의 유지와 강화에,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의 달성에 그 기본목표를 두어 왔다.

북한 외교정책을 그 내용과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정권의 정통성 및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과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지원요구,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군사동맹체제의 약화, 경제발전과 군비증강을 위한 지원요구 등으로 요약된다.⁴⁴⁾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은 한편으로는 구 소련과 중국에 대한 등거리외교를 통해 경제적·군사적 실익추구로 나타났고, 또 한편으로는 서방세계에 한반도 문제를 민족내부의 문제로 방임하라는 국제적 회유와 압력으로 나타났다. 그

43) 박한식, "통일조국의 미래상," 도산사상연구회 학술토론회(1993. 9. 24).

44) 김갑철, 전계논문, p. 249-19.

리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전까지는 제3세계권 즉 비동맹외교에서 대남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러면 남북한 유엔시대개막과 사회주의진영의 붕괴로 초래된 탈냉전시대의 북한의 대외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 북한의 대 러·중관계

우선 흥미를 끄는 것은 북한의 대 러시아관계이다. 소련연방의 해체와 공산당통치의 몰락으로 대 러시아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1992년 11월에 방한한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은 “대 북한 조약상의 군사관련 조항은 현재의 국제정세에 맞지않아 사실상 死文化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1993년 1월 평양을 방문했던 쿠나제 외무차관은 구 소련간에 체결된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1961년 7월)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수정할 것을 제의했다.⁴⁵⁾

따라서 현재의 북한·러시아관계는 외교·군사·무역분야 모두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양국은 상호간에 상주외교관의 지방여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관원을 대거 감축한바 있다.

그러나 양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점차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북한은 현재 고립된 상황에서 비록 러시아가 과거의 소련과는 판이하게 다른 체제이긴 하나 우선 영토가 인접해 있고, 대부분의 군장비가 러시아산이라는 점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과거 최대의 무역당사국이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러시아의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점 등에서 기대어린 태도로 관망하면서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이라는 논리이다.

사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한·소수교 이후 몇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당분간 한·러간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대 한국 외교상의 중요한 카드가 북한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 이상, 더군다나 한·러간의 경협건도 주춤하고 있는 마당에서 대북한관계를 이 상태로 방치할리는 만무한 것이다.

45) 쿠나제 차관은 상호원조조약 제1조의 ‘자동군사개입조항’에 대하여 “러시아가 일차적으로 선제공격여부를 판단한 다음, 러시아 국내법절차에 따라 유엔헌장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이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동개입의 절차야 어떻든간에 지금도 여전히 이 조약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 수정해석을 하고 있을뿐 엄밀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북한·중국관계는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고한 편이다. 최근의 북한 핵문제를 놓고 중국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취해온 것으로 보아, 종래의 북한·중국관계는 다소 균열된 것 같은 기대를 불러 일으키나, 사실 여전히 그들간의 유대는 긴밀하고, 또 조만간에 관계가 더 강화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핵실험재개(1993년 10월 5일)로 인해 핵확산금지조약의 구속력에 회의가 일기 시작하고 있고, 마침 그 시기가 북한의 핵문제로 미·북한간에 몇차례의 협상이 결렬되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핵실험 재개가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지 않으려는 북한에게 일종의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는 보다 본질적인 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구 소련이 존재했을 때조차도 북한은 중국과 소련사이를 오가는 지그재그식 외교로 일관하였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체제의 유지가 첫째 목표였던 까닭에 외교의 기본적 변수로 ①이데올로기적 유사성, ②반미 강경노선, ③실리추구(경제·군사부문) 등을 고려해 왔고, 그 결과 흐루시초프의 등장 이후엔 의식적으로 친 중국노선을 견지해 왔다.

특히 오늘날 구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진영이 일거에 변화된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장차 후계체제의 전개에 따라 김일성 사후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고,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에서도 중국식 개혁전략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중국관계의 강화는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대 남북한관도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2) 북한의 대 서방외교

북한의 대외정책이 단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교조주의적 정책으로부터 체제이익을 중심으로 한 실리주의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는 일각의 견해⁴⁶⁾는 북한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다소 과장하여 이해한 데에서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최근의 북한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선회한 것을 그

46) 이러한 견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강석찬, “탈냉전시대의 북한의 대남 정책과 대미·일 유화정책간의 상관성 연구,” 『북한 및 통일문제연구』 (서울 : 통일원, 1992).

간의 북한이 주장해온 ‘하나의 조선’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파악하여, 바로 그러한 태도변화를 실리추구외교로의 변화의 단서라고 규정하고, ‘이중성’과 ‘정책적 일관성결여’ 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노정된 지극히 상식적인 패턴을 針小樺大한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평가는 북한체제의 성격을 너무 합리적 시각으로만 관찰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⁴⁷⁾

사실 그간의 북한의 대외정책이야말로 그 어떤 국가 보다도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의 실리와 명분(이데올로기)을 복합적으로 추구해 왔다고 볼수 있다. 더우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은 애당초 북한이 먼저 주장했던 논리이기도 하다. 과거 대 중·소 진영외교에서조차도 이데올로기라는 명분논리를 표면에 내걸고 양측을 지그재그로 오가는 등거리외교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였다.

특히 대 서방외교에 있어서는 우선 한국과 서방국간에 유대관계를 이완시켜 국제사회에서 대남우위를 확보하고, 경제발전과 군사력증강정책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개선노력을 전개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대미관계의 추이를 살펴보면, ①대미 적대관계강화기(1950-1968) ②대미 인민외교강화기(1969-1974) ③대미 접촉강화기(1974-1979) ④레이건행정부 등장과 대미 경색기(1980-1988) ⑤대미 접촉강화기(1988-현재)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특히 1984년 9월 김일성의 대미 관계개선 의사표명과 더불어 1988년 10월 미국의 대북완화정책이 표명된 이래 북경에서 미·북한간에 참사

47) 이와 유사한 예로서 구 소련의 외교패턴에 대한 지적이 있다. 예컨대 다니엘스(R. V. Daniels)와 샤프(S. L. Sharp)는, 소련 대외정책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는 항상 별반 중요요인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한바 있다. ; Samuel L. Sharp, "National Interest : Key to Soviet Politics," in Erik Hoffmann and Frederick J. Fleron, Jr., eds.,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 1971), pp.108-117. ; Robert V. Daniels, "Doctrine and Foreign Policy," in Hoffmann and Fleron, Jr. eds., *Ibid.*, pp.154-164. 또한 해머(D. P. Hammer)는 국가이익이 이데올로기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보았고, 헌트(R. N. Carew Hunt)는 양자의 비중을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Darrell P. Hammer, *U.S.S.R. : Politics of Oligarchy* (Hinsdale : The Dryden Press, 1974), pp.388-413. ; R. N. Carew Hunt, "The Importance of Doctrine," in Hoffmann and Fleron, Jr., eds., *Ibid.*, pp.101-108.

관급 접촉이 24회(1988.12-1992.6)나 있었고, 1992년 1월에는 김용순 당국제 부장과 캔터 미 국무차관간의 고위급회담으로 확대된바 있다.

북한의 대일관계는 대미관계에 비하면 한결 전망이 밝다. 우선 1991년 이후 줄곧 수교협상이 이루어져 왔고, 양측간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제조건이 대미관계에 비하여 훨씬 가볍기 때문이다. 특히 전전·전후 배상금(50-100억달러)은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볼때 적절한 절충을 통해 서둘러 받아내야 할 입장이다. 일본의 입장 역시 북한 핵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큰 걸림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각한 경제문제에 처해 있는 북한은 미·일 외에도 유럽 각국들과의 관계 발전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대유럽외교는 그들의 입장과는 달리 불리한 국면에 처해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북·미간에 수차례 협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북한은 한발의 양보의사도 보이지 않은채 오히려 핵확산금지조약이 갖는 한계인 불평등주의적 측면을 공격함으로써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차원에서 볼때, 그 전도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우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교차승인분위기가 마련되어 있고, 냉전체제의 해체로 한반도 주변국들간에는 어느때 보다도 교류·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당면문제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북한·미국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1995년까지 그간의 접촉이 보다 공식적으로 정례화되면서 북한·미국간의 관계는 호전될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의견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 핵문제해결이 지연될 경우와 그리고 소수의견이긴 하나,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기대처럼 그리 쉽지 않아 북한·미국관계는 긴장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미관계와는 달리 북한·일본과의 관계는 조만간(1993-1995년)에 발전되어 수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북한이 현재 처한 국내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서방 관계개선노력을 더욱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권력승계를 전후하여 통치명분의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의 향상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딜레마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7. 군사 및 핵정책

북한은 1960년대 이래 줄곧 '4대군사노선'과 '3대혁명역량강화' 방침을 근간으로 대남전략수행을 위한 군사력증강을 도모해 왔다. 특히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여전히 GNP의 약 24%를 군사비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23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서 밝힌 1992년도 세계 각국의 군사비지출 추세(GDP의 3%)⁴⁸⁾에 비할때 엄청난 수준임을 알수 있다. 물론 북한의 경제수준을 고려하면, '군사비/예산' 비율이 갖는 의미(규모)는 다소 하향조정되었으나, 1992년 8월 현재 101만여명의 병력을 유지함으로써 수적인 측면에서 세계 제5위를 마크하고 있다.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스커드미사일과 사정거리 1,000km의 '로동1호' 개발에 성공하였고, 최근에는 '로동 2·3호'와 핵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까지 대남우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장비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도입 또는 개발된 신형무기를 제외하면, 북한 군장비는 대체로 낙후된 재래식무기가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체 내지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견해가 있다.

러시아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 현대화는 당분간 매우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문제를 고려할때, 최근에 개발한 몇가지 첨단무기체계를 제외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노선은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1996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약화되리라는 분석이 다수의견이다.

이에는 물론 이미 권력핵심부에 등장한 신진 엘리트들의 북한사회의 실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접근논리에 의해 영향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존립근거가 '남조선해방'에 있는 만큼 '하나의 조선' 전략수행을 위한 대남전략·전술은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1998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늘날 한반도 문제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

48)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군비지출이 지난 1986년-1992년간 25%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1992년도의 구 소련을 제외한 전세계의 군비지출총액은 6,620억불(1986년 8,540억불)이었으며, 1998년까지는 적어도 30%가 더 감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1992. 9. 25).

갈리고 있다. 다수의견은 북한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개방정책으로의 선회가 불가피한 경제현실로 인해 조만간(1993-1995년)에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한 동시사찰의 조건하에 핵사찰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완료한후 대남 비핵화선전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논거로는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는 것은 체제의 존립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바, 이는 여전히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접근이 아닌 '무력적 화통일'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남북한관계의 변화양상 예측

1. 남북대화 전망

1990년대에 들어 남북대화는 그 어느때 보다도 활성화되었다.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의제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4일 제1차 회담에서부터 1992년 9월 16일의 제8차 회담에 이르는 동안 '남북합의서'를 채택(제5차 회담)·발효(제6차 회담)시켰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서명·발효되었다.

그러나 '남한 노동당 사건'과 '팀스피리트 훈련' 및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선언으로 남북대화는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한다면 수백건의 남북대화 와 합의서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기 전까지 향후의 남북대화는 북한 핵문제에 초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차의 남북대화가 8차에 걸친 남북간의 고위급회담 수준 이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미·북한간에 열린 뉴욕회담과 제네바회담은 아직 별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다수의 의견처럼 북한이 대 미·일수교에 주목적을 두고 핵카드를 고집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 핵문제는 조만간(1993-1995년)에 해결될 수도

갈리고 있다. 다수의견은 북한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개방정책으로의 선회가 불가피한 경제현실로 인해 조만간(1993-1995년)에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남북한 동시사찰의 조건하에 핵사찰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을 완료한후 대남 비핵화선전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한 논거로는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는 것은 체제의 존립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바, 이는 여전히 북한의 대남전략이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접근이 아닌 '무력적 화통일'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남북한관계의 변화양상 예측

1. 남북대화 전망

1990년대에 들어 남북대화는 그 어느때 보다도 활성화되었다.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의제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4일 제1차 회담에서부터 1992년 9월 16일의 제8차 회담에 이르는 동안 '남북합의서'를 채택(제5차 회담)·발효(제6차 회담)시켰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서명·발효되었다.

그러나 '남한 노동당 사건'과 '팀스피리트 훈련' 및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선언으로 남북대화는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한다면 수백건의 남북대화 와 합의서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투명성이 보장되기 전까지 향후의 남북대화는 북한 핵문제에 초점이 두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차의 남북대화가 8차에 걸친 남북간의 고위급회담 수준 이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미·북한간에 열린 뉴욕회담과 제네바회담은 아직 별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다수의 의견처럼 북한이 대 미·일수교에 주목적을 두고 핵카드를 고집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 핵문제는 조만간(1993-1995년)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북한간의 협상결과가 미·북한, 일·북한간의 수교로 연결될 경우엔 아무리 북한측이 얻은 것이 크다고 할지라도 남북대화는 재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교차승인이 마무리될 것이고, 중단되었던 고위급회담이 재개되고 곧이어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대화의 진전은 점차 확대되어 1996-1998년경에는 사회·정치단체교류로 확대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비록 현재의 상황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다수의 의견이 동 시기에 상설대표부개설로까지 발전하게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김일성이 자신의 사망직전에 주석직을 이양하고, 북한권력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후계체제의 공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정일을 회담 파트너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2. 교류협력

이미 남북교류는 상당히 진전되어 왔으나 위에서 지적한 전제조건, 즉 핵문제 해결과 대화재개 및 확대가 실현되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① 인적교류

우선 1993-1995년경부터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이산가족의 상봉이 실현될 것이고, 곧이어 1996-1998년경에는 서신왕래를 포함하여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인적·문화·과학·기술교류가 전개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의견이다.

또한 이러한 교류확대는 완전한 단일선수단 형성이라든가 민족적 기념일(예컨대 광복절, 임진왜란 승전일 등)에 대한 경축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민족공동체적 차원에서의 교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인적교류의 패턴은 우선 먼저 인간적 차원에서 시작되고, 다음으로 문화적 차원과 이해관계, 그리고 민족적 차원 등의 순으로 전개되리라는 견해이다. 북한이 이러한 인적교류에 응하게 되는 것은, 인도주의에 대한 대외적 명분과 국제적 압력을 외면할수 없기 때문이며, 문화교류는 대남선전의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류는 그들의 당면문

변화가 엄청난 폭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③ 기타부문의 협력

이상의 교류확대는 교통로(철도, 항구)회복 및 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지상 및 해상교통로의 회복 및 개방이 가능해 질 것이며, 또한 다소 성급한 견해로 보이나, 그때까지 영공개방협정도 체결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의 협력이나 아시아 태평양공동체로의 상호접근에는 그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즉, 북한의 권력승계 이후 국제무대에서의 경쟁관계가 점차적으로 지양되어 2000년에 가서야 비로소 국제무대에서의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

3. 평화정착

남북한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상황은 여러가지로 예측할수 있다. 이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었고, 한·소간 한·중간의 국교가 수립된 국제적 상황변수로서는 이미 평화구도가 성립했다고 볼수 있다. 또한 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골자로 하는 '남북합의서'가 채택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평화정착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남북한간의 평화정착이란 이러한 외적 환경과 남북간의 합의 및 선언정도로는 보장될수 없다. 그것은 합의당사자가 합의내용에 관한 신뢰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의 북한의 태도와 특히 합의서와 공동선언이 발효되고 있는 현재도 '로동1호'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지를 되풀이하고 있는 데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1993-1995년 기간동안의 남북한관계에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평화정착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군사부문에서의 신뢰구축에 달려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

제 해결을 위해서도 환영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민족적 차원이 대두되는 것은 그들이 줄곧 민족주의를 강조·선전하면서도 사실은 북한주민들에게 순수한 민족주의 감정이 자칫 필요이상으로 확산될 경우 그들의 대남전략목표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유왕래에 대해서는 그것의 실현가능성에는 긍정적이되 그 시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의견은 늦어도 2000년까지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고, 통일전후인 2005년경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② 경제교류

남북간의 경제발전의 격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심화되어 왔다. 그런데 이 발전격차는 1993-1995년을 고비로 어느정도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에 북한이 이미 취하고 있는 제한적 개방조치와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보다 적극화된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북한의 경제특구공동개발이 점차적으로 가시화되고, 남북간의 교역이 전면적인 직교역형태로 확대되면서 남한의 대북한 경제투자가 보다 활발해진다는 가설이다. 그런데 그 시기는 대체로 1996-1998년경에서야 활발해진다고 분석되었다. 이 때가 되면 비무장지대에 공동경제지대가 개설될 수도 있으며, 현재로서는 선뜻 이해되기 어려우나, 북한의 외채상환문제에 남한이 협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교류의 지속적 확대의 결과로 1999-2001년경에 이르러서 남북간의 경제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노력이 전개될 것이며, 어쩌면 북한이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화폐체계를 개혁하여 남북간에 화폐단위가 어느정도 유사해지는 국면으로까지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외화획득 수단으로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게 될 것인바, 이 때 한국의 해외기업체에 북한의 인력이 고용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수준으로까지의 변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내부의

는 북한의 군비증강정책과는 달리 남북한간의 군사분야에서의 신뢰회복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6-1998년경에 이르러 남북한은 군사분야에서의 신뢰구축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의견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구축상황에서 남북은 공히 군비와 군대를 축소하게 될 것이며, 1999-2001년경에 이르면 긴장상태가 결정적으로 완화되고 군사분계선이 평화지대화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앞서 북한은 1996-1998년경에 이르러 종래의 대남혁명노선을 대폭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태도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틴스피리트훈련은 영구히 중지(1993-1995년경)하게 될 것이고, 또 1996-1998년경에는 미군의 완전철수와 유엔군사령부까지 해체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의견으로 나타났다. 필자의 견해로는 러시아 학자들의 이러한 견해는 단지 예측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의 차원에서 표현된듯 하다. 이것은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성향이나 대남북한관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친북한 노선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어쨌든 이러한 평화정착구조에의 돌입은 상호 군사시찰협정(1993-1998년경)이 체결·실행되고, 상호 안전문제에 관한 공동위원회가 수립(1996-1998년경)되며, 불가침조약이 체결(1996-1998년경)되고,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교체(1996-1998년경)되는 전제조건이 실현될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1993-1995년경에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투명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북한은 핵협상 지연으로 시간을 벌며 핵무기 개발을 완수하고 남한에는 계속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게 되리라는 견해도 있고, 또 지극히 소수의견으로는 남북한이 공히 핵무장을 하게 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전개될 위험성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⁴⁹⁾

49) 한국정부는 1993년 10월 9일 '한반도 비핵화 고수'를 재천명하였으나, 동월 6일에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한 보고서에는 "남북한을 비롯한 일본 등 15개국이 핵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다.

4. 통일환경 변화

1993년초 새정부가 발표한 통일정책은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이었던 ‘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정책에 일관성과 연속성을 견지하였다. 이것은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라는 3단계 통일론과, ‘민주적 절차’,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3대기조 즉, ‘3단계 3기조’정책으로 요약된다.⁵⁰⁾

이러한 ‘3단계 3기조’통일정책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시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남북합의서의 골자인 ‘화해·협력’을 그대로 발전시켜 교류·협력이 더욱 촉진되고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남북연합’(Korean Commonwealth)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관한 러시아 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남북한의 통일가능성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나, 그 형태나 중간단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일목요연하지 못하다.

우선 다수의 의견이, 통일원칙과 통일형태에 관한 남북간의 회담이 대체로 1996-1998년경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1999-2001년경에는 남북한이 통일헌법의 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2002-2004년경에 이르러서는 정치·경제체계가 통일될 것이고, 완전한 민족통일의 실현은 2005년경 내지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⁵¹⁾

그런데 이들은 막상 통일형태에 있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이 제시한 통일정책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이 1999-2001년경에 수립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주장인 ‘고려민주연방제’식 통일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다수가 답변하였다. 다시 말하여 그 발생시기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고려민주연방제’식의 통일가능성이나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발전할 가능성 모두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⁵²⁾

한편 비록 소수의 견해이기는 하나, 북한은 남한에 흡수될 것이며, 그것은

50) 『김영삼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서울 : 통일원, 1993).

51) 월러스타인도 “독일의 모델과 남북한의 정치적 진전상황을 고려할때 향후 10년 후에는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국일보』(1993. 9. 25).

52)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추가로 면담을 가졌던바, 이들은 ‘중간단계의 형태에 대한 남북간의 의견마찰은 불필요한 노력’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반도에 사상 최악의 사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견해는 남한의 현 경제역량과 성장률로 볼때, 흡수통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남북한지역 주민간에는 그 동안은 단지 문화적 이질성의 차원이던 것이 경제적 투쟁관계로까지 비화할 것이며, 또 북한지역에는 흡수통일에 반대하는 보수세력들의 무장 게릴라투쟁 거점이 형성되어 자칫 유혈사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민족동질성 회복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대체적인 견해가 통일이후에까지도 남북한 주민들간에는 엄밀히 이질적 요소가 남아있게 될 것이며, 그것은 좀처럼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우선 민족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며, 동질성회복이란 내용과 방법론에 있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평화통일은 상호 이질성을 수용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⁵³⁾고 주장한 박한식교수의 주장은 충분히 의미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남북한간의 이질성문제는 그간 통일의 요원성 내지 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주장하는 논리로써 더 크게 이용되었던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V. 결 론

1. 종합평가

지금까지 유사 사회주의체제들의 변화와 관련한 일반적 고찰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방향과 그 시기, 그리고 남북한관계의 전개양상을 체계론적 접근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가 노정하고 있는 현재적 특징과 당면한 대내외 환경은 북한체제로 하여금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정책적(전술적) 차원에서의 변화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전략적) 차원에서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아닌 체제의 생존이라는 보다 심각한 차원이다.

53) 박한식, 앞의 발표논문.

한반도에 사상 최악의 사태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견해는 남한의 현 경제역량과 성장률로 볼때, 흡수통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남북한지역 주민간에는 그 동안은 단지 문화적 이질성의 차원이던 것이 경제적 투쟁관계로까지 비화할 것이며, 또 북한지역에는 흡수통일에 반대하는 보수세력들의 무장 게릴라투쟁 거점이 형성되어 자칫 유혈사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민족동질성 회복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대체적인 견해가 통일이후에까지도 남북한 주민들간에는 엄밀히 이질적 요소가 남아있게 될 것이며, 그것은 좀처럼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우선 민족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며, 동질성회복이란 내용과 방법론에 있어 현실성이 없으므로 평화통일은 상호 이질성을 수용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⁵³⁾고 주장한 박한식교수의 주장은 충분히 의미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남북한간의 이질성문제는 그간 통일의 요원성 내지 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주장하는 논리로써 더 크게 이용되었던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V. 결 론

1. 종합평가

지금까지 유사 사회주의체제들의 변화와 관련한 일반적 고찰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방향과 그 시기, 그리고 남북한관계의 전개양상을 체계론적 접근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가 노정하고 있는 현재적 특징과 당면한 대내외 환경은 북한체제로 하여금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정책적(전술적) 차원에서의 변화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전략적) 차원에서의 확대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단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아닌 체제의 생존이라는 보다 심각한 차원이다.

53) 박한식, 앞의 발표논문.

둘째, 북한체제의 변화양상은 다음 일곱가지로 예측할수 있다.

1) 1996년경 김일성이 사망하기 이전에 김정일은 총비서를 거쳐, 주석에 취임(사망직전)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 부분적으로 권력투쟁양상이 표출될 것이나, 의외로 김정일의 전권장악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2)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은 김정일체제에서도 계속하여 통치 이데올로기로써 강조될 것이다. 그러나 1998년을 전후하여 급변한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체제개혁의 차원에서 원칙은 고수하되, 그 해석에 있어서 부분적 수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주의는 보다 오랜 기간동안 북한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으로써 작용될 것이다.

3) 이러한 정치이념의 위상변화는 김정일의 통치기반확립과 개혁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대외개방(1996-1998년기), 그리고 새로운 엘리트(실용주의세력)의 진출에 관련이 있으며, 물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투쟁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4) 산업구조의 불균형극복과 주민의 생활수준 제고는 체제의 안정과 김정일 통치의 정당성차원이므로 권력이양과 함께 경제개혁(구조개편)이 서둘러 진행될 것이다. 특히 김일성 사후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1996-1998년기에 김정일은 중국식 개혁방식을 모방하여 시장 사회주의에로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해서는 소유제문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5) 이 과정에서 통치 엘리트내에 합리주의적 무드가 확산되어 사회적 다원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복합성과 모순성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의 노출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1996-1998년기를 거치면서 조선로동당은 그 위상과 대내외정책 면에서의 일정한 변화를 노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6) 1993-1995년기에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외적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고, 대중관계의 강화와 대러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대미일 외교관계수립을 위해 한층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이것은 '핵'이라는 결정적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는 전술로 목표달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7) 대남 경제적 열세에 대한 콤플렉스 극복의 차원에서도 기존 대남전략과

군 현대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1996-1998년기에 접어들면 가증되는 경제난으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민의 욕구 폭발로 인해 체제유지수단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고, 군사력증강 보다는 사회복지와 사상투쟁 강화로써 시간벌기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온 양 세력간에 마찰이 노출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관계의 변화양상으로는 크게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1) 당분간 남북대화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무의미하다. 향후의 남북대화는 기존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정상회담도 무의미하다. 1993-1995년기에 핵문제가 해결되고 '김영삼-김일성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현 안문제의 일괄타결을 도모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더 큰 양보를 감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북한체제의 구조적 변화에로 영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북한권력의 정통성과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위해 김정일을 정상회담 파트너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2) 남북대화와는 별도로 교류·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교류·협력은 핵문제 해결후에야 전개될 것이며, 이때 남북간 교통로회복과 비무장지대의 공동경제구역 설립 등 획기적 변화도 기대된다. 1996-1998년기에 인적·문화·과학기술교류뿐 아니라 본격적 경제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북한은 이를 통해 실질적 효과(기술·자본도입)와 간접적 효과(이데올로기)추구라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3) 1996-1998년기에 북한의 경제개혁시도와 더불어 남북간의 교류·협력 증대를 통해 군사부면에서의 어느 정도 신뢰구축단계에로 접근하게 되면, 동 기간에 불가침협정과 평화협정체결도 가능할 것이며, 1999-2001년기에는 긴장상태가 결정적으로 완화되어 평화공존단계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군사적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이상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1996-1998년기에 본격적으로 통일형태에 대한 고위급회담이 전개될수 있을 것이고, 1999-2001년기에는 통일헌법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북 상호간의 통일방안에 대한 대폭

적 양보와 수정(‘남북연합’과 ‘연방제’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2002-2004년기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통일을 거쳐, 2005년경에 완전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이다. 그리고 이질성에 대한 극복 문제는 통일 이후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

끝으로, 러시아 학자들의 견해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특징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그들의 응답내용에는 종종 이중적·모순적인 논리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수 있는가?

1) 그들은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방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는 달리, 여전히 한국의 실상과 통일방안 및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지한 편이다. 이는 여전히 그들이 체제선호도나 통일방안에 있어서 북한식 논리에 상당히 익숙해 있던 과거의 정향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직 그들은 사회주의에 대해 강한 미련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두텁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2) 달리 해석하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연방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일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들의 의견은 장치 ‘화해·협력’의 축적을 통해 그것이 더욱 촉진되고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한국의 통일방안이 기능주의(functionalism)적 접근들이 노정할수 있는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능을 활용할수 있도록 연방제(confederation)단계를 거칠 필요도 있다”는 견해⁵⁴⁾와 일면 유사하다고 하겠다.

3) 또한 이것은 통일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외홍보 성과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필자는 델파이조사 질문지 말미에 참여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을 덧붙인바 있다(델파이 결과 분석표 제3부 참조). 여기서 나

54)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우철구,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연합’ 형성에 관한 문제,” 『통일문제연구』, 제5권 2호 (서울 : 통일원, 1993 여름), pp.52-55 참조. 우교수는 기능주의적 접근은 비정치적 분야의 접근으로 시작되는 까닭에 ‘비능률적이고 보수적’이며, 자칫 ‘부분적·기능적 통합’에 그쳐버릴 수도 있는 약점이 있음과 아울러, 한반도통일에 적용될 경우 ‘분단의 장기화 내지 고착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평가하고, 신기능주의이론(neo-functionalism)의 적용을 제안했다.

타난 것은 그들 전문가들이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⁵⁵⁾ 북한자료 역시 비슷한 응답수준이나 이것은 경우가 다르다. 구 소련체제시에 이들에 대한 북한의 선전과 지지설득 작업은 이미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간 축적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점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번쯤 반성할 일이 아닌가 사료된다.

그러면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염두에 둔 우리의 대북정책에는 어떤 대원칙이 요구되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2. 대북 정책수립 원칙과 우리의 자세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통일정책이 필요하듯, 효과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정책의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통일의 궁극적 형태는 민족의 통합이지만, 대북정책의 상대는 엄밀히 민족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상호부정적'인 정치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통일정책은 분명 대북정책의 상위개념일 것이나 대북정책의 원칙이 곧 통일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은 전략적 차원의 거시적 틀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대북정책이라는 구체적 전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날 대북정책이라는 구체적 전술수행에 전제되는 원칙과, 민족통일이라는 전략수행에 제시된 원칙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남북합의서 내용과 국내 관련법규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쾌한 설명능력의 부재가 반체제세력의 공격논리로 되고 있는 것은 그 상징적인 예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인해 '민주적 국민합의'를 거친 통일정책마저도 새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은 구별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통일원칙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구별하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남북관계의 전개양상에 따라, 또한 그 시기에 따라 능동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55) 이들중 대다수가 우리 정부의 발행자료는 커녕, 일간지조차도 구독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의 대북정책 수립에 전제되는 대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 점진주의적 접근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통일을 통치명분으로 설정하여 서두르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 월러스타인이 피력한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독일보다 큰 댓가를 치러야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⁵⁶⁾이라는 주장에 성급한 기대를 걸고 통일지상주의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둘째, 모험주의를 버려야 한다. 대북관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과 소극적 대책의 양면전략이 요구된다. 무분별한 일방적 제안이나 양보, 그리고 교류·협력의 확대가 곧바로 통일을 촉진하는 데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냉철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대적 우위확보 노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자유·민주뿐 아니라, 복지·문화, 그리고 도덕성과 민족주체성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우위를 이룰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분배정의와 민족주의를 높이 평가하고, 북한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상호존중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⁵⁷⁾는 박한식교수의 지적조차도 결국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러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안정된 민주정치(stable democracy)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세삼 강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전략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남한 내부정세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설정되어 왔다. 소위 ‘남조선 해방’논리는 바로 한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을 전제로 존립하고 있으며, 그것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지연시키는 데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정책 수립의 원칙을 견지함과 동시에 우리에게서 통일을 위한 몇가지 자세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첫째, 통일지상주의와 습관적 패배주의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통일만 되면 곧장 민족의 번영으로 직행하는 것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논리를 비약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일의 어려움과 심각한 준비부족, 그리고 여타 산적한 내부문제들을 상기케 하고, 반면 여지껏 일제의 식민사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56) 『한국일보』(1993. 9. 25).

57) 박한식, 앞의 발표논문.

소위 한국인의 ‘분열성’과 ‘끈기부족’ 등 일종의 습관적 패배주의에 젖어 통일의 요원성을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통일한국시대가 목전에 닥쳤음을 깨우쳐야 한다.

둘째, 흡수통일을 원치않는다는 원칙은 확인하되, 만일의 경우 흡수시를 철저히 대비하는 보다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의 형식이야 어떻든간에 내용면에서는 어차피 ‘풍부한 쪽’이 ‘부족한 쪽’을 포용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흡수형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한국의 지역안보상황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탈 이데올로기 시대에도 수교외교 그 자체가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판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초래된 냉전의 종식이 앞으로 40-50년간 ‘무질서의 시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언한 월러스타인의 지적⁵⁸⁾은 음미할 만하다. 사실 그간 미소 양극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상태가 해체되면서, 세계적 군비축소경향과는 달리 아시아국가들은 오히려 군비증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중국·일본 등의 군사력증강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동남아시아 약소국들마저 새로운 안보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⁵⁹⁾

이제 소극적 안보논리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체적인 분쟁억지능력을 과시할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할 때이라고 사료된다.

58) 그는 “세계는 당분간 보스니아내전과 같은 누구도 제동을 걸수 없는 민족분쟁 등의 무질서를 피할수 없고, 이런 무질서는 세계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위기’의 징후”라고 예언한바 있다. 『한국일보』(1993. 9. 25).

59) 1993년도 일본의 방위예산은 340억불이고, 중국의 경우도 14.9%를 증액하였으며, 대만은 192억불, 싱가포르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각국들도 각각 11% 내지 13%까지 군사비를 증액하였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1. 『김영삼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정책』, 서울 : 통일원, 1993.
2. 『북한권부의 실세 : 망명 북한외교관 고영환의 증언』, 북한 바로 알기 시리즈 11, 서울 : 공보처, 1992.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4. 강석찬, “탈냉전시대의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미·일 유화정책간의 상관성 연구,” 『북한 및 통일문제연구』, 서울 : 통일원, 1992.
5.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 화에 관한 연구,”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1988.
6. 김갑철, 『남북한 정치상황변화양상의 장기예측』, 서울 : 통일원, 1985.
7. ———, 『북한공산주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문우사, 1983.
8.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서울 : 문우사, 1988.
9. 김갑철·전인영·조영환, “북한은 ‘변화’하고 있는가 :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명’의 딜레마(좌담),” 『자유공론』, 1992. 12.
10. 김강녕,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 『산업사회와 한국정치 의 과제』,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0.
11. ———, “수렴이론의 문제점과 적용문제,” 민병천 편, 『전환기의 통일문제』, 서울 : 대왕사, 1990.
12. 김 덕 외, “사회주의는 과연 붕괴하는가,” 『월간조선』, 1990. 2.
1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조선중앙년감』, 평양 : 1983.
14. 김진균 외역, 『사회학이론의 구조』, 서울 : 한길사, 1982.
15. 도성달·이명남 역, 『비교공산주의정치론 : 그 변화와 전망』, 서울 : 인간사랑, 1990.
16. 박한식, “통일조국의 미래상,” 도산사상연구회 학술토론회, 1993. 9. 24.
17. 우철구,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연합’ 형성에 관한 문제,” 『통일문제연구』, 제5권 2호, 서울 : 통일원, 1993 여름.

18. 유임수, “남북한 경제통합을 향한 경제협력 방안,” 『남북통일 이후 사회 통합의 제 과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서울 : 건국대학교 부설 현대이념비교연구회, 1993. 6.
19. 장원석, “페레스트로이카의 현황과 전망,” 『신 국제질서의 전개와 한반도 통일』, 제주 :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1.
20. 한인숙 역, “비교연구를 위한 분석틀 :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인류학과 파슨스의 행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회학회 편, 『비교사회학 : 방법과 실제 I』, 서울 : 열음사, 1990.
21. 함중빈 역, 『역사의 종언』, 서울 : 헌정회, 1989.

<영문자료>

1. Brzezinski, Zbignew, “The Soviet Political System : Transformation or Degeneration,” in Richard Cornell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70.
2. —————, *The Grand Failure :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89.
3. Cohen, L. and Shapiro, T. ed.,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New York : Anchor Books, 1974.
4. Daniels, Robert V., “Doctrine and Foreign Policy,” in Erik Hoffmann and Frederick J. Fleron, Jr., eds.,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 1971.
5. Easton, David,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6. Eckstein, Alexander,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in *World Politics*, Vol. XXII, No.4, July 1970.
7. Friedrich, C. J. and Brzezinski, Z. K.,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8.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in *The National Interest*, No.16, Summer 1989.
9. Hammer, Darrell P., *U.S.S.R.: Politics of Oligarchy*, Hinsdale : The Dryden Press, 1974.
10. Hunt, R. N. Carew, "The Importance of Doctrine," in Erik Hoffmann and Frederick J. Fleron, Jr., eds.,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 1971.
11. Huntington, Samuel P. and Brzezinski, Zbigniew, *Political Power : USA/USSR*, New York : Praeger, 1962.
12. Johnson, Chalmers,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13. Kagarlitsky, Boris, *The Thinking Reed : Intellectuals and the Soviet State from 1917 to the Present*, Translated by Brian Pearce, New York : Verso, 1988.
14. —————, "Importance of Being Marxist," in *New Left Review*, No.178, 1989.
15. Lewin, Kurt, *Principles of Topologic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Inc., 1936.
16. Merton, Robert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17. Meyer, Alfred G., "Theories of Convergence,"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18. Park, Kyung Ae, "Social Reform in North Korea : Prospects for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omestic Changes i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Relations for the 1990s," Virginia : Arlington, July 12-14, 1991.

19. Parsons, Talcott and Smelser, Neil,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 The Free Press, 1956.
20. Sharp, Samuel L., "National Interest : Key to Soviet Politics," in Erik Hoffmann and Frederick J. Fleron, Jr., eds., *The Conduct of Soviet Foreign Policy*,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 1971.
21. Stone, William F., *The Psychology of Politics*, New York : The Free Press, 1974.
22. Turner, Jonathan H.,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Homewood, Ill. : The Dorsey Press, 1974.
23. Vallier, Ivan, "Frameworks for Comparative Research : Structural Anthropology and the Theory of Action," in *Comparative Methods in Socio-log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24. Wallace, Anthony,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 Random House, 1961.
25. Wallace, Ruth A. and Wolf, Alison,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 Continuing The Classical Tradition*, 2nd edi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86.
26. White, Stephen and Nelson, Daniel, *Communist Politics*,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기타자료>

『내외통신』, 『조선일보』, 『조선중앙년감』, 『한국일보』

부록 :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표

범례

1. 각 항목은 1차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제기한 예상사태중 2명 이상이 제기한 것만을 2차조사에서 되물어 얻은 것임.
1. 응답자 수요가 조사대상자 30명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응답자 수요를 생략하였기 때문임.
2. 여기에서 무응답들은 구체적 시기를 밝히지 않았을뿐 사태 발생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음. 따라서 사태발생에 대한 지지자 수요는 30명중 반대자 수요를 제외한 수가 될 것임.
3. 지면관계상 찬반의견에 대한 이유 및 근거는 생략하였음.

1.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권력승계와 후계체제>

김일성 사망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6	15	2	1	0	2

김일성의 정치일선 후퇴, 김정일에게 권력이양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15	10	0	0	0	2

김일성의 정치일선 후퇴는 모순적 경향을 초래할것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2	16	0	0	0	9

김정일 총비서 선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15	11	0	0	0	1

김정일 주석 선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8	17	1	0	0	1

김정일 전권장악·권력기반 공고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1	7	0	0	0	7

김정일과 반대파간의 투쟁이 격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8	1	1	0	6

김정일은 상징적 존재로 전락될것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6	2	1	1	15

김정일 실각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13	3	1	2	7

김정일의 사망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4	4	1	1	13

권력의 과두화 가속 :

- 1995	- 1998	- 2001	- 2004	- 2005	반 대
1	15	1	0	1	6

실용주의세력 권력핵심부에 등장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2	11	1	0	0	2

권력투쟁 심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6	16	1	0	0	4

강경군부세력과 개혁세력간의 투쟁격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1	11	0	0	0	5

강경파와 실용주의세력간에 내전발생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18	2	0	0	4

군부세력 현존권력에 충성 :

- 1995	- 1998	- 2001	- 2004	- 2005	반 대
1	4	4	0	11	4

보수강경파(혁명1세대 포함) 정계 축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20	0	0	0	5

군부쿠데타 성공, 정권장악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7	2	0	0	15

군부정권 민정으로 권력이양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2	4	0	1	18

<정치이념>

주체사상 강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9	4	0	0	0	12

주체사상의 위상변화(실용주의적 갱신 내지 약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5	15	1	0	1	3

김일성주의에서 김정일주의으로 전환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5	4	3	0	0	13

김일성주의의 붕괴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10	8	0	0	8

<엘리트갈등과 사상투쟁>

개혁에 관한 지도부(보수파-개혁파)내 갈등발생·악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7	17	0	0	0	3

새로운 개혁파 지도자의 권력장악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1	6	0	0	9

실용주의세력 등장이후 서구문화영향 확대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8	8	1	0	7

서구로부터의 사상·문화적 영향 억지에 총력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9	0	1	0	0	6

사상선전 강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8	3	1	0	0	4

사회내 긴장심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4	10	0	0	0	3

<경제개혁과 시장 사회주의>

경제개혁(구조개편)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5	19	2	0	0	1

중국식 경제개혁방식 도입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1	12	1	0	0	3

경제특구 창설 가속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3	13	0	0	0	0

경제파탄 심화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6	7	1	0	0	3

과학기술전문가 양성 박차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3	19	0	0	0	5

긴축경제정책 실시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8	1	0	0	0	8

사유제 채택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0	14	1	1	10

시장경제로의 이행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6	8	9	1	2	4

외채문제 극심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7	4	1	0	0	5

해외에 건설인력 파견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4	5	0	0	0	5

유엔에 경제원조 요청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14	0	0	0	11

외자 유치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0	17	0	0	0	0

중소기업의 민영화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7	11	1	1	7

경제상황 호전(생활수준 향상)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5	9	0	7	3

<사회통제와 민주화>

반대세력에 대한 통제 강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3	6	0	0	0	7

반체제세력 성장, 반체제시위 발생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14	1	0	0	10

서방으로의 망명자 속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	9	0	0	15

급진개혁파 한국정부에 접촉모색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8	9	5	1	3

사회민주화(다원화)시작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3	13	5	3	1	2

다당제 기초하 최고인민회의 선거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9	8	2	1	6

헌법개정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8	6	1	0	0	9

북한식 사회주의 현대화문제에 대중적 논의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2	8	3	0	10

조선로동당 내부 변화시작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3	10	8	1	0	5

조선로동당 새 대내외정책 채택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13	8	0	0	5

조선로동당 정계 축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0	6	4	0	7

조선로동당 지도적 역할 억제(독점체제의 붕괴)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6	7	1	1	3

주민의 정치의식 성장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12	6	2	1	3

정치적 무관심 증대 (경제난 관련)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7	2	0	0	0	7

청년 및 학생운동 심화, 정치적 영향력 성장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9	1	0	0	7

정치체제 개혁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17	6	0	0	2

중국식 권력체계 수립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4	7	3	0	0	13

최고 권력기관에 남한대표 피선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0	3	0	0	20

정세에 급변이 없음 :

- 1995	- 1998	- 2001	- 2004	- 2005	반 대
0	2	13	0	0	11

〈대외관계〉

북-러 관계 개선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12	11	0	1	0	3

북-러 군사관계 약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21	0	0	0	0	5

북-중 관계 강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15	5	0	0	0	6

북-중 관계 약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6	2	0	0	0	17

북-미 관계 발전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17	9	1	0	0	0

북-미 접촉정례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21	5	1	0	0	0

북-미 관계 긴장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11	1	0	0	0	14

북-일 관계 발전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18	7	0	0	0	0

대 북한 외세간섭 본격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대
6	3	1	0	0	15

대외 개방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5	8	1	0	1

대 서방 경제관계개선 노력집중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3	11	2	0	0	1

<군사 및 핵>

군 현대화 완료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4	3	3	0	0	15

군사노선의 약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15	5	0	0	5

핵무기 포기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0	8	3	0	0	6

핵사찰 수용(동시사찰 조건)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1	2	0	0	0	3

핵무기 개발완료후 대남 비핵화선전 강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2	1	1	0	0	11

2. 남북한관계 변화전망

<남북대화>

대화재개 및 확대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9	6	1	0	0	0

사회단체 교류개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9	14	2	0	1	0

정당·사회단체회담 개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4	11	7	0	0	5

고위급회담 재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6	6	0	0	0	1

정상회담 개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4	9	0	0	0	4

상설대표부개설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7	16	2	2	0	1

<교류협력>

서신왕래 개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6	16	3	0	0	2

인적·문화·과학·기술교류 확대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9	14	3	0	0	1

이산가족 상봉 실현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1	12	0	2	0	0

자유왕래 실현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9	6	0	8	2

남북 공동경축(예: 광복절, 임진왜란 전승일 등) 개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1	7	2	5	0	1

단일선수단 형성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6	15	6	0	0	0

교통로(철도, 항구)회복 및 개방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1	10	5	0	0	0

영공개방 협정체결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5	10	5	0	2	5

남북간 발전격차 심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4	5	2	0	0	4

경제·무역협력 적극확대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8	8	1	0	0	0

남북 직교역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1	14	1	0	1	0

북한 경제특구 공동개발 본격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4	13	2	0	1	0

공동경제지대(비무장지대에) 개설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4	13	2	0	0	5

해외의 한국기업체에 북한인력 고용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4	15	0	1	6

남한 대북 경제투자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18	3	3	0	1

북한 외채상환문제에 협력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15	7	0	0	3

남북 경제통합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2	15	0	8	1

북한 화폐체계 개혁, 화폐체계의 통일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	12	3	6	4

아·태공동체로의 상호접근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0	11	1	1	3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3	8	13	1	1	1

<평화정착>

실질적 상호체제 인정(신뢰구축)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9	11	4	0	0	3

북한내정에 남한 간섭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4	1	4	1	0	16

군사분야에서의 신뢰구축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5	16	4	0	0	2

군비 및 군대 축소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13	11	0	1	1

긴장상태 결정적 완화 (군사분계선 평화지대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6	13	2	2	2

상호 군사시찰 협정체결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9	8	6	0	1	3

안전보장에 관한 공동위원회 설립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	16	5	0	0	2

불가침조약 체결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8	10	1	0	0	7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4	16	3	0	0	3

미군철수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14	7	0	3	1

유엔군사령부 해체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	13	6	1	1	1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8	6	3	0	0	0

대남혁명노선 수정 또는 포기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3	13	2	0	1	3

핵문제에 관한 대립 강화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4	0	0	0	0	11

핵문제 타협성공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7	7	1	0	1	1

한반도 비핵지대화 달성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10	6	2	1	0	7

남북한 핵무장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2	1	2	0	20

남북관계의 불안정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22	4	0	0	0	1

남한으로의 대량이주상황 발생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2	6	2	0	17

<통일환경 변화>

남북통합에 관한 국제회의 소집 공동제안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3	6	5	1	0	12

통일원칙 및 통일형태에 관한 회담 개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3	10	4	5	2	3

통일헌법 제정사업개시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	15	3	5	3

남북연합 수립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	15	2	5	3

연방제에로의 실질적 접근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5	12	2	4	4

정치·경제체제 통일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1	6	8	6	5

통일 실현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2	4	3	17	1

남북한 주민의 사고체계에 장벽(이질감) 존속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4	4	0	14	1

흡수통일 반대 무장계렬라투쟁 근원지 북한지역에 발생 :

1993-1995	1996-1998	1999-2001	2002-2004	2005-	반 대
0	0	0	3	1	20

3. 응답자의 남북한 인식도

남북한 방문횟수(체류년수)

종 별	방 문						체 류		
	회(년)	없다	1-2회	3-4회	5-6회	7-9회	10회 이상	1-4년	5-9년
남 한	6	16	2	1	0	2	0	0	0
북 한	3	5	4	2	2	4	0	3	4

* 체류경험자는 단기방문 횟수를 생략하였음

한반도문제 연구연한

1 - 5년	6 -10년	11-15년	16-20년	21-30년	31-40년	41년 -
2	2	0	2	11	3	7

한국어 이해정도

	상	중	하
읽 기	8	17	1
쓰 기	3	20	2
회 화	3	14	9

주요 참고문헌

한글	노문	영문	일문	독문	불문	중문
23	26	26	2	1	1	1

남북한 발행자료 접촉빈도

	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거의 없다
남 한	7	16	3
북 한	6	15	5

北韓의 權力承繼政治와 體制 및
政策變化에 관한 研究

研究責任者：梁 勝 咸 (延世大學校)

목 차

(요약문)

제 1 장 序論：問題의 提起	159
제 2 장 權力承繼의 制度化問題	166
제 1 절 權力承繼의 制度的 裝置	166
제 2 절 權力承繼를 위한 地位	174
제 3 절 主體思想과 權力承繼 이데올로기	178
제 3 장 權力承繼 候補對象者 分析	183
제 1 절 金正日	183
제 2 절 軍 部	189
제 3 절 技術官僚	193
제 4 절 金日成의 新·姻戚	196
제 4 장 金日成의 死後 權力鬭爭 展望	202
제 1 절 權力承繼의 時期와 變數	202
제 2 절 權力承繼 過程과 結果	210
제 5 장 結論：北韓의 體制變化와 政策的 對應	219

北韓의 權力承繼政治와 體制 및 政策變化에 관한 연구

梁勝威 (연세대)

요약문

북한의 권력승계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북한정치체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남북한관계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는 북한의 권력승계가 김정일의 세습체제로 안정화되었다는 일반적 관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들을 그 세부적인 목적으로 한다. 첫째, 북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인 권력승계문제를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의 권력승계문제를 권력투쟁과 정책대결의 두 측면에서 연구분석함으로써 권력승계와 정책변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김일성 사후의 북한체제 및 정책변화의 가능성과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는 북한의 권력승계가 김정일 세습으로 마무리지어지고 있다는 일반적 견해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권력구조는 김일성 개인에게 모든 통치의 권한과 기능이 집결되는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로서 수령·당·국가의 삼위일체적인 통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령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당, 국가, 군의 최고직을 장악하여야 한다. 김정일은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함으

로써 부분적으로 김일성의 권력을 이양받았다. 그런데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권력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당 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당총비서직은 권력승계의 핵심적 직위이다. 김정일에 의한 실질적인 권력승계는 당총비서직과 국가주석직의 이양과 더불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당군사위원회 위원장직도 권력승계를 위한 중요한 직위이다. 이를테면 김일성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인계하면서도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양하지 않은 것은 이 직위가 실질적인 군사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은 단순한 직위의 계승과정만은 아니며, 공식적인 직위의 격상과 함께 김일성이 누려온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장악하고, 각종 정책활동을 통하여 후계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주체사상에 대한 독점적 해석권 이외에도 김정일의 권위 계승을 위한 노력은 김일성과 거의 동격의 수준에까지 이른 개인숭배를 위한 각종 상징조작 속에서도 나타난다.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는 북한이 내세우는 김정일의 업적이다.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주체사상의 체계화작업에서는 '혁명적 수령론'의 필연적 귀결로서 후계자론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수령에 의해 창시되고 발전된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할 후계자가 필요하다. 즉, 혁명위업은 수령의 영도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지만 혁명사업은 수령의 대에 완성될 수 없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수령의 역할을 이어 받아 혁명위업을 완성해야한다는 논리가 후계자론의 주요한 주장이다.

이상에서는 김정일이 제도적 차원의 직위를 부분적으로 이양받고 있고,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각종의 개인숭배를 통해 김일성의 지위를 물려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권력승계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 내의 수령론과 후계자론을 통해 김정일에 의한 권력승계를 상당부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김정일은 지난 70년대이후 20여년간 후계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것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정일이 누리는 권력은 자신의 정책적·실천적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김일성의 후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김일성의 사후 북한에서 권력승계투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예측케 한다. 이러한 권력투쟁에 뛰어든 권력승계 후보대상자는 대체로 네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김정일은 당연히 가장 강력한 후보대상자이다. 김정일의 권력 기반은 노동당내에서의 지위 격상과 당내 요직에 심어둔 지지 엘리트들이다. 특히 정치국과 비서국은 당의 핵심적 권력기구로서 김정일은 이를 장악하여 자신의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국가기관이나 최고인민회의는 실질적으로 당의 계획을 추진하고 추진하는 기구에 불과하며 김정일은 인적, 조직적 통제를 통하여 이 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다.

둘째,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뒷받침하는 집단인 군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김정일은 군부에 지지세력을 심어두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김정일에 대한 군부의 반대를 70년대 초기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군부내의 신구세대간의 갈등과 더불어 권력승계과정에서 위기를 증대시킬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 후보대상자로 전문기술관료들을 꼽을 수 있는데, 북한의 권력구조내로 진입해 들어가는 기술관료들의 비중은 점차 높아져 왔다. 북한의 정책이 이념적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문제를 더 우선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은 권력승계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정책적 갈등은 기술관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정무원을 비롯한 기술관료층이 경제실책에 대한 문책성 인사의 대상으로 빈번하게 되는데 대한 기술관료들의 불만은 권력승계과정에서 당정분권의 원칙을 추구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이

다.

네번째로 들 수 있는 권력승계 후보대상자는 김일성의 친인척들이다. 물론 김일성의 친인척들은 응집력있는 단일한 세력이라기 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바뀔 가능성이 가장 크고 김정일이 후계체제를 구축하는데에 가장 위협적이고 제거해야 할 경쟁대상은 바로 자신의 친인척들이다. 김영주를 몰아내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되는 과정, 그리고 김성애-김평일과의 권력투쟁에서 김정일이 승리하는 과정 등은 이의 대표적 예이다. 김일성의 친인척들 중에서 꼽힐 수 있는 구체적인 인물로는 김영주, 김평일, 장성택 등을 들 수 있다. 김일성의 친인척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꾸리기 보다는 다른 반김정일세력과 연합하여 김정일의 세습승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권력집단들은 협력과 갈등을 계속할 것인데, 예측가능한 권력투쟁의 양상은 세가지이다. 우선, 김정일이 권력세습을 공고히 하게 되는 경우이다. 김정일이 기술관료층의 지지를 등에 업으면서도 군부 등 보수적인 세력들의 불만을 무마할 정도의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일정한 혼란기를 거쳐 김정일 독재체제로 정치체제가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 이유는, 김정일의 후계구도를 떠받치고 있는 노장·소장층의 엘리트들의 공유점은 김정일이 아닌 김일성중심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1인지배체제가 형성되면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며 제한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과정에서 정책적 대결은 심화되고 북한지도층의 분열은 심화될 것이다.

둘째, 김정일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권력자가 없이 북한이 과두적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이때 집단지도체제는 분파별로 형성되며 대표적 지도자가 분파간의 연립을 조정한다. 이러한 분파는 북한체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노선을 둘러싸고 형성될 것이다. 권력승계 초기 단계에서 보수와 개혁으로 분열되었다가 권력승계과정이 진행되면서 강경보수, 온건보수, 온건개혁, 과격개혁으로

세분화된 분열 양상을 보일 것이다. 과격개혁세력은 미미할 것이나 나머지 세 분파는 당, 정, 군의 권력집단과 이들 내부의 연령층을 교차하여 형성될 것이다. 과두적 집단지도체제는 대체로 온건보수 내지 온건개혁의 성향을 띠게 될 것이며 김정일 1인지배체제 보다는 자유화된 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권력승계를 위한 투쟁으로 정치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체제 붕괴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인덕정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주는 도덕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군부 신진세력은 개혁을 요구하게 되고 기술관료들과 연합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권력승계와 더불어 민중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으나, 권력승계과정에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 북한주민의 사회세력화가 가능하게 되고 현실적 상황을 인지하고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는 체제위기적 상황에 처하여 있다. 경제적 침체는 체제붕괴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나 북한 지도자들의 도덕성과 허구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민중혁명에 의한 붕괴는 없을 것이다. 북한 지도자들의 도덕적 지도력 문제는 김일성 사후에 현실적 당면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한 시험 결과가 곧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지도자가 권력승계하게 되더라도 북한체제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북한에서 개혁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주변이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며, 핵무기 개발 문제 등에 대해서 강경대처함으로써 강경보수의 등장 및 도발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북한체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하여 그 시기가 임박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의 장기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1장 序論：問題의 提起

東歐 및 舊소련의 共產政權이 연쇄적으로 붕괴한 이후 殘存하고 있는 共產主義體制의 存續문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北韓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미 국제적 환경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계속 악화되는 경제적 침체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동독과 서독의 재통합은 한반도 統一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으며, 이것은 北韓 政治體制의 근본적 변화 또는 종말을 예고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북한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對內外的 요인은 성숙되어 있다. 그러나 歷史的 變化는 이러한 구조적 또는 환경적 요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問題狀況에 대한 지도자의 분석, 정책내용 및 수행능력 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¹⁾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체제하에서 정치적 변혁은 지도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북한의 경우는 이럴 가능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자들이 對內外的인 구조적 모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정치적 변화의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

體制變化와 指導力 간의 관계는 권력승계 과정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최고지도자(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死活的 의미를 갖는 중요한 문제로 보면서²⁾ 金日成 主體思想 하에서 수령의 唯一的 領導를 강조하는 북한 정치체제가 金日成 死後에 중대한 정치적 변화를 겪으리라는 것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政體의 창립자이고 소위 北韓式 社會主義의 건설자로서 “正統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가 처한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後繼者는 그 權力과 “正統性” 모두를 한꺼번에 계승할 수는 없으며, 정통성 또는 권위를 확립하고 안정된 권력을 유지하

1) Robert C. Tucker, *Politics as Leadership*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1), 27-30. 지도자들이 구조적 조건을 무시하고 독립적으로 역사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지도자들의 능력에 따라 변화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324.

기 위해서는 당면한 對內外的 問題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北韓이 懸案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強硬保守와 過激改革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그 政策性向은 金日成 死後 權力承繼를 둘러싼 투쟁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權力承繼政治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앞으로 북한정치체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南北韓關係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내는 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북한의 권력승계문제는 1970년대부터 주요한 북한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1973년 9월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中央委員會 조직·선전담당秘書로 임명되어 김일성의 後繼者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후 1993년 4월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 취임할 때까지 많은 연구들은 金日成-金正日 父子世襲體制의 확립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왔으며, 일반적으로 金正日의 權力承繼가 확실시되고 있으나 장기적 집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다. 기존 연구들간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金正日의 授權期間에 대한 것으로서, 金正日의 世襲承繼가 일단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긍정적 회의론”과, 金正日의 世襲承繼는 일시적 혹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集團指導體制가 등장하여 새로운 實權者가 부상하리라고 예측하는 “부정적 회의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³⁾ 요컨대, 기존의 연구들은 金日成-金正日의 승계체제의 성공여부에 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단 金正日의 世襲承繼 자체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權力承繼 문제가 金正日의 世襲承繼로 安定化되었다는 일반적 관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최근 金正日是 黨·國家·軍의 동치영역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는 사실상 首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金日成이 점직하고 있는 국가주석과 노동당 총비서직의 계승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權力承繼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두개의 최고직 移讓時期만이 문제라고 보는 것은⁴⁾ 지도자 교체문제에 대해 制度化되지 못한 政治體制--특히 共產主義體制--의 權力承

3) 이러한 기존 연구의 분류에 대해서는, 梁性喆, 『北韓政治論』 (서울: 박영사, 1991), 206-11.

4) 예를 들면, 鄭用吉, “北韓의 權力承繼와 體制改革의 상관성,” 『地域研究論叢』, 제4집 (1992): 171-94.

繼問題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金日成-金正日 父子世襲體制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權力承繼問題는 아직 完結되지 않았으며, 金正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안정된 권력을 장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본 연구는 金正日의 權力世襲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金日成 死後 또는 無力化에 따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권력투쟁과정에서 金正日은 政敵들의 투쟁대상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指導體制--集團指導體制--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새로운 지도자는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킬 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前提하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주요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인 權力承繼問題를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視覺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북한의 權力承繼問題를 權力鬭爭과 政策對決의 두 측면에서 연구분석하여 權力承繼와 政策變化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金日成 死後의 북한체제 및 정책변화의 가능성과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셋째, 이와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여 對北韓政策 및 統一政策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은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북한의 權力承繼研究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수행될 것이다.

북한의 權力承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金正日의 權力構築過程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靜態的 分析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權力承繼가 “不確實性和 不可豫測性을 안고 있는 과정”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며, 보다 動態的이고 體系的인 분석을하고자 한다. 權力承繼問題--특히 共產主義體制하에서의--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틀을 北韓 政治體制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연구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權力承繼 過程은 어느 시점에서 後繼者가 결정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後繼者가 궁극적으로 前任者와 유사한 權力과 權威를 獲得하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承繼는 集團指導體制의 形成이나 後繼者의 制限的인 權力과 權威의 構築으로 終結지게 된다.⁶⁾ 이때의 權力과 權威는 後繼者의 職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5)梁性喆, 『北韓政治論』, 213.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⁴⁹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체제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사들을 격리 수용하는 독재대상구역이 지난 1982년 4월에는 8개지역에 약 10만 5천명이었는데, 1990년 1월에는 12개 지역에 약 15만 2천명이 수용된 것으로 보아 그만큼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⁵⁰

뿐만 아니라 김정일체제에로의 권력이행에 반대하는 세력과 북한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면, 김정일에로의 권력이행작업을 공식화한 제6차 당대회 직후인 1982년 7월 24일자 로동신문을 통해서 기존의 당조직들과 김정일이 지도하는 3대혁명소조들간의 알력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당면과제」라는 논문을 통하여 당내의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 당과 인민과의 연계강화, 만연된 관료주의의 시정, 자본주의와 결탁한 내부반항의 존재 등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의 최근보도에 의하면 북한 평양방송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과거 항일혁명전통과 관계없는 것을 들고 나와 혼입시키려하는 불순 이색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그 순결성을 단연코 옹호했다”고 한다.⁵¹ 이는 김정일 반대세력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 경제문제와 정보

앞에서 분단직후 북한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계급없는 사회를 달성했느냐에 있다. 질라스(M. Djilas)가 고발한 ‘새로운 계급’⁵²의 대두는 유고의 고유한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주의 일반의 문제이다. 우선 북한의 사회통제정책의 일환으

49 김승채, “북한체제의 유지능력에 관한 연구” 『북한. 통일연구논문집(III)』 통일원, 1991 참조.

50 <서울신문> 1990년 1월 18일자.

51 <중앙일보> 1992년 2월 14일자.

52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New York: Praeger, 1957.

투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金正日の 權力承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여주는 경우는 金日成이 早期承繼를 계획하는 경우이다. 北韓에서 金日成의 존재는 權力承繼鬭爭을 견제하고 완화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早期承繼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최고지도자의 權力의 範圍와 任期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共產主義體制하에서 최고지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포기한 사례는 없다.⁸⁾ 그리고 金日成이 공식적인 職位를 早期移讓한다 하더라도 후견인 또는 섭정인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실질적인 權力承繼가 아닐 뿐 아니라 권력의 屬性상 父子間의 세력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權力承繼問題는 한층 더 복잡화될 가능성이 높다.

金正日이 權力承繼에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현재의 準수령적 권력을 사용하여 스스로 北韓의 對內外的 問題들을 해결함으로써 權威를 확보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在職 최고지도자는 과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축적되기 마련이며, 권력엘리트들은 權力承繼時 축적된 문제해결을 둘러싸고 정책적 갈등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後繼者는 政策決定을 主導하여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구축하여야 한다.⁹⁾ 그러나 金正日은 아직 指導者로서의 資質과 政策能力을 뚜렷이 과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적된 문제의 해결은 기존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主體思想과 자신의 權力基盤을 변화 및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발적인 과격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식적 權力移讓을 前後한 기간동안에 金正日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만한 展望을 보이지 못한다면 權力繼承者로서의 金正日의 地位는 도전받게 될 것이며, 北韓의 권력엘리트들은 政策的 代案을 둘러싸고 論爭을 벌이게 될 것이다.

北韓 權力承繼 鬭爭段階에서는 政策主導權에 대한 葛藤이 權力鬭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金正日을 포함한 革命世代, 軍部, 技術官僚集團 등이 政策路線을 놓고 政治的 聯合과 葛藤을 반복하며 權力鬭爭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이때 金正日의 後見에 의해 새

8) 舊소련의 고르바초프와 폴란드의 야루젤스키 경우는 예외인 것처럼 보이나 이들은 민주화된 체제하에서 권력의 범위와 임기가 결정되어 있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9) Yang, "Soviet Succession Politics," 14.

로이 등장한 지도자들이 분열하여 金正日의 敵對勢力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權力鬭爭에 金正日의 親·姻戚들도 가담하게 될 것이며, 世襲後繼體制하에서는 이들의 갈등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될지도 모른다.¹⁰⁾ 權力承繼를 둘러싼 分派간의 權力鬭爭은 단순히 權力을 담보로 한 투쟁이 아니라 구체적인 政策對決로 나타날 것이며, 북한의 당면과제를 고려하면 北韓體制的 性格과 方向에 대한 保守-改革勢力간의 대결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政策對決은 主體思想과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해석과 평가문제를 중심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權力承繼를 위한 權力 및 政策的 葛藤은 長期化되고 體制安定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權力承繼鬭爭은 金正日의 一人獨裁보다는 反金正日 聯合形態를 띤 集團指導體制的 形成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權力은 소수 지도자들에 의하여 分占되며, 主要政策決定은 合意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集團指導體制는 代表者格인 集團指導者 중의 第一人者(primus inter pares)를 선출할 것이며, 第一人者는 聯合勢力간의 葛藤을 仲裁하고, 人事 및 政策 수행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實權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¹¹⁾ 金正日是 그동안 北韓이 개발해온 後繼者論 등으로 인해 集團指導體制的 形成에서 배제될 것이다. 金日成 死後의 承繼者는 權力鬭爭으로 인한 分派간의 葛藤을 統合할 수 있는 力量을 지닌 者가 될 것이며, 金日成의 權限보다는 상당히 축소되고 제한된 權力과 權威를 行使하게 될 것이다. 이때의 統合者(synthesizer), 즉 後繼者는 초기에 과격개혁보다는 온건개혁을 주창하여 북한 權力構造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다.¹²⁾ 그러나 북한체제의 근본적 모순은 개혁정책의 과격화를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된다. 權力承繼者가 과격개혁을 거부하면 失權할 가능성이 있으며, 과격개혁을 수용하게 되면 북한체제는 근본적인 변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視覺과 分析를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먼저 金正日의 權力

10) 金正日의 이복동생인 金平一이 反金正日 勢力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로는, 柳永玉, “북한 권력승계의 변수, 金平一,” 『北韓』 (1991년 7월): 84-97.

11) 權力承繼 過程에서 나타나는 寡頭體制的 특징과 집단지도자중의 第一人者의 役割에 대해서는, Yang, “Soviet Succession Politics,” 67-79.

12) 權力承繼시 指導者들은 權力擴張과 政策 主導를 위하여 分派를 형성하고 변화를 추구하게 되며, 이때 保守-改革의 中道派보다는 온건변화 추구파가 다수 지지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Ibid., 23-4.

承繼를 위한 制度化過程을 權力構造와 權力承繼裝置, 權力承繼를 위한 地位, 權力承繼 이데올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金日成 死後에 일어날 權力承繼 鬭爭段階를 北韓 指導層에 대한 構造的 分析을 통하여 그 결과를 전망한다. 그리고 이러한 權力承繼政治가 北韓의 體制 및 政策變化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고, 끝으로 政策的 代案을 提示 하고자 한다.

제2장 權力承繼의 制度化問題

제1절 權力承繼의 制度的 裝置

일반적으로 共產主義國家에서의 최고지도자 교체문제를 권력승계의 “危機”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權力移轉을 위한 헌법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比較論的 視覺에서 본다면 舊소련을 비롯한 社會主義國家들이 헌법적·제도적 권력승계 절차를 가지고 있는 第三世界の 국가들보다 훨씬 더 안정된 권력승계과정을 밟아왔다.¹³⁾ 第三世界가 빈번한 쿠데타나 變則的 정권교체를 경험해온 사실을 고려한다면, 법적·제도적 權力承繼 節次의 有無보다는 權力承繼의 機能的 手段을 規則化할 수 있는 成熟度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舊소련의 경우 法과 規則의 遵守라는 면에서는 그 成熟度가 낮으나, 수차례의 權力承繼過程을 경험하면서 權力承繼裝置를 안정화하고 지도자교체에 따른 危機를 감소시켰다.¹⁴⁾

北韓의 權力承繼는 父子世襲을 목표로 하고 최고지도자 職位에 대한 법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第三世界와 유사점이 있는 반면, 權力構造와 政治組織면에서는 共產主義 權力承繼와 같은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金日成 死後 權力承繼에 따른 위기의 정도는 적어도 레닌이나 마오쩌둥의 사후에 있었던 위기수준을 능가하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후자의 두 경우는 權力承繼 당시 革命世代들이 여전히 權力의 核心을 형성하여 安定要因으로 작용하였으나, 북한의 경우는 북한정권 수립후 45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고 북한체제에서의 金日成의 비중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요인이 상대적으로 거의 존재

13)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2nd ed. (Boston: Little, Brown, 1978), 126-30.

14) 권력승계 과정을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파악한 논의로는, Yang, “Soviet Succession Politics,” 12; T. H. Rigby, “The Soviet Leadership: Toward a Self-Stabilizing Oligarchy?,” *Soviet Studies* 22, no. 2 (October 1970): 167-91.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偶像化와 神格化過程을 거친 金日成의 죽음 그리고 반세기에 가까운 장기집권 이후의 최초의 정권교체는 아무리 金正日 世襲承繼가 완성단계에 있다고 해도 그 충격을 감당하기에는 미흡할 것이다. 물론, 위대한 지도자의 상실에 따른 體制危機 意識이 기존 체제의 수호라는 안정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 자명해진다.

북한에서의 權力承繼는 북한정치의 核心權力機關에 대한 統治權限을 移轉받으면서 시작된다. 北韓은 국가의 최고직위에 관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는 비교적 상세히 그리고 일찍이 法制化하였다. 정권수립 초기에 북한은 국가조직과 운영면에서 소비에트모형을 받아들였다. 소위 黨·國家 體制는 조직편성상 二元的 構造였을 뿐이고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당이 全權的 統治를 행사하는 一黨支配의 형태였다. 黨員이 각급 행정기관장직을 겸임하고 임명하는 人的 統制와 더불어 각급 당조직이 해당 수준의 국가기관을 지휘감독하는 行政的 統制를 함으로써 당과 국가가 융합되는 一元的 支配體制를 구축하였던 것이다.¹⁵⁾ 당에 의한 統制行政體制는 다시 소수의 지배집단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스탈린 치하에서와 같은 個人崇拜에 의한 一人支配體制가 北韓에서도 형성되었다. 소련은 스탈린 사후 集團指導體制 형태로 되돌아간 반면에, 북한은 1972년 헌법인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함으로써 法的·制度的으로 金日成 唯一體制를 공식화하고 강화하였다.

1972년 사회주의헌법은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하여 당과 국가 그리고 개인들의 유일한 行爲準則으로 삼았다. 즉, 金日成 자신이 주창한 政策과 個人思想을 국가의 목표와 지도이념으로 헌법에 명문화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헌법은 金日成의 역할과 지위에 헌법상의 근거를 부여하여 제도화하여 그의 실질적 권한과 법적 지위를 통합하였다.¹⁶⁾ 당총비서와 수상직을 겸임하던 김일성은 國家主席制를 신설하여 수상직보다는 훨씬 격상된 國家主席에 취임하였다. 이 헌법에서 主席은 국가수반으로서 軍統수권을 행사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15) 소련공산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Ronald J. Hill and Peter Frank, *The Soviet Communist Party*, 3rd ed. (Boston: Allen & Unwin, 1986).

16) 김운용, “북한의 헌법이론과 통치제도,” 『북한학보』, 제2집 (1978): 98.

을 겸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主席이 ‘수위’로서 직접 지휘, 감독, 통제하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의 對內外 政策 수립과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 指導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편, 내각은 정무원으로 개칭되어 단순한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격하되었다.

北韓의 權力構造는 金日成 개인에게 모든 통치의 권한과 기능이 집결되는 이른바 수령의 唯一的 領導體制로서 수령·黨·國家의 三位一體 통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수령론에 입각한 金日成 一人支配體制는 김일성의 政敵들이 제거된 1960년대 초부터 이루어져왔으며, 주체사상이 유일적 사상체제로 정립되는 1970년이후부터 북한은 사실상 변질된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여왔다. 수령은 당의 최고 영도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총체를 영도하는 최고뇌수이며 당과 대중을 통일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¹⁷⁾이라는 주장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범주를 기본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金日成은 스스로 당총비서, 국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수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차지하여 北韓體制를 지탱하는 3대 권력기관인 黨, 國家, 軍을 장악하였다. 요컨대, 북한은 수령중심적 당·국가체제로서 수령의 절대적 영도하에 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대중이 위치하고 있는 정치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權力構造는 權力承繼를 위하여 차지하여야 할 職位를 구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金日成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령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도적으로는 당, 국가, 군의 최고직을 장악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金正日이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하고 1993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것은 權力承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한은 金正日의 부분적 權力承繼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改定하였다. 개정헌법은 중앙인민위원회에 속해 있던 국방위원회를 분리·격상하여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제111조)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제113조)고 규정하였다.¹⁸⁾ 그리고 주석의 군통수권을 명기하는 1972년 헌법의 제6장 93

17)『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196.

18)북한은 개정헌법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한국 당국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개정헌법 全文에 대해서는 統一院, “북한의 개정헌법 分析 및 全文,”

조를 삭제하였다. 개정헌법은 金正日의 군통수권 장악을 法的으로 정당화한 것 이외에도 유일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의 위상정립, 최고권력기관의 재편,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개방 조항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92년 改定憲法은 북한의 對內外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특히 金正日의 권력승계를 위한 法的 制度的 裝置를 공고히 하고 있다. 개정헌법 제3조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배제하고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동구 및 소련의 붕괴에 따라 실득력을 상실한 기존 사회주의이론과의 단절을 통하여 체제를 수호하려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건설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노동당 규약 前文에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규정한 것을 추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 당대회에서 金正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고, 金正日이 主體思想의 체계와 원리·방법을 발전시켜 “김일성주의”를 정식화하였다는 주장을 고려하면,¹⁹⁾ 이러한 개정헌법은 김정일 지도노선의 법적 정통화 노력을 반영한다. 즉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창시자,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구현자”라는 이데올로기적 지도노선의 계승을 정당화시킨 것이다.

改定憲法은 김정일의 思想的 繼承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이 상징이었던 “천리마운동”에 관한 기존 헌법조항 대신 “청산리방법”을 넣고(제13조), 김정일이 주창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제14조)을 삽입시켰다.²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金正日의 權力承繼 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1973년에 시작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1975년부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대중운동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지도하는 운동으로 1980년 제6차 당대회때 이미 천리마운동을 대체하였었다.²¹⁾

『月刊 北韓動向』(1992. 11).

1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0) 統一院, “북한의 개정헌법 分析 및 全文,” 71-2.

이러한 憲法改定은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金日成-金正日 世襲體制가 완성단계에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또 다른 측면을 암시해주고 있기도 하다. 만일 가까운 장래에 金日成이 權力移讓을 계획하였다면 굳이 주석과 군통수권을 헌법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었다.²²⁾ 주석이 자동적으로 겸직하게 되어 있는 군통수권을 국방위원회를 분리격상시켜 金正日에게 이양하였다는 것은 主席의 권한 감소와 金正日의 후계구도 강화라는 측면도 있으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金日成이 당분간은 主席職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측면도 있다. 또한 개정헌법은 주석,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1990년에 선출된 이들의 임기가 1995년까지 연장되도록 하였다. 결국 金日成은 金正日의 후계구도를 강화시키면서도 자신의 임기는 법적으로 1년 더 연장시킴으로써 早期承繼를 가능한 한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헌법개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으나 일단 이러한 조치는 실질적이고도 상징적인 최고직위를 적어도 당분간 계속 유지하려는 김일성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北韓의 실질적 權力承繼는 金日成이 겸임하고 있는 國家主席과 노동당 總秘書 자리를 이양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개정헌법은 국가주석의 권한을 법적으로 축소하였으나, 통치의 상징과 카리스마를 표상하는 주석직은 권력승계과정에서 후계자가 차지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직책중의 하나이다. 헌법상 주석은 과거의 국가주권 대표로부터 단순한 국가대표로 바뀌어 규정되었다. 그리고, 주석은 군통수권 및 국방위원회 인사권을 이양하고 조약비준과 폐기권 대신 공포권을 가지며, 중앙인민위원회에 대한 주석의 직접 지도권이 삭제되는 등, 국가원수로서의 절대적 권력행사권이 과거보다는 축소되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가 主席을 선거하고 소환할 수 있도록 하여(제91조 5항), 최고인민회의에 주석 소환권을 새로이 부여하였다. 따라서 헌법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가 주석의 선출 및 소환 권한을 가짐으

21)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內外通信』, 종합판 32호: 22.

22)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李明哲·車斗鉉, “7次 改定憲法을 中心으로 본 北韓權力變動展望,” 『國防論集』, 제21호 (1993년 봄): 139-56.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분리는 김일성이 주석직을 내놓더라도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그대로 고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후견적 역할을 하리라는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다.

로써 主席職 承繼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國家主席의 권력승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최고인민회의로서, 최고인민회의는 임기5년의 연임제한 없는 주석을 선출할 권한을 갖고 있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의 9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주석으로 재추대되었으므로 다음번 주석선거는 1995년 5월경일 것이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일 뿐이지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형식적인 주인기관에 불과하다. 앞의 논의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최고인민회의의 결의사항들은 대체로 노동당의 노선과 결정에 법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의 결정은 참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 헌법의 수정 및 채택은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되어 있으나, 안건통과는 예외없이 全員會議로 이루어짐으로써 대의원들은 “완전한 거수기” 역할만을 한다.²³⁾ 현재 687명으로 구성된 대의원의 대부분이 노동당 중앙위원이며, 노동당 중앙위원이 아닌 경우에도 모두가 노동당원들이다. 따라서, 主席選出問題 역시 黨에 의하여 사전 결정될 것이며, 결국 金日成의 의사에 따라 계승자가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金日成이 早期承繼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승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北韓의 權力構造상 가장 실질적인 권력승계는 노동당 總秘書職의 이양이다. 「조선로동당 규약」 제24조는 당중앙위원회가 총비서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비서의 권한과 임기를 별도로 규정해놓지 않음으로써 후계자의 선출시기와 권한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매우 간헐적으로 열리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사업을 관장하는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²⁴⁾ 중앙위원회는 6개월에 1회이상 全員會議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145명의 정회원과 결의권이 없이 발언권만 가지는 103명의 후보위원 그리고 생산노동에 종사하는 핵심당원들 중에서 선출된 準후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위원회는 각 권력기관, 직업분야, 행정지역의 대표적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권력

23)최고인민회의에 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梁性喆, 『北韓政治論』, 37-61.

24)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2), 65-68.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규정기간에 열린 일이 한번도 없다. 1946년 8월 제1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가 열린 이후 아직까지 개최되고 있지 않다.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1년 제4차 당대회때 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는 1958년부터 당내의 “반당종파분자들을 철저히 청산”하였다고 함으로써²⁵⁾ 당조직의 구성원은 김일성 지지세력만으로 충원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중앙위원회 역시 제4차 당대회이후 김일성 계파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²⁶⁾ 總秘書의 선출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日成 死後에 총비서를 선출하게 된다면 이를 둘러싼 분파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총비서 선출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할 기관은 북한정치권의 최고핵심기관인 정치국과 비서국으로 보인다. 정치국은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사이에 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사실상의 最高核心部署이다. 정치국은 3명의 상무위원회(김일성, 김정일, 오진우)와 9명의 위원, 그리고 11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⁷⁾ 비서국은 간부인사문제 및 중앙위원회의 각 부서를 지휘 감독하는 당의 중추기관이다. 비서국은 총비서와 김정일을 포함한 14명의 비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總秘書의 선출과정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정치국의 후보지명 결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金正日 후계체제하에서는 金正日의 총비서 승계가 당연시되나 金日成 死後에는 이러한 계승절차가 간단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 金正日이 최고권력자들로 구성된 정치국, 비서국, 중앙위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 承繼構圖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권력승계를 위한 職位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당군사위원회 위원장의 자리이다. 1992년 改定憲法은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에 있었던 국방위원회를 분리시키는 등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과거 20년간 주석중심 통치하의 보조기구 및 원로회의로서 권력을 지녔던 중앙인민위원회의 권력기능이 쇠퇴한 경향이 있다. 金日成을 수위로 하여 16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인민위원회는 위원들의 대부분이 정치국 위원이나 비서, 정무원의 총리나 부총리와 같은 당·정의 고위간부직을 겸하고 있어서 黨·政 協議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90년 제9기 1

25)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183-8.

26)중앙위원회 분파별 구성에 관해서는, 梁性喆, 『北韓政治論』, 73-5.

27)조선노동당 기구표에 대해서는, 통일원, 『'92 북한개요』, 64.

차 최고인민회의는 중앙인민위원회에 도(직할시)당 책임비서 및 인민위원회 위원장 전원을 선임하였다.²⁸⁾ 2명의 副主席직을 비롯한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직은 권력승계를 위한 결정적 직위는 아니나 예비적 권력승계 또는 권력승계후 경쟁자간의 權力分占을 위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金日成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인계하면서도 당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이양하지 않은 것은 이 직위가 실질적인 軍事統制權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의 각급 부대에 설치된 당조직을 통괄하는 군사부문의 黨 최고정책결정기구이다. 소위 당의 對군부 우위성 및 군부통제 원칙을 실행하는 기관의 대표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은 권력승계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직위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수령이 권위된 상태하에서의 북한 권력구조를 고려한다면 總秘書, 國家主席, 그리고 다음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직이 권력승계를 위한 중요한 직책이라고 하겠다. 舊소련에서의 권력승계는 후계자가 서기장, 대통령, 당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三冠王”을 차지하면서 매듭을 짓게 되어 있었다.²⁹⁾ 북한에서의 권력승계 역시 이와 유사한 위의 세 직책을 둘러싼 三冠王 계승이 권력승계를 마무리짓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權力承繼를 위한 制度的 裝置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도 시험이 안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권력승계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권력승계 자체가 북한정권 수립후 최초로 경험하는 것일 뿐 아니라 金日成이 북한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대를 이을만한 적절한 계승자가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뿐 아니라 북한체제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심각한 문제들은 金日成 死後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노선에 대한 갈등이 새로운 분파 형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法的·制度的 權力承繼 裝置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金正日이 世襲承繼를 견고하게 구축해왔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의 권력승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권력승계과정의 복잡성을 간과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는 이미 法的·制度的 體系에 대한 수단적 이용 또는 경시풍조를 너무나 많이 보여왔다.

28)위의책, 85.

29)Yang, "Soviet Succession Politics,"

그리고 북한의 권력승계는 위에서 열거한 직위의 계승만으로 끝나지만은 않을 것이다.

제2절 權力承繼를 위한 地位

강력한 一人支配體制하에서의 권력승계는 단순한 공식적 지위의 계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산주의국가의 권력승계과정에서 후계자들은 體制의 창설자에 버금가는 權威를 획득하려고 하는 일반적 특징을 보인다. 개인과 소수집단이 지배하는 權威主義體制하에서는 정치권력의 구조가 지도자의 의도와 능력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공식적 직함이 주는 권력 이상의 權威를 추구하게 된다. 舊소련의 경우를 보면 레닌의 모든 후계자들은 자신이야말로 레닌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권력행사와 정책노력의 정당성을 레닌의 權威에서 찾았다.³⁰⁾ 특히 북한에서와 같이 金日成이 偶像化되고 神格화된 체제하에서 성공적인 權力承繼를 이루기 위해서는 金日成과 유사한 權威를 획득하여야만 한다. 만일 개인이 이러한 권위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集團指導體制가 이를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의 權威繼承 없는 단순한 職位繼承은 경쟁자로부터의 도전으로 인해 안정된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추진해온 金日成-金正日 父子世襲體制의 구축과정은 金正日의 공식적 職位의 격상과 함께 金日成 후계자로서의 權威획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도자적 권위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解釋權과 政策活動을 통해서 형성된다. 金正日 역시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권을 장악하고, 각종 정책활동을 통하여 後繼者로서의 正統性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북한의 權力承繼 過程이 다른 국가의 경우와 다른 독특성은 金正日이 권력승계를 완결하기 이전부터 前任者, 즉 金日成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개인 숭배·우상화를 이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후계자가 지나치게 자

30)Ibid., 79-87.

신의 권력과 권위를 구축하면 견제 또는 제거되는데 반해³¹⁾ 북한의 경우는 아버지가 후견적 역할을 하면서 父子世襲의 권력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73년 9월 제5차 黨중앙위원회 全員會議에서 金正日을 당 조직·선전담당비서로 임명하면서 후계자로 등장시켰고, 그와 동시에 김정일을 주체사상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이념체계로 만든 탁월한 이론가 및 사상가로 부각시켜왔다. 金日成은 자신이 독점하고 있던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金正日에게 이양하고 金正日에게 주체사상을 金日成主義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북한은 金正日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키려는 생각을 1970년부터 가졌으며, 1974년 2월 당사상사업일군 강습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이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金日成主義를 정식화하였다고 주장한다.³²⁾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당비서국 2위, 군사위원회 3위, 정치국 4위로 부상되면서 후계자로 공식지명된 후, 북한은 주체사상을 “현시대 로동계급의 영생불멸의 지도리념”이라고 더욱 강조하면서 金正日이 그 체계와 원리 및 방법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 金正日是 1982년 소위 주체사상에 관하여 가장 권위있다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긴 논문을 발표하였고³³⁾ 1985년에는 북한주민 사상교양 교재용으로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全10권을 발간하였다.³⁴⁾ 이것은 주체사상을 총괄적으로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라고 주장되고 있다.

通治이데올로기에 대한 有權的 解釋이 金正日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됨으로써, 북한의 다른 지도자들은 이에 어긋나는 일체의 思想적 要素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金日成 父子의 연설문, 저작집, 교시 등은 모두 주체사상으로 취급되고, 이것은 父子의 우상화와 독재체제를 유지하

31) 1인 독재자는 후계자의 지나친 권력구축을 우려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경쟁적 후계자를 양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Myron Rush,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passim.

3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서울: 문우사, 1988), 133-48.

33)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이 논문은 1982년 3월 31일 김일성의 70회 생일기념 전국 주체사상 토론회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상위의 사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34) 1985년 조선노동당 창건 40주년을 기념하여 총3,250여쪽에 달하는 전10권의 총서가 발간되었는데, 주체의 사상(1-3권), 이론(4-8권), 방법(9-10권)의 전체계를 포괄하고 있다.

기 위한 지도치침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東歐와 舊소련지역에서 사회주의 정권의 몰락은 金日成 父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체제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게 만들었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 아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인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여 왔다.³⁵⁾ 金日成은 당과 인민대중을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보고 그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승리를 장담하였다.³⁶⁾ 김정일은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며,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라고 규정하였다.³⁷⁾ 金日成 父子는 동구의 多元主義的 변화가 북한사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역설하며, 東歐사회주의의 좌절은 주체사상과 金日成 父子와 같은 위대한 사상과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통치이데올로기의 정의, 해석, 발전에 관한 獨占的 地位와 더불어 金正日에 대한 호칭도 격상되었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을 보면 김일성이 1974년 “당중앙”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다.³⁸⁾ 그 이전에 당지도부가 단순히 당, 당 중앙위원회, 당 정치국 등으로 불리던 것을 고려하면 “당중앙”은 김정일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김정일을 서서히 부각시키기 위하여 3인칭 단수를 사용한 것이다. 1975년 말부터는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 “아버지 수령님과 당중앙”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75년 6월부터는 “유일한 지도자”, 1977년부터는 “영명하신 지도자”, “존경하는 지도자”, “경애하는 지도자”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1980년 金正日의 後繼가 공식화되자 김정일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사어도 격상되어 1981년 6월부터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1983년에는 “영도자”, “최고사령관” 등으로 불

35) 예를 들면 고헌천, “우리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제 570호 (1989년 10월): 15 - 20.

36) 1991년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

37) 1991년 5월 5일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행한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1년 5월 27일.

38) 김일성은 1974년 7월 31일 당조직일군강습참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75년, 95.

리우고 1986년부터는 “인민의 아버지”로 호칭되기도 하였다. 1987년 11월부터 북한의 언론은 구호나무의 발견에 따라 김정일을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로 호칭하였다. 해방전 김일성 지도하의 抗日戰士들이 抗日포어를 새겼다는 구호나무중에는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 그 태양빛 이어갈 백두 광명성”이라고 새긴 것도 있어서 김정일을 “백두 광명성”으로 표현하고 수령의 후계자임을 교양하기도 하였다.³⁹⁾

金正日에 대한 이와 같은 호칭은 金日成과 같은 수준의 개인숭배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1988년 김정일의 46회 생일때에는 金日成花를 모방하여 金正日花를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김정일 출생지로 선전되고 있는 백두산 밀영을 안을 듯이 솟아오른 산봉우리 절벽에 “정일봉” 문자를 새기고 제막식을 가졌고, 1991년에는 김정일을 상징하는 “향도봉”도 등장하였다. 혁명투쟁의 경력이 없는 김정일의 혁명역사를 조작하기 위하여 성장지 및 현장지도 장소 등 12곳을 聖域化하고 각종 전설과 일화를 유포시켰다. 1993년 2월 16일 김정일의 51회 생일때에는 김일성이 하사한 頌詩碑를 제막하였다.⁴⁰⁾ 金正日의 생일은 1975년에 휴무일로 결정되었고, 1982년에는 정식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이틀을 공휴일로 하여 김일성 생일과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이상과 같은 金正日의 이데올로기 통제권과 각종 상징조작을 통한 地位 구축과정을 요약하면 북한에서의 權力承繼는 본질적으로 수령승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金正日은 수령의 영도적 地位와 權限을 목표로 계승준비를 하고 있다. 金正日은 1984년부터 김일성에 이어 黨서열 2위의 지위로 부상한 이래 1990년 5월 중앙인민위원회 산하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지위에 올랐으며,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었다. 金正日은 1992년 4월에 원수의 칭호를 받은 후, 1993년 4월 중앙위원회로부터 분리격상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권력승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軍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金正日은 조선노동당 정치국,

39) 구호나무의 발견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스즈키 마사유키, “金正日의 指導力과 政策展望: 구호나무 「발견」과 그 교양사업의 전개를 중심으로,” 『安保研究』, 제23호 (1993): 75-97. 1988년 12월에는 김일성, 김정숙 그리고 김정일에 관한 “3대통은 만만세” 등의 구호나무가 발견되었다.

40) 金正日頌詩는 김일성이 김정일 50회 생일때 하사한 것으로 金正日의 지도자적 자질을 찬양하고 권력승계를 암시한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로동신문>, 1992년 4월 27일.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에 각각 김일성 다음의 서열2위를 기록하고, 정부기관에서 국방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인 권력후계자로서의 地位를 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력후계자로서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수령의 地位와 役酬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수령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적 정통성과 직위의 계승 이외에도 政策的 業績을 통한 실질적인 지도력을 과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수령으로서의 金日成의 절대적 地位는 개인숭배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北韓의 사회주의 건설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金正日이 마지막 남은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직을 승계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金日成이 지니고 있는 수령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승계받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제3절 主體思想과 權力承繼 이데올로기

주체사상은 金正日 後繼體制의 구축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되었다. 김정일이 지명되기 위해서는 黨內에 주체사상이 唯一思想으로 확립되고 이에 따른 黨의 唯一指導體制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1967년 5월의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全員會議은 黨의 유일사상체계를 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김정일이 黨內的 부르조아 및 수정주의 反黨反革命的 策동을 분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⁴¹⁾ 이때에 金正日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唯一思想體系를 세운다는 명분하에 金日成의 지도력에 반발하던 종파분자들을 제거하고 김일성(수령)과 김정일(당중앙)을 중심으로 하는 唯一指導體制를 확립하였다. 1974년 2월 당강령으로 제시된 金日成主義化를 관철하기 위하여 金正日은 4월 “黨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大原則”을 제시하고 金日成 唯一支配體制를 확고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⁴²⁾ 한편, 金日成은 7월 黨의 유

41)『조선전사』 31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2), 28.

42)10대원칙의 주요내용은 김일성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시키는 것,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권위의 절대화, 김일성교시의 무조건성 원칙, 수령을 중심으로 黨의 사상 의지를 통일시키고 혁명적 단결을 이루는 것,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밑에 全黨·全軍의 강한 조직화, 김일성 혁명위엄의 대를 이은 계승과 완성 등이다. 10대원칙의 全文에 대해서는 李命英, 『統一의 條件』 (서울: 종로서적, 1989), 59 - 65.

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당중앙(김정일)의 유일적 지도”하에 全黨이 全一的인 조직체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⁴³⁾

이와 같은 당의 唯一思想體系 확립은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두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金正日이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에 기반을 둔 당의 唯一思想體系를 확립하는 주된 임무를 관장하게 됨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의 해석과 발전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김정일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둘째, 주체사상을 “영구불변의 진리”로 격상시키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격하시키면서 북한공산주의만이 시도하고 있는 世襲後繼體制의 구축을 정당화하였다. 과거 김일성이 “주체”를 내세워 반대파를 숙청하고 개인독재체제를 수립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후계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金正日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완전히 一元化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엄중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자신의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조직적인 권력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金日成-金正日 世襲體制를 위한 權力承繼 이데올로기는 首領論과 後繼者論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체사상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인 수령론에서는 김일성이 혁명에 있어서 유일한 수령이며,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지도를 받아야 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주체확립에서 핵심이 된다고 강조한다. “수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북한 문헌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최고 령도자 수령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창건하고 당의 혁명전통과 당의 지도자상을 창조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총체를 령도하는 최고뇌수이며, 전당과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다.”⁴⁴⁾ 즉 金日成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서 그리고 “당과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것이다.

金正日은 이러한 수령론에 덧붙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개념을 제

43) 김일성, “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제7권, 82.

44) 『조선 문화어 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544.

시하였다. 1986년 김정일은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밑에 수령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며, 이로써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⁴⁵⁾ 다시 말해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 이三者는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金正日은 이 이론에서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 인민대중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담당자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이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인간의 생명을 有限한 육체적 생명과 無限한 사회정치적 생명으로 나눔으로써 수령에 의해 창시되고 발전된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할 후계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後繼者論은 혁명위업은 수령의 영도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지만 혁명위업은 수령의 代에 완성될 수 없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수령의 역할을 이어받아 혁명위업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다. 따라서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혁명위업과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고수하며 계승발전시켜 완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혁명의 주체-수령·당·대중의 통일체-를 부단히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⁴⁶⁾ 이러한 후계자의 지위는 두단계로 구분되어진다. 수령보좌를 통해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하는 修行時期와 수령의 위업을 이어받아 완성하는 繼承時期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金正日이 수령에 의해 후계자로 결정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단계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後繼者論은 金日成이 혁명전통을 옹계 계승하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는 것을 후계계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혁명계승과 혁명전통의 순결성 유지를 위하여 북한은 “혈통”계승론을 내세우고 있다. 後繼者論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金正日의 권력세습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이 이론은 “혈통”이라는 개념을 각색하여 사용하고 있다.

45)金正日,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3-19.

46)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1988), 31-4. 郭承志, “北韓의 後繼者論과 權力繼承過程,” 『安保研究』, 제23호 (1993): 47에서 재인용.

소위 “혈통”이란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 그리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며 수령식 사업방식”을 의미한다고 한다.⁴⁷⁾ 혈통의 개념은 “당의 전통”, “주체의 혈통” 등으로 사용되는데,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객관화된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後繼者는 수령의 통치이념과 통치방식을 계승하되 그 순결성 보장을 당과 수령의 운명을 지키는 근본문제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혈통계승론은 주체의 순결성을 강조함으로써 “불순한” 內外的 사상조류 및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金正日의 수령계승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세습적인 핏줄의 계승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혈통”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정치질서하에서의 세습승계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1971년 후계자 문제를 처음 거론하면서 혁명의 계속에 따른 世代交替의 문제를 논하였다. 金正日을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이는 世代交替論은 혈통계승론을 보완하여 後繼者論을 구성하고 있다. 金日成은 “새 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해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갈 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⁸⁾ 이와 같은 金日成의 발언은 당시 자신의 동생인 金英柱가 後繼者로 부상되는 것에 대한 중대한 견제로서 혁명세대의 권력계승 투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金正日의 후계자 지명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75년에는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함으로써 世代交替論을 본격화하였다. 이에 덧붙여 북한은 후계자는 金日成과 동일한 指導力과 資質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위업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세련된 영도력과 덕성을 수령 옆에서 그대로 체현한 특출한 자질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⁴⁹⁾ 즉 후계자는 절대적으로 金日成의 指導力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金正日이 바로 김일성의 모든 것을 지닌 金日成의 化身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權力承繼 이데올로기는 논리성이나 합리성에 바탕을 두기 보다

47) <로동신문>, 1985년 6월 27일.

48) 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대회 연설, 『조선중앙연감』 1972년판, 19-25.

49)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수령의 뜻과 원대한 구상을 성취하는 것을 자신의 필생의 위업으로 삼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그대로 구현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수령의 위업이 빛나게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內外通信』 종합판 16호: 24.

는 金日成-金正日 世襲承繼를 정당화하기 위한 편의적 궤변에 입각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한 북한의 權力承繼 이데올로기는 金正日이 후계자로서의 地位를 확립하고 金日成 死後에 유일하게 수령직을 계승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령론은 역설적으로 金日成의 生存時에는 金正日에게 수령의 지위 이양을 제약하고 있는 논거로도 작용하고 있다.⁵⁰⁾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이므로 수령은 하나일 수밖에 없으며 수령직의 早期移讓은 수령론과 후계자론의 논리적 근거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북한에서의 權力承繼는 궁극적으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라는 것은 金日成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⁵¹⁾ 金日成이 생존하는 동안에 수령의 지위를 양도하여 無存在의 은퇴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神格化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물론 早期承繼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변용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논술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수령으로서의 권위와 실권을 죽는 날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50)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郭承志, “北韓의 後繼者論과 權力承繼 過程,” 35, 72.

51) 김일성은 “노동계급의 당건설에서 후계자문제는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근로자』, 제6호 (1986): 2-61.

제3장 權力承繼 候補對象者 分析

북한의 權力承繼에서 거론될 수 있는 후계자는 대체로 네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金正日은 현재까지 진행된 권력기반 구축과 후계자로서의 정통성 확보노력을 고려한다면 가장 유력한 승계후보자이다. 다음은 체제의 불안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軍部를 중요한 후보대상자 중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체제개혁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실질적인 정책 수행능력을 지닌 지도자집단, 즉 技術官僚집단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김정일의 親·姻戚들도 승계후보대상자로 꼽을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다른 세력과 연합하여 후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권력승계 후보대상자들의 權力基盤과 資質을 권력승계와 관련시켜 논하고, 다음 절에서는 후계자 문제를 놓고 이들 간에 벌어질 權力鬭爭 양상과 指導體制의 유형을 시나오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金正日

지난 20여년간 世襲的 後繼體制를 구축해온 金正日은 당연히 가장 강력한 승계후보자이다. 金正日은 북한정치권력의 三大기둥인 黨, 國家, 軍部에서 권력기반을 다져왔으며, 명실공히 통치자로서 역할하여 왔다. 金日成이 당총비서와 국가주석 직위를 가진 채 수령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한편, 金正日은 軍통수권을 장악하고 통치영역 전반에 걸쳐 수령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金正日은 1993년 3월 8일 韓·美 합동 팀스피리트훈련에 대응한 準戰時狀態 명령을 하달하고, 국제적 핵사찰 압력에 맞서 核擴散禁止條約(NPT) 탈퇴선언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북한 언론은 金正日이 黨, 國家, 軍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위기관리능력 및 통치력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를 “민족의 아버지”, “자애로운 스승” 등으로 부름으로써 김일성과 동격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⁵²⁾

金正日の 權力承繼를 위한 가장 강력한 권력기반은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대한 핵심적인 지도체인 노동당에 있다. 김정일은 당내에서 정치국 상임위원, 비서국 제2비서(사업전반담당), 군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조직지도부장으로 黨序列 제2위로 김일성을 대신하여 정치국과 비서국을 총괄지도하고 있다. 북한에서 최고정책결정권은 당정치국 및 비서국, 정부원 상무위원(총리, 부총리)들을 포함하는 이른바 “영도핵심”에 있다. 이 영도핵심 중에서도 “핵심”은 정치국 상무위원회인데, 이는 金日成, 金正日, 吳振宇 등 3명의 상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 총리(姜成山), 부주석(李鐘玉, 朴成哲)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 최종결정권은 이들 6명에 있다고 하겠다.⁵³⁾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결정기관은 정치국 회의로서 일반적으로 國家 및 黨事業 全般의 문제라든가 經濟問題 등이 논의될 때에는 영도핵심 모두가 참여하며, 軍事, 對外, 對南問題만 논의될 때에는 정치국 위원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正日是 최고정책결정과정을 관장하는 것 이외에도 黨內에 자신을 支持하는 엘리트體制를 구축하여 왔다. 권력승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안정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要職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권력승계 후보자가 권력승계를 전후하여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주요권력기관의 반대세력을 교체하거나 그 구성원을 증가시켜 새로운 지지인물을 기용하여 반대세력을 중화시키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지지기반의 확보는 일반적으로 권력승계 이후에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나, 金正日是 金日成의 후견하에서 權力承繼의 준비단계에서 이미 이를 완성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김정일 지지자로 구성되는 대폭적인 世代交替를 단행하였다. 1970년 제5차 당대회때는 172명이었던 중앙위원회 위원이 1980년 제6차 당대회때에는 76명이 더 증가하였는데, 전체의 70.6%인 175명은 신진인물들이 선출되었다.⁵⁴⁾ 정치국 역시 총래의 16명의 정치위원회(정위원 11명, 후보위원 5명)에서 제6차 당대회때 34명의 정치국원(정위원 19명, 후보위원 15명)으로 두배이상 확대개편되었다. 백학립, 오극렬, 강성산 등 김정일의 측근세력으로 보강되었

52) “金正日の 北韓,” 37, <中央日報>, 1993년 10월 19일.

53) “金正日の 북한,” 23, <中央日報>, 1993년 6월 17일.

54) 제6차 당대회에서의 당지도부개편에 대해서는, <로동신문>, 1980년 10월 15일.

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後繼者의 權力 強化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는 권력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거나 궐위된 職位를 보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북한은 金正日을 권력의 핵심에 위치시키기 위하여 실질적 최종결정기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제6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상무위원회의 구성은 신설당시 金正日을 포함한 5인이었다. 그후 1981년에는 김정일을 서열 4위에서 2위로 승격시켰고, 1983년 이종욱이 상무위원에서 탈락되고 1984년 김일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金日成, 金正日, 吳振宇 3명만이 상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표1> 정치국 상무위원 변동상황

제6차 당대회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직후 (1981년 6월 30일)	1984년 8월부터 1993년 10월현재까지
김일성 (당, 혁)	김일성 (당, 혁)	김일성 (당, 혁) 김정일 (당) 오진우 (군, 혁)
김 일 (당, 혁)	김정일 (당)	
오진우 (군, 혁)	김 일 (당, 혁)	
김정일 (당)	오진우 (군, 혁)	
이종욱 (기)	이종욱 (기)	

* 당: 당관료, 군: 군부, 기: 기술관료, 혁: 혁명세대
 자료: 『内外通信』 종합판 제13호: 83; 제22호: 21; 통일원,
 “북한권력기구표,” 1992년 12월 31일 현재.

이와 같이 金正日을 중심으로 소수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은 정치국 위원수의 감소에서도 나타난다. 제6차 당대회이후 1992년 12월의 당 제6기 제20차 전원회의때까지 정치국 위원수가 35명에서 22명으로 감소되었다. 혁명세대 13명중 5명이 사망으로 자연도태되었고 4명이 탈락하였으며 후보위원들 중에서 1명 사망, 1명 잠적, 1명 탈락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연형묵이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정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반면, 강성산이 정위원으로 발탁되고 김달현과 김용순이 후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비서국은 당의 인사 및 일상적인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서, 북한 정치체제에서 당의 지도·통제 역할을 수행하므로 金正日 權力承繼 기반 강화에 중요한 기관이다. 이것은 金正日이 1973년 당의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비서직을 맡으면서 후계자로 부상된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1973년이후 비서국의 비서들이 교체되기 시작하였고,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제2비서로 승격하였다. 1992년 12월 현재 비서는 모두 13명으로 1970년 제5차 당대회때의 9명보다 증가되었다. 비서국이 관여하는 사업이 확장되고 세분화되어 국가에 대한 당의 통제가 확대된 것이다. 특히 공안담당이 신설되어 국가보위부장, 사회안전부장과 같은 고위 공안책임자들의 인사권을 맡게 되는 등 公安問題에 역점이 두어지면서 金正日의 통치체제는 더욱 공고히 되었다. 당비서 못지 않게 중요한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의 부장들도 金正日의 여동생부부인 張成澤, 金敬姬와 같은 측근들로 기용되고 있다. 또한 당중앙 이외에 정권 안정의 주요기반인 지방 市·道 黨책임자도 믿을만한 인물들로 포진시켰다.⁵⁵⁾

金正日은 국가기관에서는 국방위원장직을 차지하여 軍통수권을 장악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공식적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超헌법적 국가기관인 主席制를 1972년 채택하여 金日成이 金正日에게 주석직만 이양하면 국가기관의 全權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의 수령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령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이기 전에 국가의 중심기관으로서, 수령인 金日成이 있기에 黨과 政府도 존재한다고 주장된다.⁵⁶⁾ 그리고 後繼者論에서는 이와 같은 수령직은 金正日에 의해서만 계승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憲法이나 黨規約을 초월한 권력승계절차를 확립해 놓고 있다. 북한의 權力構造는 국가기관장직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黨을 통하

55) 1980년대 중반에 市·道 黨책임자가 시·도 인민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을 겸하도록 하여 지방지도체제를 일원화시켰다. 대부분의 시·도 당책임자는 金正日이 1회로 졸업한 만경대학원 1-3회 출신들로 구성되었다. “金正日의北韓,” 31, <中央日報>, 1993년 8월 13일.

56) 金昌順, “金日成의 리더십과 統治스타일,” 『北韓研究』, 제2권 제2호 (1991 여름): 148.

여 각 수준의 행정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권한은 黨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박성철과 이종욱이 맡고 있는 부주석직은 실권보다는 원로들에 대한 예우로 설치된 직위라고 할 수 있다. 국가주권의 최고지도 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는 주석의 보좌기관으로서 수령의 유일적 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1992년 改定헌법에 의해 국방위원회가 분리·독립하는 등 그 권한이 약화되었으며, 그 구성원 17명은 김일성을 수위로 하여 6명이 정치국 소속이며 나머지는 시·도 당 책임자 및 인민위원장들이다.

북한의 행정집행기관인 정무원 역시 金正日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무원 총리 姜成山은 다른 金正日 측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반종파투쟁” 때마다 金日成에게 충성을 다했으며 그 뒤엔 金正日 후계자 옹립에 앞장서 왔다.⁵⁷⁾ 정무원 부총리들도 10명중 5명은 金正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經濟官僚 출신인 姜成山이 1988년 총리직에서 물러났다가 1992년 12월에 재취임함으로써 북한의 제한적인 對外開放政策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동안 총리 및 부총리의 교체가 빈번하였고 이들이 경제관료들로 보임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제발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金正日體制는 김일성 시대보다 경제중심의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⁵⁸⁾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의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불과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대의원 15명중 10명이 당중앙위원으로 사실상 당정책의 추진기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權力承繼 過程에서 軍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많이 예상되어 왔다. 北韓軍은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뒷받침하는 집단으로서, 軍지도자들이 黨과 國家의 고위직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北韓의 權力承繼者는 반드시 軍部の 지지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金正日이 金日成으로부터 모든 직위를 승계받기 전에 軍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 金正日是 軍에서의 지도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군부대에까지 확산시켜 軍의 결속력 강화와 더불어 조직적인 통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57) “金正日의 北韓,” 32, <中央日報>, 1993년 8월 19일.

58) 金賢俊·安仁海·李宇榮,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62-3.

金正日は 빨치산 출신이자 軍실력자인 인민무력부장 吳振宇의 후견을 받아 주요 군지휘계통에 그의 추종인물을 배치하여 군부내 세력기반을 형성하였다. 軍部内の 김정일 지지세력은 빨치산 출신 및 빨치산 2세들로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⁵⁹⁾

金正日の 측근세력은 어느 부문보다 軍部에 가장 강력히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吳振宇를 비롯한 이들은 활동영역이 軍에만 머무르지 않고 김정일 父子世襲體制의 구축을 선도해 왔다. 김정일은 1980년 당군사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1990년 5월에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1991년 12월에는 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군 경력이 전혀 없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2년 4월 스스로 원수에 오르고, 이어 664명의 군장령(장성)들을 진급시키는 대규모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이때 원수로 진급한 吳振宇를 비롯하여 군총참모장 최광 등 8명의 차수 진급자들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었다.⁶⁰⁾ 金正日は 1980년 제6차 당대회이후부터 군부내 세력기반을 본격적으로 강화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18명으로 구성된 당군사위원회에 吳克烈을 비롯한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의 새세대 지지인물들을 충원시켰다. 1992년 12월 말에는 최광 등 4명의 측근을 기용하였다. 김정일은 마침내 1993년 4월 9일 국방위원장에 취임함으로써 군의 최고통수권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단지 軍部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고 볼 수 있는 당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만은 김일성이 아직까지 이양을 유보하고 있다.

金正日は 共產主義 權力承繼政治 史上 유례없는 정도로 후계자로서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權力承繼를 위한 職位와 權力行使면에서는 이미 權力承繼의 단계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후계자지위를 갖추고 있다. 또한 世襲承繼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도 형성되어 있으며 3대혁명소조와 같은 대중동원 行動隊도 존재한다. 金正日の 권력기반은 실로 노년(60-70대), 장년(50대), 청년(30-40대)층을 망라하는 각 세대에 수직적으로 분포되어 있다.⁶¹⁾ 그러나 김정일의 後繼體制 구축은 자신의 指導力

59) “金正日の 北韓,” 35, 36, <中央日報>, 1993년 10월 5일, 1993년 10월 12일.

60) 『内外通信』, 종합판 45호: 555. 북한은 군장령위에 대원수, 원수, 차수라는 군사칭호를 두고 있으며, 대원수는 국가주석 김일성, 원수는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인 김정일과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이다.

61) 坂井隆, “金正日の 權力基盤,” 朴漢植 編, 『北韓의 實相과 展望』 (서울: 同和研究所, 1991), 56.

발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金日成의 후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후계자로서 진정한 正統性을 갖추기 위해서는 政策的 業績을 통한 指導力을 발휘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관해서 金正日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體制的 危機는 金日成 死後에 보다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없이는 金正日이 權力承繼에 성공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누가 金正日에 대항하여 權力承繼 鬭爭을 벌일 것인가? 현재의 북한의 권력구조하에서는 아무도 金正日 後繼體制에 도전할 수 있는 권력과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金日成 死後에는 절대적 카리스마를 지닌 수령의 不在로 인한 권력의 공백이 創出될 것이며 이와 같은 권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金正日이 수령직을 계승하더라도 아버지 金日成이 남긴 수령그릇을 채우기에는 力不足이다.⁶²⁾ 金正日 이외의 권력승계 후보대상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소수의 연합집단일 수도 있다. 金正日에 필적할 만한 개별 지도자는 없지만 집단들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集團別 權力分布와 性向을 분석한다면 權力承繼 競爭集團으로서의 잠재성을 지닌 집단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럴 경우 문제점은 북한의 정치체제하에서 과연 이러한 집단들이 權力承繼 鬭爭에 개입할 정도의 집단이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든 아니면 개인의 권력추구욕에 의하든 각 집단내의 주요지도자들이 권력투쟁을 주도할 가능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제2절 軍 部

김정일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권력승계 대상후보는 軍部라고 볼 수 있다. 北韓 인민군은 전통적으로 당의 통제하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등장

62)한 북한전문가는 김일성을 “태양”으로, 김정일은 태양빛을 반사하기만 하는 “달”로 비유하여 태양없는 달의 암흑적 미래를 시사한 바 있다. 梁性喆, “北韓의 權力承繼와 政治變化,” 『90年代 北韓의 變化와 南北韓 關係』, 제7회 美洲地域學術大會 (서울: 통일원, 1991), 43-4.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軍지도자들이 黨 및 國家의 주요기관에서 주요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즉 黨의 對軍部 우위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출신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軍의 이익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보다는 많이 대변된다. 이것은 北韓軍이 抗日빨치산운동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북한정권의 초기 정치적 혼란기에 김일성 독재정권의 수립을 위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黨·國家의 要職에 계속 동용되었기 때문이다. 軍部가 중요한 정치세력이라는 사실은 노동 黨의 권력구조내에서 군부 지도층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잘 나타난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軍지도자의 비중을 보면 중앙위원회 위원 117명중 적어도 30명이상, 정치국위원 15명중 4명, 비서국 9명중 2명이 군출신이었다.⁶³⁾ 1980년 제6차 당대회의 경우는 중앙위원회 위원 248명중 적어도 42명이, 정치국 위원 34명중 10명이 군출신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⁶⁴⁾

이외에도 黨의 군사정책을 지도·통제하는 중앙군사위원회와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위원회의 절대다수가 軍지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우기 궁극적인 권력의 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金日成, 金正日과 더불어 吳振宇가 속해 있다는 것은 북한정치에서 軍이 차지하는 位相을 대변해준다. 그러나 최근의 權力構造의 變動狀況을 보면 軍部이 비중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12월 현재 정치국 위원 22명중 軍지도자는 3명으로 1980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비서국에는 1980년 이후 軍지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주요직책이 기능별로 專門化되어 軍지도자는 점차 軍事部門만을 전담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또 한편으로는 金正日이 軍계통을 장악함으로써 정치권에서 軍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北韓軍은 “수령의 군대”이자 “黨의 군대”로서 金日成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다. 즉, 수령인 金日成의 군대로서 權力世襲體制의 維持와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尖端役割뿐만 아니라 黨의 武裝力이라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北韓軍이 金日成 死後에 일어날 權力承繼 鬭爭過程에서

63) 중앙위원회 위원 117명중 90명의 경력과 직위만이 파악되었다. 안병영, “북한 정치 엘리트의 구조분석,” 『亞細亞研究』, 제16권 2호 (1973년 6월): 72-3.

64) 『内外通信』 종합판 제18호: 143.

金日成에게 충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金正日에게도 “代 물림” 충성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소위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존재이유로 삼고 있는 軍이, 金正日是 실제 군 경험도 없고 혁명적 전통을 계승할 만한 資質도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충성도는 급격히 감소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이미 1970년대 초 金正日의 등장과 관련하여 일부 軍지도자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었다. 前민주보위상 김광협과 前인민군대장 허봉학이 反 金正日 勢力으로 몰려 수감되었으며⁶⁵⁾ 이후 4년동안 여러명의 軍지도자들이 잠적하거나 실각하였고, 사상검토와 자기비판에 시달리다 죽었다.⁶⁷⁾ 1977년에는 인민군 총정치국장 이용무의 부하들이 김정일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김정일 암살을 기도하였으나 부상만 당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軍部에서 金正日의 지지세력은 항일빨치산세대와 신진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世代간의 갈등 또한 金日成 事後에 노골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2년 현재 당정치국과 비서국에 혁명세대는 5명만이 잔존하고 있는데 김일성과 박성철을 제외하고는 모두 軍지도자들이다. 그리고 생존하는 70세 이상의 빨치산 출신들이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혁명1세대가 대부분 퇴진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軍지도부의 신진세력들은 인사적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만은 軍의 대표성이 政治圈에서 약화되는 것과 더불어 加重될 것이며, 金正日是 결국 어느 한쪽을 지지해야 될 것이고, 이에 따라 軍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북한의 體制改革과 軍事政策에 있어서 軍은 일반적으로 보수성향을 띠게 될 것이나, 군내부의 분열은 신진세력들로 하여금 改革과 開放路線을 지지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金正日是 사단장급이하 각 노장 지휘관들을 젊은 층으로 교체하였으며 1982년 초에는 수뇌부 장성지휘관 약 12명을 숙청했다고 보도되었다.⁶⁸⁾ 軍의 분열, 특히 숙청된 軍지도자들과 혁명세대의 불만은 북한체제의 危機를 증가시키면서 쿠데타의 요인으

65) <로동신문>, 1992년 4월 22일.

66) 柳錫烈, “金正日의 擡頭와 政權承繼,” 『亞細亞研究』, 제30권 2호 (1987년 7월): 88-9.

67) 이들은 이용무 軍총정치국장, 김익현·지병학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철만 제1부총참모장 등이었다.

68) 柳錫烈, “金正日의 擡頭와 政權承繼,” 89-90.

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軍指導層이 金正日의 지지세력으로 형성되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金日成 死後 金正日의 軍統帥權에 도전할만한 軍지도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吳振宇는 金日成, 金正日 다음으로 북한권력의 제3위 서열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인민무력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원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겸직하여 黨·政·軍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왔다.⁶⁹⁾ 특히 오진우는 1970년까지 金日成이 경쟁분파를 숙청하고 一人支配體制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金正日의 世代交替 政策과 급격한 後繼體制 確立에 반대하는 부주석 金東奎와 그 同調勢力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⁷⁰⁾ 吳振宇가 金正日의 世襲承繼를 적극 지지하여 왔다는 사실이 權力承繼 過程에서 또 다시 金正日을 지지하리라는 보장이 될 수는 없다. 吳振宇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확대 또는 적어도 유지하려 할 것이며, 金正日은 수령직 계승후에 전제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오진우를 제거하려 할 수 있다. 한편 權力承繼 過程에서 兩者가 연합하게 된다면 吳振宇는 金正日을 後繼者로 추대할 수 있는 실력자(Kingmaker)이기도 하다.⁷¹⁾ 이 경우에도 吳振宇는 그 공헌도에 따라 金正日의 정책과 권력확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軍서열상 다음으로 정치국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위원이자 인민군 총참모장, 인민군 차수인 崔光이 실력자로 있고, 그 다음은 중앙위원회 위원, 인민군 차수이며 “정치국 위원급 대우”를 받는 白鶴林, 李乙雪, 朱道日이 있다. 이들은 모두 빨치산 출신으로 白鶴林은 정부의 사회안전부장을 겸한 치안총수이며, 李乙雪과 朱道日是 국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崔光은 反金正日 勢力에 가담한 혐의로 숙청된 前歷이 있으며 특히 朱道日是 평양방어 사령관도 맡아 쿠데타와 같은 위기시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직책에 비해 영향력이 크며 金日成 父子를 모시는 寵臣으로 간주되고 있다.⁷²⁾ 모두가 연령이 70대 중반에 이르러 직접적

69)趙基洙, “북한 군부의 대부 吳振宇.” 『북한』 (1990년 8월): 82-91.

70)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북한,” 16, <中央日報>, 1993년 4월 29일.

71)김정일에 대한 오진우의 충성의 계기는 1985년 오진우가 김정일과 酒席에서 오국렬의 징계문제로 언쟁을 한 후, 귀가도중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을때 김정일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생명을 구하게 된 사건때문이라는 보도가 있다. <세계일보>, 1992년 2월 19일.

72)“金正日의 北韓,” 35, <中央日報>, 1993년 10월 5일.

으로 후계자 투쟁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빨치산 출신보다 대개 10년씩 年下인 신진 軍事官僚 출신들 역시 金正日 측근으로 北韓軍에서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들로 대개 소련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자들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당 노동적위대 부장, 인민군 대장이자 차기 인민무력부장의 물망에 오르고 있는 吳克烈, 중앙군사위원이자 인민군 대장이며 金正日의 군사고문인 金斗南, 정치국 후보위원 및 당군사부장을 역임한 인민군 상장 金江煥을 들 수 있다.⁷³⁾ 이들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헌하면서 軍部內에서 급성장하였다. 金正日을 지지하는 “軍의 트로이카”로 불리는 이들은 金日成 死後에는 빨치산 출신을 제치고 軍部權力 장악을 기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측은 1988년 2월 吳克烈이 정치국 정위원 및 인민군 총참모장에서 해임되고 빨치산 출신의 崔光이 후임으로 임명된 사실에서 그 타당성이 뒷받침된다.⁷⁴⁾ 이외에도 신진세력과 혁명세대간의 부침이 엇갈리는 경우는 많이 있어 왔다.

제3절 技術官僚

세번째로 권력승계 후보대상자로 기술관료들을 들 수 있다. 북한 사회가 産業化되고 體制管理와 經濟發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技術官僚들이 권력기관에 대거 진출하였다. 技術官僚集團이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970년대부터 김정일에 의해 본격화되기 시작한 3대혁명소조운동의 지도세대들이 오늘날 전문기술관료세력으로 부상하여 활동하고 있다.⁷⁵⁾ 3대혁명소조운동은 官僚主義와 形式主義에 빠진 기존세력을 비판하고 新世代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世代交替는 기존 세대의 年老化와 더불어 불가피

73) “金正日의 北韓,” 36, <中央日報>, 1993년 10월 12일.

74) 오극렬의 해임은 그가 군사개혁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도되었다. 『內外通信』, 종합판 제37호: 12, 58.

75) 金賢俊 外, 『北韓의 權力엘리트研究』, 77.

하게 북한의 權力構造 全般에 걸쳐 확대될 것이다. 1989년 현재 노동당의 최고지도자 100명의 평균 연령은 68.5세이며,⁷⁶⁾ 지도층의 老齡化는 金正日에게 人事交替의 권한을 증대시켜주고 專門技術官僚의 등장기회를 더욱 확대시켜줄 것이다.

북한의 最高權力機關에서 技術官僚의 진출은 괄목할만하다. 정치국과 비서국에서의 技術官僚 비중은 1970년 제5차 당대회때 정치국 15명중 3명, 비서국 9명중 2명에서 1980년 제6차 당대회때 정치국 34명중 14명, 비서국 9명중 7명으로, 그리고 1992년 12월 현재 정치국 22명중 14명, 비서국 14명중 11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표2> 참조). 북한 政治權力의 핵심인 정치국과 비서국에서 技術官僚가 현재 각각 64%와 79%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技術官僚의 중요성이 북한의 現實問題와 관련하여 提高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표2> 정치국 및 비서국 구성원 현황

정 치 국			비 서 국	
	상무위원	김일성(당, 혁) 김정일(당, 혁) 김정오(군, 혁)	총비서	김일성(당, 혁)
정위원 12명	강성산(기) 김비서(당, 혁) 최정호(군, 혁) 최병호(기) 최성환(당)	이종욱(기) 김영남(기) 김계용(기) 한성룡(기)	비서	김정일(당: 산업전반) 김태호(기: 공공체제) 김계용(기: 경제) 한성룡(기: 농업) 최정호(기: 운송) 김기남(기: 건설) 김중기(기: 군대) 김진(기: 문화) 김영남(기: 과학) 김성환(기: 사정)
후보위원 10명	김철만(군, 혁) 김기남(기) 김기희(기) 홍시화(기)	최태복(기) 최영남(기) 최홍성(기) 이선실(당)		김정일(당: 사회단체) 김태호(기: 대남) 김계용(기: 대남사업) 한성룡(기: 대남사업) 최정호(기: 대남사업) 김기남(기: 대남사업) 김중기(기: 대남사업) 김진(기: 대남사업)
총22명	당:5명, 군:3명, 기술:14명		총14명	혁:1명, 군:0명, 기술:11명

자료: 통일원, 『北韓 權力構造表』, 1992년 12월 31일.

1990년 중앙위원회 정위원들의 확인된 前職 構成을 보면 정권기관 출

76)Pan S. Kim, "The Role of Elites in Leadership Succession and Challenges in North Korea," *East Asian Review* 5, no. 1 (Spring 1993): 98-9.

신이 42%, 당관계 출신이 30%, 군부 출신이 22%, 그리고 최고인민위원회 출신이 6.4%로 專門技術官僚로 분류할 수 있는 정권기관 출신이 가장 많았다.⁷⁷⁾ 국가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職業別 構成에서도 노동자와 협동농장원 보다도 사무원, 관료 등 기타 일꾼들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제9기의 경우 52.6%를 차지하였다.⁷⁸⁾ 총리, 부총리를 포함하여 정무원의 경우는 물론 경제관료들로 충원되어 왔다.

이와 같은 技術官僚集團이 金正日의 後繼體制 구축과정에서 등장하고 軍과 黨 관료들보다는 결속력이 약하다고 하여 金正日 權力承繼에 대한 저항이 없으리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經濟官僚들도 1970년대 중반부터 金正日의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1974년 10월 金正日 이 年間 經濟計劃이 달성되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당조직을 통한 “70일 戰鬪”를 발기하자 經濟官僚들은 經濟戰鬪 방식에 공공연히 반발하였다고 한다.⁷⁹⁾ 이들은 70일간 經濟計劃 달성을 위하여 可動資源을 다 써 버리면 그 이후에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는가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1982년 재정담당 부총리 金昶煉은 金正日이 경제건설을 우선시 하지 않고 金正日 우상화를 위한 상징물 축조에 재정을 탕진하는 것에 반대하였다가 숙청되기도 하였다. 많은 技術官僚들은 金正日 주도하의 3대혁명소조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건설 방식에 비판적이며, 이때문에 金正日의 權力世襲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技術官僚들이 反金正日 勢力의 主流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신중하고 온건한 태도때문에 金正日體制 構築에 독자적인 저항세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⁸⁰⁾ 주장은 몇가지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첫째, 앞에서 논의한대로 技術官僚들이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정치에서 차지하는 技術官僚集團의 양적인 비중뿐만이 아니라 技術官僚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되어왔다. 다수의 技術官僚들이 정치국과 비서국으로 진출한 것 이외에도, 정무원 총리인 姜成山이 권력서열 4위에 올라 있고 북한의 최종 정책결정기관인 상무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한

77)全賢俊 외,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131-2.

78)노동자와 협동조합원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제9기의 경우 각각 37%와 14%를 기록하였다. 梁性喆, 『北韓政治論』, 59-60.

79)“金正日의 北韓,” 18, <中央日報>, 1993년 5월 13일.

80)이 주장에 대해서는, 柳錫烈, “金正日의 權頭와 政權承繼,” 92.

다는 사실은 정무원 및 기술관료의 위상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사회가 革命性, 黨性과 같은 이념적 문제보다는 經濟沈滯와 對外關係와 같은 실질적인 정책문제를 더 우선시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權力承繼 鬭爭過程에서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중요한 결정요소로 등장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갈등은 技術官僚들간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은 김정일 후계에 대한 贊反勢力으로 분열되어 권력투쟁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정무원은 經濟失策에 대한 문책대상으로 가장 빈번한 人事交替를 경험하여 왔는데, 실질적인 政策立案은 정치국이나 비서국에서 하고 정무원은 구체적인 細部計劃만을 세우는데 그러한 문책성 인사가 정무원에만 집중된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불만은 權力承繼 過程에서 技術官僚들이 黨·政分權의 원칙을 추구할 가능성을 높게 해주며, 결국 一元的 黨·國家體制의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4절 金日成의 親·姻戚

네번째로 金日成을 계승할만한 후보대상자는 金日成의 親·姻戚들이다. 金正日의 後繼體制가 金日成族閥 중심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로집단은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고 전문관료집단은 기능적 집단에 불과하다고 보거나 북한에서 派閥의 형성은 金日成의 親·姻戚集團과 非親·姻戚 전문관료집단간의 갈등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⁸¹⁾ 북한의 엘리트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혁명세대와 기술관료집단 역시 金正日 後繼體制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은 앞에서 논의한 이들의 職位와 役割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金日成·金正日의 親·姻戚들이 金正日의 權力承繼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응집력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金正日이 後繼者로 등장하고 後繼體制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쟁대상이 되는 金日成의 親·姻戚들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金日成의 친동생인 金英柱와, 金日成의 현재 처이자

81)이 주장에 대해서는, 全賢俊 외,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112.

金正日の 계모인 金聖愛의 경우를 들 수 있다.

金正日は 자신의 삼촌인 金英柱가 맡고 있던 당의 조직 및 선전선동책을 차지하면서 金日成의 後繼者로 부각되었다. 金英柱는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당비서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되면서 당서열 6위로 갑자기 부상하였으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조절위원회 北측위원장을 맡았다. 金英柱는 金正日과 후계자 투쟁을 벌인 끝에 1975년 정무원 부총리직에서 해임되면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1977년 金英柱의 지지세력으로 알려진 부주석 金東奎, 정치위원회 후보위원 柳章植, 군총정치국장 李勇武 등도 金正日의 정책과 후계체제를 비판하다 축출당하였다. 1981년에는 이들 일파가 金正日에 대한 암살을 기도하였고, 1982년에는 金英柱의 아들이 배후 조정한 것으로 알려진 노동자들의 공격으로 金正日이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후 1993년 7월 27일 평양에서의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탑 준공식”에 金英柱가 金日成·金正日 父子 등 최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前부총리” 직함으로 공식석상에 처음 나타났다.⁸²⁾ 金英柱 지지세력의 잔존과 金英柱의 재출현은 權力承繼 過程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金日成의 現妻이자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장인 金聖愛는 權力承繼 過程에서 金英柱보다 더 중요한 變數로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 金聖愛는 金正日의 후계자 등장을 처음부터 저지하고 자신의 아들 金平一을 後繼者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1975년 女盟 위원장에 취임한 金聖愛는 金正日의 生母인 金貞淑 격하운동을 전개하고 빨치산 세력을 무시하면서 黨위에 군림하는 듯한 경향을 나타냈다. 혁명1세대와 金正日은 金聖愛와 그의 측근들의 越權行爲와 非理를 조사하여 1974년 김성애의 남동생 김성갑을 비롯한 측근들을 숙청하고 金聖愛에 대한 호칭을 “女士”에서 “동지”로 격하하는 등 공식활동에 제동을 가하였다. 1980년 金正日은 金聖愛와 이복동생들을 “결가지 무리”라고 규정하고 이들의 동향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⁸³⁾ 1982년에는 金貞淑을 “나라의 어머니”라

82) “金正日の 北韓,” 32, <중앙일보>, 1993년 8월 19일자.

83) 『内外通信』, 제317호 (1983년 2월 4일). 본래 결가지 문제제기를 한 자는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던 徐允錫으로서, 1976년 김정숙, 김정일, 김경희를 본가지로, 김성애, 김평일, 김영일 등을 결가지 무리로 규정하였다. 1978년 서윤석은 평양시당 책임자로 발탁되고 후일 평남도당 책임비서로 승진하였다.

고 내세우고, 金平一을 몰타, 불가리아 등에 영어공부 명목으로 외유시켰다.

金正日是 이복형제 중에서도 특히 金平一을 견제하여왔다. 귀순자 고영환에 의하면, 金平一은 金正日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며 자질면에서도 우수한 점이 많아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고, 불가리아 대사인 그에게 부하직원들도 접촉하거나 업무보고를 하려들지 않았다고 한다.⁸⁴⁾ 金正日은 소위 “결가지 무리”에 대한 감시를 위하여 당조직지도부 10호실을 특별히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金平一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촉보고서를 상세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金平一은 1954년생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1977년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후 1981년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하고 10여년간 보병지휘관과 군단참모 등을 하면서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지지와 전반적인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平一은 金日成을 닮은 외모에 대인관계도 능숙한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이며 영어, 중국어에 능통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한 엘리트로서 한때 軍部를 장악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돌았다.⁸⁵⁾ 金正日은 金平一을 1988년 헝가리 대사, 그해 12월 불가리아 대사로 부임시키는 등 외국근무를 시킴으로써 국내세력 구축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金正日과는 다른 외모와 성격 그리고 軍배경을 지닌 金平一은 權力承繼 鬭爭過程에서 金正日의 代案으로 부각될만한 잠재성을 지닌 인물이라 하겠다.

金日成의 親·姻戚중에서 또 하나의 유력한 후보대상자는 金正日의 여동생 金敬姬의 남편이자 金日成의 사위인 張成澤을 들 수 있다. 張成澤은 1945년생으로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일성 고급당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당의 청년사업부장이다. 현재 당경공업부장으로 있는 金敬姬의 끈질긴 구애끝에 결혼한 張成澤은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품위있으며 예체능과 어학 등에서 만능재주꾼으로, 金正日의 구상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제3의

84) “고영환은 말한다,” <서울신문>, 1991년 10월 1일. 고영환은 전 콩고주재 북한대사관 1등서기관이었다.

85) 柳永玉, “북한 권력승계의 변수, 金平一,” 85-97.

86) 高英煥, 呂永茂 대담, “眞相! 北韓의 實勢 金正日·金正日그룹,” 『新東亞』 (1991년 11월): 384.

87) “金正日의 北韓,” 28, <中央日報>, 1993년 7월 22일.

88) 金星岩, “七顛八起의 오독이 對南總責 金仲麟,” 『북한』 (1992년 1월): 90-100.

實權者라는 지적도 있다.⁸⁶⁾ 1991년 인물 됨됨이나 능력면에서 金正日을 능가하는 張成澤이 金正日에 의해서 그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⁸⁷⁾ 金日成의 親·姻戚들의 정치활동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眞僞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金正日과 張成澤의 關係 惡化는 金正日의 權力承繼 過程에서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金日成의 親·姻戚들이 權力承繼 過程에서 金正日 후계계승을 위하여 단일한 연합세력으로 역할하지만은 않으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는 사례들이 있다. 1983년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된 楊亨燮은 모스크바대학 유학시절 金英柱와 가까워지면서 金日成의 고종사촌인 김신숙과 결혼하게 되었으며, 金英柱와 밀착되었다는 이유로 1980년 한때 사회과학원장으로 좌천되었다가 재등장한 경력이 있다. 金英柱 妻의 인척인 金仲麟은 1967년 대남 사업비서로 발탁된 이후 여러차례 좌천을 당했다가 재기용된 인물로서 출세와 명예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⁸⁸⁾ 북한의 권력구조가 20여명에 이르는 金日成의 親族들을 중심으로 族閥體制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표3> 참조), 金正日의 權力世襲은 이들의 결속력과 충성심을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金聖愛와 金平一을 중심으로 한 “결가지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死活이 걸린 권력투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 나중에 詳述되겠지만, 金日成의 親·姻戚 일부는 다른 反金正日 勢力과 연합하여 金正日의 世襲承繼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86)高英煥, 呂永茂 대담, “眞相! 北韓의 實勢 金正日·金正日그림,” 『新東亞』(1991년 11월): 384.

87)“金正日의 北韓,” 28, <中央日報>, 1993년 7월 22일.

88)金星岩, “七顛八起의 오독이 對南總責 金仲麟,” 『북한』(1992년 1월): 90-100.

<표3> 김일성 친인척의 권력구조

성명	관계	직위	당서열
강성산	김일성의 이종동생	당정치국 위원 정무원 총리	4
박성철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사위	국가부주석 당정치국 위원	5
김달현	김일성의 오촌 조카사위	당정치국 후보위원 정무원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 무역부장	14
김용순	김일성의 전처 김정숙의 남동생	당정치국 후보위원 비서국 비서 당국제부장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19
황장엽	김일성의 조카사위	당중앙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조평통 부위원장	27
김종린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 처의 인척	당중앙위원회 위원 비서국 비서 대남공작의 총책임자 최고인민회의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28
김창주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아들	당중앙위원회 위원 정무원 부총리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 위원	32
강석승	김일성의 외척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역사연구소장	38
양형섭	김일성의 고종사촌 김신숙의 남편	최고인민회의 의장 당중앙위원회 위원	42
김봉주	김일성의 삼촌 김형록의 아들, 김창주의 동생	당중앙위원회 위원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의장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국장	51
강현수	김일성의 외삼촌 강용석의 아들	당중앙위원회 위원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황북도당 책임비서 겸 인민위원장	101
장성우	장성택의 친형	당중앙위원회 위원 사회안전부 정치국장	104
김성애	김일성의 처	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16
김경희	김일성의 장녀, 장성택의 처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경공업부장	173

성명	관계	직위	당서열
이용무	김일성의 조모 이보익의 조카	당중앙위원회 위원 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의 차녀(허담의 처)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조선』지 책임주필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291
장성택	김일성의 사위, 김경희의 남편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당근로단체사업부 부장겸 3대혁명소조부 부장	302
김평일	김일성의 차남, 김성애의 소생, 김정일의 이복 동생	前 불가리아 주재대사	
강덕수	김일성의 외삼촌 강보석의 아들	조선방송위 부위원장	
강인수	김일성의 외삼촌 강보석의 아들	화학공업부 부부장	
김정우	김일성의 고종제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교육협력분과위원회 북측위원장	
강영섭	김일성의 외종숙(강양욱의 아들)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 의위원회 위원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 김일성, 김정일은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全賢俊 외,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1992), 73-5.

제4장 金日成 死後 權力鬭爭 展望

제1절 권력승계의 시기와 변수

이상에서 논한 權力承繼 候補對象者들은 김일성이 早期承繼를 계획하든 안하든 혹은 金正日이 권력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든 안하든 관계 없이 최소한 자신들의 權力維持 및 權力擴張을 위해서 투쟁을 벌이게 된다. 權力承繼 後繼者가 누구이든지 간에 大權을 장악하고 새로운 權力基盤과 正統性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人事交替와 政策開發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권력승계 투쟁의 양상은 여러가지 變數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나 일단 본격적인 權力承繼 鬭爭은 前任者의 권력이양에서부터 시작된다. 북한에서 권력이양에 다다르게 되는 요인은 金日成의 死亡, 身體的 無力化, 辭任, 逐出 등이다. 김일성이 後見人 역할을 하면서 총비서와 주석의 직위를 김정일에게 이양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것은 실질적인 권력승계라기 보다는 형식적인 권력승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 경우는 金日成의 사망 또는 신체적 무력화에 따른 권력승계와 동일한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최고지도자로서의 모든 직위를 이전했지만 아무도 중국에서 권력승계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북한에서의 早期 權力承繼를 엄밀하게 정의하면 김일성의 辭任과 이에 따른 實質的 權力移讓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김정일이 가장 적은 노력으로 後繼繼承을 할 수 있음은 앞에서 논의한 북한의 권력구조와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김일성이 진정으로 革命繼承과 김정일의 안정된 권력승계를 원한다면 早期承繼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는 물론 일반적인 독재체제하에서도 前任者의 자발적 辭任에 의해 權力承繼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權力的 맛은 도취적”이다.⁸⁹⁾ 권력추구욕은 인간에게 內在하는 고유한 屬性이며 합리적 설득에 의하기도 하지만 강압과 조작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法보다 人間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野獸의 性格”을 추가시킨다고 하였다.⁹⁰⁾ 金日成은 생존하는 통치자 중에서 최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며 비합리적인 神格化와 超法的인 首領論에 기초하여 個人支配體制를 구축하여 왔다. 김일성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와 같은 權力構築慾이 중단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쿠데타 또는 인민봉기 등에 의한 金日成의 逐出 또는 除去에 의해서 일어나는 권력승계를 예상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생존해 있는 한 철저한 정보정치와 중첩된 통제구조를 피하여 쿠데타를 음모할 수는 없을 것이며, 권력핵심부의 지도자들은 金日成과 함께 특권을 누리는 계층으로서 既存體制의 존속을 원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인민봉기는 단기간내에 기대하기 어렵다. 인민봉기를 주도할 社會勢力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은 북한 정권의 창시자로서--비록 객관적 관점에서 보면 시대착오적 인물이지만--북한주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누리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만이 眞理이고 善이라고 믿고 있다.⁹¹⁾ 쿠데타는 오히려 金日成 死後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인민봉기는 權力承繼 後繼者가 改革·開放 政策을 수행한다면 그러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北韓體制의 終末을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의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金日成이 죽기 전에 漸進的인 權力承繼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일성이 段階的이며 漸進的인 방식으로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⁹²⁾ 즉 덩샤오핑식의 “政權交替”와 같은 권력승계 방식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攝政함으로써 死後 權力承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피한다는 것이다. “주석직을 김일성이 마지막까지 보유하고 順次的으로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당총비서직 등을 김정일에게 이양해 줄 것이며,” 이시기는 1994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⁹³⁾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첫째 金日成이

89) 李克燦, 『政治學』, 제5全訂版 (서울: 法文社, 1993), 183.

90) Ernest Barker, ed. and trans., *The Politics of Aristot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146.

91) 金昌順, “金日成의 리더쉽과 統治스타일,” 148-9.

92) 최명길, 『미리보는 코리아 2000』 (서울: 장원, 1993), 154-62.

攝政을 하는 한 部分的인 權力移讓을 實質的인 權力承繼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 둘째 實用主義的이고 合理的인 指導者라고 할 수 있는 덩샤오핑과 理念的인 個人崇拜를 指向하는 指導者인 金日成간의 차이점, 셋째 덩샤오핑은 창시자인 마오쩌둥의 후계자중의 한사람인 반면 김일성은 정권창시자로서 죽을 때까지 “위대한 지도자”로 남기를 원한다는 사실 등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북한에서의 權力承繼는 金日成의 死亡 또는 病 등으로 인한 身體的 無能力化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두가지 경우 유사한 權力承繼鬭爭 樣態를 보일 것이나, 老病으로 퇴진할 경우 권력승계 투쟁은 점진적으로 深化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에 권력승계 대상자들은 陰性的인 聯合 및 離間을 통한 권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金日成의 無能力化를 적어도 일정기간은 비밀로 하고 형식적이거나 그의 職位에 대한 계승을 유보할 것이다. 金正日은 김일성의 代理者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점차적으로 수령으로서의 權威獲得을 추구할 것이다. 反金正日 勢力은 김정일의 權力集中을 牽制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김일성이 차지하고 있던 방대한 권력을 나누어가지려고 투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金日成의 退陣 또는 死亡이 공식화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격적인 권력승계 투쟁은 金日成의 死亡과 더불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일단 金正日이 김일성의 職位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김일성이 急死한다면 이것은 김정일의 계승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죽음과 더불어 북한의 지도자들은 커다란 危機意識에 휩싸일 것이며, 對外的으로 지도층의 結束力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도자들에게는 “위대한 지도자”, “아버이 수령”의 갑작스런 不在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動搖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위기상황을 團結과 警戒로서 극복할 것을 호소하게 되고,⁹⁴⁾ 體制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수령”의 承繼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93)『위의 책』, 154, 156.

94)이와 같은 예는 “위대한 지도자” 스탈린의 사망때 특히 그 강도가 높았다. Yang, “Soviet Succession Politics,” 2.

金正日의 一時的 權力承繼는 김일성의 사망에 대한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體制維持의 안정성을 되찾거나 또는 金正日의 統治力을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金正日의 一時的 權力承繼의 가능성은 다음의 요인들에 의한다. 첫째,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은 近代化된 국가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鞏固化되었기 때문이다. 金正日은 북한 권력의 3대 기둥인 黨, 國家, 軍에 자신의 측근세력을 충원하고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한 大衆動員을 통하여 권력기반을 다져왔다. 둘째, 권력승계를 위한 法的 制度的 미비점을 주체사상과 후계자론을 통하여 理念的 次元에서 補完하고 있다. 폐쇄된 사회에서 소위 “대를 이은 충성”을 象徵操作과 偶像化 作業으로 완성하고 있다. 셋째, 金正日의 世襲承繼體制는 김일성의 후견하에서 다른 권력승계 競爭對象者들을 철저히 封鎖하여 왔다. 권력승계가 制度化되어 있지 않은 공산주의체제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후계자가 지나치게 權力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對應後繼者(counter-heir)를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경향이 있다.⁹⁵⁾ 그러나 북한은 金正日에 필적할만한 對應後繼者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北韓 權力承繼 政治의 특징은 김정일로 하여금 部分的인 권력승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 정치는 김일성, 김정일 두 지도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二元體制” 또는 “二元的 指導體制”라고 흔히 불리운다.⁹⁶⁾ 그러나 二頭政治(duumvirate)란 두개의 權威가 경쟁적으로 연대하여 통치하는 것으로, 북한정치의 현실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不適切하다. 두 명의 수령이 존재할 수 없고, 또 金正日의 통치권한은 김일성으로부터 委任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1992년 4월 12일 <워싱턴 타임즈>紙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黨, 政, 軍 등 제반 분야에서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에 의해서 확인되었다.⁹⁷⁾ 그러나 金正日이 사실상의 통치행위를 한다고 하여 金日成이

95) 스탈린과 후르시초프의 후계대상자들에 대한 권력조정에 대해서는, Myron Rush,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assim.

96) 예를 들면 郭承志, “北韓의 後繼者論과 權力承繼過程,” 73.

97) 1992년 9월 30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김영남의 한국 기자와의 인터뷰, <조선일보>, 1992년 10월 1일.

그래왔던 것처럼 全權的이며 獨自的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말할 나위도 없이 金正日의 통치권한은 김일성의 후견에 의해서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권력승계와 관련지어보면, 二頭體制하에서 金日成이 사라진다면 金正日의 독자적인 권력강화가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김일성에 의해 위임된 제한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있다면 김일성 사후 金正日是 獨自的으로 權力을 強化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金正日의 權力承繼體制는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金日成의 절대적 권력과 권위에 의해 수립된 世襲承繼體制는 후견자가 존재하는 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이 견고하게 보이나, 일단 후견자가 사라지면 그리고 후견자의 권위와 역할이 크면 클수록 그 요새는 더욱 허점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世襲承繼가 오히려 불안정하고 유혈적인 권력투쟁을 야기시켰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김정일 권력승계체제가 20여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準備期間은 별로 중요한 問題가 아니다. 또한 金日成의 후광하에서 축적된 김정일의 권력기반 정도가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는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결정요소는 김일성 없이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확장시킬 수 있는 金正日의 指導力이다. 20여년의 긴 권력승계 준비과정은 오히려 金正日 指導力의 장단점을 충분히 노출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보다 이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資質과 能力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정적 측면으로 먼저 金正日의 性格을 보면, 김정일은 母性缺乏症으로 나타나는 情緒不安 등의 非正常的인 性格構造를 가지고 있다.⁹⁸⁾ 金正日是 生母의 早失과 동생과의 死別,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아들로서 과잉보호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不信과 憎惡, 被害意識과 躁急性 및 無節制의 性向 때문에 自制力 缺如, 猪突性, 殘忍性, 驕慢性 등의 성격적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김정일은 자신의 外貌에 대한 劣等意識을 보상하려는 誇示性과 卽興的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의 영화광, 사적광적인 취미생활에서는 세디즘적 氣質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⁹⁹⁾ 요컨

98) 朴奎植, 『김정일 평전』 (서울: 陽文閣, 1992), 41.

대 김정일의 성격은 自慢心과 優越感이 지나치고, 성급하여 猪突的이고 獨善的인 면이 강해서 지도자로는 부적합하다고 하겠다. 김정일의 통치유형도 그의 성격을 반영하는 誇示的 行態와 廣幅政策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김정일은 效用性과 效率性을 무시한 대규모 행사와 기념비적 대건축 등의 展示的이고 誇示的인 정책지시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를 “廣幅 政治”라고 하여 金正日의 “통크고 대담한” 통치행태로 선전하고 있다.¹⁰⁰⁾ 김정일의 지시는 卽興的인 것이 많고 심야에도 업무를 집행하며 자신의 지시는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일에게는 肯定的인 측면도 있다. 金正日은 정상적인 高等 教育을 받았고,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예술적 기능을 가졌으며, 호기심과 담대성을 가지고 있고, 20여년 동안 최고엘리트 과정을 통한 政治訓練을 받았다.¹⁰¹⁾ 그리고 김정일은 실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決斷力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유학 경험을 가진 技術官僚들을 과감하게 참모로 拔擢함으로써 開放性과 柔軟性을 보여주기도 한다. 김정일은 남북한간의 차이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合理的인 政策推進의 가능성과 자질을 엿보게 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¹⁰²⁾ 金正日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수적이며, 對外貿易의 발전은 경제적 자립에 모순되기 보다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¹⁰³⁾ 김정일은 사회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開放의 必要性을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으로 인한 反社會主義的 요소의 침투와 思想의 瓦解 그리고 북한 제의 從屬化를 憂慮하고 있어 中國式의 改革·開放政策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金正日의 指導者的 資質과 能力의 兩面性이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지도력을 나타낼지는 의문이다. 指導力(leadership)에는 두가지 기본유형이 있다.¹⁰⁴⁾ 하나는 指導者와 追從者의 상호 가치의 교환을 통해 관

99) 김정일은 영화배우 최은희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체격을 “난쟁이 똥자루”로 비하하여 표현하였다. 『위의 책』, 43-9.

100) 북한은 김정일의 지도역량을 과시하기 위하여 주체사상탑, 개선문, 유경호텔, 5·1 경기장 등과 1989년 7월의 세계청년학생축전이 김정일의 廣幅政策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한다. 『위의 책』, 55-62.

101) 구소련 공산당 국제부 극동담당 제1부 부장을 지낸 바딤 트카첸코의 견해, “金正日의 北韓,” <中央日報>, 1993년 1월 7일.

102) 朴奎植, 『김정일 평전』, 49-55.

103) 『근로자』, 1991년 1호: 22-3. ; 1988년 7월호: 18.

계를 형성하는 “去來的 指導力”(transactional leadership)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가 추종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기대이상으로 충족시키는 “變革的 指導力”(transforming leadership)이다. 變革的 指導力은 지도자와 추종자간의 단순한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필요, 열망, 가치가 관련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道德的 指導力(moral leadership)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道德的 指導力이 단순한 설교, 동정심, 사회적 복종의 강조 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있어서 金日成은 적어도 북한 주민에게는 이러한 道德的 指導力을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북한 사회주의정권의 창시자로서 1970년대 초까지는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최근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집권기간동안의 전반적인 경제운용을 완전한 실패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¹⁰⁵⁾

그러나 金正日의 경우 아직까지는 去來的 指導力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신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추종자들에게 職位를 배분하는 정도 이외에는 變革的 指導者로서의 이미지를 構築하지 못하였다. 북한의 언론은 “인덕정치가 실현되는 사회주의 만세”라는 논설에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진 수령이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치를 실현하는 통치”가 仁德政治라고 주장하였다.¹⁰⁶⁾ 金正日이 수령승계는 하지 않았으나 仁德政治를 베푼다고 선전하고 있다. 1993년부터는 廣幅政治라는 표현을 줄이고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인민의 지도자”라고 하며 김정일의 仁德政治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金正日이 道德的 指導力을 갖추기 위해서는 宣傳과 象徵操作 이외에도 實質的인 政策結果를 통해서 仁德政治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권력승계에서의 최대변수는 결국 金正日의 지도력이다.

金日成 死後에 일어날 권력투쟁은 북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결하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사실 權力과 政策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권력은 지도자가 선호하는

104) James MacGregor Burns, *Leadership* (New York: Harper & Row, 1978), 4.

105) Bon-Hak Koo, "North Korea Close to the Blink,"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5, no. 1 (Summer 1993): 102.

106) <로동신문>, 1993년 1월 28일.

정책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政策은 특정지도자의 권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경쟁자가 반대하는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경쟁자의 권력과 권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권력투쟁 과정에서 후계 경쟁자와 반대되는 정책노선을 제시하고서도 일단 권력승계 이후에는 路線轉換을 하여 경쟁자의 정책을 자신의 정책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흔히 있다.¹⁰⁷⁾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不在는 그동안 축적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권력승계를 경험하는 정치체제가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면 할수록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치열하게 되는 것이다.

北韓이 처한 對內外的 危機狀況은 권력승계에 따른 정책 대결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國際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體制存立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는 북한 사회주의 자체의 이데올로기적 정통성을 뒤흔들어 놓았다. 특히 東獨이 西獨에 흡수통일되면서, 韓國에서는 통일의 열망이 높아졌으며 北韓은 吸收統一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할 커다란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¹⁰⁸⁾ 동맹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북한보다는 한국에 우선순위를 두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의 核武器 開發 노력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고 國際核査察을 계속 거부하면 국제적 제제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對外的 상황은 북한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재정립, 南北韓 關係의 재조정, 同盟國 關係의 재수립과,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 수립, 그리고 核政策의 재고 등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國內적으로 북한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하고 있다.¹⁰⁹⁾ 경제침체는 東歐 및 舊 소련에서는 체제붕괴의 원인이 되었었는데, 북한의 경우도 그에 못지 않게

107)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산업화 정책에 반대하여 신경제정책(NEP)을 지지하였으나 권력장악 후 트로츠키 정책을 채택하였고, 흐루시초프는 말렌코프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후 말렌코프 정책의 일부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108) 북한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승공통일, 흡수통합야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1월 24일; 1993년 7월 21일.

109) 국민총생산(GNP)은 1992년 5%, 1991년에 5.2%, 1990년에 3.7% 각각 감소하였다. The Economic Intelligence Unit, *South Korea, North Korea: Country Report*, no. 1 (1993): 34-5.

심각한 상황이다. 연료와 원료의 부족으로 공장들은 1992년 생산능력의 60%밖에 가동되지 못했으며,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 소식이 간간히 들려온다. 한국과의 국민총생산량 및 1인당 총생산량 비교에서 더욱 격차가 벌어져 體制競爭에서 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위기의 원인은 舊공산주의 정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中央計劃經濟體制, 소비품 경시와 중공업 우선정책, 과중한 국방비 부담, 국제적 경제협력의 소홀에 따른 자본 및 과학기술의 결핍 등을 들 수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폐쇄적 자립경제체제를 정당화하여 왔으나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북한은 적어도 中國式 社會主義와 같은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한 외국의 경제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이상의 기본적 문제들을 비롯하여 기타 제반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金日成 死後 지도자들은 김일성이 생존할 때와 같은 임기응변식의 지연정책을 계속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黨업적의 고수와 계승 발전, 주체사상의 교양 강화, 그리고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¹¹⁰⁾은 더 이상 현실적인 代案이 될 수 없다. 결국 북한의 지도층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최소한의 변화만을 추구하려는 保守派와, 체제개혁을 통하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政策派로 분열될 것이다. 그런데 권력승계 초기단계에서는 兩分派間의 정책적·이념적 차이가 주로 변화의 범위와 속도의 정도를 둘러싸고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차이도 과거의 唯一的 支配體制에 커다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제2절 권력승계의 과정과 결과

金正日是 이러한 초기단계의 政策路線을 둘러싼 갈등을 다른 어느 경

110)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에 대해서는,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 1993년 9월 2일; 『근로자』, 제250호 (1989. 10): 15-20.

쟁자보다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일시적인 권력승계에 성공한 후 保守·改革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다면 김정일이 一人支配體制를 구축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때 김정일은 김일성의 後光에서 벗어나 스스로 수령으로서의 權威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政策的 成果를 통해 正統性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통성이 인민대중으로부터 나온다면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수령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일단 권력승계과정에서는 북한의 最高指導層, 즉 당중앙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진정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最高의 權力核心部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원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의 지지가 거의 절대적이다.

金正日是 權力承繼 初期에는 1人支配體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반대세력을 제거하거나 타협을 통하여 中和시키려 할 것이며, 지지세력을 주요요직에 승진 발탁할 것이다. 주로 제거대상이 되는 집단은 우선적으로 親·姻戚 중에서 위협이 되는 金聖愛, 金平一 등의 “겉가지 무리”와 빨치산 세력 중에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만한 인물들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위협이 될만큼 지나치게 권력을 집중시켰거나 능력을 보이는 지도자가 숙청될 것이다. 반대세력의 제거와 동시에 지지세력을 등장시키게 되는데 이들은 기존의 측근세력과 새로운 충성자들로 구성될 것이다. 金正日 1인독재체제는 小數의 측근세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비록 김일성과 같은 최고직위를 차지하게 되더라도 金日成과 같은 권력과 권위를 갖추지는 못할 것이다. 小數의 측근세력이 권력을 확장함에 따라 김정일은 계속적인 숙청을 해야 될런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권력구축과정은 그동안 世代交替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령화된 북한의 지도층의 연령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¹¹¹⁾

북한 지도층의 世代交替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金正日에게 새로운 지지세력의 충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1人支配體制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老齡化된 지도자와 반대세력은 부정부패 척결, 사회

111) 1990년대 당 중앙위원회 위원중 확인된 95명의 연령비율은 60대가 65.3%, 70대가 22.1%, 80대가 3.2%로 노인층의 지도자가 90.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50대가 6.3%, 40대가 3.2%를 차지하고 있다. 金賢俊 외, 『北韓의 權力엘리트研究』, 118.

기강확립, 관료주의적 병폐제거 등과 같은 개혁정책의 추진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金正日이 후계자로서의 權威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政策的 成果를 통하여 變革的, 道德的 指導力을 발휘하여야 한다. 양면성을 지닌 김정일의 지도자적 資質中에서 합리적 측면이 작용한다면, 김정일은 당의 지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실시하는 中國式 社會主義를 北韓式 社會主義 모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보다도 사회의 동질성과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매우 높은 북한에서의 개혁 개방정책은 그 충격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의 體制維持가 매우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개혁, 개방으로 인한 地方分權化와 이에 따른 權力의 多元化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김일성에 대한 권력승계가 김정일의 세습승계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寡頭的 集團指導體制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의 권력승계가 수령의 地位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김정일은 일시적인 세습승계에 성공하더라도 수령의 地位를 확보하지 못한 채 集團指導體制에 권력을 이양하게 될지도 모른다. 金正日이 수령이라는 絶對的 權威를 확보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북한의 많은 지도자들이 20여년 동안 후계자로서의 金正日을 보아오면서 환멸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이 장기간 후계체제를 구축해온 것 못지않게 혁명1세대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도 오랫동안 權力을 누려왔으며, 김정일의 절대권력을 저지할만한 경륜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의 지도력이 體制危機的 問題 解決을 위하여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김정일은 도전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김정일의 숙청을 두려워하는 집단들은 연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金正日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거나 차지한 最高權力職位들을 다른 지도자들과 分占해야 할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集團指導體制가 형성된다면 여기에 김정일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¹¹²⁾ 김정일이 권력투쟁과정에서 타협을 한다면 집단지도체제의 一員이 될 수 있으며 집단지도체제 代表 또는 동료중의 1인자

112)이러한 시나리오는 다음의 연구에서 간략히 논의되었으나 여기서는 분석관점과 내용이 다르다. Yonug Koo Cha and Taeho Kim, "Prospects for Political Change and Leadership Succession in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 no. 2 (Winter 1992): 233-5.

(primus inter pares)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정일이 權力分占에 저항하고 그리고 反金正日勢力이 강하다면 김정일은 집단지도자들에 의해서 숙청될 것이다. 金正日이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려는 세력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金日成의 혁명계승과 수령계승을 강조해 온 김정일로서는 집단지도체제를 받아들여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나,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줄곧 “帝王學”을 교육받은 지식으로 현명하게 판단한다면 과도기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金正日은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해주는 측근인사들의 의견을 비교적 잘 수용하는 편이라고 한다.¹¹³⁾ 특히 吳振宇와 姜成山과 같은 측근 원로지지세력이 상징적 수령으로서 군림하되 주석이나 총비서직 중 하나만을 택하고 集團化된 합의적 정책결정제도의 채택을 종용한다면 金正日이 수락할 수도 있다. 金正日 다음으로 實權을 장악하고 있는 小數의 지도자 또는 그 중의 한사람이 이러한 仲裁役割(king maker)을 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증대할 것이다.

북한이 金日成 死後에 集團指導體制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또하나의 이유는 북한 정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金日成과 金正日의 絕對權이 모든 정책결정과정을 一元的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기¹¹⁴⁾ 보다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책토론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북한 사회의 획일적 통제조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주체사상과 김일성이 허용하는 범위를 저촉하지 않는 한 다른 의견 표현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정치국과 같은 最高政策決定機關들, 즉 소위 “영도핵심”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정책적 견해차이가 비교적 폭넓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는 前부주석 김동규가 1976년 정치위원회(현 정치국)에서 김정일의 간부청년화정책, 계급정책, 후계체제 확립과정을 비판하였고, 오진우가 이 비판에 반발하자 논쟁이 불붙었으며, 金日成은 이를 지켜본 뒤 당간부 청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지시했다¹¹⁵⁾는 사실은 이를 경험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즉 김

113) “金正日の北韓,” 4, <中央日報>, 1993년 1월 21일.

114) 북한의 수령중심의 획일적 구조 때문에 정책결정요소에 대한 상세한 논급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논문의 주제는 이에 관련된 것을 선정하고 아무런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는, 공기두, “北韓의 政策決定 과정과 官僚,” 『북한연구』 제2권 4호 (1991 가을): 82-104.

일성 또는 김정일이 주요 정책 결정권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책결정과정 또한 이들만의 獨占物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김일성이 有故된 권력승계 문제는 정치국 위원, 비서국 비서, 정무원 총리와 부총리 등으로 구성된 영도핵심들의 중요한 토론 대상이 될 것이다. 소위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김정일의 세습승계 또는 집단지도체제 형성의 문제를 논하게 될 것이며, 이때 중요한 결정요인은 자신들의 권력유지 및 확장의 여부가 될 것이다. 아무리 후계체제가 견고화 되었다고 해도 영도핵심의 恣意없이 金正日 스스로 후계자로 취임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주석직을 최고인민회의가, 그리고 총비서직을 위해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소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은 權力의 空白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한 영역을 신장시키려 할 것이며 가장 恣意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은 集團指導體制의 형성인 것이다. 관료적 지배체제하에서의 권력 승계투쟁은 한 개인에게 絶對權力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머지 지도자들이 연합하는 “權力에 대항하는 鬭爭”(struggle against power)의 성격을 띤다.¹¹⁵⁾ 북한의 지도자들은 김정일 親·姻戚 여부에 관계없이 또다시 김일성과 같은 수령의 절대권력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集團指導體制가 형성되면 각기 다른 지도자가 당, 국가, 군부의 최고 직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김정일이 포함되게 된다면 2개의 최고권력을 소유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써 小數集團에 의한 독재, 소위 寡頭的 集團指導體制가 정치국 정위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이때 집단지도체제구성원이 모두 동등하게 권력을 나누어 갖게 되지는 않는다. 이중에서도 더 작은 수의 지도자는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현체제하에서와 같은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영도핵심중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다. 상무위원회를 비롯한 최고 지도기관의 수와 구성원은 재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集團指導體制는 지도자 職位의 안정성을 1人獨裁體制의 경우보다 더 보장

115) “金正日의 北韓,” 16, <中央日報>, 1993년 4월 29일. 김동규가 속청된 이유는 간부 정책, 계급투쟁 비판 때문이 아니고 후계자 부각을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116) 이 주장에 대해서는, Alfred G. Meyer, “Communism and Leadership,”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16, no. 3 (Autumn 1983): 165-9.

하게 되어, 북한 지도층의 세대교체는 서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집단지도체제는 일차적으로 共同의 敵, 즉 과도한 권력집중을 기도하는 사람을 제거하려 할 것이며, 金正日 역시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일이 포함되지 않은 집단지도체제는 현재 영도핵심의 성격상 보수적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수령중심의 주체사상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寡頭的 集團指導體制은 본질적으로 不安定하다. 지도자들은 다른 가치관과 정책적 차이 때문에 구체적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며, 이것은 지도자들간의 권력투쟁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¹¹⁷⁾ 더욱이 북한은 사상 처음 갖는 집단지도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지도자들간의 정치적 영향력 신장을 위한 투쟁은 政策的 葛藤과 밀접히 연계되어 일어날 것이다.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되면 정치적 스펙트럼은 개인지배체제 때보다 훨씬 다양하게 되어 권력승계 초기단계에서의 保守, 改革의 分派는 세분화 될 것이다. 집단지도체제의 구성원 및 북한의 지도자들은 강경보수, 온건보수, 온건개혁, 과격개혁 등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강경보수파는 金日成主義를 유지 계승하려 할 것이다. 온건보수파는 기존체제유지를 위한 最小限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온건개혁파는 체제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발전을 위해 필요한 制限된 체제개혁을 추구할 것이다. 과격개혁파는 기존체제의 업적을 부정하고 根本的인 체제개혁을 급속히 추진할 것이다.

집단지도체제하에서의 정책대결은 북한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각 분파별 연합을 결성하게 할 것이며, 또한 分派間의 연합대결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의 북한 지도자구조를 고려한다면 과격개혁파는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며 강경보수, 온건보수, 온건개혁이 主要勢力을 형성할 것이다. 각 政策路線의 分派는 권력집단별, 그리고 세대별로 교차하여 형성될 것이다. 軍部內의 빨치산세력은 강경보수 내지 온건보수의 성향을 주로 보일 것이며,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등 김정일지지 新進官僚들은 온건보수 내지 온건개혁의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기술관료집단은 다수가 온건개혁의

117) Sidney I. Ploss, *Conflict and Decision Making in Soviet Russia: A Case Study of Agricultural Policy, 1953-1963*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especially Introduction and Conclusion.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김정일이 등용한 해외유학경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성향이 뚜렷하다. 김정일의 親·姻戚들은 대부분 다른 기능집단에 속하여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金聖愛, 金平一이라고 할 수 있다. 金聖愛의 성향은 가늠하기 어려우나 김정일과 반대되는 세력에 가담할 것이며, 金平一은 성격과 많은 외국생활 경험을 고려하면 온건 개혁 내지 과격개혁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북한이 앞으로 政策路線에 따라 分派를 형성하고 이에 따른 권력갈등의 정치형태를 보인다는 것은 과거의 귀속적 파벌중심의 갈등을 지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¹⁸⁾ 이와 같은 정책적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된다면 주체이념에 대한 盲信度가 낮아지고 世襲權力繼承에 대한 반대세력도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많은 기술관료들이 김정일에 의해 등용되었으나 이들이 김정일 권력세습을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지할지는 의문이다. 만일 김정일이 권력승계 과정 초기에 후계를 계승하고 불합리한 指導力을 보인다면, 군부와 기술관료내에서 改革性向을 나타내는 지도자들은 연합하여 김정일 축출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 쿠데타를 주도한 집단에서 적절한 후계대상자를 찾지 못한다면, 북한 주민에 대한 권력의 정통성을 고려하여 金平一을 후계자로 추대할 수도 있다.¹¹⁹⁾ 물론 이 경우도 쿠데타 주모자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金平一은 상징적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權力承繼過程에서 등장한 集團指導體制의 性格은 어느 分派가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이다. 북한이 세대교체를 곧 경험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강경보수 세력의 등장보다는 온건보수와 온건개혁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지도자들은 기존의 體制, 理念, 政策 등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놓고 갈등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온건보수와 온건개혁이 공존하는 상황하에서 북한의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代案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활성화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118)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梁性喆, “北韓의 權力承繼와 政治變化,” 39-42.

119)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북한정치 동향보고서에서 제기되었다. <朝鮮日報>, 1993년 10월 17일.

것이며 생산효율성 증가를 위한 개혁 정책과 외국과의 경제협력 증대를 도모할 것이다. 역시 中國式 社會主義 모형이 가장 유력한 代案으로 등장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과거의 전통과 업적에 대한 비판과 옹호가 동시에 시행되며 수령중심의 권력구조를 집단지도체제에 맞게 수정할 것이다. 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舊同盟國과 관계를 정상화하며, 미국·일본 등과 새로운 외교관계수립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남북한관계 역시 경제협력중심으로 증진될 것이다. 과두적 집단지도체제하에서는 과격한 개혁정책을 수행하기란 본질적으로 어렵다. 집단지도체제의 균형유지가 지도자들의 최대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북한에서의 권력승계 투쟁이 극도에 달하여 정치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체제붕괴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金日成의 죽음은 북한 주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북한 체제의 장래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김일성의 죽음은 북한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큰 충격과 염려를 줄 것이다. 그들은 김일성의 죽음이 다가오는 줄 알면서도 이에 대한 對備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金日成의 “위대한” 지도력에만 의존하여 안일한 임기응변적 정책만을 추구하여 왔다. 산적한 體制危機的 문제들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속에서 김일성과 혁명위업만 계승 발전시키면 해결되는 양 착각에 빠져있다. 레닌주의가 舊소련에서 낡은 시대의 유물로 전락되었듯이 金日成主義 또한 時代錯誤的인 遺産임을 북한 지도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核武器 開發을 통하여 外勢로부터의 위협만 抑止한다면 북한 체제는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金日成 死後 북한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世襲承繼가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가능성은 있다.

金正日이 일시적으로 권력승계를 하여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지도자로서의 부정적인 자질과 성격을 나타내어 수령으로서의 權威를 확보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성급한 政策들을 자행한다면 북한의 권력승계는 치열한 권력투쟁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이 變革的 指導者로서의 자질이 결여되어 있다면 黨의 이데올로기와 조직을 통제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결국 자신의

측근세력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가중되는 經濟危機, 특히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은 인민대중들에게도 더이상 “대를 이은” 충성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북한에서 무엇보다도 道德的 指導者로서의 이미지를 상실한다는 것은 커다란 타격이다. 김정일은 소위 “仁德政治”라는 명목하에 충성과 효성을 강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인민들의 생일잔치, 회갑잔치, 진갑잔치 등을 차려주고 있지만 이러한 전시효과적 정책은 북한의 經濟構造가 뒷받침 해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은 김정일 권력기반을 약화시켜 북한지도자들의 內紛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金正日이 가장 안정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는 軍部로부터의 저항이 金正日의 권력승계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빨치산 출신과 신진세력의 갈등은 군개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전반적인 개혁 문제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軍部の 新進勢力은 김정일에게 충성을 거부하고, 技術官僚와 親 姻戚내에 있는 反金正日 勢力과 연합하여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앞에서 논의한 集團指導體制의 형성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북한의 정치도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면 김정일 支持勢力과 反對勢力간의 內戰狀態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內戰狀態는 北韓의 政治體制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북한의 권력승계로 인한 체제붕괴 가능성을 높이는 또하나의 요인은 民衆革命이다. 현재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반란의 형태가 보도되고 있으나 아직 反政府勢力이 社會勢力으로 등장하여 대중운동을 전개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와 같은 갑작스런 민중시위의 폭발과 일부 지도층의 반란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권력승계과정에서 改革政治가 실시되고 統制體制가 제한적으로나마 自由化된다면 북한에서 社會勢力의 등장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적어도 수년간 지속적인 改革 開放 정책이 실시되어 다수의 인민이 북한 사회와 外部世界와의 차이를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겠다. 북한에서의 民衆革命은 궁극적으로 북한 사회주의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한반도 통일에의 길도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5장 결론: 北韓의 體制變化와 政策的 對應

舊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공산당 정권의 몰락은 근본적으로 經濟的 沈滯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政治的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舊社會主義 國家들에 있어서의 指導力이 道德性을 상실하였다는데 있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共產主義 理想社會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국민들의 기본권과 생활수준을 희생시키면서 사회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중앙집권적 행정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舊社會主義 國家들의 국민들은 기대하였던 理想社會는 요원한 현실로 나타나고 다른 사회 즉 資本主義 體制보다도 열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공산당 지도력의 허구성과 도덕성을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는 민중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舊소련의 경우는 이러한 도덕성의 비판이 권력승계와 더불어 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결국 體制改革에 실패하고 몰락하고 말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中國은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1989년 天安門 事件과 같은 民主化 운동을 탄압하면서도 정통성을 유지하여 왔다. 이것은 바로 덩샤오핑이 국민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속적인 발전 약속을 통하여 道德的 指導力을 발휘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事例는 북한 정치체제의 장래 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침체는 민중봉기의 수준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民衆革命의 충분조건에 불과하며 民衆革命을 위한 필요조건은 바로 북한지도자들의 도덕적 허구성을 북한 주민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金日成은 道德的 指導力을 발휘하여 왔다. 그러나 權力世襲을 앞두고 있는 金正日은 지금까지 상징조작과 전시효과적 정책만을 수행하여 왔을 뿐 아무런 실질적인 정책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金日成 死後에 있을 권력승계는 北韓政體의 장래를 결정짓게 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의 권력승계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북한의 體制的 危機를 현실화시킬 것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권력층의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북한의 권력승계후계자가 어떠한 개혁정책을 추구하더라도 기존의 경직된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體制危機를 극복하지 못 할 것이다. 반면에, 근본적인 체제개혁을 실천한다면, 이것은 북한 지도자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결국은 制限的이고 微溫的인 개혁정책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中國式 社會主義가 체제를 유지 발전시킬수 있는 代案으로 부상되고 있지만 中國과 北韓은 다르다. 중국이 경제개혁 및 개방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자원과 인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앙집권화된 체제에 기인한다. 그러나 북한은 資源과 人力 그리고 經濟力 면에서 독자적인 改革과 開放政策을 추구하기에 어려운 조건하에 있다. 그리고 사회적 同質性과 고도로 中央集權化된 체제는 경제개혁과 더불어 정치적 민주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政策的 代案이 도출된다. 첫째, 갑작스런 북한 정권의 붕괴는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북한이 일단 改革과 開放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여 개혁을 통한 체제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권력승계는 外部의 영향을 적대시하고 가장 덜 받고 있는 정치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노력은 피하여야 한다. 어떠한 후계자가 등장하더라도 결국 체제붕괴는 불가피하므로 이때에 外勢의 개입에 의한 붕괴 보다는 스스로 붕괴하도록 해야 통일여건의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核武器 問題등과 같이 한반도 안정에 위협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사용하되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經濟協力과 外交關係의 증진기회를 항상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이중전략은 북한의 권력승계에 있어서 改革勢力의 등장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북한의 체제붕괴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것처럼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인내력을 가지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金日成이 사망하는데는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며, 권력 승계이후에도 적어도 1-2년은 체제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체제붕괴까지는 20세기

가 끝나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①북한원전

『근로자』

<로동신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조선 문화어 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조선전사』 3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조선중앙년감』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제7권.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②국내문헌

고병철. “북한의 정치변화.”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고영환. “眞相!北韓의 實勢 金正日·金正日그룹,” 『新東亞』 (1991년 11월).

공기두. “북한의 정책결정과정과 관료.” 『북한연구』. 제2권 4호 (1991년 가을).

郭承志. “北韓의 後繼者論과 權力繼承過程.” 『安保研究』, 제23호 (1993).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과 北韓社會主義』. 서울: 문우사, 1988.

김남룡.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북한』 (1992년 9월).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1호 (1991년 봄).

김남식.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 심층분석.” 『통일문제시사자료』.

- 제41호.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1992. 4.
- 金星岩. “七顛八起의 오독이 對南總責 金仲麟,” 『北韓』 (1992년 1월).
- 김운용. “북한의 헌법이론과 통치제도.” 『북한학보』. 제2집 (1978).
- 김원. “북한의 국토개발체제.” 『북한』 (1990년 10월).
- 金昌順. “金日成의 리더십과 統治스타일.” 『北韓研究』, 제2권 제2호 (1991년 여름).
- 김환석. “북한의 정책결정, 그 이론과 실제.” 『북한연구』. 제4권 1호 (1993년 봄).
- 도홍렬. “조선로동당의 충원과 정치사회화.” 『북한연구』 (1991년 가을).
- 돌베개편집부 편.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 류길재. “조선로동당과 북한의 당 정관계.” 『북한연구』 (1991년 가을).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권력구조와 김일성이후 정책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朴漢植 편. 『北韓의 實相과 展望』. 서울: 同和研究所, 1991.
- 스즈키 마사유키. “金正日の 指導力과 政策展望: 구호나무 「발전」과 그 교양사업의 전개를 중심으로.” 『安保研究』, 제23호 (1993).
- 신정현.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가능성 분석.” 碧波 李命植 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갈등』. 서울: 대왕사, 1991.
- 안병영. “북한 정치엘리트의 구조분석.” 『亞細亞研究』, 제16권 2호 (1973.6).
- 안재성.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군 친위세력의 갈등,” 『北韓』 (1992년 3월).
- 알렉세이 사하로프, 편집부 역, “실제적 북한통치권 장악한 김정일과 그의 위세.” 『북한』 (1992년 9월).
- 梁性喆. “북한의 권력계승과 정치변화.” 제7회 미주지역학술대회. 『90년대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서울: 통일원, 1991.
- 梁性喆. 『北韓政治論』. 서울: 박영사, 1991.
- 양호민. 『북한사회의 재인식(I)』. 서울: 한울, 1987.
- 柳錫烈. “金正日の 權頭와 政權繼承.” 『亞細亞研究』, 제30권 2호 (1987).

7).

柳永玉. “북한 권력승계의 변수, 김평일.” 『北韓』 (1991년 7월).

윤황. “김일성 정치적 리더쉽과 권력승계체제 전망.” 상·하, 『북한』 (1992년 9월).

이기봉. “군사쿠데타, 그 가능성은.” 『북한』 (1991년 4월).

이기봉. “북한군부를 움직이는 사람들.” 『북한』 (1992년 6월).

李明哲·車斗鉉. “7次 改定憲法을 중심으로 본 北韓 權力變動 展望.” 『國防論集』, 제21호 (1993년 봄).

李命英. 『統一의 條件』. 서울: 종로서적, 1989.

장명봉. “북한 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북한연구』. 제4권 1호 (1993년 봄).

전광석. “북한 헌법상 통치조직의 변천.” 『북한연구』. 제4권 2호 (1993년 여름).

전인영.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全賢俊·安仁海·李宇榮.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鄭用吉. “北韓의 權力承繼와 體制改革의 상관성.” 『地域研究論叢』, 제4집 (1992).

統一院, “북한의 개정헌법 분석 및 全文.” 『월간 북한동향』 (1992년 11월).

統一院.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정보분석실, 1992.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0.

<서울신문>

<세계일보>

<中央日報>

『內外通信』

③외국문헌

Politics. 2nd ed. Boston: Little, Brown, 1978.

- Cha, Young Koo and Tae Ho Kim. "Prospects for Political Change and Leadership Succession in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2 (Winter 1991).
- Hill, Ronald J. and Peter Frank. *The Soviet Communist Party*. 3rd ed. Boston: Allen & Unwin, 1986.
- Kim, Pan S. "The Role of Elites in Leadership Succession and Challenges in North Korea." *East Asian Review*. vol. V, no. 1 (Spring 1993).
- Koh, Byung Chul.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8, no. 3 (Fall 1984).
- North, Titus. "The Kim Jong-Il Succession Problem in the Context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tructure."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6, no. 1 (Spring 1992).
- Rigby, T.H. "The Soviet Leadership: Toward a Self-Stabilizing Oligarchy?." *Soviet Studies* 22, no. 2 (October 1970).
- Rush, Myron. *How Communist States Changes Their Rule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 Tucker, Robert C. *Politics as Leadership*.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81.
- Yang, Seung Ham. "Soviet Succession Politics: Explaining the Case of Gorbachev."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1).

北韓體制 變動 展望을 위한 政治經濟學的 모델

—人民에 焦點을 둔 社會化理論과 合理選擇理論의
적용을 中心으로—

研究責任者：趙 己 淑 (梨花女子大學校)

목 차

(요약문)

제 I 장 머릿말	237
1. 연구의 목적	237
2. 연구의 범위	238
3. 연구의 방법	239
제 II 장 정치경제학적 변동 모델	240
1. 변동이론의 분류	240
2. 전통적 변동모델	244
(가) 사회학적 모델	244
(나) 정치사회화론의 기본명제	246
(다) 정치사회화론에 대한 비판	251
(라) 전통이론에 대한 비판은 극복될 수 있는가?	253
3. 갈등론적 모델 : 국가-사회론	255
4. 양 모델의 차이점과 공통점	259
(가) 사회중심적 모델	259
(나) 국가중심적 모델	261
(다) 거시적 모델의 공통점	263
5. 합리선택이론에 의한 새로운 통합모델	264
(가) 합리적 선택모델	264
(나) 통합모델에서 도출된 가설들	267
(다) 합리선택모델과 정치경제	274

제 III장 북한체제 변동의 전망	276
1. 북한체제변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	276
2. 북한체제유지의 기제	279
(가) 이념과 사회화	279
(나) 힘에 의한 지배	283
(다) 경제문제	286
(라) 정보의 통제	289
3. 북한체제변동의 기제.....	293
(가) 이념과 강제력.....	293
(나) 경제문제와 정보	297
4. 북한정치변동의 시나리오	301
(가) 변동의 종류 : 선택의 대안에 따른 분류.....	301
(나) 위로부터의 대안에 의한 변화	303
(다) 아래로부터의 대안에 의한 변화	309
제 IV장 맺는말 : 요약과 정책방안	312
<참고문헌>	317

北韓體制變動 展望을 위한 政治經濟學的 모델

趙 己 淑(梨花女大)

요 약 문

북한에 관한 연구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과 특수성에 가려져서 이 분야에서의 이론적 발전은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북한 체제변동에 관해 많지 않은 이론적 연구의 특징은 첫째로, 이론의 유형에 있어서는 주로 북한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협범위 이론, 또는 사회주의 일반론을 강조하는 중범위 이론을 사용해 왔다. 둘째로 분석의 수준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제관계의 종속변수로 다루거나, 북한내부의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주로 거시적인 접근법을 사용해 왔다. 미시적인 연구를 할 경우에도 주로 最高權力者나 엘리트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변동의 주체로서의 인민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저조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미시적 수준에서 일반이론을 적용하여 인민에 대한 연구를 행하는 경우에도 주로 서구중심의 이론을 평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생긴 문제점은 첫째로 북한을 국제관계의 종속변수로 다루던 연구는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하지 않는 북한의 실체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서구에서 발전된 사회학적 이론을 평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유지하는데 주체사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을 정도로 국가이념의 사회화 역할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서구식 사고방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는 북한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사회론은 적실성이 없다고 간주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틀로 북한을 연구하려는 노력은 아주 미미했었다. 그러나 과거의 이론적 시각은 전혀 수정함이 없이

동구의 와해, 독일의 흡수통일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북한체제의 붕괴를 서슴없이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일관성있게 도출될 수 있는 가설인지 의문스럽다. 반면에 북한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변화를 전망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연구도 이론적으로 명쾌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체제변동을 전망하기 위한 정치경제학적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변동은 체제의 유지와 동전의 서로 다른 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체제의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은 그 이론 체계안에서 일관성있게 변동도 설명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체제의 유지와 변동을 동시에 설명하는 모델을 합리선택이론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전반부는 이론화작업에 할애된다.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 발전된 이론적 모형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체제유지의 기제(mechanism)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변동을 전망해 본다.

이 논문에서 제시될 모형은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미시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행위에 필수적인 대안과 지불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거시적인 접근법을 통합하고 있다. 둘째로 이 연구는 그동안 수동적인 존재로서 통치의 대상이었던 북한의 인민을 정치에서 합목적적인 선택을 하는 주체로서 간주한다. 셋째로 그동안 변동이론의 양대산맥으로 꼽힐 수 있는 균형론과 갈등론의 시각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일반이론의 수준에서 새로운 통합모형을 구성한다.

그동안 정치학 이론에서 정치변동과 관련이 있는 이론은 크게 균형론과 갈등론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균형론은 사회중심적 이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서구에서 체제의 유지와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갈등론은 맑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계급갈등으로 역사의 변동을 설명한다. 두 이론은 세계에 대한 가정에서부터 이론적 시각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두 이론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두 이론은 거시적인 접근법으로서 인간의 미시적인 결정과정에는 무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증가능한 가설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접근법이 유용하므로 이 연구는 합리선택이론에 의해 이 두 이론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통합모델은 구체적으로 정치변동에 직접적 연관을 갖는 정치사회화론과 국가-사회관계론을 통합한다. 정치사회화론은 사회체제의 유지와 지속은 성공적으로 설명하지만 개인의 정치행위나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많은 예외성은 설명하지 못한다. 국가론은 국가가 독립변수로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가가 사회로 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사회화 모델은 이념의 중요성을 국가론은 경제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또한 구분이 된다. 이러한 두가지 이론을 합리선택이론에서 통합하면 이론의 구성은 사회화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입장으로 부터 기술된다. 합리선택이론의 기본요소는 행위자들 (개인, 인민, 또는 대중),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대안과 관련된 확률과 지불값,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정보의 수준이다. 이때 대안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이다.

국가는 동의에 의한 지배와 힘에 의한 지배를 한다. 사회가 국가를 압도하는 곳에서는 사회이념과 국가이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의에 의한 지배영역이 크고 반대로 강제력에 의한 지배영역은 축소된다. 이 때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넓은 의미의 경제문제이다. 이는 맑스주의자가 말하는 생산관계 뿐 만이 아니라, 성장, 분배의 제 문제를 포함한다. 개인은 국가와 사회가 제시하는 대안으로 부터 선택을 하는데 이때 현상태를 저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집합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변화가 온다. 정치변동이 오기 위해서는 태도에서의 변화가 행동에서의 변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이 개인이 갖는 목표에 부합하다면 국가는 용이하게 정치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국가가 사회와 갈등을 일으킨다면 개인은 사회이념에 충실하여 국가에 저항할 수도 있고, 국가에 충실하여 사회적 관습을 저버릴 수도 있게 된다. 국가가 제시하는 대안은 정책, 지도자, 정권, 체제의 차원에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 선택을 결정할 때 원칙은 1)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것 2) 직접경험이 간접경험에 우선한다는 것 3) 국가이념과 국가정책의 결과를 비교하여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통합모델에서 도출될 수 있는 가설은 1) 국가는 개인의 태도 보다는 행위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2) 국가의 영향에 의한 반복적인 행위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단, 개인이 태도의 지속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받는 효용이 태도의 변화로 인해 사회나 국가로부터 받는 효용을 능가할 때에는 예외이다.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존의 태도를 지속하여 국가에 계속 저항할 것이다. 3) 청년은 다른 연령에 비해 태도나 행위를 바꿀 확률이 높다. 4) 정보의 취득이 용이한 사람은 태도나 행위의 변화가능성이 높다. 5) 사회적 성숙이 대안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국가와 사회의 갈등이 크지만 국가로부터 변동의 대안이 생기지 않을 때, 사회가 조직력이 생기면) 위로 부터의 대안이 주어지지 않아도 체제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때, 북한의 체제유지나 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동일하다. 그것은 1) 동의에 의한 지배를 결정하는 사회이념과 국가이념 및 그것의 사회화기제이다. 2) 국가와 사회의 우위를 결정하는 힘에 의한 지배이다. 3) 선택적 대안의 지불값을 결정하는 넓은 의미의 경제문제이다. 4) 정보의 수준은 선택의 대안과 선택의 전략을 결정한다. 이상의 네가지 요소가 어떻게 북한이 오늘날까지 체제유지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를 결정했으며 이러한 네가지 요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단과 한국전일 것이다. 이 네요소에서의 변화를 통해 전망해 본 북한의 체제는 변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변화는 변동의 주체세력에 따른 분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안이 어디서 부터 주어졌느냐에 따라 위로부터의 대안에 따른 변화와 아래로 부터의 대안에 따른 변화로 양분하였다. 북한에서는 위로 부터의 대안이 자발적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경제의 실패로 아래로 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또는 국제관계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주어질 확률이 많다. 이 경우 체제의 유지를 위해 다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경제개혁을 미룬다면 경제위기에 의한 아래로 부터의 욕구분출은 체제의 위기로 까지 연결될 수 있다. 지도자나 정권차원에서 대안이 없으면 조그마한 변동의 요구도 체제의 변동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개방을 통해 경제개혁에 성공한다면 체제는 당분간 안정되겠지만 외부로부터의 정보의 유입에 의해 아래로부터 새로운 대안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아래와 타협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북한의 딜레마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함으로써 체제에 위협적인 시도를 해야 되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북한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은 개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경제성장을 꾸준히 하여 아래로부터의 분출을 막는 길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권력을 공고화하지 못한 가운데 개방을 하게 되면, 국가의 강제력이 약화되어 정보의 통제가 어려울 것이고, 다른 대안을 위에서 제시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 아래에서 부터 오는 변화의 요구가 체제변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주의의 문제는 체제의 속성상 다원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일원주의로서 여러차원의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 변화의 요구가 있게 되면 체제의 변동으로 즉각 연결되거나, 위에서 대안이 온다고 해도 그 대안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속성의 수정을 필연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의 변동은 체제변동을 할 확률이 높다. 이는 대안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에서 부터 결과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암시하는 정책적 제안은 무엇인가? 우선 통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통일은 흡수통일로만 가능한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통일이 우리의 최우선과제라면 남한은 북한의 체제의 몰락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조차도 방해하면서 경제적 원조에 비협조적임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언젠가는 체제변동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통일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통일의 비용은 한민족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후자를 원한다면 북한의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해 통합의 길로 들어서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을 위해 협조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경제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통제력을 상실하기

전에 개방을 시작함으로써 통제를 병행하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피한다면, 또는 정권의 차원에서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중기적으로는 아래로 부터의 요구와 타협함으로써 체제의 지속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북한체제의 변동전망이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커다란 차이점은 이러한 전망이 이론으로 부터 추론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망들이 상식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근거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론적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인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가정한 연구에서 이 연구와 꼭 같은 전망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이론적 가정과 전망이 논리적이지 못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 연구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자극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북한의 핵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변동 전망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모델

趙己淑 (梨花女大)

I. 머릿말

1. 研究의 目的

북한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예외없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은 “한반도는 언제쯤 통일이 될 것인가?” “통일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업적들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북한체제변동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북한의 체제변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업적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관한 연구분야는 북한의 특수성에 가려져 이론적 발전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체제변동연구를 위한 이론적 작업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치체제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일반론을 추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북한의 체제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구성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구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북한의 향후 체제변동 양상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자의 목표는 일반이론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정치체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정치체가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에서 부터 시작하여 이론을 구성하되 이론의 부분 부분은 특정 정치체를 이해하기 위한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야망에 찬 시도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는 두고 보아야겠지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사회과학자는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를 자처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북한체제가 변화해갈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경로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로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북한체제변동의 가능성이나 변동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학자에 따라 각양각색의 예측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접하는 우리들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왜 이렇게 다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누구의 연구를 신뢰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연구가 각자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러한 주장들이 주관적이고 설명이 부족하여 이들 연구를 상대평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학자마다 사용한 이론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었는지, 중요하게 간주하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인지, 어떤 연구는 잘못 수행되었기 때문인지 혼돈스럽기만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예측해 놓은 여러갈래의 변동시나리오들이 타당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체제변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 예상시나리오는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있는데 반하여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론적 틀과는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증명은 틀렸지만 우연히 정답은 맞춘 수학문제풀이와 같은 식이다. 이는 북한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는 비평을 그대로 증명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의 II장에서는 체제변동을 설명하는 통합적인 모델을 구성한다. III장에서는 기존의 북한체제변동에 관한 연구들을 정리하여 예상되는 변동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것들이 II장에서 제시한 변동이론과 어느정도 일관성이 있는지 평가한다.

2. 研究의 範圍

이 연구에서 일관성있게 쓰이는 이론적 틀은 합리선택이론이다. 기존의 일반론의 수준에서 쓰였던 두가지 거시적 이론적 시각(균형론과 갈등론, 또는 사회학적 접근법과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을 통합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시적 접근법인 합리선택이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균형론과 갈등론은 서로 상반되는 이론적 함의를 지니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리선택이론을 매개로 통합될 것이다. 새로운 통합모델의

구성을 위하여 II장의 1절에서는 변동이론의 분류를 시도한다. 2절에서는 사회학적 접근법의 내용과 문제점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후의 노력과 그것이 성공적이었는지를 토론할 것이다. 3절에서는 사회학적 접근법에 대한 대안의 이론으로 국가론이 제시될 것이다. 그러나 두 이론은 각각 개별적인 문제점과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그것이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이 4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두 이론을 상호보완하기 위하여 5절에서는 합리선택이론을 매개로 통합될 것이다.

III장의 1절에서는 북한체제변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법론에 따라 분류한다. 2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모델을 이용하여 그동안 북한의 체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왔던 기제를 밝힌다. 많은 사람들은 전체주의 사회의 안정을 이념의 확산에서 찾는다. 북한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회로서 이념이 강력한 체제안정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특히 다른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북한의 응집력을 보장해준 토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가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II장에서 제시된 합리선택이론에 의한 통합모델과 일관성있게 체제유지에 기여한 요인들을 규명한다. 3절에서는 북한에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고려하여 체제변동을 가져오게 될 요인을 살펴본다. 이 때 체제의 유지를 가져온 요인은 변동을 가져오는 요이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4절에서는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위로부터의 대안에 의한 변화가능성과 아래로 부터의 대안에 의한 변화가능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끝으로 IV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고, 이 연구가 암시하고있는 정책제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한다.

3. 研究의 方法

필자가 가지고 있는 연구의 출발점은 북한체제변동을 전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북한연구에의 접근을 보다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시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필자가 합리선택이론이라는 연역이론을 이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료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려는 모델은 정치경제학적인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연역적인 이론이나 모델은 기본가정으로 부터 시작하여 정치현상을 추상화한다. 가정과 일관성있는 추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경험적 증거의 부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앞으로 북한 연구에 많이 쓰여져야 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논문이 추상적인 이론화에 의해서만 추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연역적 이론의 타당성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들이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는데 경험적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이 연구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구에서 주로 사용된 일반이론의 차원에서 변동모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북한에 일회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구권이나 쿠바, 중국, 베트남 등의 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연구의 커다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모델은 서구의 연구에 조차 아직 한 번도 응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모델의 세련화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필자가 이 모델을 북한사회에 먼저 적용하는 이유는 서구적 맥락에서 구성된 일반이론이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체제의 설명에 설득력을 갖는다면 일반이론의 구성이라는 연구목표에서 볼 때 일단 성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매우 시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북한에 대한 연구가 이 모델의 세련화를 도울 것이라 믿고 있으며, 앞으로 이 모델을 이용한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하리라 생각한다.

II. 政治經濟學的 變動 모델

1. 變動理論의 分類

일반적으로 정치변동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분석의 차원(level of analysis)에서 미시적인 접근법과 거시적인 접근법이 있다. 미시적인 접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려는 모델은 정치경제학적인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연역적인 이론이나 모델은 기본가정으로 부터 시작하여 정치현상을 추상화한다. 가정과 일관성있는 추론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경험적 증거의 부족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앞으로 북한 연구에 많이 쓰여져야 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논문이 추상적인 이론화에 의해서만 추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연역적 이론의 타당성은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들이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는데 경험적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이 연구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구에서 주로 사용된 일반이론의 차원에서 변동모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북한에 일회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구권이나 쿠바, 중국, 베트남 등의 연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연구의 커다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모델은 서구의 연구에 조차 아직 한 번도 응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모델의 세련화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필자가 이 모델을 북한사회에 먼저 적용하는 이유는 서구적 맥락에서 구성된 일반이론이 정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체제의 설명에 설득력을 갖는다면 일반이론의 구성이라는 연구목표에서 볼 때 일단 성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매우 시험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북한에 대한 연구가 이 모델의 세련화를 도울 것이라 믿고 있으며, 앞으로 이 모델을 이용한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하리라 생각한다.

II. 政治經濟學的 變動 모델

1. 變動理論의 分類

일반적으로 정치변동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분석의 차원(level of analysis)에서 미시적인 접근법과 거시적인 접근법이 있다. 미시적인 접근

법은 주로 인간의 심리적 과정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변동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거시적인 접근법은 정치구조나 사회적 조건들을 이용하여 정치변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미시적인 접근법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연구의 전략은 확연히 달라진다. 소수의 최고 권력엘리트층에 대한 연구로 부터 체제변동을 전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변동의 원동력을 일반 민중에 대한 연구로 부터 이끌어 내기도 한다. 거시적 접근법은 주로 정치, 경제적 구조나 사회구조적 조건으로 부터 변동을 전망한다.

한편, 이론의 적용범위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일반이론, 중범위이론, 협범위이론이 있다.¹⁾ 일반이론은 모든 정치체제를 총 망라하는 보편적 이론을 추구한다. 이것이 모든 사회과학자의 궁극적 이상이겠지만 이러한 이상은 그동안 현실로 부터 멀리 있었다는 반성도 있다.²⁾ 중범위이론은 특정의 문화나 사회적 조건을 공유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협범위이론은 하나의 정치체제의 사례연구로 부터 구성된 이론을 말한다. 이 두가지 분류기준만으로, 즉 분석의 차원과 적용범위에 따른 이론의 조합을 보면 변동이론은 미시적 일반이론, 거시적 일반이론, 미시적 중범위이론, 거시적 중범위이론, 미시적 협범위이론, 거시적 협범위이론의 6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류는 표1에 정리되어 있다.

		이론의 적용범주에 따른 분류		
		일반이론	중범위이론	협범위이론
분석의 수준	미시적	합리선택이론	사회주의엘리트론	북한엘리트론
	거시적	사회학적접근법 국가-시민관계론	사회주의일반론	북한체제론

표1 정치변동모델의 분류

북한체제변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³⁾를 이론의 적용범주에 따라 살펴보

1 김응진, 『정치학방법론서설』 명지사, 1992: 53-56.

2 Giovanni Sator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1970: 1033-53.

3 이 연구의 III장 1절에서 기존의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이론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3. 동원체제적 접근법

여기서 동원체제는 단순히 정치권력의 획득, 또는 유지, 확장을 피하기 위해 전자원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접근법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에 따라 대중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전자원을 일정한 방향(특히 생산력발전)으로 동원하는 메카니즘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엑스타인(Alexander Eckstein)에 따르면 특정한 국가의 정치체제는 일정한 사회적 욕구와 정치적 능력간의 산물이며 저발전 국가는 욕구가 큰 반면 능력이 작기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따라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혁명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힘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저발전국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동원체제가 되고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조직은 그것이 의식적 무의식적이건 자발적인 지지와 그 체계의 인간행동가치의 내재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투입생산성향상과 투입동원화 상승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특히 초기의 동원화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순수한 자발적 자기희생정신과 개인적 욕구를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종속시키느냐에 따라 효과를 발휘한다. 프로이드(Zigmund Freud)에 따르면 동원은 “개인이 그의 이기적 이상을 버리고 대신에 지도자로 구현된 집단적 이상이 그자리를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³⁷⁾ 이러

(May 1973), pp. 36~51.; Paul H.B.Godwin, "Communist Systems and Modernization: Sources of Political Cris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VI, Nos.1 & 2, (Spring-Summer 1973), pp. 107~134; Benjamin Schwartz, "China's Developmental Experience, 1949-72," in Michel Oksenberg, (ed.), *China's Developmental Experience, Proceedings in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Vol.XXXI, No.1 (March 1973), pp.17~26; Carmelo Mesa-Lago and Carl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 Pa.:Univ. of Pittsburgh,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1975); Mark G. Field, (ed.),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n Communist Societies*, (Baltimore, Maryland: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1976); Nina P.Halpern,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in Communist Systems:The Case of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22, No.2/3, (Summer/Autumn 1989) pp.139~152; Edward Friedman,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Leninist States:The Case of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22, No.2/3 (Summer/Autumn 1989) pp.251~264; Victor Nee and David Stark, (eds.),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Stanford, CA:Stanford University Press,1989); Ko Jae-Nam,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form Communism" 『중소연구』 제14권 제2호 (1990년 여름호).

36) Alexander Eckste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Vol.XXII, No.4 (July 1970), p.481.

37) Sigmund Freud,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 (New York,1967), p.61 in Alexander Eckstein, *ibid.*, p.481.

하게 되는 조건은 민중으로 부터의 잠재적 지지와 정치, 사회, 경제구조적 조건이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반론의 수준에서 엘리트와 민중의 상호관계, 인간의 의지와 구조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것이다.

일반이론을 추구하는 연구중에서 정치변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이론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동안 미국식 주류정치학을 형성했던 파아슨즈(T. Parsons)의 영향을 받은 체계론, 구조기능론, 발전론 등의 균형론적 시각을 갖는 일련의 이론들이고, 다른 하나는 맑시즘으로 대표되는 갈등론적 시각을 갖는 일련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최근에 갈등론적 시각은 신맑스주의자나 신베버주의라는 이름으로 부활되었다. 균형론은 이 연구에서 사회학적 접근법이라고 불리우며,⁴⁾ 갈등론은 국가-사회관계이론 또는 국가론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정치경제학적 이론들이다.

한편, 사회주의체제는 다른 체제를 연구하는 이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는 증범위이론을 추구하는 연구도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중 첫번째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변동은 그 사회의 구조적인 역학에 의해 일반적인 생성소멸의 과정을 겪는다는 사회주의 일반론에 입각하여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은 변동경로를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번째로는 첫번째와 비슷하지만 기본적인 차이점은 사회주의 블록을 하나의 세계체제로 파악하여 북한도 이러한 세계체제의 일부로서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범위이론은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북한사회를 연구하기 위한 고유의 방법론으로 체제변동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주로 일반이론의 수준이므로 증범위나 협범위이론 수준의 연구는 이론적 관심보다는 경험적 사례에 보다 주목할 것이다.

일반이론의 수준에 있어서 정치적 변동이나 변화는 크게 체제내적

4 배리(Brian Barry)교수는 합리선택이론이 경제학적 모델인데 반하여 파아슨즈의 이론은 사회학적 모델이라고 칭했다. Brian Barry, *Sociologist, Economists, and Democra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변화와 체제외적 변화, 즉 체제 자체의 변화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⁵⁾ 균형론적 시각은 주로 체제내적 변화를 다룬 이론이고 갈등론적 시각은 체제자체의 변화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⁶⁾ 바꾸어 말해서 균형론적 시각은 체제자체가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하여 어떻게 체제내에서 변화하고 적응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반면에 갈등론적 시각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변동의 역사로 보고, 변동의 역학을 이론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두 부류의 연구는 지적 전통을 달리하고 있다. 파아슨즈의 사회학적이론은 서구에서 변동보다는 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발전했다. 국가론은 맑시즘이 새롭게 부활된 것으로서 시민사회와 국가간의 힘의 갈등에 의해 체제의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는 최근 제3세계나 동구권의 연구에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서구의 연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전자의 사회중심(society-centered)의 이론으로 부터 후자의 국가중심(state-centered)의 이론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간다는 주장이다.⁷⁾ 따라서 이 두이론은 외견상 아주 상반되어 보이고 이론적 타당성을 배타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이론은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고 있다. 즉, 두 이론이 개별적으로는 불완전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이론의 통합이 이 장에서 시도될 것이다.

2. 傳統的 變動모델

(가) 사회학적 모델

서구에서 사회학적 이론이 40, 50년대 주류로서 등장하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서구는 사회가 국가에 우선하는 오랜전통을 가지고 있

5 엑스타인(H. Eckstein)교수는 이를 힘에 의해 정치구조와 정치행태를 의도적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 및 기술로서의 변화유형인 정치적 변질(political transformation)과 단순히 정치적 상황이나 구조적 변화를 위주로 하는 유형유지의 변화(pattern-maintaining change)로 나누기도 한다.

6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

7 Peter Evans, Dietrich Rueschemeyer, Theda Skocpol,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85.

다. 서구에서 근대국가 형성시기에 만연했던 이념은 자유주의이며 국가는 필요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국가란 최소한의 지배를 하는 것이었고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되었을때 사회의 영향력이 국가에 까지 확장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들은 시민사회가 성장하여 국가에 대항하기 전에 식민지를 경험하였고 식민지는 과대성장국가라는 유산을 남겼다.⁸⁾ 이런 곳에서 서구중심의 이론이 들어 맞을 리가 없다.

파아슨즈에 있어서 “사회학의 근본적인 이론적 문제는 질서의 문제”라고 했을 정도로 사회학적 모델은 “인간집단과 사회가 어떻게 그같은 안정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구성부분들이 파괴적인 갈등을 극소화할 수 있게끔 통합되어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⁹⁾ 그동안 파아슨즈에게 가해진 많은 비판의 핵심은 파아슨즈의 이론은 변동을 개념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비판은 두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는 이론체계가 불완전하여 변동을 이론체계안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아슨즈의 이론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¹¹⁾ 이러한 비판이 한마디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이 연구는 파아슨즈이론의 효용성과 문제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파아슨즈의 이론이 나오게 된 역사적 환경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파아슨즈의 이론이 체계화되던 50년대의 미국은 가장 안정되고 조화로운 시기였다. 그의 이론이 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특히 파아슨즈는 인류학과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사회학자이다. 사회는 정치체에 비해 연속적이고 지속적이며, 급격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적어도 파아슨즈의 이론은 사회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설명하는데에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8 Hamza Alavi, "The State in Postcolonial Societies: Pakistan and Bngladesh," *New Left Review*, No. 74, 1972 ("과대성장국가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임영일, 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까치, 1985.

9 Benton Johnson, 『사회과학의 구조기능주의』 박영신역, 현대사상신서, 학문과 사상사, 1978: 20.

10 그 대표적 비판의 예는 다렌돌프와 밀스에게서 찾을 수 있다. Ralf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Mills, C. Wright,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11 벤튼 존슨, 앞의 책: 91.

또한 국가에 비해 사회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서구에서 정치학자들이 사회중심적 이론을 빌어 정치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도 그들의 전통과 역사를 고려할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파슨스의 지적 전통을 이어받은 알몬드의 구조기능론이나 이스튼의 체계론 등이 비교적 포괄적인 이론체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는 60년대 이후 미국이 반전운동과 흑인민권운동 등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었고, 이들 서구 중심의 이론을 제3세계 등에 적용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문제는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자 우리나라학계에서는 서구중심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며 일반이론에 대한 경계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우리의 역사적 특수성에 입각한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론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어느 점에서 타협할 것인지, 완전한 일반이론은 불가능한 것인지 하는 문제들이 다시 제기 되기 때문에 서구 중심의 이론을 폐기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체제의 유지와 안정은 변동과는 동전의 앞뒷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체제의 안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같은 이론체계 안에서 일관성있게 체제의 변동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변동에 대해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체제의 안정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이론체계는 이미 모순점을 지니고 있거나 불완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서구에 맞지 않는 서구이론은 서구에도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경계에 의해서 이론의 적합성을 따지기 전에 이론의 논리적 체계가 완벽한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면 전통이론이라고 칭해지는 사회학적 이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적이었는지를 살펴보겠다.

(나) 정치사회화론의 기본명제

전통이론에 있어서 정치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설명하는 핵심이론은 정치사회화론이다. 정치사회화는 두가지 의미로 정의된다. 하나는 거시적 수준에서 정치사회화가 수행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 수준에서 정치사회화를 당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정치사회화개념은 전자의 의미로 쓰일 때이다. 같은 맥락에서 탭턴은 “가장 넓은 의미로 정치사회화란 사회가 그 정치문화를 한 세대로 부터 다음 세대로 전이하는 방법을 의미한다”¹²고 정의한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정치사회화를 어린이의 개성적인 인성의 성장발달에 초점을 맞춘다.

전자의 의미로 정치사회화를 연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정치체계론자인 이스튼(D. Easton)¹³과 구조기능론자인 알몬드(G. Almond)와 그의 共著者인 버바(S. Verba), 파월(B. Powell)¹⁴ 등이다. 이들은 정치사회화가 정치체계의 지지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정치체가 존속하고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으로 부터 일반적이고 확산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는데, 정치사회화를 통하여 이러한 지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에서 정치사회화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그린슈타인(F. I. Greenstein)¹⁵과 프로만(L. A. Froman)¹⁶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개인의 인성발달단계나 개인적 인성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른 정치적 태도를 습득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정치사회화과정에서 환경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이 과정에서의 개인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이거나 심리적이다.¹⁷ 심리학적인 이

12 Kenneth P. Langton,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1969: 4.

13 D. Easton and J.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14 G.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2nd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8; G.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15 F. I. Greenstein, *Children and Politic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6.

16 Lewis A. Froman Jr., "Personality and Political Socialization," *Journal of Politics*. Vol. 23. 1961: 341-352.

17 David O. Sears, "Political Socialization," F. Greenstein and N.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Addison-Wesley: 95.

론은 개인의 심리적 정향에 일차적 관심을 갖고 정치학적 이론은 이러한 심리적 정향의 정치적 의미에 관심을 갖는다.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정치학자의 관심을 받게 된 연구는 당연히 거시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의 연구이다. 심리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관심을 더 자극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정치체제의 안정과 지속을 설명하는 기제로서 관심을 갖게되었기 때문에 결과한 현상이기도 하다고 생각된다.

정치학자에게 있어서 정치사회화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당화는 어렸을 때의 태도의 취득이 정치체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¹⁸ 또는 어렸을 때의 학습은 나중에 있을 학습을 구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는 어렸을 때의 학습이 거르는(filter)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즉, 어린이의 정치사회화를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른의 태도와 행위에 어렸을 때의 흔적이 잔류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가지 이유는 어렸을 때의 태도와 행위가 잔류할 뿐만 아니라 어른의 정치적 정향을 구조화하거나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이스튼의 이론에 의하면, 어린이는 정치적인 인물,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정부나 제도와 동일시한다고 하는데 이를 개인화(personalization)라고 한다. 또한 어린이가 정치적 인물을 강력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상화(idealization)는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정부에 대한 확산적인 지지로 전환된다고 한다. 이 확산적인 지지는 정치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에 바로 어린이의 정치사회화를 연구해야 할 중요성이 놓여 있는 것이다. 바로 체제의 정통성의 기반이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치사회화론의 핵심은 지속성테제(continuity thesis)와 가정(family)의 중요성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정치사회화론에 의하면 정치적 인간이 되는 훈련은 이미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받는다고 한다. 사회화를 시키는 매체(socializer)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family writ large). 또한 어려서 부터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정치에 대한 사회화를 받은 경험은 커서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고 한다.

18 David O. Sears, 앞의 글, 95.

19 Harry Eckstein, "A Culturalist Theory of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3, 1988: 791.

정치사회화에 의해서 개인이 습득하게 되는 것은 정치적 태도와 행동이다. 사실 정치학자들의 직접적 연구관심대상은 정치적 행위이다. 그러나 태도는 행동을 결정한다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정치학자들이 태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태도는 세가지 차원의 정향(orientation)으로 이루어진다. 감정, 인지, 평가적 정향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감정적 정향이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이다.²⁰ 감정적 정향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적 정향은 매우 안정되어 있고 지속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다른 인지적 정향이나 평가적 정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감정적 정향은 어린시절에 형성이 되며 이는 후에 성인이 되어 갖게될 평가적 정향과 인지적 정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 정향이 결정되는 것은 어려서 가정에서의 경험이라고 한다.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재생산하는 곳은 바로 가정이며, 가정에서의 경험은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이때 형성된 감정적 정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정치사회화론의 기본 명제이다.

태도에 있어서의 지속성은 여러가지 연구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았다. 그러나 행위에 있어서는 상황적인 변수가 많이 좌우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물론 어렸을 때의 경험이 행위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태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상황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어른의 태도에서 어렸을 때 태도의 지속성을 발견함으로써, 또한 성인의 행위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어렸을 때 행위의 지속성을 발견함으로써 정치사회화의 명제가 어느정도 경험적 뒷받침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²¹

필자는 정치적인 태도나 행위의 대상을 적어도 세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² (1) 넓은 의미의 정치체제 (2) 정치체제의 하위

20 Angus Campbell,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1960.

21 David O. Sears, 앞의 글, 137.

22 가장 영향력있는 분류는 이스튼이 행한 것으로 (1) 정치적 공동체 (정치적으로 함께 연대되어 있는 집단) (2) 정권 (정치적 역할과 제도, 게임의 규칙등을 포함하는 헌법적 질서) (3) 정치적 권위 (권위를 가진자)로 나눈다. 이 중에서 사회화연구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정권과 정치적 권위에 대한 것이다. David Easton,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1990: 12.

개념으로서 정권²³ (3) 정당이나 정치적 권위가 그것이다. 한배호교수는 정치체제를 “한 정치단위체 (전형적으로 국가라는 단위)안에 존재하는 가장 포괄적이며, 모든 수준의 정치적 관계 패턴”이라고 정의한다. 정치체제란 한 국가의 사회, 문화, 심리, 경제적 조건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²⁴ 그리고 사회와 정권(국가)사이의 정치체제라는 포괄적인 정치적 관계 패턴으로서의 정치적 구조가 개재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로 민주주의체제, 사회주의체제라고 할 때에는 이처럼 국가와 사회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결정짓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체제에 대한 태도는 정통성에 관한 것이고, 체제를 지지하는 태도에서 반대하는 태도로 변했다는 것은 체제의 정통성을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체제구성원 대다수가 이러한 태도와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는 체제자체의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이는 혁명을 의미한다. 만일 체제구성원의 대다수가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권의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변화하게 되면 정당구도의 개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처럼 태도나 행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 변동의 종류나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정치사회화론은 서구에 있어서 정당소속감과 투표행태 분야의 연구에 주로 응용되었다. 이는 정치사회화론이 주로 체제내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이용되었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소속감은 대표적인 정치적 태도에 관한 것으로서 어려서 부터 부모의 정당소속감을 감정적으로 동일시하게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와 같은 정당소속감을 갖게 된다고 정치사회화론은 설명한다. 또한 투표행위에 있어서도 정당소속감이 투표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정당소속감이라는 감정적 정향이 후보자 선호나 정책선호라는 인지적, 평가적 정향에 까지 영향을

23 한배호 교수는 위의 논문에서 정권을 국가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정치체제가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형의 정권형태를 취한다고 한다. 국가론자는 정치체제라는 개념에 대신하여 국가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지만 국가가 정치체제와 동일한 개념이라기 보다는 정치체제의 일부 작은 영역을 지칭하는 하위개념으로 이해된다. 한배호, “남북한 정치변화의 구조적 분석과 통일과정,” 제3회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3: 2.

24 한배호, 앞의 글, 3.

미치기 때문에 감정적 정향이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50, 60년대의 산물이다.²⁵ 그러나 70년대 이후 이러한 주장은 심한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비판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²⁶

(다) 정치사회화론에 대한 비판

정치사회화이론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60년 증반이후 70년대를 지나면서 정당에 대한 소속감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소외가 그 시대의 특징적인 현상이 되었다. 안정된 성향이라고 간주되었던 감정적 정향이 흔들리면서 정치체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정치체제에 대한 도전세력들이 곳곳에서 등장하여 정치불안을 조성하였다. 선거결과를 정당소속감에 의지하여 예측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단기적인 요인들이 선거결과를 결정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사회화론자들은 태도가 행위를 결정한다고 믿었으나, 단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행위가 반복되면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정치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보다 가정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없어졌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화 기제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도전이 미국내에서 시작되기 전에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적 정치사회화론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다. 혁명 등의 체제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고 사회학적 모델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질문을 하기로 하겠다. 전체주의의 소용돌이후에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된 독일이나 일본에 있어서의 연구는 정치사회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예외성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의 전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화론자들은 이들 나라의 권위주의 문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정치문화가 전체주의 정권에 대한 지지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문화가 재생산된 곳은

25 Angus Campbell외, 앞의 책.

26 Norman H. Nie, Sidney Verba, John R. Petrocik, *The Changing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바로 가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쟁에 패망한 이 두나라에는 순식간에 戰勝國에 의해 移植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한 정치체에 대한 충성에서부터 다른 정치체에 대한 충성으로의 급작스런 이동을 어떻게 정치사회론은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사회화과정의 단절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만일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사회화기구라면 전체주의를 가능하게 한 권위주의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꾼 곳도 가정이란 말인가? 일본과 독일의 파시즘은 권위주의적 문화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 후 이곳에서 꽃핀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문화가 없이 가능했을까? 정치문화란 정치사회화에 의해 유지, 전달되는 것으로서 아주 점진적인 변화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정치문화가 이처럼 급격히 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지 않고 가장 안정된 정치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믿어지는 미국만을 보아도 정치사회화론은 심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시어즈(David O. Sears)는 앞에서 제시한 이스튼의 이론이 경험적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시어즈는 이스튼의 이론에 대한 경험적 반증을 제시한다. 즉, 대통령 등의 정치적 인물을 개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는 어린이의 경우도 후에 정치체에 대해서는 매우 지지적으로 된다고 한다. 따라서 어렸을 때의 이상화나 개인화 같은 것이 정치체를 향한 분산적 지지에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사회화론이 설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현상은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이다. 중대선거는 기존 정당지지 분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선거결과를 가지고 온 선거이며 이 선거의 영향으로 이후 정당지지분포가 재편성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⁷⁾ 예를 들어, 1928년의 선거를 키(V. O. Key)교수는 중대선거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정당지지도의 분포에 있어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에 의해서 기업의 독점이 심각해졌으며 급기야는 1929년의 경제공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많은 유권자들이 1928년 이미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1932년에는 루즈벨트대통령의 일련의 국가개입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그후 이 선거를 계기로 정당구도가 완전히 재편되는데 민주당에 대한 정당소속감을

27 V. O. Key, Jr., "A Theory of Critic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17, 1955: 3-18.

치적 학습이 근접성과 신선감때문에 초기에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둘째로, 정치적 학습은 전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인지할 때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셋째로, 성인기는 가장 비판적인 시기라고 한다. 따라서 초기의 사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수정은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이론적 수정이 기존의 사회화이론체계와 일관성있게 설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초기의 성인시기에 사회화의 단절을 가져오는지 이러한 단절은 왜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것인지 사회화이론은 설명할 수 없다. 사회화이론의 예외조항에 속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전통적 정치사회화론의 핵심은 태도의 지속성에 있으며, 가정이 가장 중요한 사회화기구인데 반하여, 초기의 성인시기에 정치사회화의 단절을 경험해야 할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세번째의 시도는 문화이론도 정치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엑스타인(Eckstein)의 뚜렷한 목적의식에 의한 반론이다.³¹ 엑스타인은 사회화이론을 함축하고 있는 문화이론이 그 이론체계내에서 정치변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문화이론의 체계속에서 일관성있게 변동을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구조적인 변화에 반응하여 성향에 있어서의 변화를 할 경우에는 유형유지적인(pattern-maintaining) 변화를 한다고 한다. 유형유지의 기능이란 “체계안에서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일련의 공통된 가치를 규정하고 유지시키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행위자는 사회화되어야 하며, 실패에 직면했을 경우 그들의 확신감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보조를 맞추어 나갈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³²는 것이다. 만일 갑작스런 사회화의 단절이 일어난다면 문화적 성향은 상당한 기간동안 형태를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 기껏해야 수동적인 순응을 하는 척 할 뿐이라는 것이다. 혁명적인 변환이 짧은 기간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

Primacy Principle: A Biosocial Critiqu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 No. 3, 1987: 205. 김재영외,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형설출판사, 1990에서 재인용.

31 Harry Eckstein, 앞의 글.

32 벤튼 존슨, 앞의 책, 51.

느끼는 유권자가 공화당에 소속감을 느끼는 유권자를 수적인 면에 있어서도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정당지지분포가 거의 몇십년간 지속되었다. 즉, 중대선거란 정당지지분포의 재편뿐만이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쟁점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러한 변화가 한 동안 지속되는 계기를 가져온 갑작스러운 선거를 일컫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사회화론으로 독일이나 일본에서의 경험과 미국에서의 이러한 중대선거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치사회화론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보자.

(라) 전통이론에 대한 비판은 극복될 수 있는가?

전통적 정치사회화이론을 비판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기된 첫 번째 주장은 예외를 만드는 것이다. 즉, 정치적 위기나 재난등이 닥치면 정치사회화의 단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²⁸ 예를 들어, 천재지변, 전쟁이나 대공항 등의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면 인간의 태도나 행위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미봉책(ad hoc)에 불과하다. 어느정도의 위기가 오면 어느정도의 단절이 초래되는지 도저히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단지 대공항에 의해 정당소속감이 변화된 다음에야 이 이론은 대공항이라는 경제적 위기가 정당소속감이라는 태도를 변화시켰다는 미봉적 서술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두번째의 시도는 정치사회화는 일생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에 덧붙쳐서 특히 젊은 성인(young adult)시기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론을 수정하는 것이다.²⁹ 앞에서의 이론이 어렸을때의 경험을 강조하는데 비하여 사람이 성인이 되어 처음 정치체와 접하게 되는 18-20세대의 경험이 일생을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령 소미트(A. Somit)와 피터슨(S. A. Peterson)은 다음의 세가지 우선원칙을 제시한다.³⁰ 첫째로 가장 최근의 정

28 Jerome M. Clubb, William F. Flanigan, and Nancy H. Zingale, *Partisan Realignment*. Beverly Hills: Sage, 1980.

29 Paul Allen Beck, "The Electoral Cycle and Patterns of American Politics,"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isberg eds.,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2nd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84: 519-544.

30 Alert Somit and Steven A. Peterson, "Political Socialization's

다.

문화이론으로 변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의도했던 것 만큼 성공적이지 못하다. 필자가 변동의 일반론을 구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미봉적인 수준의 설명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결국 정치사회화론을 통해서 체제의 유지의 존속은 설명했는지 몰라도 바로 눈 앞에 닥친 변동을 설명하는데에는 실패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변동은 안정과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한다. 체제의 유지를 설명하는 이론은 자동적으로 변동에 대한 설명을 함축해야 한다. 정치사회화론은 당연히 발생하는 변동을 설명하고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이론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한동안 유행했던 주제인 정치사회화론이 80년대 이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외면당한 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II장에서 다시 밝히겠지만 정치사회화론은 북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아주 빈번히 애용되어온 이론적 틀이다. 특히 북한은 사회라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국가가 압도적인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화론의 이론적 함의를 무시한채 마구 적용해 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요즈음 정치변동설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 葛藤論的 모델: 國家-市民社會論

구조기능주의나 다윈주의 등의 사회중심적 이론에 불만을 가진 일군의 학자들은 과거에 버려졌던 국가(state)라는 개념을 정치학 분석에 다시 부활시키게 되었다. 정부를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간주하지 않는 사회중심적 이론에 반기를 든 국가론자들은 독일식 전통을 이어받은 신마르크스주의자나 신베버주의자의 이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어떤 이는 국가를 계급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간주하며, 또 어떤 이는 국가를 생산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관리자로 파악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정치적 계급갈등이 일어나

는 장으로 국가를 간주하기도 하는데 국가를 어떻게 다르게 개념화하는가 하는 차이보다 국가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국가가 사회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³³

스테판의 국가에 대한 정의를 보면 첫째로, 국가는 “정부”이상의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정치체에서 시민사회와 공권력간의 관계를 구조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내에서도 여러가지 중요한 관계를 구조화하려고 시도하는 지속적인 행정적, 법적, 관료적인 억압적 체계라고 한다. 둘째로, 국가는 반드시 단일적인 것이 아니며 지속적 관리, 사법적 및 억압적 장치와 같은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로, 국가는 조직적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접촉을 복종으로 유도한다. 끝으로 현대국가에서 이러한 질서체계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구속적 권위를 주장한다고 한다.³⁴

이처럼 국가는 “방대한 행정기구와 경찰력, 군사력을 통한 무력과 설득의 수단을 장악함으로써 사회계급으로부터 독자적인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³⁵는 것이다. 특히 제3세계의 경우는 국가가 사회세력에 비해 흔히 압도적인 지배력을 보이는데, 이는 계급구조에서의 어떤 틈새가 국가에게 허용하였다기 보다는 국가자체가 압도적인 강압력을 장악한데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강압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구자체의 형성과정과 조직적 특성에 주목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한다.³⁶ 바로 이 점이 일반이론의 구성에 있어서 정치체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연구에 이용되는 국가론은 마르크스주의적 경제결정론과 베버주의적 정치결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경제적 조건이 독립변수

33 한배호 교수는 사회의 종속변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34 Alfred Stepan, *The State and Society: Peru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xii-xiii. 이용필, “국가의 체계론적 모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한국정치학회편, 법문사, 1987.

35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2: 32.

36 김영명, 앞의 책, 33.

가 되고 국가를 매개변수로 간주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를 독립변수로 간주한다. 강민교수는 전자는 오도넬의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후자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 정치경제구조의 분석을 소홀히 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보다 적실성있는 국가이론의 퍼스펙티브는 한 마디로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과 베버류의 정치사회학이 화해롭게 만나는 기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⁷⁾

국가론은 정치변동을 직접적인 관심주제로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인 변수로 환원을 하는 사회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맹렬한 비판으로 부터 부활된 국가론은 정치적인 변수, 즉 국가를 독립변수로 다룬다는 매력에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론의 이론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통일되어 있는데 반하여, 국가론은 국가에 대한 개념조차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학자에 따라, 연구하는 국가에 따라 제각각인 것이 커다란 문제이다. 이에 대해 알몬드와 이스튼은 과거의 법적 제도적 형식적인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국가-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려고 했던 주류정치학의 노력을 모두 헛수고로 만든채, 전혀 정립되지 않은 국가라는 개념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다고 국가론자들을 맹공격하고 있다.³⁸⁾

이러한 공격에 대한 국가론자들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³⁹⁾ 이들은 이스튼 등의 정치사회화론자들이 사람들이 정치체제에 들어가기도 전에 밖에서

37 강민, "국가이론의 한국적 적실성,"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한국정치학회 편, 법문사, 1987.

38 Gabriel A. Almond, "The Return to the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3, 1988: 853-874;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Besieged by the State," *Political Theory*. Vol. 9, 1981.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비판: 정치체계론의 시각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39 Eric A. Nordlinger, Theodore J. Lowi, and Sergio Fabbrini, "The Return to the State: Critiqu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3-3, 1988: 875-901.

일어나는 것을 연구한다고 비난한다. 대신에 국가라는 개념은 충분히 경험적인 검증이 가능한 이론적 변수라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정도, 또는 국가의 상대적 강도 혹은 약도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가 가능한 개념이라고 한다. 국가란 권력과 같이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이 개념이 없이는 정치학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고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정의와 접근법이 학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론자들의 정치변동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정치변동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힘의 대결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영명교수는 정치변동연구의 방법론은 구조와 행동, 국가와 민간사회,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그리고 정치적 변수와 경제적 변수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⁴⁰

어느 한 요소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양자의 상대적 자율성과 상호작용에 주의를 하여 모델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론에 있어서 국가의 성격규명에 대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정치사회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지 기제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정치사회화의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정치변동 혹은 체제의 유지를 가져오는 정치사회화의 기제(mechanism)에 대한 것이다. 위에 나열된 요소들이 국가론에 의한 변동모델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요소라는 것을 지적하고 앞의 두 모델을 통합한 새로운 모델의 구성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40 김영명, 『』 을유문화사, 1992.

4. 兩 모델의 차이점과 공통점

(가) 사회중심적 모델

사회중심적 모델의 특징은 한마디로 사회를 국가에 우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학적 이론이라고 불리워지는 구조기능주의나 다원주의 체계이론 등이 엄밀히 말해서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이며 국가가 사회의 영향을 받는만큼 사회도 국가의 영향을 받는다고 사회학적 이론의 선구자들은 소리높혀 주장하고 있다.⁴¹⁾ 그러나 정치사회화론에 대해서 만큼은 이것이 얼마나 사회중심적 이론인가에 대해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사회화론에 의하면 개인이 정치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기 전부터 정치적 태도나 행동이 형성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의 경험이 국가와의 경험을 미리 구조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바나는 사회적 경험보다는 정책의 변화, 지도자의 교체, 전쟁, 경기불황 등의 정치적 영역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사회화론자들을 비판한바 있다.⁴²⁾

이러한 사회학적 모델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어느 특정 국가가 사회에 비해 열세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 모델은 커다란 문제가 없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세력의 성장으로 부르조아 혁명에 의해 국가가 성립된 서구의 경우는 사회가 국가에 비해 압도적 우월성을 누리고 있고 사회와 국가의 갈등도 적기 때문에 사회중심적 이론으로도 많은 부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50, 60년대에 사회화론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역사적 시대적 상황이 이러한 모델의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또는 국가의 정책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사회화과정

41 G. A. Almond, 1988, 앞의 글.

42 Dennis Kavanagh, *Political Culture*.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2.

의 단절이 생기게 되었고 사회중심적 모델에 대해서 회의가 일게 되었다. 특히 뉴딜이후로 국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서 진행된 국가영역의 확대현상은 기존의 사회화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예외성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물론 사회학적 모델이 이러한 천재지변을 모델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백(Beck)교수의 정치변동의 사회화이론은 위기나 재난 등의 정치적 변수를 모델에 포함하고 있다.⁴³ 백교수는 미국에서 정치변동주기가 매 30년 마다 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화론으로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다. 백교수에 의하면 구조적 조건에 변동이 왔을 때 항상 정치변동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수준에서 그것을 각각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가령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여러 연령층 중에서 청년(young adult)이 이러한 구조적 조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회화에 의해 형성된 태도를 바꿀 확률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은 아무래도 변화에 저항하여 태도를 바꿀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한다. 반면 이때 청년은 자신의 변화된 태도를 확고하게 갖을 뿐만 아니라 후에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전수하는데에도 성공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손녀세대에서는 전대에 서 했던 경험이 더 이상 생생하지도 않고 한번 세대전이를 거친 경험이기 때문에 손녀들을 사회화하는데에는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 사회화실패로 뚜렷한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손녀세대들이 정치에 입문하게 될 때, 경제적 위기나 전쟁등의 구조적 변동이 있게 되면 기존의 태도를 저버리고 쉽게 변화를 수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생생한 경험은 다시 세대전이를 하게 된다. 구조적 조건이 정치사회화되는데 실패한 일군의 청년 집단을 만날때에만 비로소 정치적 변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는

43 Paul Allen Beck, "The Electoral Cycle and Patterns of American Politics,"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isberg eds.,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2nd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84.

구조적 위기들이 매 30년의 주기로 변동을 야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회화기제 때문이라고 한다.

백교수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화이론에 정치적 변수를 첨가한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변수의 첨가가 기존의 사회화이론의 논리적 핵심을 다치지 않고 첨가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백교수 이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어렸을 때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화이론을 과연 일관성있게 수정하였는가에 있다. 이 이론은 첫째로 왜 위기적인 사태에 대한 경험은 사회화의 경험을 능가하는가 하는 의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위기적인 사태의 경험이 세대전이를 통해서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경우에는 사회의 영향력이 강력하고 어느 경우에는 국가의 영향력이 강력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없다. 둘째로 왜 젊은 성인이 사회화의 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도 아니고 유년도 아니고 왜 하필 젊은 성인인가? 사회화이론은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경험을 강조한다는 사회심리학이론의 특성을 가진 이론이다. 그러나 백교수가 강조하는 젊은 세대의 특이성은 사회화이론에서 연역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을 다른 연령으로 부터 구별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와의 역학관계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 국가중심적 모델

국가중심적 모델은 국가가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국가는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베버의 정의를 따른다. 베버는 국가는 영토와 그 안에 있는 국민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는 강제적인 조직체라고 정의한다.⁴⁴ 국가는 강

44 Theda Skocpol,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Peter Evans, Eietrich Rueschemeyer,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7.

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규제, 통제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또 하나 국가의 특징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의 특징이 국가가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지배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국가중심모델의 기본가정이다.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단절이 있게 된다면 이것은 사회에서 오는 것이 보다는 국가에서 개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의 변화, 지도자의 교체 등은 체제내에서의 점진적인 변화를 야기한다. 전쟁이나 경제적 위기 등은 체제자체의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도 가진다. 사회는 국가에 비해 지속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국가는 사회보다 훨씬 동적이다. 사회화과정에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면, 국가는 사회에 대하여 독립변수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사회화모델에 국가론이 개입된다면 모델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인가? 모든 개인이 일률적인 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회화의 대상이 되는 개인차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화대상의 입장에서 모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중심적 모델이건 국가중심적 모델이건 간에 개인차에 대한 이해는 없다. 이 두 모델은 거시적 접근법으로서 변동을 가져오는 조건을 구조적으로 추상화한 이론이다. 물론 균형론의 경우는 실제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접근법이 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다. 사회학적 접근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국가를 법적이나 제도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정적이고 형식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불만때문이다. 정치체계란 개념은 국가에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행위자를 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학적 접근법과 행태주의적 연구의 결합은 우연이 아니다. 사회학적 모델이 연역적 방법에 의한 거시적 이론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미시적이고 행태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두개의 거시적 모델을 개인중심의 모델로 매개하는 것이 경험적 연구를 위한 전략으로서도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새로운 모델의 구성에 앞서서 거시적 모델의 공통점과 한계점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 거시적 모델의 공통점

위의 사회중심적 모델이나 국가중심적 모델이나 거시적인 접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거시적인 모델에서 개인은 사회화를 당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따라서 사회화의 내용이나 사회화를 수행하는 매체(socializer), 사회화의 결과에 비하여 사회화를 당하는 개인(socializee)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은 전체적인 사회화의 구조 속에 함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사회화가 중요한지 간접적인 사회화가 중요한지 하는 차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 차이에 따른 가설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경험적 연구의 유용에도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사회구조의 시각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개인이 체제 유지에 순기능하는 존재로 길러지는가 하는 것일 뿐이다.

국가론의 시각에서도 개인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다.⁴⁵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은 이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급갈등의 양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국가가 사회에 비해 강한지, 약한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정치변동의 경로가 결정되는 것이다. 개인의 시각에서 이론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러나 비슷한 경제적 조건에서도 국가가 서로 다른 발전경로를 겪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으며 이 때, 개인의 선택적 행위가 이론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를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델은 기본적으로 국가중심이론과 사회중심이론을 합리선택이론의 입장에서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모델이라고 하여 단순한 절충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두 모델이 분석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새로운 모델로 부터 일련의 가설을 도출하여 검증해 보겠다.

45 물론 기든스같은 학자의 경우는 개인과 구조와의 긴장관계에 주목하였지만 국가론은 기본적으로는 미시적인 개인의 선택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시적인 이론이다.

5. 合理選擇모델에 의한 새로운 통합모델

(가) 합리적 선택모델

합리선택이론은 주어진 구조적 조건하에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선택에 초점을 맞춘다. 합리선택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인간은 합목적적이라는 것이다.⁴⁶ 인간이 합목적적이라함은 주어진 대안으로 부터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⁷ 합리선택이론은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선택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는 자신의 선호에 순서를 매길 수 있는 행위자들, 일련의 선택적 대안들, 대안과 관련된 지불값(payoff),⁴⁸ 그리고 정보의 수준과 관련된 상황적 조건이다.⁴⁹ 합리적 행위자는 각 대안과 관련된 확률과 지불값을 곱하여 얻게 되는 값의 평균값 즉, 기대치를 근거로 하여 행위를 선택한다. 이 때 확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정보의 수준이다. 행위자가 상황에 대한 완전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따라 전략의 종류가 결정된다. 또한 위험을 무릅쓸것인지 (risk-acceptant), 위험을 회피할 것인지 (risk-averse) 하는 조건이 전략을 결정한다.

합리선택이론에 있어서 대안과 정보의 수준은 구조로 부터 주어진다. 이때 구조는 사회와 국가와의 긴장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회가 압도적

46 합목적성에 대한 정의는 William Riker and Peter Ordeshook,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olitical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장 참조.

47 조기숙, "합리적 유권자모델과 한국의 선거분석" 『선거와 한국정치』 한국정치학회편, 1992.

48 황수익, "정치학과 합리적 선택접근법," 『한국정치학회보』 1985: 37. 합리적 선택모델을 구성하는 가장 단순한 요소는 (1) 특정 시점에서 어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체적 행위들로 구성되는 집합 즉 대체행위군 (set of alternative courses of action)과 (2) 그 개인의 대체행위군을 구성하는 각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즉 발생가능한 결과군 (a set of possible outcomes)이다.

49 황수익 교수는 결정상황을 확실성의 조건, 위험의 조건, 불확실성의 조건으로 나눈다. 앞의 글, 38쪽 참조.

인 곳에서는 사회학적 모델에 의한 예측이 합리선택에 의한 예측으로 부터 사회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면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 사회학적 모델은 가치나 규범에 순응하는 대안을 선택하는데 반하여 합리선택이론은 주관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가 사회에 비하여 강력한 곳에서 합목적적 개인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⁵⁰ 이 때 국가는 사회와는 달리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권위적 배분을 통한 동기부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면 합목적적 개인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에 순응하여 사회적인 태도나 행위를 저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중심적 모델은 국가와 사회가 갈등관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사회중심적 모델은 예외적인 변동을 제외한 사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 국가중심모델이 역할을 발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긴장관계에 있을 때, 즉 갈등을 일으킬 때이다. 2차대전 이후 서구에서도 국가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점차로 사회중심적 모델이 설명력을 잃는 이유는 바로 국가가 점차 사회를 압도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3세계의 경우에 사회중심적 모델이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강한 국가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국가와 사회가 갈등을 일으키면 선택을 하여야 한다. 개인이 국가가 제시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이며 사회가 제시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우선 국가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힘에 의한 지배이고 다른 하나는 동의에 의한 지배이다. 힘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동의에 의한 지배는 사회학적 모델이 가정하는 것처럼 국가의 권위가 개인 각자에게 내면화되어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바로 정치사회화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그람시의 용어를 빌리자면 헤게모니에 의한 지배가 된다.⁵¹ 즉, 지배계

50 모든 개인이 효용극대화의 전략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최대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전략의 선택은 게임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51 Martin Carnoy, 『국가와 정치이론』 이재석외 역, 한울, 1985. 3장 참조;

급의 이데올로기가 피지배계급에게도 주입이 되어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것이다. 동의에 의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념이다. 동의에 의한 지배와 힘에 의한 지배는 서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라서 양자의 지배 영역은 서로 반비례한다. 즉, 동의에 의한 지배영역이 작아질수록 힘에 의한 지배영역은 커지게 될 것이다.

사회학적인 모델은 주로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의 내면화를 동의의 지배를 위한 조건으로 간주한다. 규범과 도덕이라는 이념은 사회학적 모델에 있어서 독자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경제는 체제유지에 필요한 요소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한 국가에 있어서 동의에 의한 지배의 영역이 클수록 사회학적 모델의 효용성이 높아질 것이며, 힘에 의한 지배의 영역이 클수록 이 모델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모델(국가론이든 합리선택이론이든)에 있어서 동의에 의한 지배를 위한 필수 요소는 물질적 토대로서의 경제문제이다. 합리선택이론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효용성에 관심을 갖는다면, 국가론은 생산관계로서의 하부구조가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 그럼시에 있어서도 이념과 강제력에 의한 지배는 상부구조를 형성하고 하부구조는 다른 맑시스트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토대, 즉 경제구조로 이루어진다.

상부구조로서의 이념은 사회적 이념과 국가적 이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⁵² 사회가 국가에 비해 강력한 곳에서 또는 사회의 지배계급이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이념과 국가적 이념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체제내에서 사회화는 국가의 지배를 원활히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국가의 이념은 사회에서 사회화에 의한 재생산과정을 통해 동의에 의한 지배영역을 넓혀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지배계급이 국가를 지배하지 못하는 곳에서, 또는 국가의 권력과 사회의 지배계급이 갈등을 일으키는 곳에서는 국가의 이념과 사회의 이념도 상충하게 될 것이다. 이때 국가는 이념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물질

Joseph V. Femia, *Gramsci's Political Thou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52 그람시는 시민적 헤게모니와 정치적 헤게모니로 구분한다. 따라서 국가는 강압기구에 의해서만 시민사회로 부터 구분된다고 한다. Martin Carnoy, 앞의 책, 90쪽 참조.

적 유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무리하게 강제력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개인 또는 인민이 어느 쪽의 이념을 내면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치변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관건이다. 필자가 이 한번의 연구에 의해서 통합모델에 완벽을 기하려는 시도는 하지도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다. 앞으로 평생 동안 연구의 축적을 쌓은 다음에야 통합모델을 어느정도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와의 충돌에서 개인의 어느쪽을 따를 것인가를 이론적으로 추론하는 작업은 수많은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가설의 수준에서 시도해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나) 통합모델에서 도출된 가설들

통합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을 알기 위해서 통합모델로부터 검증가능한 가설을 도출해 보겠다.

가설I) 국가는 개인의 태도보다는 행위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로 통합모델로부터 도출되는 가설은 국가가 개인의 사회화과정의 단절을 가지고 온다면 태도보다는 행위에 있어서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력을 행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위는 강제력발동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쉽게 변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국가정책의 변화는 태도는 몰라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책이나 제도적인 변화를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꼽는다.⁵³ 앞에서 시어즈 교수가 태도에 비해 행위에서 단절성을 더 많이 발견하였다고 보고한 것은 이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해 준다. 행위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53 Ellen Boneparth, "A Framework for Policy Analysis," in Ellen Boneparth ed., *Women, Power and Policy*. Elmsford, N.Y.: Pergamon, 1982.

가설 II) 국가의 영향에 의한 반복적인 행위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II-1) 단 개인이 태도의 지속으로 인해 사회로 부터 받는 효용이 태도의 변화로 인해 사회나 국가로 부터 받는 효용을 능가할 때에는 예외이다.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존의 태도를 지속하여 국가에 계속 저항할 것이다.

두번째로 통합모델로 부터 도출되는 가설은 반복적인 행위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태도는 강제력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행위를 계속 변화하다 보면 태도와 행위사이의 괴리가 생기게 된다. 이 때, 사회로 부터의 심한 저항이 없는 한, 즉, 국가를 따르는 것이 사회적 이념과 충돌하지 않는 한, 태도는 행위를 따라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태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강할 때에 임시적으로 행위에 있어서 순응은 할지 몰라도 저항적인 태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예들을 직접 들어 가면서 가설을 세련화시키도록 해보겠다.

미국에서 대공황이후 일어났던 정당구도의 개편을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다. 당시에 공화당에 소속감을 느끼던 유권자는 민주당에 소속감을 느끼던 유권자를 숫적으로 압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선 민주당의 압승은 공화당에 소속감을 느끼는 유권자가 민주당을 찍음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태도와는 달리 행위에 있어서 일부 유권자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승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강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화의 분배를 다룬다. 따라서 공화당 방식의 분배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는 민주당방식의 분배를 원하여 민주당에 투표할 수도 있고, 단순히 공화당에 벌을 주기 위하여 민주당에 투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국가와의 경험과 사회와의 경험이 개인에게 있어서 갈등을 일으켰을 때, 개인은 국가와의 경험에 우선권을 주어 선택한 것이다. 정당소속감이 어렸을 때의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감정적 정향인지는 몰라도, 유권자가 되었을 때 국가와의 경험에서 형성한 정당에 대한 평가적, 인지적 정향에 의해 새로운 정당의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후 공화당에 소속감을 느꼈던 민주당 투표자들은 행위 뿐만 아니라 태도에 있어서도 민주당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변화되었다. 문

제는 무엇이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 아침에 이들이 정당 소속감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의 정책에 만족을 한 이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태도에 있어서도 민주당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⁵⁴ 사회학적 모델에 의하면 태도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에 의해 유발된 행위이지만 반복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태도의 변화까지도 가지고 온 것이다. 이것이 두번째 가설의 직접적 예이다. 갑작스러운 정당구도의 개편을 사회학적 모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항상 국가가 사회를 압도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회가 국가를 압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에서 창씨개명을 강요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에 순응했지만 창씨개명을 했다는 행위가 태도에 있어서의 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복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궁극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또한 행위에 있어서 조차 순응을 가져오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는 신정을 국정공휴일로 하여 일제시대 이후 계속 강요해 왔지만, 국민들은 계속해서 구정을 고집해 왔다. 아마 국가가 강제력을 발휘했다면 신정을 정착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공무원들은 할 수 없이 신정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곳에 강제력을 집행함으로써 국가는 자신의 정통성이 침해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의 정당구도 개편에 관한 예는 체제내에서의 변화를 가리킨다. 국가의 새로운 정책이 더 큰 효용을 주는 한, 개인은 저항없이 행위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뒤의 예는 국가와 사회의 지배계급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국가의 정책을 따르면 여러가지 물질적인 혜택을 받을지는 몰라도 이는 사회체제의 기본구조를 뿌리채 흔드는 것이다. 이럴때는 사회로부터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사회체제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비례하여 반발의 크거나 지속성도 결정되리라 예상된다.

54 Robert S. Erikson and Kent L. Tedin, "The 1928-1932 Partisan Realignment: The Case of the Conversion Hypothe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5, 1981.

정리해 보면 국가는 사회에 비해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재화를 분배한다는 특징때문에 개인의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될 수 있는대로 비용을 적게 지불하고 사회를 지배하고자 한다. 사회를 용이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국가는 정치사회화 또는 헤게모니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정치사회화나 헤게모니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행해지는 정치사회화나 헤게모니에 의한 지배를 극대화함으로써 국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항상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때로 국가는 사회와는 다른 목적으로 개인의 태도와 행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국가는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재화의 분배라는 유인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회체제를 부정하지 않고서도 물질적 심리적 유인으로 성원의 행위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국가는 커다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체제를 뒤바꾸는 무리한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동의에 의한 지배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동의에 의한 지배영역의 축소는 국가의 지배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며 따라서 통치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사회로부터의 조직적 반발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역량이 성숙하여 국가에 대대적으로 도전하게 되면 국가는 강제력에 의해서도 지배를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때 초래되는 것이 체제의 변동이다.

정치변동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상의 분석차원을 분류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필자는 정치적 대상을 정치체제, 국가(또는 정권), 권력자나 정당으로 나누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정치변동을 가져오는 조건은 합리선택모델의 요소에서 암시를 얻을 수 있다. 정치적 대상의 어느 수준에서든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그 수준에 맞는 선택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체제의 변동은 체제수준의 대안이 정권의 변동은 정권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령 사회학적 모델은 동의의 지배가 축소되면 체제변동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예를 들어서 거(Ted Gurr)나 데이비스(James Davis)의 혁명이론에 의하면 좌절에 의한 공격성,

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리적 변수가 혁명의 원인이라고 한다. 합리선택이론에 의하면 이것이 충분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대안의 지불값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대안과는 무관한 것이다. 대안은 구조적 조건으로 부터 주어져야 하며 대안이 있을 때에 한해서 정치변동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의에 의한 지배가 축소되어 더 이상 축소될 수 없을 때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체제가 더 오래 견딜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최악의 순간이 되기 전인데도 변동이 올 수도 있다.⁵⁵ 따라서 동의를 지배나 강제력의 지배의 영역에 커다란 변화가 없이도 정보에서의 변화, 위협의 수용정도를 변화시키는 조건,⁵⁶ 또는 대안과 관련된 지불값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동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치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 이 때 집단적인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합리적 선택모델에 의한 집합적 행동의 논리(the logic of political action)에 의해 설명가능하다.⁵⁷

행위자의 입장에서 또 한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간접적(direct) 사회화와 직접적(indirect) 사회화이다. 사회학적 모델은 이의 구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중요한 경험이 간접적으로 어린 시절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회화자(socializer)의 입장에서 이러한 차별을 두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선택모델의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이나 직접경험이나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동반할 수 있다. 인지심리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이 충돌했을 때 개인은 직접경험을 더 중요시 할 것이라는 추론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 물론 이는 경험적 검증을 받아야 할 가설의 단계이지만 합리선택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경험은을 따른다고 가정할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의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면 직접경험이 정보도 풍

55 Ronald Rogowski, *Rational Legitimacy*. New Jersersy: Princeton Univ. Press, 1974.

56 경제적 조건이 대표적으로 위협의 수용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57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부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경험을 따르게 되면 후에 선택을 반복하는 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최소한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공화당이 좋다는 간접경험을 갖고 성인이 되었다고 하자. 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에서 이 사람이 선거권을 가졌다면 공화당의 경제정책실패라는 직접경험을 놓고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이 선택을 좌우할 것인가? 물론 국가와의 직접경험을 교훈삼아 이 사람은 민주당을 택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공황의 위기에서 계속해서 공화당을 찍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들은 직접경험으로 공화당을 신뢰했을 확률이 많다. 가령, 자신의 직업상 공화당의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은 비록 공화당이 실정을 했을지라도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수밖에 어찌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이미 공화당을 몇년전 선택할 때부터 직접적 경험에 의해 선택을 했다면 갈등되는 직접경험을 했다고 해서 쉽게 선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미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했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선택을 바꿀 확률이 높은 사람은 간접경험과 직접경험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사람이고 그들은 바로 정치초년생인 청년층이다.

가설 III) 청년은 다른 연령에 비해 태도나 행위를 바꿀 확률이 높다.

청년층은 정치사회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간접적 경험과 자신의 직접적 경험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사회가 국가에 비해 압도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고 안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국가에서 사회와 다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확률이 낮다. 이 정치초년생도 새로운 대안을 선택할 여지가 없이 어렸을 때의 사회화경험이 그대로 잔존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새로운 대안이 주어지는 격동의 시기에, 개인이 정치에 새로 입문하게 된다면 어렸을 때의 간접적 경험과 현재의 직접적 경험을 비교하여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이가 든 성인의 경우는 어렸을 때의 태도나 행위를 그대로 지키기로 하였든지 변동하였든지 상관없이 이미 청년기에 선택의 과정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변동의 시기가 와도 다시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³⁰⁾

간접적 경험과 직접적 경험이 충돌하여 직접적 경험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면 이는 감정적인 정향보다는 인지적이고 평가적인 정향에 의한 선택일 확률이 높다. 어렸을 때에는 평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인지적이고 평가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대부분 감정적인 정향을 고수하는 경우는 인지적, 평가적 태도를 발전시키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다든지 정치적 이해가 높아서 정보를 풍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태도나 행위를 바꿀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설 IV) 정보의 취득이 용이한 사람은 태도나 행위의 변화가능성이 높다.

이 가설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구미에서도 정당소속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거나 정치적 인지가 높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제3세계에서 정치변동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은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화되어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기 보다는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선각자들이다. 체제의 변동이 지식인이나 외국으로 부터 다양한 대안을 접해본 사람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은 구체적인 경험적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상식적이다.

가설 V) 사회의 성숙이 대안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위로 부터 대안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제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혁명의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아래로 부터의 혁명이다. 위로 부터 대안이 주어질 때 혁명이 용이하게 달성될 수도 있지만, 사회가 성숙되어 아

58 사회화이론을 수정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청년기의 불연속을 가정함으로써 변동을 설명하려고 한다. 사회화이론체계내에서는 이러한 불연속을 가정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가론과 합리선택이론을 도입하면 이는 매우 그럴듯한 가설이 된다.

래로 부터 자발적인 조직이 이루어지고 대안을 구성할 정도의 합의가 있게 되면 아래로 부터의 혁명도 가능하다. 역사적으로 아래로 부터의 혁명이 성공한 경우는 시민사회에 의한 부르주아 혁명을 예로 들 수 있다. 시민혁명은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실행을 옮기는 것이 용이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로 부터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어려운 이유는 사회에서조차 지배계급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 낼만한 조직적인 혁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아래로 부터의 부르주아 이외의 계급에 의한 혁명이 성공했다면 그 사회는 뚜렷한 지배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후기식민사회이거나 이와 유사한 사회일 것이다.

(다) 합리선택모델과 정치경제

합리선택모델을 정치경제학적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시경제학에서 쓰인 이론적 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은 이기적인 이익을 가진 행위자를 전제로 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효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경제학적 모델이 되는 것이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효용만을 모델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권력이나 다른 여러가지 가치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마르크스적 국가론은 대부분 하부구조 즉 생산관계가 상부구조에 우선한다는 또는 결정한다는 이론적 합의때문에 정치경제학이라고 불리운다.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통합모델은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보다 큰 효용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합리선택이론에서 목표는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데, 목표의 상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이념이다. 사회적 이념은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요소는 경제적 배분이나 성장에 대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맑스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생산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이념과 국가적 이념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 동의를 지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은 국가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사회적 이념과 국가적 이념이 동일하다고 해서 항상 동의를 지배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념만으로 지배를

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학적 모델로 변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만일 국가의 정책으로부터 구성원이 겪는 직접적 경험이 국가적 이념을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개인은 국가의 이념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될 것이고 동의의 지배는 축소될 것이다. 즉, 개인은 사회화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개인은 국가의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 모델에 있어서 국가의 이념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문제이다. 국가이념은 종교나 민족문제를 포함하는 경우도 많지만 경제적 문제는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국가의 이념이 경제에 대해 어떠한 약속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경제는 맑스적인 생산관계 뿐만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경제문제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이념이 평등을 주장한다면 직접적 평가의 기준은 평등이 될 것이고 국가이념이 성장을 약속한다면 성장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념과 실제 정책과의 괴리가 클 때 구성원은 이것과는 다른 정책을 대안으로서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이것이 체제내의 변동을 가져오는 동력이 된다. 만일 다른 정책적 대안이 없다면 다른 정권을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그러한 이념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이념을 가진 정치체라는 대안을 택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체제변동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정책의 변동이 오게 되겠지만 대안이 없으면 자칫 정권의 변동이나 체제의 변동으로까지 직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III. 북한체제변동전망

1. 북한체제변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

북한체제변동에 관한 연구는 앞서서도 제시하였듯이 이론의 적용범주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구학자들이나 이론전문가들은 주로 일반이론을 적용하고 공산주의 전문가들은 중범위이론을 애용한다. 북한전문가들은 협범위이론을 국제정치전문가는 국제관계를 설명변수로 사용한다. 일반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포스터-카터(Aidan Foster-Carter)의 하버마스이론의 적용¹⁾과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²⁾ 기타 정치체제론 및 사회화론을 적용한 연구들을³⁾ 꼽을 수 있다. 중범위이론을 적용한 것으로는 소(Alvin So)의 세계체제론의 시각⁴⁾과 Shlyk,⁵⁾ 신기현,⁶⁾ 박춘삼,⁷⁾ 김승채,⁸⁾ 이인성교수⁹⁾의 논문을 들 수 있다.

- 1 Aidan Foster-Carter, "북한사회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버마스 위기이론의 적용,"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편, 1991.
- 2 민족통일연구원편,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1991.
- 3 백병훈, "북한 체제유지능력의 지속과 한계: 체제변화요인의 시험적 검토," 『북한 통일연구논집(III): 북한의 체제변화분야』 통일원, 1991.; 같은 책에 있는 "; 김연각,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 모델에 관한 연구: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규명을 중심으로," 등을 들 수 있다.
- 4 Alvin So, "세계체제론에서 본 중국혁명과 북한사회의 변화전망,"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1.
- 5 Shlyk N., "Economic Ties Between the USSR and the DPRK," *Far Eastern Affairs*. Vol.2, 1986: 136-143.
- 6 신기현, "사회주의체제 정당변화에 따른 북한의 정당변화모형: 다원화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전망 대남정책분야』 통일원, 1992.
- 7 박춘삼,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상황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국토통일원, 1987.
- 8 김승채, "북한체제의 유지능력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변화와 북한의 적응능력을 중심으로, 『북한 통일연구논문집(III)』 통일원, 1991.
- 9 이인성, "공산주의체제에서 엘리트구조가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모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1992.

협범위이론으로는 카튼,¹⁰ 서대숙,¹¹ 박경애교수¹²의 연구, 국제관계에 대한 것으로는 서진영,¹³ 정대규교수¹⁴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북한 연구의 특징은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상의 분류를 엄밀히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한 이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서술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 들 연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로 거시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미시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때에는 주로 엘리트 층의 연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¹⁵ 몇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인민을 체제변동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없다.¹⁶ 일반이론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연구의 경우도 정치체제론을 응용하여 체제의 유지와 적응의 기제를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국가-사회관계라는 이론적 틀로 북한을 연구한 것은 극소수이다. 북한은 시민사회의 맹아도 없을 정도로 황무지이므로 이러한 이론적 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 결과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가 앞에서 밝혔듯이 정치체제론은 사회가 국가보다 강한 곳에 잘 맞는 사회학적 접근법이다. 북한이 만일 사회가 매우 미성숙한 곳이라면 더욱이 사회화론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방법론적 문제이다.

10 James Cotton, "Civil Society in the Political Transition of North Korea: The Limitations of the East European Model,"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6-2: 319-337.

11 서대숙, 『북한권력엘리트 구조변화에 대한 비교연구』 국토통일원, 1988.

12 박경애, "북한사회의 변화전망," 『90년대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통일원, 1991.

13 서진영, 『탈냉전시 북한의 신안보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2.

14 정대규,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동아연구』 제23집.

15 이인성, 앞의 글, 1992; 서대숙, 앞의 책, 1988; 안찬일, 『북한군의 창건과 군부엘리트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논문, 1990.

16 북한의 사회적 분야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북한의 인민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보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민족통일연구원의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 고현욱,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1987.; 『북한. 통일연구논문집 (IV): 북한의 정책 및 사회변화 추세분야』 1991.; 유길재, "국가-사회관계의 관점에서 본 북한체제의 변화," 『북한. 통일연구논문집 (III): 북한의 체제 변화분야』 통일원, 1991.

북한체제의 변동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체제의 유지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변화함으로써 체제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고, 동시에 지속됨으로써 체제변동의 억제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일반론이나 중범위이론, 국제관계론의 시각에서는 북한의 변동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협범위이론의 시각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북한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북한은 북한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다른 사회주의와 같은 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반되는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발전시킨 모델로 부터 한편으로는 변동을 억제하는 요인 또는 북한의 특수성에 대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 사회주의 일반성 또는 정치체제의 일반성과 관련된 변수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체제변동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하기 전에 체제변동이나 체제내의 변동에 대한 기본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체제내의 변동으로는 권력자나 집권정당의 교체, 즉 권력승계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생길 수 있는 국가 또는 정권의 변동을 들 수 있다. 체제의 변동은 사회주의체제의 완전한 포기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는 세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동의 유기적인 연관성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한 세가지 차원의 변동은 이상형일 따름이고 실제로 변동은 그 중간의 유형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의미있는 정치변동의 기준으로 서진영교수가 제시한 네가지의 조건을 살펴본다. 서교수는 완전한 脫社會主義化는 아니더라도 1)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2) 당국가체제 3)생산수단의 집단화에 기초한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그리고 4) 진영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국제관계 등에 있어서 어느 하나 이상의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를 북한에서의 '의미있는 변동'이라고 한다.¹⁷⁾ 체제의 변동은 완전한 사회주의체제의 포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에서의 변화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중의 하나가 변할 때에는 체제의 수정이라고 명명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모델에서 추론

17 서진영,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통일원, 1989.

된 체제변동 결정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북한체제유지의 기제

북한에서 체제유지를 가능하게 한 요인을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부터 접근해 보자. 인민이 행위를 하게 되는 선택적 상황과 관련된 조건은 여러 행위자들, 선택적 대안, 그리고 대안이 발생할 확률, 선택적 대안이 가져올 지불값이다. 선택적 대안과 관련된 요인들은 국가와 사회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와 사회관계는 동의에 의한 지배영역과 힘에 의한 지배영역을 결정한다. 동의에 의한 지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 북한의 이념과 그것이 개인에게 내재화되는 기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힘에 의한 지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 강제력과 통제, 유인 등에 대해 폭넓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정치적 대상에 대해 충성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는 두가지의 경우를 가진다. 만일 그 대상이 정치지도자나 정당이라면 충성 또는 지지할 수 있는 지도자와 정당이라는 대안을 가질 것이다. 선택적 대안의 지불값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3) 넓은 의미의 경제문제이다. 4) 선택의 전략은 정보의 공개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정보수준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확실성에서의 결정전략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가) 이념과 사회화

국가와 사회관계를 다루는 학자들이 북한에 대한 이론적 적용을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때의 사회는 시민사회를 의미하고 시민사회는 근대화에 의해서 부르조아계급이 형성될때 파생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양에서는 국가가 먼저이고 시민사회가 그 후에 재편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¹⁸⁾ 국가론의 이론적 적용에 대해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은 국가의 완벽한 통제가 자행되는 곳이라는 평가 때문에 이러한 이론적 적

18 안병준,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1991.

용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국가를 막론하고 사회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시민사회는 단지 사회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는 유산계급이 국가에 대해 대항할 만한 자원과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리 전제정치시대라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사회의 영역은 엄연히 존재했었고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이다. 따라서 전체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가치와 규범을 전수하는 사회의 독자적인 사회화기제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사회는 지배계급이 국가기구를 장악했다면 국가의 이념과 사회의 이념은 합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해방후 북한에서 사회지배계급이 국가기구를 장악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이념과 국가이념을 구분해서 合致點과 不和點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국가이념이 주체사상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없을 것이다. 북한에서의 사회이념을 알기 위해서는 분단이전의 사회를 상정해야한다. 분단 이전은 식민지 사회로 소급되는데 36년간의 일제 국가의 강압적인 지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는 그 맥을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반만년 역사의 사회체제를 단 36년간에 뿌리채 뒤흔들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일제의 국가이념이 사회로 부터 동의를 지배를 받는 것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많은 조선인들이 창씨개명을 했다든지 신사참배를 하는 등의 행위에 있어서 국가의 지배에 복종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동화에 의한 복종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위해 동원했던 엄청난 물리력은 동화에 의한 지배영역이 얼마나 적었는가를 여실히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계층에는 자발적인 親日, 扶日者도 있었지만 이들의 경우에도 이념에 동화되어 동화에 의한 복종을 했다기 보다는 일본의 힘이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유인에 복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제식민지 기간에 국가는 끊임없이 사회로 부터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일제의 지배가 수반한 국가이념이 사회체제의 생존을 위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온갖 교육과 세뇌를 통해 국가이념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 했는데 이를 내재화시킴으로써 동의를 얻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이

념을 반국가적으로 고양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사회이념을 반국가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이념을 전수할 수 있는 사회의 독자적인 사회화기제가 필수적이다. 가정이나 민족지도자에 의한 학교들이 이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이때 사회이념의 반국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국가이다. 국민은 국가가 제시하는 이념적 이상과 현실에서 부딪치는 국가정책의 산물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 만일 국가정책이 이념과 일치했다면 많은 조선인은 자발적인 복종을 함으로써 기꺼이 일본황국의 신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사회화기제가 존재하는 한, 그들은 국가이념과 사회이념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 국가가 힘에 의한 지배를 통해 이념을 주입시키려 한다면 사회는 오히려 사회이념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 그것만이 국가로 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제국가의 강압적 지배는 민족정신이나 반일정신의 사회이념을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일제지배가 몇세대를 걸쳐서 지속되었다면 사회의 독자적 사회화기제가 와해되어 일제지배를 훨씬 수월하게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대교체는 사회화기제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세대의 교체란 과거 사회의 경험을 전해줄 사람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설은 교육 수준이 낮거나 사회이념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한 사람은 그럴듯한 국가이념에 동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비교하여 판단할 만한 기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에 비하여 일방적인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다.

분단이전의 사회이념의 특징은 민족적, 유교적이라고 해도 그릇되지 않을 것이다.¹⁹⁾ 분단과 함께 시작된 북한의 국가이념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전통문화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적절한 결합이라고 평가받는다.²⁰⁾ 북한체제의 정당성은 계급지배의 철폐, 물질적인 풍요의 보장, 제국주의와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 남한혁명과 조국통일의 과업완수, 그리고 민족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가이념에 있었다.²¹⁾ 이러한 국가이념이 사회

19 전인영, 『북한의 정치』 을유사, 1990: 145-146.

20 전인영, 앞의 책, 1992: 147-150.

적으로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가의 여부는 두가지에 달려있다. 첫째는 국가이념이 얼마나 사회적 이념과 융화하는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국가의 정책과 이념과의 괴리에서 보여주는 직접경험(정책의 산물)과 간접경험(이념)이 어느정도 일치하는가의 문제이다.

찾은 외세침입의 역사와 일제식민지의 경험 때문에 주체사상이 가지는 민족적 성격은 사회로 부터 쉽게 동의를 이끌어 냈으리라 생각된다. 국가이념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물질적 풍요와 통일에 대한 약속은 사회의 모든 계급으로 부터 환영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계급지배의 철폐라는 국가이념과 유교라는 사회이념과의 융합정도이다. 유교가 내제화되었던 계급은 조선시대의 지배계급이었을 것이다. 식민지기 동안 소수에 불과했던 조선인 지배계급은 지주이거나 친일, 부일 협력자들, 민족자본가 등의 주로 경제적 지배계급이었고 정치적 지배계급은 아니었다. ²¹ 게다가 많은 지주, 자본가들이 남하하였기 때문에 해계모니를 주장할만한 지배계급도 없었거니와 이들이 조선시대의 지배이념인 유교를 기반으로 했다는 증거도 없다. 그러나 만일 유교가 피지배계급에까지도 내제화된 사회이념이었다면 계급철폐의 국가이념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는 있다. 단, 사회학적 모델에 의해서만 분석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무의식속에 사회화된 유교적 관념이 국가의 무계급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리라는 추론은 사회학적 모델로 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합목적적 인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계급철폐라는 국가이념은 유교라는 사회이념에 비해 훨씬 매력적인 대안이었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국가는 대다수 인민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 내는데 성공적이었으리라 추론된다.

국가이념이 사회이념과의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한가지 남은 문제의 요인은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이상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느냐에 달려있다. 북한의 국가이념이 물질적 풍요를 내세우기는 해도 이는 자본주의적인 소비적 풍요와는 거리가 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의 경제수준과

21 김일성이 1948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에서 밝힌 8가지 투쟁과업에서 추론.

22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백산서당, 1990. 7장; 고승효저, 김하민역,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 청사, 1988.

현재와의 비교이며, 계급없는 사회에 대한 이상, 즉 경제적 평등이다. 이러한 국가이념은 60년대 말까지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많은 연구들은 평가하고 있다.²³ 경제부분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정책으로부터 얻은 인민의 직접적 경험은 국가의 이념이 제시하는 간접적 경험과 적어도 분단초기에는 상당히 일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제시대 때,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가난과 부역, 동원을 민족적 정권의 동원과 분배와 비교한다면 북한인민이 국가의 정책에 만족할만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 유지의 원인을 이념의 주입식 교육이나 강제력에서만 찾는 것은 아주 단순한 분석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인민은 합목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국가에서 수행하는 교조적인 이념의 세뇌에 의해 복종을 하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북한이 동의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역시 힘에 의한 지배이다. 그러나 힘에 의한 지배만으로 북한체제의 유지를 설명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분단초기 북한인민은 남한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었고 체제의 통치력은 이념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매우 미약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국가는 다른 아시아 공산국가와 비교해볼 때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으며 북한인민의 대대적인 체제에의 저항도 없었다. 잠재적 저항세력이 탈출할 수 있는 출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사람은 더욱 동의에 의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오웰의 『1984년』이 라는 소설이 북한을 배경으로 했다고 말할 정도로 북한에서의 힘에 의한 지배는 매우 심각한 강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알려졌다.

(나) 힘에 의한 지배

23 한국정치연구회, 앞의 책, 8장 참조; 강정인, “북한사회의 평등성: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전망과 관련하여,” 『동아연구』 제24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2: 111-152.

힘에 의한 지배는 강제력을 동원한 숙청과 사찰기관에 의한 통제뿐만이 아니라 성분조사에 의해 특혜와 처벌을 병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북한에서 행해지는 힘의 지배는 감찰기관의 사회통제, 집단수용 및 특별독제대상 구역지정, 배치, 승진, 이동, 보수, 배급 등을 통한 개인생활통제, 조직생활통제를 들 수 있다.²⁴ 북한은 정치적 반대파나 체제위협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와 감시를 행하고 일반대중에 대해서는 완전한 조직화를 통하여 힘에 의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다. 초기 북한의 정권은 박헌영이 이끄는 남로당파와 김두봉·무정 등의 연안파, 허가이 등의 소련파, 그리고 김일성이 이끄는 갑산파가 모여 형성된 연합정권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들을 미제국주의자의 간첩, 종파주의자, 사대주의자 등으로 몰아 차례로 숙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1960년대에는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의 확립에 성공하게 된다.

해방직후부터 반제 반봉건 혁명노선에 따라 친일파, 지주계급을 숙청하였으며 1950년대 말부터는 주민들에 대한 성분·사상조사를 통하여 잠재적인 체제위협적인 세력에 대한 숙청을 대대적으로 행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1957년 5월 31일 조선노동당 상무위원회를 열고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당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도, 시, 군당위원의 관장하에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1958년 12월에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1960년말까지 2년동안 북한 전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의 성분과 사상을 조사검토하고 반혁명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숙청하였다.²⁵

또한 1964년 2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하는 안건을 토의하고 북한주민들의 성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일관성있는 계급정책을 실시해 나갈 목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즉, 북한주민을 기본군중과 복잡한 군중의 두 부류로 분류하고, 기본군중은 다시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으로, 복잡한 군중은 계급적 토대, 6.25관계, 전직관계, 사회도덕면 등으로 다시 분

24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 364-367.

25 『조선노동당략사』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447-450.

류를 하여 그에 대한 처리원칙과 기준을 작성하게 되었다.²⁶⁾ 이러한 정책의 결과 북한에는 인위적인 계층이 생기게 되었고 성분계층별로 직종과 직위를 맡고 있다.²⁷⁾

이러한 숙청은 주로 당·국가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주로 사찰기관이 이를 전담하고 있다. 북한의 사찰기관으로는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가 있다. 전자는 1945년 이래 치안유지 및 반당·반국가적 행위자 색출, 검거와 주민이동사항을 통제해 왔다. 후자는 1973년 5월 김일성직속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되어 반당·반국가 음모자 색출, 주민 사상동향 감시, 첩보 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1977년 최고인민회의 6기 1차회의시 신설된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관료주의 제거와 엄격한 법적통제, 전 주민에 대한 사상투쟁 전개임무를 맡고 있다. 그 밖에 6.25당시의 인민재판제도와 유사한 상호토론과 군중의 박수로 형벌을 결정하는 동지심판제도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감시하는 인민반제도, 한명의 핵심당원이 5가구를 통제하는 5호담당 선전원제가 있다. 이는 담당세대들의 가정생활 전반과 사상을 감시·지도하고 있다.²⁸⁾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문제는 이러한 힘의 지배를 통하여 국가가 무엇을 성취하고자 했느냐에 있다. 적어도 분단초기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했던 주체사상은 당시의 피지배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반발없이 수용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타당해도 수단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없이 무자비하게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사회로부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강제력을 그러한 반발을 무마하는 수단으로 집행하게 되면, 즉 정적이나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더욱 더 큰 강제력을 사용해야 하게 될 것이다. 정당성이 결여된 강제력의 사용은 사회로부터 반발을 더욱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힘에 의한 지배가 더욱 정교해지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동의에 의

26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83: 308.

27 『92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265-267.

28 『북한개요』 통일원, 1992: 270.

한 지배가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실제로 북한에 있어서 주민통제의 과정을 보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정교화되어 왔는데²⁹⁾ 이는 북한에서 강제력에 의한 지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경제문제

경제문제중에서 국가-시민사회론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생산 관계에 대한 것이다. 분단직후 북한에서의 경제적 지배계급은 지주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약간의 산업자본가가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계급을 철폐 한다는 국가이념은 지주계급을 없애는 정책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북한은 해방직후 부터 각종 개혁조치들을 통하여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북한에서 최초로 공식적인 개혁조치가 취해진 것은 1946년 2월 부터 1947년 초까지 행해진 '민주개혁'이다. 이러한 개혁의 주요한 내용은 토지개혁, 중요산업의 국유화, 민주적 노동법령의 실시, 남녀평등권법령의 실시 등이 다.³⁰⁾

1945년 당시 농촌에는 계급구분이 심각하였는데 전 농가의 4%에 해당하는 지주가 거의 60%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전 농가의 56.7%에 해당하는 빈농은 총 경작지의 겨우 5.6%만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소작료는 60%를 초과했다고 한다.³¹⁾ 북한에서의 토지개혁은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동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토지개혁의 원칙으로 정해졌다. 이 단계에서는 자본주의적 상업과 공업에는 손대지 않고 사회개혁의 과녁을 소수의 지주들로 잡았던 것이다. 이 때의 토지개혁은 여전히 사적소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진적 과정의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서 집단적인 반발을 훨씬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³²⁾

중요산업국유화는 1946년 8월 10일 「산업·교통운수·체신·은행 등

29 『북한개요』 1992: 267 주민성분 조사사업을 년도순으로 정리해 놓은 표 참조.

30 한국정치연구회, 앞의 책, 1990: 172.

31 엘렌 브룬, 재크 허쉬, 김해성 옮김 『사회주의 북한』 지평, 1988: 34.

32 엘렌 브룬, 앞의 책, 38-39.

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법령」의 내용은 “일본 국가와 일본인의 사인 및 법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의 반역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일체의 기업소·광산·발전소·철도·운수·체신·은행·상업 및 문화기관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로, 즉 국유화한다”³³⁾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국유화를 통하여 전체공업의 90% 이상에 달하는 1,034개의 공장, 기업소, 광산 기타가 국유화 되었다³⁴⁾. 1946년 6월 24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발표하였다. 「법령」은 노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8시간노동제의 실시, 14세 미만의 유년노동의 금지, 여성노동자와 소년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유급휴가제와 사회보험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1947년부터는 사회주의혁명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농업부문에서 시작한 사회주의 개혁은 5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전산업 분야에 걸쳐서 사회주의화를 달성하게 된다.

일단은 북한정권이 국가이념이 제시하는 무계급사회를 위한 인위적인 생산관계의 조정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히 북한정권은 인민의 주체성, 자발성을 물질적 조건에 우선하여 강조한다는 점에서 맑스주의와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념은 어느면 북한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조성되기도 전에 인위적인 생산관계의 변혁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 달성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84년에 분석한 한 연구에서조차도 북한에서는 임금의 심각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한다.³⁵⁾ 또한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를 금하고 있으며,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기호품,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한다. 물론 당관료들이나 일부 특권층의 사치와 향락이 요즘들어 심심치 않게 문제가 되지만 혁명의 초기에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보

33 『조선중앙년감』 1949판: 74.

34 『우리나라의 인민경제발전』 국립출판사, 1958: 37.

35 김영규, 『북한의 실질소비생활수준 분석』 국토통일원, 1984: 8.

의 차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대중이 이에 불만을 가질 수도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생산관계의 재조정과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정권의 초기의 정책은 이념에 어느정도 충실했느냐는 면에서 평가할 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경제문제는 생산관계이상의 보다 광범위한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 포함한다. 북한의 국가이념은 생산관계에 있어서의 개혁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에 대한 이상도 제시하고 있다. 국가이념은 북한 인민의 식의주를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로 북한에 있어서 일인당 국민소득은 분단직후 급속도로 상승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했으리라 생각된다.³⁶ 또한 김일성의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동시발전이라는 정책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어 인민의 생활은 일제시대와 비교하여 매우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국가이념에 부응하는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북한의 사회보장이 실제에 있어서 어떤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인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발상은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인민의 환영을 받았으리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거창한 구호가 어느정도 실행에 옮겨졌냐에 따라 체제에 대한 지지정도도 달라질 것이다. 우선 북한은 사회보장은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³⁷ 헌법은 노동보호와 무상치료제 등을 명기하고 있다. 또한 탁아소나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의 특수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있으며 전쟁이나 군복무시 장기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 병원,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영예군인정양소, 휴양소 등이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1951년 8월 30일에 제정된 국가사회보장법과 1978년 4월 18일에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연금제도가 실시되어 왔다. 임금노동자에게 실시되던 연금제도는 1986년 11월 부터는 협동농장 농민에게까지 확대적용되었다.³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정권의 수립초기에는 국가에 대한

36 북한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을 살펴보면 정권수립 초기에는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의 후반부 표2 참조.

37 『북한개요』 1992: 297-308.

38 『북한개요』 1992: 300.

기대치도 높지 않았고 복지나 평등개념도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이러한 이념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인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실제로 생산관계의 개조나 분배, 성장, 복지 정책에 있어서 식민지시대에 비하여 훨씬 나은 정책을 접할 수 있었던 북한인민은 국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지를 표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일련의 국가에 의한 조치들이 북한인민을 정치화하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국가로 부터 받게 되는 셈이다. 절대적인 물질적 풍요의 수준에 있어서는 기대와 현실의 간격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평등, 어느정도의 물질적 풍요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이다. 문제는 정권수립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졌느냐 하는 것이다. 이념에 있어서 경제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경제에 관한 이념과 실제의 경제정책의 결과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크가에 따라 향후 체제의 앞길이 달려있을 것이다.

(라) 정보의 통제

북한의 체제유지 기제에 있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은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있어서 정보의 통제와 관련된 정책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외부로 부터의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민들 사이에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 동의에 의한 지배를 확장하고 강제력에 의한 지배를 축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폐쇄정책이었다. 이는 북한 지도자의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는 국가 이념이 사회로 부터 동의를 받기 위해서 북한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비교대상을 사전에 없애버림으로써 인민이 선택할 대안을 한정시키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물론 국가의 정책을 국가의 이념에 맞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다면 폐쇄적인 정책을 쓸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폐쇄정책으로 이념과 현실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인민으로 부터의 압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인민들 사이에 유통되는 정보의 통제는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첫째로 소수가 외부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도 그것을 유포시키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사전 봉쇄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로 사회이념의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반국가적 이념의 조성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이념과 정책사이의 괴리를 감지한 선각자들이 국가이념에 대항할 수 있는 이념을 사회내에서 만들어 교육할 가능성을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정책을 통하여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세째로 집단행동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인민이 국가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선택할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해서 체제전복의 기도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태도를 위한 조건일 뿐이다. 태도가 집단적 행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집단행동의 논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소수의 집단에서는 집단행동이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같은 대규모 집단에서 국가나 체제를 전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행동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리선택이론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임중의 하나는 죄수의 변민 게임(Prisoner's Dilemma Game)이다. 정치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죄수의 변민게임은 두사람간 혹은 여러사람간에 의사소통 없이 행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집단을 위해서 가장 유용한 전략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해가 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준다. 그 이유는 게임의 구조자체가 인간사이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 공공적으로 최악의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이 게임의 기본가정은 행위자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어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상대방을 불신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행위자와 함께 집합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인식한다. 이러한 상황의 설정은 공공이익을 배신하고 이기적인 대안을 택하는 행위자는 이득을 보게 하고 공공이익을 위한 대안을 택하는 행위자는 커다란 손해를 보게 한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행위자는 자신의 적극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대방이 배신했을 때 당하게 될 엄청난 피해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라도 공공이익에 반하는 이기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행위자가 이러한 계산으로 선택에 임하게 될

때, 집합적인 선택은 모든 행위자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착취구조하에서도 계급적인 집단행동을 할 수 없는 이유나 정당성이 없는 정권하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등, 집합행동 부재의 이유를 죄수의 번민게임으로 설명한다. 북한정권이 정당성을 이미 잃었고,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의 부재때문에 집합행동이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체제의 전복이 성공할 확률은 매우 작고 실패할 확률은 매우 크다. 반면, 두가지 대안과 관련된 지불값은 체제전복이 실패할 경우 무한대의 비용(죽음이나 숙청)이고 체제전복이 성공할 경우의 지불값은 불확실하다고 했을 때, 과연 누가 체제전복의 대안을 택할 것인가? 현재의 상황은 공공적인 해가 되는 상황이나 단결해서 다른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이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의사소통이 충분히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쌓을 수 있고 집단행동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무모하게 앞섰다가 처형당하는 불이익을 받는 것 보다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죄수의 번민게임을 규정짓는 조건들을 변경함으로써 게임구조를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대안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대안에 따른 지불값을 변경한다든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든지,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이 변경된다든지 (위험회피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으로의 변경 등), 오랜기간 사회화를 통해 경쟁적인 인간이 아니라 신뢰하고 협동적인 인간으로 변한다든지 (이는 경제학적 모델에 있어서 가장 비현실적인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등등의 방법을 통해 게임의 구조를 변경하여 행위자가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통성없는 정부일수록 언론을 탄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세가지 이유-외부정보 차단, 반국가이념의 유포차단, 집단행동을 위한 의사소통차단--에 의해서 정보의 통제정책을 행해 온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에서 제시한 주민통제 정책 이외에도 북한에서 언론의 임무는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³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북한 헌법 제67조는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 및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하고 있기 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⁴⁰⁾할 때에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선행된다.

북한의 언론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신문은 노동당, 정권기관, 사회단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만이 있다. 즉, 노동당의 로동신문, 정무원의 민주조선, 사로청의 로동청년 등 3개의 중앙지와 각 도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10개의 지방지가 있다. 또한 13개의 일간지와 공장, 기업소에서 발행하는 공장신문, 각 대학발행의 『대학신문』과 해외홍보용인 『The Pyong Yang Times』(주간)가 있다. 그 밖에 교통신문, 건설신문, 교원신문과 같이 정무원의 각부에서 발간하는 기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들의 공통점은 의사소통의 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을 선전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일방적인 통제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문이 통제되고 있다는 증거는 신문에서 당, 정권을 비방하는 문구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사회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면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일터인데 김일성 無誤謬의 신화는 이러한 반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외에도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 통신 등이 당에 의해 일률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언론매체들이 수행하는 임무는 단 한가지, “모든 사회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 하는 것”⁴¹⁾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행객을 통제할 정도의 철저한 폐쇄정책은 옆으로 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철저히

39 『백과전서』 6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292. (『북한개요』 1992: 356 에서 재인용.)

40 앞의 책, 293. (『북한개요』 1992: 356에서 재인용.)

41 『백과사전』 4권: 568. (『북한개요』 366에서 재인용.)

봉쇄하고 위로 부터 모든 언론매체에 일률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국가이념을 각 개인에게 내재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정보의 통제에서 변화가 초래된다면 이것이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3. 북한체제변동의 기제

북한체제변동의 방향은 그동안에 북한의 체제를 유지해 주었던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를 살펴봄으로써 전망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네가지 요소가 변화된 내용과 정도를 밝힘으로써 구체적인 변동시나리오를 설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앞에서 다루었던 이념, 강제력, 경제, 정보에 있어서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었나,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조건들의 조합에 따라 4절에서 구체적인 변동의 시나리오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가) 이념과 강제력

북한의 국가이념이 주체사상이라는 점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초기에 국제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경험, 한국전시 미국과의 전쟁, 중소분쟁, 국내적으로는 여러 정치적 파벌의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맑스-레닌주의의 국제주의적 원칙과는 달리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강했던 주체사상은 50년대 말 부터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김일성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의 지도자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항일혁명운동의 경험을 신성시하기 시작하였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 등의 김일성의 항일빨치산운동에 대한 자료를 발간하고 대중적인 학습을 시켜 나가기 시작했다.⁴²

그후 김일성에 대한 정당성은 그의 가계를 우상화하는 것으로 까지 발전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 「수령론」으로 완성을 보게 된다. 북한에서 이

4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2』 서울: 돌베개, 1989: 102.

러한 수령은 곧 김일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유일지도 체계의 이론적 기반인 혁명적 수령관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유기체적 체제관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생명에는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치적 생명이란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생명은 육체적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끝나도 그가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더불어 영생하게 된다고 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의하면 육체적 생명은 친부모가 주지만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한다. 즉, 수령은 육체적 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 생명의 제공자인 것이다. 따라서 수령과 대중은 혈연적 관계이며 대중은 '생명의 은인'인 '아버이 수령'에 대해서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⁴³⁾

한편,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그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북한선전매체들이 내세우는 김정일의 정통성의 내용은 후계자론에 나타난다. 후계자론의 핵심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장기간의 투쟁을 거치게 되며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승되고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의 대를 잇고 수령의 영도를 이어나가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후계자론은 후계자의 조건으로서 무엇보다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어야”하며 나아가 “사상이론의 대가로서 수령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후계자는 “수령이 창조한 탁월한 영도예술, 혁명적인 영도방법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어야”하며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밖에도 후계자는 “령도자로서의 위대한 품모를 갖춘 인물이면서 동시에 새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야”하며

43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자.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85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수령과는 "적어도 인간세대 교체의 한 주기를 가지고 바뀌어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후계자론은 누가 보아도 김정일후계체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문헌들은 김정일의 사상이론 활동상의 특징을 1) 수령의 혁명사상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2) 주체적인 방법론의 철저한 구현 3)혁명적 실천과의 유기적인 결합 4)심오성과 다방면성을 들고 있는 것이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령차가 한세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보면 후계자론이 바로 김정일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⁴⁴

또한 사회주의권의 개혁·몰락이 본격화된 1980년대 말부터 북한은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 시기부터 김일성의 신년사, 김정일의 담화, 당·정고위인물들의 논설 및 신문·방송, 군중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외치면서 변화의 물결이 북한사회에 침투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다.⁴⁵ 북한은 기본적으로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해 "오늘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법칙"⁴⁶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 좌절의 이유는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한 사상이 없었고 김일성부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주장하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아가기 위해 몸바쳐 투쟁하자"⁴⁷고 주민들을 학습시킨다.

북한은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동구의 민주화 개혁·개방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침투해 들어온 반동적 책동의 결과"라고 입장을 정리한 다음,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투를 막기 위해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44 앞의 책: 108.

45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자 김일성의 신년사.

46 김일성의 1990-92년도 신년사.

47 김정일의 1991년 5월 5일 담화, 「인민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참조.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체제의 변화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다원주의가 허용될 수 없다.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와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원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인민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⁴⁸이라고 강조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북한의 국가이념이 내용상 약간씩 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사회주의이념에서 후기로 올수록 김일성개인의 이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일의 후계자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이 통일에 있어서 희망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에 구소련과 동구의 몰락에 대해 보인 대응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식 사회주의를 공고화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할 뿐이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사회이념이나 국가이념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국민정서 속에 내재화되어 있으리라는 추측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혹자는 과거 왕권국가의 경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북한민이 김정일 승계를 당연시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이념이 어느정도 동의를 지배를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가가 어느정도 정보의 통제에 성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북한인민이 동구에서의 변화가 우리식 사회주의보다 여러 면에서 낫다는 정보를 입수하거나 왕권을 승계하듯 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오늘날 북한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국가이념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이념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경제정책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문제는 인민의 생활에 있어서나 북한의 국가이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동의를 지배를 얻어낼 수 없다면 북한은 결국 힘에 의한 지배로 지탱해야만 할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폭동, 반발사건들의 처리가 힘에 의한 지배의 일면을

48 앞의 글 참조.

여실히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⁴⁹ 일부 보도에 의하면, 북한체제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인사들을 격리 수용하는 독재대상구역이 지난 1982년 4월에는 8개지역에 약 10만 5천명이었는데, 1990년 1월에는 12개 지역에 약 15만 2천명이 수용된 것으로 보아 그만큼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세력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⁵⁰

뿐만 아니라 김정일체제에로의 권력이행에 반대하는 세력과 북한체제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면, 김정일에로의 권력이행작업을 공식화한 제6차 당대회 직후인 1982년 7월 24일자 로동신문을 통해서 기존의 당조직들과 김정일이 지도하는 3대혁명소조들간의 알력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조선로동당의 당면과제」라는 논문을 통하여 당내의 종파주의, 가족주의, 지방주의, 당과 인민과의 연계강화, 만연된 관료주의의 시정, 자본주의와 결탁한 내부반항의 존재 등에 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였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의 최근보도에 의하면 북한 평양방송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과거 항일혁명전통과 관계없는 것을 들고 나와 혼입시키려하는 불순 이색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고 그 순결성을 단연코 옹호했다”고 한다.⁵¹ 이는 김정일 반대세력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 경제문제와 정보

앞에서 분단직후 북한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계급없는 사회를 달성했느냐에 있다. 질라스(M. Djilas)가 고발한 ‘새로운 계급’⁵²의 대두는 유고의 고유한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주의 일반의 문제이다. 우선 북한의 사회통제정책의 일환으

49 김승채, “북한체제의 유지능력에 관한 연구” 『북한. 통일연구논문집(III)』 통일원, 1991 참조.

50 <서울신문> 1990년 1월 18일자.

51 <중앙일보> 1992년 2월 14일자.

52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New York: Praeger, 1957.

로 실시된 주민의 성분조사는 특정한 계층을 사회적 유동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위적인 계층과 계급을 탄생시킨 것이다. 업적에 의한 사회유동은 가로막히고 귀속에 의한 유동을 한다는 것은 계급사회와 별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당관료와 특권층의 퇴폐와 부패실상은 최근 많은 귀순자들을 낳게 하였으며 그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무계급정책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³⁾

하지만 외형적인 생산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양식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특권계급의 특혜는 일반민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것이 체제의 위협요소가 될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이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문제는 심각한 체제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의 표2에서 북한이 발표한 일인당 국민소득의 증감을 보면 최근 오히려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경제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⁴⁾

연 도	1인당 국민소득	연 도	1인당 국민소득
1946	64.44원	1979	1,920미달러
1949	131.82원	1982	2,200미달러
1962	416.67원	1986	2,400미달러
1966	500원	1987	2,400미달러
1967	580원	1988	2,530미달러
1970	605.73원	1991	2,460미달러
1974	1,029.75원		

<표 2: 북한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출처: 『'92북한개요』 1992: 166-167.

북한은 경제가 호조를 보이던 50, 60년대 초에는 경제지표를 자유로이 공개했었다. 특히 통계자료중에서도 공업 총 생산액의 전년대비만은 생산이 부진했던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공표되어 왔었다. 그러나 1983년 이래 현재까지 공업성장률을 전혀 공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북한경제의

53 월간조선편집부,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1991 참조.

54 『북한개요』 1992, 166-167.

어려움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북한의 절대적인 경제수준이 남한 보다 낮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쨌든 북한은 철저히 정보를 폐쇄하고 있으며 북한인민이 남한의 생활수준을 구체적으로 알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식의 고도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과거와 현재의 경제사정의 비교이다. 식민지때와 비교해서 북한 정권초창기에는 인민의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낼 정도로 물질적 유인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기대치는 과거의 성장속도를 고려하여 현재보다 높게 잡혀질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일반민중의 커다란 불만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대외무역이나 차관을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⁵⁶

북한은 1978년 부터 시작한 제2차 7개년 계획이 목표년도인 1984년이 지나도록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일체의 발표가 없다가 1985년에 그 계획이 1984년 말을 기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1987년 부터는 제3차 7개년 계획에 들어가는데 이것의 특징은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2차에 비해 목표가 하향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⁵⁷ 3차계획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변화는 1)기술혁신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 2) 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기술혁신을 중시하고 이를 위한 대외 경제협력과 무역이 필요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⁵⁸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경제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체제 유지에 성공할 수 없으리라고 전망한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힘에 의한 지배가 심화된다면 사회의 조직적 반발을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일제의 강압적 지배에서 사회의 반국가적 이념을 확고

55 고또오 후지오, “북한경제의 실상과 전망”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1.

56 서진영 편, 『사회주의의 위기와 생존전략』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93. 6장 참조.

57 『북한개요』 1992: 159.

58 앞의 책: 159.

히 하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정권이 힘에 의한 지배에 의지하는 한, 가속도로 사회의 이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의 개혁을 개방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정권의 커다란 딜레마이다. 개방으로 인한 정보의 유입은 반드시 이념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올 것이고 이러한 정보와 새로운 환경은 북한인민에게 북한체제로 부터 지지를 철회해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북한이 처한 가장 큰 문제가 개혁과 체제 유지사이의 딜레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 인민을 동원하기 위해 이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혔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다수 학자들의 공통점은 또한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서 이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체주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강제력보다는 이념을 꼽기도 한다.⁵⁹ 이념 그 자체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질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면 개방과 함께 북한체제의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추론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오히려 이념의 생명력이 개방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를 내부적으로 공공히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사용하는 이론적 틀로는 체제의 붕괴가능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이론에 의해서만 비로소 북한이 개방을 통하여 체제의 존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개방을 연기하고 체제를 현상유지하는 것도 곧 한계에 다다르리라고 생각된다. 체제를 유지한 채로 동원에 의해서 경제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합목적적인 인민은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는 이념을 믿고 더이상 동원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포스터-카터는 동기의 위기라고 하였다.⁶⁰ 그 밖에 사회주의권에서의 변화는 북한이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하는 세계체제적인 환경적 조

59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백병훈, “북한체제유지능력의 지속과 한계” 『북한통일연구논문집 (III)』 1991: 102에서 재인용.

60 Aidan Foster-Carter, “북한사회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앞의 책 참조.

건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선례로서의 교훈도 남긴 셈이다. 이제 북한인민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을 규명함으로써 북한체제변동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4. 북한정치변동의 시나리오

(가) 변화의 종류: 선택의 대안에 따른 분류

헌팅톤(S. Huntington)은 권위주의체제가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을 변혁의 주체세력에 따라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 아래로부터의 변화(Replacement), 그리고 위, 아래의 타협에 의한 변화(Transplacement)로 분류한다.⁶¹ 이 연구에서는 체제변동을 위로부터의 대안에 따른 변동과 아래로부터의 대안에 따른 변동이라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위로부터의 대안에 따른 변동은 헌팅톤이 사용하는 위로부터의 변화라는 개념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헌팅톤의 개념은 엘리트가 민주화를 앞장서서 추구하여 정치체제를 변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위로부터의 대안에 따른 변화란 구체적으로 변동을 위한 선택의 대안이 누구에 의해 주어졌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가령 엘리트들 사이의 권력투쟁에 의해서 인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게 된다면, 따라서 엘리트들의 권력투쟁에 의해 정권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는 위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는 경제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자가 개방정책을 선택하여 인민이 비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위로부터 체제변동을 위한 선택의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동의 주체에 따른 분류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변동은 거의 항상 위와 아래라는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편이 주도권을 가졌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칫하면 주관적인 판단에 머무르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류는 순수하게 아래로 부터 오는 변화는 극히 드물다는 가정을 한다. 따라서 다

61 Samuel P. Huntington, "How Countries Democratiz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6-4.

른 유형으로 부터 이것만을 구별하기 위해 대안의 기원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안이 위와 비교했을 때, 아래로부터 제시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위로 부터 제시되는 대안은 모두 순수히 위로부터 나오는 동일한 유형은 아니다. 대부분 위로 부터의 변화는 아래로 부터의 변화가 전략적인 엘리트에 의해 재빨리 포착된 경우가거나, 아래로 부터의 압력에 의해 할 수 없이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과는 상관없이 엘리트들에 의해 대안이 최초로 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대안이 변동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래에서의 호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로 부터의 대안이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양자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 반면에 순수히 아래로 부터의 변화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위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령 우리나라의 동학농민항쟁이라든지(체제변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동독의 와해같은 것은 위에서 아래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체제가 깨어진 경우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변화를 반영한 위의 변화, 순수한 위로 부터의 변화를 합해서 대안의 제시에 따른 분류에 의해 위로 부터의 대안에 의한 변화라고 칭한다. 아래로 부터의 대안에 의한 변화란 대안을 순수히 아래로 부터 만들어 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북한에서 체제변동의 가능성은 항상 위로 부터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선택의 행위는 주어진 대안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부터의 변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래의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차선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권은 아래로 부터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가 경직되어 있다면 아래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강제력으로 누르려고 할 것이다. 강제력에 의한 지배도 어느 정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위로 부터 전혀 대안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인민은 스스로 대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강제력에 의한 지배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며, 순수한 아래로 부터의 변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로 부터의 대안이 변동을 가져오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한다. 아래로 부터의 분출은 일단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어 놓은 타협안

을 거부하고, 아래의 결집력이 자신들이 낸 대안을 성공적으로 고수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뒤에서 다시 알아보겠다.

이 연구는 정치의 대상을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치체제, 정권, 지도자의 세 유형은 서로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지도자의 위에 정책을 상징하여도 네차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변화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가장 먼저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안의 지도자가 있다면 인민은 정치체제나 권위에 도전하기 보다는 지도자를 먼저 바꾸려고 시도할 것이다. 또한 정권의 교체가 가능하다면 체제의 변화보다는 정권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도자, 정권의 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체제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정치체제에 있어서 이 대상들이 변화하는데 드는 노력이나 비용에 있어서 위계적인 질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대상의 변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나 비용도 위계적인 질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가지 대상에서의 변화는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위로 부터의 대안에 의한 변화

북한에서 순수하게 위로 부터 예상되는 변화는 지도자의 변화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의 변화는 대개 여러 명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그나마 지도자의 변화도 한정된 변화일 뿐이다. 앞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오늘날 북한의 국가이념은 동구사회주의에서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개혁에 대해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다원주의적 질서에 심히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부터의 변화의 조짐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위로 부터의 변화라고 하여도 가능성은 아래에서의 불만이 심화되어 마지못해 위에서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을 말한다. 옆으로 부터의 변화라고도 불리우는 국제관계에서의 압력에 의해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로 부터 올 대안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치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1을 참조하여 살펴보자. 우선 정치적 대상은 세가지 수준으로 분

1989년도 부터 생필품 증산운동 및 직매점 설치확대 등을 통해 市場經濟的 要素를 도입했다.²¹⁹⁾ 그 이후 이러한 방식은 주택건설분야를 위시한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시·군 단위로 農民市場(장마당) 내지는 도시의 상설시장을 공인했다. 이를 통해 식량의 배급제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인데, 이 곳은 현물구매 또는 물물교환의 장소가 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 유역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와 관련 先鋒地域을 經濟特區化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²²⁰⁾

북한은 유엔개발계획의 협력하에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설정,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참여를 통한 중개무역기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 협력하여 합영대상을 선정하여 유엔을 통한 경제개발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의 장기목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 중심지 및 가공업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교역 및 투자증진을 시켜 상호보완적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계획은 관련 국가들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실행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²²¹⁾ 북한은 두만강지역개발 대상지역에 대하여 小三角지역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소삼각지역은 북한의 나진항, 중국의 훈춘, 러시아연방의 포시에트항을 연결하는 약 1천Km²의 3각지역이다.²²²⁾ 이 개발계획에 대한 북한측 代案은 접경 3국이 자기의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절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³⁾

219) 소비재 생산에 있어 실적당 급여체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연하청,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민족통일연구원주최 제1회 국제학술회의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 전망」 (91.10.28), p.4.

220) 중국은 합영법 이후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민간자본을 도입해 왔다. 경제특구는 국내적으로 計劃經濟體制를 남겨둔 채 그 일부에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자본형성과 외화획득을 실현시켜 그 위에 서방측 시장 매카니즘의 국내침투는 정책당국이 주변에서 통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인 것이다. 고또오 후지오 “북한경제의 실상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9회 국제학술회의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 전망」 (91년 10월 28-29일) 주제발표.

221) 「日本經濟新聞」, 1992년 8월 20일.

222) 大三角지역은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그리고 러시아연방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약 1만km²에 이르는 광범위한 3삼각지역을 말한다. 북한·중국은 소삼각지역 개발계획을 선호하고 있고 러시아는 대삼각지역 개발계획에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북한 인민이 가지고 있는 변화를 위한 대안이라는 것은 지도자 수준에 있어서의 대안 뿐이다. 그렇다고 지도자의 대안이 다양한 것은 아니고 대안I-1(김일성)과 대안I-2(김정일)만이 있을 따름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세습적인 권력의 이동이기 때문에 선택적인 대안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어쨌든 북한 인민이 정치의 변화를 주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김정일이라는 지도자일 뿐이다. 북한인민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교하여 택하리라고 예상되는 것은 당연히 김일성이다. 아직 나이가 든 사람들의 뇌리에는 혁명가로서의 김일성이 살아 있을 것이고 혁명초기의 상대적인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기억하리라 믿는다. 그 때의 생생한 기억에 의해 태도가 고정된 사람과 적어도 그들에게 생생한 기억을 사회화받은 그 다음 세대는 그후 정책의 실패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도 김일성을 비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본다. 귀순자들은 북한인들이 경제의 실패에 대해서 김정일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증언함으로써 필자의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김일성의 생전에는 위로 부터의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아래로 부터의 변화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김일성의 생존시에 만일 아래로 부터 변화의 요구가 있다면 김일성은 이를 김정일 카드로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는 기대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인민이 김정일 보다는 김일성이 낫다는 인식을 하는 한, 실제로 아래로 부터의 반발이 일어날 확률은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김정일에 대한 도전, 또는 김정일 이외의 지도자에 대한 요구는 최소한 김정일이 정권담당자(status quo)가 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생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은 이러한 면에서 이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김일성 생존시에도 아래로 부터의 변화가능성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상태에서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수준에 있어서도 변화를 위한 대안이 없다고 가정하자. 경제적 생활이 극도로 악화되면 동의에 의한 지배영역이 축소되고 강제력에 의한 지배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강제력의 지배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중 하나는 국가로 부터 탈출하는 것이고, 탈출구가 막히면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는 것이다. 탈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용

이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저항은 집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합행동의 논리에 의해서 당분간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보는 것이 맞는 예상이다. 그리고 집단행동이 경제적 상황때문에 발생한다면, 경제가 생계를 어렵게 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정보가 통제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제가 약간 후퇴하였다고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인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인내력을 발휘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아래로 부터 제기되는 변화에 대한 요구는 김일성의 사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이 혁명의 경험을 안겨준 장본인도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부터 정책변화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지도자 변화의 요구에 부딪칠 확률이 많다. 즉, 김정일은 1-2라는 대안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래로 부터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정일은 유화제스처를 쓴다든지,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부담감을 갖을 것이다. 김정일이 빠른 시일안에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을 피할 수 없고 개방은 체제에 직접적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현상유지를 고집한다면 아래로 부터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 때, 김정일 이외의 권력대체 세력이 있다면 권력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어느 한 쪽도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에 실패한다면 (즉 1-1이란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하면) 인민관심은 한단계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빠른 시일안에 권력투쟁을 종식하고 김정일이 확고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고, 경제의 회생에도 성공을 거둔다면 따라서 국민이 지도자의 차원에서도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 정도로 현상태에 만족을 한다면, 이는 1-1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되고 체제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사실상 비현실적이다. 왜냐하면, 개방없이 개혁이나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로 부터의 요구가 조직화되기 전에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는 길은 정책의 변화를 하는 것 뿐이다. 정책의 변화는 개방정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개방정책을 펴고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보다 철저한 통제에 성공한다면 체제의 유지는 한동안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안정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인 변화는

아래에서의 변화를 수반하여 계속해서 보다 많은 인민의 자율성을 요구할 것이다. 즉,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독자적으로 만들 정도의 역량이 갖추어진다면 요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사회주의체제의 경직성은 결국에는 도전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한이 민주화되는데 걸린시간보다는 훨씬 적은 시간안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동체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사회적 질서 등이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돕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김정일이외의 집단이 성공적으로 도전하여 권력을 쟁탈하여 I-1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와 이념의 괴리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이외의 다른 세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안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연결시켜준다. 왜냐하면 I차원에서의 대안이 없다는 것은 모델에서 그 부분을 지워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다음번의 대안은 정권의 차원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노동당이외에 의미있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정일이 전체주의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즉, 정권의 차원에서도 인민들이 택할 대안이 없다면 결국 인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체제차원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결국 지도자에서도 대안을 갖지 못하고, 정권의 차원에서도 대안을 갖지 못한 북한민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즉각적으로 체제의 변동으로 연결될 것이다.

동구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목격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구조의 연결고리가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 설명하기도 하고 정치구조의 경직성이라는 조건에 따라 설명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에 의하면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은 일원주의의 원칙에 따라 다원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작은 변동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체제의 변동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막상 지도자나 정당이라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도 그 대안 자체가 사회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도자라는 대안의 선택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구에서 정치변동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반면에 권위주의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은 상당히 평화스럽고 점진스럽게 진행될 수 있다. 그 국가가 어느 정도 다양한 대안으로 아래의 요구를 흡수하느냐에 따라 폭발적인 요구의 분출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정치변동을 점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제 내에 대안을 만드는 것 뿐이다. 작은 대안의 선택이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제내에 작은 대안을 만들어 줌으로써 체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인 속성중의 하나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엘리트들의 경쟁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어느정도의 동의를 지배를 확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세력에 대해 더욱더 고도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의 정치변동이란 체제변동의 성격을 띠지 않고서는 변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결국 점진적 변화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중국식으로 경제는 개방하면서 어느정도의 동의를 확보하고 정치적으로는 더욱 더 통제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 방법은 잠정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이 꾸준히 지속적인 한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체제에의 위협요소는 정보의 유입에 의한 사회로 부터의 반발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의 사회로 부터의 조직적인 반발은 사회가 조직될 수 있는 어느정도의 기간을 요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보가 유입되고 인민이 국가이념과의 상충을 느끼고 이것이 사회저변에 확산되어 조직이 되는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산발적인 반발을 물리력으로 누르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으리라 본다. 결국 북한정권이 彈力性을 갖고 아래로 부터의 반발에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조금씩 대안을 만들어 주면서 권위주의정권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다. 지금처럼 전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인민의 반발은 곧장 체제의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후에는 자칫 체제붕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확고하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은 없으면서 지지는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대안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여기서도 대안이 없이 경직되어 있다면, 인민의 요구는 다음단계로 넘어갈 것이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고 그 경험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며 현재까지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工場黨委員會는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체계를 가지고 있고 생산에 대한 통일적 집중적인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와 통일적인 後方供給體系¹²⁶⁾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농업 지도체계’가 나오게 된 배경은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하여 새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내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농촌경리를 새로운 농업 지도체계에 따라 기업적인 방식으로 운영¹²⁷⁾한다고 한다.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에 대한 전문적인 생산, 기술지도와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單一한 指導體系와 生産保障體系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企業的 指導 方法에 의한 지도에는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첫째,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 둘째, 농업 경영활동의 계획화, 셋째, 농업의 조직적 운영 등이다.

그런데 당시 북한이 주장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經濟管理體系가 운영되는 기본 事業方式이었다. 즉, 주체의 경제관리의 핵심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사업방법으로 구현한 데에 있다. 이 방법의 기원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¹²⁸⁾에서 찾을 수 있고 이 방법이 나오게 된 계기는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를 현지지도¹²⁹⁾한 데에서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분석·검토한 것을 토대로 하여 ‘社會主義經濟管理’면에서 소련과 중국의 경제관리체계 및 방법을 북한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北韓經濟管理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실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추론하건대, 소련에서는 ‘직접적 생산력으로서의 과학과 기술’,

126) 남한에는 없는 단어로선 ‘후방공급체계’란 후방공급사업을 제도화시킨 체계이다. ‘후방’이란 “어떤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보장해주는 일이나 지역같은 것”을 의미하며 후방공급사업이란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보장해주기 위하여 하는 여러가지 후방사업과 공급사업”을 뜻한다. 「현대 조선말 사전」 하권, p.2370.

127) 김한길, 「조선현대력사」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3) (일송정, 1988. 재발행), p.382.

128) 「주체사상 총서」 10권, p.166.

129) 김한길, 「조선현대력사」 p.378.

터 첫번째나 두번째 단계에서 대안이 나온다면 아래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현상유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로 부터의 대안이 없는 상황은 아래로 하여금 세번째 단계에서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삼단계에서의 선택이란 정치체제의 수준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안은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과 전복이라는 두가지이다. 이 때 재빨리 위에서 반응을 하여 위로 부터의 대안이 주어진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탄력이 없고 경직된 정치체는 대안을 제시하여 적용하는데 실패하고 체제가 붕괴되는 비운을 맞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아래로 부터 대안을 만드는 경우는 반드시 체제의 변동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하루아침에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이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조건 또한 매우 한정되어 있다. 아래로 부터 대안을 만드는 경우는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문제나 부패 등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동민의 지배영역이 극도로 축소되어 차라리 최악의 선택이 현상보다 낫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이다. 그 때는 폭발적인 체제의 전복이라는 선택이 가능하다. 물론 이때에도 어느 정도의 정보가 최수의 빈민게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부로 부터 많은 정보가 유입되어 그것이 현실과 이념의 괴리를 여실히 증명하여야 하고, 특히 국가가 분열되어 강제력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 (집단행동의 참여에서 치를 대가가 그리 크지 않게 될 때에는 대안이 현상유지보다 그리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임) 가능하다.

아래로 부터의 대안이 생길 또 하나의 가능성은 누가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든지 권력이 공고화 되어 지배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북한에서 아래로 부터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문제의 해결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에서의 동원경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계에 달했다. 결국 개방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고 김일성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경제의 개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자유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화와 근대화가 가져올 필연적 현상은 부의 성장내지는 빈

부의 격차, 사회의 분화와 복잡화, 개인의 자율성 성장 등의 시민사회적인 요소를 가지고 올 것이고, 시민사회의 성숙은 국가와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북한에서 이미 진행되어온 현상은 교육수준의 향상과 세대의 교체이다.

1987년 현재 북한의 총인구 중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인인구중 약 75%가 비농업인구로 분류되어 있어, 북한이 농업사회에서 비농업사회로 이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공업화가 야기시킨 계급구조의 또다른 중요한 변화는 신중간계급의 증가이다. 신중간계급의 비율은 1946년말에는 6.2%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 약 17%에 이르게 될 정도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중간계급 또는 근로 인텔리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그들은 사회적 상승이동을 하여 권력엘리트 집단에 진입한 전문관료집단이 빨치산세대와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무원과 노동당의 30-40%, 정치국 정위원의 50%, 후보위원의 70%가 전문엘리트출신이다. 8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직업성분별 구성비〉

기 별	노 동 자	농 민	사무·전문직
제4기(1967)	63.89	15.12	20.79
제5기(1972)	64.14	13.13	22.56
제6기(1977)	42.8	11	46.2
제7기(1982)	34.6	10.2	55.2
제8기(1986)	36.4	12	51.6

출처: 통일원 편,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1988)

북한은 1972년부터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면서 1977년부터 고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이후 교육 투자를 강화하여 해마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1987년 한해에 10개 대학과 3개 전문대학이 새로 생겨났다. 이로써 대학은 1987년 말 현재 244개이며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49만 4천여명의 학생이 재

6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1991:380-381.

학 중이며 1990년 현재 146만의 대학졸업자가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6.25 전쟁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8.5%에 달한다. 또 북한에서 항일투쟁과 6.25전쟁동안의 '對美투쟁'을 10세 이상의 나이로 직접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2% 미만이다. 이러한 '신세대'들은 '혁명세대'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사회의식에 있어서도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안주보다는 자아의식의 발전과 객관적인 판단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이미 1963년에도 이러한 '신세대'들의 특징은 혁명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세대들이 주역이 되면 체제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IV. 맺는말: 요약과 정책제안

이 논문에서 제시된 모형은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미시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행위에 필수적인 대안과 지불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거시적인 접근법을 통합하고 있다. 둘째로 이 연구는 그동안 수동적인 존재로서 통치의 대상이었던 북한의 인민을 정치에서 합목적적인 선택을 하는 주체로서 간주한다. 셋째로 그동안 변동이론의 양대산맥으로 꼽힐 수 있는 균형론과 갈등론의 시각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일반이론의 수준에서 새로운 통합모형을 구성한다.

그동안 정치학 이론에서 정치변동과 관련이 있는 이론은 크게 균형론과 갈등론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균형론은 사회중심적 이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서구에서 체제의 유지와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갈등론은 맑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계급갈등으로 역사의 변동을 설명한다. 두 이론은 세계에 대한 가정에서 부터 이론적 시각에 이르기 까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두 이론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두 이론은 거시적인 접근법으로서 인간의 미시적인 결정과정에는 무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증가능한 가설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접근법이 유용하므로 이 연구는 합리선택이론에 의해 이 두 이론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학 중이며 1990년 현재 146만의 대학졸업자가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6.25 전쟁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8.5%에 달한다. 또 북한에서 항일투쟁과 6.25전쟁동안의 '對美투쟁'을 10세 이상의 나이로 직접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2% 미만이다. 이러한 '신세대'들은 '혁명세대'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사회의식에 있어서도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안주보다는 자아의식의 발전과 객관적인 판단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이미 1963년에도 이러한 '신세대'들의 특징은 혁명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세대들이 주역이 되면 체제에 대한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IV. 맺는말: 요약과 정책제안

이 논문에서 제시된 모형은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미시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행위에 필수적인 대안과 지불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거시적인 접근법을 통합하고 있다. 둘째로 이 연구는 그동안 수동적인 존재로서 통치의 대상이었던 북한의 인민을 정치에서 합목적적인 선택을 하는 주체로서 간주한다. 셋째로 그동안 변동이론의 양대산맥으로 꼽힐 수 있는 균형론과 갈등론의 시각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일반이론의 수준에서 새로운 통합모형을 구성한다.

그동안 정치학 이론에서 정치변동과 관련이 있는 이론은 크게 균형론과 갈등론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균형론은 사회중심적 이론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서구에서 체제의 유지와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갈등론은 맑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계급갈등으로 역사의 변동을 설명한다. 두 이론은 세계에 대한 가정에서 부터 이론적 시각에 이르기 까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두 이론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통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두 이론은 거시적인 접근법으로서 인간의 미시적인 결정과정에는 무지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증가능한 가설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접근법이 유용하므로 이 연구는 합리선택이론에 의해 이 두 이론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통합모델은 구체적으로 정치변동에 직접적 연관을 갖는 정치사회화론과 국가-사회관계론을 통합한다. 정치사회화론은 사회체제의 유지와 지속은 성공적으로 설명하지만 개인의 정치행위나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많은 예외성은 설명하지 못한다. 국가론은 국가가 독립변수로서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가가 사회로 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사회화 모델은 이념의 중요성을 국가론은 경제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또한 구분이 된다. 이러한 두가지 이론을 합리선택이론에서 통합하면 이론의 구성은 사회화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입장으로 부터 기술된다. 합리선택이론의 기본요소는 행위자들 (개인, 인민, 또는 대중),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 대안과 관련된 확률과 지불값,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정보의 수준이다. 이때 대안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이다.

국가는 동의에 의한 지배와 힘에 의한 지배를 한다. 사회가 국가를 압도하는 곳에서는 사회이념과 국가이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의에 의한 지배영역이 크고 반대로 강제력에 의한 지배영역은 축소된다. 이 때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넓은 의미의 경제문제이다. 이는 맑스주의자가 말하는 생산관계 뿐 만이 아니라, 성장, 분배의 제 문제를 포함한다. 개인은 국가와 사회가 제시하는 대안으로 부터 선택을 하는데 이때 현상태를 저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집합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변화가 온다. 정치변동이 오기 위해서는 태도에서의 변화가 행동에서의 변화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이 개인이 갖는 목표에 부합하다면 국가는 용이하게 정치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국가가 사회와 갈등을 일으킨다면 개인은 사회이념에 충실하여 국가에 저항할 수도 있고, 국가에 충실하여 사회적 관습을 저버릴 수도 있게 된다. 국가가 제시하는 대안은 정책, 지도자, 정권, 체제의 차원에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 선택을 결정할 때 원칙은 1)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것 2) 직접경험이 간접경험에 우선한다는 것 3) 국가이념과 국가정책의 결과를 비교하여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통합모델에서 도출될 수 있는 가설은 1) 국가는 개인의 태도 보다는 행위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2) 국가의 영향에 의한 반

복적인 행위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를 초래한다. (단, 개인이 태도의 지속으로 인해 사회로 부터 받는 효용이 태도의 변화로 인해 사회나 국가로 부터 받는 효용을 능가할 때에는 예외이다.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존의 태도를 지속하여 국가에 계속 저항할 것이다. 3) 청년은 다른 연령에 비해 태도나 행위를 바꿀 확률이 높다. 4) 정보의 취득이 용이한 사람은 태도나 행위의 변화가능성이 높다. 5) 사회적 성숙이 대안을 창조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국가와 사회의 갈등이 크지만 국가로 부터 변동의 대안이 생기지 않을 때, 사회가 조직력이 생기면) 위로 부터의 대안이 주어지지 않아도 체제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때, 북한의 체제유지나 변동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동일하다. 그것은 1) 동의에 의한 지배를 결정하는 사회이념과 국가이념 및 그것의 사회화기제이다. 2) 국가와 사회의 우위를 결정하는 힘에 의한 지배이다. 3) 선택적 대안의 지불값을 결정하는 넓은 의미의 경제문제이다. 4) 정보의 수준은 선택의 대안과 선택의 전략을 결정한다. 이상의 네가지 요소가 어떻게 북한이 오늘날까지 체제유지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를 결정했으며 이러한 네가지 요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단과 한국전일 것이다. 이 네요소에서의 변화를 통해 전망해 본 북한의 체제는 변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변화는 변동의 주체세력에 따른 분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대안이 어디서 부터 주어졌느냐에 따라 위로부터의 대안에 따른 변화와 아래로 부터의 대안에 따른 변화로 양분하였다. 북한에서는 위로 부터의 대안이 자발적으로 주어지기 보다는 경제의 실패로 아래로 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또는 국제관계에서의 압력에 의해서 주어질 확률이 많다. 이 경우 체제의 유지를 위해 다른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경제개혁을 미룬다면 경제위기에 의한 아래로 부터의 욕구분출은 체제의 위기로 까지 연결될 수 있다. 지도자나 정권차원에서 대안이 없으면 조그마한 변동의 요구도 체제의 변동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개방을 통해 경제개혁에 성공한다면 체제는 당분간 안정되겠지만 외부로 부터의 정보의 유입에 의해 아래로 부터 새로운 대안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아래와 타협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북한의 딜레마는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을 함으로써 체제에 위협적인 시도를 해야되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북한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은 개방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경제성장을 꾸준히 하여 아래로 부터의 분출을 막는 길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권력을 공고화하지 못한 가운데 개방을 하게 되면, 국가의 강제력이 약화되어 정보의 통제가 어려울 것이고, 다른 대안을 위에서 제시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 아래에서 부터 오는 변화의 요구가 체제변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주의의 문제는 체제의 속성상 다원주의를 허용하지 않는 일원주의로서 여러차원의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 부터 변화의 요구가 있게 되면 체제의 변동으로 즉각 연결되거나, 위에서 대안이 온다고 해도 그 대안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속성의 수정을 필연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의 변동은 체제변동을 할 확률이 높다. 이는 대안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주의체제의 속성에서 부터 결과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암시하는 정책적 제안은 무엇인가? 우선 통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통일은 흡수통일로만 가능한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통일이 우리의 최우선과제라면 남한은 북한의 체제의 몰락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북한의 부분적인 개방조차도 방해하면서 경제적 원조에 비협조적임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면 언젠가는 체제변동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통일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통일의 비용은 한민족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후자를 원한다면 북한의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통해 통합의 길로 들어서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점진적인 개방을 위해 협조하고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경제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통제력을 상실하기 전에 개방을 시작함으로써 통제를 병행하는 가운데 경제개혁을 꾀한다면, 또는 정권의 차원에서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중기적으로는 아래로 부터의 요구와 타협함으로써 체제의 지속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도한 북한체제의 변동전망이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새

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커다란 차이점은 이러한 전망이 이론으로 부터 추론되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망들이 상식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그 근거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론적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인민을 수동적인 존재로 가정한 연구에서 이 연구와 꼭 같은 전망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이론적 가정과 전망이 논리적이지 못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 연구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를 자극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북한의 핵 변수를 모델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이다.

〈참고문헌〉

- 강민, “국가이론의 한국적 적실성,” 한국정치학회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서울: 법문사, 1987.
- 강정인, “북한사회의 평등성: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전망과 관련하여,” 『동아연구』 제24집, 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2: 111-152.
- 고또오 후지오, “북한경제의 실상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1991.
- 고승효저, 김하민역,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 서울: 청사, 1988.
- 고현욱,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1987.
- 국립출판사, 『우리나라의 인민경제발전』 평양: 1958.
- 김승채, “북한체제의 유지능력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변화와 북한의 적응 능력을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논문집(III)』 서울: 통일원, 1991.
- 김연각,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 모델에 관한 연구: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규명을 중심으로,” 『북한·통일연구논문집(III): 북한의 체제변화분야』 통일원, 1991.
- 김영규, 『북한의 실질소비생활수준 분석』 서울: 국토통일원, 1984.
-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2.
- 김웅진, 『정치학방법론서설』 서울: 명지사, 1992.
- 김재영외,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서울: 형설출판사, 1990.
- 류길재, “국가-사회관계의 관점에서 본 북한체제의 변화,” 『북한·통일연구논문집(III): 북한의 체제변화분야』 서울: 통일원, 1991.
- 민족통일연구원 편,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1991.
- 박경애, “북한사회의 변화전망,” 『90년대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서울: 통일원, 1991.
- 박춘삼,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상황변화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국토통일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서울: 1987.
- 백병훈, “북한 체제유지능력의 지속과 한계: 체제변화요인의 시험적 검토,”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III): 북한의 체제변화분야』 서울: 1991.
- 백병훈, “북한체제유지능력의 지속과 한계,”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III)』 서울: 1991.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1983.

-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평양: 1985.
- 서대숙, 『북한권력엘리트 구조변화에 대한 비교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서진영 편, 『사회주의의 위기와 생존전략』 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3.
- 서진영,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통일원, 1989.
- 서진영, 『탈냉전시대 북한의 신안보정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2.
- 신기현, “사회주의체제 정당변화에 따른 북한의 정당변화모형: 다원화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통일원, 『북한의 정치. 경제전망 대남정책분야』 서울: 1992.
- 안병준,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 1991.
- 엘렌 브룬, 제크 허쉬, 김해성 옮김 『사회주의 북한』 서울: 지평, 1988.
- 월간조선편집부,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서울: 1991.
- 이용필, “국가의 체계론적 모델” 한국정치학회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서울: 법문사, 1987.
- 이인성, “공산주의체제에서 엘리트구조가 경제개혁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모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2호,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2.
-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 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1992.
- 임영일, 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1985.
- 전인영,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사, 1990.
- 정대규, “북한체제의 변화전망,” 『동아연구』 제23집.
- 조기숙, “합리적 유권자모델과 한국의 선거분석,” 한국정치학회 편, 『선거와 한국정치』 서울: 1992.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2』 서울: 돌베개, 1989.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1979.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49』 평양: 1949.
- 통일원, 『92북한개요』 서울: 1992.
- 통일원, 『북한. 통일연구논문집 (IV): 북한의 정책및 사회변화 추세분야』 서울: 1991.
-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서당, 1990.

- 한배호, “남북한 정치변화의 구조적 분석과 통일과정,” 제3회 한국정치세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1993.
- 황수익, “정치학과 합리적 선택접근법,” 『한국정치학회보』 서울: 1985.
- Almond, G.A. and G. Powell Bingham, Jr., *Comparative Politics*. 2nd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8.
- Almond, G.A. and Verba Sidney, *The Civ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Almond, Gabriel A., “The Return to the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3, 1988: 853-874.
- Barry, Brian , *Sociologist, Economists, and Democra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Beck, Paul Allen , “The Electoral Cycle and Patterns of American Politics,”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isberg eds.,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2nd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84.
- Boneparth, Ellen, “A Framework for Policy Analysis,” in Ellen Boneparth ed., *Women, Power and Policy*. Elmsford, N.Y.: Pergamon, 1982.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1960.
- Carnoy, Martin, 이재석외 역, 『국가와 정치이론』 서울: 한울, 1985.
- Clubb, Jerome M., Flanigan William F., and Zingale Nancy H., *Partisan Realignment*. Beverly Hills: Sage, 1980.
- Cotton, James, “Civil Society in the Political Transition of North Korea: The Limitations of the East European Model,”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6-2: 319-337.
- Dahrendorf, Ral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 Djilas, Milovan, *The New Class*. New York: Praeger, 1957.
- Easton, D. and Dennis, J.,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 Easton, David,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 New York: Routledge, 1990.
- , “The Political System Besieged by the State,” *Political Theory*. Vol. 9, 1981.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비판: 정치체계론의 시각에서,” 임영일, 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1985.

- Eckstein, Harry, "A Culturalist Theory of Political Chan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2-3, 1988.
- Erikson, Robert S. and Tedin Kent L. , "The 1928-1932 Partisan Realignment: The Case of the Conversion Hypothe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5, 1981.
- Evans, Peter, Dietrich Rueschemeyer, Theda Skocpol,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1985.
- Femia, Joseph V., *Gramsci's Political Thou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Foster-Carter, Aidan, "북한사회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버마스 위기이론의 적용,"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Froman, Lewis A., Jr., "Personality and Political Socialization," *Journal of Politics*, Vol.23. 1961: 341-352.
- Greenstein, F.I., *Children and Politic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6.
- Huntington, Samuel P., "How Countries Democratiz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6-4.
- Johnson, Benton, 『사회과학의 구조기능주의』, 박영신역, 『현대사상신서』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78.
- Kavanagh, Dennis, *Political Culture*.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2.
- Key, V. O., Jr., "A Theory of Critic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Vol. 17, 1955: 3-18.
- Langton, Kenneth P., *Political Socialization*. Boston: Little, Brown, 1969: 4.
- Mills, Wright C. ,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 Nie, Norman H., Verba Sidney , Petrocik John R., *The Changing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Nordlinger, Eric A., Lowi Theodore J., and Fabbrini Sergio, "The Return to the State: Critiqu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3-3, 1988: 875-901.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Riker, William and Ordeshook, Peter,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olitical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Rogowski, Ronald, *Rational Legitimacy*. New Jersersy: Princeton Univ. Press, 1974.
- Satori, Giovanni, "Concept Misformation in Comparative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4, 1970: 1033-53.
- Sears, David O., "Political Socialization," F. Greenstein and N.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Addison-Wesley: 95.
- Shlyk, N., "Economic Ties Between the USSR and the DPRK," *Far Eastern Affairs*. Vol.2, 1986: 136-143.
- Skocpol, Theda, "Bringing the State Back In: Strategies of Analysis in Current Research," Peter Evans, Eietrich Rueschemeyer, Theda Skocpol 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So, Alvin, "세계체제론에서 본 중국혁명과 북한사회의 변화전망,"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 Somit, Alert and Peterson, Steven A., "Political Socialization's Primacy Principle: A Biosocial Critiqu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 No. 3, 1987.
- Stepan, Alfred, *The State and Society: Peru in Comparative Perspectiv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xii-xiii.

北韓의 政治經濟的 危機要因에 관한 研究

研究責任者：權 五 允 (東國大學校)

목 차

(요 약 문)

I. 서 론	333
1. 연구목적	33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5
II. 북한체제의 위기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들	336
1. 사회주의체제 위기요인분석을 위한 제 접근법	336
2. 전체주의적 접근법의 한계와 동원체제적 접근법의 유용성	344
3. 동원체제적 접근법	350
III.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위기요인	356
1.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건설노선	357
2. 소련의 개혁과 붕괴원인	362
3. 북한의 사회주의발전노선의 문제점	370
IV.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요인	376
1. 북한경제의 사회주의적 개혁	376
2. 경제발전정책과 성과	382
3. 경제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혁	386
V. 북한의 군사외교적 위기요인	392
1. 경제부문과 군사부문의 상관관계	392
2. 북한경제의 침체와 남북한 군비경쟁 실태	397
3. 북한핵무장의 배경	403
VI. 결 론	407
1. 요약 및 결론	408
2. 정책적 제안	410
參 考 文 獻	415

北韓의 政治經濟的 危機要因에 관한 研究

權五允 · 秦熙官(東國大)

요약문

I. 연구의 목적

최근에 들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質과 量, 양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고 이는 단순한 보고서형태에서 벗어나 학문적인 연구의 영역에 까지 다달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한지 2년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소련의 崩壞原因과 그 원인들의 북한에 대한 適用研究는 아직도 충분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소련의 붕괴원인과 그것의 북한에 대한 적용은 사회주의권의 發展論理에 대한 哲學的 解明과 經驗的인 成果, 그리고 그것들이 미치는 政治軍事的 效果에 대한 연구를 불가피하게 요구하기때문에 그 접근의 어려움과 복잡성으로 기피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회주의권의 內在的 論理에 따른 현상규명과 경제적 성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미치는 정치군사적 효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이는 바로 소련의 붕괴원인이 사회주의이념 그 자체의 붕괴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주의권의 붕괴원인이 사회주의제도 그 자체에 있다고 할 경우 북한에도 이러한 가설의 일반성이 적용되어 곧 붕괴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구를 비롯한 소련의 붕괴원인과 관련지어 북한의 危機原因을 규명함은 북한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對北韓政策을 수립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서 최근 북한은 核擴散禁止條約(NPT)의 탈퇴로 核武裝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사실 오래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일로 북한의 危機的 狀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오래전부터 經濟的 危機를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당연히 經濟에 의존한 軍事部門의 危機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소련이 共產主義體制의 非力動性→ 經濟沈滯→ 무리한 美·蘇 軍備競爭→ 과중한 軍費負擔→ 國民經濟의 惡化→ 국민의 不滿增加→ 改革의 要求가 밑으로 부터 분출하였던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소련은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로 개혁의 요구에 부응했지만 북한은 이 위기에 대해 核武裝으로서 恐怖의 均衡(balance of terror)을 이루는 동시에 군사비부담을 줄임으로써 김일성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를 부흥시켜보자는 의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이 최근 발표한 核擴散禁止條約(NPT)의 탈퇴는 김정일의 軍部에서의 指導力掌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따라서 그 해결에 있어서는 유동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입장은 핵무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한에서의 북한에 대한 대응은 그 意圖와 方向에 대해 일정한 분석과 대책이 없이 단순히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재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만 견지한 채 국제사회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한반도의 분쟁해결에 있어 전쟁이 재발될 경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측은 한민족전체이며 반면에 전쟁에 따른 별피해 없이 자국내의 軍需産業發展을 노리는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 등 서방산업국가들이다. 현재 미국 등 우방은 소련에 대해 레이건이 취했던 강경정책(SDI 정책 등)을 북한에 대해 펴고자 하며 팀스피리트훈련 등 북한을 자극하고자 하는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음이 최근의 정책과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특히 김일성체제의 위기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돌발적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음은 분명하다.

한편 우리는 만일 북한의 위기요인분석을 통해 북한의 위기요인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개혁하기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굳이 한반도를 인질로 하는 미국 등 우방이 취하고자하는 급진적 강경정책보다는 좀더 느긋한 북한 내부의 자체몰락을 유도하는 우회적 정책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견지에서 본 논문은 첫째,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요인을 정치이데올로기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군사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최근 핵무장에 대한 의도가 단순히 김정일의 군부장악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위기에서 활로를 개척하려는 몸부림임을 밝히며, 둘째, 북한의 이러한 근본적인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김정일체제의 안

정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제하에 김정일체제의 향후정책과 갈등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세째, 지금까지 소련이 붕괴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련의 붕괴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과 결과가 없었던 점에서 본 연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하는데에는 무엇이 필수조건이며 왜 현실사회주의는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북한의 내부논리에 따라 분석해봄으로써 기존의 냉전논리에 의해 배타시되었던 좌파적 이론을 수용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

II. 연구내용

이미 마르크스·레닌주의(Marx-Leninism)의 科學的 共產主義의 원칙을 내세워 사유재산을 集團化 또는 社會化해 온 북한은 1958년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의 전일적 지배를 확립하였다. 사실 마르크스의 예언에 따르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生産力이 일정한도로 발전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생산관계가 더이상 생산력에 조응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인민의 자발성에 따른 생산력 발전으로 평등하고 풍부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된다. 이는 곧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자본주의보다 한층 더 높은 생산력발전을 자연스럽게 초래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유지 및 그에 따른 높은 생산력 발전이 수반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이 동시에 조화되지 못할 때 공산주의 건설목표와 구체적인 발전노선은 파행성을 띠게 된다. 즉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이 예측했던 바와 같이 상호 조응하지 못할 때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先生産關係의 측면에서 일정량의 생산력부진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고집해야 할 것이냐 또는 반대로 생산관계보다 생산력발전을 강조하는 先生産力발전의 노선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생산력발전에 우선을 두어야 하느냐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러한 파행성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미래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를 꺼려했던 데도 원인이 있으며 또한 자본주의에 의한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염두에 두었던 마르크스와는 달리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발생하였다는 데도 문제점이 있었다.

1950년대말과 60년대초에 북한에서도 이러한 선진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의 후진성에 대한 문제가 일부경제학자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노동당에 의

해 목살되고 선진적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발전을 추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생산관계의 유일적 지배를 최단 기간내에 확립하고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자신들의 경험에서 입증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이 내린 결론은 사회주의혁명초기에 취하게 되는 대중동원과 혁명열기에 의한 것이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 발전이 항상적으로 조응해서 일어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 실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길을 걷고있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동구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초기에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보이지만 점차 혁명의 열기가 식고 초기 動員體制의 效率性이 줄어들면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고 북한의 경제도 초반기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후에 1960년대말과 1970년대초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극심한 침체국면에 접어들었다. 1990년에는 휴전이후 최초로 3.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1991년에는 -5.2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주의권의 이러한 일반적인 경제침체는 자본주의의 경제발전과 비교되어 자연히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그들이 예측하였던 바와 같이 생산력발전과 상호 조응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제침체는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냉전체제하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체제의 패배로 인식되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약화시키며 나아가서는 軍備에도 영향을 미쳐 자본주의에 대한 상대적 취약성을 드러내 사회주의의 체제적 위기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남한과 적대적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적 위기의 측면에서는 미국과 대립했던 소련과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위기요인들이 김일성체제를 점차 초조하게 만들고 있으며 급기야는 핵무장을 통해 위기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북한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핵무기의 대립, 즉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통해 한민족의 전멸을 인질로 하여 더이상의 외부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며 둘째, 경제침체로 인해 남한과의 더이상 체제식무기경쟁은 할 수 없으므로 핵무장을 통해 장래 예상되는 군사비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셋째, 핵무장이라는 강경한 군사정책을 통해 김정일이 군부의 지도력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남북한의 군비축소문제가 군의 일부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에 대한 적극적 정책은 역으로 군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겠기 때문이다. 끝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김일성체제가 북한의 대중에게 어떤 강력함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여지며 동시에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내부적인 동요와 불

만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래 북한이 자주 전쟁위기로 북한대중을 동원시켰음을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응해서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크게 강경책과 온건책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강경책으로서는 1983년 레이건이 취했던 바와 같이 북한을 정치군사적으로 자극하여 계속 과중한 군사비지출로 유도하며 심지어는 군사력에 의한 강제사찰을 한다는 명목하에 군사적 시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핵확금지약탈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군사적 시위와 더불어 경제봉쇄를 취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책은 북한의 김일성체제가 붕괴직전에 한반도를 전쟁으로 휘말리게 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온건책으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양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이 주장하는 1)미국핵위협해소 2)한국내 미국핵기지 공개 3)팀스피리트훈련 영구중단 4)IAEA의 공정성과 영구중립확보 등을 대폭 수용하고 동시에 북한을 개방과 교류로 이끄는 과감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위기를 해소시켜주고 김정일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고 그 과정에서 김일성체제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개혁세력이 자발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는 점에서 평화통일의 측면에서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은 기존의 정치경제학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현실적으로는 공산주의사회건설전략, 남북한의 체제경쟁, 그리고 김일성체제유지에 위기로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는 바로 사회주의건설노선의 구체적 경제성과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나아가서는 김일성체제의 정당성과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동안 고수해온 자력갱생노선과 군중노선에서 탈피하여 과감하게 개방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물질적 자극과 사유재산, 시장, 가격정책의 인정 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체제적 위기원인을 극복하기위해 이러한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외국에 대한 개방과 개혁이 김일성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온 사회주의 경제건설노선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김일성체제의 붕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는 이미 많은 지도자의 교체를 이룩하면서 앞선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개혁과정을 거쳐왔으나 김일성체제는 지도자의 교체경험이 없어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비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는 현재상태에서는 더욱 심화되어 결국 김일성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요인에 관한 연구

권오윤·진희관 (동국대)

I. 서론

1. 연구목적

최근에 들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질과 양, 양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고 이는 단순한 보고서형태에서 벗어나 학문적인 연구의 영역에 까지 다달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한지 2년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소련의 붕괴원인과 그 원인들의 북한에 대한 적용연구는 아직도 충분한 연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소련의 붕괴원인과 그것의 북한에 대한 적용이 사회주의권의 발전논리에 대한 철학적 해명과 경험적인 성과, 그리고 그것들이 미치는 정치군사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불가피하게 요구하기때문에 그 접근의 어려움과 복잡성으로 기피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회주의권의 내재적 논리에 따른 현상규명과 경제적 성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미치는 정치군사적 효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이는 바로 소련의 붕괴원인이 사회주의이념 그 자체의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으며 만일 사회주의권의 붕괴원인이 사회주의제도 그 자체에 있다고 할 경우 북한에도 이러한 가설의 일반성이 적용되어 곧 붕괴할 것이라는 결론에 다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구를 비롯한 소련의 붕괴원인과 관련지어 북한의 위기원인을 규

다.⁶⁶⁾ 즉, 지도관 대중들에게 전위의 정책이 옳바르다는 것을 대중들 자신의 경험 속에서 확신시키고 전위의 정치의식 수준으로 그들의 의식을 끌어 올림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동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⁶⁷⁾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5년에서 1966년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 주체사상은 1967년 5월에 열린 제4기 제1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라고 선언되었고, 1970년의 당 5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과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⁶⁸⁾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 당과 국가의 유일사상체계로 정착되면서, 주체사상의 내용도 思想 - 理論 - 方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겠다. 즉, 협의의 주체사상은 소위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내용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 그리고 지도원리로 구성되며, ‘이론’은 혁명전통에 관한 이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이론 등을 의미하고, ‘방법’은 영도체계와 영도원칙, 그리고 영도예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⁶⁹⁾

이같은 주체사상의 체계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방법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 수령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수령론이 정식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중에 대한 지도의 문제가 당의 최고 영도자로서의 수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주체사상에서는 주체의 혁명철학과 혁명이론을 통해 제시된 전략전술을 대중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영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영도방법’을 별도의 이론체계로서 구성하여 다루고 있다. 즉, 주체사상에서 말하고 있

66) 한국정치연구회 지음, 『북한정치론』(백산서당, 1990), p.69.

67) J.V. Stalin, “레닌주의의 제문제에 대하여”, 서종진 옮김, 『스탈린선집 1』(전진, 1988), p.224.

68) 이상민, “북한의 정치구조와 권력세습”, 『북한연구』(대륙연구소, 1991년 가을호), pp.10-11.

69) 조진경, 『민족자주화운동 2』(백산, 1988), pp.205-212.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만일 북한의 위기요인분석을 통해 북한의 위기요인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개혁하기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굳이 한반도를 인질로 하는 미국 등 우방이 취하고자하는 급진적 강경정책보다는 좀더 느긋한 북한내부의 자체몰락을 유도하는 우회적 정책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견지에서 본 논문은 첫째,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요인을 정치이데올로기적 요인, 경제적 요인, 군사적 요인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최근 핵무장에 대한 의도가 단순히 김정일의 군부장악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위기에서 활로를 개척하려는 몸부림임을 밝히며, 둘째, 북한의 이러한 근본적인 위기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김정일체제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전제하에 김정일체제의 향후정책과 갈등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셋째, 지금까지 소련이 붕괴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련의 붕괴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과 결과가 없었던 점에서 본 연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하는데에는 무엇이 필수조건이며 왜 현실사회주의는 실패하게 되었는가를 북한의 내부논리에 따라 분석해 봄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예측함과 동시 변화분석을 위한 이론적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북한체제의 위기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제기되는 제일 큰 문제점은 먼저 자료수집 내지 자료접근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더우기 북한 특유의 동원정권적 성격때문에 사회내 하위체계의 자율성은 전혀 용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과정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집단간의 이익상충과 지도노선간의 논쟁에 대한 것도 전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어떠한 쟁점이 북한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위기의 심각성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북한의 위기요인과 심각성은 동구나 소련의 경험, 또는 북한지도자들의 숙청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북한의 통계는 서방의 것과 비교가 어렵고 또한 군사비추정은 과소평

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며 북한의 일부주민들 사이에서는 남한과의 전쟁을 통해 "이기면 남한식량, 지면 김일성패망"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조선일보」(1993.6.23)

가되거나 은폐의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가 요망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접근가능한 1차 및 2차적인 문헌 등을 중심자료로 분석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위주로 하였다.

최근까지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노선 및 위기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이론과 사상으로 편향되었던가 또는 단순히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으로 경제통계자료를 나열함에 그쳐 북한의 건설노선과 구체적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사실 사회주의체제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내부의 내적 논리에 따라 그 사회를 살펴보고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갖는 자료로서 그것의 보완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위기요인은 단순히 생산력 발전이라는 외연적 성장보다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순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 공산권의 개혁논쟁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은 그들의 개혁문제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내재적 논리와 구체적 경제성과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속에서 살펴보고 북한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생산력발전을 할 수 있으며 그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기가 경제부문에서 비롯된 것이며 경제부문의 위기는 바로 노동자들의 노동의욕감소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궁극적 원인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II. 북한체제의 위기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틀

1. 사회주의체제 위기요인분석을 위한 제접근법

정치학에 있어 접근법(approach)³⁾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치현상연구를

3) 사회주의체제 연구에서 접근법(approach), 시각(perspective), 개념 틀(또는 이론틀: conceptual framework), 모델(model), 또는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분명한 개념규정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상호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Lenard J. Cohen and Jane P. Shapiro, "Introduction", in Cohen and Shapiro, (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Doubleday &

가되거나 은폐의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가 요망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접근가능한 1차 및 2차적인 문헌 등을 중심자료로 분석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위주로 하였다.

최근까지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노선 및 위기요인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이론과 사상으로 편향되었던가 또는 단순히 서구 자본주의에 대한 시각으로 경제통계자료를 나열함에 그쳐 북한의 건설노선과 구체적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다. 사실 사회주의체제의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내부의 내적 논리에 따라 그 사회를 살펴보고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갖는 자료로서 그것의 보완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위기요인은 단순히 생산력 발전이라는 외연적 성장보다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비롯되는 모순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였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실제 공산권의 개혁논쟁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은 그들의 개혁문제가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내재적 논리와 구체적 경제성과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속에서 살펴보고 북한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생산력발전을 할 수 있으며 그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위기가 경제부문에서 비롯된 것이며 경제부문의 위기는 바로 노동자들의 노동의욕감소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궁극적 원인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II. 북한체제의 위기요인 분석을 위한 이론틀

1. 사회주의체제 위기요인분석을 위한 제접근법

정치학에 있어 접근법(approach)³⁾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정치현상연구를

3) 사회주의체제 연구에서 접근법(approach), 시각(perspective), 개념 틀(또는 이론틀: conceptual framework), 모델(model), 또는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분명한 개념규정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상호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Lenard J. Cohen and Jane P. Shapiro, "Introduction", in Cohen and Shapiro, (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Doubleday &

위한 전반적 전략(a general strategy for the study of political phenomena)”으로서 “정치분석에 임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스스로의 연구방향을 잡고 자료선택을 조정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가정의 체계 혹은 조직화된 개념”⁴⁾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접근법⁵⁾은 ‘방법론적 예외주의(methodological exceptionalism)’ 또는 ‘이론적 고립주의(theoretical isolation)’의 그늘에 가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동구에 집중된 ‘지역연구(area studies)’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⁶⁾ 특히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전국가를 동원체제화한다는 가설하에 적용되었던 전체주의적 접근법(totalitarian approach)은 상당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접근법에서 전체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반성은 전체주의적 특징을 가진 사회주의국가가 점차 산업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서서히 일어나는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를 다루기에는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미 공산권을 연구하던 학자들사이에는 1956년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1968년 8월 체코슬로바키아사태를 전후하여 기존 전체주의적 접근법으로는 그동안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개되어 왔던 변화와 발전, 그리고 ‘근대화(moderniz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⁷⁾ 이들은 비록 사회주의 국가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전체주의적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의 급격한 정치변화를 보기위해서는 그러한 정치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즉 체코슬로바키아사태라는 현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

Company, 1974), p. xxi

4) Lenard J. Cohen and Jane P. Shapiro, “Introduction”, in Cohen and Shapiro, (eds.), *op. cit.*, p. xxi

5)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분석에 대한 접근법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① 정치문화 접근법(역사 문화론적 접근법) ② 전체주의적 접근법 ③ 복합조직 접근법(관료적 접근법) ④ 근대화 내지 발전론적 접근법 ⑤ 집단갈등 접근법 ⑥ 자유화 접근법 ⑦ 구조-기능주의적 접근법 ⑧ 엘리트 접근법 등을 들 수 있다; 안병영, 「既存 統一 및 北韓 關係研究의 主題別, 方法論別 評價 및 發展方向定立」(서울: 국토통일원, 1977); 안병영 “북한연구의 방법론” 「현대공산주의연구」(서울: 한길사, 1982); Lenard J. Cohen and Jane P. Shapiro, *op. cit.*; Chang-Joo Ra and Byeong-Hoon Baek, (eds.), *Comparative Communist Studies: Scope and Methods*, (Seoul: Dae Young Moonwhasa, 1988) 참조

6) 安秉永, 「현대공산주의연구」, 앞의 책, p. 350

7) 사회주의권의 발전과 변화를 다루기위하여 1966년 미국학계의 공산권비교연구 계획위원회(the Planning Committee for Comparative Communist Studies of the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가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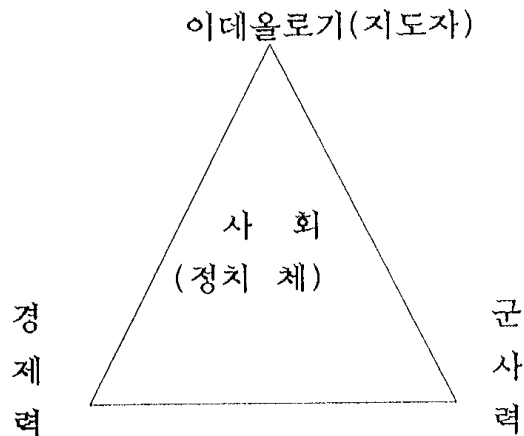
미 사태의 원인은 성장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체제가 흔들리던가 붕괴의 순간까지는 계속 전체주의적 특징을 강조하여 체제의 안정만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주의적 접근법의 문제는 바로 사회주의정권이 마르크스-엔겔스가 예측했던 바와 다르게 국가가 사라지지 않고 국민과 분리되어 존재하게 되면 경제적 근대화 또는 공업화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에 대한 다양성 요구와 정치적 견해에 대한 이견의 출현으로 결국 전체주의적 특징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데 있다. 이는 정치지도층의 의지와 다르게 경제분야나 사회분야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원주의적 경향과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면서 결국 사회주의 정치체제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체제를 떠받쳐 주는 요소를 이데올로기, 경제력, 군사력으로 분류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사회주의정치체제의 유지요소



위에서 군사력의 필요성은 본래 마르크스나 엔겔스에게 중요성을 갖지 못했으나 현존사회주의체제가 세계적 규모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자본주의체제와 대립되어 있고 이는 체제수호를 위해 필수적이게 된다. 그러나 결국 군사력은 기술과 자본 양면에서 경제력에 의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떠받쳐 주는 것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생산력발전으로서의 경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군사력이 없이 평화가 지속된다거나 경제적 빈곤속에서도 이데올로기나 군사력강화만으로 버틴다는 것이 상상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과 더불어 경제력과 군사력을 위한 생산력발전을 이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첫째로 사회주의체제가 생산력발전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생산력발전의 결과인 공업화나 근대화가 사회주의체제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련이나 동구의 사회주의체제는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생산력발전을 추구한 결과로 사회, 경제분야에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력발전을 기하는 데는 부적절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요소인 물질적 유인등을 도입하다보니 자본주의로 복귀하게 되어 체제의 정통성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생산력발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율성을 요구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다.⁸⁾

이는 바로 공산주의 사회달성을 위한 생산력발전이라는 전이문화(transfer culture)의 성공적 추구로 인한 경제발전은 제3세계의 근대화과정에서 보듯이 일체성(identity), 정통성(legitimacy), 참여(participation), 침투(penetration), 분배(distribution)의 위기를 발생시킨다는 일반적 이론⁹⁾이 사회주의체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거대한 실패(The Grand Failure)」로서 유명한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원인에 대해 경제적 요인을 지적하면서 “공산주의체제에서 경제적 성공은 정치적 안정을 저해하는 것이며 정치적 안정은 경제적 실패의 댓가이다”¹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소련의 말기상황이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비역동성→ 경제침체→ 무리한 미.소 군비경쟁→ 과중한 군비부담→ 국민경제의 악화→ 국민의 불만증가→ 개혁의 요구가 밀어로 부터 분출하였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¹¹⁾

8)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33~116.

9) Lucian W. Pye, (ed.), *Crises and Sequences in Political Development*; 민준기, 신정현, (공역), 「근대화와 정치발전 -정치위기의 극복-」, (서울: 법문사, 1982) 참조.

10)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p. 232.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위기요인을 분석하기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적 모델(liberal-democratic model)과 행정-기술관료주의 모델(administrative-technocratic model), 동원체제적 모델(mobilization model)인데 앞의 두 모델은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를 상징하고 있기때문에¹²⁾ 현재의 북한체제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반면에 동원체제적 모델은 아직 공업화의 결과로 인한 정치적 다원주의가 진행되어 있지는 않으나 생산력발전의 필요성에서 동원수단의 변화나 정치적 목표가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분석될 수 있음으로 인해 북한의 동원체제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¹³⁾

이밖에도 복합조직 접근법(the complex-organizations approach)이나 집단갈등접근법(the group-conflict approach) 등이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분석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도 공업화에 따른 이익집단발생이나 자율성추구로 인한 갈등을 분석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모델이나 동원체제적 모델에 흡수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적 모델은 공업화와 전체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 정도를 강조 하며 경제발전은 결국 정치적 자유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예측에 크게 의존한다. 효율성의 고려때문에 공산국가는 선거민주제나 다당제를 채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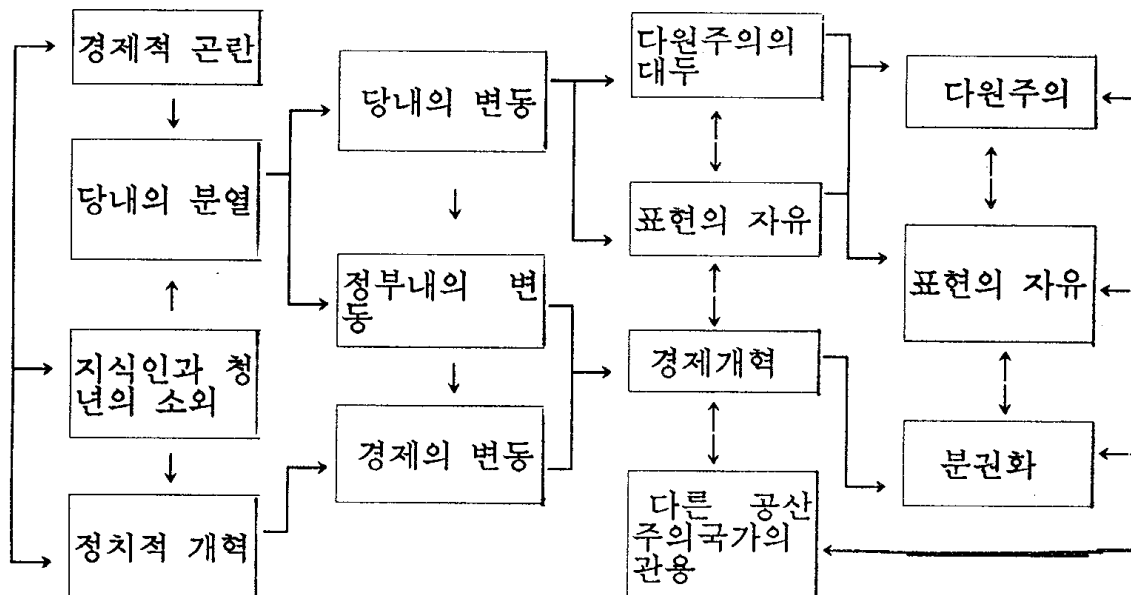
11) 이러한 점에서 Christopher Bertram은 “생산력에 우월한 사회형태가 살아남는다.”고 하고 있다. Christopher Bertram,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Historical Materialism” *NEW LEFT REVIEW*, 190 (1991) P.128 ; 권오윤, “동구권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탈냉전시대의 남북한관계와 통일문제」(서울:동국대 안보연구소 주최 학술세미나발표논문, 1991. 10. 11) 참조.

12) T. Anthony Jones, “Modernization Theory and Socialist Development” in Mark G. Field, (ed.),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n Communist Societ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pp. 19~49.

13) 북한의 동원체제를 연구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고영복, “북한의 정치사회와 사회동원체제” 김창순편, 「북한사회론」(북한문제연구소, 1977); 김교환, “북한정치체제에서의 동원유형 -3대혁명을 중심으로-” 이용필 편, 「북한정치체제」(서울:교육과학사, 1985); 김병원, 조희선, “평양축전을 통한 북한의 대중동원체제활용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6집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pp. 101-124; 도홍렬, “북한사회의 동원체제와 ‘사상’우선의 한계” 「북한」 185(1985, 9), pp. 76-85; Tai-Sung An, “The Policy Aspects of the Chuche’s Ideology: Mass Mobilization and the Economy” in *North Korea in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Dynasty* (Greenwood Press, 1983), pp. 95-96; 이명남, “공산주의 정치연구의 분석모델”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7집 (1978), pp. 525-272; 이문웅, “북한정치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제4권제2호(1978); 李相輝, 「북한의 동원체제에 관한 연구: 이념, 원칙, 수단을 중심으로」(서강대박사학위논문, 1992. 2); 이석호, “북한 정치체제에서의 동원 -조직과 수단-” 이용필 편, 북한정치체제, 앞의 책; 이용필, “북한정치체제의 변화과정” 이용필 편, 「북한정치체제」, 앞의 책; 李汪宰, “북한정치체제에 변화에 관한 연구”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7집 (1978); 이정수, “북한의 김정일후계체제의 동원형태” 「북한」 190권 (1987. 10), pp. 76-83; 정세현, “북한과 중공의 군중노선 비교연구”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1집 (1977); 정한구, “북한정치체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동원”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7집 (1978), pp. 213~239.

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체와 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

<그림2> 자유화 패러다임



I. 배경조건 II. 전환조건 III. 자유화 IV. 「자유화된」체제

출처: Andrzej Korbonski, "Liberalization Process", in Carmelo Mesa-lago and Carl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University of Pittsburgh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1975), p.206.

장한다. (<그림2>참조)¹⁴⁾

자유민주화 모델에 따라 동구의 개혁과 개방경향을 모델화하면 <그림3>과 같다.¹⁵⁾

그러나 행정-기술관료주의 모델은 근대화가 초래하는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가 서구의 집단갈등이론과는 다르게 「계급내적 사회분화 (intra-class social differentiation)」¹⁶⁾가 되어 정치적 민주주의보다는 관료 및 전문가에 의한 지배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 관점은 공업화와 전체주의의 본질적 양립가능성을 가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은 전체주의적 조직형태의 제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엑스타인의 컴퓨토피아(computopia)가 기술적 개념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선택은 경제적 효율성을 잃지않고 중앙집중적 정치통제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행

14) Mark G. Field,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n Communist Societies*, op.cit., p.21.

<그림3> 동구의 개혁과 개방과정

단계	시 기	진 행 과 정	
제1단계	60년대 후반	경제침체 장기화	⇨ 차관도입형 개방
	↓	↓	
제2단계	70년대 초반	체제내적 동질 변화	⇨ 무역적자와 외채문제
	↓	↓	
제3단계	70년대 후반	투자유치형 개방	⇨ 체제내적 이질변화
	↓	↓	
제3단계	80년대 초반	성과부진의 한계	⇨ 정치체제의 한계
	↓	↓	
제3단계	80년대 후반	정치개혁	⇨ 경제개혁
	↓	↓	
제3단계	90년대	비공산정권 등장	⇨ 시장사회주의 추구

정-기술관료주의 모형은 소련과 동구가 붕괴된 후 빛을 잃었으나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면서 합리적 운영을 강조하는 중국에게는 적용성을 잃지 않고 있으며 자유화패러다임은 최근의 소련과 동구의 사태를 설명하는데 적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의 갈등을 비교국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메사-라고(Carmelo Mesa-Lago)는 연속모형(continuum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는 <표1>에서 보듯이 X극에 가장 극단적인 사회주의적 특징을 배치하고 그 반대측면인 Y극에는 가장 자유화와 개방적인 특징을 배치함으로써 일정한 시점에 한 정치체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그 자체는 한 시점상에 정태적이나 그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내보면 <그림4>, <그림5>와 같이 동태적으로 그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표1> 사회주의체제의 연속선상 정태모형 (1968중반기준)

지배적 성향(강조성향)	X극	중국	쿠바	중간	소련	체코	유고	Y극
I. 사회학적 하위체계								
1. 계층화보다 평등	2	2	1	0	-1	-1	-2	-2
2. 물질보다 도덕적 유인	2	2	2	0	-1	-2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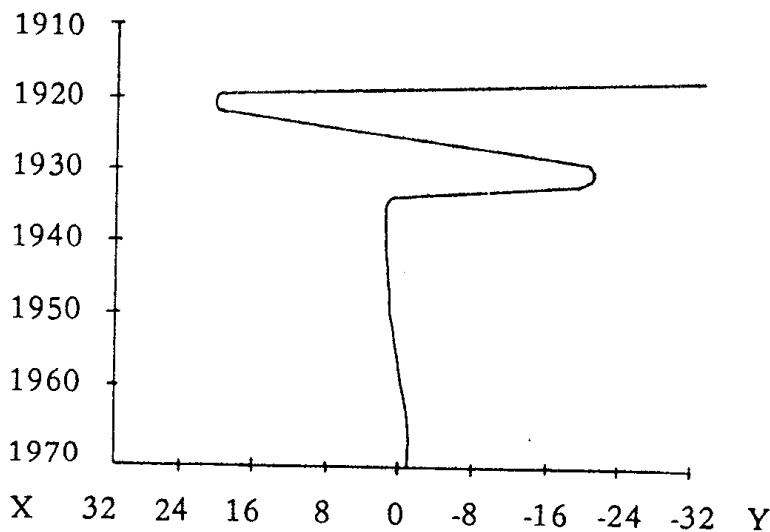
15) 이태욱, (편집), 「북한의 경제」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225.
 16) H. Gordon Skilling,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XVII, No. 3 (April 1966), p. 438.

II. 정치적 행정적 하위체계								
3. 제도화보다 영구혁명	2	2	1	0	-2	-1	-1	-2
4. 집단지도체제보다 개인독재	2	2	2	0	-1	-2	-1	-2
5. 정당권력보다 군대권력	2	2	2	0	-1	-2	-2	-2
6. 규범적 설득적 통제보다 자의적 강압적 통제	2	2	1	0	0	-2	-2	-2
7. 문화적 표현의 유연성보다 문경직성	2	2	0	0	-1	-2	-2	-2
III 경영-경제적 하위체계								
8. 분권보다 중앙집권적 계획	2	-1	2	0	1	-1	-2	-2
9. 자주관리보다 국가행정	2	-1	2	0	1	0	-2	-2
10. 專보다 紅	2	2	1	0	0	-1	-1	-2
11. 자율재정보다 예산회계	2	0	2	0	0	-1	-2	-2
12. 소비보다 자본축적	2	2	2	0	1	0	-1	-2
13. 농업과 서비스의 사유보다 국가-집단소유	2	2	1	0	0	0	-2	-2
14. 높은 노동생산성보다 완전고용	2	2	2	0	1	-1	-2	-2
IV 대외관계 하위체계								
15. 외부세계와의 통합보다 고립	2	2	1	0	-1	-1	-2	-2
16. 공존보다 세계의 혁명에 대한 헌신	2	2	1	0	0	-2	-2	-2
합계	32	24	23	0	-2	-19	-2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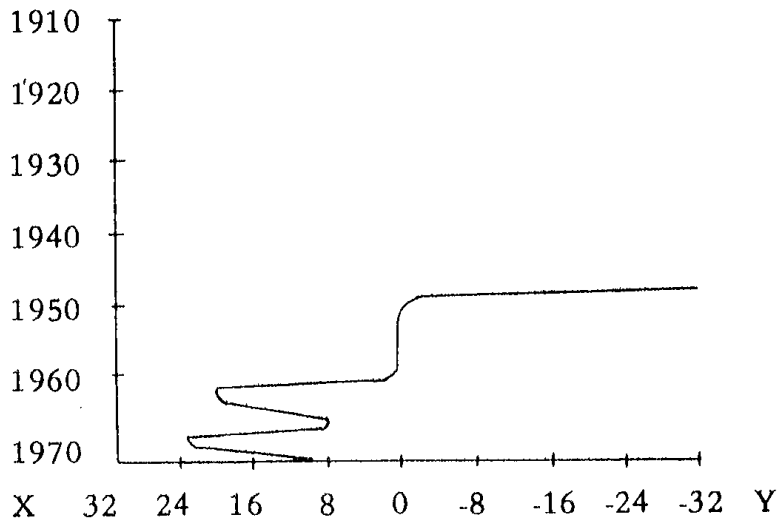
참고: 2=대단히 강함 1=강함 0=중간수준 -1=약함 12=대단히 약함

자료: Carmelo Mesa-Lago and Carl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University of Pittsburgh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1975), p.97.

<그림4> 소련의 연속적 변화모형



〈그림5〉 중국의 연속적 변화모형



2. 전체주의적 접근법의 한계와 동원체제적 접근법의 유용성

최근까지 북한체제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본래 1920-30년대의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민족사회주의,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주의 등의 독재체제의 운용을 규정짓고 비교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학자들에 의해 정교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¹⁷⁾ 전체주의론은 무

17)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뭇솔리니(Mussolini)가 1925년 10월 28일에 사용했는데 이 개념은 현재와는 다소 차이를 갖는 것이었다. Karl Dietrich Bracher, "The Disputed Concept of Totalitarianism -Experience and Actuality-" in Ernest A.Menze,(ed.), *Totalitarianism Reconsidered* (New York: Kennika Press, 1981), pp. 20~22.

이외에 전체주의적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로는 Carl J.Friedrich,(ed.), *Totalitarianism*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William Kornhauser,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Glencoe, Ill.:The Free Press, 1959);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2nd ed. (New York:Meridian Books, 1958); J.L.Talmon, *The Origins of Totalitarian Democracy* (New York: Praeger, 1960); Adam Ulam, *The New Face of Soviet Totalitarianism*, (Cambridge, Mass.:Harvard Univ. Press, 1963); Merle Fainsod, *How Russia Is Ruled*, rev.ed. (Cambridge, Mass., 1963); Betty B.Burch,(ed.), *Dictatorship and Totalitarianism: Selected Readings* (New York:D. Van Nostrand Company, Inc., 1964); Allen Kassof, "The Administered Society : Totalitarianism without Terror", *World Politics*, Vol. XVI, No. 4 (July 1964); Sigmund Neumann, *Permanent Revolution: Totalitarianism in the Age of International Civil War* (1965); Carl J.Friedrich and Zbigniew K.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5); Richard Lowenthal, "The Model of the Totalitarian State," i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Impact of the Russian Revolution 1917-196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pp. 274-351; Herbert J. Spiro, "Totalitarianism"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McMillan & Free Press, 1968); Carl Friedrich, Michael Curtis, and Benjamin

엇보다 국가와 사회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론틀로서 국가권력의 사회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상정한다. 18) 따라서 이 접근법은 1당지배 내지 1인지배 독재체제의 종별적 특징을 드러내는 정치체제중심의 비교정치학연구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19)

전체주의의 사용된 개념을 그라이펜하겐(Martin Greiffenhagen)은 ① 전통전제정부의 극단적 형태 ② 신비주의 형태 ③ 마키아벨리즘 형태 ④ 루소주의 형태 ⑤ 20세기 현상으로서의 전체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20) 이는 전체주의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얼마나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개념도 하나의 정치체제를 분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인식론(epistemology)이나 존재론(ontology)으로 양분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바버(Benzamin R. Barber)는 본질적 접근법(essentialistic approach)과 현상적 접근법(phenomenological approach)으로 명명하여 분류하고 있다. 본질적 접근법은 전체주의체제의 이념적 내용과 목표를 중시할 뿐 아니라 체제의 추상적 특징을 강조한다. 아렌트(Hannah Arendt)의 총체적 테러의 비전, 포퍼(K. Popper)의 유토피아적 사회엔지니어링, 브레진스키의 '제도화된 혁명적 열정'에 대한 강조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노이만(S. Neuman), 탈몬(J. L. Talmon), 비트포겔(K. Wittfogel) 등도 이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

R.Barber, *Totalitarianism in Perspective: Three View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9); Leonard Schapiro, *Totalitarianism* (New York: Praeger, 1972); Juan J. Linz,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Fre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3 - Macropolitical Theory -*,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pp. 175~412; J. Lucian Radel, *Roots of Totalitarianism: The Ideological Sources of Fascism, National Socialism, and Communism* (New York: Crane, Russak & Company, 1975); Samuel P. Huntington and Jorge I. Dominguez, "Political Development" in Fre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op. cit.*, pp. 1~114; S. P. Soper, *Totalitarianism: A Conceptual Approach*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1985); Paul Hollander, "Observations on Bureaucracy, Totalitarianis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Slavic Review*, Vol. XXVI No. 2 (June 1967); Martin Greiffenhagen,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 in Political Theory" in Ernest A. Menze, (ed.), *Totalitarianism Reconsidered* (New York: Kennika Press, 1981), pp. 34~57.

18) 전체주의에 대한 개념규정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내려져 있다. Frederic J. Fleron, Jr., "Soviet Area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in Communist Studies," Frederic J. Fleron, Jr., (ed.), *Communist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Essays on Methodology and Empirical Theory* (Chicago: Rand McNally & Company, 1969), pp. 1~33 참조.

19) 이정수, "북한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전체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p. 6.

20) Martin Greiffenhagen,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 in Political Theory" in Ernest A. Menze, (ed.), *Totalitarianism Reconsidered* (New York: Kennika Press, 1981), pp. 34~57.

다. 21) 그러나 본질적 접근법은 개념규정에 있어서의 자의성, 이론화의 곤란성, 이념적 감상주의 등의 방법론적 약점으로 인해 자칫하면 무원칙한 개념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22)

이와는 달리 현상적 접근법은 전체주의체제의 현상적 특징을 나열하면서 그것의 증후군(syndroms), 또는 상호관련된 특징들의 유형을 통해 개념정의한다. 그런 점에서 전체주의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나 내재적 논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처리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가 제시한 전체주의개념의 상호관련된 특징(interrelated traits) 또는 증후군(syndrom)으로서 ① 官制 이데올로기(an official ideologie) ② 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단일 대중정당(a single mass party) ③ 폭력적 경찰통제제도(a system of terroristic police control) ④ 매스컴수단의 독점(a monopoly of control of all means of effective mass communication) ⑤ 군부세력의 독점(a monopoly of control of effective armed combat) ⑥ 경제의 중앙집권적 통제(a centrally directed economy) ⑦ 팽창주의(expansionism) ⑧ 법과 법원의 행정적 통제(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justice and courts)²³⁾ 등이다. 이러한 현상적 접근법은 현실분석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하지만 미래의 인간사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론적인 제시가 부족하며 특히 사회주의체제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냉전논리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24)

21) Carl Friedrich, Michael Curtis, and Benjamin R. Barber, *Totalitarianism in Perspective: Three View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9), p. 10.

22) 이정수, 앞의 논문, p. 8.

23)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revised by C. J. Friedric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 27.

24) 실제로 전체주의적 특징 또는 증후군 등은 자본주의체제의 권위주의 정치나 독재정권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들이다. 또한 일반적인 대중사회에도 적용되는 요소들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는 시장=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는 계획=독재, 전체주의라는 판단은 객관적인 입장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체제는 경제체제의 결합과 함께 다음과 같은 현존 정치체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결합에 따른 정치형태〉

경제체제	정치체제
A. 사회주의	C. 민주주의(다원적)체제
B. 자본주의	D. 권위주의(독재)체제

1) AC형 : 스칸디나비아국가 정치형태

2) AD형 : 소비에트(스탈린의 소련)형 정치형태

이상에서 볼 때 전체주의적 접근법의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25)

첫째, 「전체주의」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다의적이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²⁶⁾

둘째, 그 개념이 규범적 함축성 내지 「가치부하적(value-loaded)」속성이 강하여 냉전적 수사, 선전과 연결될 위험성이 있다.²⁷⁾

셋째, 방법론적으로 유용한 비교개념은 적어도 두가지 식별기능, 즉 유사 현상간의 상이점을 밝혀주어야 하는데 전체주의 모델은 이러한 점에서 한계성이 있다. 예로서 브레진스키의 전체주의적 특징중 1당독재나 폭력적 경찰 통제제도, 그리고 매스컴수단이나 군부세력의 독점 등은 제3세계의 독재체제나 권위주의정치에서도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다.

28)

넷째, 전체주의 접근법은 지나치게 정태적이며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기

3) BC형 : 자유민주주의 정치형태

4) BD형 : 파시스트형 정치형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김명호, “「인간해방」과 현존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남강김갑철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2), p.65~66; 이정수, 앞의 논문, p.8; S.Amin, “The Future of Socialism” *MONTHLY REVIEW* Vol.42 No.3 (July-August 1990) pp.10~29; Lenard J.Cohen and Jane P.Shapiro, *op. cit.*, pp.xxvi~xxvii.

25) 전체주의 접근법의 비판에 대해서는 Robert C.Tucker,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LV, No.2 (June 1961), p.282.; Robert C. Tucker, “The Dictator and Totalitarianism” *World Politics*, Vol.XVII, No.4 (July 1965); Robert C.Tucker, “On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World Politics*, Vol.XIX, No.2 (January 1967); Alfred G.Meyer, “USSR, Incorporated,” and Robert C.Tucker, “The Question of Totalitarianism,” in Donald W.Treadgold, (ed.), *The Development of the USSR: An Exchange of Views* (Seattle: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4), pp.21~34; A.J.Groth, “The ‘Isms’ in Totalitarianis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LVII, No.4 (December 1964), pp.888~901; Alex Inkeles, “Models and Issues in the Analysis of Soviet Society,” *Survey*, 60 (July 1966); John Kautsky, “Communis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Slavic Review*, Vol.XXVI, No.1 (March 1967) pp.3~17, 특히 pp.3~5; Carl Friedrich, Michael Curtis, and Benzamin R.Barber, *Totalitarianism in Perspective: Three Views* (New York: Praeger, 1969); Zygmunt Bauman, “Twenty Years After: The Crisis of Soviet-Type Systems” *Problems of Communism*, Vol.20 (November-December 1971) pp.45~78; William Welch, “Totalitarianism: The Standard Critique Revised,” *Rocky Mountain Social Science Journal*, Vol.10, No.2 (April 1973), pp.57-69.; L.J.Cohen and J.P.Shapiro, (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74); David Lane, *The Socialist Industrial State*, (London: Allen & Unwin, 1976); S.F.Cohen, *Rethinking the Soviet Exper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26) 안병영, 「현대공산주의 연구」 앞의 책, pp.360~361.

27) L.J.Cohen and J.P.Shapiro, (eds.), *op. cit.*, p. xxvi.

28) Robert C.Tucker,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LX, No.1 (March 1961), p.282.

능을 무시하고 산출기능을 강조하므로 분석능력에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29)

다섯째, 기존의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공산정권의 안정성과 제도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체제내에서 일고있는 변화의 움직임에 대하여는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전체주의적 특징들을 의식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등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체제를 단순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³⁰⁾

그러나 위의 제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홀랜더(Paul Hollander)와 브레진스키 등은 전체주의 모델이 갖추고 있는 장점을 열거하면서 공산주의의 특징을 볼 때 아직도 전체주의적 접근법이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다.³¹⁾

이에 대해 존슨(Chalmers Johnson)은 “물론 전체주의적 모델은 모든 종류의 변화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체제가 획득(예를 들면 전쟁에 대한 동원)하고자 한다든가 또는 예방(외부의 엘리트층형성)하고자하는 특정한 변화에 자신을 한정짓는다”고 말하면서 전체주의모델의 약점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일어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³²⁾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주의적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갈등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동원체제적 접근법(the mobilization-regime approach)이라 할 수 있다. 동원체제적 접근법은 기본

29) Gordon Skilling,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18 (April 1966), pp. 435~451.

30) Valerie Bunce and John M. Echols III, "From Soviet Studies to Comparative Politics: The Unfinished Revolution", *Soviet Studies*, Vol. XXXI, No. 1, (January 1979), pp. 44~47.

31) Paul Hollander, "Observations on Bureaucracy, Totalitarianis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Slavic Review*, Vol. XXVI, No. 2 (June 1967), p. 305; Carl Linden, *Khrushchev and the Soviet Leadership, 1957-1964* (Baltimore, Maryland, 1966), pp. 2~9; Carl J. Friedrich, "In Defence of a Concept," *Government and Opposition* (Spring 1969), pp. 249-54; Patrick O'Brien, "On the Adequacy of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III, No. 1 (January 1970), pp. 55~60; Zbigniew Brzezinski, "Dysfunctional Totalitarianism," in Klaus von Beyme, (ed.), *Theorie und Politik* (The Hague: Nijhoff, 1971), p. 389; Richard Thornton, "The Structure of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24 (July 1972), pp. 498~517; Jerry Hough, "The Soviet System: Petrification or Pluralism?" *Problems of Communism*, Vol. 12 (March-April 1972), pp. 25~45; Jerry Hough, "The Bureaucratic Model and the Nature of the Soviet System," *Journal of Comparative Administration*, Vol. 5 (August 1973), pp. 134~68; William E. Odom, "A Dissenting View on the Group Approach to Sovie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28 (July 1976), pp. 542-67.

32)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op. cit.*, p. 3.

적으로 경제적으로 후진 지역에서 수립된 현존사회주의체제의 발전과정 또는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발전 또는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겪게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제변수들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갖는다.³³⁾ 따라서 동원체제적 접근법은 단순히 사회주의체제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의 당위성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주의라는 하나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의 형태를 취하는가를 연구과제로 삼는다. 심지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자체도 단순히 저발전국들이 산업화나 근대화를 수행하기위한 수단으로 보이며³⁴⁾ 이러한 점에서 동원체제적 접근법은 인식론적이라기 보다는 존재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³⁵⁾

33) Paul H.B.Godwin, "Communist Systems and Modernization: Sources of Political Cris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VI, Nos.1 & 2, (Spring/Summer 1973), pp.107~134.

34) John Kautsky, "Communis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Slavic Review*, Vol.XXVI, No.1 (March 1967), p.14; Robert Sharlet, "The Soviet Union as a Developing Country: A Review Essay,"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 II, No.2 (January 1968), pp.270~76; Charles K.Wilber, *The Soviet Model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9); John A.Armstrong, "Communist Political Systems as Vehicles for Modernization," in Monte Palmer and Larry Stern, (eds.), *Political Development in Changing Societies* (Lexington: D.C.Heath,1971), pp.127~58; John H.Kautsky,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New York:John Wiley & Sons,1971).

35) Robert C.Tucker,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V, No. 2 (June 1961), pp. 281~9.; John Kautsky,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ationalism and Communism* (New York,1962); Benjamin Schwartz, "Modernization and the Maoist Vision, Some Reflections on Chinese Communist Goals," *The China Quarterly*, No. 21 (January-March 1965), pp.3~19; David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1965); Morris Watnick, "The Appeal of Communism to the Peoples of Underdeveloped Areas," reprinted in Reinhard Bendix and Seymour Martin Lipset, *Class, Status, Power*, 2nd ed. (New York:The Free Press,1966), pp.428~36; Barrington Moor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Mass.,1967); Alec Nove and A.Newth, *The Soviet Middle East: A Model for Development?* (London:George Allen & Unwin,1967);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1968); Roger W.Benjamin and John H.Kautsky, "Communism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LXII, No.1 (March 1968), pp.110~23; Robert Sharlet, "The Soviet Union as a Developing Country: A Review Essay,"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 II, No.2 (January 1968), pp.270~76;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Stanford, Univ.Press,1970); Francis A.Botchway, ed., *Modernization: Economic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of Society* (Berkeley: McCutchan,1970) chap.2; Kenneth Jowitt,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Rumania, 1944-196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1971); Charles Gati, "Modernization and Communist Power in Hungary," *East European Quarterly*, Vol.V, No.3 (September 1971), pp.425~59; J.M.Montias, "Modernization in Communist Countries: Some Questions of Methodology"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V, No.4, (Winter 1972) pp.413~427; Dennis Pirages, *Modernization and Political-Tension Management: A Socialist Society in Perspective: Case Study of Poland* (New York:Praeger,1972); Mark G.Field, "Symposium on the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n Socialist Countries" *Newsletter on Comparative Communist Studies*, Vol.VI, No.3

3. 동원체제적 접근법

여기서 동원체제는 단순히 정치권력의 획득, 또는 유지, 확장을 피하기 위해 전자원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접근법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에 따라 대중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전자원을 일정한 방향(특히 생산력발전)으로 동원하는 메카니즘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엑스타인(Alexander Eckstein)에 따르면 특정한 국가의 정치체제는 일정한 사회적 욕구와 정치적 능력간의 산물이며 저발전 국가는 욕구가 큰 반면 능력이 작기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따라서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혁명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힘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저발전국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동원체제가 되고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조직은 그것이 의식적 무의식적이건 자발적인 지지와 그 체계의 인간행동가치의 내재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투입생산성향상과 투입동원화 상승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특히 초기의 동원화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순수한 자발적 자기희생정신과 개인적 욕구를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종속시키느냐에 따라 효과를 발휘한다. 프로이드(Zigmund Freud)에 따르면 동원은 “개인이 그의 이기적 이상을 버리고 대신에 지도자로 구현된 집단적 이상이 그자리를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³⁷⁾ 이러

(May 1973), pp. 36~51.; Paul H.B.Godwin, "Communist Systems and Modernization: Sources of Political Cris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VI, Nos.1 & 2, (Spring-Summer 1973), pp. 107~134; Benjamin Schwartz, "China's Developmental Experience, 1949-72," in Michel Oksenberg, (ed.), *China's Developmental Experience, Proceedings in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Vol.XXXI, No.1 (March 1973), pp.17~26; Carmelo Mesa-Lago and Carl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 Pa.:Univ. of Pittsburgh,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1975); Mark G. Field, (ed.),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n Communist Societies*, (Baltimore, Maryland: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1976); Nina P.Halpern,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in Communist Systems:The Case of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22, No.2/3, (Summer/Autumn 1989) pp.139~152; Edward Friedman,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Leninist States:The Case of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22, No.2/3 (Summer/Autumn 1989) pp.251~264; Victor Nee and David Stark, (eds.),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Stanford, CA:Stanford University Press,1989); Ko Jae-Nam,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form Communism" 『중소연구』 제14권 제2호 (1990년 여름호).

36) Alexander Eckstein,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Vol.XXII, No.4 (July 1970), p.481.

37) Sigmund Freud, *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 (New York,1967), p.61 in Alexander Eckstein, *ibid.*, p.481.

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에 따라 형성된 정치체제를 앵터는 「동원 체제(mobilization regimes)」³⁸⁾, 에치오니(Amitai Etzioni)는 「사회적 동원(social mobilization)」³⁹⁾, 그리고 터커(Robert Tucker)는 「운동정권(the movement regime)」⁴⁰⁾, 로웬달은 「개발독재(dictatorships of development)」⁴¹⁾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동원의 개념은 “국가가 사회내에 존재하는 제자원을 일정목표를 향해 개발, 관리, 이용하는 과정”⁴²⁾이나 “사회내에서 행동단위의 잠재적 에너지를 집단행동으로 가동화시키는 과정”⁴³⁾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에치오니의 표현대로 “사적이고 민간적인 자원통제를 공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바꾼다”는 개념이 말하듯이 사적 이익을 공적이익과 동일시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⁴⁴⁾

사회주의적 동원체제가 사회를 동원하기위하여 소유한 동원매개체(media of mobilization)는 힘(powe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치오니는 힘을 “이것이 없으면 중단되거나 변경될 현상태나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극복하며 반대에 직면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⁴⁵⁾고 하면서 설득적(persuasive), 강제적(coercive), 공리적(utilitarian) 힘으로 분류하고 있다.⁴⁶⁾ 또한 달린(Alexander Dallin)과 브레스라우어(George Breslauer)는 힘대신에 ‘정치통제(political control)’개념을 사용하여 일정한 방향과 지침으로 정치행동을 유도하면서 안정적인 정치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⁴⁷⁾ 정치통제가 사용하는 일정한 제재수단을 규범적(normative), 강제적(coercive), 물질적

38) David E.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 360

39) Amitai Etzioni, *The Active Society - A Theory of Societal and Political Process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 388~391.

40) Robert C. Tucker,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V, No. 2 (June 1961); Robert C. Tucker, “On the Revolutionary Mass Movement Regimes,” *The Soviet Political Mind* (New York, 1963)

41)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 (ed.), *op. cit.*, p. 35

42) David E. Apter,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op. cit.*, p. 360

43) Amitai Etzioni, *op. cit.*, p. 388

44) Amitai Etzioni, *ibid.*, p. 390

45) Amitai Etzioni, *ibid.*, p. 314

46) Amitai Etzioni, *ibid.*, p. 357~359

47) Alexander Dallin and George Breslauer, “Political Terror in the Post-Mobilization Stage” Chalmers Johnson, (ed.), *op. cit.*, p. 192

(material) 힘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동원수단(means of mobilization)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규범적 힘」이란 긍정적(positive), 또는 상징적(symbolic) 힘으로서 보통 설득적 힘이라고도 불리며 교육, 사회화, 위신(prestige), 인정, 사랑 등을 포함하며 「강제적 힘」은 부정적 또는 물리적 힘으로서 형벌, 테러, 규제, 경찰력 등을 가리킨다. 기술적, 또는 공리적 힘으로도 불리는 「물질적 힘」은 보상적 힘(remunerative power)으로 임금, 보상, 보너스, 뇌물, 승진 등의 유인(incentives)을 가리킨다. 48)

앞에서 지적했듯이 동원체제 모델의 출발은 바로 본래의 마르크스-엥겔스의 예측과는 다르게 사회주의혁명이 선진자본주의에서가 아닌 식민지 또는 반봉건적 잔재가 남아있는 소련, 중국, 북한 등과 같은 저발전국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존사회주의체제의 형성을 공산주의 사회달성이라는 목표문화를 가지고 경제발전이나 근대화라는 전이문화를 달성하려는 하나의 근대화전략으로 평가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49)

존슨(Chalmers Johnson)은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과 다르게 저발전된 사회주의체제는 목표의 이중성으로 특징된다고 하고 있다. 즉 정치권력장악의 기반이 된 사회현실은 정치력에 의해 동원되는 근대화나 발전을 요구하며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무계급사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두 목표는 정치체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자본주의적 세계와 적대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고도성장이 필수적이라는 정치지도자의 의도와 비협조적 대중들을 복지와 전체적 발전, 그리고 조국의 국력증대에 헌신하도록 함으로써 그 정치체제에 충성스럽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동시에 유토피아적 이상의 제시는 공산당지도에 대한 정통성을 강화하여 내부적 결속을 다지며 사회발전과정에서 초래되는 공산당이외의 어떠한 독립적 잠재세력도 억압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50)

사회주의체제가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치체제라는 관점에서 월러스(Anthony Wallace)는 유토피아적 이상으로서 목표문화(goal culture)와

48) Alexander Dallin and George Breslauer, *ibid.*, pp.192~193.

49) 특히 로웬달(Richard Lowenthal)은 저발전국과 서구의 발전양태를 특징지우면서 그 원인은 단순히 저발전국이 로스토우(Walt W. Rostow)의 「경제성장단계론(Stages of Economic Growth)」과 같이 진화론적으로 뒤진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 근대화를 달성하려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ichard Lowenthal,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 (ed.), *op. cit.*, p. 36

50) Richard Lowenthal, *ibid.*, p. 50.

그 목표문화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규범이나 조치들인 전이문화(transfer culture)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⁵¹⁾ 이는 서만(Franz Schurmann)의 순수 이데올로기(pure ideology)와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의 개념⁵²⁾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리히트하임(George Lichtheim)은 “모든 이데올로기의 특징은 인간의 경험상 거의 불가능한 관념으로 현실을 재편성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현실상태간의 괴리에 있다”⁵³⁾고 하고 있는데 전이문화는 바로 거의 불가능한 목표문화와 현실간의 다리역할을 하며 전자원을 동원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 전이문화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식은 대체로 2가지이다.⁵⁴⁾ 첫째, 목표문화의 내용이나 이를 정당화시키는 혁명적 이데올로기에서 직접 도출된다. 이 경우 특히 1인독재체제를 강력히 구축하고 있는 사회주의정권은 그의 혁명적 개성에 바탕을 둔 교조적이고 경직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전이문화목표 도출의 준거가 된다. 즉, 공산주의사회가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그에 조응하는 생산관계라고 볼 때 전이문화는 사유재산을 사회화하는 과정과 시장의 제거, 계획경제, 그리고 노동동원의 수단으로서 규범적 유인을 고집하게 된다. 여기서 정치체는 대중동원을 위해 전체이익을 개인이익화하는 「신인간(new man)」, 「소비에트인간(soviet man)」 또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a new socialist man)」⁵⁵⁾을 요구하게 된다. 또 하나는 목표문화가 궁극적인 목표로서 상징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고 전이문화의 내용은 사회체제의 현실과 기능적인 요구에 따라 다소간의 신축성과 가변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초기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레닌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일거에 실시하는 것을 유보하고 일정시기 자본주의적 요소를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생산력발전의 성과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사례이며⁵⁶⁾ 최근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사회주의의 이상은 버리지않고 선

51) Anthony Wallace,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Random House, 1961)

52) 서만은 이데올로기를 1) 통일된 의식적인 세계관을 부여하는 관념체계인 순수이데올로기와 2) 현실적으로 행동에 필요한 합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관념체계인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한다.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p. 38~39

53) George Lichtheim, *Marxism: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London, 1961), pp. 377~378 in Chalmers Johnson, (ed.), *op. cit.*, p. 15.

54) Anthony Wallace, *op. cit.*, p. 148

55) 사회주의체제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인간형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 심성을 제거한 사회와 인민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I: The Socie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2), p. 1221.

56) 레닌 저, 이민희 편역, 「좌우익 기회주의 연구」 (서울: 아침, 1988), p. 284.

생산력발전의 측면에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했던 것도 이러한 전이문화의 신축성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⁵⁷⁾

동원초기에 있어서는 이상적 목표와 근대화의 이중목표가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다. 즉 정권장악후 혁명성에 투철한 공산당간부는 정직과 근면, 성실성, 그리고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정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과 빈약한 보상에도 장기적인 사회의 개선을 기대하며 노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상호 보완성은 계획정책과 초기동원정책이 단기간에 신속한 성과를 보일 때 진가를 발휘한다.

그러나 생산력발전을 위해 추구한 전이문화가 공업화나 근대화의 형태로 성과를 나타냈을 때 경제 사회적 변화는 동원체제적 정치체가 요구하거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양성과 분화를 요구하게 되고 그럼에도 정치체가 계속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할 때 사회적 소외나 갈등이 야기된다. 에치오니는 “동원의 방향과 영역, 그리고 그 강도가 정당화되어 있지 않거나 동의에 의해 지지되지 못할 때 다른 권력행사와 마찬가지로 소외가 발생한다”⁵⁸⁾고 하고 있다.

로웬달(Richard Lowenthal)은 가장 오랜 사회주의체제의 경험을 한 소련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초기의 사회주의체제 발전과정에서 위로부터의 계획된 혁명은 정치체와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아래로부터의 계획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자발적 진화(spontaneous evolution)를 초래하며 둘째, 발전의 성과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진화적 힘(the forces of evolution from below)은 점점 강해지는 것에 비해 상의하달식의 명령경제는 경제력이나 국제적 경쟁력에서 체제자체에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이것은 체제자체로서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혁명적 힘(the forces of revolution from above)은 점점 약해져 주기적인 혁명적 변혁운동은 그 효력을 잃고 결국에는 정지하게 된다. 셋째, 혁명적 원동력의 상실은 기존의 전체주의적 체제도의 정당성을 잃게 하여 정치적 제도적인 개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⁵⁹⁾ 이러한 분석은 기본적

57) M.S.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Harper & Row Publishers,1987) pp.22~23;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서울:시사영어사, 1990); 고르바초프, 「세계를 진동시킨 3일간-8월의 쿠데타」(서울:고려원,1992), pp.62~63;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서울:플빛,1990); P.N.페도시에프 외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사분과 옮김, 「페레스트로이카와 철학논쟁」(서울:녹진,1990) 참조.

58) Amitai Etzioni, *op.cit.*, p.389.

59) Richard Lowenthal, *op.cit.*, p.109

으로 서구자본주의체제나 제3세계의 정치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발전의 중후군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 사회주의체제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원체제 모형은 동원체제의 성격이나 동원수단이 초기의 정권장악기와 동원단계, 그리고 후기동원단계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⁶⁰⁾ 구체제에 대한 불만과 혁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초기의 정권장악기에서는 규범적 수단이 기능을 발휘하나 점차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규범적 수단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에서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선동적인 동원형태가 됨에 따라 대중의 소외가 발생한다. 이는 초기의 정치체가 자발적인 대중동원에 기반을 두었다가 점차 상의하달적인 지시체계로 변질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초기와 같은 동원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원수단에 있어 규범적 수단이 감소하는 만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과 물질적 수단이 사용됨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동원수단의 단계에서는 정치지도자와 정치체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기존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고집할 경우 표면상으로는 규범적 수단을 내세우며 내면적으로는 그 규범의 이탈에 대한 징벌적 또는 불이익적 조치가 수반한다.

결국 정치체는 동원단계에 이르러 체제유지를 위한 생산력발전을 위해서는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사회전반에 불만과 긴장을 유발한다. 특히 강제적 수단에 의한 노동동원의 형태는 감시기구의 비대화와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공업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후기동원체제에서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물질적 유인(incentives)을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다.⁶¹⁾ 이 과정에서는 정치체내부의 엘리트간에 「민주성」과 「자발성」에 대한 지도방법의 논쟁이 있게 되고 이 논쟁은 때에 따라 권력투쟁으로 발전한다. 중국의 「문화대혁명」과 같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북한의 「청산리 방법」이나 「대안사업체계」 등은 위로부터의 지도개혁을 통해 정치체와 노동자대중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성」과 「자발성」에 대한 논쟁은 후기동원단계에 이르

60) 이에 대해 존슨(Chalmers Johnson), 달린(Alexander Dallin)과 브레스라우어(George Breslauer)는 정권장악기, 동원단계, 후기동원단계로 분류하며 고드윈(Paul H.B. Godwin)은 정권장악기와 체제관리기로 그리고 이용필교수는 동원단계, 과도기, 후기동원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Alexander Dallin and George Breslauer, "Political Terror in the Post-Mobilization Stage" Chalmers Johnson, (ed.), *op. cit.*, p.191; Paul H.B. Godwin, "Communist Systems and Modernization: Sources of Political Crises" *op. cit.*, pp.107~134; 이용필, "북한 정치체계의 변화전망" 이용필 (편), 앞의 책, pp.371~406.

61) Alexander Eckstein, *op. cit.*, pp.475~494.

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이 단순히 정치체의 지도방법에만 있지 않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고집하는데 있기때문에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논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생산력발전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조응하는가하는 문제, 또는 선진적 생산관계와 후진적 생산력발전문제 등으로 결국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논쟁으로 전개된다.

한편 목표문화의 지향을 정통성으로하는 정치체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선생산관계의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고집하면서 대중에게 정치교육과 의식화를 촉구할 것인지 아니면 선생산력의 발전에서 일정부분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개혁을 취할 것인지를 논쟁이 제기된다. 여기서 '경제개혁'의 경우에는 ① 물질적 인센티브의 채택, ② 경영의 자주성 확대, ③ 노동자의 경영참가, ④ 경제결정권의 지방분산, ⑤ 국제경제에 대한 개방화, ⑥ 시장 메카니즘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62)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에서 경제개혁을 통해 물질적 유인과 분권화, 개방화를 취할 경우 그것은 인류평등주의(egalitarianism)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특징으로하는 목표문화로 부터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공산당독재의 정치권력자체를 기피하게 한다. 다시말하면 물질적 경제주의(economism)의 확산은 사회조직의 대규모화, 복합화, 전문적 기능분화, 기계화 등을 촉진하며 또한 도시화와 대중적 소비문화를 팽배케하여 전체주의사회에 만연하던 비합리성과 강제적 규범은 산업사회의 합리성과 대중문화의 보편성으로 대체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63)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을 지향하면서 겪게되는 사회주의 정치체의 고민과 갈등인 것이다. 곧 사회주의적 정통성과 정치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침체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며 경제발전을 위해 물질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정치체의 정통성과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III.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위 기요인

62) 최성, (편),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서울:학민사,1990), p.245.

63) 고현욱,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1987), p.141.

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성이 단순히 정치체의 지도방법에만 있지 않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고집하는데 있기때문에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논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생산력발전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조응하는가하는 문제, 또는 선진적 생산관계와 후진적 생산력발전문제 등으로 결국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논쟁으로 전개된다.

한편 목표문화의 지향을 정통성으로하는 정치체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선생산관계의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고집하면서 대중에게 정치교육과 의식화를 촉구할 것인지 아니면 선생산력의 발전에서 일정부분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개혁을 취할 것인지를 논쟁이 제기된다. 여기서 '경제개혁'의 경우에는 ① 물질적 인센티브의 채택, ② 경영의 자주성 확대, ③ 노동자의 경영참가, ④ 경제결정권의 지방분산, ⑤ 국제경제에 대한 개방화, ⑥ 시장 메카니즘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62)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에서 경제개혁을 통해 물질적 유인과 분권화, 개방화를 취할 경우 그것은 인류평등주의(egalitarianism)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특징으로하는 목표문화로 부터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공산당독재의 정치권력자체를 기피하게 한다. 다시말하면 물질적 경제주의(economism)의 확산은 사회조직의 대규모화, 복합화, 전문적 기능분화, 기계화 등을 촉진하며 또한 도시화와 대중적 소비문화를 팽배케하여 전체주의사회에 만연하던 비합리성과 강제적 규범은 산업사회의 합리성과 대중문화의 보편성으로 대체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63)

이것이 바로 경제발전을 지향하면서 겪게되는 사회주의 정치체의 고민과 갈등인 것이다. 곧 사회주의적 정통성과 정치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침체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며 경제발전을 위해 물질적 수단을 사용할 경우 정치체의 정통성과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III. 북한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위 기요인

62) 최성, (편),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서울:학민사,1990), p.245.

63) 고현욱,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1987), p.141.

1. 마르크스-레닌의 사회주의건설노선

1992년 개정된 헌법에서 북한은 종래에 있었던 1972년 헌법 제4조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규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고 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부터 분리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정통성은 마르크스사상에 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주체사상은 바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북한을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일반성이나 특성을 고찰하는데 아직은 유용성이 있을 것이다.⁶⁴⁾

본래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나 사회주의의 구체적 실상에 대해서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표현한 것은 그리 많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에 대한 언급을 삼가했다. 그 이유에 대해 오스카 랑게(Oskar Lange)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인 마르크스-엥겔스는..... 사회주의경제에 관해서는 단지 상당히 일반적인 몇가지만 언급했을 뿐이다. 원칙상 그들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유토피아적인 것이라고 판명될까 두려워서 더욱 자세하게 그 문제를 파고드는 것을 회피하였다.”⁶⁵⁾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소련과 기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원용해 쓰고 있는 것들은 1) 과도기 사회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내세운 공산당 독재 2)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내세운 시장메카니즘의 폐지와 국유화 3) 공산주의 건설을 내세운 전자원의 동원화를 들 수 있다.

일찌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지향했던 사회는 「고타강령비판」과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듯이 평등하고 풍요로운 공산주의 사회를 그렸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4) 김정일,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근로자」(1983.5) 참고.

65) Oskar Lange,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m,” in Oskar Lange, (ed.), *Problems of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m* (New Delhi, 1965), p.1; 엘렌 브룬, 재퀴스 허쉬, (저), 김해성, (옮김), 「사회주의 북한-북한경제발전연구」 (서울:지평, 1988), p.182에서 재인용.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인데 그것은 그 자신의 토대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주의사회로부터 등장한다. 따라서 그것은 경제적, 도덕적, 지적인 모든 면에서 자궁으로부터의 모반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은 자본주의 사회의 오랜 산고로부터 태어난 공산주의사회의 최초국면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분업에 따른 노예적 종속과 그에 따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사라지고; 노동이 생존수단 뿐만 아니라 생활의 1차적 욕구가 되어; 生産力이 또한 증가된 후에 개인의 전면적 발전과 협동적 부가 넘쳐흐르게 되면 사회는 「각인은 능력에 따라, 각인은 필요(수요)에 따라」라는 (구호를) 깃발에 새길 수 있을 것이다.”⁶⁶⁾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아무도 배타적 활동영역을 가지지 않으며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영역에서 완성될 수 있다. 사회는 전체생산을 통제하여 자신이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우리는 사냥꾼이나 낚시꾼, 牧者, 또는 비평가가 되지 않고 서도 저녁에는 소를 돌보다가 저녁식사후에는 비평을 할 수 있게 된다.”⁶⁷⁾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예상했던 공산주의사회는 사유재산의 폐지, 분업과 계급의 폐지로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되는 근본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각인은 능력에 따라 사회에 봉사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높은 생산력 발달을 요구한다. 이것을 인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산주의사회에서는 생산력발달이 고도로 되어 생산에 필요한 필요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필연의 국가에서 자유의 국가로 이전하는 근본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필요노동시간은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며 따라서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에 의해서만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 증가한다는 생각에서이다.⁶⁸⁾

또한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실제적으로 자유의 국가는 오직 결핍과 세속적 고려속에서 행해지는 노동이 끝나는 점에서만 시작된다. 따라서 그것은 사물의 본성상 본래의 물질적 생산의 영역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미개인이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생명을 유지하기위해 자연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명인도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의 욕구에 의해 육체적

66) Wolfgang Leonhard, *Three Faces of Marxism* (New York:Holt,Rinehart and Winston,1974),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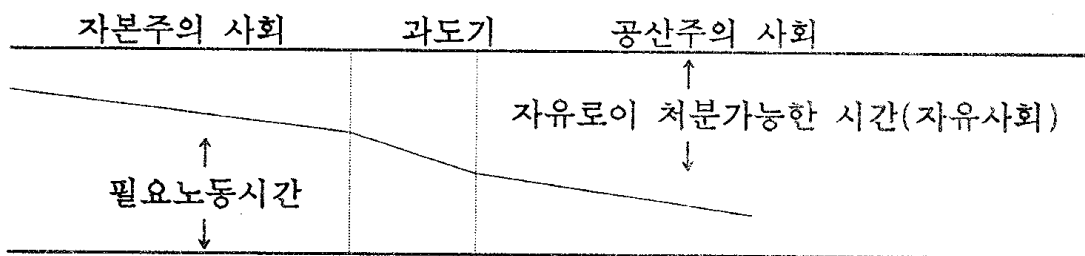
67) Wolfgang Leonhard, *ibid.*, p.39.

68) 최 성,(편), 앞의 책, p.355; K.Marx, *Capital* Vol.III (Moscow:Progress Publishers,1986), p.820.

필요영역이 발전하지만 동시에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산력도 또한 발전한다. 이러한 영역의 자유는 오로지 자연과의 관계를 자연의 맹목성에 지배되지 않고 공동통제에 들 수 있는 합리적으로 통제하는 사회화된 인간, 연합화된 생산자들에게 놓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본성에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한 조건 밑에서 최소의 에너지소비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은 아직 필연의 국가이다. 이러한 필연의 국가에서 자기목적으로 여겨지는 인간적인 힘의 전개가 시작되며 참된 자유의 국가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자유의 국가는 오직 필연의 국가를 자신의 기초로 해서만 꽃필 수 있고 노동일의 단축은 그 근본조건이다. 69)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6> 생산력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이상에서 예측되는 공산주의사회는 노동과정이 거의 모두 자동화되어 1인당 노동생산력이 고도화됨과 동시에 그 생산량도 물이나 공기와 같이 풍부하여 각개인은 소유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단지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으며 자유시간이 많아 누구든지 하고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노동은 생활의 1차적 욕구가 되어 노동 그 자체를 즐기게 된다는 것이다. 70) 이는 북한에서도 “공산주의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일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물질적 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입니다.” 71)라

69) K.Marx, *ibid.*, p. 820.

70) 그러나 위에서 보는 자유사회로의 이동은 역사의 경험에서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인류의 노동생산성의 발달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의 필요노동시간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 더 많은 소비를 요구하고 좀더 고급의 생산품을 선호함으로써 계속 필요노동시간의 증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기업운영에 실패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필요노동시간의 실질적 감소는 상쇄되는 것이다.

71)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북한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서울: 힘, 1988), p. 50.

고 하여 인간의 사회정치적 해방과 동시 물질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철학사전』을 보면 공산주의 “사회는 먼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계속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 사상적 전제들이 조성되고 완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이룩된다.”⁷²⁾고 하고 있다.

사실 마르크스의 예언에 따르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생산력이 일정한도로 발전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생산관계가 더이상 생산력에 조응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인민의 자발성에 따른 생산력 발전으로 평등하고 풍부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된다. 이는 곧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자본주의보다 한층 더 높은 생산력발전을 자연스럽게 초래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 엥겔스가 예상했던 공산주의사회는 자본주의의 성숙에 따른 생산력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즉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부르조아지는 백년도 채 못되는 계급지배기간동안에 과거의 모든 세대가 만들어낸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거대한 생산력을 만들어 냈다.”⁷³⁾고 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저력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마르크스의 언급을 보면 “인간은 사회적 생산속에서 생산관계를 형성하며 이 생산관계는 생산력에 조응한 형태가 되다가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하면 다시 생산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족쇄가 된다.”⁷⁴⁾는 것이다. 특히 그는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의 모순을 설명하면서 “그 때 사회적 혁명기가 온다.... 어떠한 사회질서도 그 사회 생산력의 발전여지가 남아 있을 때 사라지지 않으며 그들 생존의 물질적 조건이 낡은 사회의 모반(the womb)에서 성장하기전에 새롭고 더 높은 생산관계가 등장하지 않는다...”⁷⁵⁾고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몰락하기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생산관계속에서 높은 생산력발전이 이루어 지고 여기에 생산수단의 사적 전유가 만드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더 이상 생산력발전을 촉진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력발전을 저해하는 족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생산력의 고

72)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앞의 책, p.50.

73) K.Marx and F.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oscow:Progress Publishers,1986), p.38.

74) Lewis S. Feuer, (ed.), *Marx and Engels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New York:A Doubleday Anchor Original,1959), pp.43~44.

75) Lewis S. Feuer, (ed.), *ibid.*, p.44.

도발전은 실천적 전제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없이 는 궁핍만이 존재하고 궁핍이 있으면 필수품을 위한 투쟁과 오래된 추악한 일(사업)이 필히 다시 생겨나기 때문이다.”⁷⁶⁾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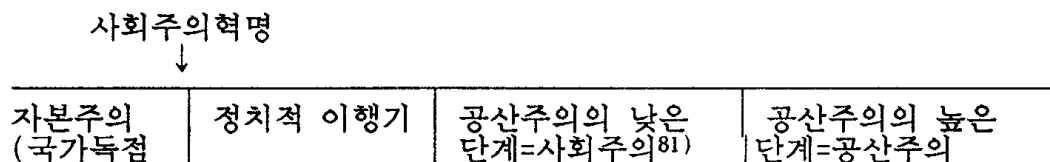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또하나의 조건으로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 요구된다. 경제적 전제조건(고도의 생산력발전)과 사회적 전제조건(인구중 다수를 대표하는 노동자계급)없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드시 새로운 독재로 이끌 것임을 엥겔스는 경고하였다. “혁명을 적은 소수 혁명가들의 기습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그 성공은 자연히 그리고 불가피하게 독재 -전체의 혁명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1인 또는 몇 명의 독재하에 조직된- 의 수립을 수반한다”⁷⁷⁾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생각했던 사회주의 혁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⁷⁸⁾

1. 자본주의가 고도의 경제수준에 이르러서 사회주의가 대체할 물질적 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2.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심화되어 급격한 사회, 경제, 정치적 변동이 불가피해야 한다.
3. 산업노동자들이 인구의 다수가 되고 결국 중요한 지위를 장악해야 한다.⁷⁹⁾

이러한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와 고도의 생산력발전을 위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도기 또는 이행기를 설정하고 있는데⁸⁰⁾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7>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행기



76) Wolfgang Leonhard, *op.cit.*, p.26.

77) *Ibid.*, p.26.

78) *Ibid.*, pp.26~27.

79) *Ibid.*, p.26.

80) 고승호 (저), 김한민 (역),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 -그 이론과 실제-」 (서울:청사, 1988), p.15.

81)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사회주의’라는 용어법은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서 사용되었다.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방금 생겨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따

자본주의).. |.....|.....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상에서 K. Marx, F. Engels에게 있어서 공산주의의 저차국면 -과도기-은 두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기반으로 하지만 무정부성을 목적의식적인 계획으로 대체 하면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부터 오는 질곡을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자본주의의 잔흔이 계속 존재하지만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새로운 계급투쟁의 양식을 통하여 공산주의적 지향을 가지게 된다. 82)

이러한 제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혁명은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가 아닌 식민지 또는 반봉건적 잔재가 남아있는 소련, 중국, 북한 등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정통적 마르크시즘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력의 고도발전에 따른 새로운 생산관계의 요구라는 원칙을 벗어난 인위적인 사건으로서 혁명의 정당성은 마르크시즘에 두지만 그 발전노선은 이미 마르크스로 부터 크게 이탈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2. 소련의 개혁과 붕괴원인

마르크스의 유명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유명한 경제결정론적83)인 명제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한 정치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경제체계와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군사체계의 강력한 유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가 생각했듯이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세계전체적인 공산주의사회가 형성되고 인간이 이상적인 인격체가 되었을 때 외부적인 방어력으로서 군사체계는 필요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소련의 혁명은 세계의 일부분 혁명이었으며 또한 나머지 자본주의세계를 공산화하는 목표를 지향했기 때문에 소련의 사회주의체제는 강력한 방어력과 더불어 공산혁명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른 분배를 받고 더 높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를 받게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82) K. Marx and F.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op.cit., pp.40~43.

83) K. Marx, *A Contribution to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2); William Ebenstein and Edwin Fogelman, *Today's Isms : Communism, Fascism, Capitalism, Socialism*, 9th ed. (Englewood-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2), pp.8~10.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소련은 본래 체제수립의 정당성이 사회주의혁명노선에 있기때문에 경제부문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극복과 공산주의사회의 토대건설이라는 이중적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 전유라는 문제를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극복하고 그 토대위에서 인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공산주의의 사상적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바로 현실사회주의체제의 선진적 생산관계와 낙후된 생산력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각국 나름대로의 마르크시즘해석과 정통성을 주장하며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초기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레닌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일거에 실시하는 것을 유보하고 일정시기 자본주의적 요소를 이용함으로써 그것이 가지는 생산력의 성과를 가지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 레닌은 '국가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물질적 경제적 생산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아직 사회주의의 문턱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우리가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한 '문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관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은가?"⁸⁴⁾ 따라서 그는 "우리의 목표는 독일에게서 국가자본주의를 배우고 온힘을 다해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다"⁸⁵⁾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레닌의 신경제정책(NEP)은 초기에 상당한 경제성장의 효과는 있었지만 1920년대 말기에는 국가통제가격과 암시장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네프(NEP)인을 양성했으며 소련공산당의 많은 당원들이 네프인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케 되고 신경제정책(NEP)자체도 계급의 적과의 잠정적이고 불쾌한 타협으로 보게 되었다.⁸⁶⁾

결국 스탈린이 등장하면서 권력투쟁과 관련하여 표면적으로는 부하린의 균형노선을 내세우나 실제적으로는 프레오브라젠스키의 불균형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스탈린의 정책은 오늘날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을 이루는 중앙계

84) 레닌 저, 이민희 편역, 「좌우익기회주의연구」 (서울:아침,1988), p.284.

85) B.V.아나니치, "10월은 역사의 전환점이었는가? 러시아혁명의 해석변화: 사회주의체제의 기원과 가능한 대안적 발전경로의 문제" (서울:서울대학교 소련 동구연구소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0), p.7.

86) 폴 그레고리, 로버트 스튜어트 지음, 한종만외 옮김, 「러시아 소련 독립국가 연합경제의 구조와 전망」 (서울:열린책들,1992), pp.143~144; Jonathan Arthur, *Socialism in the Soviet Union* (Chicago:Workers Press,1977), p.30

획경제와 주요생산수단의 국유화, 그리고 중공업우선론을 취하게 되었다. 스탈린에 따르면 기계가 없고 도시노동자가 많지않은 상태에서 생활수준을 높이기위한 단기간의 소비재증산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발만드는 기계가 필요하듯이 기계생산을 늘리는 중공업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하에서 스탈린은 농업의 집단화를 비롯한 전산업을 공산당의 수중에 넣는 사회주의적 개조작업을 강행했던 것이다. 87)

초기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이룩한 공업성장의 성과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소련의 스탈린초기에 중공업은 제조업분야중 19%에서 45%로 올랐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이 50년에서 75년을 소요한 반면에 소련은 1928년에서 1937년사이에 도달했다. 많은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중공업은 아직도 1937년 소련의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였다. 88)

그러나 이미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이 보여주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산주의로의 이행기 또는 사회주의의 건설문제는 혁명초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회의적으로 흐르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점차 혁명의 열기가 식고 초기 동원체제의 효율성이 줄어들면서 경제침체로 빠져들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예로서 대부분의 동유럽국가들은 70년대까지 공업국가가 되었지만 그 이후 공업성장률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러한 경제침체현상이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일반적인 추세가 되었다.

<표2>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공업성장률 (단위: %)

	19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2	80	81	82
동독	13.7	8.7	5.8	6.5	6.5	4.9	3.9	4.7	4.7	3.2
체코	10.9	10.5	5.2	6.7	6.7	4.6	1.5	3.5	2.0	1.1
헝가리	13.2	7.6	7.5	6.2	6.4	3.4	2.6	-1.8	2.9	2.2
폴란드	16.2	9.9	8.4	8.3	10.4	4.7	-6.7	0	-10.8	-2.3
루마니아	15.1	10.9	13.8	11.9	12.9	9.6	1.8	6.5	2.5	1.1
아르헨티나	13.7	15.9	11.7	10.9	9.1	6.0	4.6	4.2	4.9	4.3
소련	13.2	10.4	8.6	8.5	7.4	4.4	3.7(81~85)			

* 자료: 「코메콘국가 통계연감」(1983년판); 「소련국민경제통계연감」(1980년

87) *Ibid.*, pp. 30~31.

88) 폴 그레고리, 로버트 스튜어트, 앞의 책, pp. 181~2.

판); 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90)

이러한 경향의 원인은 공업부문에서도 특히 노동생산성이 마이너스로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원인보다도 노동자들의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경우 1970년 이래 85년도 고르바초프가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이전까지 계속 마이너스로 하락하였다. 물론 공업화의 초기국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가 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는 경향은 사회주의권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률은 경제가 더욱 발전한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하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측정하더라도 소련은 대부분의 서방산업국가들보다 낮은 경제발전수준에 놓여 있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비교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효율성을 측정한 베르그송(Abram Bergson)은 사회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상관없이 그 경제체제의 효과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통계기술적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베르그송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서방 혼합경제 국가들의 그것보다 체계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결론을 얻어 냈다.⁸⁹⁾

바로 이러한 노동생산성의 하락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생활필수품난을 가중시키고 이것이 국민이 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다. 생활필수품의 빈곤외에도 소련의 위기는 그동안 동서방의 냉전체제에서 균형을 이루어 왔던 미·소의 군사적 대립이 소련 경제체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사력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자본의 유출이 되어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이 동시에 조화되지 못할 때 공산주의 건설목표와 구체적인 발전노선은 파행성을 띠게 된다. 즉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발전이 예측했던 바와 같이 상호 조응하지 못할 때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생산관계우위론의 입장에서 일정량의 생산력부진을 감수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고집해야 할 것이냐 또는 반대로 생산관계보다 생산력발전을 강조하는 생산력우위론의 입장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생산력발전에 우선을 두어야 하느냐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된다.

이미 중국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소련경제를 부흥시키는 발전방안에 있

89) A. Bergson, "Comparative Productivity: The USSR, Eastern Europe, and the Wes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 3 (June 1987), pp. 342~357; 폴 그레고리, 로버트 스튜어트 지음, 한종만의 옮김, 앞의 책, p. 478.

어서도 크게 생산력우위론과 생산관계우위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생산력우위론⁹⁰⁾의 특징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질적 유인(incentives), 사유재산의 인정, 자유경쟁의 제한적 인정 등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은 공산주의의 도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 생산력우위론의 입장에서는 마르크스-레닌이 예상하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필요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의 생산관계 완성 및 유지보다는 더욱 역동적인 시장과 자유경쟁 등의 인류적 경제유산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의한 생산력발전은 결국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인간의 이기심을 키우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사회주의의 후퇴이며 자본주의로의 복귀라는 위협성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력우위론과 생산관계우위론의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소련의 현실은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생산력우위론으로 편향되어 진행되었다. 이는 소련의 국내외적인 상황이 더 이상 사회주의의 이론과 명분에 집착할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소련은 경제침체의 상황속에서도 미·소의 대결구도속에서 비생산적인 군비확장을 계속해야만 했고 이러한 현실속에서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의 비역동성→ 경제침체→ 무리한 미·소 군비경쟁→ 과중한 군비부담→ 국민경제의 악화→ 국민의 불만증가→ 개혁의 요구가 밀므로 부터 분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군사적 위기는 1983년 레이건이 소위 “스타 워즈(star wars)”라는 전략방위구상(SDI)을 제기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⁹¹⁾ 엄청난 재정과 경제부담이 되는 군비경쟁을 소련은 더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984년 9월 소련 재무장관은 국방비를 11.8% 올릴

90) 급세기초 이래로 마르크스명제에 대한 이 특별한 해석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중에 고려될 중요한 점의 하나는 생산력우위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적 함축성이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스탈린이 생산력우위론을 내세우며 소련의 생산력이 현대 산업화한다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도 그들의 올바른 기초를 갖게 된다는 논리로서 강제된 집단화와 정치적 억압을 동반한 고도 산업화정책을 취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이는 마르크스 자신의 저작들에서도 생산력우위론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나타나며 곳곳에는 생산관계가 지배적이며 생산력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기술 되기때문에 더욱 큰 혼란이 되고 있다. Tom Bottomore, (eds.),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Cambridge:Harvard Univ. Press,1983), pp.178~9.

91) G.G.Hildebrandt, *SDI and the Soviet Defense Burden* (Santa Monica, Cal.:Rand Corporation,1988); A.S.Becker, “Gorbachev’s Defense-Economic Dilemma”, in U.S.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Gorbachev’s Economic Plans* (Washington,D.C.: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7), pp.372~387; Mary C. FitzGerald, “The Soviet Military on SDI”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19, Nos.3/4, (Autumn/Winter 1986) pp.177~191; “REVIEW OF THE MONTH: All Eyes on SDI,” *MONTHLY REVIEW* Vol.38, No.7 (December 1986) pp.1~9 참조

것임을 발표했으나 다음해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더이상의 미·소 군비경쟁을 포기하였다.⁹²⁾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세계적인 패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다시 국제사회에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로 보여지는 것이다. 곧 다시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부흥이 필요한 것이고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사회주의체제의 단점을 대폭 개혁해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의도는 당분간 미·소의 군비경쟁을 제쳐두고 경제회복을 위해서 공산주의적 제도를 과감히 개혁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평화의 태도를 취해 군사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 물질적 유인(incentives)과 사유재산, 시장, 가격 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노동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동시 대외적으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부흥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정책이 국내적으로는 소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사고(New Thinking)」정책으로 표면화되었다. 물론 이것은 대내적인 사회주의 보수세력의 반발과 외채의 누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외자도입문제는 사회주의 종주국의 자존심과 서방 자본주의국에 실익을 제공해야 하는 위험을 무릎쓰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한 예방조치로서 고르바초프는 한동안 전세계에 선풍을 일으켰던 「신사고(New Thinking)」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신사고」정책이 요구된 현실적 이유를 소련의 이론가들은 주로 전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와 인류문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가공할 핵무기의 존재와 환경오염, 제3세계의 후진성등 인류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하는 이른바 '전인류적 문제'에의 공동 대응이라는 과제에서 찾았다.⁹³⁾ 그러나 소련의 현실에서 볼 때 「신사고」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신사고」로서 기존의 미·소 냉전체제를 종결짓고 화해협력 체제를 지향함으로써 전세계에 소련의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 결과 화해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서구에서 고르바초프의 인기는 가히 절정에 달했다.

둘째, 「신사고」로서 소련은 자국의 군비축소를 지향함으로써 군사부문

92) IISS, *Military Balance 1987-1988* (London, 1989) pp. 29~33 참조

93) 이 수훈, 이 종석외,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296.

에 대한 자본유출을 축소할 수 있고⁹⁴⁾ 미국에 대해서도 「신사고」의 취지에 따라 SALT 회담 및 군비축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셋째, 이러한 「신사고」속에서 소련은 외자도입 사업을 전개했고 독일통일에의 합의, 소련군 철수, 한·소수교 등 많은 기존의 문제들을 경제원조를 받으면서 해결하였다.

넷째, 소련의 이러한 국제여론과 주도권속에서 서방국가들은 그동안 냉전속에서 교착상태에 있던 문제들을 소련에 대한 경제원조를 약속함으로써 해결하고 공산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신사고」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개념중의 하나는 ‘자유로운 선택의 원칙’이다. 이는 다양한 나라들에서 그들 국민의 당면한 권리로서 다양한 사회발전의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누구나 다른 나라의 견해나 선택을 관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에는 모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의식과 삶에 적용할 만한 단일한 차원의 기준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⁹⁵⁾

이러한 「신사고」정책에 힘입어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동안 동구를 지배해온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해 저항하고 그들 고유의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 특징은 정치적으로 스탈린적 억압모델에서의 탈퇴와 인민주권의 확보로서의 ‘민주주의 확장’⁹⁶⁾이며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제와 시장의 도입, 그리고 경제개방을 통한 세계자본주의 경제로의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⁹⁷⁾

초기에 고르바초프의 이러한 정책은 그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서구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약속되었으며 세계는 화해의 해빙무드로 고르바초프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 소련은 재래식 군사장비를 농기구로 바꾸고 동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부터 군사를 철수하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동구 사회주의진영의 붕괴, 군사적 지배의 수축, 공산당과 군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었기에 기존의 소련지원국가와 공산당내부 보수파, 군부의 불만을 누적시키는 위협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걸프전이었

94) Richard F. Kaufman, "Economic Reform and the Soviet Military", 「蘇聯과 東歐의 經濟政策變化」(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9) 참조

95) 이수훈, 이종석 외, 앞의 책, p. 296.

96) 그 구체적 형태는 공산당 독재의 부정, 다당제, 복수 후보제, 직접선거제등이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자료모음: 동구사회주의 진로를 둘러싼 변혁운동내의 대논쟁- 사회주의배신인가, 새로운 혁명인가?」(서울: 1990), pp. 40~41, 「소 동구개혁현황비교표」참조

97)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회주의의 이론, 역사, 현실」(서울: 민맥, 1991) pp. 295~276.

다.

걸프전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우선 당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적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본다면 1) 미국은 걸프사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다시 UN과 국제사회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갖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소련과의 충돌이 예상되지만 소련이 신사고정책(New Thinking)을 주장하면서 군비축소와 외화도입을 추진하는 마당에 또다시 이라크를 도와 미국과 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일 그러한 경우에도 소련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군사적인 면에서도 지역분쟁을 통해 모처럼 미국제와 소련제 재래식 무기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3) 서방은 그동안 쿠웨이트를 중심으로하는 원유공급에 대해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친미정부를 세워 중동 OPEC에서도 원유를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훨씬 많은 양의 원유공급을 확보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도 모두 찬성할 것이며 특히 이라크에 대해 무기 공급을 하던 소련은 꿈쩍없이 우방국을 잃게 되고 미국은 앞으로 이러한 추세와 방식으로 소련 진영을 밀어붙여 소련을 연약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4) 그동안 국제적인 지역분쟁이 드물어 무기소비가 적기때문에 엄청난 자본을 들여 만든 고성능 무기체계가 미국 군수산업체에 재고로 쌓여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소비하고 성능 실험을 하며 국제여론에 전시하여 높은 가격에 팔리도록 할 것이다.⁹⁸⁾ 이에 더불어 서방제국에는 전비분담금을 부과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의 중동에서 얻게되는 모든 전리품분배에서 제외시켜 버릴 것이다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전리품은 주로 원유와 전후복구공사의 수주 등이다.

이러한 미국의 시나리오는 걸프사태에서 정확하게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었다. 이라크가 의존해왔던 재래식 무기들은 서방의 현대식 장비에 묶여 꿈쩍할 수 없었으며 세계여론도 후세인의 침략에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경향으로 치우쳤다. 소련과 중국도 UN의 뜻에 따라 안절부절할 수 밖에 도리가 없었다.

이제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정책(New Thinking)의 댓가를 처절하게 치르기 시작했다. 후세인의 항복이후 미국은 쿠르드족을 돕는다며 이라크내정에 계속 간섭하였고⁹⁹⁾ 미상원위원회는 고르바초프와 전략무기감축조약

98) 이런 점에서 미국 CNN TV의 이라크공격생방송은 미국무기의 위력에 대한 광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START)을 협상중이면서도 전략방위계획(SDI)을 승인하여 96년까지 46억불의 예산지원을 승인하였다.¹⁰⁰⁾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맞서 소련은 미국의 최근 태도가 계속된다면 미소가 다시 과거의 냉전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¹⁰¹⁾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경고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소련군사안보분야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군사적 지위 실추와 군비감축으로 인한 신분상실위기까지 겹쳐 불안과 고르바초프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었던 것이다.¹⁰²⁾

겉프사태에서 소련의 위신이 추락한 후 고르바초프의 지지가 국민으로부터 떨어지자 드디어 1991년 8월 19일 군부와 KGB, 내무부, 그리고 당의 보수강경파지도자들이 쿠데타를 감행하였고 그 실패는 결국 소련을 붕괴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련의 붕괴는 경제력과 맞물린 군사력의 위축에 의해 붕괴되었으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주의체제의 내재적 한계로 귀결되고 그럼에도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시 소련이라는 현존질서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다.

일찌기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구체제와 프랑스혁명(The Ancien Regime and the French Revolution)」에서 “무능부패정부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순간은 그것을 수정하려고 하는 때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¹⁰³⁾ 이는 소련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의 사회주의발전노선의 문제점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노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후자는 전자의 각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우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은 사상과 물질적 요소를 동시에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해 나가는 역사적 과정이므로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고 이 운동의 목적의

99) 「중앙일보」 (1991. 4. 9)

100) 「조선일보」 (1991. 7. 19)

101) 소련은 “미국의 힘의 논리가 계속될 땐 냉전으로 복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고 프랑스도 미국의 세계지배에 경고하였지만 미국은 소련붕괴이후에도 세계영도력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조선일보」 (1990. 9. 4); 「조선일보」 (1991. 3. 13); 「한국일보」 (1992. 3. 9); 「한국일보」 (1992. 3. 14)

102) 「한겨레신문」 (1991. 2. 27)

103) Gary Fields, “Paris, Planning and Perestroika(1789-1989) -Soviet Workers Re-enter History” *NEW POLITICS*, (Winter 1990) p.128

식성을 담보하는 '지도사상'을 가지며 그것을 유일한 지침으로 하여 전진할 때에만 완수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바로 '지도사상'은 '수령의 혁명사상', 즉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와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45년 해방이후 사회주의체제를 수립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1당독재체제의 정치체를 가지고 1958년까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수립이라는 인적 물질 동원체제를 수립하였다. 특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북한의 목표문화는 공산주의 사회 건설로 설정되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점령이라는 전이문화가 설정된 것이다.

먼저 목표문화를 살펴보면 공산주의 사회로서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일 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물질적 수요가 원만히 보장되는 매우 풍요한 사회”¹⁰⁴⁾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이미 마르크스-엔겔스가 예상했던 공산주의 사회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김일성은 공산주의 사회 달성을 위한 과도기로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¹⁰⁵⁾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제제도는 전이문화의 전형적 형태이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즉 ① 프롤레타리아독재원칙에 따른 노동당 1당독재 ② 국가안보를 위한 중공업건설 ③ 농업집단화 ④ 생산수단의 국유화 ⑤ 소비자 권리의 제거와 시장의 폐지 ⑥ 기술적으로 숙련된 노동력의 훈련 ⑦ 경제발전을 위한 대중동원 등이다.

이러한 전이문화는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문화에 비추어 보면 크게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점령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상적 요새」 점령이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계급화, 인텔리화하여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질적 요새」 점령이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 소유를 확립하여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강력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함

104) 북한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서울:힘, 1988), 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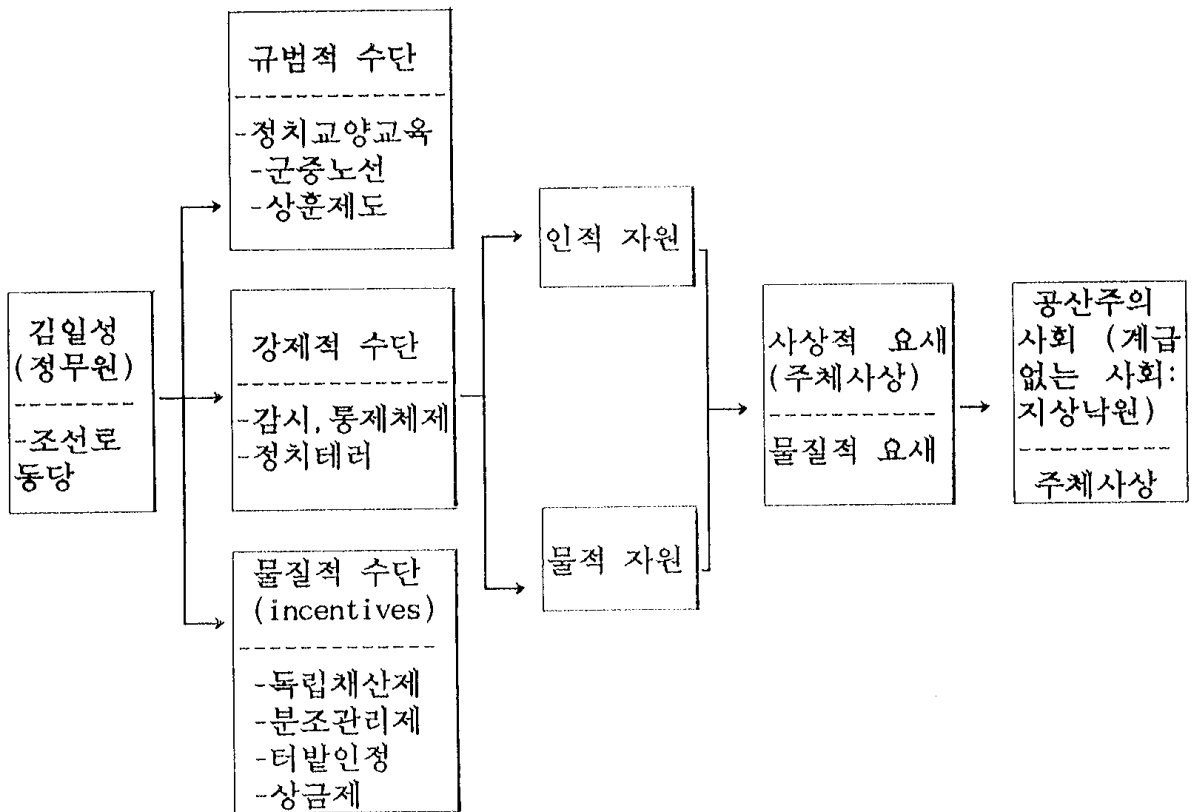
105)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조건들로는 1) 착취계급이 일소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될 뿐만 아니라, 적대계급의 반란과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없어지고 전사회가 혁명화 노동자계급화될 것 2) 협동조합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성장 전화하고, 도시와 농촌,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없게 될 것 3)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술적 토대가 확실히 준비되고 생산력이 발달한 자본주의 각국의 수준에 도달하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과거의 중간계층의 생활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것 4) 그리하여 중산계층의 동요가 없게되고 전인민이 실생활을 통해 사회주의제도의 진실한 우월성을 확신하고 사회주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적극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될 것등이다.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깃발이며,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김일성저작집」, 제5권(1972), p. 113;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 (1967. 5. 25)

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공업화' '기술혁명'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추구하며 지도관리의 일환으로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등을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⁰⁶⁾

이상의 북한의 동원체제를 이데올로기와 정치체, 그리고 사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과정의 집합체계¹⁰⁷⁾로 보는 서만(Franz Schurmann)의 관점

<그림8> 북한의 동원체제 모형

<정치체> ⇒ <동원수단> ⇒ <동원대상> ⇒ <전이문화> ⇒ <목표문화>



에 따라 동원체제를 모형화하면 <그림8>과 같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은 공산주의 달성이라는 목표문화를 향해 두가지의 전이문화, 즉 계급투쟁과 생산력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이 두 요새 가운데 선차적인 과제를 사상적 요새의 점령으로 설정하고¹⁰⁸⁾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야 말로 전 사회를

106)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5권 (서울: 백산, 1988), pp. 42~44; 학술단체협의회, 「사회주의개혁과 한반도」 (서울: 한울, 1990), pp. 474~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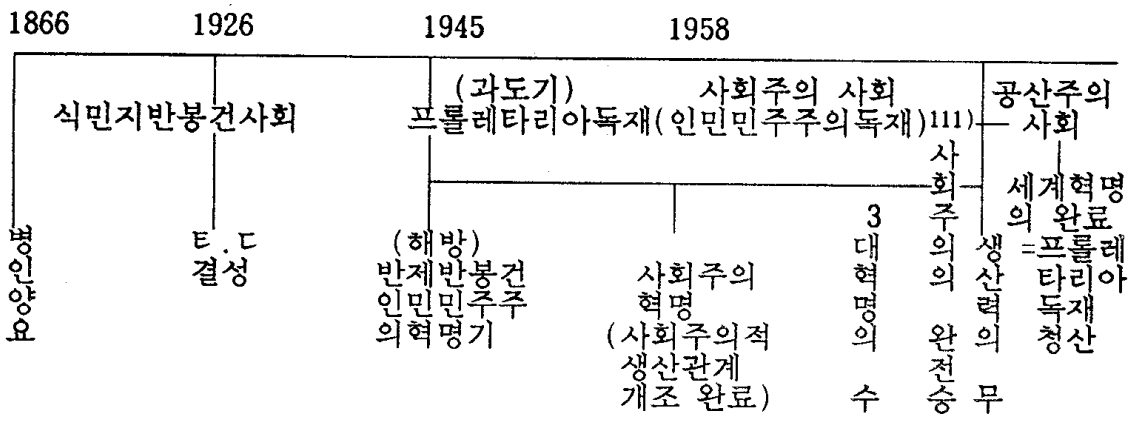
107) Franz Schurmann, *op. cit.*, p. 39

108) 김일성, "조선노동당 제16차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1980.10.10);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할 수 있고,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 요새는 말할 것도 없고 물질적 요새도 더욱더 빨리 점령할 수 있다.”¹⁰⁹⁾고 한다.

이러한 목표문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역설한 노선과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도기¹¹⁰⁾의 행적을 구체적 연대와 관련지어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9〉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를 위한 이행기



통일문제연구소 엮음, 「북한경제자료집」 (1989), p.234.

109) 김일성, “북한의 당면 정치 경제정책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조선자료」 (1971.2); 高瀬淨 지음, 이남현 옮김, 「북한경제입문」 (서울:청년사,1988), p.92에서 재인용.

110) 북한이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위해 사회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일하나 ‘과도기’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의 존재이유를 ① 생산수단의 공산주의적 소유의 확립과 고등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사회주의를 통해서 마련 가능하고 ② 계급착취가 없는 사회주의의 기반이 요구되며 ③ 공산주의적 인간교양개조가 장기성을 띠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위대한 사상총서」 5권, 앞의 책, pp.20~26.

111) 1948년 9월에 수립된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헌법에도 ‘인민민주주의’규정이 없었으나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대회에 이르러 1946년 이후 단독정부수립까지를 ‘인민민주주의 독재’라고 소급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2년 12월 헌법 제10조에 다시 ‘프롤레타리아독재’로 규정하다가 1992년 4월 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된 북한헌법은 다시 ‘인민민주주의독재’(제12조)로 변경함으로써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인민민주주의독재’에 대해 「정치사전」(1973년)은 “정치면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며 경제면에서 소상품경제와 약간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남은 ‘인민경제’”라고 하며 또한 「정치경제학연구」에서는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 계급적 력량관계가 달라지고 특히 빈농, 고농출신의 농촌핵심들이 자라난 조건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발전시키게 된다”고 하여 인민민주주의독재후에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취할 것을 상정하는 것에 비해 볼 때 일관성이 없는 것이며 이는 장래의 개방정책에 대비해 계급투쟁성을 어감상 다소 은폐시키고자하는 의도로 보인다; 사회과학출판사, 「정치경제학연구의 몇가지 문제」 (평양,1988), p.165; 서진영 편, 「현대중국과 북한40년 -자료와 통계-」 (서울: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1989), p.242;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하여” (1967.5.2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4권 (평양,1981); Robert A. Scalapino and Jun-Yop Kim, (ed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 of California,1983), p.24 참조.

한
한
발
전
||
무
계
급
사
회
행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의 동원수단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규범적 수단을 위주로 하여 강제적 수단과 물질적 수단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이 목표문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요새」를 달성해야 하고 이는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서 가능해 진다. 생산력발전의 요소로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직접적인 노동을 하는 인간과 그 근로의욕임에는 틀림없다. 북한에서도 생산력요소로서 사람과 생산도구를 포함시키면서¹¹²⁾ 그 중에서도 생산력발전에 가장 기본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생산의 담당자인 사람으로 보아 생산자들이 어떠한 사상의식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하는 데 생산력발전의 원인을 두고 있다.¹¹³⁾ 이는 사상의식이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 모두 인간을 생산력의 핵심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노동의 동기에 있어서는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경제학의 고전학자로 볼 수 있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 개인과 사회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보았고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을 생산의 원동력으로 한다고 보고있다.¹¹⁴⁾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동인은 사유재산권과 시장이 뒷받침해주는 이윤이 되지만 계급타파를 목적으로 생산수단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 북한은 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는 생산력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인간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를 들고 있다. 이것들은 첫째로 타인을 위해 노동한다는 사

112) 북한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서울:힘, 1988), p. 369.

113) 서울대 사회주의연구팀, 「사회주의개혁과 북한」(서울:형성사, 1991), p. 277.

114) 자본주의에서는 존 로크(John Locke)나 아담 스미스(Adam Smith)이래로 사적 재산권을 신성시 해왔고 특히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개인적 이기심이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노동동인은 바로 자기결정성에 있다. 이는 부의 축적이나 궁핍에 의한 생명의 위협조차도 자신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부여함과 동시에 무능력한 사람에게는 위기감에 빠지게 한다. Anthony Arblaster,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 (New York: Basil Blackwell, 1984), p. 238 참조.

회주의적 자기헌신성이며 둘째로 명예이며 그리고 셋째로 경제활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쁨이라는 것이다.¹¹⁵⁾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사상혁명을 모든 사업에 우선시킨다는 방침아래 소위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각개인이 자주성 창조성 등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¹⁶⁾ 그 하나의 예로서 과학기술혁명을 촉진시키는 문제에 대해 북한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바쳐 싸우려는 노동자들의 고상한 사상입니다.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 것이며 생산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낼 것입니다.”¹¹⁷⁾고 하여 주로 정치 도덕적 자극에 치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의 동력이며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노동계급의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사회역사발전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¹¹⁸⁾고 함으로써 근로대중을 역사발전의 동력으로서 부상시키면서도 그 위에 김일성을 위치시켜 결국 김일성에 대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사회발전의 동력인 것으로 되고 있다. 이는 바로 공산주의사회 달성이라는 목표하에 김일성체제의 권력안정과 지지를 결합시킨 사례의 하나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발전노선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외적인 면에 있어 지나친 ‘자급자족경제(autarky)’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¹¹⁹⁾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은 ‘물질적 요새’ 점령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물론 발전도상국이 자립경제를 목표로 자력갱생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사상 정치우선주의는 시기적으로 국제분업의 중요성과 국제적인 거래관행에 대한 무시, 경시로 대외무역의 활로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무역의 억제 또는 축소는 단기적인 면에서 내부분화의 유지와 외세의존이라는 결합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기술교류와 국제적 경쟁력의 상실로

115) 김정일은 “물질만능의 원리가 작용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생명이라면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사상이 생명”이며 “자본주의 사회에 비한 사회주의 사회의 우월성은 바로 사상의 우월성이며 사회주의의 위력은 다름아닌 사상의 위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 「중요문헌집」 (서울: 별, 1992), p. 368.

116) 高瀨淨, 앞의 책, p. 58.

117) 사회과학출판사, 「정치경제학연구의 몇가지 문제」 (평양: 1988), p. 247.

118) 북한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앞의 책, p. 314.

119) 사회과학출판사, 「정치경제학연구의 몇가지 문제」 앞의 책, p. 325.

경제침체의 주요요인이 되는 것이다.

김정일은 '경제에서의 자립'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 자기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나라의 자원과 자기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²⁰⁾ 즉 ① 자력갱생원칙의 견지 ② 경제의 다면적, 종합적 발전 ③ 현대적 장비와 민족간부의 육성 ④ 국내연료, 연료기지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래 자립경제란 한 국민경제가 대내적으로 투자재원을 국내저축으로 자체조달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질국민소득의 증대를 통한 복지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반면에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란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는 자체내에서 기본적으로 조달함과 동시에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물질적 조건도 자체내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폐쇄적 자급자족경제를 의미한다.¹²¹⁾ 따라서 북한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지 않으며 단지 북한에서 부족한 석유, 코크스 등의 연료와 기계류 등을 수입해 오기 위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실정때문에 북한은 외국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자극도 별로 받지 않아서 경제관리자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감각이 없고 또한 창의성과 자발성을 자극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¹²²⁾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발전노선은 단순히 국내적 사회주의 생산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상·정치우선주의의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IV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요인

1. 북한경제의 사회주의적 개혁

12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저작선」 (서울: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2), p. 95.

121) 임양택, "북한경제의 개방 및 개혁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1호, (서울:통일원, 1991), pp. 75~76.

122) 小牧輝夫, "北朝鮮經濟の現狀と展望", 小此木政夫 編, 「岐路に立つ北朝鮮」, (東京: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88), pp. 67~68.

경제침체의 주요요인이 되는 것이다.

김정일은 '경제에서의 자립'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 자기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나라의 자원과 자기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²⁰⁾ 즉 ① 자력갱생원칙의 견지 ② 경제의 다면적, 종합적 발전 ③ 현대적 장비와 민족간부의 육성 ④ 국내연료, 연료기지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래 자립경제란 한 국민경제가 대내적으로 투자자원을 국내저축으로 자체조달함으로써 생산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면서 실질국민소득의 증대를 통한 복지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반면에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란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는 자체내에서 기본적으로 조달함과 동시에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물질적 조건도 자체내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폐쇄적 자급자족경제를 의미한다.¹²¹⁾ 따라서 북한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크지 않으며 단지 북한에서 부족한 석유, 코크스 등의 연료와 기계류 등을 수입해 오기 위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실정때문에 북한은 외국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자극도 별로 받지 않아서 경제관리자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감각이 없고 또한 창의성과 자발성을 자극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¹²²⁾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발전노선은 단순히 국내적 사회주의 생산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상·정치우선주의의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IV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요인

1. 북한경제의 사회주의적 개혁

12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김정일저작선」 (서울: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2), p. 95.

121) 임양택, "북한경제의 개방 및 개혁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1호, (서울:통일원, 1991), pp. 75~76.

122) 小牧輝夫, "北朝鮮經濟の現狀と展望", 小此木政夫 編, 「岐路に立つ北朝鮮」, (東京: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88), pp. 67~68.

해방후 초기 북한의 경제는 총생산중에서 공업이 28%에 불과하며 농업은 72%나 차지하는 농업국가였다. 123) 특히 공업은 일제의 정책에 의해 경공업은 주로 남쪽에 치중해 있으며 북한은 중공업중심으로 발달한 불균형적인

〈표3〉1945년의 남북한 산업비율(%)

산업별	남한	북한
중공업	35	65
경공업	69	31
농업	63	37
상업	82	18

상태였고(〈표3〉참조) 그나마도 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파괴되고 중요부품은 소련인들에 의해 약탈되어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124)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이 가장 먼저 취한 정책은 1946년 토지의 개혁과 산업의 국유화정책이었다. 이는 「토지개혁법」과 「산업국유화법」에 의해 일제 재산과 친일 반민족주의자들의 재산을 압수하여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 분배하고 중요산업은 국유화하여 노동자들을 노동법령에 따라 동원케하는 것이었다. 특히 토지개혁의 성과에 대해 많은 관찰자들은 다른 나라의 토지개혁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르고 평화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데¹²⁵⁾ 이는 소련, 중국과 다르게 일본의 직접적인 식민지배하에 있었던 한반도에서 일본이 패망과 함께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모든 생산수단을 놓고 도망해야 했기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농지개혁에 대한 실적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해방전 농업경영별 계층구성(1943년):()는 1942년

123)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I: The Society* op.cit., p.1225.

124) 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Korea: The Economic Ra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1978), p.1.

125)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Joan Robinson, "Korean Miracle", *Monthly Review*, Vol.16 No.9 (January 1965); Jon Halliday, "The Economies of North and South Korea", John Sullivan and Roberta Foss, *Two Koreas-One Future?* (Boston: Univ. Press of America, 1987), pp.19~54; Anna Louis Strong, *Inside North Korea* (Montrose, Cal.: A.L. Strong, 1951), p.29; 그리고 이정식조차도 "인접한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개혁이 수행되었다"고 인정했다. Chong-Sik Lee, "Land Reform, Collectivisation, and the Peasants in North Korea", *The China Quarterly*, 14(April-June 1963), p.68.

경영별	전조선	호수와 비율	북조선	호수와 비율
지주	93,596	2.98(%)	46,134	4.39(%)
자작농	536,098 (529,717)	17.07 (17.3)	251,261	23.91
자.소작농 소.자작농	485,414 499,001 (729,431)	15.46 15.89 (23.9)	164,724 144,419	15.67 13.74
소작농	1,481,357 (1,641,702)	47.18 (53.8)	435,789	41.47
기 타 (농업고용자 (화전민)	44,231 (95,778) (56,818)	1.40 (3.1) (1.9)	8,316	0.79

자료: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op. cit.*, pp.1014~16

<표5> 토지개혁에서 토지몰수 및 분배 상황 (단위: 정보)

몰수한 토지	북한(1961) 면적(정보)	북한(1949~1958) 경지면적 과수원		가구(호)
	983,954 (100%)	1,000,325 (100%)	2,692 (100%)	
일본인 및 일본국가토지	111,561 (11.3)	100,797 (10.0)	900 (33.4)	12,919 (3.1)
민족 반역자 및 도망자의 토지	12,518 (1.3)	21,718 (2.0)	127 (4.7)	1,386 (0.3)
5정보이상 소유 지주의 토지	231,716 (23.6)	285,692 (28.5)	984 (36.6)	29,683 (0.7)
부채지주의 토지	259,150 (26.3)	338,067 (33.8)	292 (10.8)	145,688 (34.5)
계속 소작시키고 있는 자 의 토지	354,093 (36.0)	239,650 (23.9)	381 (14.2)	223,866 (54.1)
교회 철 종교단체의 토지	14,916 (1.5)	14,401 (1.4)	8 (0.3)	4,124 (1.0)
분배한 토지	965,069 (100%)	981,390 (100%)	2,692 (100%)	724,522 (100%)
농장농민에게	21,960	22,387	0	17,137
무토지 농민에게	589,377	603,407	0	442,973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344,134	345,974	0	260,501
이주한 지주에게	9,598	9,622	0	3,911

인민위원회 보유지	18,885	0	2,692	0
-----------	--------	---	-------	---

자료: 통일조선신문사, 「통일조선년감」(1967~68), p.836;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op. cit.*, p.1017.

이러한 토지개혁에 있어서는 일정한 토지분배원칙이 지켜졌는데 그것은 '가족 수와 동 가족내의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의 수'에 따라 각각 점수를 매겨 분배하는 방식을 따랐다. 그 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²⁶⁾

- ① 18~60세 성인남자, 18~50세 성인여자는 1점
- ② 15~17세 청년 0.7점
- ③ 10~14세 소년 0.4점
- ④ 9세이하의 아동 0.1점
- ⑤ 61세이상 남자와 51세이상의 여자 0.3점

그 결과 1953년 농가1호당 평균경지면적은 1.8정보, 중간지대가 약 1.5정보, 산간지대 2~3정보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토지개혁 및 산업국유화조치는 농지의 소유와 산업의 개인 소유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특징으로하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특히 농업은 1949년까지도 사회주의화된 것이 농업총생산의 3.2%에 불과했으며 공업은 1946년 이미 공업생산의 72.4%까지 달성했으나 아직도 상당부분이 개인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김일성이 1946년 10월 4일 「개인소유권을 보호하며 산업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한 대책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이 농업에 대해 전면적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개조에 나선 것은 1953년 로동당중앙위원회 제6차총회에서 제시되어 1954년 1월 「농업협동화경영의 조직문제에 대하여」라는 지시에서 농업협동조합의 세가지 형태와 협동경영의 관리, 운영원칙이 제시되었고 1954년 3월 「농업협동경영의 강화와 발전을 위한 대책」의 내각결정으로 명확하게 되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의 실시, 협동조합의 기준규약의 제정 등이 각기 명시되어 진행되었다.¹²⁷⁾ 농업협동화를 진행하는 목적은 단순히 농업의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개조 이외에도 집단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으며 기계화를 용이하게하고 농촌의

126) 高瀨淨, 앞의 책, p.130.

127) 高瀨淨, 앞의 책, p.135.

공업화를 통해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유입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제시되었다. 128) 그러나 실제적으로 농업집단화는 노동력과 자원의 동원, 배분을 국가가 통제하고 특히 식량의 생산과 소비를 국가권력의 통제하에 둔다는 면이 있었다.

농업협동화는 세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1) 작업만을 공동으로 하는 노동상조조 (제1형태:경험적 단계), 2) 토지를 통합하여 공동경영하고 노동과 토지의 크기에 따라 분배받는 반사회주의적 형태 (제2형태:대중적 발전단계), 3) 토지와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노동의 양에 따라서 분배받는 사회주의적 형태 (제3형태:최종완성단계)의 세가지 협동화 형태 및 단계가 그것으로 제1형태에서 제3형태로, 점차 낮은 단계에서 높은 차원으로 이른 바 사회주의적 개조가 진행되어 갔다. 그 발전상황을 보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진행성과

연도	조합수	제2형태(%)	제3형태(%)
1953	806	-	-
1954	10,098	21.5	78.5
1955	12,131	7.8	92.5
1956	15,825	2.5	97.5
1957	16,032	1.2	98.8
1958.8	18,039	-	100.0

* 참고문헌: 「조선의 농업협동화운동」(평양:외국문출판사), p.54; 高瀬淨, 앞의 책, p.136에서 재인용.

이상의 북한의 농업협동화과정의 특징을 보면 1) 공업화를 선행하여 기계화한 후에 협동화를 진행시킨 것이 아니라 협동화를 진행하면서 기계화의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생산관계우선의 형태를 취했다는 점, 2) 북한의 토지집단화과정은 소련과 중국이 농민의 저항에 부딪혀 상당부분의 사유지를 인정한 것에 비해 북한은 사유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비교적 평화적이고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9)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정치적 불평불만자들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월남했으며 한국전쟁이후의 농촌의 초토화와 노동력의 부족으로 농민의 저항이 적었던 것이며 또한 부분적

128)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op. cit.*, p.1077.

129)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op. cit.*, pp.1063~1076.

으로 정부의 화학비료, 관개시설이용권 장악을 이용, 회유와 강제가 따랐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업의 협동화와 함께 과도기 초기단계의 중요과제로서 제기되었던 것은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이다.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중요산업의 국유화 과정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되었던 것은 일제와 예속 자본가의 소유에 한정되고 민족자본가의 기업은 존속했다. 결국 도시에서는 사영상공업, 즉 개인수공업과 민족자본가의 상공업은 모두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영세한 경영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사영상공업은 해방후 경공업 생산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중생활의 향상과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초기에는 상당히 발전했었는데 1946년에 자본주의적 공업형태는 공업총생산액의 23.2% 개인상업은 소매상품유통에서 96.5%를 점했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먼저 사영상공업을 협동화의 방법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1956년까지의 생산협동조합의 형태는 출자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낮은 형태와 출자에 의한 분배를 하지않는 높은 형태로 구별되었다. 높은 형태 가운데서도 비공유화형태와 공유화 형태가 있었다.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단계에 접어들자 조선노동당 중앙상무위원회의 결정 「생산협동조합을 조직적, 경제적으로 강고하게하고 조합원의 사상활동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1957년 9월)가 채택되고 생산협동조합의 3가지 형태가 제시되었다.

제1형태는 지극히 영세한 수공업자를 망라한 '생산협동반'으로 이것은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견지하고 경영활동에서 각개인의 자주성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에서는 각자의 수입가운데 약간의 부분을 공동축적기금으로 적립하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경영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수입을 처리, 분배하는 형태이다. 협동반은 생산협동조합의 가장 낮은 형태이고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단계에서는 없어지게 되었다.

제2형태는 개인수공업자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중,소 상공업자를 모두 망라한 형태이다. 이것은 생산수단과 자금을 통합하여 협동경영을 하고 그 수익은 노동에 따른 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각자가 출자한 몫에 대해서도 분배하는 생산협동조합형태이다. 말하자면 반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닌 협동형태이다.

제3형태는 생산수단과 자금이 전부 협동조합의 소유이고 수익은 완전히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전적으로 사회주의적인 형태의 협동조합이다.

또 상인을 망라한 협동조합의 형태로는 초보적인 통합단위인 협동반, 판매협동조합, 생산 판매협동조합 등이 있다. 특히 생산 판매협동조합은 공업 생산과 상업활동을 겸한 조합이고 이것은 상인을 생산노동에 적응시키고 조합경영가운데 생산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생산협동조합으로 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과도적 형태이다. 한편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농업협동화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사영상공업과 소농경영이 상호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소농경영은 사영상공업에 원료와 농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사영상공업의 기본시장이고, 사영상공업은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농촌의 부농적 요소의 성장과 개인경영의 발전을 조장한다는 것이다.¹³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농업협동화의 병진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상과 같은 단계와 과정을 거쳐 북한의 전산업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는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8년 완성되었음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표6> 북한경제의 사회주의화비율(%) (1946~1958)

	1946	1949	1953	1956	1957	1958
국가수입	14.8	44.5	45.6	85.8	93.5	99.9
공업생산부문	72.4	90.7	96.1	98.0	98.7	99.9
농업생산부문	-	3.2	8.0	73.9	88.2	100.0
상업유통부문	3.5	56.5	67.5	87.3	87.9	99.9

자료: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op. cit.*, p.1212.

2. 경제발전정책과 성과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정책의 기초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정책, 그리고 경제와 군사부문의 병진정책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가지고 현재까지 북한은 1947년 1차1개년계획부터 시작해서 1993년 현재까지 제3차7개년계획을 진행중에 있다.

이것을 공산주의 이행기와 관련지어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시기를 구분하

130)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편,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조선의 경제-」 (광주, 1988), p.77.

고 있다. 131)

<김일성의 북한사회시대구분>

- ①인민민주주의 개혁기(1945~48): 1차1개년계획(1947), 2차1개년계획(1948)
- ②사회주의 개혁기(1953~56): 전후복구3개년계획(1954~1956)
- ③사회주의 혁명기(1957~60): 5개년계획(1957~61:실제 1960년 조기달성)
- ④사회주의 건설기(1961~70): 제1차7개년계획(1961~1967:실제 1970년 완결)
- ⑤공산주의로의 이행기(1971~): 6개년계획(1971~1976), 제2차7개년계획(1978~1984), 제3차7개년계획(1987~1993)

이러한 공산주의적 이행을 위해 북한이 취한 실제적 동원형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틀때문에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에 입각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물질적 유인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는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에 중점을 두었다.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의 대표적인 예는 「천리마운동」으로서 북한의 「조선전사」에서는 1956년에 제시되고 1957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132) 그러나 이전에도 사회주의 노력경쟁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46년의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농민들의 애국미 헌납운동」, 그리고 1954년의 「증산경쟁운동」 등이다. 특히 「증산경쟁운동」은 생산에 새기준량을 창조하기위한 투쟁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13명의 '로력영웅'과 9,300여명의 국가수훈자가 나왔으며 57,480명이 '모범로동자'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로력경쟁이 전면적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1956년 '생산수단의 결정적 승리' 133)라고 호칭되는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56년부터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는 생산관계의 개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58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개조가 완수되었다고 발표했을 때는 이미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개인적 유인(incentives)는 작용하기가 어렵게 되고 단지 '개인은 집단을 위해, 집단은 개인을 위해'라는 구호하에 추진된 「집단주의」원칙이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의 경제관리원칙은 물질적 유인보다는 규범적 또는 도덕적 자극(moral incentive)을 통한 대중동원수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131) 「로동신문」, (1973.9.10)

13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9권 (평양,1981), p.10.

13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앞의 책, 28권, p.247.

그러나 대중동원수단으로서 규범적 수단은 순수하게 도덕성이나 혁명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수단이라 하더라도 '영웅' 칭호나 특별대우, 또는 '상금'을 수여함으로써 부분적인 물질적 유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규범적 수단의 대표적인 것이 「천리마운동」으로서 1958년 9월 북한발전의 총노선으로 채택된 후 1959년 3월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1961년 8월까지 200만명이상의 근로자가 이 운동에 동원되었다.¹³⁴⁾ 그러나 규범적 자극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열기가 식기때문에 주기적으로 새로운 운동방법이 창안될 것이 요구되는 데 이러한 것이 1961년 공업부문에서의 「대안사업체계」와 1973년 2월의 「3대혁명소조운동」, 1975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79년말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1982년 「80년대속도창조운동」, 1988~89년 2차에 걸친 「200일 전투」를 추진하면서 특별상금을 추진하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노력경쟁은 상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¹³⁵⁾

이러한 북한의 경제발전정책의 성과는 초반기에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 전후복구 3개년기간(1953~56)과 사회주의혁명기(1957~1961)의 공업생산성장은 사회주의사회 가운데에서의 가장 인상적인 성과로서 기록되었다. 공업생산은 5개년경제계획기간(1957~61)의 처음 3년(1957~59)동안 매년 42.2%의 평균성장을 보였다.¹³⁶⁾ 북한은 이에 따라 1960년의 공업생산이 1949년보다 7.7배나 증가하였다고 주장했다.¹³⁷⁾ 이러한 결과 1960년에는 북한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국가'로 선언하였다.¹³⁸⁾

그러나 제1차7개년계획이 시행된 1961년에서 70년기간동안 북한의 공업생산은 연평균 12.8%로서 1961년 14%, 62년 17%, 63년 8%, 64년 17%, 65년 14%로 성장했다고 발표하였다. 1966~1969년간의 통계수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북한 당국은 1957년에서 1970년까지의 사회주의 산업화기간동안 공업생산이 연평균 19.1%로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1970년에는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전변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60년대말

134) 「김일성저작선집」 5권, p. 426;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59년 3월 강선제강소에서 발단된 것이며 「민주조선」(1965. 7. 17)에 의하면 1965년 6월말 현재 87만 3천명의 노동자, 사무원, 협동노장원, 학생을 망라한 23,000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았다.

135) 통일원, 「92북한개요」 (서울, 1993), p. 133.

136)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 1987), p. 34.

137) 「김일성저작선집」 5권, p. 289.

13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9권, 앞의 책, p. 229.

과 70년대의 공업성장률은 1950년대와 1960년대초보다는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북한이 점차 경제적 침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면적인 개발노력과 해외로부터 도입된 자본, 기술덕택에 제6개년 계획 목표도 연평균10.4%(공업부문에서는 16.3%)로 원래 계획했던 기간보다 1년 반 앞당겨 성취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증가로 인해 외채가 누적되어 외채상환 불능으로 채무불이행국이 됨으로써 오히려 1975년이 후에는 서구 선진기술의 도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이 경제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외국자본과 기술을 몹시 필요로 하는 시기에 외자조달의 길이 막히게 되어 북한은 더욱 고립적이고도 자립적인 주체사상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¹³⁹⁾

완충기로서 1977년을 제쳐놓고 북한은 1978년부터 제2차7개년계획을 시작하였다. 이 계획은 공업생산의 연평균성장률 목표를 12.2%로 책정하고 1984년초까지 완수하도록 수립되었으나 매년 실제 성과와 계획목표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기간중의 북한경제 및 사회통계의 발표를 중단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제2차7개년계획의 성과는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1984년에 북한은 제2차7개년계획에 대한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 계획이 완수되었다고만 발표하였다. 그리고 1987년까지 2년 동안 제3차7개년계획의 조정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제3차7개년계획은 '주체사상의 진흥', '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 '건고한 물질적 기반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기술적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주요과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완전한 사회주의 승리'라는 어구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면에서 제2차7개년계획과 거의 동일하다.¹⁴⁰⁾

새로운 계획수립에서는 기술적 혁명달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과 기술에 대한 강조는 '완전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라는 1986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과학적 기술발달의 주요 목적은 인민경제의 완전한 기술적 재건을 성취하는데 있다. 인민경제부문에서 오래되고 낡은 장비는 현대화되어야 하고 생산과정은 로봇을 갖춘 자동화, 기계화, 컴퓨터화 되어야 한다”¹⁴¹⁾

139)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나남,1992), p.60 참조.

140) 황의각, 위의 책, p.64.

141) 小此木政夫, 前掲書, p.70.

김일성이 경제의 부흥을 위해 과학과 기술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후진경제의 문제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은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으며¹⁴²⁾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방과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¹⁴³⁾

그러나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경제부흥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은 소련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점차 다시 '자립'적 경제건설을 촉구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소련과 같은 정치경제적 개혁이 북한의 김일성체제에게는 곧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의 제2차7개년계획은 본래 낮은 목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통계자료는 북한의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기획원은 최근 작성한 북한경제평가자료에서 "80년대이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거의 정체상태인 3%수준"이라고 지적한 후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1인당개인소비증가율이 1%는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거의 한계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⁴⁴⁾ 이나마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에 들어서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¹⁴⁵⁾ 이는 무역에 있어서도 소련의 붕괴된 해인 1991년 한햇동안 북한의 대외무역액이 90년대비 24%가 감소했으며 산업과 군사부문에 필요한 원유공급이 대폭 감소하고 식량도 부족한 상황이란 점에서 체제적 위기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¹⁴⁶⁾

3. 경제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혁

142) 실제로 합영에 참여한 주체는 주로 재일조총련계로서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이는데는 실패하였다.

143) 당시의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는 글들로는 포도르 칩코프, "질, 이것은 사람과 집단, 사회의 실제적 장성의 척도이다." 「근로자」(1984.7); 정송남,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근로자」(1984.10); 최정근,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대외무역" 「근로자」(1984.12); 박영식,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근로자」(1985.1) 등이 있었다.

144) 「조선일보」(1992.7.20)

145) 1990년 -3.7%, 91년 -5.2%, 92년 -7.6%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일보」(1992.8.13); 「조선일보」(1993.6.8)

146) 북한의 1991년도 식량생산은 443만톤으로 총수요인 650만톤에 비해 200만톤이 부족한 것이었으며 1992년 12월에 이어 1993년에도 식량폭동설이 전해지고 있다. 「한국일보」(1992.11.13); 「조선일보」(1992.12.30); 「조선일보」(1993.8.21)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경제는 초기인 1960~70년대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는데 이는 서방에도 놀라운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보여졌다. 이미 영국의 로빈슨(Joan Robinson)은 1964년 북한 방문후에 “전후 세계의 모든 경제적 기적이 북한의 업적에 나타나고 있다”¹⁴⁷⁾고 하였으며 프랑스의 농학자인 듀몽(Rene Dumont)은 1969년에 “북한이 농업과 공업분야에서 사회주의 블록을 이끌고 있다고 할만큼 앞서가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⁴⁸⁾ 또한 공산권국가들에 관해 많은 연구와 관찰을 해온 셀리스베리(Harrison Salisbury)는 1972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굉장한 기술 및 공업발전을 이룩한 나라”라고 하면서 “1인당 소득수준을 기초로 볼 때 북한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가는 공업국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밖에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도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상당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¹⁴⁹⁾ 북한의 경제발전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인정과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바로 북한이 초반에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활용하여 규범적 수단을 적절하게 전자원을 동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규범적 동원형태 중 대표적인 것이 당의 주도아래 동원되는 ‘열성자대회’인 군중노선과 김일성이 수여하는 「김일성훈장」, 「김일성상」, 「공훈...」 등의 칭호상훈,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쟁, 애국운동 등이다. 이에 덧붙여 노동일과후에 하는 사상학습과 총화토론같은 것은 규범적 수단인 동시에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결들여 강제성이 가미되어 있다.

초기에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로 김일성은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선언하였으며¹⁵⁰⁾ 이는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7> 총생산에서의 공업과 농업간의 관계변화¹⁵¹⁾

	1946	1949	1953	1956	1960	1970
공업(%)	28	47	42	60	71	73
농업(%)	72	53	58	40	29	27

147) Joan Robinson, “Korean Miracle,” *Monthly Review* (January 1965)

148) Rene Dumont, *The Hungry Future* (London:Deutsch, 1969), p. 137.

149) 월간조선편집부,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조선일보사, 1991) 참조.

150) 「북한조선노동당대회주요문헌집」 (서울:돌베개, 1988), p. 273.

151) 엘렌 브룬, 재퀴스 허쉬, 김해성 옮김, 앞의 책, p. 169.

그러나 초기의 혁명열기에 의해 시작된 규범적 수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용성을 상실하여 수확체감점(the points of diminishing return)에 도달하고 이것은 곧 경제침체와 연결된다.¹⁵²⁾ 이러한 경제침체의 원인으로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취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회주의적 통제경제는 발전이 어느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만 일단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직된 통제경제체제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노동력투입의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 수단의 효용성이 감소(moral sinks)하고 생산성감퇴(productivity suffers)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이 북한에서는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주체사상의 강화'와 기타 노동생산력 고취를 위한 각종 사상교육의 강화가 그 당시부터 강조되었던 사실들에서 나타난다.¹⁵³⁾

따라서 규범적 수단은 충격요법과 같이 주기적이고 순환적으로 강도높게 부여될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구체적 사례가 1946년의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농민들의 애국미 헌납운동, 1954년에 시작된 「증산경쟁운동」, 1958년의 「천리마운동」, 1960년의 「청산리방법」, 1961년의 「사회주의경쟁」, 「대안사업체계」, 1973년의 「3대혁명소조운동」, 1975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그리고 1979년의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 1980년대의 「80년대속도운동」 등이다.

그러나 대중의 혁명열기가 식은 후 위로부터 계속되는 대중동원은 점차 노동자들에 대한 소외(alienation)를 발생하게 한다. 한편 정치체에게 있어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소외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게 되고 이는 점차 사회의 불만과 불안요소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와 같은 노동동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체는 감소하는 규범적 노동수단에 비례해서 강제적 수단을 증가시키던가 물질적 유인으로 노동동원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북한은 주기적으로 남한과 미국이 북침을 하려한다고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강제적 수단으로 배급량의 감소와 형법상의 죄인으로 몰아세운다. 북한의 범죄자는 크게 경제범죄자와 정치범죄자로 분류되는데 경제범죄자의 경우 형법에 따라 노동낭비죄(형법제108조),

152)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153) 황의각, 「북한경제론」, 앞의 책, p.116.

오작품 및 불합격품생산죄(형법제91조), 오작설계, 오작시공죄(형법제92조), 토지남용·폐경죄(형법제97조) 등의 죄명이 부과된다.¹⁵⁴⁾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규범적, 강제적 수단을 통한 생산력발전의 노력은 이미 선진사회주의국가에서 적용되었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한 예들이 소련의 「스타하노프운동」과 「소비에트 인간」,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그리고 큐바의 체게바라가 주장했던 「신인간」 창조론 등이다. 또한 강력하게 생산력발전추진정책을 폈던 스탈린이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간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다가 결국 그 오류성을 시인하는 과정¹⁵⁵⁾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생산력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성의 축적은 결국 최근 소련의 붕괴와 동구의 개혁 그리고 중국이 자본주의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와 계획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명백한 퇴조로 보여지는 것이다.

초기동원체제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체제관리기¹⁵⁶⁾에 들어 경제성장이 침체되는 원인을 존슨은 경제발전에 조응하지 못하는 정치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존슨은 경제발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치적 통제완화를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선진기술을 요하는 효율적인 제조공업은 기존의 생산방법에서 오랜 습득을 익히기 위한 경제안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데올로기적 목적의 정치적 간섭은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둘째, 근대화된 분야는 점차 복잡화되면서 무역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데 이는 어떤 체제도 모든 원료를 자체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도 무역을 하게 됨에 따라 국제가격과 품질을 접하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과 무역업무, 포장, 디자인업 등이 전문화된다. 이것은 필요이상의 정치간섭을 배제하는 것들이다. 셋째, 초기단계에서 공업화는 단순히 선진공업국의 형태를 '따라잡는(catching up)' 방식이었으나 점차 세련되고 고도화된 기술은 모방할 수 없으며 혁신을 통해 개척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혁신은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자발성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자유화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⁵⁷⁾

154) 이밖에도 북한의 정치테러에 대해서는 이석호, "북한정치테러에 관한 연구", 이용필 (편), 앞의 책, pp.319~370.

155) J. 스탈린, "L.D.야로센코 동지의 오류에 관하여", 서증건 옮김, 「스탈린선집 2」 (서울:전진, 1990), p.184.

156) 「가드윈(Paul H.B. Godwin)」은 「달린」과 「브레스라우어」의 동원체제와 후기동원체제를 「체제관리기」로 분류한다. Alexander Dallin and George W. Breslauer, *op. cit.*: Paul H.B. Godwin, *op. cit.*, p.118

이러한 북한의 경제문제에 대해 김일성도 일찌기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물질적 관심을 효과적으로 자극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경쟁이 잘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물질적으로 자극해야만 열성도 더 높아지고 생산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경쟁도 할 수 없으며 경쟁을 사회주의적 분배원칙과 옹계 결합시켜야 근로자들의 로력적 열성을 적극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¹⁵⁸⁾

“혜방전의 개인 상인들은 미역같은 것도 잘퍼서 먹음직하게 해놓고 팔았으나 오늘의 상점들은 미역을 잘 거두지 않아 볼 꼴이 없이 된 것을 팔고 있다. 여관과 식당도 잘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음식의 질도 낮고 손님에 대한 봉사성도 높지 못하다. 구체적인 예로 평양국수도 그전만 못하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공리를 많이 하고 손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상업을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고 안팔리고는 상업일꾼들에게 큰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¹⁵⁹⁾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에서도 ‘물질적 자극’을 노린 「작업반 우대제」나 「작업반 독립채산제」 및 「상금제」가 1960년대 이후 청산리운동과 함께 도입되고 1984년에는 「합영법」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꾀했으나 정치구조적 개혁이 없어 그 효과는 부분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¹⁶⁰⁾

따라서 동원체제로서의 북한은 이제 심각한 딜레마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생산력발전을 위해 계급투쟁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급투쟁을 위해 경제침체를 감수하고 버틸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이러한 두가지 선택지는 동원체제로서의 북한에 대해 두가지 전망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그 첫번째 가능성은 생산력발전을 위해 계급투쟁을 포기 또는 유보하고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이는 소련이 취했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같이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선생산력 발전을 주장하는

157) Chalmers Johnson, *op. cit.*, 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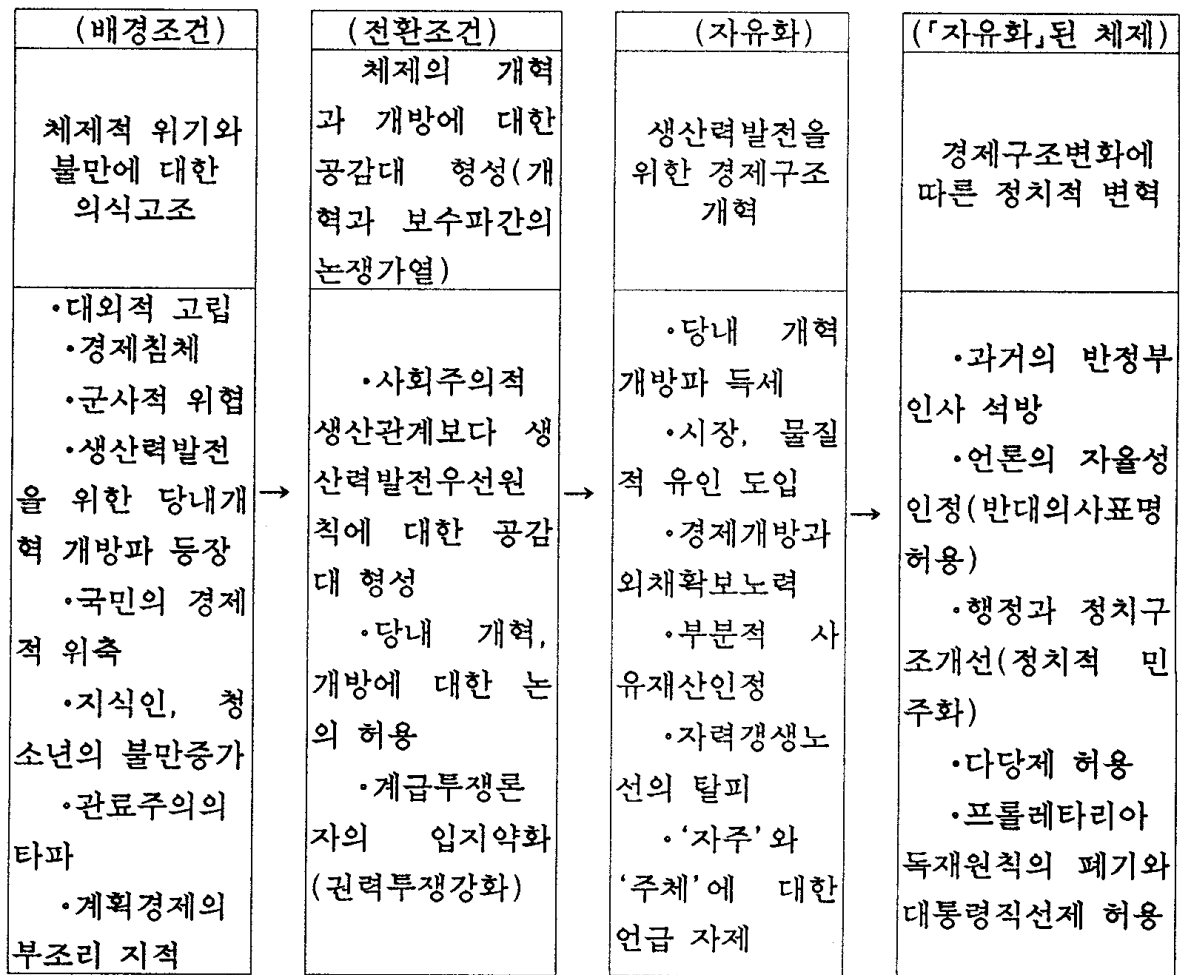
158) 김일성, “강서군당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1960. 2. 23), 「김일성저작선집」 2권, p. 536.

159) 김일성, “상업부문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 「근로자」 제5호(1978), pp. 2~26 참조.

160) 북한이 지향하는 물질적 자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적 분배’에 충실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주의단계에서는 ‘능력에 따른 노동과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원칙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물질적 관심’이라해도 ‘개인적인 물질적 관심’이 아닌 ‘집단적인 물질적 관심’이라고 하여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점이 사회주의의 단점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高瀬淨, pp. 69~76 참조.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치개혁을 함과 동시에 물질적 유인(incentives), 사유재산, 자유경쟁, 시장제도 등을 부분적이거나 인정하고 외국으로부터는 외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투쟁의 유보는 먼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포기와 평화의 선언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김일성체제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정통성기반을 흔드는 것이 되어 심각한 체제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급진적 개혁 개방정책은 북한에서의 심각한 권력투쟁이나 정권교체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것이 될지라도 궁극적인 결과는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문화로 부터는 상당히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망을 자유화 모

<그림10> 자유화 모형에 의한 북한의 변화전망



형에 의해 제시해 보면 <그림10>과 같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는 현재의 경제침체를 순간적인 것이라고 대중들을 설득하면서 혁명성으로 노동의욕을 다시 고취시킴과 더불어

어 한편으로는 군사비에 대한 자본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1991년 현재 국내총생산의 20%이상이나 되는 국방비를 줄이고 그 자본을 국민들의 경공업과 생활필수품생산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김일성과 김정일체제가 취하는 방법으로 핵무장으로서 더이상의 재래식군사장비에 드는 군사비지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운동을 벌여 체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⁶¹⁾ 「우리식 사회주의」로 표방되는 이러한 노선은 물론 국제적인 위기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개선안이 되지 못하기때문에 폭발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V. 북한의 군사외교적 위기요인

1. 경제부문과 군사부문의 상관관계

한 나라의 국방비 지출의 증가는 그 나라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관한 현대의 정치경제이론은 군사비부담의 증가가 국민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명료하게 밝혀주지 못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 논제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연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보편적 이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¹⁶²⁾

자원배분의 개념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높은 군사비지출이 낮은 투자지출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낮은 경제성장과 연결될 것임을 추론해낸다. 다시말하면 이 견해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에 있을 때 국방비지출의 증가가 여타부문의 민간투자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곧 낮은 경제성장률로 연결된다는 논리이다.¹⁶³⁾

161) 최근에 남한을 방문한 후 경제개혁을 제의했던 연형북총리가 경질된 것은 북한이 전환조건에서 강경보수노선으로 회귀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일보」(1992. 8. 8) 참조.

162) 함택영, 리영희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44~45.

163) 경제가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음으로써 일어나게될 국방비 지출 증가의 유효수효 증대효과는 이 논의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국방비 지출의 효력에 관한 시뮬레이션은 다음 참조 D.Green and C.Higgins, *Sovmod I: A MacroEconometric Model of the Soviet Union* (New York:Academic Press, 1977), pp. 71~74.

어 한편으로는 군사비에 대한 자본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1991년 현재 국내총생산의 20%이상이나 되는 국방비를 줄이고 그 자본을 국민들의 경공업과 생활필수품생산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김일성과 김정일체제가 취하는 방법으로 핵무장으로서 더이상의 재래식군사장비에 드는 군사비지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운동을 벌여 체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⁶¹⁾ 「우리식 사회주의」로 표방되는 이러한 노선은 물론 국제적인 위기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개선안이 되지 못하기때문에 폭발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V. 북한의 군사외교적 위기요인

1. 경제부문과 군사부문의 상관관계

한 나라의 국방비 지출의 증가는 그 나라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측되지만 이에 관한 현대의 정치경제이론은 군사비부담의 증가가 국민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명료하게 밝혀주지 못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 논제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연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보편적 이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¹⁶²⁾

자원배분의 개념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높은 군사비지출이 낮은 투자지출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낮은 경제성장과 연결될 것임을 추론해낸다. 다시말하면 이 견해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에 있을 때 국방비지출의 증가가 여타부문의 민간투자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곧 낮은 경제성장률로 연결된다는 논리이다.¹⁶³⁾

161) 최근에 남한을 방문한 후 경제개혁을 제의했던 연형북총리가 경질된 것은 북한이 전환조건에서 강경보수노선으로 회귀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일보」(1992. 8. 8) 참조.

162) 함택영, 리영희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 44~45.

163) 경제가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음으로써 일어나게될 국방비 지출 증가의 유효수효 증대효과는 이 논의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국방비 지출의 효력에 관한 시뮬레이션은 다음 참조 D.Green and C.Higgins, *Sovmod I: A MacroEconometric Model of the Soviet Union* (New York:Academic Press, 1977), pp. 71~74.

국방비논쟁에서 또 하나의 주요한 견해는 이른바 “근대화(modernization)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국방비지출의 증가가 사회간접자본이나 기술 혁신에 투자됨으로써 민간경제에 간과할 수 없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군부는 근대화의 주체로서 군대내의 집단활동을 통해서 단지 기술전파를 넘어선, 근대화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교육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¹⁶⁴⁾

위의 논의에서 보듯이 군사부문과 경제부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은 쉽지 않으며 그것은 연구대상이 되는 국가의 국제적 위치, 경제발전의 정도,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군사비지출의 결과인 군사장비들이 상품화되어 수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유휴자원이 군사부문에 흡수되어 경제부문에 반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과도한 군사비지출이 경제부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통적인 이론은 군사비 지출의 구축효과(crowding-out)를 가설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국민총소비이후에 남겨진 잉여생산중에서, 군사비지출은 불가피하게 투자목적 을 위한 자원배분을 빼앗아가며 그 결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 견해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의 주요한 원천으로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간투자로부터 군사비지출로의 자원배분의 전환과정은 대체로 조세증가와 적자재정의 두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조세의 추가 부담으로 국민들은 그들의 소득으로부터 보다 적은 부분을 저축과 투자에 할당하게 되고 국민저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없다면 국민투자감소의 결과는 경제성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것이다.¹⁶⁵⁾

164) Lucian W. Pye, "Armies in the Process of Political Modernization," Jason L. Finkle and Richard W. Gable, (eds.),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6), pp. 379~385 참조.

165) 그러나 이러한 구축(crowding-out)효과는 경제가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하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 즉 경제가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음으로써 유효수요가 부족할 시는 군사비 증대가 생산증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견해는 특히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마르크스(K. Marx)의 견해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다. 이른바 불완전 소비이론(underconsumption theory)이라고 불리우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군사비증대는 경제의 침체를 막기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심화는 그 체제가 임금인상을 불허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인하여 체제의 거대한 생산력을 흡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경제체제의 붕괴에 도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과도한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공황이 일어나 시장기능은 마비되고 자본가들은 이윤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이 점에서 군사비증대는 유효수요의 창출을 통해 자본가의 이윤획득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내에서 이념적으로 정당화된다. Ronald P. Smith, "Military Expenditure and Capitalism,"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이 분야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대체로 국방비지출과 국민투자비율간의 거의 1:1 상쇄(trade-off)관계를 도출해내고 있다.¹⁶⁶⁾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정된 재정한계내에서 군사비의 증가가 여타 부문의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제로-섬(zero-sum)관계가 상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비지출과 국민투자규모간의 역관계는 후진개발국보다는 선진산업국에서 보다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⁷⁾

이에 반해서 근대화의 매개로서 군사부문을 설정하는 이론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비 증대, 그리고 군부가 그 사회의 정치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나온다. 후진개발국들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자본, 기술, 외화 등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이 부족하기 쉬우며 이 경우 군부의 특유한 역할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유행했던 제3세계의 군부쿠데타와 군부정권이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들고 있으며 또한 남북한의 60년대와 70년대의 상황도 군사비 증가와 경제성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⁸⁾

즉 군부는 새로운 기술이 민간경제로 파급되는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군사시설의 확대를 통해 교통, 통신, 전기시설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군사훈련을 통해 농촌의 유희노동력에 근대화를 위한 정치교육을 담당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¹⁶⁹⁾

이상의 이론들을 검토해 볼 때 몇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군사비지출은 군사기술을 개발하여 경제기술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무기가 상품으로 수출되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비생산성부문에 대한 경제

Vol.1, (1977), pp.61~76.

166) Ronald P. Smith, "Military Expenditure and Investment in OECD countries, 1954-73,"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4, (1980), pp.19~32; Ronald P. Smith, "Military Expenditure and Capitalism," op.cit., pp.61~76.

167) Nicole Ball, "Defense and Development: A Critique of the Benoit Stud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983); 함택영, 리영희 외, 앞의 책, p.48에서 재인용

168) 근대화 이론의 한 보기로서 국방연구원의 한 연구는 북한의 추계 국민소득과 공업 및 농업성장, 그리고 예산지출내역 자료를 이용하여 간단한 계량모형분석을 시도하였는 바 북한의 군사비지출 증가는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시책비를 일정하게 감소시키지만 궁극적으로 공업생산은 증가시킨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달희, "북한경제와 군사비"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0), pp.173~220; 함택영, 리영희 외, 앞의 책, p.47.

169) 이러한 군비지출의 근대화시각은 1973년에 에밀 베노이트(Emil Benoit)에 의하여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1950년부터 1965년까지 44개국의 저개발국가(LDCs)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분석방법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국방비지출이 경제성장을 촉진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mile Benoit, *Defense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Boston: C. Heath & Co., 1973)

자본의 유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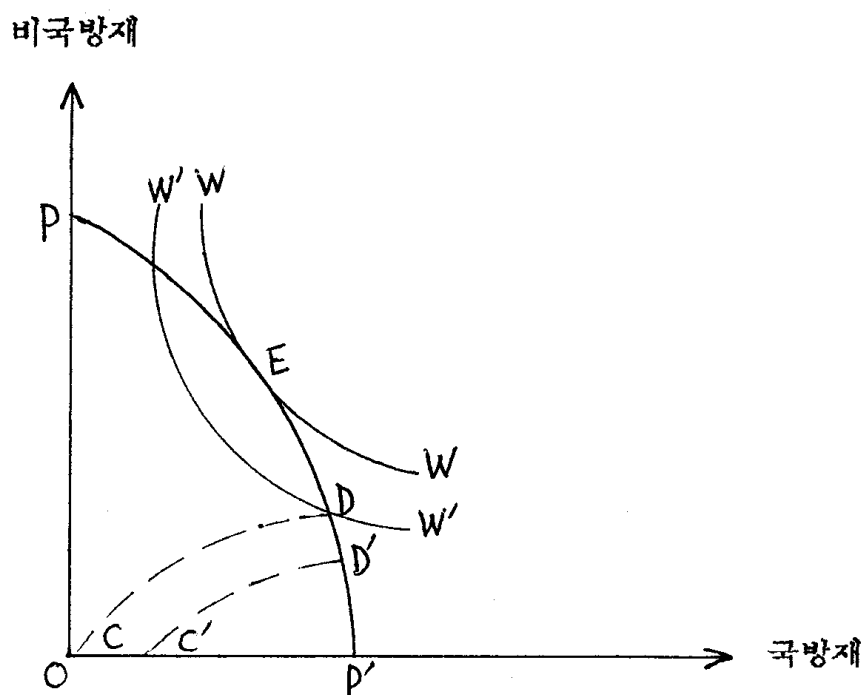
둘째, 근대화 초기 또는 불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을 때 군사부문의 확대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는 점차 공업화와 완전 고용상태를 통해 선진공업국에 접근하면서 점차 군사비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첨단기술과 장비의 특화(specialization)를 통해 무기수출이 원활할 때는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외로 한다.

셋째, 과도한 군사비지출은 사회후생수준에 대한 재정지출을 적게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군사부문과 경제부문간의 관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나 위기시에 군사부문의 효율성은 극대화되지만 평화적인 분위기로 갈수록 군사부문은 생산성과 존립필요성이 악화되며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군사비의 적정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추구되고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보면 <그림11>과 같다.

<그림11> 군사비의 사회균형수준



<그림11>은 한 사회의 생산가능곡선을 PP, 사회선호곡선은 WW으로 나타내고 있다. 만약 국제무역이 없다면 그 사회의 국방재와 비국방재간의 최적자원배분은 PP와 WW이 접하는 E점이 된다. 그러나 국방에 대한 공공재적 접근의 견지에서 보면 생산가능곡선 pp는 이 사회의 소비가능곡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생산되는 모든 비국방재는 외국의 침략이 일어난 상황하에서는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 향유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국방재와 비국방재간에는 어느정도의 보완성이 존재해야만 하는데 국방재의 존재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사회의 주어진 자원제약하에서 생산되는 일정량의 국방재를 도입하면 사회의 소비가능곡선은 CDP'와 같이 표시될 것이다. 이 경우에 최적 균형은 D점에서 성립하며 D점은 E점보다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국방재의 도입으로 사회후생수준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중대하는 경우, CD곡선은 C'D'과 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그 결과 더 많은 군사비 지출과 더 축소된 사회후생소비를 나타내는 곡선은 W'W'이 된다. 이는 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현실세계에서 한 나라의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경제부문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감소하기때문에 사회후생 수준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¹⁷⁰⁾

한편 평상시에 군사부문은 자본과 선진과학기술, 장비의 모든 면에서 경제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즉 경제의 발달에 따라 잉여축적된 자본이 군사비로 쓰일 수 있는 것이며 전자장비, 엔진, 석유화학 모든 것이 경제부문의 성장 및 발달에 따라 군사부문에 응용, 적용되는 것이다.¹⁷¹⁾ 최근에 일본이 극동아시아의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갖춘 군사무기체계보다는 군사무기화할 수 있는 경제적 잠재력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부문은 특히 전쟁기간이나 전시준비상황의 경우 긴장과 생존의 욕구속에서 그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시에는 그 자극이나 역동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평시에는 군사부문이 경제부문에 의존하게되고 국가의 바람직한 발전전략은 선경제건설 후군비건설(先經濟建設 後軍備建設)이 된다.¹⁷²⁾

170) 황의각, 앞의 책, pp.211~2.

171) 하영선 편, 「한반도군비경쟁의 재인식-전쟁에서 평화로-」 (서울:인간사랑, 1988) p.208 참조.

172)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는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강대국의 흥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폴 케네디 저, 이일수, 전남석, 황건 역, 「강대국의 흥망」 (서울:한국경제신문사, 1991) 참조.

2. 북한경제의 침체와 남북한 군비경쟁 실태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혁명분위기만 성속되면 남한민중을 도와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는 「남조선혁명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군중동원정치와 김일성체제안정의 이데올로기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남조선혁명과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비해 군비를 강조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개발도상국가에 있어 초반기의 군사부문의 확장은 경제부문의 발전과도 병진해 나갈 수 있음이 북한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이는 중공업우선정책과 관련하여 1960년대에 북한이 높은 군사비 지출을 하였음에도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군사비 지출의 경향을 볼 때 북한은 1960년대 초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972년부터는 현상유지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전쟁이후 경제복구와 경제건설에 집중되었던 인적 물적 자원이 다시 군사부문에 동원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당시까지 북한이 취했던 중공업우선정책은 군사부문에 전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중공업우선정책이 곧 군비확대의 정책에서 나왔다는 속단은 할 수 없다. 이는 소련이나 동구국가에서 보듯이 중공업우선정책은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 및 공업화 강행전략이래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전략의 일환이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¹⁷³⁾

또한 1960년대 초반부터 군사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도 공격적 의도보다는 방어적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과 소련이 중-소분쟁의 와중에 있을 때 1961년 케네디가 월남전에 적극 개입하고 1962년 10월 흐루시초프가 「쿠바사태」로 미국에게 굴복함으로써 북한은 1962년 12월 10~14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4차전원회의에서 목표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을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망치를 들고”라는 경제건설과 군사력증강의 병진정책이 채택되었으며¹⁷⁴⁾ 이는 국제적 상황이 군부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정치체는 평화를 구걸하기보다 군사력의 강화와 투쟁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173) Jonathan Arthur, *Socialism in the Soviet Union* (Chicago: Workers Press, 1977) pp.30~31; 함택영, 리영희외, 앞의 책, p.92.

174) 「조선중앙년감」(1963), pp.157~159.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에는 비록 경제개발을 제약하거나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그들의 결의가 강조되었다. 175)

여기에서 또한 국방의 「자위노선」과 함께 4대군사노선의 발단인 '전인민의 무장화'와 '전국토의 요새화'가 제기되었다. 특히 '전인민의 무장화'나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는 인민전쟁방식을 개념화한 것으로서 공세적이라기 보다는 방어적인 군사교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176) 이러한 원칙은 1966년 추가로 제기된 '전군의 현대화'노선이 장비 및 기술지향적이고 따라서 자본집약적 임에 비해 병력 및 민간인 동원을 지향한 노동집약적 노선이자 경제적 군비증강방법이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177)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1965년이후에야 비로소 현대무기를 수입할 수 있었으나 이미 1962년 12월부터 국가경제발전의 막대한 지장을 주면서까지 재래식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산업의 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월남전에서 공산당의 호전에 힘을 얻어서인지 군부의 호전성이 강화되고 있고 당내 엘리트층에서도 군부출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61년 9월 제3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치위원 11명 가운데 군부출신은 최용건을 제외하면 부수상 겸 민족보위상 김광협(서열 8위)1명뿐이었으나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15인의 정치위원 가운데 군부인사는 최용건(2위), 김광협(6위), 민족보위상 김창봉(8위), 최현(10위), 리영호(11위) 등 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후보위원에도 석산, 허봉학, 최광, 오진우 등이 진출하였다. 178) 이와 같은 군부엘리트들의 상승은 국가예산중 군사비지출비중이 1961년도에 2.5%에서 1966년에는 10%로 증가하고 이듬 해인 1967년에 30.4%로 3배나 급증한 뒤에 1971년까지 계속 30%정도를 유지하였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군사비 지출의 증가는 소련이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요인도 작용하였다.

175)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청계연구소, 1989) p. 186.

176) 함택영, "주체사상과 북한의 국방정책", 양재인 외, 「북한의 정치이념:주체사상」 (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166~167; Pong S. Lee,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Peter Wiles, (ed.), *The New Communist Third World: An Essay in Political Economy* (London:Croom Helm, 1982), pp. 307~331.

177) '전군의 현대화'는 1966년에 가서야 제시되었다. 함택영, 리영희외, 앞의 책, p. 92; 서대숙교수는 이 회의에서 '전군의 현대화'까지 포함한 4대군사노선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앞의 책, p. 186.

178)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Honolulu:The Univ. Press of Hawaii, 1981), p. 328; 함택영, 리영희외, 앞의 책, p. 96.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어가는 시점에서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같은 강조는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에 북한인민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비록 경제발전과 군사력증강의 병진정책이 표방되기는 했으나 북한의 경제발전 수준으로는 소련이 공급해왔던 정교한 무기체계를 실제로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군사력증강은 상호 배타적인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1962년에서 1964년사이에 이르는 소련과의 분쟁기간동안 북한은 군사력의 상당한 퇴보를 겪었고¹⁷⁹⁾ 1965년에는 김일성도 경제발전속도가 군사비 지출 증대로 말미암아 지체되고 있으므로 7개년 경제계획의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하였다.¹⁸⁰⁾

일반적으로 군사비부담률이 매우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비 지출은 비생산성부문에 대한 지출로 경제자본의 유출이 되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있다.¹⁸¹⁾ 일본의 쓰카모토(塚本勝一)는 세계각국의 경험으로는 평시 1%이상의 군사인원의 유지도 과중한 부담이 되며 평상시 적정 군사비 수준은 GNP의 3~4%(최대6%)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89년 현재 북한의 군사비 수준은 GNP의 20~25%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한다.¹⁸²⁾

북한의 과중한 군사비 부담은 경제1차7개년계획(1961~70)을 3개년 연기하도록 했으며 김일성도 1970년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과도한 국방비지출에 의해 경제건설에 차질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크고 비싼 대가로 이루어 졌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나라와 인구가 적는데 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국방에 돌려진 부담의 한 부분이라도 덜어 그것을 경제건설에 돌렸더라면 우리 인민경제는 보다 빨리 발전하였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의 생활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세는 이렇게 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안락을 위하여 혁명의 근본 리익을 저버릴 수 없었으며 다시는 망국노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

179)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앞의 책, p.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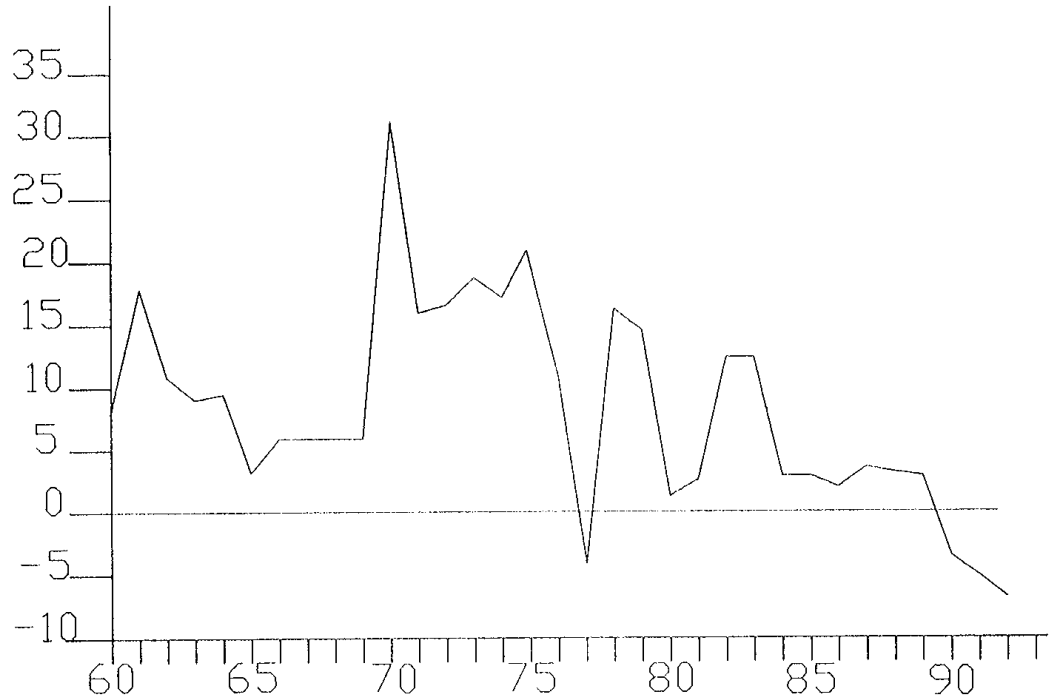
180) 김일성, 1965년 1월 1일 신년사; 1965년 4월 14일의 알리아르함 인도네시아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선집」 4권, pp.195~240.

181) 함택영, 리영희 외, 앞의 책, p.110 참조.

182) 91년 현재 인구대비 병력비율은 남한이 1.69%이며 북한은 4.7%, 89년 현재 남북한 국방비의 對GNP비율은 각기 4.7%, 20~25%라고 한다. 쓰카모토(塚本勝一), 「일본입장에서 본 남북한 군비관리」, (1992. 6. 1~2 북한연구소주최 「한반도군축4개국 학술회의」 주제 발표문) 참조.

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도 조국 보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183)

〈표8〉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세



자료: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나남,1992), pp.142~3 ; 「조선일보」 (1991.8.29) ; 「한국일보」 (1992.8.13)

1987년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 북한학자 역시 북한의 경제가 과도한 군비지출로 인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84)

그러나 사실상 북한의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라는 구조적 요인이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침체때문에 북한의 군사비 부담이 더욱 과중하게 된 것임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이미 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에서 경제침체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른 군사비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경우에 1988년 수준의 군사비만 지출했다고 계산해도 1990년 국민총생산(GNP)의 25%에 달했으며 이에 비해 미국은 1995년도에 가면 2차대전후 가장 낮은 수준인 4%정도로 낮아질 것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185)

183)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1970.11);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돌베개,1988), p.287.

184) 「조선일보」 (1987.5.31)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70년대초를 정점으로 하

<표9> 북한의 예산중 군사비 비율

년 도	GNP성장률	예산중 군사비 비율(%)	년 도	GNP성장률	예산중 군사비 비율(%)
1953		15.2	75	20.0	16.4
54		8.0	76	10.9	16.8
55		6.2	77	-4.0	15.6
56		5.9	78	16.9	15.9
57		6.1	79	14.9	14.5
58		4.9	80	1.7	14.6
59		3.8	81	2.5	14.8
60	7.4	3.1	82	12.2	14.6
61	13.1	2.5	83	12.2	14.7
62	11.0	2.6	84	2.7	14.6
63	9.4	1.9	85	2.7	14.4
64	9.9	5.8	86	2.1	14.1
65	3.6	8.0	87	3.3	13.2
66	5.8	10.0	88	3.0	12.2
67	5.8	30.4	89	3.0	12.0
68	5.8	32.4	90	-3.7	12.1
69	5.8	31.0	91	-5.2	
70	31.0	31.0	92	-7.6	
71	15.9	31.1			
72	16.0	17.0			
73	18.9	15.4			
74	17.1	16.1			

여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예산중에서 차지하는 군사비비율도 <표9>에서 보듯이 70년대초반부터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당과 지도자들이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경제침체의 원인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이나 남한과 대립을 하고 있기때문이라는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¹⁸⁵⁾

그러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간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한 자원배분의 경합은 정책노선의 경합을 의미하며 이는 곧 당내의 관료정치적 갈등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반김일성계의 조직적 세력이 제거되고 기술관료의 당내 영향력이 낮은 당시의 상황에서 전개된 '홍'과 '전'의 갈등은 기술관료의 입장까지 대변한 당료파와 군부의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1967년 당

185) 「조선일보」 (1991. 4. 27)

186) 그러한 결과로 인해 귀순자인 안찬일씨는 북한경제의 침체이유를 ① 막대한 군사비 투자, ② 복지부문에 대한 과다한 투자, ③ 3대혁명소조 파견(1973년 2월)으로 당, 정, 행정기관의 기존질서 파괴, ④ 생산참여동기의 상실 순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김은철씨는 북한의 경제가 1975년이후부터 악화된 것 같으며 국방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침체의 원인을 과중한 국방비에 두고 나아가 그러한 국방비를 지출하게 하는 미국과 남한에 원인을 두려는 선전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일보사,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살아 본 사람과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 앞의 책, pp.167~173.

료파의 속칭은 1956년 4월 제3차당대회이래 정치위원이며 비서국의 핵심요원인 박금철과 리효순, 그리고 중요한 선전담당업무를 맡았고 1966년이래 당비서인 김도만 등의 제거로 나타났다. 특히 당연락부의 책임자인 리효순이 군출신 강경파인 허봉학으로 교체된 후 북한은 1968년 1.21사태와 미첩보함 푸에블로(U. S. S. Pueblo)호 나포, 울진-삼척 사건, 그리고 1969년의 미국정보기 EC-121기 격추사건 등 공격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것은 종전의 수세적인 자세에서 공격적이고 돌발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남조선내의 혁명역량'을 고취 혹은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¹⁸⁷⁾ 이러한 자세의 전환은 김일성은 부정하지만 베트남의 춘계공세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⁸⁸⁾

이러한 군사력 증강과 실험적인 행동들이 특별한 성과가 없자 그 기회비용으로 잃게 된 경제침체가 부각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그 책임을 다시 군부에게 돌려 1968년에서 1969년에 걸쳐 군사적 강경노선을 주장했던 김광협(당비서 겸 부수상), 김창봉(민족보위상), 최광(인민군총참모장), 리영호(정치위원 해군제독), 석산(당비서 겸 사회안전상) 등을 숙청시켰다.¹⁸⁹⁾ 그 이유로 제시된 것이 고성능 무기체계만을 선호하여 물자를 낭비하였으며 군부안에 분파를 형성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김일성은 다시 인민들의 사회주의적 열의를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한의 박정희체제와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선언하고 군사비지출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 군사비의 국가예산비중 30%를 꾸준히 줄여 1980년대말까지 14~12%선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남북한의 군사비지출 규모에 있어 북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도록 하여 1991년 현재 북한은 51억달러를 지출하는 데 비해 남한은 그 두 배에 달하는 105억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더우기 이는 GNP에 대한 군사비 부담률이 남한은 3.8%에 불과한데 비해 북한은 22.4%나 되는 것으로 아직도 북한의 경제에서 군사비부담은 막중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보다도 앞설 전망이다.¹⁹⁰⁾ 북한은 계속 군비경쟁으

187) 함택영, 리영희외, 앞의 책, p. 99.

188)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앞의 책, p. 203.

189) 이외에도 빨치산 출신 장군들인 최민철, 정병갑, 김자린, 김창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앞의 책, p. 208; 함택영, 리영희외, 앞의 책, p. 101.

190) 실제로 현재까지의 자료로만 하더라도 남한의 군사비누계는 북한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울곡사건비리」와 같이 순수하게

로 국민경제를 파탄시킬 것인지 아니면 '남조선 혁명론'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을 할 것인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다.

더우기 최근에는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그나마 명맥이 유지되던 무역이 대폭 감소하고¹⁹¹⁾ 소련과 중국이 경화결재를 요구함에 따라 북한은 더욱 고립과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이후 67~69년간 군사비의 국가예산비중 31.3%를 꾸준히 줄여 1988년 12.1%까지 감소시켰다.

3. 북한핵무장의 배경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부각된 북한의 핵무장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측되어 왔던 일이며 이는 앞에서 논의되었듯이 북한이 경제침체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군사비를 감축하고 대남 군사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장 동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으로 구분되는데¹⁹²⁾ 정치적인 동기는 대외적으로 외교적인 힘을 행사하여 주변국

군사비로 투자되지 못하고 유용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사비 누계 비교 (단위: 억달러)

년 도	남 한	북 한
1960	0.66	1.42
65	6.66	26.02
70	17.06	65.32
75	45.86	133.42
80	161.86	267.72
85	339.36	441.12
90	702.96	661.32

자료: Sang-Woo Rhee, *Security and Unification of Korea* (Seoul: Sogang Univ. Press, 1984);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 나남, 1992), p. 209; 통일원, 「남북한경제 현황비교」(각년판); 서진영(편), 「현대중국과 북한40년 -자료와 통계-」(서울: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1989), p. 306.

191) 1991년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무역은 90년보다 68.1%나 감소했으며 무역상대국 순위도 종래의 소련-중국-일본-독일에서 중국-일본-구소련-멕시코의 순으로 바뀌었다. 「동아일보」(1992. 6. 29)

192) 김태우, “한반도 비핵화의 허와 실” 「통일문제연구」 제3권3호 (1991 가을); 김민석 외, “북한의 핵무기개발 실상과 저의” 「통일문제연구」 제3권4호 (1991 겨울).

가에 대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민족적인 우월감을 내세우려는 것이며 군사적인 동기는 적대국에 대하여 군사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경제적인 동기는 그 개발과정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거나 핵무기 개발 또는 개발된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아 상대국가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의도는 3단계로 나누어 고찰될 수 있는데 그 첫 단계는 1956년 소련 드브나연구소 창설을 위한 협정체결에서부터 1974년 IAEA가입 이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원자력개발 초기단계로서 드브나연구소에 많은 인원을 파견하여 훈련을 시키고 제1원자로를 도입 가동하며 영변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초기 북한의 원자력개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시기이다. 그 중에서 1965년 착공해서 1969년 중반에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완공된 제1원자로는 정상출력 4MW, 최대열출력 8MW의 순수한 연구용 원자로로서 20~80%의 농축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데 대부분 소련으로부터 수입되고 사용된 핵연료는 다시 소련으로 회수된다. 그리고 기술지원, 핵연료공급, 관련시설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IAEA의 안전조치협정에 준하고 있고¹⁹³⁾ IAEA의 사찰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원자로가 연구용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¹⁹⁴⁾

북한 핵무장의 2단계는 1974년부터 1993년 3월 NPT로부터 탈퇴를 선언하기까지의 기간을 들 수 있다. 이 기간동안에 북한은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그리고 1985년 12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동시에 1992년 1월에는 핵안전협정에 가입하는 등 국제환경과의 타협속에서 원자로를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¹⁹⁵⁾

물론 이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1975년 남한의 박정희대통령이 당시 미국의 주한미군철수론에 대해 “한국은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것이며 또한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의 하나로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론」을 제시하며 실제적으로는 핵개발의 의욕을 나타냈다.¹⁹⁶⁾

193) 이 원자로에 대해서는 1977년 12월 14일 IAEA와 안전조치협정(INFCIRC/252)을 체결하였다. 김민석 외, 앞의 논문, p.134.

194) 송영선, “한반도의 핵” 「신동아」(1991.6), p.209.

195) 북한은 1974년 7월에 IAEA에 가입하여 1979~81년간 IAEA이사국으로 피선되기도 하였으며 한국이 IAEA에 국장급을 파견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대표부를 상주시켜 원자력외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원자로의 건설은 1980년대초에 계획되고 1987년 2월에 건설된 최대출력 30MW의 제2원자로와 1985년부터 건설되는 50~200MW의 제3원자로가 있는데 제3원자로는 1994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다. 제2원자력은 영변에 건설되었는데 1958년에 프랑스에서 핵무기개발을 위해 사용하다가 폐기한 G-1과 유사한 것이다. 프랑스의 G-1형 원자로는 한 때 약 10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실적이 있으며 플루토늄추출을 위한 목적외에는 비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제2원자로는 최대출력으로 가동될 경우에는 연간 11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정상가동시에는 약 6kg의 플루토늄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⁹⁷⁾ 또한 건설중인 제3원자로도 프랑스에서 사용하다 폐기한 G-2형과 유사한데 최대출력으로 가동시 연간 50kg정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⁹⁸⁾

이상의 원자로를 성능과 제원별로 살펴보면 <표10>과 같다.¹⁹⁹⁾

끝으로 제3단계는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고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외부에 밝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생존을 책임져 줄 확실한 보장이 없으며 따라서 북한은 내부의 핵무장여부를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의 군사력이 미국과 남한에 알려질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시점은 내부적으로 핵무장이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판단보다는 1991년 「걸프사태」이후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 위기상황에까지 몰려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소련의 붕괴이후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걸프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걸프사태」이후 북한에 대한 핵무장의 우려가 갑작스럽게 증폭되어 나타났다. 주한미군의 한 간부는 “미국이 이라크와 개전하기로 결심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이라크의 핵무기개발이었다”고 하면서 “걸프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그 여세를 몰아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를 본격적으로

196) 1970년대에는 일본과 프랑스, 1980년대초에는 서독과 원전도입을 위해 교섭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985년에는 소련으로부터 원전을 도입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으나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군사첩보위성 KH-11이 북한의 원자로건설을 포착하여 소련에 통보하자 소련은 북한으로 하여금 NPT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1985년 12월 12일 NPT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NPT가입이후 18개월이내에 IAEA와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전면안전조치협정은 1992년 1월에야 체결되었다.

197) 남북고위급회담의 이동북대변인은 “제2원자로에서 5년간 플가동했을 경우 현재 130~150톤정도의 핵폐기물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5kg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2.5.29)

198) 송영선, “한반도의 핵” 「신동아」(1991.6) ;이민석외, 앞의 논문, 참조.

〈표10〉 북한 원자로의 성능 및 제원

구 분		제1원자로	제2원자로	제3원자로	발전용원자로
일반사항	소재지	영 변	영 변	영 변	함남 신포
	완공년도	1965년완공	1987.10가동	1994완공예정	도입계약(1985)
	개발/기술제원	소 련	자체건설	자체건설	소 련
제원	원자로명	IRT-DPRK	G-1형모방	G-2형모방	VVER-440X4
	용 도	연구용	플루토늄 생산용	플루토늄 생산용	발전용
	열출력	정상 4MW 최대 8MW	최대 30MW	50~200MW	열 1,375MW 전기 440MW
특성	핵연료 (U-235비율)	농축우라늄 (10~20%)	천연우라늄 (0.7%)	천연우라늄 (0.7%)	농축우라늄 (3.5%)
	감속재	중류수	흑 연	흑 연	경 수
	냉각재	중류수	공 기	이산화탄소	경 수
	플루토늄생산 가능추정치	(소련환수)	최대: 년11kg 정상: 년 6kg	최대: 년50kg	
비 고		IAEA사찰기 록(1988.5, 1989.6)	-핵연료자급 가능 -프랑스에서 핵무기개발시 사용	-핵연료 자급 가능 -프랑스에서 핵무기개발시 사용	-안전조치 서명조건으로 건설

*자료출처: 김민석 외, “북한의 핵무기개발 실상과 저의” 「통일문제연구」 제3권4호 (1991 겨울), 135쪽.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으며²⁰⁰⁾ 실제로 「결프사태」가 끝나자마자 이종구국방부장관은 91년 4월 12일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²⁰¹⁾

결국 북한은 소련이 붕괴된 후 국제여론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쏠리자 1992년 1월 7일 핵안전협정에 가입했으나 IAEA의 사찰이 여의치 않자 1993년 3월 12일 다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강경한 정책을 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199) 북한 원자력공업부 최정순외사국장은 1992년 4월 15일 “영변일대에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원자로가 5개이며 황해도 평산과 평북박천 2개소에 우라늄제련시설이 건설돼 가동중이고 평양-영변사이의 순천에서도 우라늄광산을 개발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2. 4. 15)

200) 조갑제, “북한 핵시설 폭격론” 「월간조선」(1991. 3), p.119.

201) 「조선일보」 (1991. 4. 13)

해석되지만 최소한 핵무장에 근접해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고품실험을 70여차례나 했다는 분석이 있고²⁰²⁾ 핵폭발장치를 개발한 것 같다는 보고도 있으며²⁰³⁾ 1993년 5월말에는 사정거리가 1000km인 「로동1호」를 시험발사함으로써 핵적재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 ²⁰⁴⁾ 또한 구소련의 KGB비밀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는 북한이 1992년에 소련으로부터 플루토늄을 56kg 밀반입했음을 밝히고 있다. ²⁰⁵⁾

만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일 경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이유는 김정일이 군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한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무장준비가 IAEA에게 노출되어 국제적인 저지를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핵무장의 실상은 북한에 무력적으로 개입하고 싶어하는 서방의 군산복합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되거나 과장될 여지가 있음은 사실이다. ²⁰⁶⁾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위기의 관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음은 틀림없다. 경제적인 면에서 핵무장은 플루토늄탄으로 개발할 경우 핵개발 소요비용은 북한의 연간 군사비중 1~2%정도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래식 군비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으로 해서 경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²⁰⁷⁾

이는 북한이 GNP의 20~25%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 실정임에도 군사력대비는 GNP의 5%만을 쓰고 있는 남한측이 우위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 개발은 남한과의 군비경쟁이라는 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VI. 결 론

202) 「주간조선」(1993. 3. 25), p.10.

203) 「동아일보」(1993. 2. 20)

204) 「조선일보」(1993. 6. 12)

205) 「조선일보」(1993. 3. 3)

206) 독일의 한 신문에서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보도되었다. 「조선일보」(1993. 3. 3):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서방에서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은 「한국일보」(1992. 6. 23), 「동아일보」(1991. 5. 18).

207) 경제적으로 원자료를 제외하고 재처리, 설계 및 제작,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추정비용이 약 2억3백여만달러정도되는데 이는 1987~1995년간의 추정되는 군사비 대 개발비용의 0.5%로서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송영선, 「북한의 핵개발, 진상과 속셈」 「신동아」(1990. 8), p. 213.

해석되지만 최소한 핵무장에 근접해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고품실험을 70여차례나 했다는 분석이 있고²⁰²⁾ 핵폭발장치를 개발한 것 같다는 보고도 있으며²⁰³⁾ 1993년 5월말에는 사정거리가 1000km인 「로동1호」를 시험발사함으로써 핵적재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였다. ²⁰⁴⁾ 또한 구소련의 KGB비밀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는 북한이 1992년에 소련으로부터 플루토늄을 56kg 밀반입했음을 밝히고 있다. ²⁰⁵⁾

만일 이러한 보도가 사실일 경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이유는 김정일이 군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한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무장준비가 IAEA에게 노출되어 국제적인 저지를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핵무장의 실상은 북한에 무력적으로 개입하고 싶어하는 서방의 군산복합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되거나 과장될 여지가 있음은 사실이다. ²⁰⁶⁾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위기의 관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음은 틀림없다. 경제적인 면에서 핵무장은 플루토늄탄으로 개발할 경우 핵개발 소요비용은 북한의 연간 군사비중 1~2%정도에 불과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래식 군비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으로 해서 경제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²⁰⁷⁾

이는 북한이 GNP의 20~25%를 국방비로 쓰고 있는 실정임에도 군사력대비는 GNP의 5%만을 쓰고 있는 남한측이 우위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 개발은 남한과의 군비경쟁이라는 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VI. 결 론

202) 「주간조선」 (1993. 3. 25), p.10.

203) 「동아일보」 (1993. 2. 20)

204) 「조선일보」 (1993. 6. 12)

205) 「조선일보」 (1993. 3. 3)

206) 독일의 한 신문에서는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보도되었다. 「조선일보」 (1993. 3. 3):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서방에서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은 「한국일보」 (1992. 6. 23), 「동아일보」 (1991. 5. 18).

207) 경제적으로 원자료를 제외하고 재처리, 설계 및 제작,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추정비용이 약 2억3백여만달러정도되는데 이는 1987~1995년간의 추정되는 군사비 대 개발비용의 0.5%로서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송영선, 「북한의 핵개발, 진상과 속셈」 「신동아」 (1990. 8), p. 213.

1.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현존 사회주의체제로서 북한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산주의사회와 그 이행기로서 북한체제가 갖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위기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주장했던 이상형과 현실적 적용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 혁명이 반봉건적 또는 식민지적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사회주의체제로서 북한의 결정적인 위기요인일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고도발전은 생산력의 발전을 보장하고 물질적 풍요는 인간성을 더이상 소유라는 면에 집착하지 않아도 될 소양을 발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계적 혁명이 아닌 일부분의 사회주의 혁명은 대외적으로 경쟁이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이는 불가피하게 사회주의적 인간관계라는 측면보다 생산력발전이라는 면을 강조하게 하였다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수립 유지와 외부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와 경쟁한다는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서도 자본주의적 생산력을 압도할만한 생산력발전을 기해야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경제력과 군사력 양면에서 북한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경험은 혁명초기에 괄목할만한 생산력발전을 이루지만 후기에 갈수록 경제침체가 심해 결국 자본주의적 개혁이나 붕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김일성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자본주의보다도 생산력발전을 이룩하는데 유리하다”는 논리는 아무리 남한의 빈부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는 이미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에서 1970년대부터는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고 그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그들이 지향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달성보다는 빈곤의 평등이라는 의미밖에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더우기

과거에 보였던 동원의 수단으로서 '규범적 수단'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강제적 수단'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은²⁰⁸⁾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이나 혁명성이 일반대중에게 지지를 받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11> 남북한 1인당 GNP비교 (단위는 US달러)

년도	남한	북한
1960	79	177
63	100	225
66	125	255
69	210	239
72	318	422
75	590	751
78	1392	956
81	1734	1116
84	2158	1018
87	3110	1117
90	5659	1064
91	6498	1038

자료: 황의각, 「북한경제론」 (서울:나남, 1992), pp.142~143; 「조선일보」 (1991. 8. 29); 「한국일보」 (1992. 8. 13); 「조선일보」 (1993. 6. 8)

둘째, 북한경제의 침체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첨단기술과 자본 등을 공급할 수 없음으로 인해 남한보다 상대적인 열세에 놓여있게 되었다. 이는 단지 「남조선 혁명」의 포기를 의미할 뿐 아니라 유사시에는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1991년의 경우 북한의 실질군사비 지출은 53억3천만달러로서 남한의 1백9억3천만달러에 비해 48.8%에 불과했다.²⁰⁹⁾

셋째, 북한의 경제침체와 그로 인한 군사적 위축은 결국 김일성체제의 정당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며 이는 바로 김일성사후, 또는 분쟁의 계기가 발생하였을 때 반김일성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이론적 정당성이 될 것이다. 즉 공산주의 사회 달성을 위해서나 북한체제의 생존유지를 위해서는 생산력발전을 위한 정치경제적 개혁이나 개방이 필수적일 것이며 반김일성세력은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식량과 연료가 부족한 일반민중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서울을 방문했던 연형묵총리가 이러한 논리로서 개방을 건의했다가 자강도 당비서로 좌천되었다는 보도는 이러한

208) 유엔(UN)인권위원회에서 라미시빌러시아대표는 “최근 북한내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는 사람은 북한전역에 산재한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인민의 20%를 「믿을 수 없는 계층」으로 분류, 24시간 감시통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 (1993. 3. 5)

209) 「조선일보」 (1991. 4. 13)

가능성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²¹⁰⁾

이러한 위기에 따른 변화는 점진적이기 보다는 급진적일 가능성이 있다. 1989년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거대한 실패(The Grand Failure)」로서 머지않아 사회주의권이 붕괴할 것을 예언하였고 이는 바로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동구의 개방, 개혁정책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브레진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소련의 위기수준(crisis level)은 폴란드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모잠비크보다 높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체코나 큐바, 앙골라의 수준보다 안정적이었다.

특히 서독으로 흡수통합된 동독이나 차우세스코가 처형된 루마니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위기지표는 각각 7, 18, 22를 보여 사회주의의 변화는 위기지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개혁정책에 의해서도 급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이상의 북한체제의 위기요인을 살펴 볼 때 북한의 핵무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는 핵무장을 통해서 김일성체제가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이데올로기를 수정함이 없이 경제와 군사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핵문제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과 서방측에게는 핵무장카드로 경제지원문제를 협상하며 미국의 핵위협에 대한 보호를 국제적인 관심속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를 살펴보면 있어 동원체제적 접근법은 상당히 유용성이 있었다. 이는 북한의 전반적 위기 상황이 김일성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해 경제, 군사, 정치적 분야에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2. 정책적 제안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된 후 남한에는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으며 동시에 「동서독통일」의 교훈은 성급한 통일이 오히려 남한에 무거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계의 의견까지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남한의 국민이 과거와 다르게 통일을 감상적으로 보지않고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있다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북한내부에 대한 월남귀순자나 방문객들의 의견에 따르면 최근 북한

210) 「조선일보」 (1993. 8. 8)

〈표12〉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위기지표

	소련	중국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베트남	큐바	북한	앙골라	모잠비크	에디오피아
대중의 사회주의에 대한 실망	1	2	1	3	2	3	3	1	2	2	3	1	3	3	3
미래에 대한 비관	2	0	1	3	2	3	3	1	2	2	3	2	3	3	3
생활수준의 낙후성	2	0	1	3	2	2	3	1	3	3	3	2	3	3	3
공산당에 대한 불신	2	0	0	3	2	2	3	1	2	1	1	0	1	3	1
종교활동의 증가	1	0	0	3	1	1	0	0	1	0	1	0	0	0	1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간의 충돌	1	0	1	3	2	3	2	1	3	1	1	1	2	1	2
경제적 사유화의 확대	1	2	1	2	1	3	0	0	2	1	0	0	1	1	0
정치적 반대에 대한 사회활동 증가	1	1	1	3	1	2	0	0	2	0	0	0	3	3	2
아래로부터의 공개적인 정치적 다원주의 요구	2	2	0	3	1	3	1	0	3	0	1	0	2	2	2
인권에 대해 수세적인 체제	2	1	1	1	2	1	3	1	2	2	2	2	1	2	3
국가적 수준	15	8	7	27	16	23	18	6	22	12	15	8	19	21	20

지표: 3=매우 강함, 2=강하다, 1=그저그렇다, 0=그렇지 않다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10이하= 위기와는 아직 멀다 -- 4개국
 10~19 = 위기적 ----- 6개국
 19이상= 심각한 위기상황----- 5개국

자료: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Charles Scribner's Sons, 1989), p. 234.

은 미국과 남한에 대한 중요심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동시에 「동서독방식」의 통일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강경정책에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의 내부적 위기요인을 미국과 남한에 돌리려는 김일성체제의 의도에 의한 것이지만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미국과 남한의 「북한핵시설폭격론」에도 자극된 것임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남한에 대한 중요심과 북한인민들의 식량과 연료부족, 생활필수품난 등의 생활고는 심지어 「전쟁옹호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쟁옹호론의 예로서 “남한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면 남한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고 지면 김일성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북한내부에서 김일성에 대한 지지는 상당하며 70년대이후 초래된 경제침체는 70년대이후 부각된 김정일에 대한 불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김일성사후 김정일체제가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끝으로 이러한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해 남한정부는 두가지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80년대초 레이건이 소련에 취했던 강경책과 같이 계속 북한에 대해 군사적 위기감을 조장함으로써 해서 군사부문을 동원상태하에 두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군대는 평시 약 3분의 1이 경제부문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군대를 전시동원상태로 묶어 둘 경우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국민경제를 악화시켜 김일성체제를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장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남한정부가 취하고 있는 강경책은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일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에는 미국과 남한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더욱 적극적일 수가 있고 이는 통일의 시기를 더욱 급진적으로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이러한 강경책은 현재 권력의 정점에 접근하고 있는 김정일에게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도 또한 제기하고 있다. 현재 김정일은 김일성이 부여한 과중한 직책을 접하고 있지만 그만한 업적과 정통성이 없어 내부적인 불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적 위기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협상을 위한 국부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된다면 남북한전체가 생존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은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많은 생화학탄과 중거리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에 어느 쪽의 승리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직 승리의 의미는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의 것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 화해 협력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현재상태에서 북한의 핵무장문제는 별개로 하고 북한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이용해서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화해 협력안은 북한의 핵무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 남한도 핵개발에 있어 미국과 서방에 대한 입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면이 있으며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김일성체제보다는 일반 대중들에게 남한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일고있는 동서독통 일방식에 대한 거부와 남한국민들의 「동서독통일방식」에 대한 염려도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유화모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과의 교류협력강화는 북한내부의 물질적 유인을 증가시키고 정치제도적 자유화와 분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점차 남북한이 제도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3단계3기조통일방안」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제 북한과의 대결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통일이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4강대국들은 이미 핵무장을 하고 있거나 일본과 같이 언제든지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다.²¹¹⁾ 이러한 상황속에서 남북한만이 비핵화로 남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이 단순히 한민족만이 핵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하나만 강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남한이나 북한의 핵무장은 아주 위협스러운 것이지만 만일 북한이 강력한 핵무장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만일 핵무장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기회에 다시 핵무장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통일이후의 한민족의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11) 일본은 2010년까지 약 85톤의 플루토늄을 비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미 1992년 프랑스로부터 1톤의 플루토늄을 들여왔다. 앞으로 10년간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들여올 플루토늄 30톤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거의 5000발 만들 수 있는 양이기도 하다. 「조선일보」(1992.11.17); 김민석, 김태우, 「일본의 핵실력」 「신동아」(1992.10), pp.404~414; 이해찬, 「일본핵무기개발의 현장 로카쇼무라를 가다」 「말」(1991.12), pp.108~113 참조.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이 곧 북한의 붕괴를 예방하고 통일을 요원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소련이 붕괴하고 동독이 서독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핵무장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는 심각한 것이며 현재는 핵무장과 김일성의 존재로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김일성의 사후 북한은 크게 동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일반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남한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며 이는 바로 현재의 남한정부가 취해야 될 정책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북한의 핵무장을 예방하고 남북교류를 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핵무장의지를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핵무장문제를 접어두고라도 남북한 개방과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김일성체제와 북한일반대중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라 본다.

(1991 겨울).

김민석, 김태우, “일본의 핵실력”, 「신동아」(1992.10)

김병원, 조희선, “평양축전을 통한 북한의 대중동원체제활용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6집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0)

「김일성저작선집」 전5권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한울, 1987)

「김정일저작선」 (서울: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2)

김태우, “한반도 비핵화의 허와 실” 「통일문제연구」 제3권3호 (1991 가을)

나탈리아 바자노바, 「기रो에 선 북한경제」 (서울:한국경제신문사, 1992)

도홍렬, “북한사회의 동원체제와 ‘사상’우선의 한계” 「북한」 185(1985, 9)

都興烈, “北韓社會의 開放化 要因과 展望” 「統一論叢」 제4권제1호 (국토통일원, 1984)

레닌 저, 이민희 편역, 「좌우익기회주의연구」 (서울:아침, 1988)

「민주조선」 (평양)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자료모음:동구사회주의 진로를 둘러싼 변혁운동내의 대논쟁- 사회주의배신인가, 새로운 혁명인가?」 (서울:1990)

朴榮浩, “북한학자들이 말하는 오늘의 북한경제” 「신동아」 (1990. 9)

방영준, “북한정치체제의 변화전망” 「새물결」 (1990 가을호) (자유평론사)

북한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서울:힘, 1988)

「북한조선노동당대회주요문헌집」 (서울:돌베개, 1988)

사회과학출판사, 「정치경제학연구의 몇가지 문제」 (평양:1988)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서울:풀빛, 1990)

서대숙 지음, 서주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청계연구소, 1989)

서울대 사회주의연구팀, 「사회주의개혁과 북한」 (서울:형성사, 1991)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회주의의 이론, 역사, 현실」 (서울:민맥, 1991)

서진영 (편), 「현대중국과 북한40년 -자료와 통계-」 (서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송두울, “사회주의의 위기와 한반도” 「사회와 사상」 제17호 (1990.1)

송영선, “한반도의 핵” 「신동아」(1991.6)

송영선, “북한의 핵개발, 진상과 속셈” 「신동아」 (1990.8)

J. 스탈린, “L. D. 야로센코 동지의 오류에 관하여”, 서중건 옮김, 「스탈린선

- 집 2」(서울:전진,1990)
- B.V.아나니치, “10월은 역사의 전환점이었는가? 러시아혁명의 해석변화: 사회주의체제의 기원과 가능한 대안적 발전경로의 문제”(서울:서울대학교 소련 동구연구소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0)
- 安秉永, 「社會主義諸國의 經濟改革이 共產主義 理念 및 社會體制 變化에 미친 影響」(서울:국토통일원,1986.12)
- 안병영, 「既存 統一 및 北韓關係研究의 主題別, 方法論別 評價 및 發展方向 定立」(서울: 국토통일원,1977)
- 안병영, “북한연구의 방법론” 「현대공산주의연구」(서울:한길사,1982)
- 엘렌 브룬, 재퀴스 허쉬 지음, 김해성 옮김, 「사회주의 북한-북한경제발전 연구」(서울:지평,1988)
- 월간조선편집부, 「북한, 그 충격의 실상」(서울:조선일보사,1991)
-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5권 (서울:백산,1988)
- 李汪宰, “북한정치체계에 변화에 관한 연구”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7집 (1978)
- 이명남, “공산주의 정치연구의 분석모델”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7집 (1978)
- 이문용, “북한정치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제4권제2호(1978)
- 李乘龍, “南北韓 經濟力 隔差의 現況과 展望” 「統一政策」 제4권제1호 (평화통일연구소,1978)
- Sang-Woo Rhee, *Security and Unification of Korea* (Seoul:Sogang Univ. Press,1984)
- 李相輝, 「북한의 동원체제에 관한 연구: 이념, 원칙, 수단을 중심으로」(서강대박사학위논문,1992.2)
- 이 수훈, 이 종석외,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1991)
- 이용필 (편), 「북한정치체제」(서울:교육과학사,1985)
- 이정수, “북한의 김정일후계체제의 동원형태” 「북한」 190권 (1987.10)
- 李宗夏, “北韓과 東歐와의 體制比較” 「統一政策」 제3권 제3호 (평화통일연구소,1977)
- 이태욱 (편), 「북한의 경제」(서울:을유문화사,1990)
- 이해찬, “일본핵무기개발의 현장 로카소무라를 가다” 「말」 (1991.12)
- 李 浩, “北韓經濟의 構造的 矛盾診斷”, 「統一政策」 제2권 제2호 (국토통일

- 원, 1976. 7)
- 임양택, “북한경제의 개방 및 개혁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1호, (서울: 통일원, 1991)
- 全寅永, “북한의 개방, 불가피하다” 「신동아」 (1990. 9)
- 鄭甲泳, “북한경제는 어디서 막혀있는가” 「신동아」 (1990. 9)
-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0)
- 鄭錫弘, “北韓體制的 問題點과 3大革命理論” 「統一政策」 제6권 제1호 (평화 통일연구소, 1980)
- 정세현, “북한과 중공의 군중노선 비교연구”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1집 (1977)
- 鄭台煥, “北韓의 政治와 社會變動” 「亞細亞研究」 제30권 제2호(1987)
- 정한구, “북한정치체계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와 동원” 「자유아카데미연구논총」 제7집 (1978),
- 조갑제, “북한 핵시설 폭격론” 「월간조선」(1991. 3)
- 趙明均, 「社會主義國家의 經濟改革 - 東歐諸國 및 中共의 經濟改革 推進過程과 北韓의 經濟改革 可能性을 中心으로-」 (서울: 국토통일원, 1985)
- 「조선중앙년감」 (1963~1990)
- 「중요문헌집」 (서울: 별, 1992)
- 최성, (편),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 (서울: 학민사, 1990)
- Kaufman, Richard F., “Economic Reform and the Soviet Military”, 「蘇聯과 東歐의 經濟政策變化」(서울: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89)
- Cumings, Bruce, “한반도 평화의 장애요인”, (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 통일문제연구소 엮음, 「북한경제자료집」 (1989)
- 통일원, 「92북한개요」 (서울, 1993)
- 통일원, 「남북한경제현황비교」(각년판)
- 통일조선신문사, 「통일조선년감」(1967~68)
- Pye, Lucian W., (ed.), *Crises and Sequences in Political Development*;
민준기, 신정현, (공역), 「근대화와 정치발전 - 정치위기의 극복-」,
(서울: 법문사, 1982)
- P.N. 페도시에프 외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논쟁사분과 옮김, 「페레스트로이카와 철학논쟁」 (서울: 녹진, 1990)
- 폴 그레고리, 로버트 스튜어트 지음, 한종만의 옮김, 「러시아 소련 독립국

- 가 연합경제의 구조와 전망」(서울:열린책들,1992)
- 폴 케네디 저, 이일수, 전남석, 황건 역, 「강대국의 흥망」(서울:한국경제신문사,1991)
- 하영선, (편), 「한반도군비경쟁의 재인식-전쟁에서 평화로-」(서울:인간사랑,1988)
- 학술단체협의회, 「사회주의개혁과 한반도」(서울:한울,1990)
- 함택영, “주체사상과 북한의 국방정책”, 양재인 외, 「북한의 정치이념:주체사상」(서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1990)
- 함택영, 리영희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1992)
-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편),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조선의 경제-」(광주,1988)
- 황의각, 「북한경제론」(서울:나남,1992)

<국외문헌>

- Amin, S., “The Future of Socialism” *MONTHLY REVIEW* Vol.42 No.3 (July-August 1990)
- Apter, David E, *The Politics of Modernization*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1965)
- Arblaster, Anthony, *The Rise and Decline of Western Liberalism* (New York:Basil Blackwell,1984)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2nd ed. (New York:Meridian Books,1958)
- Armstrong, John A., “Communist Political Systems as Vehicles for Modernization,” in Monte Palmer and Larry Stern, (eds.), *Political Development in Changing Societies* (Lexington: D.C.Heath,1971)
- Arthur, Jonathan, *Socialism in the Soviet Union* (Chicago:Workers Press,1977)
- Bauman, Zygmunt, “Twenty Years After:The Crisis of Soviet-Type Systems” *Problems of Communism*, Vol.20 (November-December 1971)
- Becker, A.S., “Gorbachev’s Defense-Economic Dilemma”, in

-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Gorbachev's Economic Plan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7)
- Benoit, Emile, *Defense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Boston: C. Heath & Co., 1973)
- Benjamin, Roger W., and John H. Kautsky, "Communism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LXII, No. 1 (March 1968)
- Bergson, A., "Comparative Productivity: The USSR, Eastern Europe, and the Wes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 3 (June 1987)
- Bertram, Christopher,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Historical Materialism" *NEW LEFT REVIEW*, 190 (1991)
- Botchway, Francis A., (ed.), *Modernization: Economic and Political Transformation of Society* (Berkeley: McCutchan, 1970)
- Bottomore, Tom, (eds.),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3)
- Bracher, Karl Dietrich, "The Disputed Concept of Totalitarianism - Experience and Actuality-" Ernest A. Menze, (ed.), *Totalitarianism Reconsidered* (New York: Kennika Press, 1981)
- Brzezinski, Zbigniew, "Dysfunctional Totalitarianism," in Klaus von Beyme, (ed.), *Theorie und Politik* (The Hague: Nijhoff, 1971)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Failure-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 Bunce, Valerie and John M. Echols III, "From Soviet Studies to Comparative Politics: The Unfinished Revolution", *Soviet Studies*, Vol. XXXI, No. 1, (January 1979), pp.
- Burch, Betty B., (ed.), *Dictatorship and Totalitarianism: Selected Readings* (New York: D. Van Nostrand Company, Inc., 1964)
- Chang-Joo Ra and Byeong-Hoon Baek, (eds.), *Comparative Communist Studies: Scope and Methods*, (Seoul: Dae Young Moonwhasa, 1988)
-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Korea: The Economic Rac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1978)
- Cohen, S.F., *Rethinking the Soviet Experi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Cohen, Lenard J. and Jane P. Shapiro, "Introduction", in Cohen and Shapiro, (eds.),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74)
-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Honolulu: The Univ. Press of Hawaii, 1981)
- Dumont, Rene, *The Hungry Future* (London: Deutsch, 1969)
- Ebenstein, William, and Edwin Fogelman, *Today's Isms : Communism, Fascism, Capitalism, Socialism*, 9th ed. (Englewood-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2)
- Eckstein, Alexander,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World Politics*, Vol. XXII, No. 4 (July 1970)
- Etzioni, Amitai, *The Active Society - A Theory of Societal and Political Process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 Fainsod, Merle, *How Russia Is Ruled*, rev. ed. (Cambridge, Mass., 1963)
- Feuer, Lewis S., (ed.), *Marx and Engels -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New York: A Doubleday Anchor Original, 1959)
- Field, Mark G., "Symposium on the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n Socialist Countries" *Newsletter on Comparative Communist Studies*, Vol. VI, No. 3 (May 1973)
- Field, Mark G., *Soci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in Communist Societies*, (Baltimore, Maryl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6)
- Fields, Gary, "Paris, Planning and Perestroika (1789-1989) - Soviet Workers Re-enter History" *NEW POLITICS*, (Winter 1990)
- FitzGerald, Mary C., "The Soviet Military on SDI"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19, Nos. 3/4, (Autumn/Winter 1986)
- Fleron, Frederic J., Jr., "Soviet Area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in Communist Studies," in Frederic J. Fleron, Jr., (ed.), *Communist Studies and the*

- Social Sciences: Essays on Methodology and Empirical Theory* (Chicago:Rand McNally & Company,1969)
- Friedman, Edward,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Leninist States:The Case of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22, No.2/3 (Summer/Autumn 1989)
- Friedrich, Carl J., and Zbigniew K.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New York: Praeger Publishers,1965)
- Friedrich, Carl J., "In Defence of a Concept," *Government and Opposition* (Spring 1969)
- Friedrich, Carl J.,(ed.), *Totalitarianism* (Cambridge:Harvard Universty Press,1954)
- Friedrich, Carl, Michael Curtis, and Benzamin R.Barber, *Totalitarianism in Perspective: Three Views* (New York:Praeger Publishers,1969)
- Gati, Charles, "Modernization and Communist Power in Hungary," *East European Quarterly*, Vol.V, No.3 (September 1971)
- Godwin, Paul H.B., "Communist Systems and Modernization: Sources of Political Crises",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VI, Nos.1 & 2, (Spring/Summer 1973)
- Gorbachev, M. S.,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Harper & Row Publishers,1987)
- Green, D., and C.Higgins, *Sovmod I: A MacroEconometric Model of the Soviet Union* (New York:Academic Press,1977)
- Greiffenhagen, Martin,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m in Political Theory" in Ernest A.Menze,(ed.), *Totalitarianism Reconsidered* (New York:Kennika Press,1981)
- Groth, A.J., "The 'Isms' in Totalitarianis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LVII, No.4 (December 1964)
- Halliday, Jon, "The Economies of North and South Korea", in John Sullivan and Roberta Foss, *Two Koreas-One Future?* (Boston:Univ. Press of America,1987)
- Halpern, Nina P.,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in Communist Systems:The Case of China",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 Vol. 22, No. 2/3, (Summer/Autumn 1989)
- Hildebrandt, G.G., *SDI and the Soviet Defense Burden* (Santa Monica, Cal.: Rand Corporation, 1988)
- Hollander, Paul, "Observations on Bureaucracy, Totalitarianis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Slavic Review*, Vol. XXVI, No. 2 (June 1967)
- Hough, Jerry, "The Soviet System: Petrification or Pluralism?" *Problems of Communism*, Vol. 12 (March-April 1972)
- Hough, Jerry, "The Bureaucratic Model and the Nature of the Soviet System," *Journal of Comparative Administration*, Vol. 5 (August 1973)
- Huntington, Samuel,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 1968)
- Huntington, Samuel P., and Jorge I. Dominguez, "Political Development" in Fre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3 - Macropolitical Theory* -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 IISS, *Military Balance 1970-1991* (London)
- Inkeles, Alex, "Models and Issues in the Analysis of Soviet Society," *Survey*, 60 (July 1966)
- Johnson, Chalmers,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0)
- Jowitt, Kenneth,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Rumania, 1944-196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 Kassof, Allen, "The Administered Society : Totalitarianism without Terror", *World Politics*, Vol. XVI, No. 4 (July 1964)
- Kautsky, John,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ationalism and Communism* (New York, 1962)
- Kautsky, John H.,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Moderniz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1)
- Kautsky, John, "Communism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Slavic Review*, Vol. XXVI, No. 1 (March 1967)

- Kornhauser, William,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Glencoe, Ill.:The Free Press, 1959)
- Lange, Oskar,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m," in Oskar Lange, (ed.), *Problems of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m* (New Delhi, 1965)
- Lane, David, *The Socialist Industrial State*, (London: Allen & Unwin, 1976)
- Lee, Chong-Sik, "Land Reform, Collectivisation, and the Peasants in North Korea", *The China Quarterly*, 14(April-June 1963)
- Lee, Pong S.,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n Peter Wiles, (ed.), *The New Communist Third World: An Essay in Political Economy* (London:Croom Helm, 1982)
- Leonhard, Wolfgang, *Three Faces of Marxism*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1974)
- Lichtheim, George, *Marxism: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London, 1961)
- Linden, Carl, *Khrushchev and the Soviet Leadership, 1957-1964* (Baltimore, Maryland, 1966)
- Linz, Juan J.,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Fre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 3 - Macropolitical Theory -*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5)
- Lowenthal, Richard, "Development vs. Utopia in Communist Policy",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 Lowenthal, Richard, "The Model of the Totalitarian State," i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Impact of the Russian Revolution 1917-1967*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 Ludwikowski, Rett R., *The Crisis of Communism: Its Meaning, Origins, and Phases* (New York: Pergamon, 1986)
- Marx, K., and F.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6)
- Marx, K., *Capital* Vol. III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6)

- Marx, K., *A Contribution to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International Publishers,1972)
- Mesa-Lago, Carmelo and Carl Beck, (eds.), *Comparative Socialist Systems: Essays on Politics and Economics* (Pittsburgh , Pa.: Univ. of Pittsburgh,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1975)
- Meyer, Alfred G., "USSR, Incorporated," and Robert C.Tucker, "The Quetion of Totalitarianism," in Donald W.Treadgold,(ed.), *The Development of the USSR: An Exchange of Views* (Seattle: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1964)
- Montias, J.M., "Modernization in Communist Countries: Some Questions of Methodology"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5, No.4, (Winter 1972)
- Moore, Barrington,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Mass.,1967)
- Nee, Victor, and David Stark, (eds.), *Remaking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alism, China and Eastern Europe* (Stanford, CA:Stanford University Press,1989)
- Neumann, Sigmund, *Permanent Revolution:Totalitarianism in the Age of International Civil War* (1965)
- Nove, Alec, and A.Newth, *The Soviet Middle East: A Model for Development?* (London:George Allen & Unwin,1967)
- O'brien, Patrick, "On the Adequacy of the Concept of Totalitarianis m,"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III, No.1 (January 1970)
- Odom, William, E., "A Dissenting View on the Group Approach to Soviet Politics," *World Politics*, Vol.28 (July 1976)
- Pirages, Dennis, *Modernization and Political-Tension Management: A Socialist Society in Perspective: Case Study of Poland* (New York:Praeger,1972)
- Radel, J.Lucian, *Roots of Totalitarianism:The Ideological Sources of Fascism, National Socialism, and Communism* (New York:Crane, Russak & Company,1975)
- REVIEW OF THE MONTH: All Eyes on SDI, *Monthly Review*, Vol.38, No.7

- (December 1986)
- Robinson, Joan, "Korean Miracle", *Monthly Review*, Vol.16 No.9
(January 1965)
- Scalapino, Robert A.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I: The Society*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2)
- Scalapino, Robert A. and Jun-Yop Kim, (eds.), *North Korea Today -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 of California, 1983)
- Schapiro, Leonard, *Totalitarianism* (London: Macmillan Press, 1972)
-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Schwartz, Benjamin, "China's Developmental Experience, 1949-72," in Michel Oksenberg, (ed.), *China's Developmental Experience, Proceedings in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Vol. XXXI, No.1 (March 1973)
- Schwartz, Benjamin, "Modernization and the Maoist Vision, Some Reflections on Chinese Communist Goals," *The China Quarterly*, No. 21 (January-March 1965)
- Sharlet, Robert, "The Soviet Union as a Developing Country: A Review Essay,"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 II, No.2 (January 1968)
- Skilling, H. Gordon, "Interest Groups and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XVII, No.3 (April 1966)
- Smith, Ronald P., "Military Expenditure and Investment in OECD countries, 1954-73,"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4, (1980)
- Smith, Ronald P., "Military Expenditure and Capitalism,"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1, (1977)
- Soper, S.P., *Totalitarianism: A Conceptual Approach*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1985)
- Spiro, Herbert J., "Totalitarianism"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McMillan & Free Press, 1968)
- Strong, Anna Louis, *Inside North Korea* (Montrose,

- Cal. :A.L.Strong, 1951)
- Tai-Sung An, "The Policy Aspects of the Chuche's Ideology: Mass Mobilization and the Economy" in *North Korea in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Dynasty* (Greenwood Press, 1983)
- Talmon, J.L., *The Origins of Totalitarian Democracy* (New York:Praeger, 1960)
- Thornton, Richard, "The Structure of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24 (July 1972)
- Tismaneau, Vladimir, *The Crisis of Marxist Ideology in Eastern Europe -The Poverty of Utopia-*(London:Routledge, 1988)
- Tucker, Robert C., "On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m", *World Politics*, Vol.XIX, No.2 (January 1967)
- Tucker, Robert C., "The Dictator and Totalitarianism" *World Politics*, Vol.XVII, No.4 (July 1965)
- Tucker, Robert C., "Towards a Comparative Politics of Movement-Regi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LV, No.2 (June 1961)
- Ulam, Adam, *The New Face of Soviet Totalitarianism*, (Cambridge, Mass.:Harvard Univ. Press, 1963)
- Wallace, Anthony,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Random House, 1961)
- Watnick, Morris, "The Appeal of Communism to the Peoples of Underdeveloped Areas," in Reinhard Bendix and Seymour Martin Lipset, *Class, Status, Power*, 2nd ed. (New York:The Free Press, 1966)
- Welch, William, "Totalitarianism:The Standard Critique Revised," *Rocky Mountain Social Science Journal*, Vol.10, No.2 (April 1973)
- Wilber, Charles K., *The Soviet Model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9)
- Wilczinsky, J., *The Economics of Socialism* (London:George Allen & Unwin, 1970)
- 小牧輝夫, "北朝鮮經濟の現状と展望", 小此木政夫 編, 「岐路に立つ北朝鮮」,

(東京:日本國際問題研究所,1988)

北韓 對南戰略의 變化 展望과 對處方案의 摸索

—대남전략의 지속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研究責任者 : 金 淵 珏 (서울大學校)

목 차

(요 약 문)

I. 緒 論	439
1. 問題의 提起	439
2. 研究의 方法과 構成	441
II. 對南戰略의 展開過程과 그 主要 內容	445
1. 用語問題와 接近方式의 選擇問題	445
2. 武力統一戰略：民主基地論	449
3. 南韓革命戰略：南韓革命論	450
4. “對話戰略”：祖國統一에 관한 理論	458
III. 對南戰略의 特徵	465
1. 好戰性의 一貫性과 守勢化로의 부분적 變化	465
2. 柔軟性	466
3. 非現實性	468
4. 對內用 ‘통일이데올로기’	469
5. 戰術上의 特徵	471
IV. 對南戰略의 決定要因	473
1. 약간의 一般論的 考察	473
2. “사람 중심”의 主體思想：對南戰略의 “基礎”	474
3. ‘主體的 政治體制’：好戰性의 뿌리	476
4. 內外 情勢의 變化와 북한 지도부의 情勢認識：守勢化의 원인	479

V. 今後 對南戰略 變化展望	491
1. 두 方向의 힘	491
2. 變化의 餘地와 限界	493
3. 變化의 大體的 方向과 內容	495
가. 전략의 兩極化	495
나. “ 대화전략 ”의 格上과 혁명전략의 事實상 拋棄	496
다. 非現實性 및 對內用 이데올로기化의 深化	497
VI. 結論：對處方案의 摸索	499
1. 하나의 原則：‘ 민주화=통일역량 강화 ’	499
2. 反통일적 요소의 清算	503
3. ‘ 힘 ’의 優位에 입각한 대북전략의 추진	505
〈 參考文獻 〉	509

북한 對南戰略의 변화 전망과 對處方案의 摸索

-대남전략의 지속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김 연 각 (서울대 강사)

요 약 문

(1) 이 논문의 목적은 앞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대남전략의 전개과정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대남전략의 몇가지 특징을 추출한다. 이어서 그러한 내용과 특징을 낳은 기원 내지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분석을 기초로 하여今後 대남전략의 변화를 가져올 두가지 힘을 확인하고, 그 힘에 의한 변화의 여지와 한계를 검토하며, 이러한 논의의 귀결로서 변화의 대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전망한다. 끝으로 전체 논의의 결론으로서 우리의 대처방안을 모색-제시한다.

전반적으로 이 논문은 앞으로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대남전략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제하고서 논의를 전개한다. 즉 앞으로 대남전략의 변화는 종래 보여 온 지속성과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한다. 연구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하며, 기존의 관련 연구나 분석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주요 1차 자료들을 직접 분석한다.

(2)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전략은 무력남침전략, 남한혁명전략, “대화전

략” 등 세가지 外見上 뚜렷이 구분되는 흐름을 보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력남침전략은 소위 “민주기시론”에, 남한혁명전략은 “남조선혁명론” 내지 “반제반봉건혁명론”에, 그리고 “대화전략”은 “조국통일에 관한 이론”에 각각 기초한 것이다. 시기별로 볼 때 이 세가지 전략은 각각 해방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1950년대 중반 이후 1960년대 말까지,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세가지 전략은 각기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상호 중첩적인 것들이다. 즉 남침전략---혁명전략---“대화전략”으로의 과정은 결코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 후퇴, 강조점의 이동, 혹은 전술적 變容이라는 견지에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의 대남전략은 혁명전략을 根幹으로 하면서 여전히 남침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대화전략” 쪽으로 강조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지금까지 대남전략의 ①가장 현저한 특징은 好戰性의 일관성과 守勢化로의 부분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즉 일관된 호전성 속에서도 趙公세적인 강경전략에서부터 수세적인 온건전략의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해 왔다. ②두번째 특징은 고도의 柔軟性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의 대남전략은 그 비중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3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북한은 어느 한가지 전략에 배타적으로 의존하기보다 事案에 따라 相異한 전략과 이에 따른 다양한 전술을 便宜主義적으로 구사해 왔다. 또한 현 시기 대남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혁명전략은 그 자체가 매우 유연한 전략이다. ③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非現實性이다. 즉 어떠한 전략에 의거하든, 궁극의 목표인 공산화통일은 거의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고려에서 대남전략은 ④對內用 ‘통일이데올로기’라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본다. 또한 대남전략은 비현실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欺瞞術

혹은 詐欺劇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고려에서도 대남전략은 '대남'이 아닌 '대내' 전략 혹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통일이데올로기'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물론 내적인 체제모순을 糊塗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⑤전술상의 특징으로는 스탈린식 전술의 특징을 지니면서도 전술의 극단적 다양성, 유연성, 기만성을 보여 왔으며 특히 대화시 전술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의 '怠業'(sabotage)전술이라 할 수 있다.

(4) 대남전략의 기원 내지 결정요인은 ①이론적 기초로서 주체사상, ②호전성의 뿌리로서 '주체적 정치체제'의 속성, ③장기적 수세화의 원인으로 서 내외정세의 변화와 북한 지도부의 정세인식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주체사상은 모든 대남전략의 이론적 기초로 공언되고 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은 그 자체가 정치체제로 體化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치체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 체제는 '주체적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이 체제는 그 근본적인 屬性上 대외적인 저항 혹은 호전성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5) 今後 ①대남전략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은 '戰'으로의 힘과 '和'로의 힘으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兩者는 물론 주체사상과 '주체적 정치체제'의 속성, 그리고 내외의 정세변화에서 나오는 힘이지만, 前者는 주로 체제 속성에서, 後者는 환경변화에 따른 체제의 생존능력 저하에서 나오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자는 相反되는 방향의 힘이지만 그 변동의 폭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전자는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후자는 생존능력이 향상될 때 아주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양자는 일정한 시간단위를 놓고 볼 때 상쇄적

인 힘이지만, 특정의 시점에서 볼 때는 선택적으로 또는 상호별도로 동시에 작용하는 힘일 수도 있다. 북한측을 나뉠대로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할 때, 이러한 힘이 가져올 ②변화의 폭은 먼저 '전'으로의 변화로서 言辭上의 전쟁위협 강화에서부터 도발적인 부러시위까지로 볼 수 있으며, '화'로의 변화로서 통일방안의 추가적 후퇴에서부터 남한혁명전략 가운데 "반과썌"의 포기 및 "대화전략"의 전략으로의 승격까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려를 바탕으로 ③대남전략 변화의 대체적 방향과 내용을 전망해 보면, 먼저 전략의 兩極化가 예상된다. 즉 종래 대남전략의 유연성 내지 다양성의 폭이 좁아지면서 '전'과 '화' 양방향으로 극단화될 것이다. 전술차원에서 보자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恐喝型' 전술과 '泣訴型' 전술로 양극화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화전략"의 격상과 혁명전략의 사실상 포기가 예상된다. 즉 "대화전략"이 완전한 전략으로 승격되고 혁명전략은 이 속에서 反帝 혹은 自主의 원칙으로 전략할 것으로 본다. 고려연방제 방안도 후퇴하여 최종적으로는 체제수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민족대단결전략'이 대남전략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전술차원의 변화는 감상적 '민족주의'를 앞세운 평화공세의 강화와 통일전선전술의 강화가 예상된다. 셋째, 비현실성 및 대내용 이데올로기화의 심화가 예상된다. 비현실성의 심화는 결국 언사상의 정책(verbal policy)과 실제정책(real policy) 사이의 극심한 괴리로 나타날 것이다. 이데올로기화의 심화는 정서적 호소력에 더욱 더 의존하는 감상적 民族愛 혹은 민족주의의 극단적 강조로 나타날 것이다.

(6) 대처방안으로는 먼저 하나의 원칙으로서 남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와 경제성장 = 통일역량 강화'라는 등식을 정립하는 일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른 첫번째 작업으로 反통일적 요소의 청산을 들

고, 이 작업의 일환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비논쟁적인 과제라 할 통일문제 및 북한 관련 정보를 더욱 개방하는 일을 제시한다. 끝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구체적 대처방안으로서 힘의 우위에 의한 전략의 추진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①군사적 안보태세의 지속적 강화, ②북한측의 정치-군사적 양보와 남한측의 경제협력 및 외교적 지원의 철저한 連繫, ③우리 식 '북한 혁명전략'의 추진, ④유연하고 신중한 전략-전술의 運用, ⑤예상되는 평화 공세 강화에 대비한 知的-理論的 우위의 확보 등이 포함된다.

I. 緒論

1. 問題의 提起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특히 소련을 위시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변화와 남한에서의 文民政府의 출범, 그리고 북한 내부의 經濟難과 같은 체제모순의 심화 등 새롭게 조성-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内外의 현 정세를 감안할 때 이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남전략을 포함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이나 나아가서 그 체제 자체의 장래를 전망함에 있어서는 한가지 매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권력승계와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과거 소련이나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공산주의국가에서 최고 권력자의 교체는 흔히 승계위기까지 불리우는 상황을 빚어낼 뿐만 아니라 그 교체의 결과로서 중대한 정책상의 변화와 경우에 따라서는 체제 자체의 다소간 변질을 초래하기도 한다.¹⁾ 공산국가에서 승계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도부교체에 관한 확립된 제도적 장치와 慣行의 결여 같은 것들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정권의 獨裁 혹은 專制的 성격에서 찾아야 할런지 모른다. 북한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일상적인 업무는 김정일이 전담하고 통일문제와 관련된 업무만 김일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

1)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에서의 권력승계 문제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정수, 「북한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전체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 114-118에 잘 소개-정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북한의 권력승계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김정일은 김일성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카리스마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북한 정권의 독재 혹은 전체적 성격이 현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에서도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은 그만큼 클 것이다. 어쩌면 승계위기가 체제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승계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북한의 정책이나 체제의 장래를 전망하는 일을 특히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²⁾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한가지 便法은 권력승계와 관련한 불확실성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승계문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의 범위는 주요 정책과 체제의 부분적인 변화에서부터 체제의 붕괴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연속선상에 위치시워 지는 광범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광범한 변화가능성 가운데서 먼저 체제붕괴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특정의 구체적인 전략 혹은 정책 변화 전망의 어려움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또한 주요 정책과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그 어려움은 한층 더 감소될 수 있다.³⁾ 이러한 고려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전망함에 있어서 주요 정책 및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나 체제붕괴와 같은 극적인 변화가능성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한 변화가능성 자체를 낮게 평가한다거나 아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극적인

2) 이러한 판단과 달리 “권력이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게 계승되고 있는 과정의 전후기에 - - - 전술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전략적인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용필, 「북한 체제의 변화와 통일정책」, 신정현 편,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 을유, 1989), p. 283. 그는 김정일의 약한 정통성이 정책변화의 폭을 제한하리라는 假說에 기초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약한 정통성은 더 큰 정책변화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이 後者의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3) 주요 정책과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란 곧 체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 진술은 同語反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변화의 가능성이 더 크지도 모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상 변화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이다.

요컨대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앞으로 북한의 대남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보다 부분적으로 변화하리라는 전제하에 그 대체적인 변화의 방향과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뜻깊은 示唆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2. 研究의 方法과 構成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떠한 내용의 것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딱히 대남전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남전략을 포함한 주요 정책 전반과 체제 자체를 평가-전망하는 데 유용한 접근방법은 비교정치학 특히 공산주의 비교연구 분야에서 개발 혹은 적용된 여러 이론적 資産들을 援用함으로써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그 적용가능성이 검토되거나 試論적으로 적용된 것들로는 전체주의모델, 해석학적 이론과 분석틀, 구조기능주의와 결정작성이론, 정치문화론, 발전론모델, 다원주의모델, 엘리트이론, 이익집단모델, 조합주의이론, 정책이슈網-정책공동체모델, 관료정치모델, 후견인-고객관계론 등을 들 수 있다.⁴⁾

4) 여러 이론적 자산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특히 Gabriel A. Almond, "Model Fitting in Communism Studies," *A Discipline Divided: Schools and Sects in Political Scienc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Inc., 1990), pp. 66-116 및 여기서의 논의를 북한에의 적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한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3), pp. 35-51 참조. 그리고 이밖에 Jae-Nam Ko,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form Communism," 한양대학교 中蘇研究所, 『中蘇研究』, Vol. XIV, No. 2, Summer 1990, pp. 153-189;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

이러한 자산들은 각각 일정한 유용성과 함께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적절한 연구자료, 특히 경험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유용성과 적용가능성이 풍부한 이론적 자산의 경우에도 만족할만한 연구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가장 심각한 한계 내지 난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자는 북한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문제를 “근본적인 제약과 한계점”으로 표현하고 있다.⁵⁾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 대남전략 혹은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교정치학에서의 이론적 자산을 적절히 활용 내지 적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북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전통적” 방법에 따른 것들이라 할 수 있다.⁶⁾

“전통적”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에 비해 반드시 덜 학문적이라거나 유

판부, 1990), pp. 3-25, 54-82; 엄홍철, 「연구방법과 현황」, 엄홍철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제 1장; 안병영, 「북한연구의 방법론」, 『현대공산주의 연구』 (서울: 한길사, 1986), pp. 349-398; 이용필 편, 「북한정치 연구방법 서설」, 『북한정치: 이데올로기와 변화』 (서울: 대왕사, 1982), 제 1장 참조.

5) 양성철, 상계서, p. 4.

6)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정대철, 『북한의 통일전략 연구』 (서울: 백산, 1986); 김학준, 「통일정책: 지속성과 변화 추세」, 이상우 외, 『북한 40년』 (서울: 을유, 1989), pp. 523-581; 이용필, 「북한 체제의 변화와 통일정책」, 신정현 편, 전계서, pp. 281-315; 곽태환,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통일 정책」, 신정현 편, 상계서, pp. 345-379; 정용길, 「북한 통일 정책의 특성과 한반도 통일전망」, 신정현 편, 상계서, pp. 381-404; 신정현, 「외교정책과 대외 관계」,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 1990), pp. 391-433; 김세균, 「통일정책」, 최명 편, 『북한 개론』 (서울: 을유, 1990), pp. 643-667;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 1990), pp. 419-439; 장수련,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서울: 통일연수원, 1991), pp. 271-333; Byung Chul Koh, “Unification Policy and North-South Relations,” in Robert A. Scalapino and Jun-Yop Kim (ed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3), pp. 264-308; Katsumi Sato, “Trends and Problems in North Korean Policies toward the South,” in Masao Okonoki (ed.), *North Korea at the Crossroads*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8), pp. 106-130.

용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자는 “전통적 수법”과 “새로운 수법”을 대비하면서, “역시 전통적인 수법에 의한 정치과정 분석이야말로 결국은 우리가 중시하고 의거해야 할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전통적 방법이란 주로 實證的-記述的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한 분석은 “一見 용이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개개의 事象의 평가라든지 의미설정은 물론, 분석대상 전체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정치과정의 다이내믹스를 묘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에, 분석자의 전인격과 학식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물론 그 논술의 成敗가 그자리에서 판정되는 엄중한 작업”이라 한다. 이에 비해 “정치학적 방법론에 근거하는 비교정치학적 분석이나 정치체계론적 記述”로 이해되는 “새로운 수법”에 의한 분석은 “전체가 斷片化되기 때문에 - - - 불충분한 분석결과 밖에 추출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⁷⁾

이 연구자의 “새로운 수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듯 하며 또 결국 “전통적 수법”이 더 나은 것이라고 하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전통적 수법”의 長點과 要件을 나름대로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즉 “전통적 수법”은 “전체”의 흐름과 “다이내믹스”를 잘 포착한다는 장점을 가지며, 이를 위해서는 분석자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직관력, 전인격과 학식이 요구된다는 지적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전통적 수법”과 “새로운 수법”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 그리고 전통적 방법에는 일정한 한계---이

- 7) 中崎嶺雄, 「현대중국 30년의 정치과정」, 유세희 편, 『오늘의 중국대륙: 정치-사회-경제-사상의 변동과 지향』(서울: 한길사, 1984), pp. 12-14.
8) 이 점에 대해서는 Almond, *op. cit.*, pp. 2-64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Almond는 정치학의 두가지 접근방법을 새로운 과학적 접근방법과 오래된 제도론적-철학적-역사적 접근방법으로 대별하고 전자에 치중한 입장에서의 절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것은 바로 과학적 연구의 장점이 될 것이다---도 있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통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누적적인 것이 되기 어렵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아무리 직관이나 통찰력이 뛰어난 연구자라 하여도 그런 것들은 단순히 착오일 수도 있는 것들이다. (나아가서 직관이나 통찰력은 과학적 방법과 그것에 의해 마련-제시되는 이론들을 학습함으로써 가장 잘 개발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수법”에 의한 분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통적 수법”을 고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연구의 경우 주로 자료관련 문제 때문에 과학적 분석이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거나 과학적 이론의 적용가능성의 제시 혹은 여기에서 진일보하여 試論的인 적용에 불과한 분석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또한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분석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러나 과학적 방법에 의해 개발되거나 마련된 주요 개념, 발상(idea), 혹은 視角 등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적극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보다 부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미리 전제하고서 논의를 전개한다. 즉 앞으로 대남전략의 변화는 종래 보여 온 지속성과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먼저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상적 특징과 그것을 낳은 기원 내지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 상에서 금후의 변화를 전망하며 그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전체 연구의 구성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먼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대남전략의 전개과정과 주요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제 2장). 여기서는 대남전략의 전개과정과 내용을 年代記的으로 기술하지 않고 북한측의 관련 “이론”에 주목하여 상호 중첩적이지만 외형상 구별되는 세가지 흐름, 즉 무력통일전략, 남조선혁명전략, 대화에 의한 통일“전략”로 대별-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대남전략의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제 3장). 여기서는 앞의 분석을 통하여 뚜렷하게 드러나는 몇가지 특징을 추출하여 전술상의 특징과 함께 간략하게 논할 것이다. 다음에는 대남전략의 특징을 낳은 기원 내지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제 4장). 여기서는 공산주의국가 특히 소련과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주로 국내정치적 요인을 증시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하여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 정치체제의 속성, 내외의 정세변화와 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등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대남전략의 주요 내용 및 특징과 그것을 낳은 기원 내지 결정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장래 대남전략 변화의 대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전망할 것이며(제 5장), 끝으로 몇가지 대처방안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제 6장).

끝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자료는 기본적으로 북한측의 1차 문헌이다. 이 1차문헌들은 직접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의 관련 조사와 분석 결과, 그리고 기존의 주요 연구들도 널리 참조할 것이다.

II. 對南戰略의 展開過程과 그 主要 內容

1. 用語問題와 接近方式의 選擇問題

대남전략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전략”의 의미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 잘 알려진 국어사전을 보면, 전략이란 좁게는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제 2장). 여기서는 대남전략의 전개과정과 내용을 年代記的으로 기술하지 않고 북한측의 관련 “이론”에 주목하여 상호 중첩적이지만 외형상 구별되는 세가지 흐름, 즉 무력통일전략, 남조선혁명전략, 대화에 의한 통일“전략”로 대별-분석할 것이다. 이어서 대남전략의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제 3장). 여기서는 앞의 분석을 통하여 뚜렷하게 드러나는 몇가지 특징을 추출하여 전술상의 특징과 함께 간략하게 논할 것이다. 다음에는 대남전략의 특징을 낳은 기원 내지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제 4장). 여기서는 공산주의국가 특히 소련과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주로 국내정치적 요인을 증시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하여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 정치체제의 속성, 내외의 정세변화와 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 등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대남전략의 주요 내용 및 특징과 그것을 낳은 기원 내지 결정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장래 대남전략 변화의 대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전망할 것이며(제 5장), 끝으로 몇가지 대처방안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제 6장).

끝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연구자료는 기본적으로 북한측의 1차 문헌이다. 이 1차문헌들은 직접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외의 관련 조사와 분석 결과, 그리고 기존의 주요 연구들도 널리 참조할 것이다.

II. 對南戰略의 展開過程과 그 主要 內容

1. 用語問題와 接近方式의 選擇問題

대남전략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전략”의 의미에 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 잘 알려진 국어사전을 보면, 전략이란 좁게는

“전쟁의 方略”으로서 어떤 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大局的으로 전쟁을 운용하는 방략을 의미하며, 넓게는 대국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방책, 특히 정치-사회운동에 있어서의 책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戰場에 있어서의 작전 행동을 지휘하는 술책 또는 어떤 국면에서의 계획 혹은 실행으로 규정되는 전술과 구분된다.⁹⁾ 이러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하는 바 의미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위의 사전적 정의를 수용하고자 한다. 다만 위의 정의 가운데 광의의 정의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보아 그러한 의미의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전략과 전술이 모든 경우에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연구자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양자가 그 운용차원을 달리 하면서도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¹⁰⁾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 사전이 제시하는 바 광의의 의미로 전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구체적 전술과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대남전략 전개과정의 분석을 위한 접근방식의 선택과 관련해서도 미리 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대남전략을 분석하는 방식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年代記的으로, 그리고 외형상 드러난 구체적인 言動에 주목하여 전략의 전개과정을 추적,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태면 6.25 이전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대남전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분석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대남전략 혹은 통일문제에 관한 북한측의 “理論” 또는 “論”¹¹⁾을 중심으로 분석

9)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6).

10) 장수련, 「공산주의 혁명 전략전술」, 통일연수원, 『공산주의와 현대 급진주의』 (통일연수원, 1989), pp. 55-107 참조.

11) 북한측의 문헌들에서 제시되는 “이론”은 글자 그대로 이론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단순한 전술 혹은 주장에 불과한 것들도 있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혹은 정책 관련 “이론”들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론이다.

하는 방식이다. 이 두가지 방식은 각기 장단점을 지니지만, 후자의 방식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더 유용한 방식이라 본다.

전자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10년 단위의 시기구분에 익숙하다는 장점과 장기적 추이 분석에 유리하다는 점 외에, 남북한 관계 혹은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과정을 볼 때 그러한 10년 단위의 시기구분이 어느 정도 실제의 전개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측면도 있다. 특히 7.4공동성명 발표, 북한의 고려연방제 제안, 남북한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등의 시점은 각각 10년 단위 기간의 시작 부근에 해당한다. 이 때문인지,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러한 분석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¹²⁾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따른 분석은 결점도 갖는다고 본다. 연대기적 분석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분석하는 데 치중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현상의 이면에 놓인 전략의 핵심적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 왜냐하면 이론은 나름대로 일관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실제와 부합되도록 수정 혹은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³⁾ 특히 대남전략에 관한 이론의 경우 상당한 정도로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잡다하고 때로는 이중적 혹은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¹⁴⁾ 다만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이론 자체

12) 대체로 이러한 방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정대철, 전게서; 김학준, 전계논문; Koh, *op. cit.*; Sato, *op. cit.*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북한 당국의 「남북합의서 채택 1주년 관련 비망록」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1970년대 이후 북한측의 정책 혹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1993년 2월, pp. 158-171.

13) 북한의 경우 이론과 실제 정책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이 事後적으로 수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상우,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의 외교정책」, 이홍구-스칼라피노 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80년대의 대외적응』 (서울: 법문사, 1986), p. 44 참조. 그러나 필자는 이론수정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뒤따르는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가 선전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같은 것은 진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대내외적인 선전 전술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만일 그것이 선전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담고 있는 북한의 “통일이론”에 대한 분석은 誤導된 결론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연구자 나름의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비판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인식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 대남전략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외형상 뚜렷이 구분되는 세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면 남침에 의한 무력통일전략, 남한혁명전략, “대화전략”이 그것이다. 이 세가지 흐름은 시기별 전개과정과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무력통일전략은 대략 1945-1950년대 중반, 남한혁명전략은 1950년대 중반-1960년대, “대화전략”은 1970년대-현재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과정은 단절적인 것이라기보다 누적적 혹은 중첩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세가지 흐름 모두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북한식의 ‘공산화’ 통일이다. 이 점에서 뚜렷한 일관성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이와 같은 대남전략의 전개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¹⁴⁾

14) 이러한 방식에 따른 연구 사례는 몇 안된다. 그 중에서 김세균, 전계논문; 한국정치연구회, 전계서, pp. 419-439 참조. 한편 장수련,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경우 두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으나, 전략의 범위를 혁명전략으로 국한하여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15) 이하에서 역사적 사실의 제시는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다음의 문헌에 의존한 것이다: 통일원, 『남북한통일제의자료총람 1-3』 (서울: 위문, 1985); 『남북한 통일 대화 제의 비교』 (서울: 통일원, 1987); 『남북대화 백서』 (서울: 남북대화사무국, 1988); 『통일백서』 (서울: 정문사, 1990).

2. 武力統一戰略: 民主基地論

북한은 “민주기지론”을 소위 조국해방과 조선혁명의 “총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무력으로 남침,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할하에 두려는 것, 즉 북한식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힘을 키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리하여 북한 자체의 역량이 충분하고 또 내외의 정세가 유리할 경우에는 전쟁을 감행하여 조국을 통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자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민주기지론은 일찌기 1945년 10월에 제기되었다.¹⁶⁾ 6.25전쟁은 바로 이 민주기지론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민주기지론은 양면적인 것이다. 즉 정세의 변화에 따라 무력남침을 시도하든가 아니면 자체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력남침이 한번의 시도 이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자기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이 이 민주기지론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결국 북한 독자적인 자기발전의 노선 혹은 전략과 내용상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남한해방을 위한 민주기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북한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조기에 달성하고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사회주의 건설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기지론은 아직도 유효한 노선 혹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남전략이라는 측면에만 국한해서 보자면, 민주기지론은 단지 무력남침의 시기, 점점 더 無望한 것으로 되어 온 그러한 시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16) 「五道黨員及熱誠者聯合大會會議錄」, 조선산업노동조사소 편, 『붉은 노선』(東京: 민중신문사출판부, 1946), pp. 30-48.

안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대남전략으로서 민주기지론은 이제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민주기지론이 포기되지는 않았다. 또한 민주기지론은 아래에서 보게될 혁명론에서 남한 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기지의 강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여전히 의미를 가지게 된다.

3. 南韓革命戰略: 南韓革命論

북한 자체의 힘으로 남한을 ‘해방’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공산화통일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남한내에서의 혁명, 즉 “남조선혁명” 밖에 없다. 대략 195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은 남한혁명에 관한 이론을 정비하여 왔으며, 이 때 이후 지금까지 대남전략의 기본 틀은 바로 이 남한혁명론에서 찾을 수 있다.

남한혁명전략의 골자는 남한내에서 남한인민이 주체가 되어 반제반봉건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남한혁명을 지원하며, 남한혁명이 성공한 후 서게 될 남한의 민주적 정부와 북한정부가 협상과 합작을 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자체의 역량에 의한 남한해방보다 남한내의 혁명역량에 의한 남한혁명을 중시하고 이것이 성공한 후에 통일을 달성한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통일문제는 단순히 무력점령을 통한 “해방”의 문제가 아닌 “혁명”의 문제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 내용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

남조선혁명전략의 출발은 소위 “두가지 前途”론에서 찾을 수 있다.¹⁷⁾

17) 기존의 연구들은 남조선혁명을 통한 통일론의 출발점을 대체로 1960년대 이후로 잡고 있다. 예로서 김세균, 전계논문, pp. 646-658 참조. 그러나 1960년대 이전까지 “혁명적 민주기지론”이 북한 통일정책의 주류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6.25 이후 북한은 전후복구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벌기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예컨대 김

두가지 전도론은 1955년 김일성의 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통일의 전도로서 평화적 통일과 전쟁을 통한 통일이라는 두가지 전도를 제시하면서, 전자를 중시한다는 것과 이를 위하여 북한은 민주기지로써 자체를 강화하고 남반부에 대한 “정치사업”을 잘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남반부인민들의 “해방투쟁”과 “평화적 통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의 민주기지론과 뚜렷이 구분되는 하나의 큰 변화이다. 민주기지론의 경우 통일문제는 단순히 “외래제국주의들에게 빼앗긴 영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인공적으로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다시 하나로 결합하는 문제”로서, 남반부인민들의 해방투쟁, 즉 남한 자체내에서의 혁명은 무시된다.¹⁸⁾ 이에 반해 평화적 전도는 남반부인민의 해방투쟁---나중에 정식화된 바에 따르면 곧 남한혁명---의 필요성과 독자성을 인정한다는 뜻이 된다. 그리하여 이제 남한혁명은 전 조선혁명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다. 여기서 조선혁명은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 즉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반봉건혁명, 사회주의혁명, 그리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통한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

일성은 1955년 시점에서 “만약 우리가 5-10년동안 평화를 유지하는데 성공한다면 - - -” 하고 있다.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p. 162. 따라서 민주기지 강화 논리로서의 민주기지론이 아닌 무력침략을 위한 민주기지론은 이미 이 시기 이전에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문헌을 통해서 본 북한정권의 주요 정책 혹은 이론의 형성과정은 먼저 김일성의 입으로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정책 혹은 이론이 제시된 다음에 아마도 당내의 이론가 혹은 정책실무자들에 의해 그것이 더욱 발전-세련되어 다시 김일성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1955년 연설에서 제시된 내용이 비록 粗惡한 것이기는 하지만 남조선혁명론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18) 사회과학출판사 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5』 (서울: 태백, 1989), p. 282. 이 책은 1985년에 평양에서 처음 발간되었다. 이하에서 이 책은 『총서 X』로 약칭한다.

을 위한 혁명을 말한다. 그리고 조선혁명을 위한 역량, 조국통일을 위한 역량은 북한의 혁명역량, 남한의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인 혁명역량의 3대 혁명역량이 있다고 한다.¹⁹⁾ 이러한 변화는 통일의 방법으로 무력해방 중시에서 남한혁명(지역혁명) 중시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무력해방이 포기된 것은 아니다. 전쟁을 통한 통일의 전도는 곧 민주기지론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조선혁명의 일부인 남한혁명의 성격은 무엇일까? 남한 사회의 성격을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명의 성격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된다. 혁명의 성격을 이렇게 보면 이에 따라서 혁명의 동력, 대상, 방법 등이 저절로 규정된다. 즉 혁명의 동력은 “인민대중”이며, 대상은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악질 반동분자이며, 방법은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한 대중운동이 된다.²⁰⁾ 그러면 이러한 남한혁명의 수행을 위하여 북한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북한은 한편으로 민주기지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²¹⁾ 혁명론과 관계된 북한의 전략은 바로 이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남한인민들에 대해서 보자.

혁명이론상 대화, 협상, 혹은 합작의 대상은 남한정부가 아닌 “남조선인민”이다. “남조선인민”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은 북한정권의 주체로 제시되고 있는 “인민대중”과 같은 것이다. 즉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제외한 모든 계급과 계층들”²²⁾

19)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강의, 1965년 4월), 통일원, 『김일성주체사상관계자료집』 (서울: 통일원, 1976), pp. 377-378.

20) 상세한 내용은 『총서 4』, pp. 128-248 참조.

21) 김일성, 전게서, p. 365.

22) 『총서 4』, pp. 144-164.

혹은 “민족반역자를 내놓고는 모든 사람들”로서 노동자, 농민은 물론이고 청년학생, 지식인, 진보적 종교인, 국군장병, 경제인, 정치인 등이 포함된다.²³⁾ 그렇기 때문에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광범한 남한인민들과의 제휴, 통일전선운동이 요구되고 또 실제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전쟁 전의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결성과 남북한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개최도 이러한 맥락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이후 광범한 남한인민들과의 제휴 혹은 통일전선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으며 실제로 그것을 위한 각종 명칭의 제의는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1954년 10월 이후의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제의, 1963년 4월 이후의 제정당-사회단체-각계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 제의, 1963년 12월 이후의 “남북대표자회의” 제의, 1973년 6월 이후의 “대민족회의” 제의, 1979년 1월 이후의 “전민족회의” 제의, 1981년 12월 이후의 “민족통일촉진대회” 제의 등 무수히 많은 제의들은 그런 맥락의 것이다. 최근에는 汎民聯에 적극 가담하여 이 단체를 통한 “범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하기도 하였다.²⁴⁾ (물론 범민련 자체를---善意의 남한측 참가자들의 의도와 무관하게---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활용해 왔으며 1993년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대중집회의 성격을 띠는 대규모 회의의 제의는 바로 남한혁명전략에 따른 통일전선전술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남한정부는 혁명이론상 미제의 앞잡이, 파쇼정권, 혹은 민족반역자로서 혁명투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남한정부와의 대화는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몇번 응하다가도 팀스피리트 훈련, 국가보안법의 존재, 정치범未 석방 등 議題 외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해버리곤 해 왔다. 실제로 북한은 5공화국 초기 남한정권의 비민주적 조치를 이유로 정부간 대

23)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24) 『월간 북한동향』, 1992년 8월, pp. 48-49.

화를 거부하였다. 즉 1980년 9월 24일자로 발표된 남북총리회담 북측대표단 성명은 남한에서 “새로이 출현한 파쑈통치배들에 의하여 대화의 근본리념에 역행하고 온 민족의 평화통일념원에 배치되는 참을수 없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음을 이유로 그때까지 진행중이던 총리회담 실무대표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²⁵⁾ 또 이 일과 관련하여 김일성은 방북중인 朝日新聞 대표단과 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전두환은 박정희보다 악랄하며 - - - 전두환체제하고는 회담할 용의가 없다. - - - 우리는 당분간 남조선정세를 관망할 생각이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대화할 생각이 있다. 학살과 탄압이 있었다고 해서 남조선인민들이 나 죽은 것은 아니며 살아있을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의 정당한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²⁶⁾ 6공화국 들어 대화가 활발히 재개되어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한 기본합의서 채택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도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익환 임수경 등 방북인사 석방, 휴전선 지역내 콘크리트장벽 철거 등을 요구함으로써 회담이 空轉-遲延되기도 하였다. 최근의 예로서 남북한 기본합의에 따른 후속 회담과 접촉, 그리고 특사교환 관련 접촉도 유사한 이유를 들어 중단시켜 버렸다. 또한 정부간 대화는 아니지만, 1984년 11월에 시작되어 1985년 11월까지 5차의 회담을 가진 바 있는 남북경제회담의 경우와 1985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친 국회회담 예비접촉의 경우 팀스피리트 86훈련을 이유로 중단, 결렬되어 버렸다. 1988년 8월부터 새로이 시작된 국회회담에서도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중단상태에 처해 있다. 심지어 인도적 문제를 다루는 적십자회담에서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적십자회담은 1971년 적십자 파견원접촉에서부터 시작하여 1973년 7월까지 7차에 걸쳐 본회담을 가진 바 있는데, 7차회담 이후 북한측은 보안사범의 석방과 정치활동 보장, 남북조절위 안에 각정당-사회단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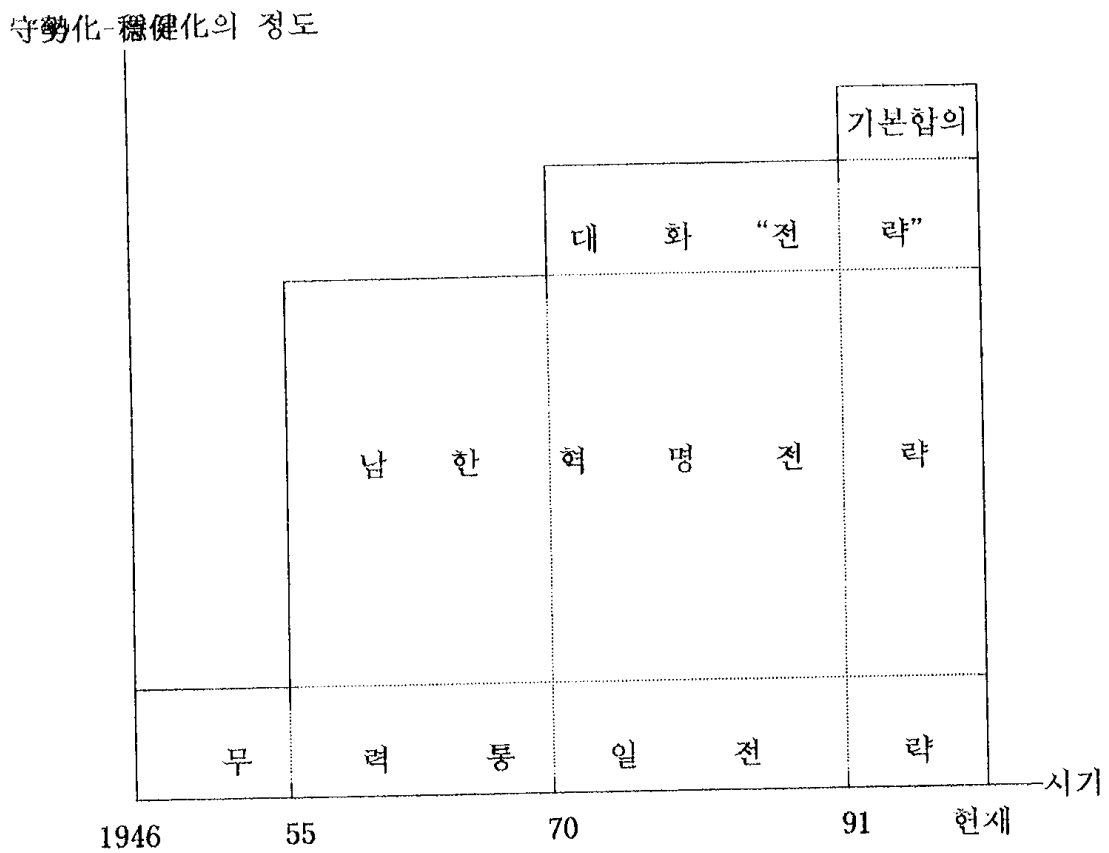
25) 『로동신문』, 1980년 9월 25일.

26) 『로동신문』, 1980년 9월 29일.

은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상과 같은 평가를 개략적으로 圖示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北韓 對南戰略의 一貫性과 變化



2. 柔軟性

북한 대남전략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고도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대남전략의 일관성과 변화를 위와 같이 파악한다면, 그것은 곧바

여 청와대 공격하고, 해외에서 대통령암살을 시도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모두 남한인민의 영웅적 투쟁으로 강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장투쟁은 아니지만, 남한인민을 간접으로 포섭하여 활용하는 것도 같은 백략의 것이다. 지금까지 무수한 무장공비 남파, 간첩단사건에 대하여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한 예는 한번도 없다. 최근의 예로 김낙중 사건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해서도 모략이라고 강변한 바 있다.³¹⁾ 이와 같이 “모든 힘을 다하여” 남한혁명을 지원하는 것 역시 혁명전략에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1966년 연설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남조선에서 혁명이 승리하면 북조선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 위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 - - 조국이 통일된 후 우리나라에 어떠한 사회제도를 수립하는가 하는 것은 웅당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만일 남조선 인민들이 북반부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나 공산주의를 원한다면 통일된 우리나라에는 물론 그러한 이념에 기초한 사회제도가 수립될 것입니다.³²⁾

여기서는 막연히 “단합된 힘”에 의해 성과적으로 통일이 달성된다고만 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 후의 사회제도에 대해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른다고 한다. 그러나 1970년의 연설에서는 남한에서 혁명이 성공하여 “참다운 인민정권”이 서면 “순조롭게” 실현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³³⁾ 이

31) 연형묵의 서한, 『한겨레신문』, 1992년 10월 14일.

32)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들베개편집부 편, 전개서, pp. 481-482.

33)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5차당대회, 1970년 11월), 상계서, p. 323.

“인민정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제와 파쇼정권을 몰아낸 인민, 미제의 앞잡이와 예속 자본가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인민,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인민, 이러한 인민은 북한정권의 “주체”인 인민과 다를 바 없는 인민이고 이러한 인민에 의한 정권 역시 북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순조로운 통일이라는 것과 총의에 따른 것이란 곧 북한식 공산화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남한혁명전략은 남한정부를 가급적 배제하고, 혁명투쟁에 나서는 남한인민에 대한 지지성원과 함께 통일전선 형성을 모색하고, 그런 한편으로 게릴라와 간첩을 파견하고, 혁명 성공 이후에는 손쉽게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첫째, 궁극적으로 공산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무력통일전략과 일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이것은 북한 자체의 역량만으로는 통일이 어려워진 내외의 정세변화로 인하여 단순한 무력통일전략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공산화통일을 위해 가능한 거의 모든 방법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일 카드’는 매우 다양해졌다. 다시 말해서 和戰兩面의 다양한 전술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 특히 남한정부와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대화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라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 그리고 게릴라 파견과 같은 수단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남한혁명론이 비록 “평화적 전도”에 해당한다고 하나 폭력적인 것이다.³⁴⁾

34) 김일성이 쓰는 “평화”라는 말은 단순히 전면적인 전쟁의 不在를 의미하는 것이지, 비정규전의 부재나 비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對話戰略”: 祖國統一에 관한 理論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대화를 통한 통일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기구설립을 제의해 왔다. 통일방안을 중심으로 보자면, 1948년 3월 이후의 “자주적”인(즉 미국주도하의 UN감시하가 아닌) 남북한 총선거 제안, 1960년 8월 이후의 과도적 연방제 제안, 1980년 10월 이후의 최종적 통일정부 형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제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방안의 실현을 위한 기구를 중심으로 보자면, 앞에서 든 여러 “회의” 혹은 “대회”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며, 1960년 8월 최초의 연방제 제안 당시 남북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각각의 통일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기구에 관한 제안들은 위에서 살펴본 민주기치론 및 남한혁명론과 병행하여 제시해 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대화를 통한 통일에 관한 입장을 정립하고 그 전략(혹은 전술?)을 형성-전개한 것은 실제로 남북대화 시대가 열린 1970년대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화전략”의 골간은 소위 “조국통일에 관한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국통일에 관한 이론은 통일문제의 본질과 지위, 통일의 기본방침, 3대원칙과 5대방침, 연방국가창립방안, 당면과업 등으로 구성, 제시되고 있다.³⁵⁾ 통일문제의 본질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제시된다. 통일문제의 지위는 첫째, “조선혁명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며, 둘째, “나라의 통일적 발전과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조선인민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며, 셋째, “제국주의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수호하며 세계혁명을 촉진시

35) 『총서 5』, pp. 281-309.

키기 위하여서도 절박한 과업"이라 한다. 통일의 기본방침은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한다. 3대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로 제시된다. 5대방침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고려연방국 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의 실시, 단일한 고려연방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창립방안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면과업으로 남한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시한 7개 과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통일이론은 1985년 시점에 정식화된 것이지만 당면과업 가운데 몇가지를 제외하면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서, 논리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³⁶⁾ "대화전략"의 본질 내지 핵심적 내용을 아주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에 제시된 고려연방제방안은 그 자체가 "대화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대화전략" 전반의 중요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려민주연방제는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총화보고」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제시되었다.³⁷⁾ 이 보고에 따르면 고려민주연방제방안은 크게 보아 3대 전제조건, 趣旨, 연방기구의 형태와 기능, 施

36) 논리적인 결함은 우선 통일문제의 본질에 대한 규정과 연방제 통일방안이 상충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통일문제의 본질에 대한 규정에서는 국토와 민족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과도적 형태가 아닌 최종적 형태로 제시된 고려연방공화국은 결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기본방침"과 "3대원칙"은 논리전개상 상하관계로 보아야 하지만, 제시된 바 내용상 중복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또 "기본방침"과 "5대방침"은 "방침"이란 용어를 공유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37)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6차당대회, 1980년 10월), 돌베개편집부 편, 전계서, pp. 351-420.

政의 원칙과 10대 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제조건은 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 청산과 민주화, 전쟁위험의 제거, 미국의 두개조선 책동의 저지와 내정간섭 배제를 말한다. 취지는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 연방제 형태의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그 밑에서 남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과도적 정부가 아니라 최종적인 정부형태이다. 연방기구의 형태와 기능은 남북의 동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토록 한다는 것이다. 시정의 원칙은 비동맹중립화와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의 실시를 들고 있다. 10대 시정방침은 ①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 견지, ②사회 전 분야에 걸친 민주화와 민족대단결 도모, ③남북간의 경제합작-교류 실시와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④과학-문화-교육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통일적 발전, ⑤남북간의 교통-체신 연결, ⑥근로대중과 전체인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의 “계통적” 증진, ⑦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련합군” 창설, ⑧해외동포의 권익보호, ⑨통일이전 남북의 대외관계 정리와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⑩우호적이고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와 UN 등 국제기구에 단일대표로 가입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표면적으로 전쟁과 폭력혁명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고려 민주연방제방안이 남한혁명론의 한가지 특수한 變形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첫번째 조건을 보면,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파쇼통치가 실시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없습니나”라고 못박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청산한 기초 위에서 군사파쇼정권을 광범한 인

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만 할것입니다”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이란 남한혁명 성공 후에 수립될 “참다운 인민정권”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리고 엄연히 존재하는 현정권인 “군사파쇼정권”을 어떻게 “교체”할 수 있을까? 파쇼정권 스스로 물러나라는 뜻인가 아니면 선거를 통하여 교체하라는 뜻인가? 그렇게 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면, 결국 정권의 “교체”는 혁명을 통한 인민정권의 수립이라는 뜻을 단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³⁸⁾ 두번째 조건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구체적인 요구를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번째 조건은 첫번째 조건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의 내정간섭 즉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남조선의 군사파쇼분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것을 “끝장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미 보았듯이 이러한 인식은 남한사회의 성격규정, 혁명의 성격-대상-동력 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다만 어떻게 “끝장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에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 시정방침의 경우도 종래 북한측이 자기네 정부의 정책을 묘사할 때의 그것과 大同小異하다. 그리고 ①과 ②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의 우

38) 첫번째 전제조건에 대하여 이와 약간 다른 해석도 있다. 김세균, 전계 논문, pp. 659-663 참조. 여기서 그는 남한혁명전략의 포기해석해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김일성이 “연방국가 창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더 이상 ‘남조선혁명’(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 - - 자주적인 민주정권, 즉 민족 자주정권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북한의 통일 전략이 ‘선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후(완전)통일로선’으로부터 ‘선민족자주정권 후련방국가창설’로선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비록 현재의 변화상을 감안할 때 결국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지만, 당시로서는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제안이 나온 시점이 전두환정권 출범(9월 1일) 이후라는 점, 그리고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9월 말 시점에서 전두환정권을 “박정희보다 악랄”하다고 하면서 이 “전두환체제 하고는 회담할 용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회적 표현이다.

요컨대 고려연방제방안은 반파쇼민주화와 반미자주화가 이루어져야만 연방제, 정확히 말하면 국가연합제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곧 남한혁명이 성공한 후에 민주기지로서 “북조선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통일이 “성과적으로” 혹은 “순조롭게” 실현될 것이라고 한 데서 민주화(반파쇼)-자주화(반미)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국가연합제를 통한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바뀐 데 불과한 것이다.³⁹⁾ 따라서 고려연방제방안은 남한혁명전략의 한 전술적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화전략”은 전략이 아닌 전술 차원의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연방제를 단순히 전술적인 차원의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첫째, 남한혁명전략에서는 혁명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혁명성공 후의 통일과정 내지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음에 비해, 고려민주연방제방안에서는 강조점이 후자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혁명이 민주화라는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 대한 내정간섭중지 ‘요구’로서 왜소화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종적인 통일의 형태 면에서도 남한혁명론이 상정하고 있는 공산화된 단일국가에 비해 “고려민주주의연방공화국”은 외형상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 내지 후퇴는 고려연방제 제안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기본합의서와 일련의 관련합의서의 채택, 현

39) 이러한 평가는 남한정부의 공식적 입장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남한 연구자들의 일치된 평가이기도 하다. 예컨대 Hongkoo Lee, “North Korea: One South Korean Perspective,” in Scalapino and Kim (eds.), *op. cit.*, p. 16; Koh, *op. cit.*, p. 298.

법개정, 고려연방제 방안 자체의 후퇴조짐 시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 제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기본합의서의 경우 남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제 1조) 미국 혹은 자주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리고 남한의 내부분쟁에 대한 간섭(제 2조), 비방-종상(제 3조), 파괴-전복행위(제 4조)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구헌법 제 5조의 남한혁명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인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를 삭제하였다. 물론 “자주” 통일을 여전히 언급하고 있다는 점과 제 1조 “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규정, 제 11조 당의 국가영도 규정 등에 의해 그러한 변화의 의미가 삭감되고 있지만, 최소한 부분적인 후퇴인 것만은 분명하다.⁴⁰⁾ 그리고 고려연방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1991년 및 93년 신년사와 10대강령에서 3대 전제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을 뿐 아니라 통일의 최종형태로서 연방제 제안을 잠정적 또는 단계적 연방제론으로 선회하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⁴¹⁾ 특히 10대강령에서는 남한정부를 “파쇼” 정권으로 보지 않고 다만 비자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권으로만 보는 듯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財富을 보호하여야” 하며 “통일이 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이 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사회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을 하나의 강령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자주”를 강조하는 데서 “자주”와 함께, 아마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민족대단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40) 신-구헌법 전문은 각각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 편, 『사회주의개혁과 북한』 (서울: 형상사, 1991), pp. 121-142 및 통일원, 『92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pp. 517-542 참조.

41) 전문은 각각 『내외통신 종합판 43』, 1991년 11월, pp. 10-24; 『내외통신 종합판 47』, 1993년 7월, pp. 9-15; 『월간 북한동향』, 1993년 4월, pp. 79-93 참조.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들이 남한혁명전략의 포기 내지 전략으로서 대화전략의 채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즉 북한측이 남한체제를 인정한다고 해서 남한인민들에 의한 혁명까지 부인한다는 것은 아니며, 또 북한측의 논리에 의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한번도 남한 내부분제에 간섭한 일이 없으며 비방-중상과 파괴-전복행위를 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범 석방,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등의 요구는 남한 내부분제에 대한 간섭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남한측에 의한 고의적인 “난관” 조성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며 또 앞으로 필요할 경우 제기될 것이다. 유사한 논리로 비방-중상은 “남조선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며, 파괴-전복행위는 남한측의 “조작” “날조”이거나 남한의 “애국청년들” 혹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인사-인민들이 한 것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는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평양의 언론매체들은 여전히 “민족반역의 무리들”, “남조선 괴뢰”, “식민지 군사독재체제”, “파쑈체제”라 비방하고 있다.⁴²⁾ 오히려 최근의 동향은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대화의 단절 속에서 대미 사주를 강조하고 있어 북한측의 전략이 오히려 남한혁명전략 쪽으로 역선회한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대화전략”에서 확인되는 북한측의 후퇴가 내외의 정세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추세, 그리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후퇴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대화전략”은 기본적으로 남한혁명전략의 한 전술적 운용이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확보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質的 變化로 轉化될 수 있는 量的 變化라고 할 수 있겠다.

42) 평양방송 1993년 9월 3일, 5일 및 『로동신문』, 1993년 9월 14일. 좀더 상세한 내용은 제 III장 해당부분 참조.

III. 對南戰略의 特徵

1. 好戰性의 一貫性과 守勢化로의 부분적 變化

북한 대남전략의 전개과정을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파악할 때 대남 전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장기적인 일관성 속에서의 부분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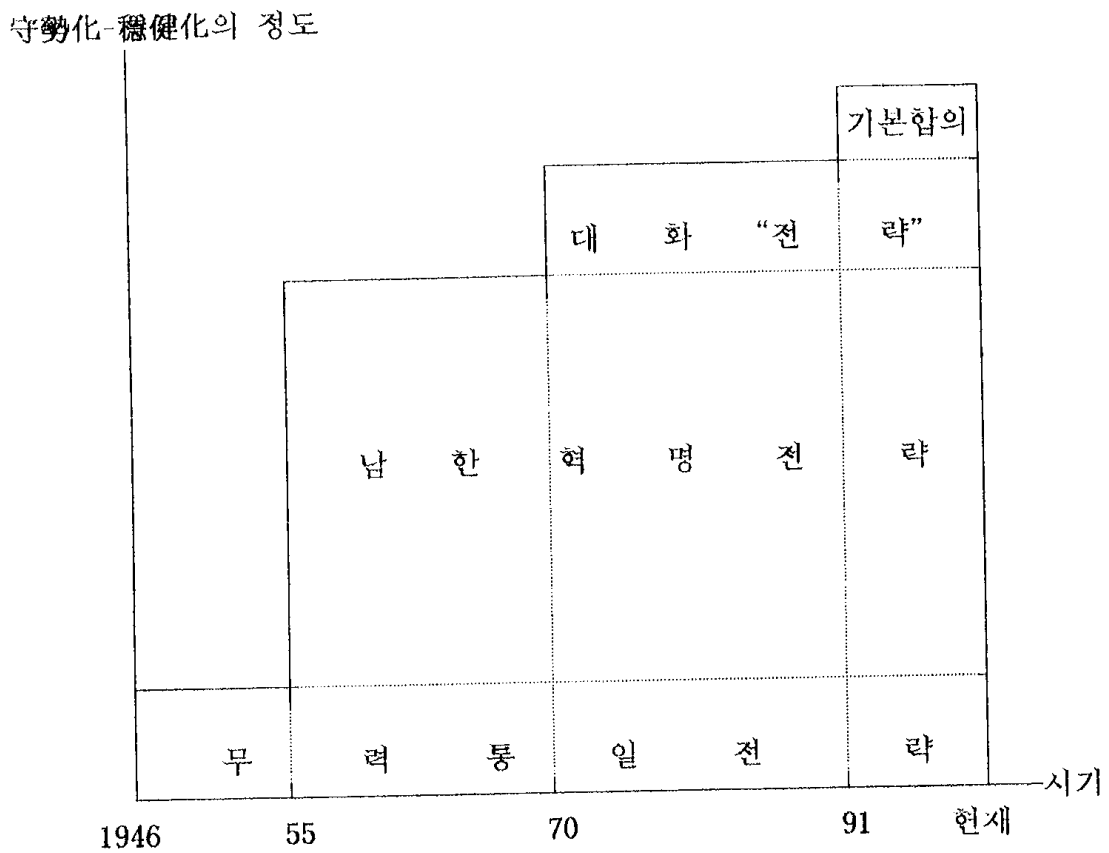
대남전략의 일관성은 다음의 두가지 고려에서 특히 현저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해방 이후 현재까지 대남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始終 북한식 공산화통일로 一貫하고 있다. 즉 무력남침이든 남조선혁명이든, 그리고 대화를 통한 통일이든 모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공산화통일인 것이다. 이와 같은 궁극적 목표 면에서의 일관성은 곧 好戰性의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무력남침-남한혁명-대화로의 변화는 결코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重疊的이고 累積的인 것이다. 무력남침전략은 남한혁명전략의 채택으로 인하여 포기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중첩되기도 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혁명전략은 “대화전략”의 채택으로 포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전술적 變容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남전략의 변화는 그와 같은 일관성 속에서의 변화이다. 즉 남한혁명 전략의 채택은 무력남침전략의 확대발전 또는 강조점의 이동이라는 의미에서의 변화이다. 그리고 “대화전략”의 채택은 남한혁명전략의 전술적 변용으로서 강조점의 이동 또는 후퇴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변화이다. 다만 이 경우는 앞으로 전략 자체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장기적인 호전성의 일관성 속에서 초공세적인 강경전략에서부터 수세적인 온건전략 방향으로의 조금씩 변화해

은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이상과 같은 평가를 개략적으로 圖示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北韓 對南戰略의 一貫性과 變化



2. 柔軟性

북한 대남전략의 또다른 중요한 특징은 고도의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대남전략의 일관성과 변화를 위와 같이 파악한다면, 그것은 곧바

로 현 시점에서의 대남전략이 남한혁명전략을 근간으로 하면서 무력남침전략과 “대화전략”까지도 동시에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 시기 대남전략은 그 구성비율 내지 비중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3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측은 어느 한가지 전략에만 배타적으로 의존하기보다 事案에 따라 相異한 전략과 이에 따른 전술을 便宜主義적으로 구사하는 것 처럼 보인다. 예컨대 남한정부에 대하여 대화틀 제의할 때는 주로 “대화전략”에 따르는 것 처럼 보이며, 그들 스스로가 제의한 대화를 중단할 때는 주로 혁명전략에 의거한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므로 북한측이 이 가운데서 어떠한 전략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측의 내외정세에 대한 판단여하에 달려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의 범위도 공공연한 남침 공갈에서부터 남측이 관심을 가질만한 대화제의에 이르기까지의 폭넓은 것이 될 수 있다.⁴³⁾ 이러한 의미에서 전략의 유연성은 곧 전술의 극단적 多樣性 혹은 二重性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남전략의 유연성은 그 근간이 되는 남한혁명전략 자체의 유연성에서 찾을 수도 있다. 혁명전략은 마치 6.25 당시 중국이 “의용군”을 파견하였듯이 북한 인민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조직될 “의용군”을 남파하는 데서부터 단순한 지지성원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전술의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43) 최근 핵사찰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이 미국의 압력을 주권침해로 간주하여 (사실상 남한과의) 一戰不辭의 태도를 취한다거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제의하고 여기에서 핵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등의 태도를 취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좀 더 상세한 논의는 『내외통신 종합판 47』, pp. 337-344; 『내외통신 종합판 48』, 1993년 8월, pp. 401-405; 『한겨레신문』, 1993년 9월 1일 참조.

3. 非現實性

북한 대남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단 한가지 측면만 제외하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이 비현실성은 대남전략의 목적인 공산화통일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전략의 구체적 내용 자체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무력남침의 경우 한번의 시도로 그 불가능이 입증되었지만, 그 이후의 사태진전은 더욱 더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남한혁명의 경우 역시 점점 더 無望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설령 남한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되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어떤 혁명, 이를테면 사회주의혁명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것 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혁명의 주체들은 북한측과 합작하기보다는 북한측까지 혁명의 대상으로 설정할 것 같다. 무력남침이나 남한혁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화전략”에 의한 통일도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특히 고려연방제의 경우 우선 3대 전제조건이 아직 철회되지 않았으며 남한측의 전제조건 수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그 실현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념과 제도를 달리하는 두 체제가 연방의 형태이든 국가연합의 형태이든 결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전혀 현실성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도적이지 않고 최종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⁴⁴⁾ 심지어 김일성 자신도 5차 당대회 연설에서 통일은 둘 중 하나로 통일일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⁴⁵⁾

44) 이 점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김세균, 「연방제 통일방안의 모순」, 『사회평론』, 1992년 7월, pp. 228-229 참조.

45) 돌베개편집부 편, 전계서, p. 323. 이와는 달리 최근 김일성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수세에 몰린 그의 희망사항을 담은 것일 뿐이다. 특별한 異變이 없는 한 남북한 관계는 남한정부의 반복되는 언명에도 불구하고 남한측에 의한 흡수통일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제 VII장

대남전략이 현실성을 갖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을 글자 그대로의 ‘對南’ 전략이 아닌 ‘對內’ 전략으로 파악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듯한 일부 세력이 남한내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북한 대남전략의 효과라기보다는 그간 남한정부의 대북전략 혹은 정책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또한 소위 “국제혁명역량”도 약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남전략이 현실성을 갖는 유일한 경우, 즉 대내전략으로서의 현실성은 어떠한 것일까?

4. 對內用 ‘통일이데올로기’

지금까지의 논의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공산화통일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산물로 일단 간주하고서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전략은 공산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로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 즉 대내용 전략의 성격이 강하며,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전략에 입각한 것인지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북한측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보인 言動은 단순한 欺瞞術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 첫째, 특정의 대화제의 등이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행동을 위장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조성된 難局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6.25 직전의 각종 대화-통일방안 제의, 1984년 10월 9일 버마 테러사건 하루전의 3자회담제의 같은 것은 위장평화공세의 전형적인 예라 할만하다.⁴⁶⁾ 최근 특사교환 관련 대남제의 역

해당부분 참조.

46) 좀더 상세한 분석은 김학준, 전계논문, pp. 570-572 참조. 반대로 3자회담 제의를 원칙상의 중대한 변화로, 즉 진지한 것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Hajime Izumi,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Okonoki (ed.), *op. cit.*, pp. 90-94. 그러나 이렇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압력을 완화하고 대미협상에서 좀더 나은 입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만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남전략이 ‘대남’ 전략으로서 비현실적이라는 점 외에도 기존 합의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면에서도 그 진지성은 의문시 된다. 실제로 남북한 기본합의 이후에도 그 합의사항을 계속 공공연히 위반함으로써 사실상 기본합의 자체를 무효화하고 있다. 합의사항 가운데 특히 대남 비방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최근의 예로 1993년 9월 3일 평양방송은 김영삼대통령에 대하여 특정 동물을 빗대어 비방하였으며, 9월 5일 평양방송은 남한 대학생들에게 “민족반역 무리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셔 버리고 새학기에 투쟁대오를 더욱 굳게 결속할 것”을 촉구하고 “총부리를 외세와 남조선 괴뢰들에게 돌려야 할 것”이라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선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3년 9월 14일자 『로동신문』은 남한정부에 대하여 “식민지 군사독재체제에 기반을 둔 파쇼체제에나 문패만 바꾸어 달았다”고 비방하였다.⁴⁷⁾ 셋째, 북한정권의 진지성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측면도 있다. 즉 북한정권은 어쩔 수 없이, 本意 아니게 통일문제로 내몰렸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제안을 내놓더라도 처음부터 진지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북한을 그렇게 하도록 내몬 것은 국제적인 압력도 있겠지만 주로 내부사정이라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일인독재 체제의 유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심각한 경제난을 糊塗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외견상 북한정권이 상대적으로 남한정권에 비해 적극적이라는 점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정권 내부에 버마테러를 지시한 강경파와 진지한 회담을 제의한 온건파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두 파벌은 최고 지도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47) 『내외통신 주간판 864호』, 1993년 9월 9일, p. A1 및 『내외통신 주간판 866호』, 1993년 9월 23일, p. B1에서 재인용.

이렇게 보면 북한의 모든 통일문제 관련 언동이 국내의 정치적-경제적 문제를 糊塗하기 위한 大型 詐欺劇에 불과한 것, 혹은 ‘반공이데올로기’에 대응되는 의미에서의 ‘통일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용도를 위한 전략 또는 전술은 표면상 절실한 통일염원을 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닌 것 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타당성과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주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의 “인민”이다. 북한의 국내정치에서 이러한 전략-전술이 얼마나 實效를 거두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후술하게 될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戰術上의 特徵

실제의 대남전략의 추진에 있어서 지금까지 북한이 활용해 온 전술은 대체로 공산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연구자가 간명하게 정리한 바에 의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은 크게 공격형 전술, 후퇴형 전술, 방어형 전술, 우회형 전술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공격형 전술에는 무장봉기전술과 인민전쟁전술, 후퇴형 전술에는 퇴각전술과 타협전술, 방어형 전술에는 게릴라전술, 평화봉기전술, 침투전술, 폭로전술, 평화전술, 중립화전술, 우회형 전술에는 통일전선전술, 인민전선전술, 인민민주주의전술이 각각 있다고 한다.⁴⁸⁾ 북한의 경우에도 스탈린이 정식화한 바로 이와 같은 전략-전술을 그들 나름대로 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남한혁명전략에 기초한 전술로서 투쟁형태의 배합, 조직형

48) 상세한 논의는 장수련,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pp. 271-333 참조.

태의 배합, 투쟁표어의 배합, 중심고리의 포착-처리 등을 활용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투쟁형태의 배합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배합, 합법-반합법-비합법투쟁의 배합,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의 배합 등을 포함하고 있다.⁴⁹⁾ 오늘날 북한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혁명이론, 특히 그 중에서 반세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론 역시 이러한 전술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북한은 그것을 실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⁰⁾ 여기에 추가하여, 앞에서 언급한 남한 정부와 인민의 분리와 그에 따른 별도의 공작, 전술의 극단적 다양성 혹은 유연성과 기만성 등을 전술상의 특징으로 들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대화와 관련하여 북한측이 실제로 보여 온 태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술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①대화 불용 전술로서 남한 당국이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대화 제의; ②대화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술로서 역제의, 수정제의, 남한측 제의 내용을 북한측의 종전 제의의 일부로 격하 혹은 남한측 제의의 의미 축소; ③대화 지연 및 중단, 즉 ‘怠業’(sabotage) 전술로서 既 합의된 의제 밖의 의제 제의, 새로운 대화창구 또는 기구의 제의, 현안으로 된 비정치적 교류-협력보다 정치-군사적 해결을 강조하는 소위 “廣幅政策” 혹은 일괄타결 주장을 통한 비정치적 교류-협력제의 거부 또는 대화 자체의 유명무실화-空轉化,⁵¹⁾ 남한혁명전략 차원의 이유를 내세워 대화 일방 중단 및 그 책임전가.

49) 각각의 내용은 장수련, 상계논문, pp. 304-309 참조.

50) 『총서 4』 전권, 특히 pp. 95-130, 142-181; 장수련, 상계논문; 김학준, 전계논문, Koh, *op. cit.* 등 참조.

51) 대화와 관련하여,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에도, “통이 크게”라는 말이 과거 오래 전부터 자주 쓰여 왔다. 예컨대 남한측의 교류-협력 우선 정책에 대하여 “통이 크게” 정치-군사문제를 우선해결 하면 그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식의 논변이다. 최근에는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을 가리켜 “廣幅政治”라는 말로 격상하였다고도 한다. 『로동신문』, 1993년 1월 28일, 『내외통신 종합판 47』, p. 23에서 재인용.

IV. 對南戰略의 決定要因

1. 약간의 一般論的 考察

공산주의국가, 특히 소련의 대외정책의 원천 혹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분석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한 연구자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 소련 대외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거시분석에 의한 것들과 미시분석에 의한 것들로 크게 양분된다. 거시분석이란 국제정치적 큰 틀 속에서 개별국가의 대외행태를 살피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한 개별국가의 국내적 특성이 그 국가의 대외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된다. 미시분석이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대외정책의 특질을 국내 정치과정의 결과로서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련의 대외정책을 분석한 학자들 대부분이 미시적 분석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그러한 분석이 소련 대외정책의 실제와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⁵²⁾

이 양자가 각기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유용성과 한계를 갖지만, 북한 대남전략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역시 후자의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주된 근거는 북한 대남전략의 경우에도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보다는 국내정치의 연장선 혹은 산물로 파악하는 것이 실제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더 적실성 있는 방법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대남전략은 대내용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대남전략의 국내정치적 차원에서의 결정요인에 주목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요인들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 또 주요 결정요인들 상호간의 관계나 비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기란 사실상

52) 김학준, 『소련외교론 序說』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pp. 6-11

불가능하다. 이는 미시분석시에 부닥치게 되는 자료부족에서 주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북한의 경우 그러한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따라서 북한 대남전략의 결정요인에 대한 접근은 초보적이고 단순한 수준에서 고려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여기서는 북한 대남전략의 결정요인을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 정치체제의 특성, 내외의 정세변화와 이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간략히 살피는 데 그치기로 한다.

2. “사람 중심”의 主體思想: 對南戰略의 “基礎”

소련의 경우 이데올로기가 대외정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대별하자면,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와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이익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이데올로기는 지도자들에게 특정의 행동을 하게 하거나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 이데올로기는 다른 고려들에 의해 동기부여된 행동을 事後에 합리화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⁵³⁾ 어느 일방의 견해가 더 유력한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은 당과 정부의 지도사상으로 당규약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구호에서 잘 나타나듯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남전략을 포함한 모든 대내외정책의 지침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리하여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엄연한 현실로 되었”다고 한다.⁵⁴⁾

53)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김학준, 상계서, pp. 83-95 참조.

54)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82년 3월 31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실제에 있어서 주체사상이 북한의 주요 대내외정책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북한 지도부의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며, 특히 그것이 대남전략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경우 이데올로기로서 맑스-레닌주의는 소련 대외정책 결정자들이 생각하고 일하는 분위기의 한 부분으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소련 지도자들에게 ①대외정책의 장기적 목표, ②세계를 보는 지식의 체계, ③분석의 방법, ④전략과 전술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⁵⁵⁾ 이러한 평가는 대체로 옳은 것으로,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전략-전술에 주목할 경우, 북한 대남전략의 근간이 되고 있는 남한혁명전략 자체가 주체사상에 기초한 이론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론”으로 정식화되어 있다. 이 이론에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어 나타난다.⁵⁶⁾ “대화전략”의 경우에도 역시 이러한 평가가 적용될 수 있다. “대화전략”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국통일에 관한 이론”으로 정식화되어 있는데, 이 이론 역시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들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 특히 이 이론은 주체사상이 그 본질적 요소로 담고 있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적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는 데서 그러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주체사상은 대남전략의 이론적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이미 본 바 처

1991), p. 118.

55) 김학준, 전거서, pp. 96-101.

56) 주체사상의 내용 자체, 그리고 그것이 혁명이론에서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연각,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그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분석」(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년), 특히 pp. 118-119 참조.

럼 실제의 대남전략이 이론과 일치한다면, 그 일치하는 정도 만큼 주체사상은 실제 대남전략의 기원 내지 결정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主體的 政治體制’: 好戰性的 뿌리

소련 정치체제를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보는 학자들은 소련 대외정책 역시 그러한 체제의 속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ezezinski)에 따르면 대외 팽창주의는 전체주의체제의 특징 내지 장후라고 한다. 아렌트(Hannah Arendt)와 레슈타르(John S. Reshetar) 역시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렌트에 의하면, 전체주의체제의 지도자는 항상 전체주의적 운동의 신화에 바탕을 둔 허구적 세계를 만들어내고 이를 유지해야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⁵⁷⁾ 이것은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력한 반론도 있다. 즉 소련의 경우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체주의체제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맑스-레닌주의에서 나온 것이며 또 소련을 단순히 전체주의체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⁵⁸⁾

이와 같은 주장들과 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우리 논의의 초점은 우선 북한 정치체제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모아진다. 지금까지 북한 체제에 관하여 일인지배체제, 족벌체제, 왕조체제, 전제체제 등 구구하게 호칭되어 왔지만, 어느 정도 진지한 체제규정 노력을 갖춘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 이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커밍스(Bruce Cumings)의 연구와 이상우, 이정수 등의 연구이다.⁵⁹⁾ 커밍

57) 이상 김학준, 전게서, pp. 44-45에서 소개-정리된 바에 의거한 것임.

58) 이것은 Richard R. Rosser의 반론으로서 역시 김학준, 상게서, p. 45에 의거한 것임.

59) Bruce Cumings,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스의 경우는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독특한 유형의 사회주의적 協議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⁶⁰⁾ 그의 연구는 북한 체제의 매우 중요하고 특징적인 일면을 잘 포착하고 있으나, 협의체 혹은 협의주의(corporatism)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을 결하고 있어 그만큼 설명력을 잃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협의체 혹은 협의주의는 정치체제 수준에서의 규정이라기보다 주로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 체제를 전체주의체제로 보는 이상우 등의 연구는 우선 분명한 개념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주의를 끈다. 이상우의 경우 주로 프리드리히-브레진스키 모델을 準據하고 있으며, 이정수의 경우 린스(Juan J. Linz)의 전체주의론에 입각해 있다. 그리고 이들의 논의는 바로 정치체제 수준에 관한 논의이며, 또한 북한의 현실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전체주의 이론가들이 말하는 특징 혹은 구성요소를 전부 혹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다음의 두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매우 특이한 전체주의체제 혹은 ‘주체적 정치체제’라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수령”은 전체주의적 독재자를 능가하는 ‘현대판 전제군주’이다. 이 수령은 권력의 독점 면에서 전체주의적 독재자를 능가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王朝的 유물인 권력의 長子相續을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제군주’이지만, 과거의 전제군주들과 달리 완전한 중앙지시-통제하 계획경제체제와 현대의 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대판’ 전제군주이다. 금

Studies, Vol. 4 (1982/83), pp. 269-294; 이상우, 「김일성체제의 특질」, 이상우 외, 『북한 40년』 (서울: 을유, 1989), pp. 13-30; 이정수, 전제논문.

60) Cumings, *ibid.*, p. 283. 그리고 존 할리데이도 북한은 민주국가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며, 그렇다고 맑스주의국가인 것도 아니고 스탈린주의국가도 아니고, 또 유교국가도 아니라고 하면서 커밍스의 견해에 동의할 것을 표하고 있다. 존 할리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공화국인가?」, 쿠친스키 외 편,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381-419.

세기 이후 이와 같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독재자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둘째, 정치체제 자체의 구성요소 혹은 그것을 지탱해주는 사상-이론적 支柱로 여겨지는 주체사상 역시 매우 특이한 것이다. 주체사상은 현대의 모든 권위주의 내지 독재 체제의 이데올로기가 지닌 일반적 특징⁶¹⁾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특유의 한국적 권위주의와 저항민족주의의 결합체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주체사상의 正體는 대외적 저항주의(〈호전성〈팽창주의)와 대내적 反민주지향의 결합체, 전사의 動態性(dynamism)과 주로 정서적인 호소력에, 그리고 그 盲點에 후자가 '寄生'하는 관계로 맺어진 사상체계라 할 수 있다.⁶²⁾ 북한 체제는 이와 같은 두가지 특이한 특징을 추가적으로 가진 전체주의체제 혹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주체적 정치체제'이다.⁶³⁾

북한 정치체제를 이와 같이 규정할 때, 북한 대남전략의 일관된 호전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주체사상인가 체제의 속성인가? 이 문제는 결국 주체사상과 체제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된 것이다. 語義 자체에 주목할 때 無形인 사상이 有形인 체제의 일부일 수는 없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단순히 정치체제의 한 특징이나 사상-이론적 지주에 그치는 것으로 여길 수는 없다고 본다. 이보다 주체사상은 체제에 깊숙히 내면화되어 체제로 體化된 것, 말하자면 그 자체가 바로 물질 요소로 전환된 사상이거나, 아니면 체제라고 하는 물질 요소가 그 체제의 정상에 위치한 사람들의 뇌수에 반영되어 거기에서 사상이라는 형태

61) 20세기 이후 현대의 모든 권위주의 체제, 정당, 운동에서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 특징은 급진적 민족주의, 反자유주의, 反의회주의, 反부르조아 정서, 인종주의 등 5개 요소로 볼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Amos Perlmutter, *Modern Authoritarianism: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pp. 1-88 참조.

62) 주체사상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김연각, 전계논문, 특히 p. 138 이후 참조.

63) 북한 체제의 성격규명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연각,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모델에 관한 연구: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규명을 중심으로」,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 3』 (1991), pp. 351-389 참조.

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긴다. 이렇게 보면 북한 대남전략의 호전성은 주체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체제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양자는 동일한 실체의 表裏를 이루는 것이고 양자간의 차이는 단지 강조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

대남전략의 호전성은 이와 같이 이해되는 주체사상 혹은 '주체적 정치 체제'의 저항민족주의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논의에서 저항민족주의는 대내적 반민주주의 혹은 권위주의라는 기생충의 '宿主'이기 때문에 그 기생충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도 이상의 생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갖는다. 달리 말하자면, 대남전략(과 대미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반)에서의 일정한 정도 이상의 호전성은 기존 체제 자체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内外 情勢의 變化와 북한 지도부의 情勢認識: 守勢化의 원인

어느 국가의 경우를 막론하고 내외의 정세변화가 주요 정책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널리 알려진 체계이론(System Theory)은 政治體(polity)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 즉 정치체가 환경으로부터의 투입을 전환하여 정책이라는 산출로 내놓으며 이것이 다시 투입으로 還流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결국 정책이란 환경에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⁶⁴⁾ 이미 보았듯이 북한의 대남전략 역시 일관성 속에서 일정한 변화를 보여 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곧 내외의 정세변화에

64) 상세한 논의는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Alfred Knopf, 1953), pp. 90-148;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eds.),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8), pp. 2-10 참조.

따른,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처해 있는 내외의 정세는 장기적으로 계속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북한의 대남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세변화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또 다양한 내용의 정세변화 가운데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변화일까? 그리고 그것이 전략변화에 미친 영향의 정도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정확한 것이 되기 어렵지만, 북한 지도부가 정세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며 또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위의 질문들에 접근하는 것은 한가지 적절한 방법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세변화 자체보다 주관적인 정세인식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고려에서 여기서는 북한 지도부의 言辭에서 나타나는 바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지도부가 인식하는 중요한 정세변화는 크게 국제정세, 남한정세, 국내정세으로 대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대별되는 내외 정세의 변화를 주요 시기 주요 연설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무력통일전략 시기인 1948년 시점 북한측의 정세인식은 대단히 자신감에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반동세력에 대치하는 민주역량의 장성”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2차대전에서 소련의 승리와 戰後 강대국으로의 부상, 중공군의 일정한 군사적 승리, 동구제국에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진행 등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정세 인식은 미국의 “식민지에속화 정책”하에 우익진영의 일부를 포함한 전인민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

다. 이 시기까지는 아직 미국의 존재에 대하여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아마도 이 해 4월에 예정된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성공적 개최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인다.

국내정세에 대해서는 “위대한 민주개혁의 성공과 경제건설”의 결과 “위대하고도 엄숙한 민족적 자존심과 자신성”을 가지게 되었으나 아직 많은 “사업상의 약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여기서 “약점”이란 경제건설에 대한 지식, 경험, 운영방법 미숙 등 비교적 사소한 것들을 들고 있다. 이보다는 조선 전 역사에서의 “영예스러운 위대한 사변”에 대하여 대단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⁶⁵⁾

대체로 이 시기 북한의 정세인식은 북한측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정세인식은 해방 직후부터 6.25 이전까지 일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력통일전략은 이와 같은 낙관적 정세인식과 “자신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았을 것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②남한혁명전략이 정식화된 1960년대 중반의 정세인식은 여전히 낙관을 위장하고 있으나 심각한 불안감을 보여준다. 6.25 이후 이 시기까지 국제적으로는 스탈린 사망과 흐루시초프 집권, 중-소분쟁과 사회주의권의 분열, 한-일관계 개선 등의 변화가 있었고, 남한에서는 4.19와 5.16이 잇달아 발생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김일성 1인 중심의 권력구조가 확립되고 대중-소자주노선을 핵심으로 하는 초기 주체사상이 제기-정립되었다. 이러한 정세 변화 가운데서 1960년대 중반 시점에서 중요한 정세변화로 인식된 것은 한-미-일의 동향에 대한 것도 포함되지만, 주로 중-소분쟁으로 인한 사회주의권 내부의 갈등과 북한 “자주성”의 침해 등과 관련된 위기감이라 할 수 있다.

65)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사업 결산보고」(2차당대회, 1948년 3월), 들베 개편집부 편, 전계서, pp. 37-59.

남한혁명전략이 최초로 정식화된 모습으로 제시된 1965 연설에서 김일성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각국 공산당이 자주성을 가져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함으로써 각각 소련과 중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물론 이 연설에서 남한혁명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 성격 및 전략적 방도들을 제시하기도 한다.⁶⁶⁾ 그러나 이 시기 북한의 정세인식을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은 1966년 연설이다.⁶⁷⁾

먼저 국제정세 전반에 대하여 김일성은 “매우 복잡”하다고 하면서, “美帝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 - - 더욱 더 발악하고 있으며 국제정세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주의진영과 국제 공산주의운동 내부에서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리하여 “이러한 사태는 세계 혁명운동의 발전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며 우리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한다. 여기서 미제가 “극도로 긴장하게” 만든 국제정세는 주로 한-미-일 간의 “사실상 3각 군사동맹”의 형성과 월남전 擴戰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문제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 문제는 중-소분쟁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 “수정주의”와 “교조주의”로 표현되는 중-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주성”의 중요성 강조와 그 침해에 대한 비판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주성에 대한 침해 문제이다. 이 점은 이 연설 자체에서도 뚜렷이 나타나지만, 이 무렵 북한측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성” 침해에 대한 직설적인 공격을 퍼부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확인된다.⁶⁸⁾

66)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1965).

67)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연설, 1966), 돌베개편집부 편, 전계서, pp. 423-483.

68) 대표적인 예로서 1964년 9월 7일자 『로동신문』 사설 「왜 평양경제토론회

남한정세에 대해서는 위의 “3각 군사동맹” 관련 언급 외에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남조선에서의 혁명역량의 강화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남한 지역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은 “미제의 전쟁정책에 복무하는 일대 병영으로 되고” 있지만, “극소수의 반혁명 세력은 더욱 더 고립되고” 있다고 본다. 남한혁명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1965년 연설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연설이나 이 연설에서 모두 그렇게 보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혁명의 중요성 강조는 남한정세 자체의 분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다른 사정이란 남한정세를 제외한 해외 정세 전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남한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국내정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혁명기지가 불패의 역량으로 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보다는 “북반부를 우리 혁명의 위력한 기지로” 만드는 일을 압도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 연설이 행해진 대회 자체가 임시대회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세변화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종래 비슷한 級의 연설에서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의 성과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바로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첫번째로 든 당면과제로 “구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 - -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로 미루어 이 시기 정세인식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대체로 이 시기 북한측의 정세인식은 위기감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무력통일전략에서 남한혁명전략으로의 변화를 가져온 한 요인이 되었을 것

의 성과를 헐뜯으려 하는가?: 제 2차 아세아경제토론회에 대한 뿌라우다의 비방을 논박함」 및 1966년 8월 12일자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 참조.

으로 추측된다.

③남북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 초 북한측의 정세인식은 한층 더 위기감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이 시기까지 국제적으로는 미-중 및 미-일 접근과 미-소 네탕트가 이루어졌고 남한에서는 대통령선거와 공화당의 辛勝 및 체제의 경직화가 심화되었으며 남북한관계 역시 공비남파 등으로 인하여 경색되어 있었으며, 국내적으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사정의 악화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서 1970년대 초 북한측의 정세인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미국-중공 관계정상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남한정부에 의한 전쟁위험의 증대, 북한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감이라 할 수 있다.

1970년의 제 5차 당대회 당시 김일성은 국제정세가 “오늘도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평화전략」,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미-일의 결탁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여기서 미국의 「평화전략」이란 미-소 네탕트와 미-중공 관계정상화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⁶⁹⁾ 이에 대한 우려는 1973년의 한 연설에서 “너욱 더 교활한 양면전술”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평화의 간판 밑에 - - - 큰 나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작은 나라들을 힘으로 내리눌러 자기의 식민지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⁷⁰⁾ 그리고 이 무렵의 북한측의 정세인식에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과 미-일결탁에 대한 우려도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남한정세에 대해서는 “광범한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적극화”되었지만,⁷¹⁾ 미제의 “새 전쟁도발 음모”와 “미제의 비호 밑에 일본군국주의자들

69)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5차당대회, 1970년 11월), 돌베개편집부 편, 전계서, pp. 271-350.

70) 김일성, 「체코 당 및 정부 대표단장 후사크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김일성 연설」(『로동신문』, 1973년 6월 24일), 통일원, 『남북통일제의 관련자료총람 1』, pp. 1351-1362.

71) 김일성, 상계연설.

이 또한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화하고” 있고 “남조선의 괴뢰도당들은 미일반동들의 이중의 앞잡이로서 자기 상전들의 전쟁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분별없이 날뛰고” 있어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협이 날을 따라 더욱 더 커가고” 있다고 한다.⁷²⁾ 여기서 미국의 “새 전쟁도발 음모”의 내용으로는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 및 한국군현대화 지원 등을 제시하며, 일본의 책동은 사또정권하 일련의 군국주의적 언동을 들고 있으며, 한국측의 동향은 주한미군 감축 반대와 “전시비상동원체제”화 및 “군사화” 등을 들고 있다.

국내정세에 대해서는 의견상 “위대한 총화”를 제시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⁷³⁾ 그러나 1972년 미국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일성은 국방비 부담의 과중함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면서 군축을 제안하고, 또 국방비의 대폭삭감을 공개함으로써 경제사정의 악화를 숨기지 않고 있다. 국방비의 경우 1971년 예산의 31.1%에서 1972년에 17%로 일방적으로 낮추었다고 한다.⁷⁴⁾ 실제로 이 시기 북한의 경제사정은 제 1차 7개년계획의 실패로 이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계획은 1961년에 시작하였으나 3년 연장되었다는 점에서 그 실패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 계획 역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다.⁷⁵⁾

이렇게 볼 때 이 시기 북한의 정세인식은 대남전략의 후퇴를 거의 불가

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4기 5차회의에서 한 허담외무상 보고: 현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로동신문』, 1971년 4월 13일), 『남북통일제의관련자료총람 1』, pp. 1052-1080.

73) 김일성, 전계연설 (1973).

74) 김일성,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동경지국장 해리슨과 한 담화」(1972년 6월 21일), 『남북통일제의관련자료총람 1』, pp. 1142-1152.

75) 이 계획도 2년 연장되었다. 계획기간의 차질은 모두 북한측의 공식발표에 의거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전편 참조.

피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④고려연방제 제안이 나온 1980년 시점의 정세인식⁷⁶⁾에서는 주로 권력승계문제의 심각성이 엿보인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이 시기까지 국제적으로는 월남 패망, 미-중밀착과 일-중 수교, 중국 시도부의 교체와 실용주의 노선 채택,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한 미-소관계 경색 등의 변화가 있었고, 남한에서는 유신체제의 몰락, 5.17과 전두환정권의 출범 등이 있었으며, 국내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통한 1인독재 가속화, 지속적인 경제난 악화, 김정일의 전면 부상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 중에서 1980년 당시의 정세인식에서는 주로 권력승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국제 무대에서 반제 자주 역량이 장성 강화된 반면에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심히 약화”된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해방 직후부터 일관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밖에 다른 언급들도 종래 의례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들 뿐이다. 예컨대 “빨력 불가담 나라들” 및 사회주의진영의 단결, 각국의 자주성 존중 등에 대한 강조 같은 것들이나.

남한정세에 대해서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 책동과 賣國背族的 책동”에 대항하여 인민들이 “용감히 싸움으로써 - - - 커나란 타격”을 주었지만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 파쇼 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매우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어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되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고려연방제 제안의 배경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서 1970년대 초 “전쟁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는 인식과 대조를 이룬다.

국내정세에 대해서는 “3대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높이 평가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 임무”로 제시한다. 여기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우선 이것은 종래 누차 강

76) 김일성,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6차당대회, 1980년 10월), 돌베개편집부 편, 전계서, pp. 351-420.

조해 온 당의 “유일사상화”와 대조된다. 이 양자는 적용 대상의 범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만, 이보다도 양자가 강조되는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유일사상화”가 강조되는 맥락은 주로 당내 권력투쟁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경우는 거의 직접적으로 김정일과 연결되는 것이다.⁷⁷⁾ 물론 같은 연설에서 강조된 혁명위업의 “계승 발전”이나 “대를 이어 계승 완성”의 경우는 直說的인 것이다.

그러면 고려연방제 제안은 권력승계문제와 관련된 내적 취약성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다른 요인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경제사정의 악화일지 모른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1970년대의 북한경제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2차 7개년 계획도 1980년 10차 당대회 당시 김일성의 豪言, 즉 1980년 9월 시점에 이미 3개년 목표치를 달성하였다고 하는 발표와 어긋나게 사실상 2년 연장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고려에서 권력승계문제와 함께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한 인식이 고려연방제로의 부분적 후퇴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고 볼 수 있다.

⑤1990년 이후 최근의 정세인식은 체제붕괴 내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위기인식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듯 하다. 198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레이건 집권, 미-소 신냉전과 화해, 고르바초프 집권, 소련과 동구에서의 개혁과 체제붕괴, 독일통일, 중국에서의 개혁-개방 가속화 등이 이루어졌고 남한에서는 6.10투쟁-개헌-6공출범-文民政府등장, 아시안 게임 및 올림픽의 盛了, 북방정책의 적극 추진과 한-소 및 한-중 수교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김정일로의 사실상 권력이양, 경제난 심화, 외교적 고립의 심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 중에서 최근의 정세인식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체제붕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이라 할 수 있다.

77)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참조.

국제정세에 대하여 강성산이 요약-제시한 바에 의하면,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지배와 예속이 없는 세계질서를 꿈꾸면서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을 정치-경제적 압력과 군사적 위협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민족적 자주권이 유린되고 지역분쟁과 종족 분쟁, 종교분쟁이 그칠 사이 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특히 “조선반도는 - - - 제국주의 반동들의 힘의 정책의 창끝이 돌려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곳”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⁷⁸⁾ 이는 곧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힘이 북한 체제붕괴에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인식은 김일성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 즉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지난 해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 질식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 위업을 말살해 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한다.⁷⁹⁾ 다시 강성산에 의하면, 이러한 책동에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보류한 것,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한 것, 핵사찰 문제를 유엔에 이관한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외부세력들이 그 어떤 강압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는 새로운 도화선으로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겨레는 분열의 비극 외에 열핵전쟁의 참화까지 입게되는 민족적 대참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⁸⁰⁾ 이것은 공공연한 전쟁도발 꾀책이지만, 그만큼 북한측의 붕괴위기인식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한정세에 대한 인식에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가운데 나

78) 강성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대단결 강령을 채택할 데 대하여」(최고인민회의 제 9기 5차회의에서 행한 보고, 중앙방송, 1993년 4월 7일), 『월간 북한동향』, 1993년 4월, pp. 79-93.

79) 김일성, 「1993년 신년사」(중앙방송, 1월 1일), 『내외통신 종합판 47』, pp. 9-15.

80) 강성산, 전계 보고.

소간 남한정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 처럼 보이며, 남한측의 흡수통일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남한정부에 대한 비방과 대화제의, 남한 인민들에 대한 통일전선전술 구사 등에 깔린 남한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종전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파쑈”정권이 아닌 민주정권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태도가 도처에서 엿보인다. 즉 최근 남한정부에 대한 비판은 “파쑈정권”이라는 측면보다 비자주적인 정권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앞서 인용한 강성산의 보고는 남한정부에 대하여 “문민정치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속적인 역대 군사파쑈정권과 계선을 명백히 끊자고 한다면 웅당 민족자주를 지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며, 말로써만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현재의 남한정부는 정책의 차원에서 민족자주를 실천하기만 하면 “예속적인 역대 군사파쑈정권”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신년사에 나타난 김일성 자신의 인식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그리고 강성산이 제시한 4개 요구사항은 고려연방제의 3대 전제조건 처럼 남한정부로서 원천적으로 수락불가능한 내용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로서는 전술상의 후퇴, 따라서 상황의 전개여하에 따라 何時라도 反轉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앞으로의 변화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뜻깊은 시사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은 완화된 대남인식이 내적인 체제위기 인식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인식변화가 남한에서의 문민정부 출범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북한의 내적 체제위기의 심화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다. 지난 1991년 8월 조평통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김일성은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일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함으로써 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직설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⁸¹⁾ 현재까지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泣訴型’이라 할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恐喝型’이라 할만한 것이다. 전자는 동포애적 차원에서 “민족대단결”의 당위성을 주로 정서적 측면에 호소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흡수통일 추진시 一戰不辭하겠다는 태도를 강조하는 방식이다.⁸²⁾

국내정세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自讚을 빼면 전례없이 심각한 위기인식으로 나타난다. 북한측의 위기인식은 주로 내부의 “배신자들”에 대한 우려와 경제난에 대한 인식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1993년 3월에 발표된 김정일의 담화 「사회주의에 대한 꾀방은 허용될 수 없다」는 북한 체제내의 “배신자들”에 대한 우려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담화는 그 제목에서부터, 그리고 그 청중이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공산권의 붕괴 원인을 외부 제국주의의 소행에서 찾던 종래의 입장과 달리 “내부에서 생긴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반혁명적 책동” 특히 “그 상층부에 혁명의 배신자들”의 소행을 “결정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 그리고 간접적이거나 도처에서 북한 내부의 “배신자들”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⁸³⁾ 그리고 경제난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일성은 1993년도 신년사에서 전년도에 이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속망”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의식주 문제의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⁸⁴⁾

81)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1993년의 10대강령에서도 흡수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강성산, 전계보고.

82) 김일성, 전계담화(1991) 및 강성산, 전계보고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83) 전문은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꾀방은 허용될 수 없다」(중앙방송, 1993년 3월 4일), 『월간 북한동향』, 1993년 3월, pp. 87-103 참조. 관련된 분석은 『내외통신 종합판 47』, pp. 30-34 참조. 그리고 이러한 위기인식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에”를 강조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중 “수령에 대한 충실성” 및 “혁명적 동지에” 항 참조.

84) 김일성, 「1993년 신년사」. 이 신년사에서는 이밖에도 석탄-전력 등에

이와 같은 내외정세 인식, 특히 체제위기 인식은 남북합의서와 그 후속 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대단결”의 강조 및 그것과 관련한 부분적인 후퇴 역시 그러한 정세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인식은 한편으로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강경 대응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노골적인 전쟁공갈 역시 그러한 정세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V. 今後 對南戰略 變化展望

1. 두 方向의 힘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다음의 두가지 방향의 것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戰’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和’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앞서의 논의에서 지적하였듯이 전자는 주체사상 혹은 정치체제 자체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외적 저항민족주의 요소와 대내적 권위주의 요소가 숙주-기생충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 체제는 그 생존을 위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저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은 특히 체제가 위기에 놓이게 될 때 더욱 현저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 체제가 처해 있는 내외의 상황이 극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본다면, 대외적 ‘저항’의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한

너지난, 수송난, 화학비료난, 주택난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잘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는 김연각,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pp. 251-255 참조.

이와 같은 내외정세 인식, 특히 체제위기 인식은 남북합의서와 그 후속 합의서를 채택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대단결”의 강조 및 그것과 관련한 부분적인 후퇴 역시 그러한 정세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인식은 한편으로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강경 대응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노골적인 전쟁공갈 역시 그러한 정세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V. 今後 對南戰略 變化展望

1. 兩 方向의 힘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다음의 두가지 방향의 것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戰’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和’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앞서의 논의에서 지적하였듯이 전자는 주체사상 혹은 정치체제 자체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외적 저항민족주의 요소와 대내적 권위주의 요소가 숙주-기생충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북한 체제는 그 생존을 위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저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은 특히 체제가 위기에 놓이게 될 때 더욱 현저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북한 체제가 처해 있는 내외의 상황이 극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본다면, 대외적 ‘저항’의 필요성은 더욱 더 절실한

너지난, 수송난, 화학비료난, 주택난 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잘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는 김연각,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pp. 251-255 참조.

것으로 된다. 이 때 '저항'의 내용은 일단 더욱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대외 정책 혹은 전략일 수 있겠다.

그러나 '저항'의 내용을 반드시 여기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내적 권위주의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의 '저항'만이 아니라 인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내용의 것이라면 다른 어떤 것이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테면 대남관계 혹은 대미-일관계에서의 가시적인 진전과 같은 것들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체제의 속성에서 나오는 변화의 힘은 주로 '戰'으로 힘이지만 부분적으로는 '和'로의 힘이기도 하다.

'和'로의 힘은 그와 같은 체제속성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체제 자체의 생존능력 결여에서 나오는 힘이라 할 수 있다. 기생충이 살아남기 위한 조건으로 숙주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한 다른 조건 면에서 심각한 문제, 대외적 저항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 시점에서 북한측이 안고 있는 그러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난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외적 '저항'이 오히려 방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和'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이 변화의 내용은 일단 혁명전략의 왜소화와 "대화전략"의 격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두가지 방향의 힘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물론 양자는 상반되는 방향의 힘이다. 그러나 양자의 변동 폭은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즉 전자는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이에 비해 후자는 예컨대 경제난이 크게 완화될 경우 거의 0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힘이다. 달리 말하면, 전자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힘이고 후자는 유동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는 일정한 시간단위를 놓고 볼 때 相殺的인 힘이지만, 특정 시점에서 볼 때는 양자택일적으로 작용하는 힘 또는 상호별도로 동시에 작용하는 힘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금후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의 여지와 한계, 그리고 그 대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평가 혹은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變化의 餘地와 限界

먼저 '戰'으로의 변화 여지와 한계는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순전히 논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 변화의 폭은 전면적인 남침에서부터 言辭上의 남침협박 혹은 공갈에 이르기까지의 폭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범위 내에 속하는 전술의 내용으로는 양 극단 외에 부분적인 군사적 도발과 무력시위를 상정할 수 있겠다. 언사상의 공갈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論外이다.

①전면남침의 결과는 북한의 자멸이거나 적어도 남북한 공멸로 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북한측이 이러한 선택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부분적인 군사적 도발의 경우 역시 북한이 치르게 될 비용은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대화가 단절될 것이고 미-일과의 수교교섭도 크게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심지어 미국이나 남한측의 강경대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선택 역시 진지한 검토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③무력시위의 경우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범주에 드는 것들도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북한측이 활용해 온 수준

은 준전시상태 선포나 전군 비상경계령 발동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기동 훈련 등을 통한 해상 또는 공중에서의 무력시위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 경우에 따라 남한의 영해 또는 영공 침범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결국 '전'의 상한선은 이 부근 어디 쯤에서 형성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和'로의 변화 여지와 한계는 얼마일까? 역시 순전히 논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 변화의 폭은 남한측의 통일방안의 전면수용에서 부터 북한측 통일방안의 추가적 후퇴에 이르기까지의 폭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①남한측의 통일방안을 전면 수용할 경우 이 결과는 곧 북한 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이 될 것이므로 북한측이 이 선택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측 방안은 단계적이고 교류-협력 우선의 방안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방안에 따르면 남한당국의 거듭되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흡수통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 점은 북한측도 인식할 것이므로 체제가 붕괴되기 직전까지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②북한측 통일방안의 부분적인 변화는 지금까지 보아 온 바와 같으며,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한다면, 그 변화의 범위는 체제유지에 危害가 되지 않는 선까지라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남한혁명전략의 완전 포기 직전까지가 그 한계라 본다. 이 전략은 그 자체가 매우 유연한 전략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반제" 부분이 북한 체제의 유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기할 필요성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혁명전략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반제와 반파쇼는 이론상 불가분의 것이지만 북한측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영삼정부에 대한 인식에서 이미 이 양자를 분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일 북한측이 이 양자를 분리한다면 이 전략의 유연성은 그만큼 커진다. 그리고 반제 혹은 자주성의 내용 역시 탄력적이며 恣意的

인 것이다. 예컨대 자주성의 내용 중 하나인 자립경제에 주목할 경우 남한은 정치-군사적 대미의존을 완전히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에 걸려 비자주적일 수 있다(이 경우 물론 남한경제의 대외종속 여하는 북한측의 편의주의적 해석여하에 따라 가변적이다). 따라서 북한측은 이와 같은 유연하고 편리한, 그리고 체제유지에도 필요한 “반제”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결국 ‘和’의 상한선은 “반제”의 포기 직전까지라 할 수 있다. 이 선은 달리 말하면 북한측이 하시라도 변화를 철회하거나 反轉시킬 수 있는 선이다.

3. 變化의 大體的 方向과 內容

가. 전략의 兩極化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서 볼 때 먼저 북한의 대남전략이 앞으로 양극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종래의 대남전략은 그 특징으로서 유연성 내지 전략 카드의 다양성을 보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유연성 혹은 다양성의 폭이 현저히 좁아지면서 ‘和’와 ‘戰’ 양면으로 극단화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론”의 수준에서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실제의 상황전개, 특히 체제붕괴의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이에 대하여 북한지도부도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측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는 ‘화’와 ‘전’의 양극단 쪽으로 더욱 치우치게 될 것이다.

현재도 이미 이러한 양극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의 양극은 한편으로 “민족대단결”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남한혁명전략의 왜소화-수정 조짐을 보이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言辭上的 공갈과 낮은 수준의 무력시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서 나타나는 변화는 물론 反轉 가능한 것이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예고하는 뜻깊은 것일 수도 있다. 특히 후사의 가능성에 주목할 때 아래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혁명전략의 후퇴 내지 사실상 포기과 “대화전략”의 전략으로의 격상이 전망된다. 그리고 이미 지적하였듯이 양극화된 두 전략은 동시적으로도 또 선택적으로도 구사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전술차원에서의 변화는 “민족”을 앞세운 평화공세 강화와 전쟁위협을 활용한 ‘공갈’ 전술, 이를테면 포커게임에서의 블러프(bluff)戰術 같은 것이거나 同伴自殺威脅戰術 (brinkmanship) 같은 것으로 더욱 경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즉 ‘泣訴型’ 전술과 ‘恐喝型’ 전술을 더욱 활용하게 될 것이다.

나. “대화전략”의 格上和 혁명전략의 사실상 拋棄

이미 상당 수준 진척되어 온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대화 전략”은 완전한 전략 차원의 것으로 격상되고 혁명전략은 사실상 포기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대화전략”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전술 차원의 것이며, 혁명전략이 대남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나타나고 있는 조짐만으로도 변화의 속도와 폭은 더욱 가속화되고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혁명전략은 별도로 의연히 살아 있지만, 이와 중첩적인 “대화전략”에서 이미 반제와 반파쇼가 분리되어 반제만이 민족대단결의 전제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는 1980년의 고려연방제의 경우 혁명전략이 거의 원형 그대로 3대 전제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점과 대조된다. 또한 고려연방제가 상정한 統一像인 1민족 1국가 2정부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로 후퇴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두가지 변화를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 推論에 의하여 그 연장선을 그어보면, 이 다음 단계의 변화는 7.4공동성명 및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 천명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 가운데 민족대단결을 최상위 개념으로 격상시키고 자주-평화 등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 즉 그것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1국가 2제도 2정부는 1국가 2제도 2지역자치정부로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대남전략의 근간으로서 혁명전략이 아닌 '민족대단결전략'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러 혁명전략은 반파소를 상실한 채,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혁명 자체를 상실한 채, 단지 '민족대단결전략'의 일부로서 그것을 위한 하나의 원칙에 불과한 자주 원칙으로 격하될 것이다. 그리하여 공산화통일이라는 목적마저 2선으로 밀려나고 체제수호가 대남전략의 1차적 목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대단결전략'에서 통일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거의 상실한 채 현 상태에서 조금 개선된 모습의 사실상 영구분단과 동의어로 간주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논리적 추론에 의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전망하에서 볼 때도 역시 전술 차원의 변화는 '민족'을 앞세운 평화공세 강화로 전망된다. 아울러 반제투쟁을 위한 통일전선전술도 강화될 것이다.

다. 非現實性 및 對內用 이데올로기化的 深化

대남전략의 비현실성과 대내용 '통일이데올로기'적 성격은 이미 현저한 특징을 이루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특징은 모두 체제의 생존력 저하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체제의 생존력은 더욱 더 저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의 비현실성은 10대강령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강령은 대단결 자체의 당위성과 필요성 만을 10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도는 거의 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단결은 오로지 異民族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민족의 단결이다. 이러한 단결은 실제로 이민족의 침략을 당했거나 그것이 임박했을 때에나 필요하고 또 가능한 단결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害毒스러운 것이며 또한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다. 이민족과의 戰時 혹은 準戰時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대 단결이 가능할까? 단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대단결이 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민족대단결을 진정으로 바라기 때문에, 민족 내부 反민족분자들의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는 편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현실성이 더 심화되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 그것은 아마 맹목적인 외국혐오증일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힘은 체제의 속성과 붕괴위기이며 그러한 힘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방향의 힘도 있다. 즉 서방과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그것이다. 이 상반되는 힘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며 따라서 어느 선까지 외국혐오증으로 나아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갈수록 언사상의 정책(verbal policy)과 실제 정책(real policy) 사이의 괴리가 커질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대남전략의 비현실성은 대내용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表裏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대내용 대남전략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실제에 있어서의 비현실성과 함께 외견상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간절한 통일염원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10대강령에서 나타나는 현 단계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외견상 실현가능성보다 감상적 통일염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족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금후의 변화를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성과 정서적 訴求(appeal)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효과 면에서나 정치적 부담 면에서나 후자가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은 후자에 더욱 크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실성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이때 만일 남한측이 현실성 높아진 북한측의 제안을 전면 수락해버린다면 그것은 북한측으로서도 큰 낭패일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측은 이미 언급한 대화에서의 ‘怠業戰術’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술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거시적인 시간단위에서 볼 때 미봉책 혹은 시간연장책에 불과한 것이다.

VI. 結論: 對處方案의 摸索

1. 하나의 原則: ‘민주화 = 통일역량 강화’

통일은 우리의 국가적 민족적 大事이다. 이것은 새삼스럽게 재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굳이 언급하는 까닭은 이러한 대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그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일의 전략-전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맥락 속에서 북한 대남전략에의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통일전략-전술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가지 점을 반드시 考慮해야 한다고 본다. 즉 첫째, 통일은 한민족 대다수에게 바람직한 것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민족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금후의 변화를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성과 정서적 訴求(appeal)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효과 면에서나 정치적 부담 면에서나 후자가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은 후자에 더욱 크게 의존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현실성을 높여야만 할 것이다. 이때 만일 남한측이 현실성 높아진 북한측의 제안을 전면 수락해버린다면 그것은 북한측으로서도 큰 낭패일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측은 이미 언급한 대화에서의 ‘怠業戰術’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술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거시적인 시간단위에서 볼 때 미봉책 혹은 시간연장책에 불과한 것이다.

VI. 結論: 對處方案의 摸索

1. 하나의 原則: ‘민주화 = 통일역량 강화’

통일은 우리의 국가적 민족적 大事이다. 이것은 세삼스럽게 재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굳이 언급하는 까닭은 이러한 대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그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일의 전략-전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맥락 속에서 북한 대남전략에의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통일전략-전술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가지 점을 반드시 考慮해야 한다고 본다. 즉 첫째, 통일은 한민족 대다수에게 바람직한 것이

어야 한다는 점, 둘째, 그러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남한측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두가지 점에 대한 고려로부터 하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 전반의 더 많은 민주화,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더 공정한 분배가 바로 한민족 대다수에게 바람직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원칙이다.

먼저 한민족 대다수에게 바람직한 통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반봉건혁명”을 통한 통일, 그리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거쳐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즉 “모든 사회성원들이 다 수령의 사상 의지 대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통일이어서는 결코 안된다.⁸⁵⁾ 또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韓國病 擴散’을 내용으로 하는 통일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물론 이 양사는 害惡의 정도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고 노력하지 않는 후자와 같은 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통일인가? 정부당국의 답변에 따르면, 그것은 1민족 1국가하에 자유-평등-인간존엄의 구현을 통하여 민족복리의 증진을 이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⁶⁾ 이러한 統一像은 굳이 국민적 합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至當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통일상 자체가 그것의 실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즉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정부당국의 단계적 통일방안은 (그 국민합의-공존공영-민족복리라고 하는 “정신적 基調”와 함께)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85) 이는 북한의 남조선혁명론 및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론(『총서 5』)이 상정하고 있는 통일과 이상사회이다.

86) 한완상, 「남북한관계와 통일정책의 기초」(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한완상 부총리 초청 정책포럼에서 행한 연설, 1993년 6월 23일).

아무리 좋은 방안이라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無用之物이다. 지금까지 좋은 통일방안이 없어서 통일이 안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찌기 1948년 당시에 이미 “大經大法”이라 할만한 방안과 “言正名順”의 방안이 있었다.⁸⁷⁾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이다. 정부의 현 통일방안(과 그 기초)에서는 이 '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힘'이란 어떤 힘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배양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먼저 왜 통일의 달성이 주로 남한측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은 자유-평등-인간존엄의 구현과 명백히 상반되는 방향으로 치달아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대남전략은 비현실적이고 기만적인 대내용 통일이데올로기로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을 통일을 향한 大路로 이끌어내어 협력의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한측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내외의 환경도 누가 의도하든 않든 남한의 '힘'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측의 '힘'에 의한 흡수통일은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의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고 본다.⁸⁸⁾

87) 이순탁 외, 「문화인 108명 連署 남북회담 지지성명」(1948년 4월 14일), 브루스 커밍스 외, 『分斷前後의 現代史』(서울: 일월서각, 1983), pp. 517-520.

88) 이러한 인식은 현 남한 대통령의 언명에서도 읽을 수 있다. 예컨대 김영삼대통령은 1993년 11일 미국 CNN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코 북한을 흡수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독일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한겨레신문』, 1993년 9월 12일. 이 말은 지금 당장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좀더 선명한 언급은 金大中, 「독일 통일의 교훈과 우리 통일의 방향과 전망」, 『월간중앙』, 1993년 9월, pp. 716-729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궁극적 흡수통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그 '힘'을 키우는가 하는 것이다.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실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시당한 것으로 설정된 통일상에 비추어 볼 때 이 힘은 우선 남한 정부만의 힘이나 어느 집단 혹은 계층만의 힘일 수 없다. 또한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환원될 수도 없는 힘이다. 이 힘은 총체적 국력으로서 그러한 물질적인 힘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 도덕적인 힘까지 포함하는 힘이다. 바로 이러한 힘이 바람직한 통일을 앞당기고 마침내 실현시키는 힘, 그리고 그러한 통일을 유지하면서 한민족 대다수에게 복리를 가져다 줄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은 우선은 남한측의 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민족의 힘이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이러한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이 '힘'의 실체를 이렇게 파악할 때, 그리고 위의 통일상에 비추어 볼 때, 이 힘은 1차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더 공정한 분배를 통하여 만들어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은 일찌기 1973년 시점에 이미 장준하에 의해 통일을 위한 자유확보라는 내용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여전히 有效하다고 본다.⁸⁹⁾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정치적-경제적 민주화와 경제성장 = 통일역량 강화'라는 등식을 갖게 된다. 바로 이 등식이 우리의 통일정책과 대북전략-전술을 일관하는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원칙, 특히 '민주화 = 통일역량 강화'라는 등식은 매우 풍부한 실천적 涵意를 갖는다고 본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통일정책 혹은

일을 전제한 "방향과 전망"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통일이 남한측에 의한 흡수통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견해는 사실상 남한 官界나 學界에서 묵시적으로나마 當然視되고 있다고 본다.

89)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백범사상연구회 편, 『장준하추모문집』 (1978년 8월), p. 42. 백기완, 「자유의 회복과 통일논의의 주체적 맥락」, 백기완 외, 『민족통일-해방의 논리』 (서울: 형성사, 84), pp. 114-115에서 재인용.

대북전략의 수립과정 자체도 더욱 민주화할 여지가 없는가 自問해보아야 한다. 예컨대 “기조”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는 국민적 합의와 관련하여, 만일 이것을 단지 현정부가 정통성 있는 정부이므로 현정부의 정책은 이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해석은 비민주적인 해석이며 따라서 是正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할 때 주권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다음 투표 때까지 전적으로 지지후보에게 위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교적 명백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도 모른다.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또 무엇이 공정한 분배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이와 같은 논쟁으로 인하여 그 실천적 합의를 상실하여 또 하나의 空文句化할 우려도 있다. 사정이 이러할 경우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즉 비교적 명백하고 덜 논쟁적인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작업은 아직도 남아 있는 비교적 명백하게 反통일적 요소를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측의 대남전략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좀더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 反통일적 요소의 清算

반통일적 요소의 청산과 관련하여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문제 혹은 남북관계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다. 통일문제는 우리의 死活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恨’과 같은 것과도 접맥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남한의 권력자, 특히 정통성을 결여한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 통일문제의 정치적 용도는 다음의 두가지로 요

약될 수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에서 모종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진전을 이룸으로써 권력자 자신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측의 안보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는 용도이다. 과거의 역대 정권들은 이 두가지 용도 모두 혹은 적어도 한가지 용도로 통일 카드를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전자의 경우에도 졸속 혹은 조급함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즉 이 경우는 북한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국내의 정치적 퇴행을 자행하거나 그것을 합리화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논의에서 이것은 바로 통일노력에 逆行하는 것이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그러한 악용을 앓겠다고 다짐해 왔으며, 실제로도 지금까지 그러한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정치적 악용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완전히 청산되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통일문제의 정치적 악용을 가능케 해주는 요소는 국가보안법이나 기타 공안관계법과 같은 법률과 제도, 정부 관계기관들의 특정 정책이나 언론기관들의 慣行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며, 심지어 공교육기관에서의 敎科課程(curriculum) 혹은 교과내용 등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가장 응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 정보에의 접근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하여 단지 권력자(혹은 그 권력자로 대표되는 어떤 계층)의 善意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정부기관들간의 상호 견제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근본적인 예방책은 국민적 감시, 견제, 통제, 비판(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올바른 방향의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동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통일문제

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연구-토론의 활성화라 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개방 혹은 공개는 그 필수적인 전제이며 기초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假想해보자. 모년 모월 모시에 통일원 북한자료센터(이의 존재 자체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진전이다)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청년은 자신의 휴대용 전산기 앞에 앉아 한달 전에 발행된 最近着 『로동신문』의 내용을 열심히 입력하고 있고, 초로에 든 한 신사는 공책에 그것을 옮겨 적고 있으며, 또다른 한 청년은 담당 직원 몰래 월간 『북한』誌 갈피 사이에 『근로자』를 끼워서 제록스복사를 하고 있다(같은 시각 모대학 학생회실에서 한 대학생은 일본을 경유하여 입수된 1주일 지난 『로동신문』을 복사하고 있고 다른 학생은 간밤에 錄取한 평양방송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假想이지만,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그리 가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현실이라면, 이는 우리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시급한 是正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 작업은 현 단계에서 우리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번째 작업이며, 또 정부 관계기관들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한 작업이라고 믿는다.

3. ‘힘’의 優位에 입각한 대북전략의 추진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측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상대가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對處’에만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대처’를 위한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대응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군사적 안보태세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내부의 엄정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군의 지속적인 戰力강화와 함께 팀스피리트훈련을 포함한 기존의 한-미간 안보협력체제를 유지-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련 및 중국과의 실질적인 관계진전을 통하여 이들과 북한과의 동맹조약을 완전히 파기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특히 군사분야에서 한-소 및 한-중 협력을 증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양보는 상응하는 북한측의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②북한측의 정치-군사적 양보와 남한측의 경제협력 및 외교적 지원을 철저히, 기계적으로 連繫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북한측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고려에서 핵문제와 정협 등을 연계시키고 있는 현재의 정책은 계속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③북한측의 당국과 인민을 분리하여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우리 식 '북한혁명전략', 즉 북한당국을 상대로 해서는 주로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철저한 연계전략을 구사하고, 북한인민을 상대로 해서는 비정치적-인도적 교류협력문제를 다루면서 일방적이고 대폭적인 양보조치를 취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인민을 상대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대는 정부가 되겠지만, 표면상 인민을 상대로 한 대폭적 양보조치는 북한측이 받아들여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남한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예컨대 민간단체 주관하에 북한에 쌀이나 기타 생필품, 성경이나 불경 등을 보내는 운동을 남한정부에서 광범하게 허용하고 적극 권장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운동은 확대되고 일상화되면 될수록 좋다고 본다. 같은 논리로 이인모 북송은 잘된 결정으로 보지만 동일범주에 드는 너 많은 사람들을 북송하는 것보다는 못한, 그리고 남북자들의 귀환과 관련된 적절한 수준의

의사표시를 결들인 것보다는 못한 결정으로 본다. 요컨대 우리 식 '북한혁명론' 혹은 민주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

④전략-전술의 유연한 運用이 요구된다. 운용상의 유연성이 요구되는 까닭은 북한의 전략-전술에 전쟁의 위험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으며 또 남한으로서도 '힘'을 기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체제위기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본다면 전략-전술의 극단화도 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쟁위험이 고조될 수도 있다. 특히 '恫嚇'전술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서 전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본다. 상대방이 이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공갈'전술을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서도 위험한 일이지만 갈수록 '공갈'의 수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은 결국 남한측에 의한 흡수통일로 귀착될 것이지만, 현재 우리의 '힘'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당장 혹은 앞으로 수년내에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동안에 전쟁위기가 고조되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인 대북전략 혹은 정책의 운용시 고도의 유연성과 신중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1993년 초 북한측이 핵사찰 관련 '공갈'전술을 구사하였을 때 남한측이 별도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기계적 대응을 자제하고 상황에 따라 군사적 대응조치까지 포함한 다양한 전략-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남한측의 거듭된 천명은 필요한 것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하다. 나아가서 북한측과의 비밀 접촉창구를 개설(이미 개설되어 있다면 그것을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⑤知的-理論的 優位를 확보함으로써 예상되는 평화공세의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민족주의"를 앞세운 '泣訴型'

내시 정서적 訴求 戰術의 강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같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북한측 “민족주의”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폭로하는 한편 남한측 민족주의의 이론적 內實化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남한측의 통일정책에 들어 있는 민족주의를 살펴보면, 편협한 가치가 아닌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 즉 자유-평등-인간존엄을 통한 민족의 복리증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이 정도 수준이나마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측의 “민족주의”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만, 북한과의 비교라는 견지가 아닌 일반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결코 못된다. 일반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러한 내용은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내외의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민족주의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자유-평등-인간존엄을 위한 민족복리 지향이 그것을 존중하는 타민족과의 협력을 필수적인 전제로 한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參考文獻〉

- 강성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대단결 강령을 채택할 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 9기 5차회의에서 행한 보고, 중앙방송, 1993년 4월 7일), 『월간 북한동향』, 1993년 4월, pp. 79-93.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서울: 경남대학교출판부, 1991).
- 고성준,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 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곽태환,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한의 통일 정책」, 신정현 편, 『북한의 통일 정책』 (서울: 을유, 1989), pp. 345-379.
- 김대중, 「독일 통일의 교훈과 우리 통일의 방향과 전망」, 『월간중앙』, 1993년 9월, pp. 716-729.
- 김세균, 「연방제 통일방안의 모순」, 『사회평론』, 1992년 7월, pp. 224-236.
- _____, 「통일정책」, 최명 편, 『북한 개론』 (서울: 을유, 1990), pp. 643-667.
- 김연각,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그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년).
- _____,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모델에 관한 연구: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규명을 중심으로」,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 3』 (1991), pp. 351-389.
- 김일성,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중앙방송, 1993년 3월 4일), 『월간 북한동향』, 1993년 3월, pp. 87-103.
- 김학준, 「(북한의) 통일정책: 지속성과 변화 추세」, 이상우 외, 『북한 40년』 (서울: 을유, 1989), pp. 523-581.
- _____, 『소련외교론 서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 돌베개편집부 편,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 백기완, 「자유의 회복과 통일논의의 주체적 맥락」, 백기완 외, 『민족통일-해방의 논리』 (서울: 형성사, 1984), pp. 93-115.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10』 (서울: 태백, 1989).
-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 편, 『사회주의개혁과 북한』 (서울: 형상사,

- 1991).
- 신정현, 「외교정책과 대외 관계」,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 1990), pp. 391-433.
- 안병영, 『현대공산주의 연구』 (서울: 한길사, 1986).
-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3).
- 염홍철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 「五道黨員及熱誠者聯合大會會議錄」, 조선산업노동조사소 편, 『붉은 노선』 (東京: 민중신문사출판부, 1946), pp. 30-48.
- 이상우 외, 『북한 40년』 (서울: 을유, 1989).
- 이상우,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의 외교정책」, 이홍구-스칼라피노 편, 『북한과 오늘의 세계: 80년대의 대외적응』 (서울: 법문사, 1986), pp. 34-56.
- 이순탁 외, 「문화인 108명 連署 남북회담 지지성명」 (1948년 4월 14일), 브루스 커밍스 외, 『分斷前後의 現代史』 (서울: 일월서각, 1983), pp. 517-520.
- 이온죽, 『북한사회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이용필 편, 『북한정치: 이데올로기와 변화』 (서울: 대왕사, 1982).
- 이용필, 「북한 체제의 변화와 통일정책」, 신정현 편, 전게서, pp. 281-315.
- 이정수, 「북한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전체주의적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1986).
- 장수련, 「공산주의 혁명 전략전술」, 통일연수원, 『공산주의와 현대 급진주의』 (통일연수원, 1989), pp. 55-107.
- _____,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서울: 통일연수원, 1991), pp. 271-333.
- 정대철, 『북한의 통일전략 연구』 (서울: 백산, 1986).
-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 정용길, 「북한 통일 정책의 특성과 한반도 통일전망」, 신정현 편, 전게서, pp. 381-404.
- 존 할리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주주의인가, 그리고 공화국인가?」, 쿠친스키 외 편,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 381-419.
- 中崎嶺雄, 「현대중국 30년의 정치과정」, 유세희 편, 『오늘의 중국대륙: 정치-사회-경제-사상의 변동과 지향』 (서울: 한길사, 1984), pp. 11-42.

- 통일원, 『92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_____, 『김일성주체사상관계자료집』 (서울: 통일원, 1976).
 _____, 『남북대화백서』 (서울: 남북대화사무국, 1988).
 _____, 『남북한 통일 대화 제의 비교』 (서울: 통일원, 1987).
 _____, 『남북한통일제의자료총람 1-3』 (서울: 휘문, 1985).
 _____, 『통일백서』 (서울: 정문사, 1990).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서울: 백산, 1990).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종합판』 및 『내외통신 주간판』.
 조선로동당, 『로동신문』.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한겨레신문』.

- Almond, Gabriel A., *A Discipline Divided: Schools and Sects in Political Scienc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Inc., 1990).
 Almond, Gabriel A. and Powell, G. Bingham, Jr. (eds.), *Comparative Politics Today: A World View*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8).
 Cumings, Bruce, "Corporatism in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 (1982/83), pp. 269-294.
 Easton, David,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Alfred Knopf, 1953).
 Izumi, Hajime,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Masao Okonoki (ed.), *North Korea at the Crossroads* (Tokyo: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8), pp. 90-94.
 Ko, Jae-Nam,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form Communism," 한양대학교 중蘇研究所, 『中蘇研究』, Vol. XIV, No. 2, Summer 1990, pp. 153-189.
 Koh, Byung Chul, "Unification Policy and North-South Relations," in Robert A. Scalapino and Jun-Yop Kim (ed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3), pp. 264-308.
 Lee, Hongkoo, "North Korea: One South Korean Perspective," in Scalapino and Kim (eds.), *ibid.*, pp. 10-18.
 Perlmutter, Amos, *Modern Authoritarianism: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Sato, Katsumi, "Trends and Problems in North Korean Policies toward the South," in Okonoki (ed.), *op. cit.*, pp. 106-130.

北韓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路線과 그 變化 展望

研究責任者：朱 鳳 浩 (東義大學校)

목 차

(요 약 문)

I. 緒 論	521
II.北韓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路線의 特性	525
1.北韓의 社會主義 建設의 特殊性	525
1)北韓의 社會主義 段階論	525
2)北韓 社會主義 建設의 特異性	529
2.自立的 社會主義經濟 建設路線	537
1)自立的 民族經濟 建設理論	537
2)自立的 民族經濟 建設路線	541
III.北韓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路線의 展開過程	547
1.社會主義 建設과 指導體系	547
1)領導方法과 領導體系	547
2)唯一的 指導體系	552
2.社會主義 經濟法則의 適用	557
1)所有制 轉換	557
2)商品과 價値法則	561
3)經濟管理 體系	565
IV.北韓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路線에 대한 批判的 檢討	570
1.體制運營 原理에 대한 批判的 檢討	570
2.經濟運用 法式에 대한 批判的 檢討	576
V.北韓 社會主義 體制的 變化와 展望	584
1.社會主義圈의 改革과北韓의 對應	584
2.北韓 社會主義 體制的 變化 展望	590

1) 政治的 變化 展望	592
2) 經濟開放斗 改革	598
VI. 結 論	604

北韓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路線과

그 變化 展望

朱 鳳 浩 (東義大)

요 약 문

본 연구는 북한체제의 發展論理로 제시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해 그 이론적 맥락과 주요노선 그리고 전개과정을 내재적 관점에서 살펴 봄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運營原理와 過程에 대해 규명할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사회주의의 발전논리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에 대한 고찰을 그 이론 및 현실의 내부로부터 분석·비판하여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이론과 정책의 바탕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회주의체제로서의 북한이 달성한 사회적 결과들을 이 체제가 스스로 설정한 이론적 목표에 비추어 검토 비판해 보아야 한다는 ‘內在的 比較社會主義 接近法’ (internal comparative socialist approach)에 입각하여 북한체제의 발전과정을 분석·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의 政治經濟的 性格을 먼저 규명하고 그 기초위에서 북한이 현재 안고 있는 問題點과 향후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북한의 개혁·개방화의 실태와 전망을 분석·고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방법적 전제 위에서 지금까지 고찰한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性格과 特徵들을 보여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 단계론 -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경계설정 - 과 공산주의로의 이행의 합법칙성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과도기의 완료를 무계급사회 - 단일한 전인민적 소유제의 확립 - 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고전적 명제에 입각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좌우편향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은 이 노선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주의 사회성격론을 비롯한 제반의 이론 체계에서 소련의 ‘전통적’ 노선과 기본틀을 많은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다. 다만 주체의 건설이론의 독자성은 그러한 전제 위에서 목적의식성을 강조하면서 군중노선적 관점과 민족주체적 관점에서 이행의 문제를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唯·思想的 社會體制의 형성이다. 북한사회는 김일성의 혁명전통과 사상에 의해 단일화되고 김일성의 의지와 논리를 중심으로 유기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북한의 발전 전략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하지만 주체사상은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과정에서는 인민들의 혁명적 열정을 ‘지도하는 사상’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지만, 그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위치를 대치하면서 새로운 전일적 체계로 등장하고, 수령론과 후계자론의 형태로 북한사회를 재규정하는 전일적 이데올로기로서 작동될 때 그 사상적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점은 보다 커질 수 있다고 하겠다. 즉 주체사상이 ‘신성한 교의이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그것은 북한의 발전에 오히려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세째는 思想과 意識의 혁명적 각성과 혁명적 인간의 창출에 의한 社會主義建設의 指向이다. ‘완전승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선의 설정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모순과 추동력을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지향과 열의로 규정하면서 정치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우위로 하여 물질적 자극을 결합시킨다는 기본원칙에 근거한 사회주의 건설노선의 채택인 것이다. 네째는 群衆路線과 大衆競爭運動에 의한 사회주의건설 과정이다. 대중들에게 목표과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선전하고 이 설정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천리마운동’, ‘속도전’ 등과 같은 노동력중심의 대중동원, 대중경쟁운동을 통하여 건설과업을 완수해 왔던 것이다. 다섯째는 帝國主義에 대한 투쟁과 自主性의 추구가 북한사회주의 建設의 方向을 기초짓는 기반이 되어 왔다는 점이다. 과도기론과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의 정립,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추진, 그리고 국방건설의 강화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와 투쟁이 사회체제의 우선적 과제가 되었으며, 동시에 소련·중국은 물론 모든 국가로부터의 自主性의 追求가 현시대의 根本課業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분석·평가를 전제로, 그 과제위에서 북한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진로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 정치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에 따라 선진국 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받아들임으로써 후발성의 이익을 활용하지 않는 지나친 내부지향적 공업화전략에 치중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자체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내겠다는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자력개발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국가권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원체제는 북한 경제의 장점으로서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 외연적 성장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으나 효율적 생산, 경제의 질적 향상,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중요시하는 내포적 또는 집약적 성장단계에서는 발전요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북한경제는 이러한 외연적 성장에 뒷받침되어 60년대초까지는 순조로운 발전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외연적 성장요인의 소진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셋째, 당우위·정치우위 및 중앙집권적 계획명령 경제제도의 경직성이 비효율과 낭비, 기타 모순을 야기시켰다. 넷째,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제의 하나가 인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나친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집한 데서 초래된 기술혁신의 상대적 낙후, 생산설비 노후화, 투자재원 부족이라는 한계와 고투자, 과중한 국방비 부담은 소비에 대한 분배분을 작게 하고, 이것은 소비재공업의 상대적 낙후성과 관련하여 국민생활 수준을 저위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다섯째, 천리마운동을 비롯한 소련식 ‘스타하노프’운동의 북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대중동원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여러 문제들은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서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 또는 개혁하느냐가 당면의 주요과제로 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自立的 民族經濟路線과 群衆路線 등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급속한 사회주의발전을 이룩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적극적 의미는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의 수정,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현단계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적인 개혁, 개방의 방향은 공산주의적 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려는 이념적 지향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과도적 성격’의 적용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북한 사회주의의 내적모순과 북한 지도부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건설에서의 문제점은 부분적인 개혁, 개방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건설노선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이상의 몇가지 문제들을 토대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展望하면 短期的으로는 소련을 중심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식 實用主義 노선으로 체제전환을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革命的 群衆路線을 더욱 강조하면서 생산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북한은 對內的 統制의 강화와 對外開放이라는 상호상충되는 정책결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있어서 개방정책은 “우리식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존력을 얻는데 불가피한 手段으로서 선택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長期的 전망으로는 오늘의 세계질서가 탈이념화속에 대립갈등보다는 相互依存과 민족이익 추구라는 실리추구의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어지므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만을 고집하는 정책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고있는 공통된 고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아직 북한은 인민대중이 절박하게 개혁을 요구할 만큼 불만이 크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경제 체제를 기존의 중앙집권적 計劃管理體制로 운영되고 있지만 경제수준이 양적-외연적 발전단계에서 질적-내포적 발전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개혁과 정치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의 개혁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분단문제와 한반도 주변의 대립상황이 일정하게 완화되는 것과 동시에 정치지도부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로부터 推進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정치권력 또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轉化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이나 남한의 정치적 변화와도 連繫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개혁의 방향과 성격 및 개혁의 정도는 북한 정치지도력의 效率性과 인민대중의 지향성 외에도 남한의 정치적 상황, 주변국의 동향, 그리고 통일논의의 性格 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은 북한 정치지도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 발휘가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제적 냉전과 대결적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북한 정치권력구조는 탈냉전이 가속화되고 통일의 가능성이 예비되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I. 緒 論

現實 社會主義(actually existing socialism)¹⁾의 위기와 재편은, 급기야 소련에서도 단순한 市場機能의 도입확대를 넘어서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의 가속적 推進으로 말미암아 이미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었다.²⁾ 이러한 사회주의국의 변화에 대해 그 평가에서 찬반을 달리하는 논자들도, 이같은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사회주의경제 건설의 실패와 관료주의의 만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데에는 일단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현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현실사회주의권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 '資本主義로의 復歸'를 의미할 뿐이라는 부정적 입장에서부터 2) '진정한' 社會主義 내지 '더 많은 民主主義'로의 도약을 의미한다는 적극지지론을 양 축으로 하여 그 중간에, 3) 사회주의적 원칙에는 동의하나 그 실현과정으로서의 전통적인 프롤레타리아독재(dictatorship of proletariat)에는 반대한다는 '이중화된 사회주의론' 4) '사회주의 強化'와 '자본주의로의 回歸'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두 개의 길론' 등이라 할 수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문제의 이해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

1) Rudolf Bahro,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London, 1978)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소련을 비롯한 그간 '소비에트모델'을 채택한 나라들을 지칭함에 적절한 용어이다. 현존 사회주의라고도 번역한다. Ellen Commisso, "Crisis in Socialism or Crisis of Socialism", *World Politics*, Vol. XLII, No.4 (July 1990), p.563.

2) 작금의 현실 사회주의권의 개혁은 지배집단의 정책적 차원에서 시작된 '민주화 공간'이 확대되어, 아래로부터의 즉 민중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제도개혁과 사회구조에 대한 총체적 변화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3) '두 개의 길론'은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에 내재하는 위험성도 동시에 파악한다. 그러나 개혁이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강화로 나아갈 것을 선협적으로 가정하기 보다는 강화나 회귀나 하는 발전방향은 개별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개별사회의 노동자계급의 향방에 달려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풀빛, 1991), p.483-485. 다분히 유형론적인 분류이나 사회주의의 이론과 현실을 역사와 사회구조속에서 펼쳐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와 같은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만,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현실사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蘇聯 및 東歐圈과 관련하여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은 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의 북한이 과연 변할 것인가, 변한다면 그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문제일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완전승리론을 비롯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과 그 노선이 북한의 주장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조명되고 수용된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소련이 가지고 있던 스탈린 모델에 기초한 ‘一黨獨裁와 一人獨裁’를 유지하기 위한 潤索物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적 이론의 계승과 주체사상에 의한 새로운 해석의 불완전한 결합인가? 바로 이러한 물음들이 이 연구를 위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급변에 대해 어떤 논리와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위에서 제시한 물음을 근본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의 주요내용과 정책전개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북한사회주의 체제발전의 논리로 제시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에 관하여 그 이론적 맥락과 주요노선, 그리고 정책전개를 연구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운용원리와 과정을 究明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북한사회의 향후 진로를 전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 특히 정치경제 건설노선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에 대한 접근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사회와는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위에서 서 있음을 인정하고, 그 사회가 설정한 이념과 기준에 비추어 분석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⁴⁾

4) 북한 연구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이운죽, “북한 ‘사회’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적 과제”, 『북한사회연구 -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p.3-25. ; 안병영, “북한 연구방법론”, 『현대공산주의 연구』 (한길사, 1982), pp.348-398. ;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現代와 思想』 (한길사, 1990),

그러면 사회주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론적 제 접근의 이해와 평가속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內在的 比較社會主義 接近法’(internal comparative socialist approach)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편으로 이를 재구성하여 사회주의 사회경제에 대한 분석방법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것의 기본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사회주의 사회의 이론과 현실과의 변증법적 긴장과 불일치 그리고 통일의 과정을 역사적,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⁵⁾

본 논문의 觀點과 原則으로 하고 있는 ‘科學的 認識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내재적 접근에 기초한 비교사회주의적 방법’이란 전제는 기존의 북한 연구가 가지는 일면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믿는다.⁶⁾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사회를 研究, 分析, 判斷할 수 있는 ‘우리의 잣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즉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사회주의 스스로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실체와 기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 내재적 접근의 특징이 있다.⁷⁾

이러한 의미에서, 내재적 비교사회주의 접근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성

pp.114-125. ; 강정구, “연구방법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pp.11-37. ; 이종석, “북한연구방법론: 비판과 대안”,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0 가을), pp.75-98. ; 김창희, “北韓體制的 研究의 接近”, 『社會科學研究』 제19집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1992), pp.133-158. 등이 있다.

- 5)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형론과 환원론의 오류를 극복하는 것인데, 그럴 때만이 사회주의 정치경제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방법론적 유형론에 빠지면, 사회주의 사회의 일반적 성격을 간과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방법론적 환원론에 빠지면, 사회주의 사회간의 차이와 특수성을 간과하는 오류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의 사상·이론 그리고, 역사적 경험의 일반성과 개별 사회주의 사회에 내재한 그것을 사회주의 사회의 특수성의 인식으로 상향 - 구체화하는 사고와 조사의 왕복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6) 그러나 내재적 접근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조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시도되지 않은 방법에 입각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그에 따르는 시행착오는 분명히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 7) 송두율,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앞의 책, pp.117-122.

과 특수성을 결합하고 이론과 현실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유효한 분석틀로 생각된다. 이러한 내재적 방법론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에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우선 소련과 중국 등 여러 사회주의와의 ‘比較研究’가 되어야 할 것이다.⁸⁾

북한은 1970년 이전까지 과도기 전 시기에 부과되는 過渡期의 임무를 해결하고 '70년 이후로는 완전승리한 사회주의로의 진입단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80년대를 과도기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과 범위도 바로 이러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의 진입단계로 규정된 1970년대와 그 이후 과제가 전면화된 80년대의 북한사회주의 건설의 주요노선과 정책전개를 분석·평가하고 1990년대의 전망을 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이 과연 소련·동구에서 이미 실패작임을 드러낸 ‘傳統的’⁹⁾ 건설노선과 얼마나 다른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독자성이 현 사회주의 개혁논리의 ‘代案’으로서 적실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社會主義圈 변화의 현황 및 방향을 포괄적으로 고찰한 후, 북한체제의 특성과 사회주의권 변화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북한의 개혁·개방화의 실태와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
- 8) 북한 사회주의와 다른 나라 사회주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적으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현존 사회주의’와 보편적인 지향을 같이하면서도, 식민지적 낙후성과 국토분단 속에서 진행된 북한사회주의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된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의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주의의 내재적 이념과 현실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내재적 연구가 특히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와 상호 ‘比較’될 때만이 ‘新歷史主義的’ 誤謬, 즉 모든 역사적 사실의 ‘唯一無二性’을 들어 다른 것과의 비교를 처음부터 아예 거부하는 태도를 극복하면서 사회주의의 일반적 테두리 안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이의 구현의 특성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9) 여기서 소련의 ‘전통적’노선이라 함은 1930년대의 스탈린 하에서 골격이 형성되어 1980년대 전반까지 그 기초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온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말한다.

II. 北韓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路線의 特性

1. 北韓의 社會主義 建設의 特殊性

1) 北韓의 社會主義 段階論

북한의 社會主義 建設理論은 소련이나 중국과 다른 중요한 特徵을 갖고 있으며 그 노선 및 정책에서도 양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보여지는데, 그것은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과는 다른 민족적 특수성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북한 특유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이론은 일국가 차원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일반적인 합법칙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존 사회주의 개혁에서 부딪히고 있는 일련의 이론적, 실천적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사회주의로의 移行形態 및 方法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路線과 政策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하는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과도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따라 국내정세와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방법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국내외 정책의 기본 노선의 상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과도기의 문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사회구성체의 이행문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¹⁰⁾

북한에 있어서 과도기의 이론이 과도기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적

10)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북한에 있었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중·소와 다른 북한의 독특한 입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명제에 엄격히 의거하면서도, 고전이 상징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의 역사적, 구체적 제 조건과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주체적 입장’으로부터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작용기간을 분리하고서 과도기의 역사적 기간 및 경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국과 소련의 과도기론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이론적인 정식화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의 기본지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생산력과 생산관계 그리고 계급관계와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의 측면에서 명확히 한 것이며, 국내적으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한 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¹²⁾

이와 같이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문제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경우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기, 즉 사회주의 사회 기간 전체를 과도기로 보고 이전 기간 동안의 국가권력 형태를 프롤레타리아독재로 가정¹³⁾한 반면, 소련의 경우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 = 과도기의 종료 = 프롤레타리아독재 종료 = 전인민의 국가라고 이론화시켰고,¹⁴⁾ 이에 대해 중국은

11) 이러한 과도기의 경계설정에 관한 북한의 견해는 과도기를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수時期, 즉 사회주의 수段階를 포괄하는 역사적 시기로서 파악하는 중국의 견해와도, 또한 과도기를 오로지 다우클라드의 시기, 즉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및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까지의 시기로 단정하고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되면 과도기는 끝난다고 보는 소련의 스탈린과 스탈린 이후의 주류 견해와도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하겠다. 북한의 사회주의 단계 설정에 관해서는 한국정치연구회 지음, 「북한정치론」 (백산서당, 1990), pp.50-51. ; 최성,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비교사회주의 연구방법론”, 「현대사회주의 비교연구」 (학민사, 1990), p.50.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지음, 「사회주의 이론·역사·현실」 (민맥, 1991), p.54.

12)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사회주의 각국의 이행경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원론적 언급은 마르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혁명적 변화의 시기가 놓여 있다. 이에 상응하여 또한 정치적 과도기가 있는데 그 때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이외의 다른 것일 수 없다.’ 마르크스, “고타강령 비판”,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선」 (거름, 1988), p.183.

13) K.Marx,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 Robert Tucker ed., *The Marx-Engels Reader* (N. Y.: W.W. Norton, 1972 Second Edition), p.538.

14) Romald Hill, “The All-People’s State and Developed Socialism”, Neil Harding ed., *The State in Socialist Society*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4), pp.104-208.

소련의 입장을 수정주의로 비난하면서 마르크스의 주장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 이에 대하여 북한은 소련의 입장을 右傾機會主義로, 중국의 입장을 左傾機會主義로 규정하고 그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연결시킨 중·소 양국과 달리 이를 분리시켜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과도기가 끝난 다음에도, 즉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⁶⁾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중국적 승리'를 명제화해 놓고 있다. 즉, 사회주의의 중국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면서 또한 밀접히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한 다음에는 그 나라 내부에 한한 문제라면 '사회주의의 중국적 승리'에 관한 문제는 그 나라의 대외적 문제라고 정식화해놓고 있다.

북한의 과도기론과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두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과도기론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기간과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은 과도기의 기간과 프롤레타리아독재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한편, 과도기에 대해서는 일국적 또는 일 지역적인 차원에서, 반면에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의 멸망과 연결시켜 세계적 차원에서 그 성격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중국적 승리를 구별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즉, 과도기의 과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과제는 사회주의의 중국적 승리의 단계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¹⁷⁾

15)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총노선에 관한 제안", 나라사랑 편집부 편역, 「중소대립과 북한」 (나라사랑, 1988), p.102.

16) 북한경제사전 중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통일문제연구소 엮음, 「북한경제자료집 - 북한경제의 실체와 이론」 (민족통일, 1989), pp.181-187.

17) 이상과 같이 북한의 과도기론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북한이 생산력이 낮은 단계에서 혁명을 시작했고 그러한 혁명과 건설의 과정이 제국주의의 위협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력이 낮고 또한 미국의 위협과 이와 관련된 남한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정치적 동요의 가능성이 항존한다고 인식함으로써, 북한은 과도기의 기간을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상정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세계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발생이라는 국제적 조건이 없어도 일국적인 공산주의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즉, 일국에서 과도기의 종결과 공산주의로의 이행은 가능하지만, 무계급사회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제국주의의 위협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독재는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스탈린적 논리의 반복이다. 그 결과 국내에서는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계급투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것의 국내적 기반을 보지 못하고 '제국주의'라는 외적인 문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과도기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의 관찰에 있어서 국내적인 요인과 더불어 국제적인 요인을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시기확정에 고려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북한에서 강조하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강조,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체의 목적의식의 강조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려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제기되는 제반 사항들을 적절히 해결해 나가는 데서는 경직성 - 또는 주관주의 - 을 떨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북한의 '社會主義社會의 性格論'은 크게 공산주의적 성격과 과도기적 성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¹⁸⁾에 대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全段階는 자본주의로부터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이르는 이행기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의 全段階에 걸친 과도적 성격의 극복과 공산주의적 성격의 강화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적 성격 - 집단주의, 동지적 협동과 단결 - 과 과도적 성격 - 사상, 기술, 문화의 낙후성으로 인한 계급의 차이, 노동

하고 나아가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간을 제국주의적 멸망과 연결지어 더욱 장기간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18) 사회과학출판사 편,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제5권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론」 (1985) (태백, 1989년 재인쇄), p.57. 이하 참조.

의 차이, 노동에 의한 분배 - 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회이며, 그 본질적 특징을 이루는 공산주의적 성격이 부단히 강화되고 과도적 성격이 극복되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산사회가 건설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성격론의 기본이 되는 사회주의 사회의 두 가지 성격 규정과 2단계 사회주의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을 두 가지로 설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공산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과도적 성격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사회주의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이라는 주장이며, 과도기의 종결은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를 완전히 실현”¹⁹⁾ 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로의 진입과 동시에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북한과 소련의 移行戰略의 차이는 바로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은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면서도 이행의 합법칙성은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북한은 사회에 두가지 성격이 존재하는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양자간의 관계를 바르게 결합시키는 목적의식성에 초점을 둔다면 소련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의 이행에서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객관적인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론이 ‘特性論’이라면 소련의 이론은 ‘段階論’이며, 북한의 이론이 ‘목적의식론’이라면 소련의 이론은 ‘법칙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2) 北韓 社會主義 建設의 特異性

社會主義 社會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변화를 의도적으로 달성하려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社會主義 建設의 방법이란 바로 이러한 목적의식을 현실적인 상황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그것을 사회내에서 실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社會主義라는 개념에는 사회발전의 목적지향적인 理論的 概念과 현재의 국가형태에 나타나고 있는 現實的 意味의 사회주의 국가 개념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²¹⁾

19) 김정일 (1982),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태백, 1988), pp.236.

20)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 (한울, 1990), p.479.

현실의 역사에서 사회주의는 반/비유럽의 저발전지역들에서만 국가로 조직될 수 있었다. 이 지역들에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이후의 단계였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리하여 농업적-봉건적 사회로부터 공업화된 현대사회로의 이행을 집행하고자 했던 것이다.²²⁾

사회주의는 분명 초기공업화에는 성공했으나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저발전의 유산들을 극복할 수 없었다. (주로 서)유럽의 사회주의 고전 대가들의 이론 속에서 상정되었던 '성숙된 공업적 자본주의의 지양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현실의 역사에서 주로 반/비유럽지역에서 실제화/국가화되었던 '봉건적 반/비공업적, 따라서 자본주의적 사회의 극복을 위한 저개발된 국가의 사회주의'가 결과시켜 내었던 것은, 자본주의보다 높은 인류역사단계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봉건적,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요소들의 혼합물²³⁾로서의 '사회주의'였다.

북한에서는 해방 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1946년 2월부터 '민주개혁'이 실시되었다.²⁴⁾ '민주개혁'의 내용은 토지개혁과 중요한

21) 사회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오늘날 어떤 일치된 견해가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크게 보면 한편으로는 특정의 사회운동과 그 운동이 대변하는 이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前資本主義 및 자본주의 社會構成과 구분되는 특정의 사회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특정의 사회운동과 그 운동이 대변하는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와 레닌에게 있어서 '階級없는 社會'(본래의 의미의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최종목표로 하는 근대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자기해방운동과 그 이념으로서, 그리고 '資本主義 社會의 革命的 變化'를 계급없는 사회를 실현시키는 불가피한 역사적 전제로 파악하는 이념으로서 일차적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마르크스와 레닌에게 의미를 지니는 (운동과 이념으로서의)사회주의는 자본주의사회의 혁명적 변혁을 역사적 통과점으로하여 계급없는 사회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근대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자기해방운동과 이 운동이 대변하는 혁명적 이념이다. 사회주의의 다양한 조류에 대한 개략적 소개로는 I. Fetscher, "Socialism", C.D. Kernig ed., *Communism and Western Society*, A *Comparative Encyclopedia* (New York, 1973) Vol.3, pp.422-431. 참조.

22) 디터 쟁아스,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나남, 1990), p.209. 이하 참조.

23) Felipe Garcia, *The Syncretic Society* (New York: M.E.Sharpe, 1980) 참조.

24) 북한이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은 1) 해방된 한반도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제기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동시적으로 강조하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 2) 외부적인 규정성에 의해 탄생한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조직하기 위한 방안 3) 반봉건식민지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은 체 사회주

업의 국유화였다. 1947년 2월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섰다. 과도기의 초기단계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과제로 제기되었다. 북한에서의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내용은 '농업의 협동화'와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였다. 이상에서처럼,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평화적 건설기, 한국전쟁기에 그 전제조건이 준비되고, 정전후의 본격적인 전개에 의해서 1958년 8월에 완성되었다."²⁵⁾

北韓은 1953년 7월 休戰協定이 성립되면서부터 戰爭의 폐해를 복구하는 한편, 본격적인 경제건설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건설노선은 매우 독특한 방향으로 정립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다름아닌 自力更生(Self reliance)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하는 폐쇄형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이며, 1970년 이후에는 '주체형의 사회주의'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²⁶⁾

그러나 북한의 건설노선은 소련과 중국의 일반적인 발전노선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방법이었다. 초기의 그 형태는 '重工業과 輕工業, 農業의 동시적 發展'이라는 명제로 표면화되었지만 1960년대의 발전과정을 지나면서 철저하게 내부의 자원만으로 경제건설을 이루고자 했으며, 그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대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그 대중운동은 당과 국가의 정책적 차원을 뛰어넘어 북한의 유일적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정립되고, 전 사회가 이를 기초로 재편됨으로써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여기에서 획득하려 하였다.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을 통해서 주체사상이라는 全一的인 사회운영의 원리를 체계화하고, 또 다시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건설의 질적 단계를 고도화하려는 독

의체제로의 급속한 이행 4) 북한의 정치체제로서 당과 국가건설의 조직원리로서의 의미 등을 함축하고 있다. 김일평, 「북한경제입문」(한울, 1987), pp.21-25.

25)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조선의 경제」(광주, 1988), p.84.

26) 그러나 경제건설의 초기에 북한이 확립한 발전노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의 본원적 축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업협동화를 통해서 잉여를 창출하며, 그것을 달성시키기 위해 고도의 중앙집권화적 계획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이같은 북한사회주의 건설노선의 기본 방향은 그 이후 그들의 모든 사회주의의 건설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

특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독자적인 건설노선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북한만의 특수한 경험에서 형성된 것이다. 북한사회는 기존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수한 국내외적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중 주요한 것만 열거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일본에 의한 혹독한 식민지로서의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식민지에서의 독립운동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사회주의가 지극히 민족적이며 심지어는 외국의 영향에 대해서 철저히 배타적인 방향으로 건설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지적될 수 있다. 북한은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면서 곧바로 분단됨으로써 형성된 국가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처음부터 북한정부에게 정권수립의 정통성을 확인시켜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에서는 이에 대하여 '민주基地論'이라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합리화하였다.²⁷⁾ 즉, 북한에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정권을 튼튼히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에서의 통일정부를 세우는 기초를 이루겠다는 논리로 사회주의 건설에 임하였던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상황은 북한이 사회주의건설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건설의 방법과 발전의 속도에 대한 논쟁을 야기시켰고, 북한정권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⁸⁾ 세번째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독특성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한국전쟁과 전쟁상황의 지속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모든 경제시설들이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가깝게는 남한과의 전쟁상황을 끊임없이 전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멀리는 남한을 원조하고 있는 자본주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군사적인 대치상황을 상정해 왔다. 그리하여 이들과는 철저히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국제적 고립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27) '민주기지론'은 1945년 서북 5도 당대회에서 정치노선으로 채택되어 1946년 8월 29일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확정되었으며 초기 독자적인 북한정권의 수립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남식, "해방전후 북한 현대사의 재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5: 북한편」(한길사, 1989), pp.14-17.

28) 이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논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²⁹⁾ 북한은 소련, 중국, 동구 등의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았지만,³⁰⁾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주의권의 경제블럭에는 참가하지 않았다.³¹⁾ 그리고 경제건설의 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독자적인 노선을 확보하면서 정치적인 독립을 유지하는데 주력하였던 것이다.³²⁾

이러한 몇가지 요인들은 북한이 독특한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을 사용하여 오늘날의 사회주의 국가체제로 확립하는 데 작용을 한 상황적 변수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총합하여 보면 한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것은 북한이 세계 자본주의 국가와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로부터도 경제적인 연결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되게 전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남한과의 군사적인 대치상태의 지속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는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건설의 방법을 이루기 위한 내부적인 동원의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성립된 것이다. 이것은 일관된 대중노선으로서 초기에는 대중운동의

29) 1956년 이후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路線은 남한과의 대치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쿠바사건에서 소련이 보여준 '屈辱的인 姿勢'는 북한으로 하여금 또 다시 소련의 후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30) 한국전쟁 이후 소련은 전후경제복구를 위하여 10억 루블의 원조를 하였으며 1954년에서 1956년의 기간 동안에 13억 루블에 이르는 자금을 원조받았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950-1960년 사이에만 16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소련과학아카데미 사회주의 경제연구소, 「북한의 정치 경제」 (국토통일원, 1989), pp.253-261. ; 서진영 편,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9), pp.359-360.

31) 북한은 중국과 함께 소련 중심의 경제협력위원회(COMECON)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유럽제버의 자격으로 몇몇 사무에만 참가하고 있으며,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개별적으로 장기 교역 - 경제협정을 체결하였다. 위의 책, pp.286-289.

32) 북한이 한국전쟁 직후 (1953-1956) COMECON으로부터 받은 재정적 지원은 24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참가하지 않고 회원국과 쌍무적인 무역관계만을 유지하였다. 또한 1960년대에 들어서도 소련이 코메콘을 통한 공산권의 경제통합과 분업강화를 시도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에 대하여 일차상품의 개발과 수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욱, "북한경제구조와 문제점", 「동아연구」 제14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8). 김태욱은 이를 경제적 분업 체계에 참가함으로써 정치적 개입을 당할 것을 북한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단편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으로 정착되어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서 정립되었다. 즉,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특수성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의 客觀的인 狀況과 내부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는 主觀的인 原則을 並行함으로써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³³⁾

이러한 북한의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상황의 변화는 결국 내부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靑山里方法으로 대표되는 ‘革命的 事業方法(群衆工作方法)’으로 확립되었다.³⁴⁾ 혁명적 사업방법은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방법으로 참여되지 못할 때, 노동자들에게 생산의 목적과 생산의 결과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주지시키고, 생산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의의와 역할을 인식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을 참여시키고, 동원하는 양식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혁명적 사업방법이라는 대중노선뿐만 아니라 대중운동과 대중동원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물론 청산리방법과 같은 대중노선은 내용면에서는 제도화된 항상적 대중운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5)

한편 이러한 대중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던 요인을 추출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특수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된 ‘思想的 要塞’의 점령을 강조함으로써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정치의식과 사상의식을 교양

33)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노선으로 소련식의 발전모델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소련과는 차이가 나는 북한의 건설방법은 바로 대중의 자발적 호응을 유인해 내는 대중동원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군중들의 자발성을 보장하는 공산주의적 의식의 향상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소련에서 급속한 사회주의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채택하였던 당지배의 중심역할과 당중앙 계획의 권위를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평, 「북한정치 경제 입문」(한울, 1987), p.75.

34) 혁명적 사업방법은 김일성이 현지 지도를 통하여 대중을 직접 만남으로써 획득된 방법이다. 이에선 청산리를 현지 지도함으로써 이루어진 ‘청산리 방법’, 강선제강소를 지도한 ‘강선속도’, 황해제철소 교시, 대안전기공장을 지도한 ‘대안의 사업체계’ 등이 포함된다.

35)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에서는 천리마운동, 천리마 작업반운동,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 강선속도, 평양속도, 100일 전투 등의 수 많은 대중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중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이라고 불리는 천리마운동(천리마 작업반운동)으로서 전국적으로 76만명이 참가하는 전면적인 노동동원운동이었다.

하고, 모든 사업에서 이를 앞세우는 방법을 교육시킴으로써 이를 가능케 하였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과제가 단순히 '物質的 要塞'인 인민생활의 향상과 경제발전을 이룩함으로써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는 반드시 '精神的 要塞'인 사회주의적 의식을 동시에 확립함으로써 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³⁶⁾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한편 이러한 思想教育은 공산주의에 도달하기 위한 사회주의의 원리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사에서 나타나는 혁명의 과정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³⁷⁾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대중들의 사상적 고취를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방법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위에서 설명한 북한사회주의건설의 특수한 상황이었다. 혁명과 전쟁, 그리고 전쟁상황의 지속, 계속되는 사회주의 혁명목표의 설정, 그를 실행하기 위한 '혁명적 구호의 제시' 등 북한의 현대사는 바로 현재의 북한사회를 특징짓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³⁸⁾

그러므로 북한의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관철되어온 성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³⁹⁾ 첫째는 唯一思想的 社會體制의 형성이

36)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제3집 (국토통일원, 1980), p.235.

37) 말하자면 북한의 경제건설의 노선은 스탈린식의 사회주의건설의 모델을 채택하여 '本源的 蓄積'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38) 이와 같이 계속되는 사상의식의 강조는 바로 북한주민들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김일성의 개인적인 권위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과거에 일제에 대항하여 독립을 이루었다는 '자부심'과 한국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자부심'이 그들을 지도한 김일성의 개인적 권위와 합쳐지면서 북한사회의 혁명의식의 고취와 그에 대한 사회주의건설의 동력으로 확보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모든 일의 중심이고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발전되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개인숭배로 발전되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로동당사'와 '항일무장투쟁사'를 정치교육의 주요한 내용으로 하면서 이 시기에 북한주민이 보여주었던 혁명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현실성을 모범으로 하여 모든 사회주의건설의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대중의 헌신성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39) 한국정치연구회 지음, 「북한정치론」 (백산서당, 1990), pp.263-264.

다. 온 사회는 김일성의 혁명전통과 사상에 의해 단일화되고 김일성의 의지와 논리를 중심으로 유기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로 이룩되었다.⁴⁰⁾ 둘째는 思想과 意識의 혁명적 각성과 혁명적 인간의 창출에 의한 社會主義建設의 指向이다. 북한은 끊임없이 대중의 사상교양·혁명교양을 강화하고 인간의 적극적 사고와 혁명적 열의에 의해 모든 사업과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성과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람중심·의식중심의 사회주의건설 체계이다. 셋째는 群衆路線과 大衆競爭運動에 의한 사회주의건설 과정이다. 대중들에게 목표과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선전하고 이 설정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천리마운동', '속도전' 등과 같은 노동력중심의 대중동원, 대중경쟁 운동을 통하여 건설과업을 완수해 왔던 것이다. 넷째는 帝國主義에 대한 투쟁과 自主性의 추구가 북한사회주의 建設의 方向을 기초짓는 기반이 되어왔다는 점이다. 과도기론과 프롤레타리아독재론의 정립,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추진, 그리고 국방건설의 강화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은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와 투쟁이 사회체제의 우선적 과제가 되었으며, 동시에 소련·중국을 물론 모든 국가로부터의 自主性의 追求가 현시대의 根本課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진영 전반의 동요 속에서도 현재까지 북한이 상대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면에는 1950년대 후반부터 '自主路線'을 추구해온 결과 사회주의 진영 전반의 움직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과 함께 스탈린시대를 특징지었던 당의 單·柱的(monolithic) 통일성과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가 현재까지 견재하다는 점이 작용하였다.⁴¹⁾

그러나 북한이 추구한 '自力更生'의 길은 그 독특한 사례로서의 의의를 논외로 한다면 자본주의의 세계사적 지양의 도상에서 파악되는 사회주의 건설의 상으로서 보편적 의의를 획득하기는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제국주의에 의해 포위된 속에서 외적 모순의 규정성이 압도적이었던

40) 하지만 여기서 김일성 사상과 이론의 올바름에 대한 검증의 객관적 기제나 김일성의 유일사상과 북한인민의 의사 및 요구의 관계는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부제한 상태이다.

41) 유고슬라비아의 독자노선이 서방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증대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자주노선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소련의 상황인식이 스탈린에 의한 ‘一國社會主義’(Socialism in one country)의 主意主義的, 경제주의적 해석과 그 산물로서 생산관계의 개조 = 급속한 집단화 정책, 생산력 제고 = 중공업 일변도의 경제성장정책이라는 도식을 낳은 객관적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미제국주의의 외부적 위협이 강조되는 속에서 사회주의 세계체제와 거리를 두고 추진된 ‘自力更生’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은 스탈린적인 ‘일국사회주의론’의 문제점을 더욱 극단화된 형태로 재생산할 위험성을 지닌다. 이와 동시에 물질적 자극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중시하고 계급투쟁의 사상적 측면을 특권화하는 경향 속에서는 마오주의적 주관주의적 편향도 발견된다. 이런 점에서 소련과 중국의 좌·우경적 편향을 모두 극복했다고 주장되는 북한의 자주노선은 양대 편향의 절충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일견 대조적인 듯이 보이는 경제주의적 우편향과 주의주의적 좌편향은 하나의 실체의 양 측면에 불과하다고 할 때, 북한 역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스탈린적 편향’은 개인숭배와 같은 표피적인 현상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⁴²⁾

2. 自立的 社會主義經濟 建設路線

1) 自立的 民族經濟 建設理論

주체의 경제건설이론은 북한에서 사회주의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고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경제건설이론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낡은 사회제도에 대한 새로운 사회제도의 확고한 안정화는 선행의 사회제도보다 높은 생산력을 달성할 수 있는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신생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더라도 자본주의보다 높은 노동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구축되지 않는 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의 경쟁 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의 계속 발전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식민지 반식민지를 경과한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이

42)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지음, 「사회주의의 · 이론 · 역사 · 현실」 (민맥, 1991), p.275.

행하는 경우 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 하에서 해결되어야 했을 생산력 발전의 과제를 사회주의 단계에서 해결해야 했고, 따라서 이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주의로의 완전한 진입을 달성하는 데 사활적인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북한에서는 계급투쟁, 사상혁명과 함께 사회주의로의 완전 진입, 건설의 불가결한 조건인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동시적 해결로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의 추진력을 민족적 범주에서의 인민의 자발적 참여의 에너지 극대화에 기대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체적 經濟建設 原理는 經濟建設에 대한 견해와 관점, 입장을 반영하여 경제건설에 관한 이론의 정치체계와 내용을 규제하고 관통하는 근본적인 경제사상이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방법론에 입각하여 그들은 경제건설의 기본 원리를 몇가지의 테제로 요약한다. 첫번째 테제는 “인민대중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인”이라는 것이다.⁴³⁾ 따라서 주체의 경제건설에 대한 사상과 이론의 전 체제 및 내용들은 근로인민대중이 경제의 주인이라는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의 경제이론의 근본 특징과 근거가 있다고 하겠다. 두번째 테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자주적인 생활의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과정”이라는 것이다.⁴⁴⁾ 이 두번째 테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해명을 언급한 것이고, 한마디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게 완전히 자주적인 생활의 물질적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다. 세번째 테제는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

43) “사회주의 경제는 고도로 사회화된 대규모 경제이며 사회주의 경제의 주인은 다름 아닌 인민대중입니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7권, p.496. ;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16.

44)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경제건설을 다그쳐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여야 수요에 따르는 공산주의적 분배를 실현하고 물질생활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김일성,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p.15.

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⁴⁵⁾ 따라서 주체의 경제건설 이론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경제건설에 사람들의 사상·혁명적 열의를 기본적으로 확립해 나간다는 원칙을 강조하기에 이르는 것이다.⁴⁶⁾

주체의 경제건설 이론의 論理的 展開는 경제건설의 ‘주체’, ‘본질적 성격’ 및 ‘추동력’에 대한 이해를 거쳐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전략 목표’로 이전된다. 즉, 주체의 경제건설 이론은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점령에 대한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경제건설의 전략목표를 밝혀주고 있다.

먼저 경제건설의 노정과 방향에 관한 부분에서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점령이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도기와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건설시기를 포함하는 두 역사적 시기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과도기 과업의 요구에 맞게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며, 그 이후에도 경제건설을 계속하여 공산주의적 경제관계를 완성하여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아가는 것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건설의 합법칙적 노정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건설의 근본방도에 관해서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⁴⁷⁾이

45)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입니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23권, p.466.

46)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유물론과 주체사관 간의 미묘한 ‘중심적 차이’가 노정된다. 즉 물질적 요인과 사상의식의 관계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의 문제이다. 북한의 입장은 사회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경제적 요인의 역할과 의의는 중요하나, 물질적 조건을 얼마나 빨리 갖추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질적 조건은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빨리 그리고 훌륭히 갖추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며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고상한 사상의식, 혁명적 열의에 선차적 의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47) 3대혁명은 북한의 독특한 혁명론으로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노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 혁명의 과업”이다. 김일성, “조선로동당창건 30돌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7), p.584. 즉,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요구로서 북한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근본방도이며, 또한 사상혁명, 문화혁명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진시키는 것은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근본방도이자 건설이 장기간 동안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⁴⁸⁾

이상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은 경제건설의 기본원리로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체, 본질과 성격 및 추동력 그리고 전략목표 - 건설과 근본방도라는 내용적 체계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는 경제법칙이며 다른 법칙에 대하여 규제적 작용을 하는 법칙이다. 즉, 사회적 생산은 어느 때나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과 집단을 위한 것이 되는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근로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물질생활 분야에서의 근로대중의 자주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적 생산의 목적이라는 설명이며,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은 생산의 주인으로된 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자각적으로 참여하여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빨리 발전한다”⁴⁹⁾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주체의 정치경제

북한은 농업협동화가 완성되고 천리마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면서부터 사상혁명의 강조와 함께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필요성을 계속 언급해오다가 1964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처음으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명확한 관계를 정리하였다. “농촌에서의 기술, 문화, 사상혁명의 과업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통일적 과정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사상혁명은 모든 사업에 선행시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혁명과업이다.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만 치우치고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엄청난 착오로 된다……우리는 사상혁명을 확고히 진행시키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한다.” 통일문제연구소 엮음, “우리나라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북한경제자료집」(도서출판 민족통일, 1989), pp.130-131. 그리고 이후 1970년 5차당 대회에서는 이 3대혁명이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기본노선이라고 천명되었으며 이는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서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11조, 25조, 36조)

48)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근본방도,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의 위계서열과 중심 - 보조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사상·문화혁명을 앞세우고 기술혁명을 인민대중의 혁명적 사상의식으로 추동·결합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경제건설의 전략방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49) 「경제사전 1」(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719.

학이 강조하는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견하게 된다.

「경제사전」은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에 규제되면서 사회주의경제를 관철하는 또 다른 경제법칙으로 소위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의 법칙'을 설명한다. 북한에서도 여타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전 사회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장악되어 있는 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본질적 특성에 맞게 계획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며, 또한 "인민경제 계획은 축적과 소비, 생산수단생산과 소비재생산 사이의 균형을 보장해야 하며 공업과 농업, 공업부문들 사이, 그 밖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 사이의 균형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사회주의 하에서 경제발전의 합법칙성을 표현하는 또 다른 경제법칙이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쥐고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절실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체정치경제학은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서 1)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성에 의한 축적조성에서의 합리성 2) 기술의 발전 3) 생산대중의 높은 혁명적 열의를 제시하고 있다.⁵¹⁾ 그리고 이들 '사회주의의 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법칙',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의 법칙'은 사회주의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공산주의 단계에서도 더욱 강화된 형태로 작용하는 법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自立的 民族經濟 建設路線

북한에 있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공업화의 수준에 기초하여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그 역사적 경험을 추적할 수가 있다. 즉,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와 공업화를 토대로 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무계급 사회를 건설하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⁵²⁾

50) 「경제사전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p.684.

51) 「경제사전 1」 앞의 책, pp.707-708.

52) 북한의 논거에 의하면 제1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1961-70)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전략노선이라 할 수 있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문제와 그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노선과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역사적 경험을 경제계획의 구조와 내용의 성격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내적 논리의 역사적 단면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기본 전략노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닌 自力更生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야말로 북한의 혁명과 건설의 지도사상인 '主體思想'을 경제건설 분야에 구현시킨 모든 경제정책의 출발점과 그것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경제건설의 기본틀을 형성하고 있는 自立的 民族經濟 路線이란 1)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발전을 포함하는 다면적인 경제구조를 수립하고 2) 현대적 기술로 경제·사회를 정비하며 3) 강고한 원료기지를 확립하고 4) 경제질서를 위한 전문가·기술자를 다수 육성하며 5) 모든 부문이 유기적 상호관련을 맺는 종합적인 경제체계를 형성하는 경제건설 방식으로 규정된다. 이 기본노선은 첫째로 중공업과 함께 경공업 및 농업의 급속한 동시적 균형발전을 이룬다. 둘째로 축적과 소비를 함께 급속히 증대시킨다. 셋째로 노동동맹을 강화하는 조건을 창출하여 3대차(농촌과 도시, 농민과 노동계급, 육체노동과 정신노동)를 해소시켜 가는 길이라고도 정식화된다. 또한 이 기본노선은 단순히 급속한 공업화를 통한 生産力發展이라는 경제적 의의만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기초한 의식혁명, 사상혁명 등 生産關係의 발전이라는 정치적 의의와 함께 갖는 북한 독자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이다.⁵³⁾

역사적 과제가 실현된 결과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70년대부터 새로운 단계,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무계급 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53)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重工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가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하게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업화의 노선과 정책 및 공업화를 기초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人民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의 路線이 모두 이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전략노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배순근, "북한경제의 이론과 실제", 「사회와 사상」(1988. 12), p.175.

요컨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自立的 民族經濟의 建設은 말하자면 철저한 자립적 민족경제체제 즉, 자기완결적인 재생산구조의 확립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는가? 첫째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은 정치적 독립을 지키고 政治的 自主性을 보장받기 위한 불가결한 요구라는 것이다. 둘째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은 강고한 사회주의의 物質的·技術的 土臺를 구축하고 사회주의의 完全승리·무계급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합법칙적 요구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립적으로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라의 인적 물질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고 경제발전의 균형을 주도적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의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인민의 복지를 전면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강고한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셋째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인 민족적 不平等의 근원을 없애고 民族問題의 최종적 해결을 기도하는 불가피한 것이라 말해진다.⁵⁴⁾ 마지막으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은 일부에서 비방하듯이 국수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국제 경제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現實的 基礎라는 것이다.⁵⁵⁾

이와 같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경제건설 노선과

54)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계급적 차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뿌리박힌 민족적 불평등의 해소를 예견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론적인 면에서 민족적 억압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나, 오랜 역사를 통해 이미 형성된 불평등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차이를 폐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 불평등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사회주의에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근거를 분명히 해 준다는 것이다.

55) 국제관계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전략노선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는 홍승은, 「자립 경제론」(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84); 최종극, 「과도기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합법칙성」(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8) 참조. 엄밀히 말해서 자립경제에 대하여 '폐쇄 경제'를 대립개념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순이 된다. 자립경제의 대립 개념은 예속경제이며 폐쇄경제는 개방경제가 그 대립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정책 방향은 사회적 생산의 2대 부문인 生産手段 生産部門과 消費財 生産部門, 공업과 농업 및 공업내부에 있어서 중공업과 경공업의 발전방향과 상호 관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인민경제 제 부문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균형과 계획적인 번영을 보장하는 것에 의해서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강력한 중공업과 근대적인 경공업 및 발달한 농업을 갖춘 綜合的인 경제체제의 確立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⁶⁾

그러므로 사회주의 정치경제이론은 축적과 소비, 즉 성장과 분배평등 및 사회복지를 다 함께 급속히 증대시키는 것을 基本目標로 하고 있다. 이것은 인민의 물질적 복지향상과 경제 사회적 평등화라는 사회주의 이념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성장, 특히 중공업 우선투자를 위한 급속한 축적증대로 소비 및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크게 억제되고 있다.⁵⁷⁾

自力更生 路線은 사회주의 국가의 불균등 발전에 기초한 분업 체계에 반대하는 자주적 입장이다.⁵⁸⁾ 분명히 이 자력갱생 노선은 식민지를 경험한 북

56) 이 노선과 정책 방향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확대재생산이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였다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57)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따라 모든 부문, 특히 '중공업 우선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 균형발전'이라는 균형발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산업에 고부 투자하기에는 자본 등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모든 부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리하여 북한은 실제로는 중공업 우선과 농업집단화를 기본으로 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방위와 소위 남조선 혁명을 위한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행방침으로 군수산업에 투자 우선순위가 돌려짐으로써 경공업과 농업 등 소비재 산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노선과 경제노선을 연계시키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중반 이후이다. 당시의 국제적 상황은 북한에 매우 불리한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기치 아래 급속히 군사력을 증강시켜 갔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군비증강 정책은 남한내 미군의 주둔과 한국군의 군비증강 및 현대화 정책을 정당화하고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당연한 귀결로서 남·북한은 가속적인 군비증강 경쟁으로 돌입하여 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군사력 우위 정책이 그들의 경제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는 점이다.

58) 이러한 고립적인 경제자립(autarky) 정책의 고수로 북한은 코메콘에도 가입하지 않아 국제분업의 이익, 특히 후발성의 이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무역이 자력갱생원칙에 의해 무역의 역할을 내부경제 발전을 위한 보조적 기능에 한정하는 소극적 무역관에 입각함으로써 수출은 수입을 위해 필요한 외화조달에 그

한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객관적 조건상 이 자력갱생 노선은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차적으로 그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⁵⁹⁾ 왜냐하면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이고, 나아가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한, 전 인민의 취업과 생활 조건의 보장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급속한 확대재생산을 통하여 생산 규모와 분야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북한은 과연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앞으로 생산력 발전은 자본 집약적, 기술 집약적 산업에 의하여 추동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⁶⁰⁾

또한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체의 所有關係(집단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로 표현되는)에 있어서는 사회적 성격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력 수준의 상대적 저위성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내의 시장경제, 가치법칙의 이용, 분배형태의 미성숙 등은 이를 증명한다.⁶¹⁾

치는 量入定出과 수출입 균형무역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북한도 나중에 보듯이 70년대 중반, 특히 80년대초에 들어오면서 경제계획 수행에 불가결한 대서방 기술도입의 필요성 등으로 부분적인 대외무역 확대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대내지향적 공업화정책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다.

- 59) 북한의 자립적 경제건설 노선에 대한 비판은 북한 경제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론과 관련하여 각각의 이론적 추상수준의 차이와 비판대상의 세부항목에서의 차이, 즉 각론적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중앙집중 계획경제가 자본축적 능력과 투자효과 및 노동생산성을 둔화시킴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정상훈, “북한의 경제발전과 그 가능성” 「북한의 대외정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또한 이론적으로 좀더 세련된 형태로 현실 사회주의 경제가 외연적 자본축적의 내포적 자본축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한계를 북한의 경제노선의 구조적 난관을 설명하는 분석관점으로 제시하는 논리도 있다. 황태연, “과학기술혁명과 노동운동”, 「사상문예운동」, 1990년 여름 ; 배손근, “북한 경제의 이론과 실제”, 「사회와 사상」, 1988년 12월호. ; 그리고 각각의 북한 경제부문의 낙후성과 구조적 왜곡을 지적하는 국토통일원 중심의 논의 등도 있다.
- 60) 더구나 북한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는 더욱 절실하다. 과연 현재 북한의 원료, 기술, 자본, 노동으로 장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겠으며 자력갱생의 원칙을 가지고 일국에서의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해 낼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 61) 북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북한은 1958년에 소유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100% 완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그러므로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 방향은 그들의 주장처럼 이론적으로 완전하고 현실적으로 적합한 노선이라는 것에는 현실 사회주의의 경제적 동향에 비추어 볼 때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⁶²⁾

그것은 경제정책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근로대중을 소외시켰던 정치체제의 비민주성과 조용하는 것이었고, 또 경제발전이 일정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그 이상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경제 내적인 자기한계와 관련된 것이기도 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볼 때, 경제의 외연적 성장단계에는 집권적 계획경제가 적합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⁶³⁾ 경제의 발전단계가 내포적 성장단계로 넘어가면 그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⁶⁴⁾ 좀더

없을 정도의 속도와 규모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생산력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착취에서 해방된 인민의 혁명적 열의', '자주성'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인민의 '자주성' '혁명성'이 필연적 관계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결국 이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 착취로부터의 해방 - 인간의 자주성'이라는 도식이 성립하게 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인간의 의식이 객관적 조건에 우선하고, 객관적 조건이란 단지 대상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사실 인간은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 본원적인, 본래적으로 자주성을 지닌 추상적 인간이 된다. 그러면 과연 '인간'의 주체성에 비해, 세계는 개조되어야 할 대상에 불과한가? 바꾸어 말하면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일 모순형태, 소유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에 있어서의 분산적·개인적 성격의 잔존(?)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근거하는 인간의 의식(자주성, 집단주의 등)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중국의 역사적 경험은 이미 이를 증명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현재의 경제건설 방침은 그야말로 자국의 구체적 조건을 망각한 것으로 조만간 경제발전의 질곡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정한 변용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62) 즉, 이러한 북한의 계획경제 노선과 정책방향은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1960년대 초에 이르러 소련이나 동구에서 모두 그 效率性和 適合性이 크게 상실되고 오히려 더 이상의 공업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障礙要因으로 등장하였으며, 1970년대 말부터는 북한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이들 국가에서는 모두 공업성장율이 둔화되고 노동 생산성의 정체와 기술진보의 지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급 불균형 등의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63) 예를 들어 북한에서 제시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필요충분조건과 사회주의 공업화 전략노선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64) 외연적 성장은 노동력과 자연자원의 투입에 의존한 양적 성장을 의미하며, 내포적 성장은 성장기술과 자본 집약적인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외연적 경제(extensive economy) 또는 내포적 경제(intensive economy)라는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연적 공업화'란 더 많은 투자나 더 많은 노동력의 사용을 통해 공업생산

정확히 언급하면, 한 경제의 성장단계와 그 경제내에 존재하는 유희자원과 잉여노동력이 모두 사용되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투자와 물량투입에 의한 외연적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이제 성장방식은 자원과 노동력의 보다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사용을 통해 인민경제의 사회적 총생산을 증대시키는 내포적 성장단계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비롯한 과학기술혁명의 제 성과를 준비·수용·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가 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정책방향에는 그러한 과학기술혁명을 추동할 만한 물질적·기술적 刺戟 誘引이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경제의 外延的 成長으로부터 內包的 發展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이행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북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경제노선과 정책방향이 현실적합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⁶⁵⁾

Ⅲ.北韓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路線의 展開過程

1. 社會主義建設과 指導體系

1) 領導方法과 領導體系

일반적으로 지도관 전위와 대중사이의 '相互信賴'를 전제한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전위의 입장과 정책에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65)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방향이 완전히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사회적 현실을 개조하고 그 과정에서 실현되는 역동적인 물질적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방향은 대단히 주관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이론과 실재는 상당히 괴리되는 실태를 나타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확히 언급하면, 한 경제의 성장단계와 그 경제내에 존재하는 유희자원과 잉여노동력이 모두 사용되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투자와 물량투입에 의한 외연적 성장이 불가능해지는 단계에 이르면 이제 성장방식은 자원과 노동력의 보다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사용을 통해 인민경제의 사회적 총생산을 증대시키는 내포적 성장단계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비롯한 과학기술혁명의 제 성과를 준비·수용·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가 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정책방향에는 그러한 과학기술혁명을 추동할 만한 물질적·기술적 刺戟 誘引이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경제의 外延的 成長으로부터 內包的 發展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이행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북한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그것을 준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경제노선과 정책방향이 현실적합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⁶⁵⁾

Ⅲ.北韓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路線의 展開過程

1. 社會主義建設과 指導體系

1) 領導方法과 領導體系

일반적으로 지도관 전위와 대중사이의 '相互信賴'를 전제한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전위의 입장과 정책에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

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65)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방향이 완전히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사회적 현실을 개조하고 그 과정에서 실현되는 역동적인 물질적 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방향은 대단히 주관적인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이론과 실재는 상당히 괴리되는 실태를 나타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⁶⁶⁾ 즉, 지도관 대중들에게 전위의 정책이 옳바르다는 것을 대중들 자신의 경험 속에서 확신시키고 전위의 정치의식 수준으로 그들의 의식을 끌어 올림으로써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동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⁶⁷⁾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5년에서 1966년 사이에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 주체사상은 1967년 5월에 열린 제4기 제1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라고 선언되었고, 1970년의 당 5차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과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⁶⁸⁾ 이와 같이 주체사상이 당과 국가의 유일사상체계로 정착되면서, 주체사상의 내용도 思想 - 理論 - 方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겠다. 즉, 협의의 주체사상은 소위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과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내용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원리, 그리고 지도원리로 구성되며, ‘이론’은 혁명전통에 관한 이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이론 등을 의미하고, ‘방법’은 영도체계와 영도원칙, 그리고 영도예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⁶⁹⁾

이같은 주체사상의 체계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방법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라는 수령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수령론이 정식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중에 대한 지도의 문제가 당의 최고 영도자로서의 수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주체사상에서는 주체의 혁명철학과 혁명이론을 통해 제시된 전략전술을 대중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영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영도방법’을 별도의 이론체계로서 구성하여 다루고 있다. 즉, 주체사상에서 말하고 있

66) 한국정치연구회 지음, 『북한정치론』(백산서당, 1990), p.69.

67) J.V. Stalin, “레닌주의의 제문제에 대하여”, 서종진 옮김, 『스탈린선집 1』(전진, 1988), p.224.

68) 이상민, “북한의 정치구조와 권력세습”, 『북한연구』(대륙연구소, 1991년 가을호), pp.10-11.

69) 조진경, 『민족자주화운동 2』(백산, 1988), pp.205-212.

는 영도방법이란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원칙과 체계”⁷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체의 철학, 주체의 혁명이론과 함께 주체사상의 3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

혁명의 방법이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로 구성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⁷¹⁾ 첫째, 역사적 배경으로 북한사회의 後進성과 관련된다.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은 식민지반봉건사회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전개와 그에 따른 전위의 역할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다. 둘째, ‘帝國主義’의 항상적 위협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일제잔재의 극복은 물론 해방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고도로 집중화된 권위를 요구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지도자들의 역량과 관련된 主體的 요인이다. 항일무장투쟁의 경험은 대중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가능케 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지도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인 권위주의 정치문화의 문화적 요인이다. 북한사회의 이러한 특성들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혁명과업과 맞물리면서 지도의 최고형태로서의 ‘영도’문제를 체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⁷²⁾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영도의 본질은 주체사상을 통해 사회역사 발전과정에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등이 해명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70)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72), p.460.

71) 한국정치연구회, 앞의 책, p.70.

72) 이와 같이 북한이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수령론을 강조하면서 극단적인 개인숭배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유나 배경논리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즉, 1965년 남한은 한일회담과 한일기본조약체결로 한·미·일의 3각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베트남전쟁이 격화되면서 남한 군대의 파병이 결정되었는데 반하여, 사회주의권은 극도의 분열과 대립상태를 계속함으로써 북한의 안보위기는 아마도 한국전쟁이래 최악의 상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1966년 폭발한 중국의 문화대혁명, 그리고 무력충돌로까지 번져간 중·소분쟁, 그리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7개년계획(1961-1967)을 3개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북한의 내부사정 등은 당시 당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항일빨치산 그룹으로 하여금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를 강화·확대하게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서진영, “분단과 냉전, 그리고 북한체제의 형성과 변화”,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법문사, 1990), p.99.

이다. 즉, 인민대중이 사회역사 발전과정 특히 공산주의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주체로 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도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영도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도의 본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영도가 누구에 의해 담당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영도의 주체에 관한 규명이 고, 둘째로는 영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셋째로는 영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우선적으로 영도의 주체와 관련하여 주체사상에서는 대중에 대한 영도는 곧 수령에 의한 영도라고 규정하고 있다.⁷³⁾ 그것은 노동계급의 당이 노동계급 가운데에서 가장 우수한 先進分子로서 조직된 선봉대, 전위대이지만, 당이 그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도사상과 전략전술, 그리고 대중들을 조직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능력의 소유자인 수령의 영도에 의해 지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에 대한 당의 영도는 곧 수령의 영도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수령은 당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혁명의 최고영도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⁷⁴⁾

결국, 수령에 의한 혁명적 영도의 본질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

73) 수령론이 정식화된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956년 이후 계속되었던 반종파투쟁을 종결짓는 1958년 3월의 당대표자회의 이후 '당적 사상체계의 확립'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강조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수령보다는 당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후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 빨치산세력의 지도체계가 수립되면서 수령의 역할문제가 크게 강조되었다. 김남식, "당, 수령, 대중조직", 「사회와 사상」 1988년 12월호, pp.167-168. 그러나 이 때에도 수령의 절대적 지위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즉, 수령의 혁명사상에 입각하여 당적 사상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당과 인민대중은 '현명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략사 2」, p.218. 그러나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확립하는 문제가 강조되면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본격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67년부터 주체사상이 당과 국가의 유일사상 체계로 공식화된 1970년 초 사이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관한 수령론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고, 1974년 2월에 개최된 '사상부문 일꾼강습회'에서 김정일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을 발표하면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하는 수령론이 정식화되었다고 하겠다. 김남식, 같은 글, pp.168-169.

74)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총서 10: 영도체계」 (서울: 지평, 1989), p.35.

으로서의 입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데 있다고 한다.⁷⁵⁾ 즉, 수령에 의한 영도는 수령에 의한 일방적 統治가 아니라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혁명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도의 본질을 전제로 하여 수행되는 혁명적 영도의 사업은 당면한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노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대중과의 '혈연적' 관계를 바탕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영도의 본질에 의거하여 실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한 노동계급의 당이 견지해야 할 영도의 원칙으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 주체의 확립, 그리고 군중노선의 관철 등을 들고 있다.⁷⁶⁾

이와 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는 근로인민대중을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이끌어 가는 사상체계와 근로인민대중을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할 수 있는 조직지도 체계의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다.⁷⁷⁾ 그것은 인민대중들을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또한 인민대중의 조직화를 통한 동원체계의 확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전당과 전체 인민을 수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과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며 수령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질서를 전당과 온 사회에 확립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⁷⁸⁾

75) 위의 책, p.39.

76) 북한은 지난 1972년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제를 신설하여 주체사상의 수령관을 헌법으로 제도화하였다.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하면 주석은 국가운영의 절대적인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 주석은 국가 전반에 대한 지도권과 과거 내각의 정책결정권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이양받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감독한다. 이러한 규정은 주석이 행정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 위치임을 뜻한다. 게다가 주석은 주석을 선출하는 최고인민회의에 소환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전제군주국가와 다를 바 없다. 북한의 신헌법해설서는 이러한 주석제를 "프롤레타리아독재국가에서 노동계급의 수령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사발전에서 수령이 노는 역할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국가정치지도"라고 규정하여 주석제가 주체사상에서 강조되는 수령중심의 유일지도체제를 공식화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평양: 인민과학사, 1973), pp.89-90.

77) 위의 책.

78) 위의 책, p.80.

이와 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매개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당과 국가기관, 그리고 근로단체 등이며, 이들이 수령의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영도원칙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주체사상에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를 통하여 실현되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는 혁명과 건설 전반에 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체계이며 영도체계로 간주되고 있다.⁷⁹⁾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는 주체사상에서 수령의 유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영도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서 嚮導的 역할을 담당하고, 국가기관은 당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근로단체는 인민대중을 조직화 의식화하는 역할을 각기 분담하여 철저한 위계질서속에서 영도의 기능을 각기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같이 주체사상에서 주장하는 수령론은 레닌이 강조한 전위당의 역할이나, 또는 문화혁명시기에 일부 좌파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모택동의 '천재론' 등에서조차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도자의 역할과 지위를 절대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왜곡하였고 북한의 모든 역사의 업적을 수령을 중심으로 한 역사로 해석하는 개인숭배사상을 팽배케 하는 요인이 됐다.

2) 唯一的 指導體系

북한에서 대중적 지도방식은 이미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여 일반대중들에 대한 군중노선을 관철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 삼위일체가 되어 수령식 지

79) 이와같이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수령은 그 지위에 걸맞게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첫째로, 수령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해야 한다. 둘째로, 인민대중의 혁명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혁명조직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로, 혁명의 전략전술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로, 혁명위업의 대를 이어 계승하며 완수시킬 수 있는 후계자를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 「김일성주의혁명론」(평양: 삼학사), pp.235-239.

배체제가 그들의 사회주의발전과 함께 강화되는 특성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그들의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조직사회로 변화된 것에 근거하여 1980년대부터는 김정일에 의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하여 수령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 부터 북한에서는 이미 그들의 혁명과 건설의 추진과정에서 제기하고 풀어나간 수령, 당, 인민대중의 문제를 북한사회주의 발전의 주체문제로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형성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왔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북한에서 이루어 낸 성과들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굳게 단결해 낸 결과로 인식하고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수령, 당, 대중이 오직 하나로 통일 될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⁸⁰⁾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주체사상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제도로써 채택되어온 수령식 통치제도를 완전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수령과 당, 그리고 인민대중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하여 이들 모두를 혁명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⁸¹⁾

요컨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종래의 주체사상이 대중들에게만 혁명의 주체로 국한시켜 왔던 성향에서 벗어나 수령과 당을 포함시켜 전반적으로 이들이 하나로 결합된 혁명의 주체인 같은 운명에 놓여 있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서로간에는 항상 상호의존의 관계를 본질로 하는 운명공동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것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결합되어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투쟁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수령, 당, 대중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상과 행동의 통일을 기할수 있는 단일된 결합체로서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수령과 당, 그리고 대중

80) 김재성,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근로자』 1987. 7호, p.32.

81)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 (1982), p.168.

의 統一體에 대해 운명을 같이하는 운영공동체로 간주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규정하려는 것은 인간사회를 하나의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파악하고 있는 사회유기체론과 매우 유사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⁸²⁾

주체사상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사상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사회적 함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러한 사회관계의 새로운 개념은 북한사회의 전통적인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의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전체주의적 사회관을 강화하는 것이다.⁸³⁾ 둘째, 수령에 대한 충성의 당위성을 생물학적인 유기체설의 비유를 도입하여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인 것만큼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도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강조한다.⁸⁴⁾ 셋째, 이러한 사회통합의 강조는 결국 중국, 동구 諸國, 소련에서의 개혁 바람에 대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86년 이래로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을 체계화하고 이를 강조해 왔던 목적과 이유는 소련 및 중국의 개혁 이론이 국내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진다.⁸⁵⁾ 네번째로,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은 資本主義에 대한 社會主義의 우월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김정일은 발전된 자본주의가 물질적인 생산력에서는 사회주의를 능가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는 했어도 자본주의는 개인적인 생명을 보장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사회주의만이 개인에게 永生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주성이 실현되므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논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社會主義는 社會政治的 生命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재정의했던 것이다.⁸⁶⁾ 다섯번째, 보다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재해석이

82) 김학봉, “수령·당·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근로자」 1987. 12호, p.15.

83) 위의 책, p.16.

84) 「근로자」 (1987. 7) p.17.

85) 스즈키 마사유키,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박한식 편, 「북한의 실상과 전망」 (동화연구소, 1991)

86) 이러한 여러가지 의도를 가진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은 최근 자주 되풀이해서 인민

다. 김정일은 생산관계의 변화에 착안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의 고전적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형성 그 자체를 사회주의 이상과 동일시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⁸⁷⁾

그러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재해석의 논리는 인간의 현실적 삶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정신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유물론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관념론 심지어는 종교적 논리의 회귀라는 인상을 준다.⁸⁸⁾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체계화가 보여주고 있는 강화된 혁명적 수령론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정치적 개혁의 가능성은 난망해 보이며, 다만 새로운 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세속적인 고충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경제개혁만이 가능해 보인다.⁸⁹⁾

결국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공산주의건설에 필요한 모든 활동의 주체를 하나의 혈통적 가족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統一的 組織體로 규정함으로써 수령의 영도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이제까지 북한에서 유일한 수령적 지위를 부여 받고 있었던 김일성이 주로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에 의하여 수령으로서의 당과 대중을 직접 統治할 수 있었던 데 반하여, 김정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수령제도를 영속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집권에 따르는 영도체계의 혼란과 분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⁹⁰⁾

대중들에게 교양되고 있으며 정보가 차단된 북한사회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의 정치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87) 김정일, “주체사상의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연구』 (태백, 1989), p.265.

88)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주의개념의 재해석 작업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북한당국의 정책변화를 정당화 해줄 수 있는 원초적인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우위를 대전제로 확신한다면 부차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89)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자료는 북한이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매우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며 노동계급정당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통일원교육홍보국, “북한 김정일의 담화내용 분석”, 『통일속보』 제91-17호 (91. 5. 30), pp.14-15, 32-33.

그런데 앞서 본 김정일의 표현대로 사회정치적 집단의 뇌수인 수령은 당 및 인민대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수령을 떠나서 대중이 자주적인 생명체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수령도 대중을 떠나서는 정치적 영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즉, 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수령이 아니라 개인에 지나지 않으며, 수령의 역할, 당의 역할, 대중의 역할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⁹¹⁾ 이렇게 볼 때 종래의 공식입장이었던 수령, 당, 대중이라는 일방적인 지도관계가 다소 緩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의 유일적 영도와 군중노선의 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김정일은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군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군중에 의거하지 않고는 당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자기의 령도를 실현할 수 없다”⁹²⁾고 주장함으로써 종래 수령의 권위와 결부되어 절대적인 요구기준으로 되어 온 당의 유일적 영도라는 개념을 群眾에 依據라는 개념으로 대치시켰다.

북한은 이처럼 주체사상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보다 대중적 基盤을 확고히 하는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내외의 변화 압력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⁹³⁾

90) 종합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결국 1986년에 제시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등장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하나는 소련이나 중국의 체제개혁운동에 便乘하여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세력의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낙후에서 비롯하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불신을 稀釋시키기 위해서이다. 특히 남한과의 상대적 격차를 의식하면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이념적 재무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高性俊, “主體思想의 形成과 機能 그리고 變化”, 高性俊, 李常民 외 공저, 『轉換期의 北韓 社會主義』(大旺社, 1992), pp.47-48.

91)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앞의 책, p.168.

92)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카이 다카이, 앞의 글, p.62에서 재인용.

93) 김일성이 1990년 신년사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도 변천되는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되고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社會主義 經濟法則의 適用

1) 所有制轉換

無階級社會를 실현하는 문제⁹⁴⁾는 북한에 있어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이룩하기 위한 基本問題라는 위상을 갖는다. 무계급사회의 실현문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농촌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여야”⁹⁵⁾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과 협동농민의 두 계급의 존재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높고 낮은 두 형태인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존재에 기초한다. 따라서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유일적 지배를 확립하고 농민의 노동계급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다시 말해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문제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소농경리를 사회주의적 집단경리로 개조하여 농민들을 소생산자로부터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하여 노동계급과 구별되는 하나의 계급으로 존재하고 있는 협동농민들을 사상·기술·문화의 모든 면에서 노동계급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⁹⁶⁾

94)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무계급사회 실현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무계급사회의 실현은 적대계급의 준동과 낮은 사상의 부식작용의 종식,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튼튼한 축성과 인민들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의 보장 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의 다른 징표들을 반영하고 규제하는 종합적 지표이기도 하다. 인간개조·사회개조·자연개조 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의 모든 성원들과 모든 사회관계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에서 나서는 기본 문제이다.” 리기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나서는 기본문제”,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7년 2호) p.19.

95) 김일성 (1986), “완전승리”, 앞의 책, p.477.

96) 리기성, 앞의 글, p.22.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인민적 소유가 지배하는 공업과는 달리 농업부문에서 협동적 소유가 지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농민대중의 사상의식 수준과 문화기술 수준, 농업생산력의 발전수준의 저급함에서 찾고, 즉 “아직 전인민적 소유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사상·기술·문화 영역에서의 도시에 비한 농촌의 낙후성”⁹⁷⁾과 관련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협동적 소유를 강제로 통합하거나 폐기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협동적 소유가 남아있게 되는 근원인 농촌의 사상·기술·문화적 낙후성을 없애야 한다는 방법론이 도출되는 것이다.⁹⁸⁾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서로 밀접한 연계 속에서 발전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두 형태로서 다 같이 사회주의적 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이룬다고 한다. 그 가운데에서 전인민적 소유는 인민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공업에서 기본을 이루고 선진적인 노동계급이 담당자로 되는 소유⁹⁹⁾이며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면서 자기보다 뒤떨어진 협동적 소유를 도와 그것을 자기 모양대로 개조할 사명을 지닌 사회주의적 소유의 높은 형태”¹⁰⁰⁾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협동적 소유는 농업에서 기본을 이루고 협동농민이 담당자로 되는 소유로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 밑에서만 발생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장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어야 할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적 소유의 낮은 형태라 한다.¹⁰¹⁾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97) 위의 글, p.21.

98) 일찍부터 북한에서는 농촌의 4化(기계화·수리화·전기화·화학화)를 추진하여 농업생산에서의 안정성을 토대로 세계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농업과 공업의 근대화과 자립토대를 실현한 선두주자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조영건,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북한경제”,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p.121.

99) 북한의 공장, 기업소는 기본적으로 국유화(전인민적 소유)되어 있다.

100) 김승준,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기본문제 해결의 근본 방도”, 「경제연구」, 1987년 1호, p.23.

101)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고 연관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협동적 소유제 전환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한다.

두 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 즉, 전인민적 소유의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상품화폐를 매개로 하여서가 아니라,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국가기업소를 통하여 협동농장의 생산과정에 직접 들어가 생산적 연계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생산적 연계를 통하여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결합되면, 공업에서 생산되는 현대적 기술수단들이 개별적 협동농장들의 경제적 능력, 다시 말하여 새 기술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투자능력의 구축을 받지 않고 모든 협동농장들에 더 잘 들어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되며, 사상·기술·문화의 각방면에서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선도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¹⁰²⁾

이렇게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두 소유의 직접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나가면,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정치사상적 영향이 강화되고 공업의 기계기술, 선진적인 기업관리와 생산문화가 농촌경리에 더 잘 보급되며, 이것은 결국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접근·전환을 촉진하게 한다는 것이다.¹⁰³⁾

북한은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에서 제기한 과도기 종료의 기본내용이자 노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소멸시켜 무계급사회 건설의 종합적 징표가 되는 소유제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도 그 현황을 뚜렷이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데, 계급적 격차해소를 위한 농민의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이 실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¹⁰⁴⁾ 이는 북한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적 성격을 더욱 확대하여 점차 무계급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과도기 성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소유제 전환의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리라는

102) 소련에서는 1958년 후르시초프의 개혁에 의해 농업지원의 거점으로서 조직되어 있던 M.T.S.가 해체된 결과, 공업과 농업의 생산적 연계는 오직 사업적 형태, 즉 콜호즈가 농업기계, 관개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형태로 한정되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송두율, 「소련과 중국 -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한길사, 1990), p.132.

103) 김승준, 앞의 글, p.24.

104)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앞의 글, p.497.

판단을 불가피하게 한다. 물론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의 상황에서 소유제 전환과 같은 문제가 이같은 상황과 독립되어 진전되리라는 가정은 어려우나, 북한에서 더욱 시급한 것은 외연적 경제발전 패턴을 내포적 경제발전 패턴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문제의 해결에 있을 것이다.

소유관계에 관한 종래의 사고 방식은 국가소유를 유일하게 진정한 사회주의적 소유주의적 소유형태로 간주하고, 국가소유의 확대를 사회주의적 발전과 일치시키는 한편 협동적 조합소유는 과도적 형태로 간주했으며, 사적 소유는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폐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¹⁰⁵⁾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초한 과도한 국가화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공유제 대신에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전인민의 소외를 낳았다고 판단하는 개혁이론가들은 단지 생산력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현대경제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유의 다양성 자체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의 다원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¹⁰⁶⁾

그리고 시장은 생산자들이 동등한 상품보유자로서 그들의 생산물을 교환하는 장소이므로, 상품화폐관계와 시장의 복원은 필연적으로 소유의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 그동안 스탈린적 사회주의에서는 국가소유를 유일하게 진정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로 간주하고, 국가소유의 확대를 사회주의적 발전과 일치시키는 한편 조합소유는 과도적 형태로 간주했으며, 사적 소유는 경제적 효율성을 무시하면서까지 폐지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¹⁰⁷⁾ 이러한 과도한 국가화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공유제 대신에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전인민의 분리를 완성하는 '봉록적 점유제'¹⁰⁸⁾를 가져왔다. 이로 말미암아 '만인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무사안일주의와 냉소주의가 팽배해갔다. 현

105) 문용식, "사회주의개혁의 논리와 쟁점", 「사회주의대개혁의 논리」(풀빛, 1990), p.392.

106) V. 메드비제프 외, "사회주의의 현대적 개념에 대하여",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위의 책, pp.59-60. ; V.Medvedev, "Understanding socialism" *Kommunist*, 1988년 제 17호.

107) 김호균 외, "동구사회주의제국의 개혁과 사회주의 이념의 회복", 「한겨레평론」 제 2집, (이론과 실천, 1990) 참조.

108) 황태연, "소·동구권의 혁명적 체제개혁과 사회주의이념의 전면적 자기구현과정", 「사상문예운동」 1989년 가을호, p.325.

재의 소유제도 개혁은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⁹⁾

결국 소유문제에 대한 주체의 경제이론은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소련의 '전통적' 이론과 동일한 논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농업에서의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을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는 점, 이 때 전인민적 소유가 국가적 소유를 의미하는 점도 동일하다. 다만 물질기술적 토대를 무시한 소련식의 국유화 정책에는 반대하여 장기적인 목표하에 농촌에서의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통한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 역시 국가적 소유의 확대에 따른 국가기구의 팽창으로 인민의 다원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문제에는 구소련의 경우에서 처럼 여전히 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商品과 價値法則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화폐관계 발전의 합법칙성을 사회주의하에서의 상품생산,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와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過渡期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상이한 입장은 또한 商品生産에 대한 다른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는 社會主義的 生産을 상품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며,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 상품 생산의 문제는 북한이 스탈린 비판을 왜 거부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이해의 열쇠가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¹¹⁰⁾

109) 그러나 소유제도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소득격차의 확대 및 불로소득의 증대,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를 낳을 것이고, 사회적 소유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10) 스탈린 사후의 스탈린 비판은 기존 연구가가 주장하듯이, 소위 스탈린 우상화에 대한 비판과 평화공존으로 피상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개인숭배

호루시쇼프 이후 소련은 소련사회가 이미 프롤레타리아독제도 필요없는 사회주의가 승리한 사회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스탈린과는 다른 차원에서 시장원칙의 도입을 정당화한다. 즉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한 상태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원칙을 도입하여도 계획성이 무너질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에 입각하여 소련에선 계획적 원칙과 시장성 원칙의 양립을 제창하는 논의가 정착되었고, 그런 방향에서 경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商品과 價値法則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價値範疇로 인식된다.

이미 소련은 1) 사회주의 경제 전체를 상품 생산체계의 일종으로 인식하며, 2) 가치법칙을 계획적 연관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3) 사회적 생산운동의 전과정에 봉사하는 사회적 생산의 규제자로서 인식하였다. 따라서 4) 농업, 공업의 생산 연관도 상업적 형태를 취하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한편 중국은 1) 사회적 소유의 두 가지 형태를 사회주의 단계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지 않고 2) 전일적인 전인민적 소유로의 이행과 높은 차원의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구별하여 3) 사회주의 단계에서의 전일적인 전인민적 소유로의 이행을 주장했다.¹¹¹⁾

북한은 “상품생산과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잘못된 것이라 비판하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화폐관계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원인과 그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고 처리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¹²⁾고 말한다.

북한은 商品이란 “자신이 직접 소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것이므로 생산물이 다 상품인 것은 아니며, 단지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된 불품 만이 상품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¹¹³⁾ 김일성은 사회주의에서 상품

비판 → 집단지도원칙”을 주장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레닌의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民主集中制(democratic centralism)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그러나 스탈린 비판은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대한 상이한 모델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111) 「人民日報」 1958년 9월 10일 ; 고뢰정, 「북한 경제입문」, p.41.

112) 「로동신문」 ‘사설’, 1969년 3월 16일.

113) 「근로자」, 1969. 6월호. 여기서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라는 북한 특유의 정치경

이 존재하는 이유를 1) 사회주의 사회에 사회적 분업이 있고, 2) 생산물에 대한 두 가지 소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적 소유에서 전인민적 소유로 이행되면 대외무역을 제외한 상품생산과 가치법칙은 폐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견해는 스탈린의 견해와 비슷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¹¹⁴⁾ 단지 차이점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생산의 작용 범위를 스탈린이 물자생산에 국한시킨 데 반하여, 북한은 국영부문의 생산수단까지 확대한 데 있으며, 이것은 소유권이 변하면 생산수단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탈린이 상품생산을 구시대의 유물로 소극적으로 규정한 데 반하여, 북한은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한다. 북한은 1) 생산이 국가소유와 협동적 소유 사이에 교환될 경우, 2) 협동적 소유에 있어서 協同農場 또는 協同組合 상호 간에 교환될 경우, 3) 외국으로 수출될 경우에 상품이 되며 가치법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한편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가치법칙이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로 간주된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에 ‘농민시장’과 같은 자본주의적 잔재가 남아있는 이유를 1)

제학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인민적 소유 안에서 유통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고 따라서 가치를 가지지 않지만 그것이 한 국가기업소부터 다른 기업소로 넘어갈 때 사회적 필요노동의 지출에 기초하여 국가가 유일적으로 정한 가격에 의하여 등가보상의 원칙에서 유통되는 관계를 반영하는 경제범주”라는 것이다. 『경제사전 2』, p.314.

- 114) 이것은 북한이 스탈린의 이상화에 대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옹호하였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한다. 김일성은 V.V. Prasad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이> 레닌주의의 집단지도와 맑스-레닌주의 이념을 위반한 것을 비판한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의 개인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역사에서 지도자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였다.……스탈린은 강력한 맑스-레닌주의자로서 국제 프롤레타리아운동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했고,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 파시즘을 패배시키는 데서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리하여 위대한 명성을 얻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말년에 지나치게 독단에 빠졌으며, 그 결과 레닌주의의 집단지도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정부 뿐만 아니라 당에 커다란 손실을 끼쳤다. 따라서 소련공산당은 그의 위대한 공적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의 잘못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I)*,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501-511.

협동경영과 개인부업경영이 존재하고 2) 대중의 물질적·문화적 욕구를 완전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력의 발전이 현재 사회주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한다.¹¹⁵⁾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화폐와 가치법칙을 이용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¹¹⁶⁾ 주체의 사회주의경제이론 확립에서 주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김일성의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에 의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존재하는 근거로서 분업의 존재, 다양한 사회주의적 소유형태 그리고 대외무역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국가적 소유에서 생산된 생산수단과 협동적 소유에서 생산된 생산수단이 교환되는 경우, 협동적 소유간에 교환되는 생산수단의 경우, 그리고 생산수단의 수출입의 경우에 그 생산수단은 상품이며 따라서 가치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단 국영기업소간에 교환되는 생산수단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의 형태만을 가지는 것으로서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¹¹⁷⁾으로 이

115) 「김일성저작선집 5」, pp.309-311.

116) 기본적으로 “가치법칙은 상품의 가치가 상품생산에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량에 의하여 규정되며 상품생산이 그 가치에 따라 진행될 것을 요구한다. 상품의 가치가 그것을 생산하는 데 지출된 개별적 노동시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지출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며 상품들이 그 가치에 따라 교환되는 것은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의 합법칙성이다” 그런데 “가치법칙의 맹목적인 작용, 가치법칙에 의한 생산의 자연발생적 조절, 경쟁과 대다수 상품생산자들의 파산·몰락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력의 막대한 파괴와 사회적 노동의 낭비를 불가피하게 한다.” 반면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생산과 상품교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가치법칙의 작용범위가 제한”되며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치법칙은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이용된다. 조직시장에서 가치법칙은 계획적으로 형성되는 가격기구를 통하여 작용하며 당과 국가는 그것을 사회주의 기본경제법칙,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 발전법칙의 요구를 더 잘 실현하는 데 이용한다”는 것이 북한이론계의 정설이다. 「경제사전 1」, p.17.

117)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 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1969년 3월 1일, 「조선중앙연감」 1970년판 ; 통일문제연구소 엮음, 「북한경제자료집」 (민족통일, 1989), pp.188-201.에 재수록되어 있다. “국가기업소들 사이의 생산수단의 유통에서 가치법칙이 행태적으로 작용하고 이용되는 것은 이 경우에는 생산수단 자체가 하나의 국가소유 안에서 운동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이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 형태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치법칙이 형태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생산수단의 생산과 교환이 본질상 가치창조과정과 가치실현과정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가치법칙의 작용에서처럼 사회적 필요노동 지출에 기초하여 진행

해된다.

3) 經濟管理 體系

1958년에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수되자 곧바로 변화된 토대에 맞게 社會主義經濟管理體系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 완성해 나갈 때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 발전시키고 그 우월성에 의거하여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며 경제관리에서 集團主義的 원칙에 기초한 공산주의적 요소를 끊임없이 늘려 나갈 수”¹¹⁸⁾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적 경제관리체계의 본질적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¹⁹⁾ 첫째,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가 실질적인 생산성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이다. 둘째,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휘하기 위한 정치사업이다. 이러한 경제관리체계의 내용을 함축한 관리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결합시키는 원칙’¹²⁰⁾이다. 이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이에 경제조직사업을 결합하는 원칙과 정치도덕적 자극을 우선으로 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결합하는 원칙 등으로 표현된다. 둘째, 당위원회의 集體的 指導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사전 1』, p.18.

118) 『주체사상총서』 7권, p.193.

119) 이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주체사상 총서』 7권, 제5장, pp.187-229.

120) 경제관리에 있어서 정치의 경제에 대한 우위는, 특히 레닌에 의하여 강조되었다. 레닌은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 표현이다……정치는 경제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달리 논의하는 것은 맑스주의의 초보까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 [『레닌전집』 32권, p.83. ; 김정민 편역, 『사회주의 경제관리』 (이성과 현실, 1989), p.23.]한다고 하여 정치의 우위를 단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오늘날 우리의 중요한 정치의 한 푸드라도 더 곡물을 수집하며 한 푸드라도 더 석탄을 공급하며, 그 곡물과 석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굶주리는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경제건설을 수행하는 것” (『레닌전집』 31권, p.453. ; 『사회주의 경제관리』, p.26.)이라고 하여 정치는 곧 구체적으로는 경제정책과 생산관리를 내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의 배합의 원칙¹²¹⁾이다.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한 문제에 대하여 당일군을 당조직들과 근로단체¹²²⁾들을 발동하여 그 집행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장하며 행정지휘관은 생산지휘부서들을 움직여 그 집행을 직접 책임지고 유일적으로 지휘하는 원칙을 말한다. 세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¹²³⁾의 철저한 실현의 원칙이다. 이 둘을 결합하는 문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강화하고 균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경제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의 끊임없는 속도를 이룩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네제, 獨立採算制를 올바로 실시할 원칙이다.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계획적 관리운영 방식이며 이는 기업소의 경영활동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성의 원칙에 기초하며 경리운영에서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을 전제¹²⁴⁾하여 운영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과 원칙이 체계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북한이 강조하는 ‘大安의 事業 體系’¹²⁵⁾와 ‘새로운 농업 지도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부터이다. 이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대안의 사업체계는

121) 당의 집체적 지도와 국가의 행정적 지도방식을 마르크스나 레닌의 개념에서 보면 ‘민주집중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2) 북한의 근로단체에는 직업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사로청), 녀성동맹 등이 있다. 이 조직들의 위상은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transmission belt)로서 근로대중의 자원적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체사상총서 9」 pp.174-199. ; 전용렬, “북한경제체제”, 「북한경제론」 (북한연구소, 1977), p.85. 참고.

123) 계획의 일원화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계획화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민경제 모든 부분과 모든 단위의 경제활동이 전반적인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통일적으로 계획화되어야 할 사회주의경제체도의 객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사전」 상권, p.335. 또한 계획의 세부화란 국가계획기관이 직접 전반적 경제발전과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밀접히 연결시키며 계획을 구체화하여 모든 지표들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똑바로 맞물리는 가장 과학적인 계획화 방법을 의미한다. 같은 책, p.334.

124) 「김일성저작집」 28권, p.125.

125) 북한의 경제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에 관한 남한의 연구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남원, “북한경제관리이론의 논리와 실제 - 공업생산분야”, 「북한의 현실」 (아세아문제연구소 공산권연구총서 23 ; 서남원, “경제정책과 경제관리”, 「북한의 경제론」 (북한연구소, 1977) ; 서진영 · 이성봉, “북한경제관리체계의 변화과정 - 공업부문을 중심으로”,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II)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0) 등이 있다.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안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고 그 경험을 종합하여 제시한 것이며 현재까지도 큰 변화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工場黨委員會는 최고지도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체계를 가지고 있고 생산에 대한 통일적 집중적인 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집중적 자재공급체계와 통일적인 後方供給體系¹²⁶⁾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농업 지도체계’가 나오게 된 배경은 군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기능을 분리하여 새로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내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농촌경리를 새로운 농업 지도체계에 따라 기업적인 방식으로 운영¹²⁷⁾한다고 한다.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는 협동농장에 대한 전문적인 생산, 기술지도와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單一한 指導體系와 生産保障體系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企業的 指導 方法에 의한 지도에는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첫째,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 둘째, 농업 경영활동의 계획화, 셋째, 농업의 조직적 운영 등이다.

그런데 당시 북한이 주장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經濟管理體系가 운영되는 기본 事業方式이었다. 즉, 주체의 경제관리의 핵심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사업방법으로 구현한 데에 있다. 이 방법의 기원은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¹²⁸⁾에서 찾을 수 있고 이 방법이 나오게 된 계기는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를 현지지도¹²⁹⁾한 데에서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분석·검토한 것을 토대로 하여 ‘社會主義經濟管理’면에서 소련과 중국의 경제관리체계 및 방법을 북한의 경우와 비교해 봄으로써 北韓經濟管理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실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것으로 추론하건대, 소련에서는 ‘직접적 생산력으로서의 과학과 기술’,

126) 남한에는 없는 단어로선 ‘후방공급체계’란 후방공급사업을 제도화시킨 체계이다. ‘후방’이란 “어떤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도록 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보장해주는 일이나 지역같은 것”을 의미하며 후방공급사업이란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보다 원만하게 보장해주기 위하여 하는 여러가지 후방사업과 공급사업”을 뜻한다. 「현대 조선말 사전」 하권, p.2370.

127) 김한길, 「조선현대력사」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3) (일송정, 1988. 재발행), p.382.

128) 「주체사상 총서」 10권, p.166.

129) 김한길, 「조선현대력사」 p.378.

중국에서는 ‘唯生産力論’이 의미하는 것처럼 주체보다는 객체, 의식보다는 존재, 정치보다는 경제, 상부구조보다는 하부구조, 생산관계보다는 생산력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의 ‘主體’는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란 순서가 의미하는 것처럼 사상혁명의 상대적 위치와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¹³⁰⁾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를 보는 북한의 입장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중국의 ‘개혁·개방’이 내적, 외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지금까지의 ‘主體의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경로를 확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 메카니즘은 첫째, 근로대중에 대한 정치, 사상 사업을 통한 사람중심, 대중노동력 중심의 대중노선의 관철이며, 둘째, 생산의 사회화 정도와 생산력 발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 개조에 따른 사회주의 경제법칙의 관철을 지향하고 생산규모의 발달에 조응하는 科學的 管理體系를 모색하였으며, 셋째, 대중동원에 의해 목표를 설정하며 토론과 교양을 통해 이의 완수를 결의하고 이를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통해 수행하는 民主集中制의 관철을 지향하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처럼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1) 폐쇄적인 관료적 중앙집권주의와 2) 권력의 집중과 개인숭배의 위험성, 3) 그에 따른 대중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봉쇄하여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4) 생산성의 정체와 5) 교조주의가 태동할 위험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위험에 대한 방지책이 군중노선의 정착화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활동의 선행,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적·도덕적 자극을 중시한다.

131)

130)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 노선의 핵심은 항상 ‘변증법적 대립항’ - 정치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 집권화와 분권화, 정치와 경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생산력과 생산관계 - 의 묘한 긴장과 균형 그리고 동일을 유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131)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건설이 혁명적 정열과 열의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이 주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자극은 반드시 생산적 노동을 보다 많이 만들어 낸 개인에 대하여 많은 보수가 주어지는 물질적 자극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홍달선, “우리나라 농촌경영 부문에서의 물질적 관심의 창조적 적용”, 梶村, 鎌田 역, 「朝鮮社會主義 農業論」(日本評論社), p.198. 고뢰정, 앞의 책, p.68에서 재인용.

그러나 북한과 같은 엄격한 폐쇄성과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계획체제에 대중관리체제를 도입·적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관료적·중앙집권적 경제운영 형태에서는 1) 경제적 자극이 결여되기 쉽고, 2) 자원의 적절한 경제적 배치를 곤란케 하며, 3) 기술적 발전을 저해하고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4) 사상혁명의 우선으로 인하여 대중의 제1차적 관심인 생활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당의 지도와 관리개선이 오히려 생산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당과 생활개선을 요구하는 대중 차원의 욕구 사이에 심한 격차의 갈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하겠다. 동시에 사상혁명만으로는 생산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사회주의권에서 입증되고 있고,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겠다. 특히 자본주의보다 발달된 생산력 수준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사회가 현실적인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가 결여된 곳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도 문제가 있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경제관리체도는 소련의 국가주도하의 지령 경제체제의 한계를 균중노선에 입각하여 일정하게 극복한 것으로서 독자성을 지니고 있지만, 경제이론 전반에서는 소련의 전통적 이론과 기본틀을 공유하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의 현노선은 기술발전과 생산력 증강 등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³²⁾ 기존의 건설노선과 이러한 요청은 모순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역시 사회주의 개혁의 필연성을 안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¹³³⁾ 단 그 개혁의 방향은 북한

132) 북한의 경제관리는 많은 과제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1) 정치 사상적 자극과 경제 물질적 자극의 문제를 둘러싼 과학기술혁명 2) 세계 경제의 총체적 성격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관리 및 그것의 발전 - 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 독점자본과의 관련 문제 3) 생산적 발전과 생산의 사회적 성격에 조응하는 생산관계의 수립문제 4) 首領·黨·大衆의 下向關係뿐만 아니라 대중자신의 참여가 실질적, 절차적으로 관철되는 民衆集中制의 실현문제 등이 그것이다.

133)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1989년 가을 이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언급하는 경우에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우월성'을 제도면에서 언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던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발양, 즉 구체화하는가의 방법론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음을 분석한 견해가 주목된다.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하나의 시사점을 준다. 사카이 다카이, "북한의 정

사회주의의 긍정적 측면, 즉 균중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을 계속 견지하는 속에서 주어질 것이다.

IV.北韓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路線에 대한 批判的 檢討

1. 體制運營 原理에 대한 批判的 檢討

북한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대한 총체적 비판, 평가는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에 관한 사상·이론에서 역사적 경험에 이르는 범위를 망라하는 영역을 차지할 것이라 보여진다. 다시 말해 그것의 具體的 分析領域은, 첫번째로 북한 사회주의 건설노선과 실제에 내재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體制運營原理(지도의 사상적 연원과 지도이론)라는 정치, 사상, 이론적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에 관한 비판적 평가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이는 주로 '과학기술혁명의 문제의식'을 축으로 한 經濟運用方式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體制運營原理로서 主體思想에 대해 평가, 비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4) 주체사상이 '신성한 교의이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그것은 북한

치경제개혁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1990년 5월호, pp.67-68.

134) 비판의 경우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의 비판과 '주류' 패러다임으로부터의 비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양쪽의 비판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를 왜곡시킨 '관념론적 아류'라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특히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경우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그 비교준거틀로 하여 주체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비판이 행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하수도, 『유물론과 주체사상』(새벽, 1988); 이진경 편역, 『주체사상 비판 1』(벼리, 1989) 그러나 '주류' 패러다임의 경우 관념론 등 '주류' 철학이론과 '주류' 사회과학 일반이론을 준거틀로 하여 체계적인 주체사상비판을 하기보다는 정통 마르크스주의 준거틀로 하여 주체사상이 이보다 "덜 유물론적"인 "은폐된 관념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사회발전연구소, 1987), pp.11-49.; 조태훈, "북한의 '주체철학'에 대한 분석비판", 『북한통치 이데올로기 연구: 그 현황과

사회주의의 긍정적 측면, 즉 균중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을 계속 견지하는 속에서 주어질 것이다.

IV.北韓의 社會主義, 共產主義 建設路線에 대한 批判的 檢討

1. 體制運營 原理에 대한 批判的 檢討

북한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대한 총체적 비판, 평가는 북한의 사회주의 정치경제에 관한 사상·이론에서 역사적 경험에 이르는 범위를 망라하는 영역을 차지할 것이라 보여진다. 다시 말해 그것의 具體的 分析領域은, 첫번째로 북한 사회주의 건설노선과 실제에 내재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體制運營原理(지도의 사상적 연원과 지도이론)라는 정치, 사상, 이론적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현실에 관한 비판적 평가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이는 주로 '과학기술혁명의 문제의식'을 축으로 한 經濟運用方式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體制運營原理로서 主體思想에 대해 평가, 비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4) 주체사상이 '신성한 교의이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그것은 북한

치경제개혁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1990년 5월호, pp.67-68.

134) 비판의 경우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의 비판과 '주류' 패러다임으로부터의 비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양쪽의 비판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를 왜곡시킨 '관념론적 아류'라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특히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의 경우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그 비교준거틀로 하여 주체사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비판이 행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하수도, 『유물론과 주체사상』(새벽, 1988); 이진경 편역, 『주체사상 비판 1』(벼리, 1989) 그러나 '주류' 패러다임의 경우 관념론 등 '주류' 철학이론과 '주류' 사회과학 일반이론을 준거틀로 하여 체계적인 주체사상비판을 하기보다는 정통 마르크스주의 준거틀로 하여 주체사상이 이보다 "덜 유물론적"인 "은폐된 관념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사회발전연구소, 1987), pp.11-49.; 조태훈, "북한의 '주체철학'에 대한 분석비판", 『북한통치 이데올로기 연구: 그 현황과

의 발전에 오히려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주체사상의 핵심적 요소는 북한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점차 더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주체사상의 自主精神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적 독자성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국방의 자위를 확립할 수 있게 했지만, 동시에 북한의 孤立과 閉鎖性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¹³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자립적 민족 경제의 발전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체사상은 북한이 상호 의존적이고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적응하여 기본적으로 內部·指向的인 經濟를 개혁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自力更生에 대한 강조나 ‘인민 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진정한 창조자’라는 주체사상의 전제에 입각하여, 북한에서는 대중동원의 정치가 실현되고 있으며, 그것은 인민 대중들에게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과업을 열광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지도부는 대중들에게 무계급 사회의 건설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자기 희생을 흔히 요구한다. 따라서 생활 개선과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요구는 오랫동안 유예되었다.¹³⁶⁾

방향」(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224 등이다. 물론 이 경우도 일부는 ‘정통’ 유물론에 대한 비판도 함께 행해지고 있으나 정통 유물론에 관한 비판에 주체사상은 정통 유물론이 아닌 관념론적 오류라는 비판을 ‘산술적’으로 합쳐도 주체사상의 이론구조 자체에 대한 진정한 비판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135) 물론, 주체사상이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주적 입장을 강조한다는 것이 편협한 폐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독립과 상호 평등 및 호혜의 원칙하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하여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 1987년 7월호, p.9.

13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毛澤東의 중국과 金日成의 북한은 이데올로기와 정책 등 많은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모택동과 김일성은 모두 인민 대중을 역사와 사회 발전의 주인이라고 찬양했으며, 이들은 정치 의식과 자력갱생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과 북한을 가장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철저하게 정치화된 사회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主體思想과 毛澤東思想과의 차이점은 수령·당·대중의 관계에 대한 주체사상의 강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중국도 모택동에 대한 집중적인 개인 숭배 운동으로 점철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택동 사상 속에서는 당과 대중까지도 그에 예속되는 수령론과

북한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에 의하면, 수령·당·대중은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三位一體의 유기체를 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수령이 ‘뇌수’이며, “수령의 지도를 받음으로써 인민 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¹³⁷⁾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창건자’이며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조직자’인 수령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논리에서 볼 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독특한 首領論의 결과, 북한은 그야말로 金日成王國으로 전변되었다. 북한 사회에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에 대한 숭배는 유례가 없을 정도이며, 김일성은 이미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그 자신이 북한 체제가 의존하고 있는 제도가 되었다. 사실, 김일성과 그의 주체 사상은 북한에서 정치 안정과 정통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의 국가 건설 시기에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지도하에 인민 대중을 동원, 단결시키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주체 사상은 정치 체제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制約要因이 되고 있기도 하다.¹³⁸⁾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領導問題에 대하여 살펴보자. ‘주체사상’의 哲學的 原理와 社會歷史的 原理의 내용과 체계 속에서 유물론적 기초와 변증법적 원리와의 관련정도 - 주체사상이 유물적 기초에 입각해 있는가의 여부와 변증법의 원리를 자신의 방법론적 지침으로 삼고 있는가의 여부 - 는 차치하고라도,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것은 지도원리이다. 따라서 이것이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¹³⁹⁾ 指導(領導)는 그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형식 또는 技術(Technik)의 문제이

같은 논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137) 김정일, 앞의 글, pp.12-16.

138) 일반적으로 정치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다. 자체 변용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이러한 정치이데올로기의 보수성 때문에 사회변화통제의 정치이데올로기와 사회변화와는 언젠가는 충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치이데올로기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교조적일수록 그 경직성은 강하며 따라서 충돌도 불가피해지는 경향이 있다.

139) 이 부분의 논의에 전거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총서 4: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사회과학출판사, 1985); 「주체사상총서 9: 영도체계」(1985); 「주체사상총서 10: 영도예술」(1985); “Was tun”, L.W., Bd.5 (Dietz Verlag, 1987); K. 칼라쉬니프, 「선전선동론」(새물결, 1989).

다. 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의 사상적 연원인 哲學과 史觀에 위임되어 있고, 指導方法(領導方法)에서는 사상적 수준에서 지도의 문제를 다루고 지도원칙을 실천적으로 행하는 기술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영도방법은 기본방침으로서의 領導原則, 영도의 실행구조 및 범위를 나타내는 領導體系, 직접적으로 대중과 대면할 때 이용되는 領導藝術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여기서 바로 이 영도방법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그 관리에 있어서 중핵을 차지하는 것이며, 이것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북한 사회주의 정치경제에 대한 모든 批判의 前提的 批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도방법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면, 첫째로 영도방법의 이론구조에 관한 고찰이다. 이는 영도방법의 내용을 영도본질과 원칙 및 영도체계(지도의 범위) 그리고 영도예술(대중지도방식)로 구체화시켜 언급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과 관리운영에 적용되는 영도방법을 살펴보는 것인데 이 때 중심적인 논의는 領導方法의 現實的 適合性에 관한 것이다.

영도의 본질과 원칙에 관련된 논의는 다음의 세가지로 집약된다. 1) 혁명과 건설에서 영도는 누구에 의해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다. 2) 영도의 근본적 의미는 무엇인가, 3) 영도의 기본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領導의 主體는 '노동계급의 수령'이고 영도의 근본적 의미는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자각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주체사상'에 의하면 노동계급의 당이 혁명적 영도에서 정확히 견지해야 할 원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 주체의 확립, 군중노선의 관철 등이다.¹⁴⁰⁾ 결국 영도의 본질과 원칙은 역사발전의 추동력이 민중에게

140)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실현은 영도의 최고원칙으로서 지도에서의 통일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근로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는 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수령의 사상만이 당과 국가, 민중을 지도하고 그에 따라 당과 민중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영도원칙의 핵심내용이다. 그리고 주체의 확립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동원하여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위한 사회정치적 물질적 조건의 마련은 필수적인 당의 행동지침이라 한다. 혁명적 군중노선은 당의 노선과 정책 - 특히 경제건설 노선과 경제정책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있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이끌어가는 존재인 首領의 唯一的 領導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領導體系는 영도방법중 영도를 실행하는 구조와 범위 및 통로를 체계화시킨 부분으로 규정된다.¹⁴¹⁾ 영도방법의 세번째 요소인 領導藝術은 대중의 지도방식인데 그 내용으로 '전투적 구호'와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그리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의 범위와 영도체계의 차원에서도 심각한 차이를 노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전위당과 동일한 수준의 지도체는 북한의 지도이론의 경우 수령과 당이다. 북한의 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그것과 역할 및 기능 면에서 다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당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과정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조직이라면 북한의 당은 首領의 領導를 당면한 과제속에서 관철시키는 것을 그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 물론 수령의 영도가 당을 통해 이루어 지고 당은 수령의 영도를 지지시켜주는 기반임을 전제할 때,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 본 지도체의 총체적인 위상은 별 차이점이 없다. 즉, '수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지도자(당중앙)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존재이다.¹⁴²⁾ 주체사상의 영도방법은 이러한 수령의 영도가 일관되게 관철되는 '首領의 領導方法'인데 다음의 근거가 그것을 증명한다. 즉, 수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별'을 선언하는 存在的 要素라고 여겨진다. 수령은 이론적으로는 無誤謬的인 영도를 수행하는 政治體이지만 현실화되었을 때 그것은 역시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개인을 지칭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수령은 계급 전체일 수도 민중 전체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광의로는 수령의 사상 적용을 혁명과 건설의 기본지침으로 삼는 주체사상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동시에 협의로는 영도방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¹⁴³⁾ 따라서 수령의 사상에 대한 비판과 토론이 반드시 전체

141) 사상체계이자 조직체계인 영도체계는 수령의 세계관으로 뭉친 민중이 수령의 주위에 단결함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에 따르면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혁명과 건설의 최고 영도자로서의 수령, 혁명과 건설의 참모부로서의 당,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로서의 국가기관과 대중단체들로 구성된 전일적인 체계이다.

142)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과정에서 수령은 당과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당, 국가, 대중 등과의 동등한, 아니면 한단계 높은 위치로 인정된다.

143) 레닌은 당이 전체 민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소비에트의 강화를 주

되었을 때 만이, 그리고 광범한 토론에 의한 근로대중의 의지를 수령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근로대중 자신의 이름으로 결집되어야 만이 영도방법이 올바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수령과 대중사이의 불일치는 영도방법의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다. 이것이 바로 영도방법이 실제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나 경제관리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現實適合性의 側面이다. 그러므로 균중노선에 입각한 경제건설과 경제관리이론은 그 현실적 합성을 재평가받아야 하는데, 분명한 문제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즉, 경제건설 과정에서 책정되는 경제노선과 정책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는 영도방법의 현실수준에 있어서는 民主主義的 要素의 不在였고, 이는 곧 首領의 唯一的 領導의 확립이라는 지도원리로 환원되었다.

북한의 유일적 지도체계는 통상 북한정치체제의 경직성과 독재적 측면을 설명하는 주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유일적 지도체계와 수령관은 북한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변수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적 원칙 속에서 지도자의 지위에 대한 원리적이거나 이론적 고찰은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유일적 지도체계는 자체에 분명한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유일적 지도체계와 미시적 차원에서의 민주집중제원리가 현실에서 대립할 개연성은 항존한다는 점 때문이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초역사적 수준에서 절대성을 갖는다고 하면 이는 정치적 차원을 떠나 종교적 차원의 문제가 된다. 북한의 설명방식에 의거한다면 수령이 개인으로 전화하는 순간, 즉 집단의 이익이나 이해와 괴리가 발생하는 순간 더이상의 지도는 가능하지 않고 대립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동이 아예 처음부터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치변동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혼란을 동반하며 급속한 변동이 될 것이다. 단원주의적 지배질서는 평상시에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지만 중차대한 지배질서의 위기에는 관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¹⁴⁴⁾

장하였다. 그리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에 의한 당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당은 계급의 선진적 소수자이지만 전체 대중의 이해를 대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끊임없는 사상투쟁과 대중에 의한 자율적인 관리운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 방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의 표현임이 틀림없다.

또한 북한에서의 영도의 원칙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확립, 주체의 확립, 혁명적 군중노선의 관철이라는 것이다. 이 때 주체의 확립은 나머지 두가지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원칙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의 확립과 혁명적 군중노선의 관철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영도체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며, 經濟管理制度에 적용된 사회적 현실에서도 자체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북한 경제관리체계의 조직구조와 특성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1)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 2)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단위의 창발성, 3) 유일적 지휘와 군중노선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 4) 정치도덕적 자극과 민주주의 등의 결합은 現實的인 契機性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指導라는 이름으로 수령과 당 그리고 국가의 영도를 강조하였을 때, 영도 방법은 首領崇拜를 위한 이론으로 淺薄化되고, 사회적으로는 官僚主義를 배태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반면에 ‘革命的 群衆路線’이라는 대중참여에 의한 민주주의가 강조되었을 경우에는, 영도방법이 목적하는 바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근로대중을 단결된 힘으로 지도하는 것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經濟運用 方式에 대한 批判的 檢討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인민생활의 향상,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부분적 경제개방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물질·기술적 토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 사회의 두 가지 성격 가운데 공산주의적 성격은 견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過渡的 性格’을 보다 확대적용함으로써 지체되고 있는 생산력 및 생산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며, 그와 함께 자립적 민족경제의 틀은 유지하되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을 위해 부분적인 經濟開放을 실시하는 방향으

144) 이선태, “90년대 북한사회주의의 현실과 발전전망” 『경제와 사회』 1993 여름, p. 82.

로 북한의 경제건설노선이 선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체의 건설노선을 견지하되 현실을 고려하여 부분적 개혁과 개방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을 논리적으로 평가한다면, 북한이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적 성격을 더욱 확대하여 점차 무계급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資本主義 遺制的인 '과도적 성격'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의 가장 중요한 징표인 노동자와 농민 간의 계급적 격차해소를 위한 농민의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이 실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점을 잘 반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¹⁴⁵⁾

다음으로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역사적 경험과 현단계에 대해 분석, 검토해 보자. 여기서 무엇보다도 주요한 비판의 근거는 '科學技術革命의 問題意識'이다. 그것은 현실 사회주의 위기의 주된 원인중의 하나가 과학기술 진보의 과소평가와 '과학기술혁명'이라는 제4의 혁명¹⁴⁶⁾을 주동적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科學技術革命은 20세기 후반의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그로부터 나타나는 제반 사회적 결과를 포함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과학기술혁명의 영향은 생산의 영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¹⁴⁷⁾ 따라서 '이론'으로서의 과학기술혁명

145)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개혁과 개방의 방법이 과연 기존의 건설노선의 틀 안에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여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 부분적인 조치들만으로서 현제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노선전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될 것인지를 정확한 여부는 제3차 7개년 계획을 위시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길의 장래 성공여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하겠다. 한국은행의 "91년 북한의 국민총생산 추정결과"에 의하면 북한은 90년에 이어 91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겨레신문」 1992년 8월 13일자.

146) 속칭 제1의 혁명을 근대 부르조아혁명, 제2의 혁명을 사회주의혁명, 제3의 혁명을 민족해방 혁명, 제4의 혁명을 '과학기술혁명'이라 말한다. 과학기술혁명이란 개념은 원래 1930년대 J.D. Bernal과 같은 마르크스주의 과학사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당시의 사회변화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과학이 기술과 결합해서 생산에 직접 응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과학기술생산의 새로운 결합을 과학기술혁명이라고 개념화했다.

147) 자동화된 로봇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것은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기와 결합해서 인간의 논리적 사고와 정신적 능력까지도 대체하고 있다. 새로운 원료, 물질이 생산과 재화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었으며, 원자에너지를

은 그 내용의 핵심으로 현대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숙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⁸⁾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거꾸로 뒤바뀌어 현실 자본주의 즉 國家獨占資本主義下에서 엄청난 과학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현실 사회주의의 생산력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체제의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통합력을 반영하는 훌륭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獨占資本主義는 과학기술의 군사화, 자본주의 세계체제내의 기술적 종속과 불균형,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훼손 및 사회문제 등의 사회발전의 질곡요소를 갖고 있지만 자원의 능률적 개발과 효율적인 자본투자,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現實 社會主義 體制는 정치권력의 대중화와 경제적 토대의 사회주의적 개조¹⁴⁹⁾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주의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고 또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生産力의 質的變化는 다시 노동과정, 노동력의 재편 등 생산을 둘러싼 국민경제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다시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의 중요한 특성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 148) 과학기술혁명을 이와 같이 파악했을 때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社會構成體 移行의 問題이다. 즉, “科學技術革命이라는 生産力의 質的인 發展에 조응하는 生産關係의 변화는 무엇인가?”라는 의미심장한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 소련 및 동구의 이론가들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산업혁명이 봉건체제를 붕괴시키고,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전일화시키면서,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의 출현에 대응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경제적 토대의 변화였던 것처럼, 과학기술혁명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반적인 이행이라는 생산관계의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생산력의 단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 149) 생산관계의 권력관계로의 개조와 경제의 정치전략적 운영은 일련의 분야에서 시장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경제경영에 대한 경제적 계산의 가능성의 배제 또는 불완전한 배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초기공업화단계의 경제의 외연적 성장을 통한 도약의 단계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이었다. 초기공업화 개시단계에서 국가권력을 매개로 하여 인적·물적자원을 정치적 관점에서 선정한 전략산업부문으로 ‘화력집중’시켜서, 단기적 극대 양적성장이라는 ‘생산고지점령’을 위한 ‘생산전투’를 ‘돌격전’ 또는 ‘속도전’ 식으로 치투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공업화 초반돌파를 용이하게 했다. 외연적 초기공업화단계에서의 기술적 저수준과 고정설비의 부족 때문에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력 공급의 극적 증대를 통해서만 축적을 위한 경제적 잉여의 확보가 가능했던 바,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체제는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수 역시 ‘정치적·애국적 관점’에서 결정하였고 또한 그것을 노동자들이

적 경제체제가 외연적 성장에서 내포적 발전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과학기술 혁명을 주동적으로 준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 사회주의의 生産力의 停滯, 經濟成長의 鈍化 등의 경제적 침체는 당연한 부수적 결과이기도 하다.¹⁵⁰⁾

다음으로, 소련과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外延的 經濟成長 패턴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內包的 經濟成長 패턴으로의 질적 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自主路線’이 한계적 측면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195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 신생국가로서는 가장 주목받는 경제성장을 실현하였던 북한은, 이후에 계속된 경제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후반 이후 成長鈍化의 추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長期沈滯의 原因은 자력갱생방식의 경제개발의 한계,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 이념위주의 국가관리 등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¹⁵¹⁾ 북한의 경제개발계획

‘자발적으로’ 감수하게 했던 것이다. 김형동, “社會主義 工業化’와 北韓 支配體制의 形成”, 『북한연구』 (1993년 여름), pp.162-163.

- 150) 사회주의의 본원적 축적과정이 종결되고 더 이상 외연적 공업화에 의존해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사회주의의 본원적 축적에 적합하도록 짜여진 국가적 경제관리 체제는 그 체제가 목표로 하는 생산력의 진보조차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왜냐하면 외연적 공업화에 요구되는 생산시설 등의 계속적인 투입 등은 경제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더 이상 높은 경제성장을 담보할 만큼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생산과정에서의 기술혁신의 지체, 노동력과 투자자금의 부족, 자원과 에너지의 과도한 소모의 낭비 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외연적 공업화에 입각한 경제의 양적 성장에 적합하도록 짜여진 경제관리체제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결합을 통한 생산과정의 계속적 혁신 및 노동대중이 지닌 창의력이 고도로 발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포적 공업화를 통한 경제의 질적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본원적 축적과정이 종결됨에 따라 ‘외연적으로 충분히 발전했고, 따라서 이제는 내포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력의 내포적 발전을 방해하는 스탈린적 경제관리체제’간의 모순은 점차 심화된다. 그러나 스탈린적 사회주의체제의 존속은 이 모순을 첨예화시켜 1970년대 이후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생산력발전이 정체되는 위기현상을 야기시켰다.
- 151) 이상과 현실, 이론과 실제에는 큰 차이가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북한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따라 선진국 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받아들임으로써 후발성의 이익을 활용하지 않는 지나친 내부지향적 공업화전략에 치중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자체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내겠다는

을 정리해 보면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의 경제발전계획의 추진에 있어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를 초래하여 왔다. 즉, 첫째로, 매 계획기간마다 계획목표의 미달성부분을 완수하거나 계획추진에 수반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수정이나 계획의 공백기간이 반복되어 왔다. 경제운영의 신속성이 적은 중앙통제경제일수록 경제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자체가 각부분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는 것이 요구된다.¹⁵²⁾ 따라서 북한의 경제계획이 합리적으로 설정·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확한 경제정보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북한의 경제계획은 장기간의 성장침체로 인하여 소비와 투자간의 자원배분에 만성적인 갈등이 지속해 왔으며, 성장침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불안한 體制維持와 ‘南朝鮮解放’의 목표로 인하여 국방비의 지출¹⁵³⁾이 항상

자력갱생의 원칙에 의한 자력개발이나 인적·물적 자원을 국가권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원체제는 북한 경제의 장점으로서 양적 확대를 도모하는 외연적 성장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었으나 효율적 생산, 경제의 질적 향상, 생활수준의 향상 등을 중요시하는 내포적 또는 집약적 성장단계에서는 발전요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북한경제는 이러한 외연적 성장에 뒷받침되어 60년대 초까지는 순조로운 발전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중·소분쟁에 의한 소련 원조의 감소와 더불어 외연적 성장요인의 소진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세째, 당우위·정치우위 및 중앙집권적 계획명령 경제제도의 경직성이 비효율과 낭비, 기타 모순을 야기시켰다. 네째,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제의 하나가 인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나친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집한 데서 초래된 기술혁신의 상대적 낙후, 생산설비 노후화, 투자재원 부족이라는 한계와 고투자, 과중한 국방비 부담은 소비에 대한 분배분을 작게 하고, 이것은 소비재공업의 상대적 낙후성과 관련하여 국민생활 수준을 저위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다섯째, 천리마운동을 비롯한 소련식 ‘스타하노프’운동의 북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대중동원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물질적 자극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여러 문제들은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서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 또는 개혁하느냐가 당면의 주요과제로 되고 있다.

152) 이와 같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운영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스탈린시대의 소련경제와 같은 관료적 중앙집권 모델의 경제운영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정책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북한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153) 북한은 1960년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 채택이후 1차 7개년 계획이 3년 연장되었으며, 1967-69년간의 군사비는 국가예산의 31.3%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꾸준히 줄어 1987년에는 병력을 10만으로 감축하자고 주장하면서 군사비지출을 국가예산의 13.3%로 인하시켰다.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비중은 1988년에는 12.2%, 1989년에는 12.1% 차지하였다. 그러나 군사비 부담이 여전히 경제발전

자원배분에 심각한 애로로 상존해 왔다.¹⁵⁴⁾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계획 자체의 非合理性·非現實性에다 非效率的인 계획추진은 당연히 부진한 성과를 낳을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결과로 저소득 → 저저축 → 저투자 → 저소득의 이른바 ‘貧困의 惡循環’을 초래하거나, 높은 투자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가 더욱 억제되어야 했다. 투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더라도 국방력의 증대 등 소득유발효과가 낮은 부문에 배분되는 경우에는 빈곤의 악순환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계획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성장잠재력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간의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는 실질적인 생산력의 증대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¹⁵⁵⁾ 세째로, 북한의 경제계획은 自力更生의 開發路線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의 정치·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시에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한반도의 주변국제정치사정의 변화에 따라 경제협력도입의 규모와 내용이 변화됨으로써 경제개발의 가용자원의 규모와 내용에 변화가 있었으며, 투자배분에 있어서는 중공업화추진의 강도와 국방비 지출비중이 변화하였다.¹⁵⁶⁾ 이러한 추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경

의 증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 154) 즉,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겠다. 북한은 방위산업과 직결된 중공업우선 정책을 추구한 결과, 경공업(소비재 생산) 및 농업부문의 발전이 지연되고 에너지, 운송 등 사회간접자본의 만성적인 애로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 155)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이 지연될수록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 마련이므로 갈수록 투자와 소비의 배분상의 갈등은 경제계획상 심각하게 대두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 156)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는 군수산업이 확대재생산 메카니즘의 중요 부분으로 역할함에 반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군수산업이 전적인 가치파괴, 자본파괴에 불과하다. 더구나 북한의 경우 경제 운용에 있어서 ‘균형의 원칙’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군수산업에 대한 우선적 발전에 따라 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나아가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경공업이 낙후되어갔던 것이다. 당연한 귀결로 6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전후 복구시기나 초기 건설과정의 단기적 현상이라 생각했던 국민생활의 저수준이 점차 고착화되어 갔던 것이다. 최근 북한의 군축이나 평화협정체결 제안 배경의 일단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군축 등의 필요성은 비단 북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역사적 조건에 처해있는 남북한 쌍방이 자체의 정치·경제·군사적 부담을 덜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남북 통일에의 전망을 밝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모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된 것이다.

제개발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하겠다.¹⁵⁷⁾ 네째로, 북한의 경제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經濟管理方式에 혁신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즉, 경제개발의 추진력을 주로 大衆煽動方式의 이념적 자극에 의한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을 탈피해야 하며, 청산리방식이거나 대안의 사업체계의 틀을 벗어나는 경제관리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¹⁵⁸⁾ 북한은 제약된 부존자원과 투자재원하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발 초기에서부터 이념적 자극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념적인 자극이 1950년대까지는 북한의 고도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에는 분명하다.¹⁵⁹⁾ 그러나 이러한 '千里馬運動'¹⁶⁰⁾방식은 부문간의 불균형 심화, 과도한 목표설정과 계획상의 오류, 상품의 질적 저하 등 '總算出方式'의 폐해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수반한다.¹⁶¹⁾ 한편 이러한 총산출방식과 이념적 자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산리방법'과 '대안사업체계', 분권화와 物的 補償誘引制度가 도입되었으나, 앞서 언급한 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에는 그 효과가 지극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¹⁶²⁾ 도입된지 30년 가까이 지나서도 여전

157) 1989년의 북한 예산안에 있어 國防費의 공식적인 비중은 12.1%라고 하나, 다른 예산항목에 은폐된 부분을 포함한 실질군사비는 재정지출의 통상 30%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9년의 경우 약 47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방비를 공식적 비중인 12% 수준으로만 낮추더라도 약 28억불을 경제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158) 그동안 경제적 성과에 기여해 온 대중조직의 역할, 즉 이데올로기 및 대중동원수단 등에의 전적인 의존은 이미 그 효과면에서 한계수익의 체감단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159) Ellen Burn and Jacques Hersh, *Socialist Korea: A Case i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6), pp.186-189.

160) 토니 클리프의 국가 자본주의론 태제를 원용하면서 [Tony Cliff, *State Capitalism in Russia* (London: Pluto Press, 1974)] 북한을 현존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천리마 운동을 자본주의적 노동강도의 강화기구인 테일러리즘의 변종으로까지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정성진, "제국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영구혁명",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한울, 1991), pp.359-367. 물론 이 견해는 당·국가관료층이 세습제가 아니며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161)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p.158.

히 ‘대안사업체계’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에 거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포괄적인 요인으로 ‘自主路線’의 한계가 노정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자립적(*autarchy*)민족경제 건설노선은 자급자족(*autarky*)과 구별된다¹⁶³⁾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외경제관계에서 매우 소극적인 노선임에는 분명하다.¹⁶⁴⁾ 이런 결과로 북한 자체의 자본, 과학기술력, 자원만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선진과학기술과 고도의 생산력의 발전을 따라잡는데 명백한 限界를 노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노선의 고수는 기술발전과 생산력 증대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바로 여기에 ‘自主路線’의 고민과 한계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남북한간의 경제력의 격차에 의한 압박감도 증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자주노선의 큰 틀안에서의 部分的 改革, 開放措置’라는 일정한 경제정책의 변화만으로는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부분적 정책변화는 ‘자주노선’의 견지라는 원칙의 고수에 따르는 ‘不可避한 次善策’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경제는 自立的 民族經濟路線과 群衆路線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도정에 나서고 있으나, 그 과정에

162) 즉,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스타하노프주의(*Stakhanovism*)의 고수정책을 들 수 있다. 스타하노프제도는 스타하노프(A.G. Stakhanov)가 발안, 실시한 소련의 ‘경쟁에 의한 능률보상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기술진보 등을 통한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라기보다는 노동투입증대를 통한 절대적 잉여가치율(*the rate of absolute surplus value*)의 증가를 통해 한계생산력 제고를 추구하는 것으로 결국 동일한 낡은 기계에 보다 많은 노동을 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모든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하며, 이것이 부족한 추가자원의 지원 없이도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여전히 믿고 여러 가지의 경제선동을 통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주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킨다거나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북한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163) “우리가 말하는 독립된 민족경제란 자급자족(*autarky*)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Our Party’s Policy for the Building of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Pyongyang : FLP, 1975), p.10.

164) 자본주의권과는 물론이며 COMECON 가입 거부 등 사회주의 국가간의 대외관계도 제한적임에는 틀림없다.

서 자립경제노선의 한계,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확대, 군사비의 과중한 부담 등 북한이 처한 제반 특수조건들로 인하여 난관에 처해 있다. 이들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사회주의 개혁론의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는 과제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요청은 북한의 사회주의건설 초기단계에서 장점으로 작용했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과 군중노선의 편향적 강조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의 수정,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현단계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V. 北韓 社會主義 體制의 變化와 展望

1. 社會主義圈의 改革과 北韓의 對應

현재의 社會主義 國家의 개혁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건설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파생된 내부적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스탈린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의 역사적 조건¹⁶⁵⁾과 볼셰비키와 스탈린의 개인적 성향 등이 만들어낸 러시아적 모델이었다. 이 體制의 특징은 1) 당의 절대화와 당의 국가기관화, 즉 당과 국가의 융합, 2) 당·국가관료층에게 계획권한이 집중된 명령형 계획경제의 수립, 3) 인민주권 기구와 대중조직의 당·국가로의 종속, 4)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로의 전일화에 기초한 비상품적, 비가치법칙적 단일계획경제의 수립, 5) 사회주의의 물질 기초 확보를 위한 중공업 우선의 경제건설방식 등이다.¹⁶⁶⁾ 그런데 이러한 건설모델은 노동자·농민을 생산과정과 정치에서 배제시켜 당·국가관료의 전제적 지배를 낳았으며, 노

165) 서구 혁명의 실패와 자본주의 진영에 의한 포위,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 등이다.

166) 김세균, "동유럽의 변혁과 사회주의의 장래",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0.12), p.205.; 손호철, "스탈린주의와 현존 사회주의의 개혁", 「한국정치학의 세구상」(풀빛, 1991), pp.454-460.; Michael Lowy, "Twelve These on the Crisis of Really Existing Socialism", *Monthly Review* (May, 1991), pp.33-40.

서 자립경제노선의 한계,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확대, 군사비의 과중한 부담 등 북한이 처한 제반 특수조건들로 인하여 난관에 처해 있다. 이들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사회주의 개혁론의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는 과제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요청은 북한의 사회주의건설 초기단계에서 장점으로 작용했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과 군중노선의 편향적 강조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의 수정,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하는 현단계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V. 北韓 社會主義 體制의 變化와 展望

1. 社會主義圈의 改革과 北韓의 對應

현재의 社會主義 國家의 개혁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건설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파생된 내부적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스탈린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의 역사적 조건¹⁶⁵⁾과 볼셰비키와 스탈린의 개인적 성향 등이 만들어낸 러시아적 모델이었다. 이 體制의 특징은 1) 당의 절대화와 당의 국가기관화, 즉 당과 국가의 융합, 2) 당·국가관료층에게 계획권한이 집중된 명령형 계획경제의 수립, 3) 인민주권 기구와 대중조직의 당·국가로의 종속, 4)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에로의 전일화에 기초한 비상품적, 비가치법칙적 단일계획경제의 수립, 5) 사회주의의 물질 기초 확보를 위한 중공업 우선의 경제건설방식 등이다.¹⁶⁶⁾ 그런데 이러한 건설모델은 노동자·농민을 생산과정과 정치에서 배제시켜 당·국가관료의 전제적 지배를 낳았으며, 노

165) 서구 혁명의 실패와 자본주의 진영에 의한 포위,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 등이다.

166) 김세균, "동유럽의 변혁과 사회주의의 장래", 「사회과학과 정책연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90.12), p.205.; 손호철, "스탈린주의와 현존 사회주의의 개혁", 「한국정치학의 세구상」(풀빛, 1991), pp.454-460.; Michael Lowy, "Twelve Theses on the Crisis of Really Existing Socialism", *Monthly Review* (May, 1991), pp.33-40.

동생산성의 급격한 저하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실패, 관료주의적 계획화를 가져와 사회 전반의 비민주화라는 문제와 생산력 정체에 따른 경제의 궁핍화를 초래하였다. 현 사회주의의 위기는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부르조아 방식의 급격한 도입을 통해 극복해 보려는 노력에서 체제위기를 촉발하였고 ‘社會主義의 終焉’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현존 사회주의사회들이 사회구성적 성격에서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자본주의체제로의 反轉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생산력 위기의 탈피를 위해 서구자본 및 기술의 과감한 도입, 세계 자본주의체제로의 적극적인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이 밖에 이론적인 면에서도 양 체제간의 ‘모순(진영모순)’보다는 ‘통일성’을, ‘두 개의 시장론’에 대응하는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과 ‘單一市場論’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¹⁶⁷⁾ 세계 사회주의체제의 ‘와해’, 또는 최소한 부분적 와해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때 세계 사회주의체제의 와해란 이중적 의미로서 첫째는 코메콘(COMECON, 동유럽 상호경제 원조기구)의 해체와 세계 자본주의체제와의 교역증대 등으로 인한 ‘세계체제’(분석단위 측면)로서의 世界 社會主義體制의 解體이고, 둘째는 사회주의체제 그 자체의 해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部分的 解體’라는 단서를 다는 것은 이같은 경향이 전반적 경향이기는 하나 북한, 중국, 쿠바 등 비유럽 사회주의사회들의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고, 개별 사회주의사회의 특수성에 있어서 전면적 해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기 때문이다.¹⁶⁸⁾ 결국 이들 잔존 현존 사

167) 스탈린은 일찍이 “두 개의 적대적 진영의 존재가 가져온 경제적 귀결은 단일한 전세계적 세계시장이 붕괴하고 이제는 팽팽히 서로 대립하는 세계시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두 개의 시장론’을 정식화한 바 있다. “소련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 쿠진스키 외, 『이행기의 세계경제』 (솔밭, 1989), p.210. 그러나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연구소>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관련, “사회주의 체제의 출현이 서로 개별화된 두 개의 자율적 세계시장의 형성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회주의 세계경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참가하는 전세계적 분업이 발생한다”는 단일시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IMEMO, 『현대 독점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 상권, P.35. ; 야마구치 마사시(山口正之), “전세계의 통일성에 관한 논쟁과 교훈”, 프리마코프 외, 『현대소련의 변혁이론』 (솔밭, 1989), p.41.

168) 소련, 동구개혁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반응은 “자료: 사회주의 개혁노선에 대한 북한, 쿠바, 중국의 비판”, 『사상문예운동』 제3호 (1990년 봄), pp.350-398.

회주의사회들은 종전과 같은 세계 사회주의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포위된 ‘고립된 섬’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이같이 세계사회주의체제의 부분적 해체가 현실화되는 경우 세계 체제는 결국 세계체제론의 주장대로 單·世界資本主義體制¹⁶⁹⁾로 수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지금까지 세계체제의 기본모순 중의 하나였던 陣營矛盾의 사실상 소멸 내지 상대적 격하와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중요성이 부상, 귀결될 것¹⁷⁰⁾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의 특징은, 1) 2차대전 이후의 냉전체제에서 줄곧 국제정치의 흐름을 주도했던 미국과 구소련의 초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퇴락하고 양국의 위상정립에 결정적 열혈을 하던 군사력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2) 국제 외교무대에서 군사력의 중요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경제력이 그 자리를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3) 냉전시 이데올로기적 체제경쟁에서 야기된 제로섬(zero-sum)적 사고에 의한 무한경쟁이 낳을 수 있는 공멸에 대한 자각과 함께 상호공존적 사고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의 30년대-50년대의 건설방식에 토대를 둔 스탈린주의를 사회주의 일반모델로 받아들

169) 세계사회주의체제의 위기가 반사적으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無危機’를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굳이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론’과 같은 고추상적이고 ‘본질주의적’ 세계자본주의 분석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선진자본주의사회 역시 ‘일상적 위기’가 아닌 ‘유기적 위기(organic crisis)’를 겪고 있다. 라이너. 에케르트,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 시대의 성격”, 송주명 편역, 『페레스트로이카논쟁(서독)』 (세길, 1990), pp.13-23. 참조.

170) 이것과 유사한 견해로는 Samin Amin, “The Future of Socialism”, *Monthly Review* (July-August 1990), p.26. 이같은 전망은 이론전선에서 현존 사회주의의 존재와 진영모순의 존재를 부정해온 트로츠키주의적 세계체제론의 입지를 강화시켜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론이 올바른 이론이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같이 되더라도 세계체제론은 이같은 세계사회주의체제 해체 이전까지의 현대 세계체제(진영모순이 존재했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결과론적으로 결국 세계체제가 향후, 세계체제론의 주장대로 단일 세계 자본주의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현존사회주의 사회들이 경제교류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에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사회의 내부 사회구성의 성격이 바뀌므로써 그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계체제론의 이론적 결함(유통주의)은 계속 남는다.

여 자신의 토양에 접목시켰다.¹⁷¹⁾ 따라서 사회주의 개혁에서 제기되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배태된 차이들이 개혁의 속도, 깊이와 폭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 개혁 내용의 이론적 함축은 북한의 변화를 전망하는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동구에서 제시한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1) 북한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의 폭과 자원동원의 능력, 2) 개혁주체와 개혁의 이데올로기, 3) 북한 사회주의의 독자성 즉 내부적 통합성과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4) 남북한관계 등의 변수에 따라 북한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변화의 外在的 限界로 작용한다.

북한은 동유럽 국가들의 급격한 政治變動이 초래되기 이전까지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사상문화적 침투와 경제적 압력에 대한 우려의 표명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¹⁷²⁾ 김일성은 1989년 ‘신년사’에서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주의 국가들의 改革·開放政策에 따른 변화양상은 帝國主義者들의 책동에 의한 것이고, 社會主義만이 인류에게 바람직한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고수가 가능하다는 점과 북한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¹⁷³⁾ 이러한 基調에 입각하여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政治變革을 “제국주의자들에게 현혹된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는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⁴⁾

171) 당시에는 2차 대전의 승리에 기인한 소련 모델에 대한 신뢰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으며 식민지 민족해방 운동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세력으로서 소련의 영향이 있었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통하여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고자 하였던 각국의 후진적 상황이 스탈린주의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가져왔던 것이다.

172)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근로자」, 제550호 (1988년 2월), pp.3-11 참조. 김정일의 1988년 10월 12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행한 담화 내용. 김정일,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 「근로자」, 제565호 (1989년 5월), p.4

173) 「로동신문」, 1989년 1월 1일자.

174) 「로동신문」, 1990년 12월 14일자. ; ‘평화적 이행 전략’이란 ‘제국주의자들이 사상 문화적으로 침투하여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원조’를 미끼로 하여 경제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와해사태에 직면하여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것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象徵操作을 전개해 오고 있다. 북한은 體制固守를 위해 “우리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라는 구호아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법으로 黨 업적의 고수와 계승발전, 주체사상 교양강화,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의 전개 등을 제시하였다.¹⁷⁵⁾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운 데 있습니다”라고 지적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⁷⁶⁾ 그리고 1993년 김일성의 신년사¹⁷⁷⁾를 보더라도 이 점은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에 입각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라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논리는 김정일이 1991년 5월 5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행한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보다 체계화되었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첫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둘째,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셋째,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

적으로 배수하여 반사회주의 분자들을 부추켜 사회정치적 혼란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자본주의에 돌리려 세우려고 책동’하는 것이라고 한다. 전인철,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근로자」(평양, 1989년 11월); 「공산권 자료」(북한연구소, 1991. 1), p.313.

175) 고향천,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제570호 (1989년 10월), pp.15-20. 이 글에서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것의 개념정의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 정신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모든 것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176) “오늘 우리 당과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자.

177) 1993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모든 당원과 근로자들은 ‘전당 전민 전군이 일심단결해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 갱생, 간구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해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하겠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1993년 1월 5일자.

패의 사회주의로 규정하였다. 특히, 김정일이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 원리교양과 당정책교양,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점에서, 북한이 취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思想的 統制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¹⁷⁸⁾

사회주의권의 와해, 蘇聯邦의 해체상황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김정일이 1992년 1월 3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社會主義가 좌절된 근본원인은 “사회주의의 본질을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이해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지 못한 데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人民政權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大革命을 수행하는 조선노동당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¹⁷⁹⁾ 또한 이 담화에서 김정일이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 등 다원주의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¹⁸⁰⁾ 결국 북한이 파악하는 사회주

178) 「로동신문」 1991년 5월 27일자. 김일성은 1992년 “신년사”에서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가장 어렵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적들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 속에서 쟁취한 것으로 하여 더없이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로 됩니다”라고 언급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1월 1일자.

179)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자.

180) 이 담화에서는 소련,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원인을 외부적 요인보다도 내부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요인을 다음 세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건설의 주체로 되어 있는 인민대중에 대한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나라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성 원칙에서 상호연대를 강화해 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성준, “轉換期の 北韓과 『우리

의 나라의 위기는 '물건의 빈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共産主義 思想의 貧困'¹⁸¹⁾때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思想教育을 강화하는 한편 外部와의 交流를 제한하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북한의 '우리式 社會主義'¹⁸²⁾의 표방과 고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흔적이 없지 않다. 즉, "끊임없는 혁신과 투쟁은 사회주의 우월성을 현실로 전개시켜 나가기 위한 유력한 방도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¹⁸³⁾ 이것은 북한이 체제적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끊임없이 내부 혁신을 기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혁정책도 그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2. 北韓 社會主義 體制의 變化 展望

북한체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내외의 여건에 적응하면서 체제적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主體思想과 首領論에 입각한 특이한 北韓式 社會主義體制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북한이 변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진정한 의도는 1980년대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내외의 환경적 변화에 오늘의 북한체제가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입각한 북한체제의 改革可能性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¹⁸⁴⁾

식 사회주의」, 『北韓學講座 教材 및 教授모듈研究』(統一院, 1993), pp.192-193.
181) 『로동신문』 1989년 12월 22일.

182) 김정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첫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것, 둘째, 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셋째,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라는 것 등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담화는 오늘의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김정일이 자신의 사상과 노선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183) 『로동신문』 1991년 3월 7일자. '논설'.

184) 북한의 변화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변화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변화의 개념을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인 수정 내지 개혁으로 보아 다당제와 자유선거제도의 도입, 공산당의 정권상실, 그리고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하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러한 변화를 북한에서는 기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개혁은 국내 정치경제에서의 폐쇄적이고 불균형적인 구조의 개선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체제가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통제, 자본주의 세계와의 무역교류 기피 등으로 특징지워졌던 폐쇄성에서 점차 벗어나 자유를 허용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개혁은 개방, 자유화와 유사한 의미로도 사용된다. 또한 사회주의의 체제개혁이라고 할 경우 관료주의적 병폐의 시정과 같은 체질개선을 포함하여 분배에 있어서 물질적 동기부여와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의 하나인 사회주의권의 개방, 개혁과 그로 인한 정치적 소요 및 정치구조의 개편 등을 설명하기 위해 그 유형을 몇 개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中國型(제한된 개방과 천안문사태), 東獨型(점진적인 개혁, 개방과 정부 붕괴), 蘇聯型(위로부터의 개혁, 개방과 쿠데타 및 공산당 몰락), 루마니아型(인민봉기 및 급속한 체제붕괴)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는 경우 이들 네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들어 맞기보다는 몇가지 유형이 복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북한에는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없었던 父子承繼體制가 형성되어 있고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이 북한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과는 다른 '北韓型'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⁸⁵⁾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화의 경향들이 북한에서도 나타날 것인지, 그리고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그러한 변화를 억제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북한체제의 각 부문별 실상을 분석하고 그 토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북한의 변화개념은 주로 사회주의의 틀 안에서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체제의 변화개념에 대해 자세한 것은 Daniel N. Nelson, "The Origins of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ystems", R.H. Linden, B.A. Rockman eds., *Elite Studies and Communist Politic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84), pp.167-189. 참조.

185) 상기 외국의 유형들이 모두 정권의 변동을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정권으로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국, 동독, 소련, 혹은 루마니아와 같은 變化 類型을 피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므로 북한유형은 결국 독특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 위에서 변화의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판별하여 북한 사회의 향후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1) 政治的 變化 展望

북한 정치체제는 '首領의 唯一的 領導體制'를 그 골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개혁의 흐름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변화에의 무풍지대가 바로 정치부분이다. 주로 김일성 정권의 정치적 기반의 강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던 이 부분의 변화는 가장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1) 後繼者 問題의 해결, 2) 권력기반의 끊임없는 변화와 실질적인 세대교체의 실현으로 특징된다. 첫째, 1985년 김일성의 연설에서처럼 이제는 김정일의 후계체제는 공식적인 승계의 절차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는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¹⁸⁶⁾ 1980년 10월 6차 전당대회에서 金正日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선언된 이래 김정일은 국정 전반에 공개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¹⁸⁷⁾ 1984년부터 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내활동이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1985년부터는 다소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이지만 대외분야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¹⁸⁸⁾ 현재는 김일성에 의한 '唯一的 領導體制'와 金正日에 의한 '唯一的 管理體制'에 의해 북한체제가 움직이고 있다.

- 186) 물론 북한의 권력승계는 1) 김정일체제가 오랜 기간에 걸친 공고화 작업을 통해 당·군·정에 친김정일계 일색의 핵심세력을 구축했으며, 2) 폐쇄사회에서 상징조작과 이상화작업으로 형성된 북한주민들의 김부자에 대한 형상화(imagination)가 변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3) 주체사상의 신념화와 김일성의 카리스마적 후광 등이 있기 때문에 승계 자체는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187) 김정일은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권력서열에서 제2인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이후 주요 대회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내외정책을 관장해왔다.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281.
; Chung-Sik Lee, "Evolutio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ise of Kim Chong-Il", *Asian Survey*, Vol. XXII, No.5 (May 1982), pp.434-448. 수령의 후계자에 대한 개념정의는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386-388.
- 188) 다소 기록이 존재하지만 김정일의 '실무지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외활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평화연구원, 「동북아와 남북한」 (1988), pp.151-156 참조.

189) 실질적인 후계체제의 확립을 위해 분리되었던 권위와 실무, 정통성과 효율성은 이제 점차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¹⁹⁰⁾ 둘째, 그동안 북한은 단지 수령지위의 승계뿐만 아니라 그 권력기반의 실질적인 승계를 위해 끊임없이 당과 정권기관 내의 세대교체를 실현해 왔다.¹⁹¹⁾ 이러한 변화는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¹⁹²⁾ 이러한 정치변화는 기본적으로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지만, 개혁개방 압력에 대해 북한이 당과 정권기관 주도하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체제는 어떤 변화의 길을 가고 있고, 어떠한 전망이 가능할까?¹⁹³⁾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나고 어떤 모습을 띠 것인가? 북

189) 이를 김남식은 북한체제가 지닌 '권력의 이중성'이라 부른다.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통일원, 1991년 봄호), pp.21-22.

190) 김정일은 당·정·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동신문」 1991년 12월 25일자. 김일성이 1992년 4월 13일 대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이후 김정일은 4월 20일 원수칭호를 수여받았다. 「로동신문」 1992년 4월 21일자.

191)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빨치산의 혁명 1세대가 점차 감소하고 당관료 및 경제기술 관료들이 당과 정권기관 내에 크게 진출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6차 당대회부터 1990년 12월까지 당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치국의 정회원은 혁명 1세대의 비율이 53%에서 33%로 저하되었으며 군부의 비중도 37%(19명 중 7명)로 줄고 대신 당, 기술관료가 우세한 입장에 있다. 현재 후보위원도 유입보다는 탈락의 비율이 높으며 10명 중 군부가 1명이고 나머지는 혁명 1세대가 완전히 퇴진하였다. 김남식, 앞의 글, pp.24-30.

192) 정무원 총리는 70년대 말 이후부터 경제관료들을 중심으로 잦은 교체를 보여왔으며, 부총리 중 1982년 7기 내각에서 현재 9기 내각까지 계속 역임하고 있는 인물은 16명 중 2명뿐이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성분구성도 달라지고 있는데 1982년의 7기와 1990년의 9기를 비교하면 인텔리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49.4%에서 64.5%), 대의원 연령들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대학졸업자 50.4%에서 68.2%로 대폭 증가되었으며 과거와는 달리 사회민주당(7.4%), 청우당(3.2%), 무소속(1.9%) 출신의 비율이 높아졌다. 김남식, 위의 글, pp.30-35.

193) 오늘날 북한 지도집단내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많으나 그것은 북한 권력구조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단순한 추리에 불과하다. 지도집단의 사상적 동질성이 확립되어 있고 異見그룹의 성장이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현 유일지도체계 내에서 최소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집단적으로 대항할 지도집단내부의 세력은 당분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변화는 밑으로부터의 변혁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개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체제의 변화시기에 있어서는 국내의 견해를 대체로 두가지 방향으로 정리,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변화는 김일성의 사망 내지는 정치적인 은퇴가 예상되는 3-4년 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다.¹⁹⁴⁾

이에 반하여 그 시기가 예상외로 빨라 김일성 생전에 북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主體도 김일성이 된다는 것이다.¹⁹⁵⁾ 내용에 있어서는 소련과 동구에 비해 대단히 미흡할 지는 몰라도 김일성에 의한 북한식 개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¹⁹⁶⁾ 외형적으로는 ‘주체식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도 내외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범위와 속도로 體制改革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¹⁹⁷⁾

194) 改革의 不可避性을 인식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이 모든 권위의 원천을 김일성 인의 神格化에서 찾는 상황에 있는 북한에서 누구도 ‘수령님이 창조한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고치자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대숙, “1990년대의 북한”, 미국 하와이대학 한국학 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학술회의” (1990.3.26-29)에서의 발표논문 참조. 주간 「이데아」 19호-20호 (1990.7.28-8.4)

195) 이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은 수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집무가 어려워질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으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무모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며 누구 못지 않게 심각한 경제난, 사회주의권의 대변화, 그리고 탈냉전적인 세계질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제개혁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70년대초부터 시작된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개혁의 과제를 김정일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그 동안 다져온 김일성체제를 살리고 김정일 후계구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體制에 대한 再編成, 즉 북한식 페레스트로이카를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96) 李喜相, “北韓經濟의 改革과 開放”, 제7회 미주지역학술회의, 「'90년대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통일원, 1991) 참조.

197) 현재 수령·당·내중의 통일난결을 강조하여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제·폐쇄사회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기존 질서를 전면 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김일성·김정일체제를 극적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아래로부터 변화를 요구하는 돌발사태가 단시일 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물론 돌발적인 사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체가 유지되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는 위로부터 시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체제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점진적인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내내적으로는 수령중심의 유일지도체제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민주화 추세를 의식한 부분적인 변화를

그러면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정책 변화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예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정치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이 여전히 강조될 것이다.¹⁹⁸⁾ 둘째, 수령의 유일 영도체계 역시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후계자인 김정일의 승계 이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될 전망이다.¹⁹⁹⁾ 셋째, ‘혁명적 군중노선’의 강조 속에서 북한 대중들의 생활상의 이익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강구될 것이다.²⁰⁰⁾ 넷째, 혁명 1세대인 빨치산그룹이 대거 퇴진하고 신진 기술전문가와 지식인계층의 참여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²⁰¹⁾ 다섯째, 후계자로의 안정적 권력승계가 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면에서도 국제질서의 탈이데올로기화에 편승하는 現實主義 外交路線의 전개가 예상되고 있다.

- 198) 어떤 점에서는 사회주의권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심대한 위기 속에서 과도기적으로 주체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이는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이 모택동사상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이념을 더욱 강조하면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역시 다방면의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199) 수령론은 북한의 표현을 보더라도 그렇고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다. 육체적 생명체보다도 중요하게 간주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사회주의권 개혁으로 쉽게 포기될 수 없고 동시에 후계자인 김정일에 의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수령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집체적 의견을 수용한 ‘뇌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든 실질적으로 현실화하려는 노력의 차원에서든 - 대중노선(북한식 표현으로는 혁명적 군중노선)이 당분간은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 200) 현재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정세의 압력 속에 ‘후계자의 안정적 계승’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결합되어 있다. 즉, 경제적인 개혁을 통해서 인민대중의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북한 민중들의 통일적 열망을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2세대는 ‘3대혁명의 지속’을 통해서 또한 조·일수교 등의 국제정세를 활용해서 국내의 경제발전을 획기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등의 각종 대중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내외통신』, 1991. 10. 9) 그 밖에도 ‘90년대 속도창조운동’ ‘증산·절약 모범작업반 운동’ ‘새 기준, 새 기록 창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 농촌 등에서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조직별 총화평가 사업을 벌이며 각급 조직에 3대혁명소조의 역할을 할”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1년 9월 20일자.
- 201)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권력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이들이 향후 북한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원로정치 세력인 혁명 1세대가 아직도 주요한 정치권력에 남아 있지만 이는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老中青의 三結合’의 형태로 원로세대의 경험과 신진세대의 기술을 결합하고자 하는 의도이기도 하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이종욱, 박성

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대간의 교체가 점차적으로 진전될 것이다.²⁰²⁾ 여섯째, 지방의 분권화, 즉 중앙 정치권력의 분산을 통한 지방 인민정권의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²⁰³⁾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유형에서 어느 모델에 가까운지 분석,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지도층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정치와 경제부문을 비롯한 전면적 체제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²⁰⁴⁾

그리하여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개혁노선은 결국 中國式 改革에의 길²⁰⁵⁾과

철, 김종린, 오진우 등 조선노동당이나 주요한 국가기구내의 혁명 1세대가 김일성과 함께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중요한 정치적 위기나 후계자로의 안전적 계승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202) 이러한 지도부 교체는 자본주의 진영이나 여타 개혁형 사회주의 국가처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식대로 당과 주요 국가기구 내에서 수직적·수평적 이동이 과거에 비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안정적 권력기반 구축'이라는 정치적 이유에서나 '보다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수행을 위한 실무 능력자의 교체'라는 경제적 이유에서든 과거보다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기술인과 지식인의 역할이 확연히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203) 예를 들면, 최고인민회의의 대표자격에 지방인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가시적인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연방제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사회주의권의 개혁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관료통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성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기도 하다.
- 204) 소련식 체제개혁은 활력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결국 지난 91년 8월 정변의 실패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을 가져오고 말았다. 김일성이 지금까지 행사해 온 유일적 지배권의 상실은 초래될지도 모를 소련식 개혁모델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이 누리는 독점적, 배타적 권력의 상실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길을 스스로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 205) 북한이 중국식의 변화모델을 변용하여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공산주의혁명과 건설에 대한 사상·이론적 측면에서의 양국간의 역사적 경험과 그 영향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1945년 이래 당노선상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중시할 것이라는 것은 공산권의 붕괴사태 속에서도 북한과 중국은 유일하게 사회주의 고수원칙을 상호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 '대내활성·대외개방'의 현대화 정책이 어느 수준 성과를 보이면서 중국의 사회주의발전전략으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심정적으로 중국의 경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과 북한의 지나간 역사적 경험의 '동류성'은 향후 북

유사한 이른바 北韓式 改革方法이다. 지금까지 다져온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외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고 또한 체제의 활력을 찾는다는 입장이다.²⁰⁶⁾ 즉, 정치부문은 기존노선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제력 회복을 위한 개방정책은 탄력성을 보여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²⁰⁷⁾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정책변화의 추이를 토대로 북한 사회주의를 전망해 보면, 단기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기존의 '혁명적 군중노선'을 강조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3대혁명 특히 기술혁명의 강조를 통해 생산력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모델은 - 적어도 지나친 경제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천안문사태'나 '동구식의 혼란'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 경제적으로는 제한적인 '개혁의 형태'를 띠고, 정치적으로 다당제를 용인하거나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수반하는 '소련식 페레스트로이카'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신데탕트 속에서 양진영간의 대립갈등이 미국의 일방적 해게모니 속에 어느 정도 해소되고²⁰⁸⁾ 북한 사회주의 내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²⁰⁹⁾,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만을

한정책 노선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비강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백승훈, "주체사상의 非金日成化' 가능성에 관한 試論的 研究: 中國의 역사적 경험과 北韓의 選擇" 『北韓研究』, 1993 여름, p. 181.

- 206) 정치부문에서의 기본노선 강화는 곧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제를 더욱 고수함을 뜻한다. 이에 따른 官僚化의 弊弊는 지속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련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관료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분산과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고 하겠다.
- 207) 北韓도 경제개방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주체사상이 그 장애가 된다. 그렇다고 首領論에까지 이르러 주체사상에 대한 어떠한 변화는 곧 金日成 1人 支配體制의 正當性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북한 지도층의 고심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 208) 물론 한반도 주변정세는 역사적으로 국제정세의 호전과는 무관하게 냉전적 구조의 한복판에 있어 왔었고 지금도 이데올로기의 마지막 대결장으로 남아있다.
- 209) 제8차 고위급회담(1992. 9. 15-18)을 통한 '기본합의서' 채택과 1992년 7월 김달현 부총리의 한국 산업시설시찰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한 대남 경제교류·협력 증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폐쇄사회로서 '결핍에 대한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대남양보를 해가면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강조함으로써 현대사회주의 일반의 공통된 고민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그 동안 인민대중들이 절박하게 개혁을 요구할 만큼 불만이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경제 체제를 기존의 중앙집권적 계획관리 체제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경제발전 수준이 양적·외연적 발전단계에서 질적·내포적 발전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일정한 경제개혁과 그에 따른 정치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 그 형식과 내용은 현재의 개혁형 사회주의 보다는 훨씬 완화된 형태일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는 조만간 진행될 김정일의 후계체제 수립 이후의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²¹⁰⁾ 적어도 개혁과 개방의 외압에 견딜 수 있는 국내외적 조건을 미리 만들어나가는 ‘북한식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오래 전부터 내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라도 나름의 개혁을 ‘주체적으로’ 더욱 폭넓게 시도할 것이다.²¹¹⁾

2) 經濟開放과 改革

210) 한편 남북통일이라는 배경 속에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급격하지는 않지만 지배양태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지 않을 것이다. 김일성이 카리스마적 권위를 계속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전제하지만 동시에 항인혁명투쟁에서부터 시작하여 해방후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조건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남한의 적대적인 대북정책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였고 이 속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단결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 혹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긴장완화가 조성된다면 이러한 배경들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에 남한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숭배적 양태’들은 쇠퇴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내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인에 와서는 이전의 카리스마적 지배형태는 상당히 퇴색하고 새로운 지배양식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카리스마는 인민이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것인데 인민들에게 김정일은 김일성과 다르게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선태, “90년대 북한사회주의의 현실과 발전전망”, 『경제와 사회』 1993년 여름, pp.82-83.

211)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서 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북한의 이번 헌법개정은 지난 48년의 헌법개정 이래 7번째이며 72년의 사회주의헌법 채택 이래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헌법개정은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등 시대적 상황변화를 반영해 제3조 공화국의 활동지침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표현을 아예 빼버렸으며, 산업기술혁명에 대한 강조와 함께 대외경제협력책을 뒷받침하는 대외관계 규정을 신설했다. 『한겨레신문』 1992년 11월 24일.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된 이유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체제적 모순인가, 아니면 인간의 본성, 즉 물질적 욕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한 主體經濟의 非效率性 때문인가? 만일 전자가 주된 원인이라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체제 변화를 시도해 볼 것인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思想敎養을 통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체제의 안정성이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 분출을 여하히 제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개혁은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경제의 하부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경우, 급속한 경제체제 개혁은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개혁은 어차피 점진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²¹²⁾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군에 市場經濟原理의 과감한 도입과 對外政策開放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대두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향후의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관심의 초점도 역시 이 두가지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가지 개혁의 문제는 북한의 특이한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의 중심과 '金正日 承繼體制'라는 정권의 안정문제에 민감하게 연결되어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점이며, 1989년 하반기 동구에 몰아닥친 經濟改革과 사회주의 정권의 붕괴²¹³⁾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경제개혁이 북한정권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고조라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압력보다는 사회주의체제의 격동으로부터 북한의 특이한 체제를 고수하고 김정일로의 권력이양기에 대내적인 정치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북한 내부의 필요성을 주된 배경으로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정책은 상당기간 소극적인 開放政策과 주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輕工業爲主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²¹⁴⁾

212)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 계획경제의 실시, 사상혁명의 선행, 시장주의 배제 등의 기본원칙을 지킨다는 테두리 안에서 북한경제의 부분적인 변화양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13) 특히, 여러 면에서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나 또한 대외 밀폐성이나 족벌체제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루마니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14) 북한은 현재로서는 이념적으로는 물론 경제관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개방화와

북한은 제2차 7개년계획과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經濟의 現代化, 科學化를 달성하기 위해 對外經濟關係의 확대를 모색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제정·공포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이다.²¹⁵⁾ 북한이 對外開放을 보다 과감히 추진할 수 없는 국내적인 制約要因에도 불구하고 對外經濟關係를 확대하려는 정책에 대한 논리는 이미 세워져 추진되고 있고, 북한이 경제의 현대화, 과학화의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정책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²¹⁶⁾ 따라서 북한은 1984년 合營法 이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왔고, 최근 2년동안 더욱 가속화되어 왔다. 그러한 조치들은 반사회주의적 원리에 입각해 있어 ‘조용한 革命’, ‘實務革命’이라고 평가되고 있다.²¹⁷⁾

북한은 지난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의 지시로 ‘人民消費品生産(8.3)運動’²¹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한은

대내적 개혁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으로서는 현재의 시점이 內生的으로도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쉬운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개방화와 대내적 개혁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일단 김정일에게 이양된 정권이 안정된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15) 합영법 제정 이후 북한은 1985년 3월에는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합영회사 소득세법’을, 5월에는 ‘합영회사 소득세법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등을 각각 제정하여 對外開放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제3차 7개년 계획에는 대외무역의 확대, 경제합작, 합영의 발전을 공식화하고 있다.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 VIII, No.12 (December 1988), pp.1272-1273. ; 정송남, “발전하고 있는 우리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 『국제생활』 제59호 (1990년 12월), pp.20-21 참조.
- 216) 북한의 대외무역 추이에 대해서는 姜正模,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pp.21, 56.; 통일원, 『남북한경제현황비교』 (통일원, 1991), pp.99-105 참조. 1984년 9월 합영법 이후 1990년 말까지 북한의 합작유치 실적은 조총련 77건, 소련 25건, 중국 9건, 기타 24건 등 총 135건이며, 합작유치업종은 서비스, 경공업 및 농수산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통일원, 『1990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통일원, 1991), p.22.
- 217) 연하청, “북한 개방화의 방향”, 『월간조선』 1990년 4월호, pp.368-369.
- 218) 이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y-Sang Lee, “The August Third Program of North Korea: A Partial Rollback of Central Planning”, *Korea Observer*, Vol.21 No.4 (Winter 1990), pp.457-474.

1989년도 부터 생필품 증산운동 및 직매점 설치확대 등을 통해 市場經濟的 要素를 도입했다.²¹⁹⁾ 그 이후 이러한 방식은 주택건설분야를 위시한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시·군 단위로 農民市場(장마당) 내지는 도시의 상설시장을 공인했다. 이를 통해 식량의 배급제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인데, 이 곳은 현물구매 또는 물물교환의 장소가 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 유역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와 관련 先鋒地域을 經濟特區化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²²⁰⁾

북한은 유엔개발계획의 협력하에 나진·선봉지구를 「경제특구」로 설정,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참여를 통한 중개무역기지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 협력하여 합영대상을 선정하여 유엔을 통한 경제개발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의 장기목표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 중심지 및 가공업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교역 및 투자증진을 시켜 상호보완적 경제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계획은 관련 국가들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실행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²²¹⁾ 북한은 두만강지역개발 대상지역에 대하여 小三角지역을 선호하는 입장이다. 소삼각지역은 북한의 나진항, 중국의 훈춘, 러시아연방의 포시에트항을 연결하는 약 1천Km²의 3각지역이다.²²²⁾ 이 개발계획에 대한 북한측 代案은 접경 3국이 자기의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절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³⁾

219) 소비재 생산에 있어 실적당 급여체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연하청, “남북한 경제협력의 정책과제”, 민족통일연구원주최 제1회 국제학술회의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 전망」 (91.10.28), p.4.

220) 중국은 합영법 이후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외국인간자본을 도입해 왔다. 경제특구는 국내적으로 計劃經濟體制를 남겨둔 채 그 일부에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자본형성과 외화획득을 실현시켜 그 위에 서방측 시장 매카니즘의 국내침투는 정책당국이 주변에서 통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인 것이다. 고또오 후지오 “북한경제의 실상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제9회 국제학술회의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 전망」 (91년 10월 28-29일) 주제발표.

221) 「日本經濟新聞」, 1992년 8월 20일.

222) 大三角지역은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그리고 러시아연방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약 1만km²에 이르는 광범위한 3삼각지역을 말한다. 북한·중국은 소삼각지역 개발계획을 선호하고 있고 러시아는 대삼각지역 개발계획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를 지속하는 한편, 對外開放이 북한주민에 주는 영향을 극소화시켜 체제유지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된 개방'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지역 621km²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정무원 결정 제74호 채택을 공식 발표한 것은 북한의 '통제된 개방'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²²⁴⁾ 북한이 그 동안 미루어 온 경제특구 설치를 발표하여 頭滿江地域 開發을 위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 분위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개방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러시아로부터 실질적인 대북한 경제협력과 지원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자본과 기술확보를 위해 미국·일본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시키고, 對南關係를 재조정하여 남한과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모색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²²⁵⁾

따라서 북한은 중국의 개방 모델, 즉 정치개혁을 유보한 경제개혁 방식을 모방하여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그에 관한 중국의 경험을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²²⁶⁾ 또 북한은 김일성 세습체제라는 정치적 특성과 남북 대치상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중국과는 다른 개혁 및 개방정책을 채택할 수 밖에 없지만,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 경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에 있

223) M.Miller, A.Holm, T.kelleher,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Mission Repprt, Consultation with Participant Governments*, Pyong Yang, 16-18 October 1991, p.3-7.

224) 「내외통신」 제777호 (1992.1.10). 북한은 정무원 결정 제74호 발표 이전에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트르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국제회의'에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개발구상안'을 최초로 표명한 이래,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동북아조정관회의'(MAC)에서 '나진-선봉경제지대조사보고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92년 4월 평양에서 두만강 개발에 관한 "동북아 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진, 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라는 자료를 배포하였다. 북한은 자유무역지대에 적용될 법령으로 외국인 단독기업법, 외국인 단독기업 소득세법, 합작법, 계약법, 합영법 개정안의 초안을 이미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25) 1988년 10월부터 1992년 5월까지 남한으로 반입·통관된 총액은 1억 7667만 1천만 달러이고, 북한으로 반출·통관된 총액은 1억 8703만 6천달러이다. 통일원 교류협력국,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12호 (1992년 7월), p.11.

226)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한다던가, 미국과 일본 등의 서방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선례를 많이 참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중국형 개방 모델을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서는 중국의 예를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²²⁷⁾

결론적으로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발전의 제반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면의 정책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 경제는 그간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내세우는 내부지향적 공업화정책에 치중한 나머지 국제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술과 설비가 뒤떨어짐으로써 남북한 경제경쟁에서 뒤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전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면서도 대외경제관계를 확대개선하고 대서방 경제교류를 더욱 증대시키는 신축성을 보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점차 개방경제화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²²⁸⁾ 둘째, 북한경제의 발전단계가 앞으로 외연적 성장에서 내포적 또는 집약적 성장에의 정책전환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그에 부응한 일련의 경제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다.²²⁹⁾ 셋째, 이상과 같은 북한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방경제화와 경제개혁에 의한 경제합리성의 추구는 당료파 대신에 기술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경제운영을 담당케 하여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실용주의노선으로 북한의 경제정책방향을 기울어지게 할지도 모른다. 넷째, 북한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군수사업과 관련된 중공업 우선정책에 치중하고 있지만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전제한다면 남한과 군비경쟁과 더불어 개발경쟁, 복지경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경제개발경쟁이나 사회개발경쟁에서 남한에 뒤지고 있으므로 경제력 강화와 더불어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소비재산업의 발전 등 복지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²³⁰⁾ 다섯째, 북한이 정책변화를 하는 가운

227) 한편으로 남한에서 북한에 기대할 수 있고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은 북한에서 확실한 상호 체제 인정하에서 “60년대 남한의 개발독재모델”을 상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용출, “북방정책의 평가: 실적과 미래의 과제”, 제12차 한중학술회의 발표논문 (1991), p.33.

228) 요컨대 자력갱생이나 개방경제화나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정책변수로 제기될 것이다.

229) 우선 양산체제에 적합한 중앙집권적 계획관리방식이 집약적 생산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일부가 분권화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증산의욕을 높이는 방법도 정신적 이데올로기적 자극만으로 한계가 있어 물질적 자극방식이 도입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30) 즉, 중공업 우선이나 민생안정 내지 복지 우선이나 하는 문제가 또한 크나큰 정책변수로 제기될 것이다.

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시대에서 고립될 수 없고, 더욱이 동서무역, 동서경제협력을 폭넓게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한국문제를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국제적 긴장완화와 세계적 정세 내지 동북아정세에 비추어 그 장래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남북한의 양체제는 현재의 대결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²³¹⁾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은 서로 경쟁하면서 접근하고 접근하면서 서로 경쟁해야 하므로 북한이 남북한 경제교류를 마다할 명분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리하여 북한이 남북한 경제교류에 응하게 된다면 중국·대만 간의 경제교류 형태가 되든, 동·서독 간의 경제교류 형태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교류형태가 되든 간에 남북한 경제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VI. 結 論

본 연구는 북한체제의 發展論理로 제시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해 그 이론적 맥락과 주요노선 그리고 전개과정을 내재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運營原理와 過程에 대해 규명할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사회주의의 발전논리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에 대한 고찰을 그 이론 및 현실의 내부로부터 분석·비판하여

231) 작금의 북의 핵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자 남·북관계의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남한 정부의 분석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 이는 북한이 미국·일본과의 수교 및 일본·남한과의 경협 등을 체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관측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한도 대미수교가 대일수교와 그에 따른 체제안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양쪽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핵문제가 풀릴 경우 북·미 국교수립이 예상 밖으로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분간은 서로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다. 「한겨레신문」 93년 9월 14일자 참조.

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제화시대에서 고립될 수 없고, 더욱이 동서무역, 동서경제협력을 폭넓게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한국문제를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국제적 긴장완화와 세계적 정세 내지 동북아정세에 비추어 그 장래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남북한의 양체제는 현재의 대결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²³¹⁾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은 서로 경쟁하면서 접근하고 접근하면서 서로 경쟁해야 하므로 북한이 남북한 경제교류를 마다할 명분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리하여 북한이 남북한 경제교류에 응하게 된다면 중국·대만 간의 경제교류 형태가 되든, 동·서독 간의 경제교류 형태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교류형태가 되든 간에 남북한 경제교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VI. 結 論

본 연구는 북한체제의 發展論理로 제시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해 그 이론적 맥락과 주요노선 그리고 전개과정을 내재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運營原理와 過程에 대해 규명할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북한 사회주의의 발전논리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에 대한 고찰을 그 이론 및 현실의 내부로부터 분석·비판하여

231) 작금의 북의 핵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이자 남·북관계의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남한 정부의 분석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 이는 북한이 미국·일본과의 수교 및 일본·남한과의 경협 등을 체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관측에 근거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한도 대미수교가 대일수교와 그에 따른 체제안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양쪽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핵문제가 풀릴 경우 북·미 국교수립이 예상 밖으로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분간은 서로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이다. 「한겨레신문」 93년 9월 14일자 참조.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이론과 정책의 바탕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회주의체제로서의 북한이 달성한 사회적 결과들을 이 체제가 스스로 설정한 이론적 목표에 비추어 검토 비판해 보아야 한다는 ‘內在的 比較社會主義 接近法’에 입각하여 북한체제의 발전과정을 분석·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의性格을 먼저 해명하고 그 기초위에서 북한이 현재 안고 있는 問題點과 향후 進路를 분석·고찰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노선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분석·평가를 전제로, 그 과제위에서 북한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진로를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의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에는 탈이데올로기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한 開放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거의 체제변화의 내용이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의 부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면 최근의 변화는 변화의 주체나 방향,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 과거의 변화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서 그 차이점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에는 체제유지를 전제로 하는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넘어서 체제내부적인 개혁과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²³²⁾ 이에 따라 오늘날에 와서는 북한체제도 체제개혁을 전제로 하는 방어적인 의미의 변화뿐만 아니라 탈사회주의에로의 질적인 변화가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변화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自立的 民族經濟路線과 群衆路線 등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급속한 사회주의발전을 이룩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사회주의 개혁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적극적 의미는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즉, 소련 및 동구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外延的 經濟 발전에

232)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은 개별 국가들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약화 내지 붕괴, 다당제의 도입, 복수 후보제에 기초한 자유선거, 당과 국가의 분리 등에서 대체로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 內包的 경제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주노선의 한계점을 露呈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과중한 군사비 부담과 자주노선의 한계적 측면이 생산력 증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적인 개혁, 개방의 방향은 공산주의적 성격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려는 이념적 지향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과도적 성격'의 적용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북한 사회주의의 내적모순과 북한 지도부의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건설에서의 문제점은 부분적인 개혁, 개방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건설노선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보다도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김일성 이후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북한은 主體思想과 首領論을 강조함으로써 분단과 냉전상황에서도 북한체제의 獨自性과 政治的 安定,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²³³⁾ 그러나 이와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북한체제는 극도의 個人崇拜思想을 발전시킴으로써, 김일성 1인의 사상과 리더쉽에 대한 체제적 의존도는 극대화되었다고 하겠다. 사실, 오늘의 북한사회에서 김일성은 단순히 '위대한 수령'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존재로 절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 없는 북한체제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 이후의 북한체제가 엄청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고 하겠다. 물론 金正日의 後繼體制가 상당히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성의 사망이 곧 북한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대한 비판과 개혁운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지 못한 金正日體制는 자신의 정통성을

233) 주체사상의 논리적 문제들은 역사적 현실이 부과하는 과업들을 수행하는 실천적 사상 의식의 부산물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앞으로의 민중적·민족적 변혁 실현에 따라 주체사상에 현재 담겨 있는 무리한 요소들이 개편되고 결국은 폐기되기에 이를 것 또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나름대로 새로이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분단과 냉전의 구조적 제약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면, 북한체제는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變化된 環境에 대한 적응의 차원에서 상당한 修正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북한 내외의 상황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개혁과 개방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이 채택한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을 동반하는 변화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가정하기란 많은 예외적인 요인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다. 234) 정치적으로는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층부의 권력구조가 革命勢力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는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또는 정치사회과정에 의하여 수령의 지배를 정당시하는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문화가 지배하고 있고, 상황적으로도 북한체제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남북한관계를 포함하는 동북아정세가 크게 변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몇가지 문제들을 토대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展望하면 밑으로부터의 인민봉기나 궁정쿠데타와 같은 대변혁이 없는 한 短期的으로는 소련을 중심한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중국식 實川主義 노선으로 체제전환을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革命的 群衆路線을 더욱 강조하면서 생산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대안사업체계'와 경제관리의 규율을 강조하는 등 대내적으로는 통제와 정치적 조작을 강화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對內的 統制의 강화와 對外開放이라는 상호상충되는 정책결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있어서 개방정책은 '우리식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존력을 얻는 데 불가피한 手段으로서 선택된 것으

234) 북한사회는 아직까지 특이한 통치양식, 이념체제 및 철저한 대외정보 차단정책으로 인하여 동구 및 소련에서와 같은 체제의 변화는 겪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동구 및 소련과는 다른 아시아적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長期的 전망으로는 오늘의 세계질서가 탈이념화 속에 대립갈등보다는 相互依存과 민족이익 추구라는 실리추구의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어지므로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만을 고집하는 정책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고있는 공통된 고민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아직 북한은 인민대중이 절박하게 개혁을 요구할 만큼 불만이 크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경제 체제를 기존의 중앙집권적 計劃管理體制로 운영되고 있지만 경제수준이 양적 - 외연적 발전단계에서 질적 - 내포적 발전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경제개혁과 정치구조의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의 개혁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분단문제와 한반도 주변의 대립상황이 일정하게 완화되는 것과 동시에 정치지도부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위로부터 推進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정치권력 또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轉化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반도의 통일이나 남한의 정치적 변화와도 連繫될 가능성이 크다.²³⁵⁾ 이 과정에서 개혁의 방향과 성격 및 개혁의 정도는 북한 정치지도력의 效率性과 인민대중의 지향성 외에도 남한의 정치적 상황, 주변국의 동향 그리고 통일논의의 性格 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은 북한 정치지도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 발휘가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제적 냉전과 대결적 남북한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북한 정치권력구조는 탈냉전이 가속화되고 통일의 가능성이 예비되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235) 북한에 있어 반미의식이나 남북간의 긴장고조는 지난 40여 년간 북한체제가 전시동원체제적 성격으로 자신의 체제성격을 각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시동원체제적 성격은 체제의 경직화불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의 실현과는 배치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이러한 성격은 반미의식의 희석화나 남북관계의 진전 등 일련의 전향적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쉽게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사회주의권의 대변혁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변화문제는 체제 내부의 변화 동인과 남북관계, 반미의식의 추이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그 내용과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강정구 책임편집,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1990), pp.11-37.
- 계간사상문예운동집중 기획,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폴빛, 1990), pp.379-409.
- 고대평화연구소 편,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법문사, 1990), pp.68-107.
- 고뢰정/ 이남현 역, 「북한경제입문」 (청년사, 1988), pp.48-59.
- 고병철 외, 「한국전쟁과 북한사회주의체제건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163-198.
- 고성준, “전환기의 북한과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학강좌 교재 및 교수모
들연구」 (통일원, 1993), pp.189-202.
- _____ · 이상민 외, 「전환기의 북한 사회주의」 (대왕사, 1992), pp.320-358.
- 고승효/ 김한민 역, 「북한사회주의 발전연구」 (청사, 1988), pp.45-74.
- 김남식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5: 북한편」 (한길사, 1989), pp.247-327.
- 김병노,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과 변화전망” 「사회과학」 (성대 사회과
학연구소), 제31권 제1·2호 1992, pp.213-218.
- 김세균 · 이수훈 외,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 (나남, 1992), pp.45-70.
- 김일평, 「북한 정치경제 입문」 (한울, 1987), pp.21-48.
- 김창희, “북한체제 연구의 접근” 「사회과학연구」 제19집 (전북대 사회과학연
구소, 1992), pp.133-158.
- 김현철 외, 「NL론비판 1」 (벼리, 1988), pp.11-90.
- 민병천 편, 「전환기의 남·북관계」 (대왕사, 1989), pp.147-194.
- 민통련,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11-114.
- _____, 「북한사회의 실상과 변화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71-114.
- _____,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68-113.
- 박형중, “‘사회주의 공업화’와 북한 지배체제의 형성” 「북한연구」 1993년
여름, pp.158-174.
- 백두연구소 엮음, 「북한의 혁명적 군중노선」 (백두, 1989), pp.328-396.
- _____ 엮음, 「주체사상의 형성과정 I」 (백두, 1988), pp.30-61.

- 배철헌/W/ 김남원 옮김, 「북한 현대사」 (신문학사, 1988), pp.136-181.
- 브룬, 허쉬/ 김해성 옮김, 「사회주의 북한」 (지평, 1988), pp.202-239.
- 사회과학출판사 편,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론」 (태백, 1989), pp.119-185.
- 산사연 북한사회연구반, “북한사회 연구동향: 80년대말 이후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993 봄, pp.100-144.
-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 편,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형상사, 1991),
pp.51-111.
- 서울대학교 사회주의연구팀 편, 「사회주의 개혁 논쟁」 (형상사, 1990),
pp.91-175.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회주의의 이론·역사·현실」 (민맥, 1991),
pp.59-104.
- 서진영 편, 「사회주의 개혁과 북한」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2),
pp.11-40.
-, 「현대중국과 북한 40년」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90), p.311-343.
-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1991), pp.319-337. 454-486.
- 송두율, 「현대와 사상」 (한길사, 1990), pp.114-154.
- 양재인 외, 「북한의 이념: 주체사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97-
122.
-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1」 (한울, 1987), pp.89-142.
- 유세희·이정식 편, 「전환기의 북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p.19-38.
- 이온죽, 「북한사회연구: 사회학적 접근」 (서울대 출판부, 1988), pp.3-25.
- 이상민, “북한의 통치구조와 권력세습”, 「북한연구」 1991년 가을, pp.9-17.
- 이선태, “90년대 북한사회주의의 현실과 발전전망” 「경제와 사회」 1993 여
름, pp.68-91.
- 정규섭,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경남대 극동문제연
구소) 1992년 가을·겨울, pp.321-338.
- 정상훈 외,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pp.221-
252.
- 주봉호,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

- 학박사학위논문, 1993), pp.227-256.
- 최성, 「소련공산당 해체와 북한 사회주의의 진로」 (한울, 1991), pp.187-266.
- 통일문제연구소 엮음, 「북한경제자료집」 (민족통일, 1989), pp.128-202.
- 편집부 엮음,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주요 문헌집」 (돌베개, 1988), pp.351-420.
- 편집부 엮음, 「북한의 사상-주체의 사상·이론·방법-」 (태백, 1988), pp.122- 155.
- 편집부 엮음, 「중소대립과 북한」 (나라사랑, 1988), pp.109-114.
- 학술단체협의회, 「사회주의개혁과 한반도」 (한울, 1990), pp.467-503.
- 한국정치연구회, 「북한정치론」 (백산서당, 1990), pp.45-67.
- 함택영 외,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pp.117 -144.
- Burawoy, Michael, "Marxism as Science: Historical Challenge and Theoretical Grow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6 (December 1990), pp.775-793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9 September 1993), pp.16-23.
- Jowitt, Ken, "The Leninist Extinction", Daniel Chirot, ed.,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Decline of the Left*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pp.74-99.
- Kiva, A. "Developing Countries, Socialism, Capitalism", *International Affairs* (1989.3), pp.54-63.
- Landau, Saul, "The East Joins the South", *Monthly Review* (October, 1990), pp.29-37.
- Lowy, Michael, "Twelve Theses on the Crisis of "Really Existing Socialism", *Monthly Review* (May 1991).

執筆者 紹介(掲載順)

1. 李仁鎬 : 연세대 강사

- 연세대 정치학석사, 펜실바니아대 정치학박사
-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임, 영남대, 명지대 강사
- 연구실적 : 논문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등 다수

2. 金明浩 : 러시아 연방외무성 외교 아카데미 객원연구원

- 건국대 정치학석사, 동대학원 정치학박사
- 인천대, 경원대 강사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소련의 인간적 사회주의 연구」 등 다수

3. 梁勝咸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연세대 정치학석사, 워싱턴대 정치학박사
- 아주대 정외과 강사 등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소련의 권력구조변화와 민주화」 등 저서다수

4. 趙己淑 : 고려대 강사

- 미국 Iowa대 정치학석사, Indiana대 정치학박사
- 미국 Indiana대 강사, 동대학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합리적 유권자 모델과 한국의 선기분석」 등 다수

5. 權五允 : 동국대 강사

- 동국대 정치학석사, 동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 경남대 강사, 동국대 안보연구소 조교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동구권의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 다수

6. 金淵珽 : 서울대 강사

- 서울대 정치학석사, 동대학원 정치학박사
-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책임 연구원, 서울대 정치과 조교 등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등 다수

7. 朱鳳浩 : 부산대 강사

- 부산대 정치학석사, 동대학원 정치학박사
- 동의대 강사 등 역임
- 연구실적 : 논문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성격론」 등 다수

'93 北韓·統一研究 論文集(Ⅲ)

北韓體制 및 政策變化展望 分野

인 쇄 : 1993. 12. 10

발 행 : 1993. 12. 15

발행처 : 통일원 정보분석실

인쇄처 : 덕 성 문 화 사
